

2011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 요구자료(I)

2011. 9

금 융 위 원 회

총 목 차

(가, 나, 다, 순)

(Ⅰ 권)

| | |
|----------|-----|
| 강 성 종 의원 | 1 |
| 고 승 덕 의원 | 85 |
| 권 택 기 의원 | 309 |
| 김 영 선 의원 | 599 |
| 김 용 태 의원 | 825 |
| 김 정 의원 | 925 |
| 박 병 석 의원 | 995 |

(Ⅱ 권)

| | |
|----------|------|
| 박 선 숙 의원 | 1 |
| 배 영 식 의원 | 539 |
| 신 건 의원 | 551 |
| 우 제 창 의원 | 1075 |
| 유 원 일 의원 | 1239 |

(Ⅲ 권)

| | |
|----------|------|
| 이 범 래 의원 | 1 |
| 이 사 철 의원 | 767 |
| 이 성 남 의원 | 945 |
| 이 성 현 의원 | 1105 |
| 이 진 복 의원 | 1203 |

(Ⅳ 권)

| | |
|----------|-----|
| 임 영 호 의원 | 1 |
| 조 문 환 의원 | 67 |
| 조 영 택 의원 | 209 |
| 한 기 호 의원 | 467 |

요 구 자 료 목 차

(가, 나, 다, 순)

강성종 의원

| | |
|--|----|
| 1. 휴면카드 감축 방안..... | 3 |
| 가. T/F 구성 현황 | |
| 1) 주요 구성원 | |
| 나. T/F 추진 현황(회의 개최 등) | |
| 2. 가계대출 총량 규제 관련 | 4 |
| 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 |
| 나. 정책 추진 이전 이후의 시중 금융권의 대출 금액 및 금리 변동 현황 | |
| 3.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방안(2.9)”, “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 대책(6.7)” | 5 |
| 3-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6.29)”에 대한 성과 분석 보고서 ... | 27 |
| 4. “카드대출 총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 등 건전성 강화 대책 관련 ... | 52 |
| 가. 총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의 근거 | |
| 나.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 축소의 근거 | |
| 5. 금융회사 IT보안사고 관련 | 54 |
| 가.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TF” 구성원 명단 및 추진경과 | |
| 나.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종합대책(6.23)” 자료 | |
| 6. 햇살론 ‘종합 신용평가 모형 세부내용, DTI와 비교한 장단점 ... | 69 |
| 7.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금융기관 관련 | 72 |
| 가. 공적자금 투입 기업 현황 | |
| 나. 정부 보유지분 현황 | |
| 다. 매각계획 | |
| 8. 과징금 회수현황 | 73 |
| - 최근 5년간 현황/유형별 구분/국세청 위탁 현황/ 국세청 자료 확보 요구현황 | |

| | |
|--|----|
| 9. 서민금융(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관련 | 76 |
| 가. 지원 현황 | |
| 나. 신용등급별 지원 현황(건수, 금액) | |
| 10. “(8. 23) 업무협조 [서울특별시주민투표의 주민투표권행사 보장 안내] ” 공문관련 | 78 |

고승덕 의원

| | |
|---|-----|
| 1. 2010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87 |
| 2.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 요청서, 처분요구서(다만 처분요구서에 대하여는 그것이 없을 경우 에는, 질문답변서와 확인서)(그 ‘사본’ 및 요약자료 제출 요망) ... | 256 |
| 3.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 299 |
| 4.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 | 300 |
| 5. 최근 2년간 징계 현황 | 308 |
| 6. 최근 2년간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 308 |

권택기 의원

| | |
|--|-----|
| 1.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근거법령 | 311 |
| 2. 햇살론 실적(2011년 8월 1일 기준) | 312 |
| 1) 대출기준 및 청구서류 | |
| 2) 대출기준 변경 연혁 | |
| 3) 신용등급별 실적(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 |
| 4) 2008년 이후 분기말 실적(2011년은 월말 실적) | |

| | |
|--|-----|
| 3. 미소금융 실적(2011년 8월 1일 기준) | 318 |
| 1) 대출기준 및 청구서류 | |
| 2) 대출기준 변경 연혁 | |
| 3) 신용등급별 실적(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 |
| 4) 2008년 이후 분기말 실적(2011년은 월말 실적) | |
| 4.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고졸 채용계획..... | 323 |
| 5.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외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 사본 | 334 |
| 6. 2008년 이후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해 부과한 벌금·과태료 현황 | 335 |
| 7.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대출카드(마이너스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 336 |
| 8.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갈등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조정 또는 지시한 내용 | 337 |
| 9.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현황 자료..... | 338 |
| 10. 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채무조정, 바뀐 드림론, 소액대출 사업에 대해서 | 338 |
| -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 |
| - 연도별(2011년은 월별)상담실적 | |
| - 연도별(2011년은 월별)지원 인원 및 금액 | |
| -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점현황(업무협조된 지자체 포함) | |
| 11. 2010년 5.27 발표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의 진행 경과 및 실적 | 338 |
| 12.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진 이후 대부업체의 대출심사기준이 강화 되었는지 여부와 이자수입, 수수료수입이 감소했는지 여부 | 339 |
| 13. '08년 이후 개최한 대부업정책협의회 의사록(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 340 |

| | |
|---|-----|
| 14. 햇살론 여신심사 기준 개선방안에서 “종합 신용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자료 | 343 |
| 15. 08년 이후 대부광고 규제 강화 연혁 | 346 |
| 16.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 관련 예산 결산 현황 및 금융 교육 실적 | 351 |
| 17. 2005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 리스트 지정 당시 의사록 | 353 |
| 18. 대부업 관련 | 410 |
| 가. 대부업체 등록 현황 및 금융당국 추산 미등록 업체수 | |
| 나. 자산규모 상위 10개 등록대부업체의 자본금 수익현황 및 금융 기관 대출현황 | 411 |
| 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비용, 불법광고 적발 건수 및 불법광고 근절대책 | 412 |
| 라. 대부업체 광고 규제 관련 규정 | 415 |
| 19. '08년 이후, 각 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심사위원회 의사록 | 419 |
| 20. '08년 이후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및 지도공문 발송 내역 | 553 |
| 21. 미소금융 목표대비 실적, 지점별 실적(지역지점, 기업계지점, 은행계 지점 구분) | 579 |
| 22. 금융위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실적 | 580 |
| 23. 미소금융 실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및 실적 | 581 |
| 24. 미소금융 지역지점 예산/ 결산 현황 | 582 |
| 25. '08년 이후,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와 복지사업 지원 계약을 작성한 현황 및 계약서 사본 | 583 |
| 26. 채무에 대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제도권(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대부 업체 등)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신용정보를 통합 또는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은 | 597 |

김영선 의원

| | |
|---|-----|
|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 601 |
|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감사계획서..... | 694 |
| 3.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 749 |
| 4.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 756 |
| 5. 최근 5년간 소송현황 | 774 |
| 6. 최근 3년간 본부처 관련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 782 |
| 7. 최근 3년간 행정소송관련 전문 변호사 선임 내역..... | 788 |
| 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 790 |
| 9. 최근 3년간 금융위 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직원의 언론 인터뷰 기고문 등 언론보도 내용 일체..... | 791 |
| 10. 최근 3년간 언론에 대한 보도해명자료 및 그 내용..... | 794 |
| 11. 최근 3년간 각종 명목의 용역내역 일체..... | 818 |
| 12. 퇴직자 재취업 현황..... | 823 |

김용태 의원

| | |
|----------------------------------|-----|
| 1. 임직원 퇴직, 재취업 및 징계 현황..... | 827 |
| 2.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 사본..... | 829 |
| 3. 외부기관에 위탁한 각종 연구용역 리스트..... | 844 |
| 4. 장애인, 여성, 보훈대상자 고용 현황..... | 848 |
| 5. 업무보고 자료 | 849 |

김 정 의원

1. 대부업 관련 927
 - 2008년 이후 대부중개 수수료 현황
 - 2008년 이후 대부중개업자 현황
 - 2000년 이후 대부업체 이자율 변화 추이
 - 2006년 이후 대부업체 등록현황
 -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 대부업체 조달금리
 - 2006년 이후 대부업체 이용자수
 - 2006년 이후 대부업 실태조사 참여율
 - 대부업 평균 연체율

박병석 의원

1. 2010년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지적사항, 조치내역, 향후계획 997
2. 최근 3년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조치 사항 1244
3.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1342
4. 설립이후 현재까지 소송건별 진행 현황 및 결과 세부내역..... 1343
5. 설립이후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 및 자체징계현황..... 1350
6. 최근 5년간 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 접수현황 1352
7. 최근 5년간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현황 및 요청 내용 1353
8.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 1355
9.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발생 및 출연 현황..... 1361
10. 하반기 부실 PF 처리 계획 1363

강 성 종 의 원

강성종 의원(민주당)

1. 휴면카드 감축 방안

가. T/F 구성 현황

1) 주요 구성원

나. T/F 추진 현황(회의 개최 등)

☐ T/F 주요 구성원

- 휴면카드 감축방안 마련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담당자, 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카드사 담당자로 T/F를 구성

☐ T/F 추진 현황

- '11.9.6. T/F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가급적 9~10월 중에 실효성있는 휴면카드 감축방안을 제시할 예정

강성종 의원 (민주당)

2. 가계대출 총량 규제 관련

가. 관련 정책 추진 현황

나. 정책 추진 이전 이후의 시중 금융권의 대출 금액 및 금리 변동 현황



- ☐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
- ☐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왔음
 - LTV · DTI 규제, 예대율 규제 도입 등을 통해 은행의 무리한 대출확대를 억제토록 유도
 - 6.29일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6.29일)」을 발표하여 가계대출 적정증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
- * (은행) ① 고위험 · 편중대출 자본규제 강화 ② 채무상환능력 확인 의무화
③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선 ④ 예대율 목표준수기간 단축(13달→12.6달)

* (비은행) ① 여전사 레버리지규제, ②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 강화
③ 체크카드 활성화
- ☐ 다만, 금융회사의 대출 증가한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은 추진한바 없음

강성종 의원(민주당)

3.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방안(2.9)”, “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 경쟁 차단 특별 대책(6.7)”

☐ 별첨참조

| | | | |
|---|--|-------|---|
|  금융위원회 | <h1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1> <p style="text-align: center;">2011. 2. 9(수) 14:00부터 보도가능</p> | |  금융감독원 |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과, 금융감독원 여신전문서비스실 | | |
| 책 임 자 | 배준수 과장 (2156-9850) 남명섭 실장 (3145-8160) | 담 당 자 | 김정주 사무관 (2156-9854) 이준수 팀 장 (3145-8162) |
| 배 포 일 | 2011. 2. 9.(수) | 배포부서 | 정책홍보팀(2156-9542 ~ 48) 총 9매 |

제 목 : 신용카드시장 건전 경쟁 유도방안

- 합리적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등 건전한 마케팅 경쟁 유도
-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점검·제재 강화
-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총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 등 카드대출에 대한 감독 강화

1. 추진 배경

- 신용카드사(겸영은행 포함)는 '03년 이후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 리스크 관리강화,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 등에 따라 수익성·건전성·자금조달 여건이 모두 양호한 상태

| (전업사)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비율 | 카드대출(전업+겸영) | 연체율 | 차입금의존도 | 부채비율 |
|--------|--------|--------|-------------|-------|--------|-------------|
| '03년 | △7.7조원 | △3.3% | 276.6조원(연간) | 28.3% | 96.2% | 1,594%('04) |
| '10.9월 | 1.4조원 | 29.7% | 106.2조원(연간) | 1.8% | 57.8% | 256% |

- 그러나, 최근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에 따른 마케팅비용 지속 상승, 모집인 및 카드발급 증가 등 경영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인이 발생

- 특히, 카드사 분사 등으로 과당경쟁이 지속될 경우 회원 모집질서 문란, 과장광고,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
- **(마케팅 비용)**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 제공 중심의 회원유치 경쟁심화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05~‘10년 중 연평균 19.5% 증가)하여 **고비용 영업구조를 고착화시킬 우려**

* 포인트, 마일리지, 각종 할인혜택 등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편익

** 마케팅 비용률 추이(마케팅 비용/카드총수익)

| | '05 | '06 | '07 | '08 | '09 | '10.1~9 |
|----------------|------|------|------|------|------|---------|
| 카드총수익(a, 조원) | 11.9 | 12.5 | 13.5 | 15.6 | 16.1 | 12.6 |
| 마케팅비용(b, 조원) | 1.3 | 1.8 | 2.6 | 3.1 | 3.3 | 3.1 |
| 마케팅비용률(b/a, %) | 10.9 | 14.8 | 19.3 | 20.2 | 20.6 | 24.5 |

주) 마케팅 비용 : 포인트·마일리지 비용, 할인서비스, 광고선전비, 모집인 비용 등

- **(모집인 수)** '10.9말 현재 **5만명**으로 전년(3.5만명) 대비 1.5만명 증가
 - 하나SK카드의 SKT대리점 제휴모집인 등록(1.1만명)이 주요인
- * ('02) 8.7만명→('03) 1.7→('04) 1.7→('05) 2.3→('06) 2.8→('07) 4.7→('08) 5.2→('09) 3.5
- **(신용카드 수)** '10.9말 현재 유실적 신용카드는 **8,410만매** (무실적 휴면카드 포함시 총 1억 1,494만매)로서 전년(7,637만매) 대비 10.1%(773만매) 증가

□ 한편, 카드론을 중심으로 카드사간 대출경쟁도 심화되어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증가

○ '10년 중 카드대출 이용규모는 106.2조원으로 '09년(99.4조원) 대비 6.8% 증가

- 특히, 현금서비스(81.3조원)는 0.2% 감소한 반면, 카드론(24.9조원)은 38.3% 증가

- 또한, 저신용층(7~10등급)에 대한 카드대출 비중도 소폭 증가

<연도별 카드대출 이용실적>

(단위: 조원)

| | '03 | '04 | '05 | '06 | '07 | '08 | '09 | '10 |
|---------|-------|-------|-------|-------|-------|-------|------|-------|
| 카드대출 | 276.6 | 138.1 | 113.2 | 103.4 | 101.8 | 107.9 | 99.4 | 106.2 |
| (카드론) | 37.1 | 10.5 | 8.0 | 11.8 | 16.0 | 19.2 | 18.0 | 24.9 |
| (현금서비스) | 239.5 | 127.6 | 105.2 | 91.6 | 85.8 | 88.7 | 81.4 | 81.3 |

□ 따라서, 신용카드사간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카드대출 부실화 소지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대응이 필요

2. 카드사 건전경쟁 유도방안

가. 건전한 마케팅 경쟁 유도

① 합리적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11.상반기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 (상품설계)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비우량 회원 유입 및 손실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품설계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등을 의무화

* (예) 상품 부가서비스 설계 : 신용판매 이익 > 부가서비스 비용

할부 마케팅 설계 : 무이자 할부판매 이익 > 할부판매 자금조달비용

일회성 마케팅 설계 : 마케팅을 통한 이익 증가 > 일회성 마케팅 비용

- (위험관리) 신상품 출시 및 특판 행사 후 신규회원 연체율, 비용증감 등 부가서비스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상품운용 전략에 반영시키도록 유도

⇒ 상품 약관심사 및 정기·부문검사시 이행 여부 중점 점검

② 마케팅 경쟁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상시)

- 정기(매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불건전 경쟁행위를 적극 시정

* '11.1.14~31. 기간 중 6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부문검사 기 실시

- “마케팅 활동 10대 핵심지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조기 대응

* 외형경쟁 : 신규회원 유치, 모집인 운영, 고위험상품취급

비용경쟁 : 연회비 면제, 무이자할부, 포인트·할인제공, 제휴업체 지원, 경품·사은품 제공, 총 마케팅비용, 신규상품 도입 및 주요 마케팅 행사

나.

신용카드회원 불법 모집행위 점검·제재 강화

①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질서 정착 유도 ('11. 1/4분기)

- 모집인의 법규준수 의식 고취를 위해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을 마련하고, 모집인 교육 및 내부통제에 활용토록 지도

* 신용카드 거래조건 안내, 약관교부, 상품 및 부가서비스 설명, 모집시 본인 확인 등 모집인이 신용카드 모집시 지켜야 할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명시

② 신용카드회원 모집실태 현장점검 강화 (상시)

- 금감원의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 → ‘매분기’로 단축
-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역량을 확충(20→30명)하고 점검시 금감원 검사원을 투입(월1회)하여 점검효과 극대화
- 점검 및 조치결과는 카드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금감원 현장점검 대상 선정시 우선 고려

③ 신용카드회원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상시)

- (모집인) 과다 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에 대한 과태료(최고 500만원) 부과 등 엄중제재^{*}

* 참고 3 :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의 유형 및 제재내용

- (카드사) 불법 모집행위 지시·방조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카드사의 관리·감독책임을 강화

* (예)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후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다.

카드대출 위험관리 강화

- ① 카드대출의 충당금적립률 상향 조정 ('11.1/4분기 감독규정 개정)
 -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 강화
 - 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 조정은 예상손실률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확정하여 규정변경 예고시 공개
- ② 불건전 카드대출 영업행위 차단 및 위험관리 강화 (상시)
 -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차단하고 위험관리를 강화('11.1/4분기)
 - * (예) ① 카드로ن 취급 첫 달 특별금리('미끼금리') 제공 조건에 대한 과장 광고
② '미끼금리' 적용기간, 동기간 만료 후 적용되는 정상금리 등 세부 금리조건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 불완전 판매
③ 카드로ن 신규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경품 및 원리금 할인 제공
④ 카드이용대금명세서에 사전 약정되지 않은 카드로 한도금액을 약정된 한도 금액인 것처럼 표시·안내
 - 카드사의 카드대출 리스크관리 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상의 취약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하도록 지도
 - * 주요 점검항목
 - ① 카드로ن 신청에 대한 심사·승인 기준의 적정성
 - ② 카드로ن 한도 부여 기준 및 연체회원에 대한 채권회수전략의 적정성
 - ③ 카드로ن 이용자의 신용등급 분포 및 하위 등급자의 연체율 분석의 적정성
 - ④ 카드로ن 취급확대를 위한 경영전략 및 리스크통제의 적정성
 - ⑤ 카드로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성과지표 변동내역 현황 및 적정성 여부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참고 1 신용카드 시장 현황

| 구분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9 |
|-----------------------|---------|---------|--------|--------|--------|--------|--------|--------|
| 전업사수(개) | 8 | 6 | 6 | 6 | 5 | 5 | 6 | 6 |
| 당기순이익(억원) | | | | | | | | |
| 전업사 | Δ77,289 | Δ13,408 | 3,423 | 21,637 | 26,087 | 16,557 | 18,643 | 13,904 |
| 겸영은행* | Δ26,883 | 3,052 | 25,489 | 26,188 | 27,715 | 25,085 | 20,181 | 15,870 |
| 연체율(%) | | | | | | | | |
| 전업사 | 28.3 | 18.2 | 10.1 | 5.5 | 3.8 | 3.4 | 2.2 | 1.8 |
| 겸영은행 | - | 4.1 | 2.8 | 1.7 | 1.4 | 1.9 | 1.5 | 1.6 |
| 조정자기자본비율(%) | Δ3.3 | 9.8 | 19.0 | 24.4 | 26.1 | 23.9 | 29.1 | 29.7 |
| 신용카드이용실적(조원, 겸영은행 포함) | | | | | | | | |
| 총이용실적 | 517.3 | 368.0 | 371.5 | 379.7 | 413.8 | 464.2 | 472.0 | 381.7 |
| 신용판매 | 240.7 | 229.9 | 258.2 | 276.3 | 312.0 | 356.3 | 372.6 | 303.3 |
| 카드대출 | 276.6 | 138.1 | 113.2 | 103.4 | 101.8 | 107.9 | 99.4 | 78.4 |
| 카드발급수(만매) | | | | | | | | |
| 총발급수 | 9,433 | 8,802 | 8,604 | 9,090 | 8,956 | 9,624 | 10,699 | 11,494 |
| 개인 | 9,196 | 8,567 | 8,351 | 8,797 | 8,622 | 9,195 | 10,225 | 10,950 |
| 법인 | 237 | 235 | 253 | 293 | 334 | 429 | 474 | 544 |
| 카드회원수(만명) | | | | | | | | |
| 총회원수 | 8,410 | 7,406 | 6,950 | 7,014 | 6,608 | 7,351 | 7,795 | 8,269 |
| 개인 | 8,292 | 7,304 | 6,849 | 6,899 | 6,483 | 7,182 | 7,606 | 8,047 |
| 법인 | 117 | 102 | 101 | 114 | 125 | 169 | 189 | 222 |

* 겸영은행 당기순이익은 세전 신용카드부문 순이익

참고 2 | 2003년 카드사태 당시와 현재의 신용카드시장 비교

| | 카드사태 직후('03말) | 현재('10.9말) |
|----------------|--|--|
| 전업 카드사 수 | 8 사 | 6 사 |
| 카드자산 | 78.9조원 | 70.6조원 |
| (신용판매) | (27.7조원) | (44.0조원) |
| (카드대출) | (49.6조원) | (26.6조원) |
| 카드이용액 | 517.3조원 | 518.4조원 (‘10년 1~12월) |
| (신용판매 이용액) | (240.7조원) | (412.1조원) |
| (카드대출 이용액) | (276.6조원) | (106.2조원) |
| 연체율(전업사) | 28.3% | 1.83% |
| 고정이하자산 비율(전업사) | 8.8% | 1.43% |
| 조정자기자본 비율(전업사) | △3.3% (자본잠식) | 29.7% |
| 당기순이익(전업사) | △7.7조원 | 1.9조원(‘09년) 1.4조원(‘10년 1~9월) |
| 모집인 수 | 87,733명(‘02년말) 17,021명(‘03년말) | 50,784명 |
| 모집인 등록 | - 카드사별로 개별 계약 - 카드사별로 중복 계약 가능 | - 여신금융협회 등록 - 카드사별 중복 계약 불가 |
| 모집 방법 | - 경품제공 제한없음 (현금제공) - 길거리 및 방문모집 가능 | - 카드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길거리 모집 금지 |

참고 3 신용카드 불법 모집행위 유형 및 제재내용

| 구분 | 불법 모집행위 유형 | 제재내용 |
|--------------|--|---|
| 카드사 | · 미등록 모집인에게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하게 하거나 동 모집관련 수수료·보수 및 대가지급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 ·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 사실 인지후 미신고 | |
| | · 모집인에 대한 ‘모집시 준수사항’ 교육 미실시 | |
| 모집인 | ·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
| | · 타인에게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는 행위 | |
| | · 모집인이 모집에 관한 수수료·보수 및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 |
| | · 다단계판매를 통한 신용카드 모집행위 | |
| | ·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조건으로 하는 모집 | |
| | · 길거리에서의 신용카드 모집행위 | |
| | · 무단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용카드를 모집한 행위 | |
| | ·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 불건전 모집 관련 감독 당국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취소 |
| 카드사, 미등록 모집인 | · 미등록 모집인의 신용카드 모집행위 * 카드사의 경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해당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2011. 6. 7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1. 추진배경

2. 대 책

가.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밀착 감시

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지속시 엄중 제재 조치

다. 자금조달 규제의 전면 정비

3.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03년 카드사태를 겪은 이후, 신용카드업은 '06~'09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

* '06~'09년 중 평균 증가율(%) : 카드자산 6.3% / ('01~'02년 중) 38.1%
카드매수 5.6% / 35.1%
마케팅비용 27.1% / -

- 그러나, 일부 은행의 카드업 분사, 통신회사의 카드업 진출 등을 계기로 '10년부터 경쟁이 심화되면서 무리한 영업 조짐

* '10년 중 증가율 : 카드자산 14.7% (↑ 9.7조원), 카드매수 9.0% (↑ 959만매)
마케팅비용 30.3% (↑ 1조원)

- 특히, 과거 카드사태의 원인이 되었던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이 전년 대비 19%*(잔액기준) 증가하고,

*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6.3%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

- 저신용자(KCB 7등급 이하)에 대한 발급건수가 ('09) 64만건 → ('10) 100만건으로 급증

- 이에 따라, 금년들어 2차례에 걸쳐 신용카드업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이러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난 1/4분기 중에는 카드대출이 다소 감소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 불법 모집인 제재 강화(세부내용 : 별첨)

** '11.1/4분기 중 카드대출 신규취급액 : 26.7조원(전분기 대비 △3.5%, △0.9조원)

- 한편, 할부금융·리스업의 경우에도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

* '10년 중 자산 증가율(%) : 할부 24.0%(7.6→9.5조원), 리스 12.1%(14.8→16.6조원)

□ 현재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등 잠재적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 상황

○ 특히, 가계부채 문제는 앞으로 금융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

* '11.3말 현재 가계신용잔액(한국은행) : 801.4조원

□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업 등 여신전문 금융업은 대출내용과 자금조달 구조 등에서 취약성*이 있는 만큼 각별히 관리를 강화할 필요

* 1) 주로 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은행 등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가 낮음
2) 예금을 받지 않고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금융시장 경색시 유동성 확보 곤란('03년 카드사태시)

○ 아울러, 과거 신용카드 사태의 경험 때문에 다른 어느 금융업종보다도 신용카드사의 건전성 및 영업행태 등에 대한 시장의 관심과 반응이 예민한 점도 유의할 필요(예: 다수 언론의 “제2 카드대란” 경고 보도)

□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 비록 1/4분기 중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신용카드업을 비롯한 여신전문금융업이 더 이상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

2. 대 책

〈기본 방향〉

- ◇ 카드대출 등이 가계부채 문제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
- ◇ 위규 영업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장규율을 확립
- ◇ 신용카드업 등이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
- ➡ 신용카드업 등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

가 외형 확대경쟁에 대한 밀착 감시

1 신용카드 3개 부문의 적정 증가액(율) 설정

- ① 감독당국 내부적으로 “㉠카드 자산 증가, ㉡신규 카드발급 증가, ㉢마케팅 비용(율) 증가”를 외형확대 위주의 영업을 가늠할 수 있는 3개의 핵심부문으로 선정, 관리

②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 증가액(율)을 설정, 감독 지표로 활용

- 연간 적정 증가액(율)은 경상 GDP 증가율, 가처분소득증가율*, 과거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증가율**, 가계부채 억제 목표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 '00~'10년 평균 증가율 : 경상 GDP 6.8%, 국민처분가능소득(명목) 7.4%

** '06년 이후 신용카드 관련지표의 평균 증가율 :

카드자산 8.0%(신용판매 11.1% 카드대출 4.0%), 카드매수 5.6%, 마케팅비용 18.7%

② 회사별로 목표치를 제시토록하고 1주일 단위로 점검

- ① 카드회사 스스로 연간 및 월별 증가액(율) 목표치를 제시
토록함
- ② 감독당국이 1주일 단위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시 즉시 경고 조치

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지속시 엄중 제재 조치**

① 금감원 특별검사 실시

- 월별 목표치를 일정 횟수(예 : 3회) 이상 초과한 회사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특별검사 실시

② 영업정지 및 담당 임원 징계

- 금감원 검사결과, 위규행위 발견시 일정기간 신규 카드발급
정지, CEO·담당임원 문책 등 중징계 조치
- “길거리 모집” 등 불법 모집행위, 결제능력을 제대로 심사
하지 않은 카드발급 및 카드대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

※ 금감원에서 5.25~6.24간 진행 중인 "신용카드 발급실태 특별
점검" 결과, 위규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한 제재
조치를 내릴 방침

다 자금조달 규제의 전면 정비

① 레버리지(Leverage : 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 추진

- ① 신용카드사를 포함한 여전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

⇒ 과도한 차입을 바탕으로 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 여전사는 자금조달을 예금이 아닌 차입과 시장성 수신에 의존하고, 대부분 신용대출로 취급하며, 은행에 비해 고객의 신용도도 낮아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을 감안 레버리지를 엄격히 규제

- 다만, 대부분의 여전사가 자본확충 및 과도한 자산확대 자제 노력을 기울이면 준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도 설정

* '11.3월말 현재 여전사의 레버리지 현황

| 평균 | 카드 | 할부 | 리스 | 신기술 |
|------|------|------|------|------|
| 5.2배 | 4.1배 | 8.4배 | 7.2배 | 3.4배 |

- ② 신용카드사와 할부·리스·신기술사는 진입규제 및 대출내용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한도를 차등화

* 여전사에 대한 규제 및 대출 차이

| | 진입규제 | 대출('10말 잔액) |
|--------------|------|------------------------|
| (신용카드사) | 허가 | 가계(27.9조원) |
| (할부·리스·신기술사) | 등록 | 기업(15.3조원) 및 가계(9.7조원) |

- ③ 규제준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연도별 이행 목표치를 제출 받아 점진함으로써 한도초과 여전사의 단계적인 자본확충 또는 자산감축 유도

② 회사채 발행 특례(여전법 §48) 폐지

- (제도 도입배경) "자기자본의 10배 범위 내 회사채 발행" 특례 조항은 과거 여전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 은행의 취약한 자금중개기능을 여전사를 통해 보완할 목적으로 도입

* 신용카드업법('87년 제정도입)·시설대여산업육성법('87년 도입) → 여전법('98) 통합

- (폐지 필요성) 여전사의 '98년말(여전법 시행) 대비 '10년말 자산은 1.7배인 반면, 자본은 18.3배로 증가하여 자본이 확충되었고, 은행의 자금중개기능도 개선된 만큼 폐지 필요

* 자본('10년말, 조원) : 삼성카드 6.0, 신한카드 5.1, 현대카드 1.6

** 여전사 '98년과 '10년말 비교(단위 : 억원)

| 구분 | '98년말(A) | '10년말(B) | 배수(B/A) |
|----|----------|-----------|---------|
| 자산 | 694,844 | 1,207,739 | 1.7배 |
| 자본 | 13,644 | 249,314 | 18.3배 |

- 현행 회사채 발행 특례조항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차입이 가능하여 '03년 카드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전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 내포

* 카드사의 경우 '11.3월말 자본(17.8조원) 규모로 최대 144.5조원의 회사채 추가발행 가능

<자본대비 회사채 발행 현황('11.3월말)>

(단위 : 조원, 배수)

| 여전사 계 | | 계 | 카드 | 할부 | 리스 | 신기술 |
|-----------|------------------|------------|------------|------------|------------|------------|
| 자본(A) | | 27.9 | 17.8 | 4.9 | 3.5 | 1.6 |
| 회사채 잔액(B) | | 66.4 | 33.8 | 20.6 | 11.4 | 0.5 |
| 회사채 | 발행배수(B/A) | 2.4 | 1.9 | 4.2 | 3.2 | 0.3 |
| | 추가발행 가능액 | 212.3 | 144.5 | 28.2 | 24.1 | 15.5 |

3. 추진 계획

- ① “외형 확대경쟁 밀착감시” 및 “위규행위 카드사 엄중 제재”는 6월중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
- ② “레버리지 규제 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를 위한 여전법 개정을 금년 중 추진
 - 아울러, 레버리지 규제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지도를 통해 여전사들이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춰 자율이행토록 유도

1

既 추진사항

① 카드대출의 충당금적립률 상향 조정(6월말 시행 예정)

- 카드대출의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카드대출 충당금을 높여 손실흡수 능력 강화

자산건전성 분류별 대손충당금 적립률 조정내용

(단위: %)

| 구 분 | 연체월수 | 현 행 | | 개 정 (안) | |
|------|-------------|------|------|---------|------|
| | | 신용판매 | 카드대출 | 신용판매 | 카드대출 |
| 정 상 | 1개월미만 | 1.5 | | 1.1 | 2.5 |
| 요주의 | 1~3개월미만 | 15 | | 40 | 50 |
| 고 정 | 3개월이상(회수가능) | 20 | | 60 | 65 |
| 회수의문 | 3~6개월미만 | 60 | | 75 | 75 |

②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 확대(4월 금융위 승인의결)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발급사 기준으로 '3장 이상'에서 '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

③ 리볼빙서비스 리스크관리 강화 지도('11.3월)

- 취급시 신용심사 강화,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복수카드 공유정보에 리볼빙 이용잔액 포함 등

④ 신용카드 모집실태 점검 강화('11.3월 이후)

- 모집실태 점검주기 단축(매반기→매분기, 3.10~3.28 실시),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강화(20명→30명, 금감원 검사원 참여(월1회))

⑤ 신용카드 마케팅 경쟁실태 점검 강화('11.1월 이후)

- 마케팅 경쟁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단축(연1회→매반기)하여 불건전 경쟁행위*를 적극 시정 (1.14~1.31 실시)

* 마케팅행사시 수익성 분석 불철저, 카드론에 대한 리스크관리 미흡 등

⑥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 강화('11.3월 이후)

- 불법 모집인(총 13명)에 대하여 과태료(500만원 이내) 부과(6.1)

2

추진중인 사항

① 신용카드 발급실태 전수조사('11.5월~6월)

- 최근 6개월간('10.10월~'11.3월)의 신용카드 발급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카드발급 자격기준 강화 지도

* 현재 모든 카드사를 대상으로 서면점검 중이며 6월말까지 현장점검 예정

- 전수조사 결과 위규사항이 발견된 카드사를 제재하는 한편, 카드발급 증가폭이 큰 카드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지속 실시

② 신용카드 불법모집행위 기획점검 실시('11.6월중)

- 계절적으로 불법 모집이 발생하기 쉬운 행락철인 점을 감안하여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에서의 모집실태 특별점검 실시

③ 불법 모집행위 적발시 카드사 및 임직원 제재 강화 (6~7월)

- 소속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 적발시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의 관리감독책임 강화방안 마련·시행

④ 카드대출 리스크관리기준 마련('11.4월~6월)

- 불건전한 카드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리스크관리기준 마련 및 규정화 추진

* 현재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카드대출 리스크관리 T/F' 운영 중

⑤ 카드대출 리스크 분석 및 Stress Test 실시('11.5월~6월)

- 카드대출 관련 리스크를 분석·평가하여 취약점을 파악·개선하는 한편, 거시경제여건 악화시의 위기상황분석 실시

* 현재 카드업계, CB사 등과 위기상황분석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자료수집·분석 진행 중

⑥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의무화 (6~7월)

- 현행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분석 모범기준^{*}(금감원장 행정지도)을 강화하여 감독규정화

* 신용판매 이익 ≥ 부가서비스 비용

강성종 의원 (민주당)

3-1.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6.29)”에 대한 성과 분석 보고서

□ 현재 6.29 대책 후속조치를 추진중이며 은행권 일부 대책은 8월중 시행되었으나 기타 대책은 현재 법령 개정 작업중에 있음(첨부. 후속조치 추진현황)

- * (은행) 채무상환능력 확인 의무화, 예대율 관리 강화, 은행 성과평가지표 개선, 고정금리·비거치식 비중 확대(30%) ⇒ 8월부터 시행중
- * (은행) 변동금리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금리상한상품 활성화 등 ⇒ 가이드라인 마련
- * 상호금융 총당금 규제 강화(2년유예후 시행) 및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도입, 신탁 간주조합원 대출한도 규제강화 ⇒ 하반기중 시행령 및 감독규정개정 추진
-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차등화·체크카드 세제 지원(소득세법) ⇒ 9월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 *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여전법) 등 ⇒ 8월 국회 발의

□ 주요 대책이 본격 시행된지 채 한달이 안된 시점에서 대책시행의 성과를 분석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

□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금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 이와 함께, 대책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나가겠음

참고 1

6.29 종합대책 추진현황

| 추진 과제 | 필요 조치 | 시행시기 | 추진 경과 |
|---------------------------|----------|---------------|--------------------------------------|
| 1. 가계부채 적정증가 방안 | | | |
| 가. 은행권 | | | |
| ❶ 고위험 및 편중대출 BIS 규제 강화 | 시행세칙 개정 | 11년 중 | 9월 중 시행세칙 개정안 마련 |
| ❷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 지도공문 발송 | 11.7월 중 | |
| ❸ 대출상환능력 확인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7월 중 | |
| ❹ 예대율 관리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7월 중 | |
| 나. 비은행권 | | | |
| ❶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 도입 | 여전법 등 개정 | 11년 중 국회제출 | 개정안 마련 중 |
| ❷ 여전사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11년 중 | |
| ❸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 시행령 등 개정 | 11년 중 | |
| ❹ 신탁 간주조합원 대출총량한도 도입 | 시행령 개정 | 11년 중 | |
| ❺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11년 중 | |
| 다. 체크카드 활성화 | | | |
| ❶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 | 소득세법 개정 | 11년 중 국회제출 | 세제개편안 발표 |
|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 | | |
| 가. 고정금리·분할상환 활성화 | | | |
| ❶ 소득공제 차등화 | 소득세법 개정 | 11년 중 국회제출 | 세제개편안 발표 |
| ❷ 주신보 출연료율 차등화 | 시행규칙 개정 | 11년 중 | 관계부처 협의 중 |
| ❸ 은행별 목표관리 강화(고정·비거치 30%) | 지도공문 발송 | 11년 중 | 시행 중 |
| 나. 장기자금조달 여건 마련 | | | |
| ❶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 이후 | 시행 중 |
|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 | |
| ❶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 중 | 가이드라인 마련 → 금주 중 은행연합회 부의·의결 |
| ❷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 중 | |
| ❸ 잔액기준 COFIX 유도 | 실적점검 | 11.7월 중 | |
| ❹ 금리상한상품 활성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 중 | |
| ❺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 실태점검 | 11년 중 | 하반기 중 점검계획 |
| ❻ 불법·허위 광고 억제 | 실태점검 | 11년 중 | |

붙임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2011. 6. 29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I.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황
2. 가계부채 증가 추이
3. 평가

II.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방향>

<금융부문 대응방안>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2. 가계대출구조 개선방안
3.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
4. 서민금융기반 강화방안

III. 추진 계획

(별첨) 금융부문대책 추진일정

I.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1

현황

□ 11.3말 현재 가계부채는 801.4조원으로 가계대출이 752.3조원* (은행권 435.1조+비은행권 317.2조), 판매신용이 49.1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364.9조(은행 289.9조, 비은행 75.0조)로 전체 가계대출의 48.5%

□ 가계부채는 99년~10년중 연평균 13.0% 증가하여 경상 GDP 증가율(7.3%)을 상회

□ 이에 따라 가계부채는 경제·소득규모 대비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09년 기준으로 GDP대비 86%(12위), 가처분소득 대비 153%(9위)이며, OECD 국가 평균을 상회

| | 한국 | 미국 | 영국 | 일본 | OECD평균 |
|-----------------|------------|-------|-------|---------------------|--------|
| ▪ 가계부채/GDP(%) | 85.9 (12위) | 100.2 | 110.0 | 80.4 | 77.0 |
|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 152.7 (9위) | 132.0 | 171.5 | 129.5 ¹⁾ | 134.1 |

주) 자금순환표상 개인금융부채(09년, 통계가 공표된 27개국 기준), 1) 08말 기준

< 가계부채 추이 >

* 한은 가계신용기준

| (조원) | '99말 | '02말 | '05말 | '07말 | '09말 | '10말 | '11.3말 |
|----------------------|-------|-------|-------|-------|-------|-------|--------|
| 가계신용 | 214.0 | 439.1 | 521.5 | 630.7 | 733.7 | 795.4 | 801.4 |
| 가계대출 | 191.9 | 391.1 | 493.5 | 595.4 | 692.0 | 746.0 | 752.3 |
| - 은행 | 76.3 | 222.0 | 305.5 | 363.7 | 409.5 | 431.5 | 435.1 |
| 주담대 | - | - | 190.2 | 221.6 | 264.2 | 284.5 | 289.9 |
| - 비은행 | 115.6 | 169.1 | 188.0 | 231.7 | 282.5 | 314.5 | 317.2 |
| (상호금융) ¹⁾ | 37.8 | 45.7 | 77.8 | 101.4 | 132.2 | 154.8 | 157.4 |
| (여전사) | 16.2 | 57.1 | 23.8 | 30.7 | 31.5 | 36.3 | 36.9 |
| 주담대 ²⁾ | - | - | - | 46.6 | 64.6 | 73.1 | 75.0 |
| 판매신용 ³⁾ | 22.1 | 47.9 | 28.0 | 35.3 | 41.7 | 49.4 | 49.1 |

1) 단위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2) 보험사·여전사 등 제외,

3) 카드사 신용판매, 여전사 및 판매회사(백화점 등) 제공 신용

◇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99~02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회복기, 05~06년 주택시장 호황기에 급증

| (연평균 증가율) | '99~'02 | '03~'04 | '05~'06 | '07~'10 |
|----------------|---------|---------|---------|---------|
| ▪ 가계 부채 (%) : | 24.3 | 4.0 | 10.7 | 8.1 |
| ▪ 경상 GDP (%) : | 9.5 | 7.1 | 4.8 | 6.6 |

□ (99~02년) 시중유동성 증가, 기업대출수요 감소, 가계수지 악화 등에 따른 저축률 하락과 함께 가계부채 급증(연평균 24%)

○ 금리급락 등으로 시중유동성은 증가하는 반면, 기업은 구조조정 · 재무구조 개선 추진으로 대출수요가 감소

* 유동성 증가율(L) - GDP 증가율(%) : (99년)△0.3, (00년)2.1, (01년)4.0, (02년)3.0

* 제조업 부채비율(%) : (97년) 396, (99년) 215, (01년) 182, (02년) 135

- 가계대출 수요가 기업대출수요 감소를 점진적으로 대체

* 은행대출 증가율(%) : [가계] (99년)44.2, (00년)40.5, (01년)46.1, (02년)41.7
[기업] (99년)18.1, (00년)18.0, (01년)△1.0, (02년)24.8

○ 외환위기이후 소득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가운데 교육비 · 통신비 등 지출부담은 증가하면서 저축률이 급감

* 개인 저축률(%) : (99년) 21.6, (00년) 8.6, (01년) 4.8, (02년) 0.4

* 가계지출 중 교육비+통신비 비중(%) : (97년)13.6, (99년)15.6, (01년)17.2, (02년)17.6

○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으로 카드사 등 여전사의 가계 대출(카드론 · 현금서비스) 및 판매신용도 30%대 증가세를 시현

* 여전사 가계대출 증가율(%) : (99년)35.0, (00년)107.4, (01년)30.0, (02년)30.8

* 여전사 판매신용 증가율(%) : (99년)30.9 (00년) 35.5, (01년)62.3, (02년)29.2

□ (03~04년) 카드사태 등에 따른 신용경색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연평균 4.0%)

- 여전사 등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판매신용은 감소

* 03~04년중 연평균 증가율(%):(은행대출)11.6, (비은행대출)1.2, (판매신용)△27.4

□ (05~06년) 부동산경기 과열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연(연평균 10.7%)

-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대출확대 경쟁 등 시중자금의 주택시장 쏠림현상 발생

* 수도권 아파트가격/은행 주담대 증가율(yoy, %):(05년)7.2/12.4, (06년)24.6/14.1

□ (07년 이후) 주택대출 규제 강화, 기업 자금수요회복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었으나 증가세는 지속(연평균 8.1%)

- 은행권은 경제성장을 이내로 조정되고 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의 증가폭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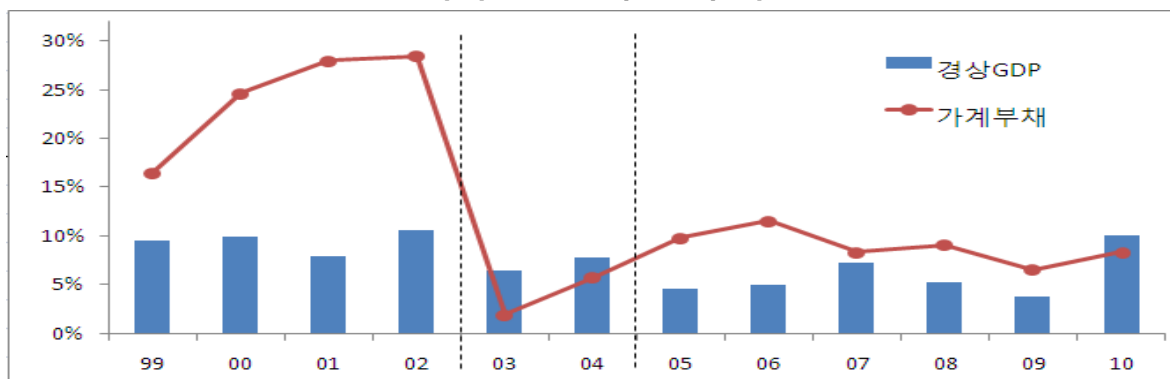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07년)5.5, (08년)6.8, (09년)5.4, (10년)5.4

* 07~10년 연평균 증가율(가계대출/주담대, %):(은행)5.7/7.0, (비은행)11.4/16.2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 비중(%): 06말 37.1% → 10말 42.2%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도 증가세 지속(9.1%)

<시기별 가계부채 추이>



< 참고 : 비은행 가계대출 증가동향 >

- 07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비은행권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11.4%)

| (yoy, %) | '07 | '08 | '09 | '10 | ('07~'10 평균) |
|------------|------|--------|--------|--------|--------------|
| * 은행 가계대출 | 5.0 | 6.8 | 5.4 | 5.4 | 5.7 |
| * 비은행 가계대출 | 13.5 | 12.1 | 8.7 | 11.3 | 11.4 |
| (주택담보대출) | (-) | (20.1) | (15.4) | (13.1) | (16.2) |

- 전체 가계대출 중 비은행권 비중도 상승(06말 37.1%→10말 42.2%)
-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빠른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10년들어 여전사·저축은행 등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 (상호금융) 세제혜택* 등에 따른 수신 증가 등의 영향으로 07년 이후 평균 15.4% 증가
 -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비과세(09.1월부터 비과세한도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확대)
 - * 07~10년 연평균 상호금융 예금 증가율 : 15.9%(대출 증가율 15.4%)
 - (저축은행) 아직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크지 않으나 PF대출 시장 위축에 따라 가계대출이 확대(10년중 11.3% 증가)
 - (여전사) 10년중 카드론(35.2%)을 중심으로 가계대출(15.2%) 증가, 경기회복세와 더불어 신용판매(12.3%)도 급증

< 비은행권 가계대출 추이(한은, 가계신용) >

| | '06말 | '07말 | '08말 | '09말 | '10말 | '11.3말 |
|--------------------|---------|---------|---------|---------|---------|---------|
| 비은행권 합계 | 204.2 | 231.7 | 259.8 | 282.5 | 314.5 | 317.1 |
| (전년동기비) | (10.7%) | (13.7%) | (15.4%) | (10.9%) | (16.4%) | (10.8%) |
| 상호금융 ¹⁾ | 87.5 | 101.4 | 118. | 132.2 | 154.8 | 157.4 |
| 보험 | 50.9 | 55.9 | 61.7 | 64.2 | 66.0 | 66.7 |
| 여전사 | 25.2 | 30.7 | 31.3 | 31.5 | 36.3 | 36.9 |
| 저축은행 | 7.7 | 6.8 | 6.9 | 7.3 | 8.2 | 8.4 |

1) 상호금융, 신탁, 새마을금고

- 외환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금리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부동산가격 상승(및 추가상승 기대심리), 금융회사의 대출확대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가계부채는 경제성장 및 금융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

※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속 증가추세

* 한국 : (01) 61.2% → (09) 85.9% (+24.7%p)

* OECD 평균 : (01) 51.8% → (09) 77.0% (+25.2%p)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내수회복 등 위기극복·경제성장에 기여

* 99년~02년중 GDP 증가에 대한 민간소비 기여율: **74.4%** (90년 이후 평균 48%)

- 또한, 외환위기 이후 과거 기업에 편중된 대출이 시정되면서 가계의 금융이용이 확대된 측면도 있음

- 외환위기 이전 기업부문에 집중되고 가계부문에는 위축되었던 기업과 가계간 자금배분의 불균형이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

- 이에 따라 기업대출 비중이 줄어들고 기업 부채비율도 크게 개선

* 은행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 :

(98말) 27.7 → (02말) 47.1 → (10말) 43.7 [美(04말) 45.2, 英(03말) 46.0]

* 기업부채비율(%) : (98년) 303.0, (02년) 135.4, (05년) 100.9, (09년) 109.6

□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주요국에 비해 다소 높으나, 건전성, 차주 구성, 금융사 손실흡수능력, 가계 자산상황 등을 감안시 아직까지는 대체로 관리가능한(broadly manageable) 수준으로 판단

○ 금융권 연체율 등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수준 유지

* 가계대출 연체율(전업권, %): (06)2.44, (07)1.94, (08)1.91, (09)1.76, (10)1.68

(은행, %): (06)0.70, (07)0.55, (08)0.60, (09)0.42, (10)0.61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전업권, %) : (10.12월) 0.87, (美, 10.4/4) 8.22

○ 그동안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로 채무상환능력이 양호한 고신용층 중심으로 이루어져 과거에 비해 이들 계층의 대출비중이 증가

* 고신용등급(1~4등급) 대출 비중(%) : (06말) 62.0, (08말) 62.4, (10말) **70.2**

※ 美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우, 비우량 대출인 서브프라임 대출 비중이 01년 8.6%에서 06년 20%까지 확대

○ 가계대출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담보인정비율(LTV)이 상당히 낮음

* 韓 47%, 美 75%, 英 61%, 佛 80%, 獨 74%, 홍콩 64% ('09말 기준)

- BIS 비율·당기순이익 등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높아진 상황

* BIS 비율(은행, %) : ('06말)12.8, ('08말)12.3, ('10말)**14.6**(글로벌 20대 은행 13.6)

* 당기순이익(은행, 조원) : ('07년) 15.0, ('08년) 7.7, ('09년) 6.9, ('10년) **9.3**

○ 또한 최근 수년간 가계금융부채 증가와 동시에 금융자산은 더욱 크게 증가하여 가계 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오히려 상승

* 가계금융자산 / 부채 (배) : ('08말) 2.09, ('09말) 2.28, ('10말) 2.32, ('11.3말) 2.33

※ 가계금융부채대비 금융자산비율은 02년 이후 OECD 평균 △0.67배 감소한 반면, 우리는 +0.12배 증가

□ 다만, 가계대출의 높은 증가세, 취약한 대출구조, 저신용층의 상환 여력 문제 등 가계부채 잠재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경제·금융시장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가계대출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

- 변동금리부 대출비중이 높고, 금리 적용기간이 짧음

* 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09말, %) : **(韓)95**, (美)10, (英)62, (佛)13, (獨)10

* 금리적용기간(변동주기)는 통상 3개월 수준(美은 통상 1년, 日은 6개월 이상)

- 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만기시 상환부담이 크고 차환위험에 노출

▪ 분할상환 대출의 경우에도 거치기간 연장 관행 지속

* 일시상환 비중(은행) : **(韓) 41%**(‘10말), (美) 9.7%(‘10말), (EU) 7.5%(‘09말)

* 주담대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일시상환+거치기간중인 분할상환) 비중 : 80%(‘10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상환유형별 현황(‘10년말)>

| 일시상환 | 분할상환 | | 합계 |
|----------------|----------------|---------|--------|
| | 거치기간중 | 원금상환중 | |
| 117.4조 | 108.8조 | 58.8조 | 284.5조 |
| (41.3%) | (38.2%) | (20.5%) | (100%) |

■ : ‘10년말 현재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하고 경기·금리여건에 대한 민감도가 큰 저신용층의 어려움이 상존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전체 |
|---------------------------------------|----------------|----------------|---------------|---------------|----------------|----------------|
| * 금리1%p 상승시 순이자부담(만원) (가처분소득대비) | 16.1 (3.2%) | 13.0 (1.0%) | 9.8 (0.4%) | 9.0 (0.4%) | 17.1 (0.3%) | 12.4 (0.4%) |

주) 통계청 2010년 가계신용조사,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금리민감 자산 및 부채 기준

➡ 지금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선제적 관리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의 대응여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

Ⅱ.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기본 방향>

- ◇ 가계부채 문제가 향후 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거시·미시적 정책대응을 강화하되, 가계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가계부채 연착륙 도모
-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 방안 강구
 - ① 시중유동성 안정적 관리, 주택시장 안정기조 지속,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자금의 생산적인 흐름을 유도
 - ②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등을 통한 가계의 상환능력을 제고
 - ※ ①, ②과제의 세부 정책대안(“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참조)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정부의 종합적인 경제정책운용 등을 통해 지속 대응
 - ③ 거시경제 환경조성의 지속적인 뒷받침하에 가계부채 관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부문의 정책대응을 강화
 -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증가요인 차단, 신중한 가계대출 관행유도 등을 통해 적정수준의 가계부채 증가 도모
 -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및 손실흐수능력을 제고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
 - 가계대출을 받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
 - ④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11.4.15일 발표)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가계부채를 안정화

1

가계부채 적정증가를 위한 관리방안

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

□ 은행 가계대출 적정증가 유도

① 고위험대출 및 편중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도와 무관하게 은행별 위험가중치를 일률적으로 적용

※ 고위험 대출 (例示) :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별도 마련

- ① 만기 5년 이하 일시상환 대출 중 차주의 부채비율(총대출금/연소득)이 500%를 넘는 경우
- ② 3건 이상 대출 보유자에 대한 대출

○ 특정부문(예: 주택담보대출) 편중대출(예: 자기자본의 2배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BIS 위험가중치 상향적용

⇒ 영향분석 · 검증을 거쳐 세부시행방안 결정

②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개편

○ 가계대출 실적에 따른 평가를 폐지하는 등 수익성 및 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지도

③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착

○ 현재 DTI 의무적용 대상대출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27.1% 수준(은행기준, 10.1~6월)

*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대출의 경우, LTV 비율만 감안하고 소득 등 상환 능력에 대해서는 확인업무가 소홀

○ 앞으로 소득증빙자료 확인 등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확인을 통해 건전한 주택담보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CAMELS 반영 등)

○ 자율정착 추이를 보면서 DTI 적용대상의 단계적 확대 검토

* 단, 충분한 예고 및 준비기간을 부여하는 등 시행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

□ 은행 예대율 관리 강화

- 100% 초과 은행 : 100% 준수기한(13년말)을 12.6월말까지 1년6개월 단축 지도
- 100% 미달 은행 : 준수기한(12.6월말)중 다시 100%를 초과 하지 않도록 지도

* 11.3월말 현재 일반은행(13개) 예대율 : 97.1%

나. 증가속도가 빠른 제2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요인을 억제하고 건전성을 강화하되, 단계적 시행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추진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 여전사의 외형 확대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

- ① 카드자산,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 비용(율) 등 3개 부문에 대해 연간 적정증가율 설정·관리(6.7일 既발표)
 - 회사별 목표수준에 대해 정기점검
 - 과도한 외형확장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규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
- ②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도입을 통한 관리 강화
 -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와 여타 여전사간 규제수준을 차등화
 - 규제 한도를 초과한 여전사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점진적인 규제준수를 유도

* 레버리지 현황(평균/최고, 11.3말, 배) :
(카드사) 4.1 / 7.7, (할부사) 8.4 / 20.1, (리스사) 7.2 / 18.0

③ 회사채 발행 특례(자기자본대비 10배) 폐지(6.7일 既발표)

* 레버리지 규제로 대체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을 단계적으로 강화

- 카드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6.15일 규정개정 완료, 상반기 결산부터 적용)

* 정상 여신 : 1.5% → 2.5%, 요주의 여신 : 40% → 50%

- 여타 여전사의 경우에도 리스크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강화

- 요주의 여신('12년) : 2%(할부대출), 8%(가계대출) → **10%**

- 정상 여신 : 1%(은행과 동일) → 적립비율 상향폭은 리스크 수준 및 레버리지 규제도입 효과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

□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영업경쟁 유도(3.30일 既발표)

- 카드 모집실태 및 마케팅 경쟁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인에 대한 제재 강화

* 모집실태 점검주기 단축(매반기→매분기), 여신금융협회 합동기동점검반 강화(20명→30명, 금감원 참여(월1회))

- 다중채무자 발생 억제 및 카드사의 건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3장→2장이상 소지자)

* 현재 신용카드 3개 이상 소지자의 카드 사용실적, 이용한도 등에 대해 카드사간 정보공유

[상호금융]

-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한도가 확대(09.1월, 2천→3천만원)
되면서 수신이 급증하고 가계대출이 확대

* 09~10년중 예수금 증감 (증가율) : (상호금융) 57.5조(29.1%) (은행) 191.8조(21.9%)
가계대출 증감(증가율) : (상호금융) 36.8조(31.2%) (은행) 42.9조(11.0%)

※ <참고>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 개요

-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예탁한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
이자소득세(15.4%)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89의3)
- 혜택 : 비과세(~'12말) → 5%과세('13) → 9%과세('14~)

⇒ 비과세 혜택은 12년말 예정대로 종료하여 가계대출
확대요인이 된 상호금융 수신증가를 최대한 정상화

- 상호금융 여신 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 등 타금융권 수준으로 강화

○ 건전성 분류기준 강화

| | <현 행> | | <개 선(안)> |
|----------|--------------|---|------------|
| * 정상여신 | : 3개월미만 연체 | → | 1개월미만 연체 |
| * 요주의여신 | : 3~6개월미만 연체 | → | 1~3개월미만 연체 |
| * 고정이하여신 | : 6개월이상 연체 | → | 3개월이상 연체 |

○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상향조정

* 정상여신 (0.5% → 1%), 요주의여신 (1% → 10%)

⇒ 2년 유예후 3년간 단계적으로 건전성 분류기준 및 비율
상향조정(유예기간 중 최소적립률 이상으로 적립토록하여 충격흡수 유도)

□ 상호금융 대출한도 강화

① 자기자본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 설정

- 현재는 자산총액 기준 동일인 대출한도(5억원)는 있으나 자기자본기준 한도가 없어 합리적 수준의 최고한도 설정

* 동일인 한도 : 자기자본의 20%와 자산총액의 1%(5억원 한도) 중 큰 금액
* 자기자본/동일인 대출한도(11.3말, 억원) : 신탁 44/9, 농협 147/30, 산림조합 34/7

② 신탁의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 총량한도 도입

- * 조합원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자, 다른 조합의 조합원 등으로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현재 별도의 대출총량한도가 없음
- 간주조합원 대출도 비조합원 대출 총한도(연간 신규대출 취급액의 1/3로 제한)에 포함해서 적용

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통해 지급결제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신용이용을 억제

□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 현재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 중 신용카드 20%, 체크카드 25%까지 소득공제

□ 개인신용평가지 신용카드 이용실적외 체크카드 이용실적도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

* 현재 신용카드는 장기간 연체 없이 이용한 경우 신용등급 향상요인이 되나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음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3월말 既 시행)

* 2.0~2.5% → (중소가맹점) 1.0%, (일반가맹점) 1.5~1.7%

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를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고 기타대출은 축소(신규대출부터 적용)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공제제도 개선 방안>

| 구 분 | 현 행 | 개선안 |
|------------|---------------|--|
| 주택보유수 | 무주택자 | 좌 동 |
| 대상주택 | 3억이하 국민주택규모이하 | 좌 동 |
| 상환기간 | 15년 이상 | 좌 동 |
| 소득공제 한도 | 1,000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 1,500만원 기타 대출 : 500만원 |

- 시중은행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화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하하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한 요율은 인상

* (현행) 고정금리대출은 연 **0.125%**(거치식·비거치식 구분 없음)
변동금리대출은 연 **0.260%**

-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유도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이 '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유도
- 은행은 자체 정상화 연차 목표*(예: 매년 3년주기)를 설정하고 감독당국은 이행실적을 점검

*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은 분리 운영도 가능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상품 및 혼합대출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대출금의 일정부분(예: 20%~50%)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인 상품(상기 목표대출 실적에 포함)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실무T/F를 구성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안내 데스크 설치 등 on-off 라인을 통한 상품 안내·홍보 강화(은행연합회)

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은행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지원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매입·유동화(MBS발행) 지원

☐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추진

-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활용하는 경우 보증대상은 기초 자산에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일정비율(예 : 20%~50%) 이상 포함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증가추이를 보아가며 편입비율 확대

☐ MBS·커버드본드 발행여력 확대를 위한 자본금 확충

-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및 유동화 수요를 보면서 자본금 확충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변동금리부 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① 변동금리 대출상품 판매시 고지의무 등 강화

- 차주에 대한 고지가 필요한 필수사항 규정

※ 고지의무사항(예시) :

- (i) 금리·금리변동주기·금리변동사유 등 기본적 사항
- (ii) 금리변동상품의 위험성 고지 및 차주 확인
- (iii) 금리변동폭에 따른 차주 부담 증가액(월간, 연간)
- (iv) 최근 5년간 최대금리 변동폭 및 부담 증가액

- 금리변동시 충분한 사전고지 기간 부여(예 : 최소 1개월전)

* 현재는 서비스를 신청한자에 한해 1~2주전 고지

②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현재 은행은 대출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상환시 약 1.5% 수수료 부과

③ 변동성이 낮은 COFIX(잔액기준) 연동대출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 변동폭을 축소하는 옵션부 대출상품 개발 유도

<금리상한 옵션 대출상품 종류>

| | |
|---------------------|------------------------|
| 쫄기간한도(lifetime cap) | 대출 전기간 중 인상한도 설정 |
| 기간한도(periodic cap) | 금리조정시마다 1회 인상한도 설정 |
| 상환한도(payment cap) | 금리조정시 월 상환금액 증가 한도를 설정 |

- CD(3개월) 등 여타 금리 연동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변동 상한을 제시(금리상한 옵션 대출 상품 판매 등)토록 유도

- 금리변동주기 확대(3개월 → 6개월 또는 1년 이상) 유도

* 통상 금리변동주기는 3개월(미국은 1년, 일본은 6개월 이상)

※ 분기별 추진계획 및 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 점검(은행 등 가능한 업권부터 先시행)

□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시 점검

- 대출모집인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정 제재 및 필요시 법적 규제장치 마련(협회별 T/F 구성)
-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대출중개 행태 및 중개 수수료 등 실태조사 강화 등 관련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행위 엄정 제재

□ 불법·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근절

- 관련법규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 일선점포 불법·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본점의 책임 강화

◇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이 심화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중

◇ 가계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

※ 11.4.15일 발표한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추진

□ 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을 통해 서민금융 공급 확대

○ (미소금융) 제도권 금융접근이 곤란한 서민들에게 대출과 더불어 자활컨설팅 지원(10.1~11.6 : 2,521억원 대출)

- 미소금융 컨설팅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직능 단체 등과의 연계 강화 추진중

* 금년중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컨설팅 전문인력 4천명 교육

* 현재 세탁업중앙회, 미용사 협회 등으로부터 적격자를 추천받고 있는 것을 여타 단체로 확대

○ (햇살론) 정부 및 민간출연금으로 보증재원을 마련하여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 (10.7~11.6 : 1조6,368억원 대출)

- 서민들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 (예시)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탄력적용, 보증지원절차 간소화 등

○ (새희망홀씨) 기존 은행권 서민금융상품인 '희망홀씨'의 지원대상 확대 등 개선(10.11~11.5 : 6,867억원)

- 새희망홀씨 지원기준, 지원목표액 등을 포함한 자율규약 제정

□ 금리·수수료 인하 등 서민들의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금융접근성 제고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전통시장·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상한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으로 인하

* 전통시장내 중소가맹점 : 2.0~2.2% → 1.6~1.8%

기타 중소 가맹점 : 3.3~3.6% → 2.0~2.15%

- 수수료 인하대상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10.4) 9,600만원미만 → (11.5) 1.2억원미만 → (12.1) 1.5억원미만)

○ (고금리 대부업 피해 방지) 대부업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연49%→연44%(10.7)→연39%(11.6))하였으며, 과다·허위 대부
광고에 따른 서민피해 방지 방안 마련·추진

○ (금리비교공시 확대)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상호금융·대부업에도 비교공시제도 도입

○ (대출중개비용 경감) 여신금융협회의 온라인 대출중개
기능 수행, 불법 대출중개 단속강화, 다단계 대출중개
행위 금지* 등을 통해 서민층 고금리부담 완화

* 다단계 대출중개행위 금지 등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 준비중

○ (개인신용평가제도 개선) 신용조회기록 및 10만원 미만
연체정보 미반영, 단기연체정보 반영기간 축소(5년→3년)

* 현재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세부시행기준 마련을 위한 T/F 운영중, 전
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 예정

- 금융회사가 보유한 차주의 우량정보를 모든 신용조회
회사에 제공하고 신용평가시 적극 반영

* 4.28일부터 정보집중 개시, 10월부터 신용평가시 반영 예정

□ 저신용·저소득층의 대출만기 연장과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채무조정·전환대출 등 지원노력 강화

○ (신용회복) 금융채무불이행자 대상으로 원리금 감면 및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 지원(08년 이후 47.6만건 지원)

-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2년간 연장 시행 중(당초 11.4월 종료 예정)

- 6.1일부터 채무 상환기간(8년→10년) 및 상환 유예기간(1년→2년) 연장 시행 등 신용회복 제도 보강

- “사이버 지부” 활성화, 안내·홍보활동 강화, 신용회복 지원협약 참여기관(현재 3,523개) 확대 등을 통해 신용회복 지원 활성화 추진

○ (소액대출·취업지원) 신용회복지원자들의 성공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지원 및 취업지원

- 신용회복지원자 중 1년이상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 재할자금(4%) 지원규모 확대(10년 700억원→11년 1,000~1,200억원)

* 은행 등의 추가 기부금 출연 등 재원확대방안 강구

-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중인 200억원 규모의 취업지원펀드를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500억원까지 확대

○ (전환대출) KAMCO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의 보증 지원을 통해 6등급이하 서민층의 고금리대출을 12%내외의 은행대출로 전환(08년이후 4,697억원 지원)

- 지원대상 확대 및 창구 확대 등 전환대출 지원 보강

* 지원대상(6.10 시행) : (현행) 6~10등급 → (개선) 연소득 2,600만원 이하

* 지원창구(6.30 예정) : (현행) 6개 은행 창구 → (개선) 전국 모든 은행 창구

Ⅲ. 추진 계획

□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조기사행이 가능한 사항은 7월중 추진
-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 실무 T/F를 구성·검토후 하반기중 시행
- 법령·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중 개정완료
 - 법률 개정사항은 금년중 국회 제출 추진

□ 앞으로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추가검토후 보강대책을 추진

① 가계대출 적정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가계대출이 적정수준(예: 직전 5년간 경상 GDP 성장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예: 10%~50%)을 준비금의 형태로 적립토록 하는 방안

* 준비금 적립시 배당이 제한되므로 간접적으로 가계대출 확대를 억제(당기손익 및 배당을 제한하는 현행 대손충당금과는 달리 당기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고 배당만 제한; 대손준비금과 유사)

⇒ 적정수준 기준, 적립률 등 운영방안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영향분석,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

② 은행 예대율 준수비율(현행 100%) 하향 조정

③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관행 개선

④ 고위험·편중대출 관리 추가강화 등

| 추진 과제 | 필요 조치 | 시행시기 | 소관부처 |
|-----------------------------------|------------------|--------------|--------------|
| 1. 가계부채 적정증가 방안 | | | |
| 나. 은행권 | | | |
| ❶ 고위험 및 편중대출 BIS 규제 강화 | 시행세칙 개정 | 11년중 | 금감원 |
| ❷ 영업점 성과평가 개선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❸ 대출상환능력 확인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❹ 예대율 관리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7월중 | 금감원 |
| 가. 비은행권 | | | |
| ❶ 여전사 레버리지 규제도입 및 회사채 발행 특례 폐지 추진 | 여전법 등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금융위 |
| ❷ 여전사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❸ 상호금융 동일인 대출한도 강화 | 시행령 등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❹ 신탁 간주조합원 대출총량한도 도입 | 시행령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❺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규제 강화 | 감독규정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다. 체크카드 활성화 | | | |
| ❶ 체크카드 세제혜택 우대 | 소득세법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기재부 |
| ❷ 체크카드 이용실적 신용평가 반영 | 신평사 자율시행 | 11년중 | |
| 2. 가계대출 구조개선 방안 | | | |
| 가. 고정금리·분할상환 활성화 | | | |
| ❶ 소득공제 차등화 | 소득세법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기재부 |
| ❷ 주신보 출연료를 차등화 | 시행규칙 개정 | 11년중 | 금융위 |
| ❸ 은행별 목표관리 강화 | 지도공문 발송 | 11년중 | 금감원 |
| 나. 장기자금조달 여건 마련 | | | |
| ❶ MBS 및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이후 | 금융위 · 금감원 |
|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 | | |
| ❶ 변동금리대출 설명의무 강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중 | 금융위 · 금감원 |
| ❷ 고정금리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중 | |
| ❸ 잔액기준 COFIX 유도 | 실적점검 | 11.7월중 | |
| ❹ 금리상한상품 활성화 | 가이드라인 마련 | 11년중 | |
| ❺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 | 실태점검 | 11년중 | |
| ❻ 불법·허위 광고 억제 | 실태점검 | 11년중 | |
| 4 서민금융 기반강화 방안 | | | |
| ❶ 서민우대금융 자금지원기준 등 개선 |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선 | 11.7월 | 금융위 |
| ❷ 과다 허위 대부광고 피해방지 | 대부업법 개정 | 11년중 국회제출 | 금융위 |
| ❸ 신용회복지원 활성화 | 실적점검 | 11년중 | 금융위 |

강성종 의원(민주당)

4. “카드대출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 등 건전성 강화” 대책 관련

가.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의 근거

나.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 축소의 근거

가.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의 근거

-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간 연체율* 및 예상손실률 차이가 있음에도 그동안 동일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

* '10말 현재 : (신용판매) 일시불 0.70%, 할부 1.07% / (카드대출) 2.20%

**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

- 신용판매자산과 카드대출자산(카드론·현금서비스·리볼빙)에 대한 예상손실률 분석결과,
 - 평균적으로 신용판매 자산은 1.4%, 카드대출 자산은 3.4%로 카드대출의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 특히, 연체 1개월 미만인 정상자산은 예상손실률이 매우 낮았으나 2개월 이상 연체자산이 3개월 연체로 전이될 확률은 신용판매, 카드대출 모두 60~70%로 급증하는 등 요주의 자산의 예상손실률이 급격히 상승
- ⇒ 예상 손실률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판매자산 중 정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과 카드대출자산의 대손충당금 적립율을 대폭 상향조정

나. 복수카드 정보공유범위 축소 근거

□ 정보공유 범위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확대되었음

- 다중채무자 확대에 의한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결영은행 포함)는 복수카드 소지자에 대한 각 카드사의 정보*를 상호공유

* 이용한도, 신용판매 및 카드대출 이용실적, 연체금액 등

- 이전에는 3매 이상 소지자(55%)의 정보만 공유되어 2매 소지자(21%)에 대한 위험관리가 취약해질 소지가 있어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3장 이상 소지자에서 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11.8)

<신용카드 매수별 소지현황('11.2월말 현재)>

(단위: 만 명, %)

| | 계 | 1매 | 2매 | 3매이상 |
|--------|-------------|------------|-------------------|--------------|
| 인원(비중) | 2,545 (100) | 615 (24.2) | 534 (21.0) | 1,396 (54.8) |

- 정보공유 회원 비중이 54.8%(1,396만명) → 76.8%(1,930만명)로 확대(534만명, 21.0%p)되어 건전성 관리가 강화

강성종 의원(민주당)

5. 금융회사 IT보안사고 관련

가.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TF” 구성원 명단 및 추진경과

나.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종합대책(6.23)” 자료

가.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TF 구성원 명단 및 추진경과

□ 금융회사 IT보안강화 TF 산하 3개반을 운영

○ 현대캐피탈·농협 점검대응반

| 소속 | 직위 |
|-------|-----------|
| 금융위원회 | 의사운영정보팀장 |
| | 중소금융과장 |
| 금융감독원 | 감독서비스총괄국장 |
| | IT서비스실장 |
| | 여신전문서비스실장 |
| | 특별검사반장 |

○ 금융 IT 보안실태 점검대책반

| 소속 | 직위 |
|--------|----------|
| 금융위원회 | 기획조정관 |
| | 의사운영정보팀장 |
| 금융감독원 | IT서비스실장 |
| SK C&C | 전무 |
| 금융결제원 | IT본부장 |
| 코스콤 | 인프라본부장 |
| LG CNS | 정보보호부장 |

○ 금융 IT 보안 제도 개선반

| 소속 | 직위 |
|---------|--------------|
| 금융위원회 | 금융서비스국장 |
| | 은행과장 |
| | 은행과 사무관 |
| | 의사운영정보팀 사무관 |
| 금융감독원 | IT서비스실 부국장 |
| | IT서비스실 선임조사역 |
| 금융결제원 | 금융정보보호부 대리 |
| | 전자인증부 부부장 |
| 코스콤 | 정보보호사업부 차장 |
| 금융보안연구원 | 정보보안본부 팀장 |



□ 추진경과

- (4.7)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4.7) 및 농협 전산장애 사고(4.12) 등 발생
- (4.15)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TF 구성
- (4.27~6.17) 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등 총 40여개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 (6.21)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관련 TF 최종점검 및 의견수렴 회의 개최
- (6.23)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발표
- (6.27~7.1) 은행권(6.27), 증권업계(6.30), 보험, 카드, 저축은행(7.1)을 대상으로 한 종합대책 의견수렴
- (8월)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추진중

나. “금융회사 IT보안 강화 종합대책(6.23)” 자료

□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4.7) 및 농협 전산장애 사고(4.12) 등을 계기로 T/F를 구성하여 금융회사 IT보안 종합대책(6.23)을 마련하였습니다.

○ 세부내역 : <붙임> 참조

| | | |
|--|---|--|
|  금융위원회 |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10px 0 0 0;">2011. 6. 23. 15:00부터 보도 가능</p> |  금융감독원 |
|--|---|--|

| | | | | |
|-------|---|-------|---------------------|------|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실 의사운영정보팀, 금융서비스국 은행과 금융감독원 IT감독국 | | | |
| 책 임 자 | 이윤재 팀장(2156-9630) | 담 당 자 | 오득용 사무관(2156-9631) | |
| | 성대규 과장(2156-9810) 최한묵 국장(3145-7180) | | 이종림 사무관(2156-9813) | |
| 배 포 일 | 2011. 6. 23.(목) | 배포부서 | 정책홍보팀(2156-9542~48) | 총12매 |
| | | | | |
| | | | 공보실(3145-5786) | |

제목 :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종합대책 마련

I. 추진 배경

- (필요성)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근 발생한 현대캐피탈 고객정보유출(4.7) 및 농협 전산장애 사고(4.12) 등은 금융회사 IT보안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 제기
 - 아울러 향후 우리나라가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IT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이와 함께 금융거래 안전성 강화 대책도 요구
- (추진 경과) 지난 4.19일 금융회사 IT 보안강화 TF를 구성한 이후, 서면점검,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작업을 병행 추진
 - * 서면점검(총 322개사), 현장점검(총47개사)
 - 점검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 수차례 민간 IT보안전문가 및 금융회사 IT임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

II.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 사고발생에 따른 일시적 대응책이 아닌 근원적인 IT 보안강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경영진의 인식 전환과 IT 보안조직(인력·예산)의 실질적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i) 우선, IT보안 관련 CEO의 책임 부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의무화 등을 통해 책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고시 제재수준을 강화
- (ii) 아울러 IT보안 인프라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 등 기술적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 (iii)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불가피한 침해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한 위기대응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으로 피해 확산 차단 노력

1. IT 조직역량 강화 및 보안투자 확대

① IT 보안에 대한 CEO의 역할 및 책임 부여

□ (현 황) IT보안에 대한 CEO 등의 저조한 관심도*가 보안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최근 한 보안연구기관의 설문조사에서도, “임직원의 인식결여” 및 “보안담당자 홀대” 등 인적문제(50%)가 보안사고발생의 주된 원인이라고 답변하였으며, 그 해결방안으로는 “경영자의 관심 제고(65%)”가 우선이라고 답변

□ (개선방안) CEO가 연간 IT 보안계획을 직접 승인(책임부여)하고, 그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임원성과평가와도 연계하도록 유도

* 미국은 엔론 회계 부정 사건을 계기로 CEO의 재무보고서 확인·서명을 의무화 하였고, 우리나라도 CEO의 사업보고서(재무제표 등) 확인·검토를 의무화

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 의무화

- ☐ (현 황) 상당수 금융회사는 정보최고책임자(CIO:Chief Information Officer)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를 겸직하거나, CISO를 지정하지 않고 있음

☞ CISO 별도 지정 운영(%) : 은행 29, 증권·보험 23, 카드 67, 기타 여전사 4
CISO 겸임 운영(%) : 은행 59, 증권 40, 보험 44, 카드 33, 기타 여전사 22

- ☐ (개선방안) CISO 지정을 의무화하고, CISO 업무범위·자격요건 등을 명시(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사항)

• 현재 CISO 지정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금법 개정안(이성현의원)이 국회계류 중

- 또한, IT보안업무와 관련된 정보교류·주요 정책방향 협의 등 금융회사와 금융당국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CISO 협의회」 운영·추진

③ IT 보안인력 및 IT 보안투자 확대

- ☐ (현 황) IT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운영하는 금융회사가 상대적으로 적고, IT보안전담 인력 및 예산도 부족

- 금감원이 IT 보안예산 비율을 5% 이상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준수 의무가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최근 전산장애가 발생한 OO금융회사는 IT보안 투자비중이 총IT예산의 1% 중반에 불과

- 한편, IT 보안에 대한 투자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강함

- ☐ (개선방안) IT 보안인력비율 및 IT 예산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토록 의무화*하고, 그 준수여부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실질적 투자와 인력 확충으로 연결되도록 조치

• 등 비율을 감독규정으로 명시하고, IT보안인력 및 예산으로 인정되는 세부기준 마련

- 구체적인 비율 수준은 총자산규모, 직원수, 전자금융거래규모, 고객수,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Road Map*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
- 다만, 권역별·회사별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 준수가 어려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2. IT업무 감독검사 강화 및 제도개선

① 금융회사 IT 보안사고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현 황) 현행 전자금융거래법(\$39⑥)상으로도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임직원 문책, 임원해임 또는 직무정지 요구 등이 가능하나, 그간 감독자 감경조항* 등에 따라 경미하게 조치하는 경향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등

- 제재에 따른 경영진 등의 불이익이 크지 않아 IT보안업무에 대한 경각심 및 관심도 제고가 부족
- (개선방안) 위반행위자, 감독자(경영진 등), 금융회사 등 대상별 제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각자의 책임별로 엄중 제재조치 시행
- 아울러,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에 따른 공익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신설
- 이를 통해 중대한 전산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진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술적 보안조치의 실효성 확보

☞ 사고유형(예: 금전피해사고, 고객정보유출사고 전산장애사고), 피해규모(예: 금전피해액, 고객정보유출건수, 장애시간), 법규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대상·유형별 Matrix를 마련

② 금융회사 IT부문 실태평가 등 확대

- ☐ (현 황) 현행 IT부문 실태평가(약120개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일부 금융회사가 대상에서 제외*

• 최근 고객정보가 유출된 OO금융회사도 IT부문 실태평가대상에서 제외

- ☐ (개선방안) 할부·리스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관련 협회(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등을 IT부문 실태평가대상에 포함

- IT 부문 실태평가를 경영실태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감독·검사 시 중요 기초자료로 활용
- 해당 시설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확대도 검토

• 현재 금융위 소관 시설은 인터넷뱅킹 및 사이버트레이딩 중심으로 지정 관리 중

③ 침해행위 처벌 및 보고체계 강화

- ☐ (현 황)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의 안전성 조치의무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커 등 침해자 처벌 근거 부재

-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종사자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대상 사고의 범위*, 보고내용 및 절차에 관한 규정도 미흡

• 금융회사 홈페이지 해킹으로 인한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경우 현행 규정상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

- ☐ (개선방안) 사고예방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 침해 행위 금지의무와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사고보고 범위·절차 등에 관해 명확하게 규정

④ 전자금융사고 고객피해보상 확대

- (현 황) 현재 금융회사(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전송·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으나, 해킹사고시에는 책임 여부가 불분명
- (개선방안) 해킹 사고시에도 금융회사 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보상한도 상향 조정도 검토

3. IT 보안 기술 인프라 및 내부통제 개선

① 해킹 피해 최소화 위한 시스템 개선 유도

- (현 황) 일부 금융회사는 보안이 취약한 위험구간(DMZ)과 내부망(DB) 구간을 분리하지 않은 채 전산망을 구성·운영
- 한편, 외부공개용 웹서버에 고객비밀번호를 암호화 하지 않은 채 저장*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

* OO금융회사 사례 :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OO금융회사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해킹 당해 암호화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 등이 유출

<위험구간(DMZ) 개념 >

- 위험구간(DMZ : Demilitarized Zone) : 외부 공개용 웹서버를 설치하여 인터넷을 통해 들어온 고객 정보를 금융회사 내부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구간



- ☐ (개선방안) 안전한 내부망 구간에만 DB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고객비밀번호 암호화 등 고객정보 관리 강화

② 망분리 등 접속경로 통제 강화

- ☐ (현 황)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미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통제가 미흡

* 망 미분리 현황(%) : 은행 76, 증권 81, 카드 33, 기타 여전사 89 등

- ☐ (개선방안) 인터넷망과 업무망의 분리를 단계적으로 유도하고, 무선망 사용에 대한 보안조치 및 점검 등을 강화

③ 노트북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통제 강화

- ☐ (현 황) 노트북·USB 등에 대한 반출입 관리도 미흡하고, 시스템 감시 및 접속기록 관리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실

* OO금융회사 사례 : 최근 발생한 OO전산사고의 경우, 외주업체(IBM) 직원 노트북이 내부 전산망과 연결된 상태에서 무선인터넷에 접속함에 따라 공격에 노출

- ☐ (개선방안) 시스템운영실에서는 전용단말기 사용만을 허용하는 등 시스템 접속통제를 강화하고, 운영실 내 무선망 접속을 차단(blocking)

④ 시스템 계정관리 강화

- ☐ (현 황) 상당수 금융회사가 주기적 비밀번호 변경 등 시스템 계정 관리상 기본 보안수칙조차 준수되지 않는 상황

- ☐ (개선방안) 사용자식별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예: 1인1계정)을 부여하는 등 작업통제를 강화하고, PW 변경 등 보안수칙 준수 여부 자체점검 강화

- 직무에 따른 업무프로세스 기반의 계층적 내부통제 실시를 유도하고, 자체 추적감사(Audit Trail) 실시

⑤ 취약점 점검 강화 및 불시점검 실시

- (현 황) 일부 금융회사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취약점 개선조치도 미흡

* OO금융회사 사례 :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OO금융회사의 경우 금년 초 취약점 점검을 실시했으나, 형식적 점검과 취약점 미개선으로 해킹사고 발생

- (개선방안) 민간보안전문업체를 활용하여 매년(외부공개용 웹서버는 반기) 취약점을 자체 점검토록 하고, 이행계획 등을 금융위(원) 합동 점검반이 불시 점검

4. IT 아웃소싱 관리 개선

① 외주업체 및 외주인력 관리 강화

- (현 황)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IT업무 전반에 대해 외주를 실시함에도 전담통제인력이 부족하고, 반출입 관리 등 위탁업체 관리가 미흡

* OO금융회사 사례 : 대부분 금융회사가 제휴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DM(Direct Mail)발송서버가 공격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OO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도 위탁한 광고메일발송사이트 등이 해킹 공격을 당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해당

- 한편, 외주계약시 보안대책준수·재위탁금지·손해배상책임 등 계약서상 보안책임 관련 내용이 불명확하게 운영
- (개선방안) IT보안전담조직에서 아웃소싱업체 보안관리를 철저히 수행토록 하고, 상주인원 신원조회 등 인력관리 강화방안 수립 유도
 - 우선, 외부주문(outsourcing)업자를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포함시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의무를 계약서에 반영
 -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고의·과실은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책임으로 간주하는 조항(전금법§11)을 적용
 - 외주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보안사고 발생시 책임관계를 명확화

② 외부위탁 업무의 적정성 관리 강화

- ☐ (현 황) 위탁 가능한 비핵심업무와 직접 수행할 핵심업무의 범위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탁
- ☐ (개선방안) 외부위탁에 관한 의사결정시 CISO를 참여시키고, 위탁 업무의 적정성 등에 대한 업무분석과 자체 보안성 검토 실시 의무화
 - 외부위탁시 IT 개발·운영에 대한 내부감리를 실시하고, 중요 아웃소싱은 외부감리를 실시토록 유도

5. IT 사고대응 및 재해복구 체계 강화

① 사이버테러 대응 실시간 경보체계 강화

- ☐ (현 황) 은행·증권 등 현행 금융 ISAC* 대상 금융회사를 제외한 중소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사이버테러 대응능력이 취약
 - * 금융ISAC(Information Sharing & Analysis Center): 금융결제원(은행), 코스콤(증권) 중심으로 정보공유·분석 등 공동보안관제 실시(정보통신기반보호법§16)
- 대부분 해킹 및 금융사기(피싱) 관련 정보를 자체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차단·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
- ☐ (개선방안) 고도화되는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 ISAC 참가 대상을 비은행·비증권 중소기업으로 확대 추진
 - ☞ 금융 ISAC 참가 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여, 중소기업들의 사이버 대응 능력 향상
 - 한편, 해킹 유형 및 사고 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 등을 위해 「금융회사 IT보안 지식공유센터」 운영* 추진
 - ☞ 현재 금융ISAC으로 지정된, 금융결제원 및 코스콤 등의 자체 연구부서 기능 또는 금융보안연구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② 사이버테러 대응훈련 강화

□ (현 황) 일부 금융회사는 재해복구센터 전환 훈련을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재해복구센터 운영 수준도 미흡

- 다수 금융회사는 침해사고에 대한 실전 대응능력 향상에 필요한 모의해킹 등 침투훈련을 미 실시

□ (개선방안) 현행 금융분야 사이버테러 대응훈련을 실제 복구 중심의 실질적 재해복구훈련으로 강화

- 국제적 수준의 BCP*(업무연속성 계획)가 수립되도록 지속 유도

*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재해복구절차·시간 등 업무의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계획

Ⅲ. 기대 효과

□ 금융회사 최고경영자의 IT 보안에 대한 책임 강화와 관심도 제고를 통해 금융권 IT 보안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

- 아울러, IT 보안 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해 금융회사 IT보안 역량의 내실화도 기대

□ IT보안 인프라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 등 기술적인 보안강화 대책을 통해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가능성을 최소화

-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전산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신속한 위기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조기 차단

IV. 향후 추진 일정

- ☐ 전산사고 예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IT보안업무 처리절차는 「금융회사 IT보안업무 모범규준(Best Practice)」 마련·시행(8월중)
 - 금융회사 이행 능력 및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
- ☐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우선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개정에 착수하여 조속하게 시행
 - ☞ 아울러, 현행 시행세칙 사항 중 중요 기술사항은 감독규정으로 상향 조정하여 IT 보안준수사항의 법규성도 강화할 예정
- ☐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령 개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 향후 TF의 후속 실무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위 내에 설치된 「Help desk」에 금융회사 및 IT업계 등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예정(☎02-2156-9631 또는 9813)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최근 금융권 IT 보안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금융 IT 보안 전반에 대한 점검 및 보안강화 대책 마련을 위하여 TF 구성(4.19)



| 대책반 | 담당 임무 |
|--------------------|---|
| 현대캐피탈·농협 점검대응반 | ① 고객정보 해킹 피해상황 조사, 사고발생 원인 규명 ② 현대캐피탈·농협 IT부문 검사 ③ 현대캐피탈·농협 고객의 추가 피해 방지대책 강구 및 추진 |
| 금융IT 보안실태 점검대책반 | ① 전 금융권 IT 보안 및 고객정보 보호 실태 점검 ② 금융회사 IT 보안 강화를 위한 운영상 개선대책 마련 ③ 금융감독당국의 IT 보안 조직 강화 및 인력 전문성 제고 |
| 금융IT 보안 제도개선반 | ① 전자금융거래법 등 금융 IT 보안 관련 법규정 개정 ② 금융회사 보안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③ 전자금융거래 보안 관련 컨트롤타워 등 역할 정립 |
| TF 자문단 | ① 3개 대책반의 검사·점검·제도개선 계획수립에 대한 자문 ② 3개 대책반의 회의 및 실태점검에 참여 및 지원 |

강성종 의원(민주당)

6. 햇살론 '종합 신용평가 모형' 세부내용, DTI와
비교한 장단점

☐ 붙임 참조

□ 도입 필요성 :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산정의 합리성 제고

- 현행 방식은 외부 CB 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에 적합한 체계적인 상환능력 평가에 한계
- 여신심사 기준인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이 cut-off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출 불가

□ 도입 방안

- 햇살론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 구축

(1) 근로자 대출 : 「개인신용평가모형」 구축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근로자대출에 대한 보증 관련 개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하여 위탁보증기관(각 금융회사)에서 활용
- 최근 1년 이내 대출보유 총 건수, 최근 3/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경험,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11개 항목을 통해 등급 부여(금융회사는 등급별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출)

(2) 자영업자 대출 : 기존 「소상공인평가모형」 수정 도입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사용 중인 소상공인평가모형을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심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활용
- 자영업자의 업력,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 부여

□ 향후 계획

- '11.8월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으로 9월말부터 시행 예정

【 참 고 】

신용평가모형상 평가항목 구성

☐ 개인신용평가모형

| No | 항목구성 | 범주 | 배점 |
|-----|---|----|-----|
| 1 | 3년내 채무불이행 등록 총 건수 | 3 | 53 |
| 2 | 신용카드 보유 총 건수 | 3 | 27 |
| 3 | 보유 신용카드 중 최초 발급일로부터의 기간 | 4 | 42 |
| 4 | 최근 1년내 대출보유 총 건수(주택담보대출 제외) | 3 | 74 |
| 5 | 최근 3/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경험 | 3 | 85 |
| 6 | 업권별 대출보유 패턴 | 4 | 71 |
| 7 | 보유 대출 건 중 최초 개설일로부터의 기간 (최근 대출 개설기간과 비교) | 4 | 58 |
| 8 | 거주유형과 근속년수에 따른 고객특성 | 4 | 60 |
| 9 | 고용형태와 근속년수에 따른 고객특성 | 3 | 14 |
| 10 | 근속년수에 따른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 4 | 75 |
| 11 | 성별 및 연령 그룹 | 3 | 31 |
| 전 체 | | | 590 |

* 총부채 : 주택담보대출 제외

☐ 자영업자평가모형(안)

| No | 항목구성 | 범주 | 배점 |
|-----|------------------------------|----|-----|
| 1 | 개인신용등급 | 6 | 169 |
| 2 | 사업주의 연령 | 3 | 29 |
| 3 | 사업장 소유여부 | 2 | 22 |
| 4 | 거주주택 소유여부 | 2 | 22 |
| 5 | 최근 3/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경험 | 2 | 15 |
| 6 | 영업유지기간 | 2 | 36 |
| 7 | 사업자등록 여부와 종업원수에 따른 고객특성 | 3 | 43 |
| 8 | 사업자등록 여부와 영업유지기간에 따른 고객특성 | 4 | 44 |
| 전 체 | | | 380 |

※ 지역재단에서는 위 평가모형 외에도 현장실사 결과, 소상공인 보증부대출과 관련된 내부 정보 등을 보증심사시 활용

강성종 의원(민주당)

7. 공적자금 투입 기업 및 금융기관 관련
- 가. 공적자금 투입 기업 현황
 - 나. 정부 보유지분 현황
 - 다. 매각계획

☐ 해당 자료는 예금보험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음.

강성종 의원(민주당)

8. 과징금 회수현황

- 최근 5년간 현황/유형별 구분/국세청위탁 현황/
국세청 자료확보 요구현황

□ 최근 5년간 과징금 회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 부과근거(유형)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미수납액 | 불납결손액 |
|-----|------------|--------|--------|--------|-------|
| '06 | 자본시장법 위반 | 20,571 | 6,150 | 14,420 | - |
| | 보험업법 위반 | 446 | 446 | - | - |
|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 - | - | - | - |
| | 기타(은행법 등) | - | - | - | - |
| | 소 계 | 21,017 | 6,596 | 14,420 | - |
| '07 | 자본시장법 위반 | 23,097 | 9,234 | 13,689 | 173 |
| | 보험업법 위반 | 1,076 | 1,076 | - | - |
|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 - | - | - | - |
| | 기타(은행법 등) | 50 | 50 | - | - |
| | 소 계 | 24,223 | 10,360 | 13,689 | 173 |
| '08 | 자본시장법 위반 | 21,288 | 4,362 | 15,052 | 1,874 |
| | 보험업법 위반 | 6 | 6 | - | - |
|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 - | - | - | - |
| | 기타(은행법 등) | 2,992 | 2,992 | - | - |
| | 소 계 | 24,286 | 7,360 | 15,052 | 1,874 |
| '09 | 자본시장법 위반 | 25,746 | 4,122 | 20,985 | 639 |
| | 보험업법 위반 | 22 | 22 | - | - |
|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 384 | 384 | - | - |
| | 기타(은행법 등) | 594 | 594 | - | - |
| | 소 계 | 26,746 | 5,122 | 20,985 | 639 |
| '10 | 자본시장법 위반 | 28,985 | 4,347 | 24,638 | - |
| | 보험업법 위반 | 2,311 | 2,311 | - | - |
| |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 3,235 | 2,936 | 299 | - |
| | 기타(은행법 등) | 123 | 123 | - | - |
| | 소 계 | 34,654 | 9,717 | 24,937 | - |

□ 징수결정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주요 이유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미수납액이 이월되어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산입되고 있기 때문

□ 한편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체납자 재력부족, 납기미도래, 징수유예* 때문으로

* 기업이 회생, 파산 등의 절차에 있는 경우 징수유예 하여야 함(「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이중 미수납의 가장 주된 이유는 체납자의 재력부족(‘10년 결산기준 미수납액 249억 중 188억원으로 76%를 차지)인바,

- 이는 재무구조가 부실한 코스닥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았으나,

- 과징금 부과조치를 취하는 시점에 이미 폐업·상장폐지에 이르는 등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미수납처리 되고 있으며

- 또한 이처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과징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10년기준 189억원으로서 미수납액 249억원의 76%를 차지)되기 때문에 미수납액을 계속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10년도 부과액(137억원) 중 수납액은 77억원으로 56% 납부

□ 한편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과징금 미수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우선 미수납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개인과 회사에 독촉장을 발송하여 수납토록 안내하고

- 국토해양부의 협조를 얻어 부동산 및 자동차의 소유여부를 확인하여 재산발견시 압류절차를 밟고 있으며
 - 또한 무자력자가 과징금 등을 추후 납부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는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증권발행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10.8.25)한 바 있음**
 - 그 결과 공시위반 과징금 수납율이 종전 **30%에서 73% 수준까지 증가 되었음**('10년 9월이후 부과되고 '11년 7월말 현재 납기가 도래한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 아울러 과징금 징수업무를 전문성 및 체납자 재산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담당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하였으나 유보적 입장을 보여**
- 이에 임의규정(...할 수 있다)인 자본시장법(제434조 제2항)의 과징금 위탁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현재 개정법률안의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황)
 - 한편 우리 위원회는 **국토해양부에 체납자 재산정보(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여부)를 조회하고 있으며, 국세청에는 체납자 재산정보를 요청하고 있지 않음**
- * (참고) 금융거래정보의 경우 조세채권에 한해 조회가능

강성종 의원(민주당)

9. 서민금융(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대출)관련 가. 지원 현황 나. 신용등급별 지원 현황(건수, 금액)

☐ 지원 현황

- '10. 7.26 햇살론 출시 이후 '11.8월말까지 취급실적은
총 192,976건 17,388억원임

☐ 신용등급별 지원 현황

('11.8월말 기준 / 단위 : 억원, 건수)

| 신용등급 | 1-5* | 6 | 7 | 8 | 9 | 10 |
|------|--------|--------|--------|--------|-------|-------|
| 금 액 | 5,048 | 5,129 | 4,899 | 1,860 | 372 | 76 |
| 건 수 | 50,852 | 50,726 | 57,551 | 26,146 | 6,371 | 1,252 |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저소득자

강성종 의원(민주당)

9-1. 미소금융관련

- 지원현황
- 신용등급별 지원 현황(건수, 금액)

☐ 미소금융 지원현황

○ '08.7월 ~ '11.7.31일 까지 총 47,039건에 3,509억원 대출

※ 미소금융 지점 대출 총 17,753건에 2,257억원

기존 복지사업자 대출 29,286건에 1,252억원

☐ 미소금융지점의 신용등급별 지원현황

(‘11.7월기준/단위:건, 백만원)

| 구분 | 0등급 | | 7등급 | | 8등급 | | 9등급 | | 10등급 | | 차상위계층* | | 계 | |
|----|-----|-------|-------|--------|-------|--------|-------|--------|------|-------|--------|--------|--------|-----------|
|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건 | 금액 |
| 계 | 137 | 1,246 | 6,693 | 77,757 | 5,432 | 60,788 | 1,146 | 12,168 | 581 | 5,792 | 3,764 | 67,949 | 17,753 | 225,699.4 |

* 기업/은행 특성화상품은 차상위계층일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함

강성종 의원(민주당)

10. “(8. 23) 업무협조 [서울특별시주민투표의 주민투표권행사 보장 안내] ” 공문관련

가. 업무협조 공문 사본

-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거사례

| 공문제목 (투표일) | 금융위에 발신한 기관 | 우리 위원회 조치사항 |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관련 협조요청 (‘06.05.31) | 국무조정실 | 산하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전달 |
|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참여 홍보 협조요청 (‘07.12.19) | 국무조정실 | |
|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공휴일 지정안내 (‘08.4.9) | 행정안전부 | |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사무 협조요청 (‘10.06.02) | 행정안전부 | |
| 서울특별시 주민투표권행사 보장안내 (11.08.24) | 행정안전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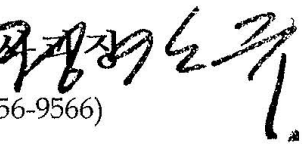
업 무 협 조

2011. 8. 23(화)

수신 : 수신참조

제목 : 서울특별시주민투표의 주민투표권행사 보장 안내

1. 서울특별시선관위 관리과 - 3842(2011.8.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1. 8. 24(수)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등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3. 우리 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장은 투표권이 있는 소속직원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행정인 
(담당자: 주무관 전양준 2156-9566)

수신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중소기업은행, 코스콤, 한국기업데이터주식회사,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종합금융협회, 화재보험협회, 금융감독원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주민투표의 주민투표권행사 보장 안내

1. 서울특별시선관위 관리과-3842(2011.8.18.)호와 관련입니다.

2. 2011. 8. 24(수)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9조(공가) 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3.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등에도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시선관위 공문 사본 1부. 끝.

행정안전부



수신자 대통령실장,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장, 법제처장, 국무총리실장, 특임장관, 국가보훈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 검찰총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문화재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중소기업청장, 특허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기상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대일합정기감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위원장, 선거의회과장

주무관 김덕호 서기관 장은영 복무담당관 공효식 윤리복무관 전결 08/19
한경호

협조자

시행 복무담당관-2170 (2011. 08. 19.) 접수 행정인사과-3869 (2011. 08. 19.)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1106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3316 전송 02-2100-4186 / kernel64@mopas.go.kr / 대국민공개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8월 24일은 서울특별시주민투표일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복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주민투표의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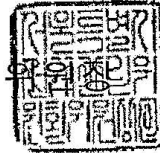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1. 8. 24(수) 실시하는 서울특별시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법』 제2조(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등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한 시간은 법률에 따라 보장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3. 투표권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산하기관(공기업 포함) 등에도 이러한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계법조문 1부, 끝.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결 08/18

★주무관 이 상봉 관리담당관 관리과장 김호문 사무처장 안 조수

협조자

시행 관리과-3842 (2011. 08. 18.) 접수 복무담당관-2156 (2011. 08. 18.)

우 110-7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20, 2층(인의동 28-2, 종로폴레이스) / <http://su.election.go.kr>

전화 (02)764-0313 전송 (02)741-0212 / LSN0803@korea.kr / 대국민공개

관 계 법 조 문

주 민 투 표 법

제2조 (주민투표권행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투표권자가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관 계 법 조 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고 승 덕 의원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1. 2010년 국정감사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 별도첨부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소관)

2011. 4.

대한민국정부

목 차

1. 금융위원회

1. 햇살론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대책 관련

- 1) 햇살론 ·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지원이 고신용, 고소득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2) 햇살론 · 미소금융이 재원유지 또는 운영적자 문제 등으로 인해 중장기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3) 햇살론의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15%에 대해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금융기관의 꺾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저축은행과 채권추심회사들이 채무자에게 친인척명의로 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
- 4) 햇살론 ·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지원이 고신용, 고소득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5) 미소금융의 지원실적을 제고하고, 전문성 보강 및 자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 6)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지원금의 2%를 사전 예납하고, 상환율 95%를 달성한 경우에만 돌려주는 사전예치제도가 일종의 꺾기에 해당되므로, 2% 예납을 폐지하고, 상환율 95%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 7)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미소금융지점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8) 햇살론 ·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대출간 지원 중복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민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재형저축을 부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9) 국내 P2P금융 관련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2. 신한지주사태 관련

- 1) 신한지주의 라웅찬, 이백순행장의 관련 의혹 및 관계법률(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할 것
- 2) 신한 라웅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신한은행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차명거래의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 신한지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신한금융지주의 후임 인선시 관치금융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 관련

- 1) 대부업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칙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2)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는 시정 노력과 함께 사채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회사 관련

- 1) 대출신청시 신용조회기록만으로 신용등급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2)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3) 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4)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이용동의서의 “영업목적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5. 신용카드사 관련

- 1)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인하범위를 확대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 카드회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제2의 카드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6.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관련

- 1) 보험회사 인수승인과정에서 최대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없는 것은 보험업법상의 미비사항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 2) 흥국생명의 골프장 매입 및 사옥 재매입 등의 내부거래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흥국생명의 흥국화재 인수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할 것
- 3) 보험업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 1)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

8. 자본시장 관련

- 1) 네오세미테크 등 우회상장 후 조기폐지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 검증 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
- 2)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리보드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3) 자문형 랩(Wrap Account)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 하한액 설정과 위탁매매 수수료 폐지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형 랩의 규제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발전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 4) ELW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5) IB 시장을 외국계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B를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6)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하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능의 제도 개선 및 시스템 개혁을 추진할 것

9. 우리금융지주 매각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부실실사로 인한 매각 후 추가부담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
10. 외환 시장 및 국제신용평가사 관련
 - 1)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환 건전성규제를 외은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국 단기자본의 유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 한국 경제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중일 연합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11. 녹색금융, 벤처·중소기업 등 지원 관련
 - 1)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인 신생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녹색금융의 정체성 및 지원구도를 명확히 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원실적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2.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부산을 해양 및 파생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13.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일률적인 할증기준(200만원)의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4. 금융위 및 금융공공기관 운영관련
 - 1) 금융공공기관의 직원채용시 학력 차별, 예산집행지침 위반, 연봉 및 성과급 과다 지급문제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2) 공무원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15.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관련 각종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16.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17. 저축은행 관련
 - 1)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장한도(5,000만원)의 점진적 인하 등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
 - 2) 저축은행 PF를 매입하면서 MOU상에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금리 8%이상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경영개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
 - 3)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보안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과정에서 워크아웃 진행과정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
 - 2)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분쟁에 따른 법원 판결의 취지와 기업 자율성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 제도의 유지, 개선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20.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관련

- 1)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대출상환능력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만큼,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보금자리론 비중을 높이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2) 대출실적이 부진한 주택보금자리론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21. 최근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 지분인수과정에서의 대규모 손실(4,000억원)과 우리금융지주의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 코퍼레이션(HAFC)의 지분인수에 따른 부실 우려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은행들의 건전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
22. 담보대출중심의 후진적 금융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금융감독원

1. 신한지주사태 관련

- 1)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 및 이백순 행장의 비리 의혹 및 관련법률(금융실명법, 특정경제기중처벌법, 조세법 처벌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2) 신한 라웅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신한은행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차명계좌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2. KB 와인프린스 대출납품 비리 의혹 관련

- 1) KB의 와인프린스대출 및 와인구매와 관련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3. 은행관련

- 1) 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중소기업대출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주택청약예금·부금의 미인출이자에 대해 국민홍보 등을 통해 이자 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3)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신용대출금리보다 높고, 복리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안내 방안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4) KIKO 관련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은행과 피해기업간 공정한 손실분담을 위해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일 것
- 5)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 및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 6)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면서 과거 파생상품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우리은행이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레이션(HAFC)을 인수함에 따른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회사편입의 승인심사를 철저히 할 것

4. 카드 관련

- 1) 카드사의 경품 제공 등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신전문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의 단속활동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
- 2) 해외 겸용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로열티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강화할 것
- 3)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4) 기프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잔액으로 카드사들이 낙전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환불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5. 대부업 등 서민금융관련

- 1) 대기업 캐피탈사 고금리 문제의 해소와 자동차 할부금융의 취급수수료 폐지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2)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광역자치단체가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

- 3) 대부 중개업체에 의한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할 것
- 4) 서민금융지원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금감원은 금융위에 현장상황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인 서민금융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할 것

6. 보험 관련

- 1)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제기된 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할증기준 인상 문제 등에 대해 금감원이 점검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앞서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2) 서울보증의 독점적 시장지배로 인해 보험료율이 과다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증보험료 적정성을 검토할 것
- 3) 보험약관 대출 가산금리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가입 관련 리콜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리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
- 5) 홈쇼핑에서의 보험 허위,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7. 소비자보호 관련

- 1)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센터의 민원 및 분쟁조정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수용률이 50%에 미달하고, 금감원의 소송지원실적도 저조한 실정인 바,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직원의 73%를 파견직원이 차지하고 있는 바, 파견 직원의 기피제도 위배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3) 흥국화재 등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남발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한 회사에 대한 분쟁조정 전치주의 제도 도입 검토 등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8. 저축은행 관련

- 1) 저축은행 PF 부실 문제에 대한 대주주의 자구노력 이행실적 점검 및 PF대출 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2)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9. 예금보험공사와의 자료 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10.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신고 위반 문제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
11. 증권 관련
- 1)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2)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약관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
12.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
- 1)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 특히 무선중계기(AP)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2)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3) 금융기관 등의 보안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노력을 기울일 것
13. 은행권 및 증권사 PF대출의 부실문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IFRS도입에 따른 PF 부실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4. 상당수 마일리지(금감원 검사 및 감독 대상)가 소멸 시효가 경과하여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5. 성진지오텍 거래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

16.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용회복기금 검사를 실시할 것

3. 예금보험공사

1. 저축은행 부실 방지 관련

- 1) 저축은행 부실률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금융감독원과의 자료 공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저축은행 부실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2.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부실화 관련

- 1) 저축은행 추가 부실화에 대비하여 기금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 2) 저축은행계정 적자 해소 및 저축은행 부실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차등화 등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3.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의 MOU 관리 관련

- 1)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와 동일한 MOU 관리 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MOU 관리지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4. 공적자금 회수 관련

-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해 부실채권 회수율이 미흡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5. 조직 관리 및 인력 채용 관련

- 1) 공적자금 회수 관련 업무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임무가 완료된 임시조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한국경제교육협회 관련 자료 제출

- 1) 한국경제교육협에 대한 지원경위, 지원절차, 예산편성 과정, 사후 관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4. 한국자산관리공사

1.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운용 관련

- 1)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미분양아파트 및 선박매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2) 선박펀드를 통해 주로 대형선사 선박을 매입하였는바, 중소선사 선박을 포함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부실채권 인수·정리 관련

- 1) 저축은행 PF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2) 저축은행 PF채권은 브릿지론 비율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전에는 회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바,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신용회복기금 사업 관련하여 채무재조정과 전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바, 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국유재산 관리 관련

- 1) 무단점유 비율 및 변상금 연체율 증가사유 및 개선대책
- 2) 대부율이 낮은 원인과 대부계약이 대부분 수익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개선 대책
- 3)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에서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물납자가 저가로 매수하여 이를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 국유재산관리나 서민금융업무 등 자산관리공사 고유업무가 아닌 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6. 기타 공사운영 관련
 - 1) 장애인 및 여성인력에 대한 채용, 승진 등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 2) 신입직원 채용시 대학등급화 등 학력 차별사항을 개선할 것
 - 3) 명예퇴직금과 연차휴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한국주택금융공사

1. 보금자리론 관련
 - 1) 보금자리론의 혜택이 수도권, 중대형 주택,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 보금자리론의 대출실적이 미진한 원인은 위탁판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대출모집인제도 도입 등 보금자리론 대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3)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인하 추세에 맞추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 1)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P-CBO 보증을 활성화할 것
 - 3) 신용회복지원자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4)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를 감액(2억 → 1억 5,000만원)한 것은 최근 전세 수요의 증가로 인한 전세값 상승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

3.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관련

- 1)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의 주요변수인 주택가격상승률에 관하여 공사의 예측(3.5%)과 실제 상승률(7.3%)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재산정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 2) 주택연금의 가입 실적이 부진하므로, 대대적인 홍보 등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 주택연금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바, 2주택 이상자라도 9억원 이하라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주택연금 지방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한국정책금융공사

1. 공사 설립 및 운영 관련

- 1) 산은 및 산·기보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체성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2) 공사의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공사 업무 관련

- 1) 온렌딩 방식으로 대출 하는 경우 공사의 신용위험분담을 확대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
- 2) 공사와 산·기보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 3)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 수출효과산업 등에 대한 업무영역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것
- 4) 중견기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책을 검토할 것

7. 신용보증기금

1.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프로그램의 실적 제고를 위해 신보는 대기업에 협력업체 추천을 독촉하는 등 협약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2.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보증규모 축소과정에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이 일시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5.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약 협약을 개선할 것
6. 단기 보증부실 증가에 대해 보증심사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7. 특수채권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정형화된 소송업무에 비해 과도한 소송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10. 경영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비해 신보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경영컨설팅 사업을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보증연계투자사업은 누적 부실률이 높고 투자 중복문제가 있어 정책 자금지원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업지속 여부를 재검토 할 것

8. 기술신용보증기금

1.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지원 실적이 미진한 바, 2차 협력업체 등에게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확대 조치 과정에서 증가한 장기·고액·한계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것
5. 구상채권 회수율 및 특수채권 회수율이 낮으므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외부 신용정보기관에 특수채권을 위탁함에 따른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
7. 초단기 보증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증심사 제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바, 보증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
8.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화 협약을 개선할 것
9. 신규 창업기업을 위한 R&D평가 특례보증의 연대보증책임 경감 및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지원 체계를 보완할 것
10.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11. 기술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보증을 지원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증되어 홍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할 것
12.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등 경영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인력의 활용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3. 기보 임직원이 보증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

9. 한국산업은행

1. 대우조선해양 관련
 - 1)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계열사 혈값매각, 비자금 조성의혹 및 특정 협력사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2)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여 독립회사로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2. 네오세미테크 관련, KDB글로벌스타 선정이 개인 등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분식회계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토록 할 것
3.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신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중소기업지원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은 줄어들고 대기업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으나, 워크아웃 업체의 하청업체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9월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

10. 중소기업은행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에 반하여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은 축소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2.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의 비중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할 것
4. 민영화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전문이라는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5.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별도의 계정 관리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 '잡월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취업 후 사후 관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7. 창업기업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8. PF대출 관련 심사시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능력을 강화하고, 대출 이후 사후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
9. 기업은행 해외지점의 연체율이 높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11. 한국거래소

1. 대리운전비, 사설학원비, 연수 중 연차보상비 지급 등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
2. 과다연봉 개선

3. 채용·승진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사차별 금지
4.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기부 활성화 필요
5.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및 선물연구소 등 부산설립
 - 1)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 2) 선물연구소 등 부산설립
6. 임직원 가족 및 서울 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 필요
7. 우회상장심사시 추정재무제표반영, 지정감사인제도 도입, 직원역량강화 등 우회상장제도 정비방안 마련
8. MSCI지수편입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9. ELW시장에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10. 알고리즘거래에 따른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
11. IFRS도입과 관련하여 新회계기준 때문에 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12. 불법사설 거래소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코스콤/금감원과 협의 하여 개선방안 마련
13.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상장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4.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랩어카운트 관리자 등의 극초단타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마련
15. 충청지역 상장기업/투자자를 위한 대전사무소 설치 검토
16. (코스콤) 보드보안 제품의 구매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키보드 보안제품을 교체할 것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대책 관련 | |
| 1-1)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지원이 고신용, 고소득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에게 대출 지원 중 * '11.2월말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74.5%, 연소득 2,000만원이하 73.5% <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만 대출 지원 중 * '11.2월말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5.4%, 저소득자(차상위계층) 14.6% <input type="checkbox"/> '11.2월말 기준 새희망홀씨의 총 대출 실적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2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비중이 80% 이상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햇살론의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예정 <input type="checkbox"/> 새희망홀씨의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비중 등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지속 반영 |
| 1-2) 햇살론·미소금융이 재원유지 또는 운영적자 문제 등으로 인해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햇살론 출시 초기 과도한 대출증가세를 억제하고 대출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등 대출심사 강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기준 운영(근로자 50% 미만, 자영업자 60%미만), 현장실사 강화 등</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지점의 공공기관 사무실 무상 사용* 법적근거 마련 추진</p> <p>*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p> <p><input type="checkbox"/>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점설치시 거점 점포를 활용한 1인출장소 확대 노력</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회수율 제고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p> <p>* (예) 사후컨설팅 강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방안</p> |
| <p>1-3) 햇살론의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15%에 대해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금융기관의 꺾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저축은행과 채권추심회사들이 채무자에게 친인척 명의로 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햇살론 구속성예금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 업권 내규에 '햇살론 구속성예금 금지규정'을 반영하도록 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각 업권 중앙회와 금감원에서 단위조합을 검사할 때 구속성예금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p> |
| <p>1-4) 햇살론의 정부 재원 부담 및 보증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1.3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햇살론 지원 비중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높음</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경제활동인구 비중- 수도권:지방=51:49 햇살론 지원액 비중- 수도권:지방=46:54</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정부와 지자체간 햇살론 출연금 부담 기준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p> |
| <p>1-5) 미소금융의 지원실적을 제고하고, 전문성 보강 및 자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08년~'11년 2월말까지 총 61,422명에게 2,236억원 지원</p> <p>* 미소금융지점 1,055억원, 기존복지사업자 1,066억원, 소액보험 115억원</p> <p><input type="checkbox"/> 이동버스를 활용한 전통시장 순회상담 등 「찾아가는 미소금융」을 적극 전개</p> <p>* '10년 40개 전통시장</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미소금융', 지역·직능별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p> <p><input type="checkbox"/> 지역단체와의 연계강화 등을 통한 컨설팅 강화</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 전문인력 프로그램인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p> |
| <p>1-6)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지원금의 2%를 사전 예납하고, 상환율 95%를 달성한 경우에만 돌려주는 사전예치제도가 일종의 꺾기에 해당되므로, 2% 예납을</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011년 복지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시 사전예납제도와 상환율 설정을 폐지키로 결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폐지하고, 상환율 95%를 인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 |
| 1-7)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미소금융지점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복지사업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복지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11.1월)</p> <p><input type="checkbox"/> 복지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급은 미소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가칭)「미소금융 협의회」구성 등 기존 복지사업자와의 상생적 파트너십 구축 추진</p> |
| 1-8)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대출간 지원 중복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민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재형저축을 부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10.8월)</p> <p><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 지원기관과 지역신용보증재단(햇살론)간 대출정보 공유 중('10.9월~)</p> <p><input type="checkbox"/> 재형저축은 세제지원 등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p> <p>* 동 제도는 저축장려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과다 등으로 '95년 폐지되었던 바 있음</p> <p>○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지원정보를 집중하는 서민금융 통합 DB 구축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재형저축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p> |
| 1-9) 국내 P2P금융 관련 제도적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P2P업체는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하여 운영중</p> |
| 2. 신한지주사태 관련 | |
| 2-1) 신한지주의 라웅찬, 이백순행장의 관련 의혹 및 관계법률(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특정경제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한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부분검사를 실시('10.8~'10.11)하고, 적발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완료(신한은행 기관 경고, 라웅찬회장 업무전부정지 3월상당)</p> <p>○ 또한 금감원은 신한지주·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10.11~'10.12)하여,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위반여부를 검사</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p> |
| 2-2) 신한 라웅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 <처리결과>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신한은행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차명거래의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10.8~'10.11)</p> <p>○ 법위반 사실에 따라 라전회장에 대해 업무전부정지 3월상당, 신한은행은 기관 경고 및 과태료부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정작1월~주의 등) 및 과태료부과 등 조치</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금융기관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제도 강화(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0.12.24)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차명계좌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p> |
| <p>2-3) 신한지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신한금융지주의 후임 인선시 관치금융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가칭)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법률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p> |
| <p>3.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 관련</p> | |
| <p>3-1) 대부업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칙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형대부업체의 관리감독방안 검토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 대부업 감독시스템 개편시 임직원 등이 준수할 사항 마련 검토</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3-2)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는 시정 노력과 함께 사채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검토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년 상반기내 5%p 추가인하 추진 (44%→39%)</p> |
| 4.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회사 관련 | |
| 4-1) 대출신청시 신용조회기록만으로 신용등급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용조회기록 활용 개선방안 검토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예정</p> |
| 4-2)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평가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점검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예정</p> |
| 4-3) 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의가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종합감사(10.11월)에서 신용정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연합회의</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4-4)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이용동의서의 “영업목적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피해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p>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예정</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단체에 지도공문 발송*('10.11월)</p> <p>* 고객이 개인신용정보를 제휴회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지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강구 예정</p> |
| 5. 신용카드사 관련 | |
| 5-1)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인하범위를 확대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계획 마련·발표('11.1.31)</p> <p><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시행('11.3.31)</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확대된 중소가맹점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11.5)</p> |
| 5-2) 카드회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제2의 카드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시장 건전경쟁 유도 및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발표('11.2.9, '11.3.30)</p> <p>○ 카드자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 및 복수카드 정보공유 확대, 회원모집실태 점검 및 제재 강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카드자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11.6)</p> <p><input type="checkbox"/> 복수카드 정보공유 확대 시행('11.5)</p> <p><input type="checkbox"/> 회원모집실태 점검 및 제재 강화(상시)</p> |
| 6.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관련 | |
| 6-1) 보험회사 인수승인과정에서 최대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없는 것은 보험업법상의 미비 사항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승인시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가칭)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시 반영 또는 동 법률제정안에 미반영시 보험업법 개정 추진</p> |
| 6-2) 흥국생명의 골프장 매입 및 사옥 재매입 등의 내부거래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흥국생명의 흥국화재 인수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0.12월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p> <p>○ 동립관광개발(이호진이 51%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골프회원권 분양과정에서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위반 등) 위반 소지가 의심되어 검사중에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흥국생명이 흥국화재 주식 취득시 금융위가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여 시정조치*</p> <p>* 흥국생명이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인 태광산업 주식을 전량 매각('10.12.27)</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6-3) 보험업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위반 등) 위반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여 제재조치</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현재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에 따라 제재를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에 따라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게 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제재 조치</p> |
| 7.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 |
| 7-1)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조합형태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p> <p>* 금융지주회사법('10.12.2 시행), 은행법('10.11.18 시행), 보험업법('11.1.24 시행)</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사외이사 등 임원자격요건 준수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점검할 예정</p> |
| 8. 자본시장 관련 | |
| 8-1) 네오세미테크 등 우회상장 후 조기폐지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우회상장 후 조기폐지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검증 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p> | <p>○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10.12.1)하여 우회상장 심사시 질적심사를 도입하고</p> <p>○ 비상장장법인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변경('10.12.6)</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우회상장 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 (금년내 외감법 시행령 개정)</p> |
| <p>8-2)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리보드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프리보드 활성화 관련 공청회('10.8.29) 및 간담회('10.10.29, '11.3.18) 개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지정자문사 제도 등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11년하반기)하여 시행할 예정</p> |
| <p>8-3) 자문형 랩(Wrap Account)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 하한액 설정과 위탁매매수수료 폐지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형 랩의 규제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발전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최소가입금액은 법규 보다 업계자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투자 하한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위탁매매수수료 소급부과를 기존계약에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 발생으로 인해 위탁매매수수료 제한 문제는 신규계약(계약 갱신시 갱신시점부터 적용)부터 적용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중장기적으로는 자문형 랩이 시장발전에</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기여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 |
| 8-4) ELW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ELW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 및 보도자료 배포('10.10.29)</p> <p>* 교육이수 의무화, 별도 거래신청서 작성, LP평가 강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p> <p><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 개정 및 시행('10.11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시장상황 모니터링 및 문제점 지속 제기시 추가 방안 마련</p> |
| 8-5) IB 시장을 외국계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B를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자본시장법 개정의 중점과제에 반영</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p> |
| 8-6)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하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능의 제도 개선 및 시스템개혁을 추진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광고·약관심사 전담부서(자율규제심사부) 신설('10.11월)</p> <p>* 광고심사 인력 확충, 사전심사 단계 추가</p> <p><input type="checkbox"/> 약관심사기준 강화('11.1월)</p> <p>* 약관실무 해설서 발간 및 배포</p> <p><input type="checkbox"/> 약관광고심사 자문협의회 설치('11.3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광고·약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p> |
| <p>9. 우리금융지주 매각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부실실사로 인한 매각 후 추가부담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학계·경제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p> <p>○ '10.7월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매각 절차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p> <p><향후 추진계획></p> <p>□ '10.12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유효경쟁 여건이 최종입찰시까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매각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매각여건을 재점검하고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중임</p> <p>○ 향후 매각절차가 재개될 경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면밀한 실사 진행을 통해 매각 후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10. 외환 시장 및 국제신용평가사 관련</p> <p>10-1)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외환 건전성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국 단기자본의 유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p>□ 종전 국내은행에만 적용되었던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외은지점에도 적용('10.11월)</p> <p>□ 외국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화건전성부담금 도입(국내은행과 외은지점에 동일 적용) 추진중(기획재정부 주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11.4.5.)</p> <p><향후 추진계획></p> <p>□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법률시행을 위한 관련 시행령 등 개정(기획재정부 주관)</p> |
| <p>10-2) 한국 경제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중일 연합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p>□ 아시아 경제의 특성을 감안한 신용평가논의를 위해 아시아 주요 평가사들이 자율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p> <p>* 한중일 신용평가 포럼(중국 다공, 일본 R&I, 한국 한신정평가)</p>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 동 논의가 구체화되는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갈 예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1. 녹색금융, 벤처·중소기업 등 지원 관련 | |
| 11-1)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인 신생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창업기업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p> <p>* 기은 : 창업후 5년내 기업에 대한 금리감면 (0.5%p), 운전자금 사정 생략</p> <p>* 신·기보 : 창업후 5년내 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0.1%p), 보증비율 우대 (85% →90%), 보증심사시 매출액 심사 생략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p> <p>* '11년 창업기업 지원 목표 기은 : 3.4조원 대출 신보 : 8.0조원 보증 기보 : 5.8조원 보증</p> |
| 11-2) 녹색금융의 정체성 및 지원구도를 명확히 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지원실적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녹색금융 정체성 명확화 등을 위해 녹색인증제도 旣 시행('10.4월)</p> <p>○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증범위 확대방안 등을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은 녹색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 ('10년중 9.0조원*)</p> <p>* '10년 지원실적</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정책금융공사 : 0.7조원 산은 : 0.6조원 기은 : 2.3조원 신보 : 3.6조원 기보 : 1.8조원</p> <p><input type="checkbox"/> 녹색 분야 자금지원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부여</p> <p>-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금리 우대 조치 * (산은) 중소기업 0.5%p인하, 대기업 0.3%p인하</p> <p>-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한도 확대(업체별 한도 : 100억원 → 300억원)</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인증범위 확대 등 녹색인증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p> <p><input type="checkbox"/> 녹색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여신제도 개선* 및 상품개발 등 추진</p> <p>* '11년 중 녹색기업 전용 온렌딩 한도 별도 배정 (2000억원 규모)</p> |
| <p>12.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부산을 해양 및 파생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제도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경영환경 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p> <p>* IMD 금융경쟁력 지수 상승(대한민국, '08년 40위 →'10년 30위), GFCI 국제금융센터 순위 상승(서울, '09.9월 35위→'11.3월 16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input type="checkbox"/> 또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 파생상품 라우터 설치 결정 ○ 탄소배출권 거래를 거래소가 관할 할 수 있도록 지원 ○ 파생상품 R&D센터 부산 설립 지원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년 8월중 금융위가 수립하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선박금융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부산의 선박금융중심지 조성을 지원할 예정</p> <p style="text-align: right;">* 세제지원방안이 포함된 조특법개정안 처리 지원(이진복 의원 발의) 등</p> |
| <p>13.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 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일률적인 할증기준(200만원)의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운영하여 근본적인 자동차 보험 개선대책을 마련·발표('10.12.29)</p> <p style="text-align: right;">* 금융위, 복지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개선대책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 금융위 및 금융공공기관 운영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1) 금융공공기관의 직원채용시 학력 차별, 예산집행지침 위반, 연봉 및 성과급 과다 지급문제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p><처리결과></p> <div><input type="checkbox"/> 신·기보, 캠프 등 금융 공공기관의 학력차별(대학등급제) 폐지('10년 채용시부터)</div> <div><input type="checkbox"/> 산은의 경우 경조사비는 예산에 미편성('09년)<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성과보상금제도는 폐지('10년)되고 '11년부터 예산편성항목에서 제외</div> <p><향후 추진계획></p> <div><input type="checkbox"/> 향후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div>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2) 공무원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p><처리결과></p> <div><input type="checkbox"/> 퇴직후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의무자(금융위 4급이상, 금감원 2급이상)임</div> <div><input type="checkbox"/> '08~'10년 기간중 금융회사 재취업 현황<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 총 4명('08년 1명, '09년 3명)○ 금융감독원 총 60명</div>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08년</th><th>'09년</th><th>'10년</th><th>합계</th></tr><tr><td rowspan="6">업권분류</td><td>은행</td><td>4</td><td>1</td><td>1</td><td>6</td></tr><tr><td>저축은행</td><td>1</td><td>4</td><td>7</td><td>12</td></tr><tr><td>증권</td><td>3</td><td>11</td><td>4</td><td>18</td></tr><tr><td>보험</td><td>4</td><td>4</td><td>5</td><td>13</td></tr><tr><td>카드</td><td>-</td><td>1</td><td>1</td><td>2</td></tr><tr><td>기타</td><td>2</td><td>2</td><td>5</td><td>9</td></tr><tr><td colspan="2">계</td><td>14</td><td>23</td><td>23</td><td>60</td></tr></table> | 구 분 | | '08년 | '09년 | '10년 | 합계 | 업권분류 | 은행 | 4 | 1 | 1 | 6 | 저축은행 | 1 | 4 | 7 | 12 | 증권 | 3 | 11 | 4 | 18 | 보험 | 4 | 4 | 5 | 13 | 카드 | - | 1 | 1 | 2 | 기타 | 2 | 2 | 5 | 9 | 계 | | 14 | 23 | 23 | 60 |
| 구 분 | | '08년 | '09년 | '10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권분류 | 은행 | 4 | 1 | 1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축은행 | 1 | 4 | 7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 | 3 | 11 | 4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 | 4 | 4 | 5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드 | - | 1 | 1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2 | 2 | 5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14 | 23 | 23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재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금융위) <input type="checkbox"/> 경력세탁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연령 기준 보임 해지를 지양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인력관리(금감원) ○ 또한,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겠음 <p>* 검사원 제척제도, 사적접촉금지제도, 중점 감찰제도 등</p> |
| <p>15.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관련 각종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법상 민간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불가능함 ○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과의 MOU 체결(10.4.13)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경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관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MOU 사후관리를 수행 중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향후 이사의 해임청구권 등 상법에서 허용된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산은의 경영관리 역할을 강화하도록 관리할 예정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특히 남상태 사장의 위법사실이 사법 당국에서 확인되는 경우, 산은은 남상태 사장에 대해 경영관리 책임은 물론, 배임 등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것임</p> |
| <p>16.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 정보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문서에 주의 문구 삽입</p> <p>※ 혐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 금지, 재판상 증거사용금지 (위반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제13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p> <p><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한 정보 검색이나 제공이 이루어 지지 않도록 보안교육 실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을 통해 분석관 및 법집행기관 담당자의 보안의식 수준 제고</p> |
| <p>17. 저축은행 관련</p> <p>17-1)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장한도(5,000만원)의 점진적 인하 등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단계적 구조조정 방안*을 지속 추진</p> <p>* 대주주 자구노력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유도 → 자체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신속·투명한 구조조정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경영부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회(정무위) 협의 등을 통해 저축은행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既 발표('11.3.17)</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부실 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 강화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감독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법령 개정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예금보장한도 인하는 민감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p> |
| <p>17-2) 저축은행 PF를 매입하면서 MOU상에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금리 8%이상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경영 개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은 대주주 책임원칙 등에 따라 저축은행과 MOU 체결시 대주주 증자,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본확충, 경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등 자구 노력을 유도</p> <p>○ 아울러 원칙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8%)이상인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지도</p> |
| <p>17-3)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과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확대</p> <p>* '09년 12개 → '10년 20개 → '11년 24개(합의)</p> <p><input type="checkbox"/> 예보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 하는 예보법 개정안 국회제출('10.11월)</p> <p>*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에 있어 예보의 역할 및 책임 강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중 공동검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예보법 개정을 국회와 적극협의</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18.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 거래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보안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구축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마련·시행(‘10.1월) * 안전대책은 전자금융거래 부문, 기술적 침해대응 부문, 취약점 모니터링 부문으로 구분하여 마련 <input type="checkbox"/> 금융보안연구원을 법상기관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보안관련 공공기관의 필요성, 금융보안연구원의 대상적합성, 보안관련 기존 기관(금융ISAC, KISA)과의 업무조정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검사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이행 여부 점검 실시 <input type="checkbox"/>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금융보안관련 법정기구 별도 설립여부를 검토하겠음 |
| <p>1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등 기업 구조조정 관련</p> | |
| <p>19-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과정에서 워크아웃 진행과정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측 의견 수렴을 위해 채권은행 자율협약 개정(‘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위험평가지 기업측 의견 반영* 의무화 * 기업의 소명, 자구계획 등을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 ○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측 애로를 청취·해소하기 위한 기구* 설치 * 구조조정기업 고충처리위원회(5인)를 ‘11.1월 설치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기업측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주채권은행이 기업측과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 착수 ○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기업측에 주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 부여 |
| <p>19-2)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분쟁에 따른 법원 판결의 취지와 기업 자율성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 제도의 유지, 개선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채권은행 자율협약(재무구조평가준칙) 개정('1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단의 공동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위법 ○ 약정체결 거부계열에 대한 공동조치 규정 삭제 |
| <p>20.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관련</p> <p>20-1)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대출상환 능력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만큼,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보금자리론 비중을 높이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은행별 이행계획 징구 및 실적 점검 □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유도를 위해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DTI 가산비율(+5%p) 인정 □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소득기준 완화*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11.1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20백만원 이하→25백만원 이하</p> <p>* 대출한도 1억원→1.5억원</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 방안을 포함한 가계대출 종합대책 마련 중</p> |
| 20-2) 대출실적이 부진한 주택보증 자리론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증자리론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대출신청·상담이 가능한 u-보증자리론 취급 금융회사 확대 추진 중('11.6월 예정, 2개→11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대출모집인제도 도입은 보험 설계사 수당 지급사례를 볼 때 모집인 수당 지출 등을 통한 비용상승 과다문제, 모집인을 통한 판매 확대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p> |
| 21. 최근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 크레디트은행 지분인수과정에서의 대규모 손실(4,000억원)과 우리금융지주의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레이션(HAFC)의 지분인수에 따른 부실 우려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은행들의 건전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은행 해외점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관련규정을 개정('10하반기) 하고, 금감원 차원에서는 은행내부통제 강화 유도 등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추진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에도 해외점포의 건전경영·리스크</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 실태 등을 중점 감독함으로써 은행의 해외진출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22. 담보대출중심의 후진적 금융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담보대출 중심의 대출행태를 개선하고,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추진</p> <p>○ 창업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 그램을 운영 중(신보)</p> <table> <tr> <th>구 분</th> <th>Start-up I 보증</th> <th>Start-up II 보증</th> <th>Start-up III 보증</th> </tr> <tr> <td>지원대상</td> <td>업력 6개월 이내</td> <td>업력 1년 이내</td> <td>업력 1년~3년</td> </tr> <tr> <td>보증한도</td> <td>3억원</td> <td>3억원</td> <td>5억원</td> </tr> <tr> <td>보증료</td> <td>12%(최대 0.6%p 차감)</td> <td>12%(최대 0.6%p 차감)</td> <td>12%(최대 0.4%p 차감)</td> </tr> <tr> <td>보증비율</td> <td>100%</td> <td>90%</td> <td>90%</td> </tr> </table> <p>○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상담·컨설팅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중(신보)</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창업지원 종합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p> | 구 분 | Start-up I 보증 | Start-up II 보증 | Start-up III 보증 | 지원대상 | 업력 6개월 이내 | 업력 1년 이내 | 업력 1년~3년 | 보증한도 | 3억원 | 3억원 | 5억원 | 보증료 | 12%(최대 0.6%p 차감) | 12%(최대 0.6%p 차감) | 12%(최대 0.4%p 차감) | 보증비율 | 100% | 90% | 90% |
| 구 분 | Start-up I 보증 | Start-up II 보증 | Start-up III 보증 |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 | 업력 6개월 이내 | 업력 1년 이내 | 업력 1년~3년 | | | | | | | | | | | | | | | | | | |
| 보증한도 | 3억원 | 3억원 | 5억원 | | | | | | | | | | | | | | | | | | |
| 보증료 | 12%(최대 0.6%p 차감) | 12%(최대 0.6%p 차감) | 12%(최대 0.4%p 차감) | | | | | | | | | | | | | | | | | | |
| 보증비율 | 100% | 90% | 90% | | | |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2. 금융감독원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신한지주사태 관련 | |
| 1-1)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및 이백순 행장의 비리 의혹 및 관련법률 (금융실명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조세법 처벌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p><처리결과></p> <p>□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종합검사('10.11.22. ~ 12.22), 신한은행 종합검사('10.11.22 ~ 12.24) 및 신한은행 부문검사('11.1.12 ~ 1.21)를 실시하여 라응찬 前회장 및 이백순 前행장의 비리 의혹 및 관련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실시</p> <p>◦ 현재 동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결과를 내부 심의 중</p> |
| 1-2) 신한 라응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신한은행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차명계좌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 <p><처리결과></p> <p>□ 금감원의 신한은행 '10년 종합검사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법·위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p> <p>◦ 다만, 라응찬 前회장이 박연차에 전달한 50억원과 관련된 차명계좌 운용 건* 이외에 별도로 다른 차명계좌를 신한은행에서 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p> <p>* '10.11.25. 라응찬 前회장(직무정지 3개월 상당) 등 26명에 대해 제재</p> <p>-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명의인 또는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가</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음</p> <p>□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하여 전 은행에 대해 비거주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음('10.12.16)</p>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에 대한 검사시 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 임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차명계좌의 발생을 근절해 나갈것임</p> <p>□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계획중인 금융실명법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 대한 감독방안을 검토할 계획임</p> |
| <p>2. KB 와인프린스 대출납품 비리 의혹 관련</p> | |
| <p>2-1) KB의 와인프린스대출 및 와인구매와 관련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p> | <p><처리결과></p> <p>□ '10.11.8 ~ 11.16 기간 중 국민은행에 대해 와인프린스 대출 및 와인구매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11.3.18 검사서 발송)</p> <p>※ 조치내용</p> <p>◦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한 부당 신용대출 취급과 관련, 前청운동지점장 ○○○ 등 총 14명에 대해 문책 조치(견책 5명, 주의 9명)</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구매시 계약규정 미준수와 관련, 前마케팅 그룹부행장 ○○○ 등 총 4명에 대해 문책 조치 (견책 1명, 주의 3명) |
| 3. 은행 관련 | |
| <p>3-1) 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중소기업 대출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젤Ⅱ BIS비율 산출기준에는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각종 우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비율 산출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여신은 개인여신과 동일한 소매익스포저로 분류 ◦ 이에 따라 표준방법의 경우 중소기업여신이 개인여신과 동일한 낮은 위험가중치(75%)를 적용받고 내부등급법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낮은 위험가중치 함수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은행이 BIS비율 하락을 우려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일방적으로 기피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 □ 다만, 은행의 BIS비율이 크게 하락하여 여신을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은행이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 특히, 금융위기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함으로써 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일이 없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고 필요시 자본을 확충토록 지도하겠음*</p> <p>*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별로 필요자기 자본규모를 직접 제시하여 확충토록 지도한 사례가 있음('08.12월)</p> |
| <p>3-2) 주택청약예금·부금의 미인출이자에 대해 국민홍보 등을 통해 이자 인출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예·부금 미인출이자에 관하여 기 발생이자에 대해 인출가능함을 은행들이 적극 안내하고, 고객요청시 연결계좌를 통해 인출할 수 있도록 지도('10.10.19)</p> <p><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예·부금 미인출이자를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언론홍보*</p> <p>*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 안내”('11.2.14 보도자료 배포)</p> |
| <p>3-3)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신용대출금리보다 높고, 복리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안내 방안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마이너스대출 취급시 금리·이자부담에 관하여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상세히 설명토록 은행앞 유의사항 통보('10.10.19)</p> <p>*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추가 가산금리로 인해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고, 마이너스 대출이자도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익월부터 이자를 부과</p> <p><input type="checkbox"/> 마이너스대출 금리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언론홍보</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3-4) KIKO 관련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은행과 피해기업간 공정한 손실 분담을 위해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일 것</p> | <p>*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 안내” (’11.2.14 보도자료 배포)</p> <p><처리결과></p> <p>□ ’10.6월말 현재 KIKO거래에서 발생한 기업의 손실금액은 32,247억원* (실현손실 31,569억원, 평가손실 678억원)</p> <p>* KIKO 거래 관련 수출대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을 감안하지 않고, 옵션의 평가금액(MTM) 기준으로 산출</p> <p>□ KIKO 손실 등으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금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10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0.12월말까지 총 631개사에 6.6조원 지원 ◦ FTP 도입 이후에도 일부 기업의 보증한도 소진, 부채비율 급등 등으로 금융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10.10월 기술력·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p>금감원 및 채권은행의 직접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 총 12개사에 124억원 지원</p> |
| <p>3-5)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p> | <p><처리결과></p> <p>□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된 일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임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금융회사 및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이나 회계감사를 받는 불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 및 시장노력을 기울일 것</p> | <p>향후 검사를 통해 귀책사유 및 고의·중과 실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설명회(1.25일) 등을 통해 사외이사 등 임원자격요건 준수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외이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 준수여부를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종합검사시 중점 점검할 예정 |
| <p>3-6)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면서 과거 파생상품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우리은행이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 코퍼레이션(HAFC)을 인수함에 따른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회사 편입의 승인심사를 철저히 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진행중임 |
| <p>4. 카드 관련</p> | |
| <p>4-1) 카드사의 경품 제공 등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신전문협회의 합동기동 점검반의 단속활동에</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모집 행위 근절을 위하여 카드 모집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제재를 엄중히 할 예정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대해 감독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 ○ 합동기동점검반 점검시 금감원 검사원을 투입*(월1회)하여 점검의 실효성 제고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력을 확충(20 → 30명) |
| <p>4-2) 해외 겸용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로열티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강화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해외겸용카드 발급으로 해외카드사에 불필요한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있음 - 카드상품 출시시 국내전용카드도 발급, 운영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 - 카드발급 신청서상 국내전용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발급신청란을 구분·표시 - 국내전용카드와 해외겸용카드의 차이점(연회비 차이 등)에 대한 소비자 고지 강화(국내전용 2천원, 해외겸용 5천원) - 국내전용카드의 장점*을 홍보(금감원 홈페이지)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p> <p>* 국내전용카드는 해외겸용카드 보다 연회비가 저렴하고 국내이용시 해외겸용카드와 차이가 없음</p> <p><향후 추진계획></p> <p>□ 앞으로도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p> <p>◦ 금감원 주관 금융교육시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p> |
| <p>4-3)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 기존에는 카드사가 상품출시 초기에는 부가서비스를 확대하여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이후에는 축소*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p> <p>*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면 변경 가능</p> <p>□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카드상품 출시후 1년간은 부가서비스 변경을 금지하고,</p> <p>◦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 대한 사전고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도록 여전법을 개정·적용('09.8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단,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p> <p><향후 추진계획></p> <p>□ 금감원은 현재 약관심사 및 카드사 검사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법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p> <p>◦ 향후에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
| <p>4-4) 기프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잔액으로 카드사들이 낙전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환불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기프트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p> <p>◦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미사용 잔액을 표기하도록 카드승인 프로그램 및 신용카드 단말기 개선</p> <p>◦ 서비스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기프트카드 사용시 미사용잔액 휴대폰(SMS) 통보</p> <p>◦ 인터넷(홈페이지), 콜센터(상담원)을 통한 선불카드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p> <p>*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 영업점 외에 전화(ARS), 홈페이지 등에서 잔액확인이 가능하며, 9개 카드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환불이 가능</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input type="checkbox"/> 한편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기프트카드 낙전수익 및 포인트 소멸금액 등을 재원으로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예정 |
| 5. 대부업 등 서민금융관련 | |
| 5-1) 대기업 캐피탈사 고금리 문제의 해소와 자동차 할부금융의 취급수수료 폐지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캐피탈사 고금리 문제]</p> <input type="checkbox"/> '10.11월 가계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유도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캐피탈사들이 최고금리를 30% 미만으로 인하 <p>[취급수수료 문제]</p> <input type="checkbox"/> 캐피탈사는 점포수 제약으로 자동차딜러를 통한 간접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별도의 모집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피탈사들은 동 모집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10.7.5일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캐피탈사간 취급수수료 등 취급조건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중고차할부의 경우 고객이 취급수수료 납부를 통해 금리 할인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급수수료를 수취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취급수수료 인하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p> <p>* '11.1.12일 중고차할부 비교공시시스템을 개선하여 회사별 평균금리 등을 추가 공시</p> |
| <p>5-2)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광역자치단체가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 대부업체 관리·감독체계 개편은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인 금융위에서는 대형업체의 영업 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관리감독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p>*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은 감독체계가 개편되면 대부업 이용자가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 <p>5-3) 대부 중개업체에 의한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할 것</p> | <p><처리결과></p> <p>□ 우리원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출모집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편취행위자에 대한 계약 해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운영을 통해 국정감사 이후 '10.11 ~ '11.2월 기간중 1,752건(19억원)의 피해신고를 접수하여 1,249건(12억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모든 피해신고 내용은 경찰에 통보하였음</p> <p>□ 또한 SMS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 대출모집 행위의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p> <p>* 불법 문자메시지 사전 차단 방안,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자 정보 교환 등</p> <p>◦ 불법 SMS 문자메시지 관련 유의사항을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통보('10.10) 하였으며</p> <p>◦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을 상호저축은행에 통보('11.3)하였음</p> <p><향후 추진계획></p> <p>□ 앞으로도 우리원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근절을 위해</p> <p>◦ 대부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련 대부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규정이 대부업법에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p> <p>* '10.12.10. 정옥임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5-4) 서민금융지원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금감원은 금융위에 현장상황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할 것</p> | <p><처리결과></p> <p>□ '10년중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서민금융지원점검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점검단에 참여하여 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에 건의 <p><향후 추진계획></p> <p>□ 앞으로도 금감원은 현정점검 과정에서 발굴되는 개선사항이 서민지원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p> |
| <p>6. 보험 관련</p> | |
| <p>6-1)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제기된 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할증기준 인상 문제 등에 대해 금감원이 점검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앞서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10.12.29)하여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사업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판매비 지출 규모 축소 지도('11.1월) 등 업계의 경영효율화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 비례형 자기부담금제 도입, 무사고자 할인폭 확대 및 교통법규위반 할증제도 개편('11.1월) 등 요율체계 개편을 통한 사고감소 유도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의심병원·정비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과다 진료비·차량수리비 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 정비업체, 부품상,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조사 실시 중(10.5월~) ◦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병·의원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실시(10.10월, 11.2~3월) <p>*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손보협회 등 ** 전국 1,072개 병·의원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11.1.24)하고 공조조사 체계 구축('11년 상반기 중 공동조사 실시 예정) <p><향후 추진계획></p> <p>□ 보험금 청구시 사전 견적서 제출, 렌트비용 정상화 등 수리비 및 대물비용 감소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p> |
| 6-2) 서울보증의 독점적 시장 지배로 인해 보험료율이 과다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금감원이 | <p><처리결과></p> <p>□ 금감원의 지도로 서울보증은 '10.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약 15%의 보험요율 인하를 실시하는 등 보험요율의 합리성을 제고</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증 보험료 적정성을 검토할 것 | <p><향후 추진계획></p> <p>□ '11년도에는 보증요율산출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11. 4/4분기)를 통해 공정보험료 산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p> |
| 6-3) 보험약관 대출 가산금리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험회사의 보험약관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토록 하였으며('11.1)</p> <p>◦ 이를 통해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및 금리수준에 대한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제고</p>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대출의 금리수준에 대한 비교공시가 잘 이루어 지도록 모니터링 하는 한편,</p> <p>◦ 각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와 부가되는 가산금리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p> |
| 6-4)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 가입 관련 리콜제의 | <p><처리결과></p> <p>□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전에 피보험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09.7.7)하고</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리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가입 확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협회의 계약정보관리체계*를 개선('09.9.1)·운영 * 입·통원/상해·질병 등 담보별 구분 관리, 계약정보의 정확도 확인시스템 구축 및 계약정보 부실관리시 자체 제재강화 등 □ 한편 보험사는 '09.12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해 계약자 의사를 재확인하여 계약해지 또는 취소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 ◦ 금융감독원은 '10.7월 보험사가 실시하고 있는 리콜현황에 대하여 실태 점검한 결과 확인된 일부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지도 * 중복가입 유지의사 확인이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계약자 의사를 재확인토록 지도 등 <향후 추진계획> □ 향후 금감원 검사 등에서 리콜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 |
| <p>6-5) 홈쇼핑에서의 보험 허위,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p> | <향후 추진계획> □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보험계약 체결 편의성 감소, 텔레마케터의 실업 우려, 중소 보험회사의 영업위축 가능성 및 정책의 일관성·신뢰도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 □ 홈쇼핑에서의 보험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검사 등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보험업법('11.1.24 시행)에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 7. 소비자보호 관련 | |
| <p>7-1)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센터의 민원 및 분쟁 조정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수용률이 50%에 미달하고, 금감원의 소송지원실적도 저조한 실정인 바,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피해구제율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09년부터 피해구제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요 원인은 원금 보전을 요구하는 호소성 분쟁 증가,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 주장이 크게 상이하는 등 회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분쟁 등이 급증한 것에 기인</p> <p>* 피해구제율 추이 : '08(50.2%)→ '09(44.7%)→ '10(45.4%) (한국소비자원 7%, 법원 10%이내 수준)</p> <p><input type="checkbox"/> (소송지원 관련) 소송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소송지원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직접 판결확정시까지 지원을 하는 관계로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에 기인</p> <p>* 소제기 감축 추이(건): '08(1,174)→ '09(1,656)→ '10(1,167)</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수용률 제고 및 소제기감축을 위해</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락의제 제도」 도입 추진 ◦ 현장조사, 소제기 실태점검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할 예정 |
| <p>7-2)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직원의 73%를 파견직원이 차지하고 있는 바, 파견직원의 기피제도 위배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상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 파견직원을 전원복귀시키고 금감원소속 전문상담원으로 전원 교체 완료('11.2월) |
| <p>7-3) 흥국화재 등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남발하여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한 회사에 대한 분쟁조정 전치주의 제도 도입 검토 등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 (흥국화재 소제기 관련) 그간 금감원에서는 법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소제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제기 공표 정례화, 민원발생평가 불이익 부과, 현장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소제기 남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왔음 <p>* 소제기 감축 추이(건): '08(1,174)→ '09(1,656)→ '10(1,167)</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 (조정전치주의 도입관련) 법원에 소제기 이전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에 공감</p> <p>◦ 동 사안 관련 조문환 의원의 입법발의('10.11.3),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동 사안이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음</p> |
| <p>8. 저축은행 관련</p> <p>8-1) 저축은행 PF 부실 문제에 대한 대주주의 자구노력 이행실적 점검 및 PF대출 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p> | <p><처리결과></p> <p>□ 부실 PF대출을 캠프에 매각한 저축은행(61개)과 대주주 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 경영합리화 등을 반영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10.7월)하고 그 이행실태를 매분기별 점검하고 있음</p> <p>◦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하여 MOU 목표에 미달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행촉구 공문 발송('10.11월) 및 대주주·경영진 면담('11.3월) 등을 통한 추가 유상증자 요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을 지도하고 있음</p> <p>□ 또한 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11.1월)을 통하여,</p> <p>◦ 저축은행 PF대출 관련 사업장의 사업진척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 8-2)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 <p><향후 추진계획></p> <p>□ 저축은행이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신용공여한도 등 각종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p> <p>◦ 점검결과 한도에 근접하거나 위반혐의 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서면·현장검사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및 고발조치할 예정임</p> |
| 9. 예금보험공사와의 자료 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p><처리결과></p> <p>□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 및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양 기관간 자료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 기관 이견시 ‘금융업무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업무협의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p> <p>* ‘11.3월 현재 정기보고서의 경우 요청대비 100% 공유하고 있으며, 수시정보도 요청 27건 모두 공유 완료 및 예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10.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신고 위반 문제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p> | <p>[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관련]</p> <p><처리결과></p> <p>□ (재취업 희망인력 발생 방지) 정년 전(만 54세) 부서장의 일괄보직해임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중심 인력관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 부서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p> <p>* 그동안 조직슬림화 및 이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부서장의 경우 정년(58세)보다 4년 일찍 보직을 일괄해임하여 교수요원, 지문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배치</p> <p>◦ 이로 인해 조기 일괄보직해임 부서장이 감소됨에 따라 재취업 희망인력이 대폭 축소되고 있음</p> <p>□ (재취업자와의 업무유착 차단)취업제한 보다는 사후적인 행위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내부통제장치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p> <p>* 미국(FRB) : 취업 제한은 없으나, 퇴직후 2년 이내에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행위 등 제한</p> <p>* 영국(FSA) : 취업제한은 없으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제한</p>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회사 감사공모제 투명성 제고)감사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감사 공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재취업 관련 향후 운영 방안(보도자료, '09.11.17)</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감사 취업 자율적 제한)금감원 퇴직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로의 취업을 자율적으로 제한*</p> <p>*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보도자료, '11.03.17)</p> <p><input type="checkbox"/> (재취업자와의 업무유착 차단)퇴직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장치를 엄격히 운영</p> <p>[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신고 위반 관련]</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010년 국정감사 직후 미신고 퇴직직원에 대해 조속한 신고를 촉구하여 21명의 신고를 모두 완료('10.11.16)하였음</p> <p>◦ 또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퇴직 임직원 재산신고 관리방안」을 마련('10.10.18)하여 퇴직 1개월이내 재산신고후 감사실로 “접수증” 송부를 의무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한편 감사실에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공문으로 신고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1. 증권 관련 | |
| 11-1)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현행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투자정보지 판매 등)가 아니면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에 송부('10.4월)</p> <p>* 유사투자자문업 중 일대일투자상담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 규제에서 제외</p> <p>◦ 다만,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에 필요한 유예기간(예 : 3년) 부여</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동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금년 중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p> |
| 11-2)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약관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권은 금융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p> <p>◦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여부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차례 표준약관 개정('10.10월, '11.1월, '11.3월) 심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시정 명령권 행사를 건의할 사항이 없었음 |
| 12.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 | |
| 12-1)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 특히 무선중계기(AP)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금융감독원은 KT, SKT, LGU+ 3개 통신사업자와 무선중계기 보안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10.10월 ~ '11.1월)하였으며, 협의결과 이용자의 통신내용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중계기에 도청방지 기능을 탑재하기로 실무자간 협의완료('11.1월)</p> <p>◦ 각 통신사는 우선적으로 신규로 보급되는 무선중계기에 동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 보급된 중계기에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 보안기능을 적용할 예정임</p> <p><향후 추진계획></p> <p>□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여 무선랜 보안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함</p> |
| 12-2)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p><처리결과></p> <p>□ 금융권 모바일 오피스 도입현황을 분석하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하여 '금융권 스마트워크 안전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금융회사 의견 수렴중임</p> <p><‘금융권 스마트워크 안전대책’(안) 주요내용></p> <p>- (단말기 보안) '악성코드 감염 대비', '단말기 정보 관리', '단말기 분실·도난·교체 대비' 등에 대한 보</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안대책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보안) '통신데이터 보호', '유선 네트워크 보호', '무선네트워크 보호' 등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 (서비스 보안) '사용자 및 기기인증', '소프트웨어 관리', '사용자행위 기록' 등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등 |
| <p>12-3) 금융기관 등의 보안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IT보안 인력 및 예산 비중을 종전 3%에서 5% 이상으로 상향하여 확충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였음('09.9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동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IT경영실태평가 내 IT경영 부문 평가항목에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충여부를 평가사항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 유도할 예정</p> <p><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관련 주요평가항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총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 적정수준 이상 확보 여부 - IT전체인력 대비 정보보호인력 적정수준 이상 확보 여부 등 |
| <p>13. 은행권 및 증권사 PF대출의 부실문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IFRS도입에 따른 PF 부실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p> | <p>[은행권 부동산PF 부실 관련]</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동산PF 대출 사업장을 수시 점검하였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성분류 기준을 강화하여 부동산 PF의 부실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부동산PF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정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는바, 향후 적극적으로 정리를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음</p> <p>* <은행권 부동산PF관련 주요 조치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권 부동산PF 대출 사업장 실태점검('08.11월, '09.3월, '09.12월, '10.6월) - 건설사 보증에 의한 부동산PF 대출 건전성분류 상향조정 제한('10.6월), 부동산PF의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 등 건전성분류 기준을 보수적으로 조정('10.9월) -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10.12월) 및 은행별 정리계획 수립('11.1월) - 부동산 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은행연합회, '11.1월) <p>[증권사 부동산PF 부실 관련]</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증권사 PF대출 부실감축을 위한 PF사업장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고, 경영진 면담('11.2월, '11.3분기 예정) 등을 통해 부실감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필요시, '11.3분기중 PF 대출채권 사업장에 대한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data-bbox="635 365 1278 409">[PF 부실채권 매각시 회계처리 관련]</p> <p data-bbox="635 477 839 521"><처리결과></p> <div data-bbox="635 555 1433 701"> <p data-bbox="635 555 1433 701">□ IFRS에서는 자산에 대한 통제권 뿐만 아니라 위험과 효익도 매수자에게 이전되어야만 매각 거래로 인정됨*</p> </div> <div data-bbox="699 712 1433 846"> <p data-bbox="699 712 1433 846">* 부실채권 유동화시 유동화회사(SPC)의 후순위채 인수, 신용공여 제공, 부실채권 매각시 사후정산 등을 통해 손실발생 위험을 부담할 경우 매각 부인</p> </div> <div data-bbox="635 925 1433 1149"> <p data-bbox="635 925 1433 1149">□ 그러나 '10.12월 IASB는 K-IFRS 전환일* 이전에 K-GAAP에서 매각처리되었던 PF 대출채권 양도거래를 K-IFRS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p> </div> <div data-bbox="675 1193 1433 1328"> <p data-bbox="675 1193 1433 1328">* IFRS 전환일 : (은행 등 12월 결산법인) '10.1.1, (증권·보험 등 3월 결산법인) '10.4.1, (저축은행 등 6월 결산법인) '10.7.1</p> </div> <div data-bbox="651 1373 1433 1485"> <p data-bbox="651 1373 1433 1485">◦ 이에 따라 환매가 되기 전까지는 매각처리된 부실채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p> </div> <div data-bbox="635 1563 1433 1843"> <p data-bbox="635 1563 1433 1843">□ 한편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K-IFRS 전환일 이후에는 KAMCO 등 양수자가 상당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업계 등은 既인식하고</p> </div> <div data-bbox="651 1888 1433 1989"> <p data-bbox="651 1888 1433 1989">◦ IFRS 도입준비 과정에서 부실채권 매각관련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왔음</p> </div>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향후 은행 및 증권사 등이 부동산 PF 부실채권</p> <p>□ 정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FRS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임</p> |
| <p>14. 상당수 마일리지(금감원 검사 및 감독 대상)가 소멸 시효가 경과하여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 최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마일리지·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액이 증가 추세</p> <p>◦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처 확대에 따른 카드 이용액 증가로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액 모두 증가 추세이나</p> <p>◦ 포인트의 효용성 증대 및 소비자의 인식 확대로 포인트 소멸금액은 감소</p> <p>□ 그동안 금감원은 발행금액이 가장 많은 신용카드사 포인트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도*하여 왔음</p> <p>* 참고 :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활용방법에 대한 고지 강화,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 등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 하도록 표준약관에 반영 ▪ 포인트 기부방법 및 기부처 다양화, 기부금액 제한 폐지, 기부전용상품의 출시 등 포인트 기부제도 활성화 유도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 금감원은 모든 금융기관이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준하</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는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p> <p>◦ 한편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포인트 소멸금액 등을 재원으로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정</p> |
| <p>15. 성진지오텍 거래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p> | <p><향후 추진계획></p> <p>□ '11년중 실시예정인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법규위반 및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p> |
| <p>16.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용회복기금 검사를 실시할 것</p> | <p><처리결과></p> <p>□ 신용회복기금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재원을 조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어 통상의 대부업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p> <p>◦ 또한 2010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신용회복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회복기금 개선방안"(10.11.16)을 마련·시행중에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 금감원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검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임</p> |

예금보험공사

3. 예금보험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저축은행 부실방지 관련 | |
| 1-1) 저축은행 부실률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PF대출 규제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 및 공동검사 지속 확대 등 선제적 감시기능 수행 중</p> <p>○ 또한, 선제적 부실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기능을 예보법에 추가하는 노력을 계속 중</p> |
| 1-2) 금감원과의 자료공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저축은행 부실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 <p><처리결과></p> <p>□ 기재부, 금융위 등과 5자간 「금융업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 감시기능 수행 중</p> <p>○ 현재 미공유 중인 저축은행 수시정보는 금감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p> |
| 2.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 부실화 관련 | |
| 2-1) 저축은행 추가 부실화에 대비하여 기금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p><처리결과></p> <p>□ 저축은행계정 적자 해소 및 추가 구조조정 소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p> <p>○ 타업권들을 설득하여 예보기금내 특별계정을 설치(예보법 개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2-2) 저축은행계정 적자 해소 및 저축은행 부실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차등화 등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p>- 향후 예금보호한도 조정 등 기금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p> <p><처리결과></p> <p>□ 회생가능성이 부족한 부실저축은행의 부실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삼화, 부산계열 등 8개사 구조조정 진행 중</p> <p>○ 또한, 예금보호한도 조정·차등화 등 기금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당국과 협의할 예정</p> |
| 3. MOU 관리지표 적정성 검토 | |
| 3-1)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와 동일한 MOU 관리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MOU 관리지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p><처리결과></p> <p>□ '07년부터 MOU 관리목표 상한제 도입, '11년부터 과거 실적치에 근거한 목표 부여 방식 도입 등 경영부담 완화 지속 추진</p> <p>○ MOU 관리지표의 목표수준 적정성 제고 및 MOU 관리제도의 효율화 등을 통해 MOU 관리방식 지속 개선</p> |
| 4.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 |
| 4-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해 부실채권 회수율이 미흡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p><처리결과></p> <p>□ 공적자금회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p> <p>○ 파산재단 배당 극대화를 위해 보유자산의 Pooling, 합동구매, 재산조사 수단 다양화 등의 조치를 지속 추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출자지분 매각시 경쟁입찰 블록세일 등 최적의 매각방식으로 회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 |
| 5. 조직 관리 및 인력 채용 관련 | |
| 5-1) 공적자금 회수 관련 업무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임무가 완료된 임시조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을 조기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인력을 고유기능인 예금자보호기능 중심으로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관련 자산관리기능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 □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팀 신설을 억제하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한 현안과제 발생시 업무특성에 맞는 임시조직을 활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정기적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정비를 실시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 |
| 6.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 |
| 6-1)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지원 경위, 지원절차, 예산편성 과정,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자료를 기제출하였음 □ 지원경위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7.6월부터 경제교육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동 협의회가 '08.12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경제교육협회로 확대·개편되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경제교육협회 이사(비등기)기관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로부터 '09년도 협회비 5,000만원 납부 요청을 받아,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예산편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는 예산상 제세공과금으로 편성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의 경제교육 업무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이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 |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1.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운용 관련 | |
| 1-1)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미분양 아파트 및 선박매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달리 부실 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 자산 뿐 아니라, 비업무용자산,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인수가 가능*</p> <p>* IMF 당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 매수자가 없어 구조조정이 지연되었던 경험을 고려하여 기능 추가</p> <p>○ 다만,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인수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p> <p><향후 추진계획></p> <p>□ 미분양아파트 매각호조에 따라 건설회사의 유동성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기금이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투자할 계획은 현재 없음</p> <p>□ 선박매입시에는 해운 및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p> <p>○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분석에 만전을 기할 계획</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2) 선박펀드를 통해 주로 대형선사 선박을 매입하였는바, 중소선사 선박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 선박펀드 운영방안 개선*('09.11월)에 따라 중소선사(흥아해운) 선박 3척 매입완료('10.4월)</p> <p>* 구조조정기금 투입비율(40%→60%) 및 매입대상(운항 중→건조 중 포함) 확대</p> <p>○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하여, 11개 중소선사 선박 24척 신청접수('10.10월~'11.1월)</p> <p><향후 추진계획></p> <p>□ 기 신청 접수된 선박(11개 중소선사 보유 24척) 이외에 추가로 수시 접수받아 매입을 추진할 계획</p> |
| <p>2. 부실채권 인수·정리 관련</p> <p>2-1) 저축은행 PF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 K-IFRS 등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고 저축은행 니즈를 반영하는 한편,</p> <p>○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매입대금사후정산방식 이외에 확정가 또는 유동화방식 등으로 저축은행 PF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2) 저축은행 PF채권은 브릿지론 비율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전에는 회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바,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공사 온비드를 통한 공매정보 제공, 매각설명회 및 DM발송 등을 통하여 원매자를 적극 발굴 노력하고, ○ 자율워크아웃약정 체결한 사업장은 대주단협의회를 통하여 자율구조조정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단순 토지공매보다 사업정상화가 될 경우 사업이익으로 채권회수 극대화가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하여 대주단 설득을 통한 사업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2개 사업장 정상화 완료 ○ '11. 1월 'PF사업장 정상화추진단'을 설치하여 공사가 관리중인 PF사업장의 조기 정상화를 적극 추진중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사업장 정상화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정상화가능 사업장을 지속 발굴하고, 현장 홍보활동 강화 등 고가매각 전략을 계속 추진할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3. 신용회복기금 사업 관련하여 채무 재조정과 전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바,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채무재조정)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 실적제고를 위한 대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를 파악, 채무감면 등을 안내하여 채무재조정 적극 유도 ○ 신용회복기금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종합 홍보방안 시행을 통한 채무재조정 제도 적극 홍보 <input type="checkbox"/> (전환대출)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대출 접수창구를 6개 은행의 5,400개 창구로 확대하고 고객부담금리를 1% 인하(평균 12% → 11%) ○ 일평균 신청자 수가 66명에서 168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1년 상반기 중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 개선방안을 수립·시행 예정 <input type="checkbox"/> '11년 상반기 중 전환대출 신청은행을 현재 6개은행에서 제1금융권 전체 16개 은행으로 확대 예정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대부율이 낮은 원인과 대부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개선대책 | <div><처리결과></div> <div> <div>□ '06년 이후 공사로 대량위탁된 지자체 재산의 82%가 읍·면 지역의 활용가치가 극히 낮은 재산으로,</div> <div>○ 전체 보유건수 대비 대부율은 낮은 편이나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대부건수 및 대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div> </div> <div>< 연도별 대부율 현황 ></div> <table> <tr> <th>구분</th> <th>관리필지 (a)</th> <th>대부건수 (b)</th> <th>대부율 (b/a)</th> <th>비고</th> </tr> <tr> <td>2007</td> <td>95,163</td> <td>7,574</td> <td>8%</td> <td>산림청 12,253건 인수</td> </tr> <tr> <td>2008</td> <td>162,665</td> <td>14,588</td> <td>9%</td> <td>지자체 64,482건 인수</td> </tr> <tr> <td>2009</td> <td>223,992</td> <td>23,033</td> <td>10%</td> <td>토지공사 61,230건 인수</td> </tr> <tr> <td>2010</td> <td>222,602</td> <td>31,152</td> <td>14%</td> <td></td> </tr> </table> <div> <div>□ 한편,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국유재산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div> <div>* 2회이상 유찰, 주거용, 경작용, 공유지분권자, 기타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 등</div> <div>○ 대부재산의 다수가 주거용(26%)·경작용(53%)으로 실수요자들에 의한 수의계약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div> </div>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 <div>□ 대부 가능재산 적극 발굴, 상시 정보공개 등을 통해</div> <div>○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외에도 경쟁입찰에 의한 대부계약을 유도하여 수입증대에 기여할 계획</div> </div> | 구분 | 관리필지 (a) | 대부건수 (b) | 대부율 (b/a) | 비고 | 2007 | 95,163 | 7,574 | 8% | 산림청 12,253건 인수 | 2008 | 162,665 | 14,588 | 9% | 지자체 64,482건 인수 | 2009 | 223,992 | 23,033 | 10% | 토지공사 61,230건 인수 | 2010 | 222,602 | 31,152 | 14% | |
| 구분 | 관리필지 (a) | 대부건수 (b) | 대부율 (b/a)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2007 | 95,163 | 7,574 | 8% | 산림청 12,253건 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2008 | 162,665 | 14,588 | 9% | 지자체 64,482건 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 223,992 | 23,033 | 10% | 토지공사 61,230건 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 222,602 | 31,152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4-3)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에서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물납자가 저가로 매수하여 이를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 매각손실 방지 및 물납자 저가 매수 개선 방안 마련·실시</p> <p>○ 공매진행에 따른 감액률 한도 축소 (50%→40%) 및 재평가조정률* 폐지 ('10.6월 이후 적용)</p> <p>* 1회 재평가지 기준가액의 90%, 2회 이상 재평가지 기준가액의 80%로 매각예정가격 조정</p> <p>○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납자에 대한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11.4월 시행)</p> <p>*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④</p> <p>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의 경우 국세물납한 본인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p> |
| <p>5. 국유재산관리나 서민금융업무 등 자산관리공사 고유업무가 아닌 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 국유재산관리업무 및 서민금융업무는 공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사의 고유업무임</p> <p>□ 다만, 현행 공사법은 IMF금융위기 당시 제정되어 법체계상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기능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으므로,</p> <p>○ 향후 공사법 개정시 실제 수행업무를 충실히 반영토록 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자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6. 기타 공사운영 관련 | | | | | | | | | | | |
| 6-1) 장애인 및 여성인력에 대한 채용, 승진 등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여성 채용비율*(채용인원의 40% 수준) 및 승진비율** 확대</p> <p>* 채용비율 : '06년(25%), '09년(31%), '10년(41%)</p> <p>** 여성 승진비율 : '09년(9%,4명) → '10년(17%,9명)</p> <p>□ 장애인은 신입직원 채용시 모든 전형 단계에 대한 가점부여(만점의 5~10%)</p> <p>○ 핵심/전문 보직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인사운용(사내변호사 3명 중 1명 중증 장애인)</p> <p>* 장애인 고용률 변동추이</p> <table><tr><td>'07년</td><td>'08년</td><td>'09년</td><td>'10년</td><td>비 고</td></tr><tr><td>1.1%</td><td>1.1%</td><td>1.4%</td><td>1.4%</td><td>부담금신고서 기준</td></tr></table> <p><향후 추진계획></p> <p>□ 여성인력 운영과 관련 신입직원 채용 확대노력을 지속하고 내부 승진시 여성 할당제 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 개선 예정</p> <p>□ 신입직원 및 청년인턴 신규채용시 장애인 지원자에게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10%) 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우수인력을 추천받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p>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비 고 | 1.1% | 1.1% | 1.4% | 1.4% | 부담금신고서 기준 |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비 고 | | | | | | | |
| 1.1% | 1.1% | 1.4% | 1.4% | 부담금신고서 기준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6-2) 신입직원 채용시 대학등급화 등 학력 차별사항을 개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학력차별(대학등급제)을 완전 철폐하여 '10년 신입직원 공채시 적용</p> |
| <p>6-3) 명예퇴직금과 연차휴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09년도 명예퇴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회성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향후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공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할 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차휴가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정부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1/183→1/209)을 완료하고,</p> <p>○ '09년부터는 연차휴가 보상금 절감을 위해 전직원 평균 25% 이상의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촉진·시행중</p> <p><input type="checkbox"/>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근로자의 날 행사비 및 창립기념품비 지원제도는 폐지('10.12.20, 규정개정)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중단함</p> |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1. 보금자리론 관련 | |
| <p>1-1) 보금자리론의 혜택이 수도권, 중대형 주택,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의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한 u-보금자리론 출시('10.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보금자리론 대비 0.4%p 이자를 낮춘 신상품 출시로 서민금융지원 강화 ○ 소득 추정 시 세대주도 세대원 수에 포함하여 최저생계비를 적용('10.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세대주 추정소득 10백만원 인정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소득조건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로 저소득층·서민층 지원 강화('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득 20백만원→2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대출한도 1억원→1.5억원 □ 비수도권 및 서민 주택 보금자리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권 서민의 공급확충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은행의 e-보금자리론 취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은행('10.8월), 경남은행('10.10월) -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은행을 u-보금자리론 취급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권 공급 활성화 여건 조성('11.6월) ○ 수도권의 중대형 주택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개선제도 지속 추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의 가산금리 0.1% 부과('09.12월 부터 운영) - 담보가액 6억 초과 주택의 가산금리 0.1% 부과('09.12월부터 운영)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서민층 지원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u-보금자리론 취급기관 확대 예정('1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2곳 → ('11.6월 이후) 11곳 <input type="checkbox"/> 지방권 영업점(10곳)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 |
| <p>1-2) 보금자리론의 대출실적이 미진한 원인은 위탁판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대출모집인 제도 도입 등 보금자리론 대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판매의 열세를 극복하고 보금자리론 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u-보금자리론 취급 금융회사(기업은행, 삼성생명)의 대출모집인을 대출상담 및 신청업무에 적극 활용 중임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출모집인 활용대상 금융회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금자리론 취급 금융회사를 11개 (국민은행 등 9개 추가)로 확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을 통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1-3)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인하 추세에 맞추어, 보증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div><처리결과></div> <div><div><div><input type="checkbox"/> 금리변동 추세를 반영하여 보증자리론 금리인하 조치('10.11.1)</div><div><div>○ 기본형(10년 기준) 금리를 5.5%에서 5.2%로 0.3%p 인하</div></div></div><div><div><input type="checkbox"/> 할인금리 적용 신상품 출시('11.2.16)</div><div><div>○ 3년 거치기간 동안 '기본형' 금리보다 0.4%p 낮은 '혼합형' 신상품 출시</div></div></div></div> <div><div><u-보증자리론 금리></div><div>(단위 : %)</div><table><tr><th>구분</th><th>기본형</th><th>혼합형</th></tr><tr><td>10년</td><td>5.20</td><td>4.80</td></tr><tr><td>15년</td><td>5.30</td><td>4.90</td></tr><tr><td>20년</td><td>5.40</td><td>5.00</td></tr><tr><td>30년</td><td>5.45</td><td>5.05</td></tr></table></div>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자금조달 다변화,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해 금리경쟁력 유지에 주력할 계획</div></div> | 구분 | 기본형 | 혼합형 | 10년 | 5.20 | 4.80 | 15년 | 5.30 | 4.90 | 20년 | 5.40 | 5.00 | 30년 | 5.45 | 5.05 |
| 구분 | 기본형 | 혼합형 | | | | | | | | | | | | | | |
| 10년 | 5.20 | 4.80 | | | | | | | | | | | | | | |
| 15년 | 5.30 | 4.90 | | | | | | | | | | | | | | |
| 20년 | 5.40 | 5.00 | | | | | | | | | | | | | | |
| 30년 | 5.45 | 5.05 | | | | | | | | | | | | | | |
| 2.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 | | | | | | | | | | | | | | | |
| 2-1)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div><처리결과></div> <div><div><div><input type="checkbox"/>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회수율 제고</div><div><div>○ '10.7월 회수가능성 기준으로 구상권을 전면 재분류하여 회수위탁규모를 확대하고, 회수가능성이 작은 사업자 보다 개인구상권에 회수역량 집중</div></div></div></div>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회수위탁확대 및 관리 효율성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권 회수위탁규모 추가확대 ○ 수도권 영업점의 회수위탁채권을 서울채권관리센터로 집중하여 관리하는 등 효율화 지속 추진 |
| <p>2-2)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P-CBO 보증을 활성화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P-CBO 편입기업 수요부족으로 추가 공급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사단 교체 및 상품성 제고 (콜옵선 도입)를 통해 P-CBO보증 취급을 추진 하였으나, 시장상황 호전으로 보증수요 별무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시장수요 발생 및 시장안정 기능이 재요구될 경우 재추진</p> |
| <p>2-3) 신용회복지원자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산관리공사 등 지원기관과의 공조 홍보활동 전개 ('10.11월) <p>*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LH 및 지방공사가 전세계약 체결후 저리에 재임대 하는 지원방식이 활성화되어 대출(보증)수요는 미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및 미디어(라디오) 광고를 실시하여 보증실적 제고</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4)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를 감액 (2억 → 1억 5,000만원)한 것은 최근 전세 수요의 증가로 인한 전세값 상승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보증의 보증 한도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실질적 한도 인상 조치 시행('10.9월) ○ 1억 → 1.5억원 - '09.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일몰 기한 도래(1억원으로 회귀)에 따라 보증 한도를 1.5억원으로 인상 * 건당 평균보증금액이 약 30백만원인 점을 감안시 보증한도 1.5억원으로 전세값 상승에 대한 보증한도로 충분</p> <p><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향후 전세시장의 추이를 보아가며 보증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본 시정· 처리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예정</p> |
| <p>3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관련</p> | |
| <p>3-1)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의 주요 변수인 주택가격상승률에 관 하여 공사의 예측(3.5%)과 실제 상승률(7.3%)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재산정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주요변수 재산정 ○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에도 외부 전문가 집단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조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3-2) 주택연금의 가입 실적이 부진하므로, 대대적인 홍보 등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특성에 최적화된 홍보 마케팅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표적시장에 따른 포지셔닝 전략 실행 ○ 고령층에 가장 파급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 ○ 주택연금 가입이 용이하도록 가족공감대 형성 및 가족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령층 상시거점장소(실버박람회 등 노인행사)에 대한 고객밀착형 현장마케팅 확대 ○ 노인 및 연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계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고객접점확대 및 홍보 마케팅 채널을 다각화 |
| <p>3-3) 주택연금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바, 2주택 이상자라도 9억원 이하라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주택연금 지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 지방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가입허용을 위한 공사법 개정안이 '10년 10월 1일자(의안번호 1809467)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되어 법안 심의 중 |

한국정책금융공사

6. 한국정책금융공사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1. 공사 설립 및 운영 관련 | |
| 1-1) 산은 및 신·기보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체성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산은, 신·기보 등 타 기관과 공사는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 영역이 다름</p> <p>○ 공사가 산은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였으므로 산은이 완전 민영화 되기전까지는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공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p> <p>- 산은의 민영화 진전에 따라 공사와 산은과의 업무 중복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임</p> <p>○ 신·기보는 신용보증 전문기관임에 반해, 공사는 대출·투자 등 자금공급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업무중복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일 뿐만 아니라 기업측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음</p> <p>□ 향후 신·기보 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업무공조로 정책금융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p>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2) 공사의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설립 당시 공기업 주식(15.5조원)에 해당하는 산금채 이전에 따라, 동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에 구조적인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 공사는 영업자산 확충, 조달비용 절감, 시장상황을 감안한 적기 구조조정기업 주식 매각, 산은지주 및 공기업 지분의 배당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 '10년 결산에는 4,0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668억원을 정부에 배당하였음 |
| <p>2. 공사 업무 관련</p> | |
| <p>2-1) 온렌딩 방식으로 대출 하는 경우 공사의 신용위험분담을 확대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위험분담은 온렌딩 제도의 보조적인 기능으로서 적극적 운용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 신용위험분담 대상기업 확대, 신용위험분담부 우선 지원, 신용위험분담 비중이 높은 중개금융기관 우대, 심사기간 예측성 보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위험분담제도를 활성화 하겠음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2) 공사와 신·기보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서 공사는 신·기보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이 특정 기업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공사와 신·기보는 각각 업체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 공사는 온렌딩 대출 지원시 신·기보의 보증서 담보 취득을 금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 향후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 신·기보와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문제는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3)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 수출효과산업 등에 대한 업무영역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육성과 그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사업 등을 공사 업무영역으로 명시하고 있음 □ 공사는 위의 사업에 대한 개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내규를 제정하여 운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산업 (정부 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 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 신성장동력산업(산업발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제품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6T,첨단 부품소재산업 ○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사업(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효과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사업의 하나로서 수출효과가 크고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가능한 분야 (해외건설, 조선, 플랜트)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div><div><input type="checkbox"/> 공사는 앞으로 법률·고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영역을 정의하되,</div><div><input type="radio"/>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div></div> | | | | | | | | | | | | | | | | | | | | |
| 2-4) 중견기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책을 검토할 것 | <div><div><처리결과></div><div><div><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의 법적근거 확정 전까지 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원 중이며, 개정된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는 '11.7.1부터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준용할 계획임</div><div><div>* 현행기준 :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집단 소속기업 제외) 중 종업원수 1,000명 미만 또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1조원 이하의 기업</div></div><div><input type="checkbox"/> 공사는 정부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에 부응하고자 온렌딩/대출/투자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업무계획에 반영, 적극 지원 중임</div></div><div><div><중견기업 지원현황></div><div>(단위:억원)</div><table><tr><th>구 분</th><th>합 계</th><th>온렌딩</th><th>대출</th><th>투자</th></tr><tr><td>'10년 실적</td><td>3,367</td><td>2,095</td><td>1,272</td><td></td></tr><tr><td>'11년 목표</td><td>11,600</td><td>5,500</td><td>2,100</td><td>4,000</td></tr><tr><td>'11년분기 실적</td><td>3,587</td><td>2,958</td><td>7</td><td>622</td></tr></table></div></div> | 구 분 | 합 계 | 온렌딩 | 대출 | 투자 | '10년 실적 | 3,367 | 2,095 | 1,272 | | '11년 목표 | 11,600 | 5,500 | 2,100 | 4,000 | '11년분기 실적 | 3,587 | 2,958 | 7 | 622 |
| 구 분 | 합 계 | 온렌딩 | 대출 | 투자 | | | | | | | | | | | | | | | | | |
| '10년 실적 | 3,367 | 2,095 | 1,272 | | | | | | | | | | | | | | | | | | |
| '11년 목표 | 11,600 | 5,500 | 2,100 | 4,000 | | | | | | | | | | | | | | | | | |
| '11년분기 실적 | 3,587 | 2,958 | 7 | 622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은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금융회사가 지원에 소극적인 장기 설비투자, R&D 자금 및 해외투자자금 등을 지원 * 대외환경급변(고유가, 일본대지진 등)에 따른 피해기업들에 대한 특별자금공급 추진 중 -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KoFC Frontier Champ』 선정·지원 ○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등을 통한 간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채투자, 지분투자 및 펀드를 이용한 간접투자 ○ 온렌딩(On-lending)대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중견기업에 대한 온렌딩대출이 가능('10.10월 금융위 승인)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 * 녹색·신성장산업 영위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특별온렌딩대출'을 통해 자금우선 배정 등 우대 |

신용보증기금

7. 신용보증기금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프로그램의 실적 제고를 위해 신보는 대기업에 협력업체 추천을 독촉하는 등 협약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p> | <p><처리 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기업에 협력업체 추천 활성화 요청 등을 통한 상생협약보증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대기업에 협력업체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 <p>* 협약대기업의 추천업체수 ('10.7월 ~ '11.03월) : 497개 기업</p> <p>** '11.3월말 현재 협약보증 취급실적 : 출연누계 203억원, 보증공급 2,828억원 (지원율 84.9%)</p> <p><input type="checkbox"/> 대중소상생보증 활성화를 위해 영업점 경영실적 평가에 우대사항으로 반영함으로써 활성화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보증공급실적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 보증잔액관리 평가 제외대상으로 운용 ◦ 장가고액보증 감축대상에서 제외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상생협약보증 모델 발굴 지속 추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협의를 거쳐 2·3차 협력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서 개정 추진 ◦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이 출연하여 2·3차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추진 □ 기추천업체중 보증미지원업체에 대하여 보증 가능여부 재검토 |
| <p>2.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보증규모 축소과정에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p> | <p><처리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보증정상화를 추진하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 운용 ◦ 보증총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보증은 지속적으로 확대 ◦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업무계획 변경 ('10. 10월) * 업무계획 변경내용 : 최대 38.5조원 (37.0±1.5) → 최대 40.0조원 (38.5→1.5)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유동화회사보증」 도입('10. 11월)</p> <p>* 4,020억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10년)</p> <p><향후 추진계획></p> <p>□ '11년에도 시장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보증운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크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p> <p>* 일반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은 5%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운용가능</p> <p>▶ 일반보증 : 37.5조원±5%(최대 39.4조원)</p> <p>▶ 유동화보증 : 4.1조원±5%(최대 4.3조원)</p> |
| <p>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이 일시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p> | <p><처리결과></p> <p>□ 부실예측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사후 관리 실시</p> <p>◦ 부실징후알람시스템을 구축('10.10월)하여 알람등급별*(관찰주의경보)로 선택적이고 차등화된 사후관리 실시</p> <p>* '주의'는 중점관리기업, '경보'는 특별관리 기업으로 관리하여 점검 의견 필수기재</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점검활동(시스템정가테마)으로 보증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 판정하여 부실발생 사전 예방 ◦ 보증부실예측시스템을 구축('10.12월) 하여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부실률을 추정하고 경영정책에 반영 <p>□ 리스크 관리목표 강화를 통한 보증의 건전성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잔액에 대한 리스크인수율 (잠재부실률) 관리목표 강화 <p>* ('09년) 6.0%→('10년) 5.3%→('11년) 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적예상치와 관리목표를 비교· 분석하여 위험수준별로 관리 <p>□ 「신용보증 사후관리기준」을 개정, 부실 가능성에 무게를 둔 실질적 사후관리 체계로 개편('10.12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보증규모로 인해 사후관리 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사후 관리 방법의 절차적 개선을 통해 사후 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업무량 경감 및 실효성을 제고 ◦ 보증금액과 신용도를 고려,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점관리기업과 특별 관리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사후관리 실시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중점특별관리기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영업 현장의 사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을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리스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업종별 보증잔액, 부실률 추이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리스크 편중 방지 □ 부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교화하여 선제적 부실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기업규모별, 기간별, 지역별 부실 동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통합 관리 |
| <p>4.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p> | <p><시정 및 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1人10社 창업지원캠페인」 연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중 창업기업 19,900개에 2조 1,070억원을 지원하여 67,000개의 일자리 창출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div>◦ 청년실업자 및 베이비붐 세대(4050세대)의 창업 촉진을 위해 연령별 투트랙 (Two-Track) 방식으로 지원하여 효과를 극대화</div> <div>(단위 : 개, 억원)</div> <table><tr><th>구 분</th><th>업 체 수</th><th>금 액</th><th>일 자리</th></tr><tr><td>창업기업</td><td>19,900</td><td>21,070</td><td>66,572</td></tr><tr><td>청년창업</td><td>10,005</td><td>3,507</td><td>21,132</td></tr><tr><td>4050창업</td><td>9,895</td><td>17,563</td><td>45,440</td></tr></table> <div>□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창업기업의 보증료율 감면폭 확대 ('11.1월)</div> <div>◦ (변경前) 보증료율 0.1%p차감 ⇨ (변경後) 보증료율 0.3%p차감 (0.2%p↓)</div>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 창업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전사적 창업지원캠페인 확대 추진</div> <div>◦ '11년 중 21,000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약 7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div> <div>□ 경제전반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을 중점 지원</div> <div>◦ 신규보증 가운데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영업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div> <div>* ('10) 47.7% → ('11⁹) 48.5% → ('12⁹) 50.0%</div> | 구 분 | 업 체 수 | 금 액 | 일 자리 | 창업기업 | 19,900 | 21,070 | 66,572 | 청년창업 | 10,005 | 3,507 | 21,132 | 4050창업 | 9,895 | 17,563 | 45,440 |
| 구 분 | 업 체 수 | 금 액 | 일 자리 | | | | | | | | | | | | | | |
| 창업기업 | 19,900 | 21,070 | 66,572 | | | | | | | | | | | | | | |
| 청년창업 | 10,005 | 3,507 | 21,132 | | | | | | | | | | | | | | |
| 4050창업 | 9,895 | 17,563 | 45,440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5.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약 협약을 개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업무특화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지도 실시 (‘10.2월 외)</p> <p>◦ 중소기업이 업무특화로 인해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보증 취급을 허용하여 고객 불편 최소화</p> <p>* 예외운용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중복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 신보에서만 취급 가능한 제도 및 보증 ▪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보증 프로그램 ▪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고객이 신보에 보증신청하는 경우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양기관 협의를 통한 업무협약 개선 추진</p> <p>◦ 중복보증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예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6. 단기 보증부실 증가에 대해 보증심사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단기부실 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지급능력 외에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평가를 심사에 반영 □ 미래가치를 반영한 기업가치평가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용도에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보증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으로써 부실발생 억제 □ 심사체계의 차별성 확대를 통한 고액보증 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주의 심사에서 부문별 주요 심사지표를 동종산업의 평균, 산업내 위치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분석 □ 부실징후알람시스템을 구축(‘10.10월)하여 기업의 부실 예측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조기 진단하여 위험단계별 사후관리 실시 □ 보증수행평가시스템을 구축(‘10.12월)하여 보증심사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보증건전성 및 신용판별능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건전보증 유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div data-bbox="823 371 1453 600"> <input type="checkbox"/> 신규보증건전율 성과평가지표를 도입 (11년)하여 단기부실에 대한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내 단기부실 발생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상향 적용(2.0 ~ 1.5) </div> <div data-bbox="823 629 1123 674"><향후 추진계획></div> <div data-bbox="823 712 1453 994"> <input type="checkbox"/> 기업가치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보증 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신용도는 양호하나,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 제한 및 기보증 회수 </div> <div data-bbox="823 1032 1453 1323"> <input type="checkbox"/> 신규보증건전율을 영업점의 핵심성 과지표(KPI)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에 보증취급후 부실발생한 금액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단기부실에 대한 책임 강화 도모 </div> <div data-bbox="823 1375 1453 1603"> <input type="checkbox"/>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리모델링으로 신용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환경 변화 등 신용리스크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시스템의 정합성 제고 </div> <div data-bbox="823 1644 1453 1921">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신용평가 감리로 기업신용평가 내용의 적정성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신용평가능력을 제고하여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사전 차단 </div>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7. 특수채권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공공정보 확대제공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과학화된 회수활동 지원 시스템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전산자료를 추가 제공('10.12월)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수활동 강화◦ 채무자에 대한 성향분석, 환경지표 등에 기초한 강화된 통계지표 제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회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강화 <p>□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수위임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보의 특수채권 관리규모, 회수인력 등을 고려 직접 관리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 회수위임 확대◦ 채권추심회사별 회수목표 달성율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폭 확대를 통한 경쟁유도를 통해 위임실적 제고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원, %)</p> <table><tr><th>구 분</th><th>위임채권</th><th>차등수수료율</th><th>회수금액*</th><th>회수율</th></tr><tr><td>'10년</td><td>34,865</td><td>±3</td><td>1,058</td><td>0.12</td></tr><tr><td>'11년</td><td>39,842</td><td>±5</td><td>1,496</td><td>0.15</td></tr><tr><td>증 감</td><td>4,977</td><td>±2</td><td>438</td><td>0.03</td></tr></table> <p>* 회수금액은 '11년 3월말 기준</p> | 구 분 | 위임채권 | 차등수수료율 | 회수금액* | 회수율 | '10년 | 34,865 | ±3 | 1,058 | 0.12 | '11년 | 39,842 | ±5 | 1,496 | 0.15 | 증 감 | 4,977 | ±2 | 438 | 0.03 |
| 구 분 | 위임채권 | 차등수수료율 | 회수금액* | 회수율 | | | | | | | | | | | | | | | | | |
| '10년 | 34,865 | ±3 | 1,058 | 0.12 | | | | | | | | | | | | | | | | | |
| '11년 | 39,842 | ±5 | 1,496 | 0.15 | | | | | | | | | | | | | | | | | |
| 증 감 | 4,977 | ±2 | 438 | 0.03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채권 회수 전담인력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성과보상 체계를 확대하여 경쟁 강화를 통한 회수성과 최대화 유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회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공공정보 수집 확대를 통한 정보 제공 ◦ 시효완성 활성화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특수채권 채무자의 관리기간 단축 □ 실무 중심의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회수전담 인력의 정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권 회수기법 발굴 및 공유를 통한 회수 전담 인력의 회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회수활동 지원 |
| <p>8.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영업점에 대한 신규보증목표 확대배정 및 보증잔액비중 상향조정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div>* 비수도권 지역 보증잔액비중 추이</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비수도권</th><th rowspan="2">증 감</th></tr><tr><th>'09년 말</th><th>'10년 말</th></tr><tr><td>보증 잔액</td><td>44.0%</td><td>45.3%</td><td>1.3%p ↑</td></tr></table> <div>◦ 신규보증공급의 50%를 지방에 배정('11.1월)</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비수도권</th><th rowspan="2">증 감</th></tr><tr><th>'10년</th><th>'11년</th></tr><tr><td>신규보증목표</td><td>44.0%</td><td>50.0%</td><td>6.0%p ↑</td></tr></table>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div>□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증규모 지속 확대</div><div>◦ 비수도권 지역 보증잔액 비중을 '13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div><div>* ('11) 46.5% → ('12) 48.0% → ('13) 50.0%</div><div>□ 지역특화산업을 영위중인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지속추진</div><div>◦ 비수도권지역에 총 244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율 차감 적용</div></div> | 구 분 | 비수도권 | | 증 감 | '09년 말 | '10년 말 | 보증 잔액 | 44.0% | 45.3% | 1.3%p ↑ | 구 분 | 비수도권 | | 증 감 | '10년 | '11년 | 신규보증목표 | 44.0% | 50.0% | 6.0%p ↑ |
| 구 분 | 비수도권 | |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09년 말 | '10년 말 | | | | | | | | | | | | | | | | | | | |
| 보증 잔액 | 44.0% | 45.3% | 1.3%p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비수도권 | |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10년 | '11년 | | | | | | | | | | | | | | | | | | | |
| 신규보증목표 | 44.0% | 50.0% | 6.0%p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9. 정형화된 소송업무에 비해 과도한 소송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소송수행 실적을 기금 대외평가 항목으로 신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도 기금 경영실적평가에 직접소송수행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구상금청구소송 비용의 절감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경주 □ 지급명령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도 시행(‘1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달이 가능하고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원칙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소송 수행 비중의 지속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변호사(3명), 임금피크제 직원(28명)을 통한 직접소송 확대 및 영업점직원이 지급명령 사건의 일반소송 전환 건 소송수행 실시 □ 낮은 수준의 변호사 보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변호사 보수액은 대법원 규칙 대비 약 1/4 수준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소송 1건당 310만원을 보수지급액의 최고한도액으로 운용중</div> <div>※ 난이도가 높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비정형 소송사건의 위임비중(약 30%)을 고려하면 현행 수준의 구상금청구소는 계속해서 위임할 필요</div> <div>《연도별 변호사 소송 위임 현황》 (단위 : 건, %)</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08년</th><th colspan="2">2009년</th><th colspan="2">2010년</th></tr><tr><th>건수</th><th>비중</th><th>건수</th><th>비중</th><th>건수</th><th>비중</th></tr><tr><td>구상금청구소 (定型 訴訟)</td><td>8,780</td><td>77.7</td><td>6,008</td><td>68.7</td><td>5,230</td><td>69.5</td></tr><tr><td>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非定型 訴訟)</td><td>2,520</td><td>22.3</td><td>2,733</td><td>31.3</td><td>2,296</td><td>30.5</td></tr><tr><td>계</td><td>11,300</td><td>100.0</td><td>8,741</td><td>100.0</td><td>7,526</td><td>100.0</td></tr></table> | 구 분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구상금청구소 (定型 訴訟) | 8,780 | 77.7 | 6,008 | 68.7 | 5,230 | 69.5 |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非定型 訴訟) | 2,520 | 22.3 | 2,733 | 31.3 | 2,296 | 30.5 | 계 | 11,300 | 100.0 | 8,741 | 100.0 | 7,526 | 100.0 |
| 구 분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상금청구소 (定型 訴訟) | 8,780 | 77.7 | 6,008 | 68.7 | 5,230 | 69.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非定型 訴訟) | 2,520 | 22.3 | 2,733 | 31.3 | 2,296 | 3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1,300 | 100.0 | 8,741 | 100.0 | 7,526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경영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비해 신보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경영컨설팅 사업을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div><처리결과></div> <div>□ '10년도 경영컨설팅 지원확대 및 창업 기업 중점지원</div> <div>◦ '09년대비 총지원기업 12.8% 증가, 창업기업 30.5% 증가</div> <div>《컨설팅지원 현황》</div> <table><tr><th>구분</th><th>'09년</th><th>'10년</th></tr><tr><td>창업기업</td><td>128건 (78.5%)</td><td>167건 (90.8%)</td></tr><tr><td>기타기업</td><td>35건 (21.5%)</td><td>17건 (9.2%)</td></tr><tr><td>계</td><td>163건 (100%)</td><td>184건 (100%)</td></tr></table> | 구분 | '09년 | '10년 | 창업기업 | 128건 (78.5%) | 167건 (90.8%) | 기타기업 | 35건 (21.5%) | 17건 (9.2%) | 계 | 163건 (100%) | 184건 (100%)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09년 | '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업기업 | 128건 (78.5%) | 167건 (9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기업 | 35건 (21.5%) | 17건 (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63건 (100%) | 184건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div>□ 경영컨설팅지원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div> <div>◦ PM (Project Manager, 컨설팅진행관리자) 및 직접컨설팅 수행인력 확충</div> <div>《인원 현황》</div> <table><tr><td>구분</td><td>‘10년</td><td>‘11년</td><td>비고</td></tr><tr><td>PM</td><td>6명</td><td>8명*</td><td>* 8명 중 4명은 하반기부터 직접컨설팅 수행</td></tr></table>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 신보직원에 의한 직접컨설팅 실시로 지원규모 확대</div> <div>◦ ‘11년 상반기 멘토컨설팅* 실시 후 하반기에 직접컨설팅 시범실시</div> <div>◦ * 전문컨설턴트와의 공동컨설팅을 통해 멘토링학습</div> <div>◦ ‘12년부터 직접컨설팅 확대 실시</div> <div>□ 컨설팅 실시 후 피드백 강화로 컨설팅 품질 향상 도모</div> <div>◦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과 사후관리 강화로 컨설팅 만족도 제고</div> | 구분 | ‘10년 | ‘11년 | 비고 | PM | 6명 | 8명* | * 8명 중 4명은 하반기부터 직접컨설팅 수행 |
| 구분 | ‘10년 | ‘11년 | 비고 | | | | | | |
| PM | 6명 | 8명* | * 8명 중 4명은 하반기부터 직접컨설팅 수행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1. 보증연계투자사업은 누적 부실률이 높고 투자 중복문제가 있어 정책 자금지원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투자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한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선정기준 강화 (10.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연계투자대상 및 인수금액 산정시 기업가치평가를 반영 ◦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인 혁신선도형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정책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지속 여부 재검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에는 예산미반영에 따라 투자계획 없음 |

기술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지원 실적이 미진한 바, 2차 협력업체 등에게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중소기업 상생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지경부 등과 미납출연금에 대한 조기출연 유도, 협약 개정 등을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자금수요가 많은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협력업체를 보증지원대상에 포함하고, — 2,3차 협력업체 지원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input type="checkbox"/> 대기업의 직접출연 부담이 없는 무이자 예치방식 상생보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그룹, 기업은행과 무이자예치방식 상생협약 추가체결('10.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그룹 예치금액(1,000억원)의 2.5배인 2,500억원 규모 펀드 조성하여 협력업체 지원 — 지원실적('10.9 ~ '11.3월) 133억원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책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보증 협약 변경 추진 등 상생보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확대 조치 과정에서 증가한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시행('10.7월) 하여 구조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고액보증으로 분류된 경우 보증지원 성과평가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가 우수한 유망기업은 장기·고액보증이라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까지 보증지원 - 성과가 낮은 기업은 분할해지 약정을 체결하여 3~5년 이내 분할 해지 * 해지 미이행시 가산보증료 0.3% 부과 ◦ 한계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실위험 저축정도에 따라 보증전액 회수 또는 20%이상 보증 감축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장기고액보증비중(%) : (09) 48.3 → (10) 45.6</div> <p><input type="checkbox"/>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KPI) 반영 등을 통한 감축('1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상반기 영업점 성과평가기준 반영을 통해 장기·고액보증 감축 지속 추진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장기·고액보증에 대한 penalty 강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증구조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보증료 부과기준 강화 등을 통해 보증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상시 보증구조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시 보증지원 이후의 경영성과와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연장조건을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낮은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해지를 유도하고 만기연장을 제한하여 보증기업의 자발적인 성과 향상을 유도 □ 보증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상시적인 사후관리시스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업안정성 취약기업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 실시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원기준을 완화한 보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현장 확인 위주의 선제적인 사후관리 실시 □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목표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보증규모 축소 및 경기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변동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리스크 목표관리에 반영 ◦ 단위 영업점별 리스크 목표관리 차등화 및 신규보증리스크 허용한도 설정·관리 등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실시 ◦ 리스크 변동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div data-bbox="754 412 1474 994"> <input type="checkbox"/> High-Risk 상채를 위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자산배분에 의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보증자산의 질적구조 개선 도모 ○ High-Risk 보증과 Low-Risk 보증의 적정 운용을 통한 리스크 분산효과 제고 ○ 기금 특화·전문화를 위한 중점지원부문 및 핵심분야별 세부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상쇄효과 도모 </div> <div data-bbox="754 1061 1474 1120"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 보증사고율(%) : (08)6.1 → (09)4.3 → (10)4.7 </div> <div data-bbox="754 1218 1066 1263" style="margin-top: 20px;"> <향후 추진계획> </div> <div data-bbox="754 1321 1474 1912"> <input type="checkbox"/> 보증지원 성과에 따른 만기연장 차별화 조치 지속 추진 <input type="checkbox"/> 부실예방을 위한 시스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input type="checkbox"/>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리스크 목표관리 지속 추진 <input type="checkbox"/> 전략적 포트폴리오와 연계한 영업점별 리스크 목표관리 강화 </div>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4.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창업기업에 집중 지원</p> <p>◦ '10년도 신규보증 지원금액의 44.1%(업체수 기준 56.8%)를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지원하는 등 창업분야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p> <p>* 기술창업기업 신규보증 금액 비중(%) : (09) 40.3 → (10) 44.1</p> <p>* 기술창업기업 신규보증 업체수 비중(%) : (09) 54.1 → (10) 56.8</p> <p><input type="checkbox"/> 보증지원과 함께 다양한 기술창업기업 발굴 노력을 병행</p> <p>◦ 새싹기업 찾기 캠페인 전개로 매년 5천개 이상의 초기기업 발굴·지원</p> <p>◦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대핵심 창업 육성분야* 선정 및 집중 지원함으로써 창업열기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p> <p>*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4050, 1인창조기업</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2년까지 신규보증의 50% 이상을 기술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p> <p>* 기술창업기업 신규보증 비중(%) : (10)44.1 → (11 계획) 47.5 → (12 계획) 50.0</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5. 구상채권 회수율 및 특수채권 회수율이 낮으므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절차 표준화를 통해 구상권 회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회수자원의 저변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 및 회수자원에 대한 우선적 회수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등급분류 제도를 활용한 회수활동 수행 — 예상구상실익산정 시스템에 기초한 실익있는 부동산의 우선적 강제집행절차 진행 □ 은닉재산 발굴을 통한 회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를 활용한 채무자 은닉재산 파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도중 건축행정정보를 신규로 확보 — 수개의 공공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재외국민 및 주민번호변경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 ◦ 은닉재산에 대한 회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도피 채무자 유형별 대처방안 마련 및 은닉재산 발굴을 통한 회수활동 강화 □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채무상환 지원제도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감면/분할상환 제도 등 채무상환유인제도 개선 ◦ 채무상환 유인을 위한 상환조건 등 완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특수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반의 활동성과 경쟁력 강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회수활동 수행을 위해 부족인력 충원 ◦ 추심반의 활동성 제고를 위한 실적 관리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기본목표 부여, 실적부진자 퇴출제도 도입 및 채무자 배정기준 설정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회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하는 특수채권 규모를 감안한 추심위탁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09.7월) 3조5천억 → (4차)(11.1월) 4조 ◦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6개중 실적부진 3개 추심회사와 계약 해지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도피 채무자에 대한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 등의 지속적인 활용 강화 ◦ 공공정보활용 강화로 은닉재산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채무자 재산 추적 등 □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스템 개선, 외부추심위임 확대 등 ◦ 추심담당에 대한 실적중시 경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추심반, 외부추심위탁사 등 □ 임의상환 지원을 위한 채무상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원금감면 등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6. 외부 신용정보기관에 특수채권을 위탁함에 따른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위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지 불법추심행위 여부를 평가에 반영('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평가 총점의 20%를 불법추심, 민원 항목으로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식자료 수령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간담회 개최하여 실무책임자 대상 불법추심, 민원 관련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업무가이드라인 등 불법추심관련 자료 안내 등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 실무자에 대한 면담 교육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추심으로 인한 감독기관 제재 내역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무자에 대한 면담교육 병행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7. 초단기 보증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증심사 제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바, 보증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 | <p><처리결과></p> <div><div><input type="checkbox"/>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사업평가등급 산출 모형 개선</div><div><div>◦ 기술평가모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KTRS 평가지표의 계량화·객관화('11.1월)</div><div><div>—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관적 지표 등은 통합·제거</div></div></div></div> <table><tr><th>구 분</th><th>개선전</th><th>개선후</th></tr><tr><td>평가지표</td><td>45개 지표</td><td>34개 지표</td></tr><tr><td>객관화지표율</td><td>55.5%</td><td>61.8%</td></tr><tr><td>계량화지표율</td><td>31.1%</td><td>35.3%</td></tr></table> <div><div><input type="checkbox"/> 기업선별 기능 향상을 위해 보증취급시 사전 필터링 시스템 강화</div><div><div>◦ 평가자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지셔닝 시스템” 도입('10.12월)</div><div><div>— 평가결과의 그룹(평가기업이 속한 그룹)내 상대적 위치비교를 통해 평가자간 평가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신뢰성 확보</div></div></div><div><div>◦ 보증취급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심사항목 사전체크 기능의 보증리스크 사전점검 강화('10.10월)</div><div><div>— 사전점검 대상에서 생략하였던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특례보증 적용 보증도 사전점검대상으로 운영</div><div>— 심층조사, 심사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점검 항목으로 운영</div></div></div></div> | 구 분 | 개선전 | 개선후 | 평가지표 | 45개 지표 | 34개 지표 | 객관화지표율 | 55.5% | 61.8% | 계량화지표율 | 31.1% | 35.3% |
| 구 분 | 개선전 | 개선후 | | | | | | | | | | | |
| 평가지표 | 45개 지표 | 34개 지표 | | | | | | | | | | | |
| 객관화지표율 | 55.5% | 61.8% | | | | | | | | | | | |
| 계량화지표율 | 31.1% | 35.3%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p>◦ 기술평가보증의 보조 심사지표인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강화(‘10.7월)</p> <p>— 사고유의성이 높은 재무지표로 구성된 부실위험 검토 항목 확대</p> <table border="1" data-bbox="756 669 1473 1299"> <thead> <tr> <th data-bbox="756 669 1090 725">기 존 (3개)</th><th data-bbox="1090 669 1473 725">확 대 (5개)</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56 725 1090 1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기업 - 최근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기업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p><신규 추가></p> <p><신규 추가></p> </td><td data-bbox="1090 725 1473 1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최근 2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40%이상 감소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 최근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의 순현금흐름이 (-) </td></tr> </tbody> </table>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지속적으로 기술평가 및 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증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p> <p>◦ 기술평가모형의 주기적·체계적 검증을 통해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 신뢰성 확보 노력</p> <p>◦ 보증심사의 보조지표에 대하여 주기적인 사고유의성 검증을 통해 기업 선별력 강화</p> | 기 존 (3개) | 확 대 (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기업 - 최근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기업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p><신규 추가></p> <p><신규 추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최근 2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40%이상 감소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 최근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의 순현금흐름이 (-) |
| 기 존 (3개) | 확 대 (5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기업 - 최근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기업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p><신규 추가></p> <p><신규 추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최근 2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40%이상 감소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 최근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의 순현금흐름이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8.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화 협약을 개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증기관의 업무영역특화는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05년말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양 기관이 보증업무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복보증 제한을 추진 ◦ 중복보증 제한조치를 약 5년간 운영해온 결과, 보증기관별 업무영역 구분은 시장정착단계 — 중복보증 완화는 보증기관 특화·전문화 정책의 일관성 훼손과 시장혼란 초래가 우려됨에 따라 업무영역 구분은 지속 추진 필요 <p>* 중복보증잔액(%) : (05) 52.9 → (09) 10.5 → (10) 9.5</p> <p>* 중복보증신규(%) : (05) 34.6 → (09) 1.9 → (10) 0.8</p> <p><input type="checkbox"/> 보증업무 특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은 기보·신보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이후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한 개 보증기관만 취급 가능한 보증상품* 등에 대해서는 중복보증을 허용 <p>* (기보) 정책자금 One- Stop보증, R&D평가 특례보증,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복보증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p> <p>◦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양기관이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장치 마련 예정</p> |
| <p>9. 신규 창업기업을 위한 R&D평가 특례보증의 연대보증책임 경감 및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지원 체계를 보완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R&D평가 특례보증 취급시 연대보증 책임경감 제도 시행('10.10월)</p> <p>◦ 벤처기업으로 요건 충족기업에 대해서는 입보대상자를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에 한정하고 부분연대보증으로 운용</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단계 : 개발단계 ▶ R&D평가표에 의한 등급 : A등급 이상 ▶ 보증금액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억원이하 <p>— 부분연대보증 책임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2분의 1을 한도로 연대보증 책임 부담 </div> <p><input type="checkbox"/> 재도전기업주에 대한 재기지원보증 도입('10.10월)</p> <p>◦ 기금에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 실패한 기업주에 대해서 재기지원보증 지원</p> <p>— 구상채권 변제를 위한 구상채권회수보증과 사업재기 자금용도의 신규보증 지원</p> <p>◦ 기금에 대위변제 발생책임이 있는 기업주인</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점을 감안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p> <p>— 회계, 법률, 기술 관련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재기심의위원회에서 도덕성, 재기 가능성 및 성장잠재력 등을 심의하여 지원</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재기지원보증의 지원실적 확인 및 수시 점검하여 필요시 제도 개선</p> |
| <p>10.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증지원의 수도권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우대지원 중</p> <p>◦ '12년까지 지방소재 중소기업 신규보증 비중을 51% 이상으로 확대</p> <p>* 지방중소기업 신규보증 비중(%) :</p> <p>(09) 46 → (10) 47.8 → (11계획) 49 → (12계획) 51</p> <p><input type="checkbox"/>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지원 제도 운용</p> <p>◦ 지역전략산업 지원제도 개선</p> <p>-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업종 추가 등</p> <p>◦ 지방기술유망기업 지원확대</p> <p>- 선정대상 확대(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 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료감면 확대 (0.2% ~ 0.3% → 0.3% 감면) 등</p> <p>◦ 지방이전 중소기업 우대</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 ◦ 지방소재 영업점의 목표 상한선 상향 조정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에 Feed-back하는 등 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p> |
| <p>11. 기술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보증을 지원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증되어 홍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바, 벤처기업 인증 제도를 개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기술성 과락제”를 도입(10.4월)하여 벤처확인 평가시 기술성 심사요건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전)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일 경우 벤처확인 가능 <p>→ (변경후)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기술성부문 배점의 60%이상 득점하지 못할 경우 벤처확인 배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중기청과 공동으로 벤처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별 벤처인증제도 정비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중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2.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등 경영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인력의 활용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제도 개선 및 전문 컨설팅 활성화 방안 마련중 ('11년 상반기 시행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특례보증 지원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확대 ◦ 외부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 외부 컨설턴트 Pool 구성 예정 |
| <p>13. 기보 임직원이 보증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증기업 주식취득 금지 지침 제정('10.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업 주식취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업의 상장·비상장(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 포함) 여부에 불구하고 직원의 보증기업 주식취득 행위 금지 ◦ 보증기업 주식취득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 지원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보증기업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 ◦ 위반직원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엄중 문책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지속적인 주식취득 실태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실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직원의 주식취득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 실시 |

한국 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대우조선해양 관련 | |
| 1-1)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계열사 헐값매각, 비자금 조성의혹 및 특정 협력사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대우조선해양은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규상 당행의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 및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p> <p>○ 당행은 대우조선해양과 매년 체결하는 MOU를 통해 동사 경영진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영관리를 실시</p> <p><향후 추진계획></p> <p>□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 임면 등 상법상 허용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p> |
| 1-2)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여 독립회사로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 대우조선해양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책임있는 주체에게 산은 및 KAMCO 보유 주식 전량 매각코자 함</p> <p>○ 매각대금 극대화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매각방식을 강구할 계획</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 매각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임</p> <p>○ 향후 국내 M&A시장 및 제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공고 시기 결정</p> |
| <p>2. 네오세미테크 관련, KDB글로벌스타 선정이 개인 등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분식회계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토록 할 것</p> | <p><처리결과></p> <p>□ KDB Global Star 선정의 대외적 상징성과 본연의 운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선정 심사요건 강화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p> <p>○ 「KDB Global Star 운용기준」 개정 ('1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산은 기술평가원 팀장을 선정위원으로 추가 - 해지사유에 우회상장, 인수합병(M&A) 진행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회계분식 등 회계투명도가 낮은 경우 추가 <p>○ 「종합재무분석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회계투명성 및 이상징후에 대한 시스템적인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Star 대상기업 선정 전·후 회계분식 및 부실화가능성에 대한 정기 점검 시행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종합재무분석시스템 : 기업별 3개년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재무이상치 추출을 통해 분석 및 부실화가능성을 추정하는 시스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종합재무분석시스템」 Up-grade 및 현장 점검 강화</p> <p>○ 분석대상 계정과목 확대(무형자산 및 파생상품 항목 신설 등), 산업별 평가 기준수치 Update 등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p> <p>○ 필요시 선정 전·후 경영진 면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무제표 및 시스템 분석의 현실적 한계 보완</p> |
| <p>3.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신 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점포 신설 등 수신영업채널 확대</p> <p>○ 서울, 수도권 등 8개 점포 신설</p> <p>○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개시 및 확대</p> <p><input type="checkbox"/>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p> <p>○ 컨설팅서비스 연계 CEO Accounts, 인터넷 전용예금 등 특화상품 개발</p> <p>○ 급여계좌 유치를 위한 KDB Dream 자산관리통장 출시</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점포신설 등 영업망 확충 및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적 점포 신설 ○ 다이렉트뱅킹 실시 및 타행 업무제휴 강화 <input type="checkbox"/> 거액고객 중심 개인예수금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상품개발 및 자산관리서비스 차별화로 거액고객 확대 ○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및 제휴 마케팅 강화 <input type="checkbox"/> Relationship 강화로 법인예수금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거래처에 대한 공동마케팅 실시 ○ 경제·금융세미나 개최 등 유대 강화 |
| <p>4. 중소기업지원 관련,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은 줄어들고 대기업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특별지원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시설자금 설정 및 금리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략부문에 △0.5%P 금리우대 ○ 중소기업 지원 각종 우대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5%P 까지 금리우대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취담보 인정비율 우대(50%→70%) - 체질개선 등을 위한 무료 사전컨설팅 - KoFC 전대자금 취급 확대 <p>□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연장 시행</p> <p>○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Fast-Track프로그램’ 적극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10월 이후 10.12말까지 123개 기업에 1조 7,812억원 지원 <p><향후 추진계획></p> <p>□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핵심고객으로 설정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 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중소기업 자금공급 비중의 확대를 위해 노력 지속</p> |
| <p>5.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으나, 워크아웃 업체의 하청업체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9월 30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p> | <p><처리결과></p> <p>□ 관련업체(남광토건) 앞 채권금융기관 공동 신규자금 1,728억원(당행 291억원) 및 보증 702억원 지원 완료</p> <p>○ 본건은 채권금융기관들이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에는 공감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간 지원금액의 배분방법 및 지원참여기관 등에</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자금지원 이행이 늦어졌던 것으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10.11.2일자로 신규자금 지원을 완료함</p> |

중 소 기 업 은 행

10. 중소기업은행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에 반하여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은 축소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다만, 2008년 이후 지원 규모가 감소 →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던 것이 원인 <p><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공급현황 ></p> <p>(단위 : 억원)</p> <table><tr><th rowspan="2">2006년</th><th rowspan="2">2007년</th><th rowspan="2">2008년</th><th rowspan="2">2009년</th><th colspan="2">2010년</th></tr><tr><th>계</th><th>획 실 적</th></tr><tr><td>72,069</td><td>85,268</td><td>90,647</td><td>87,370</td><td>80,000</td><td>84,420</td></tr></table>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비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계 | 획 실 적 | 72,069 | 85,268 | 90,647 | 87,370 | 80,000 | 84,420 |
| 2006년 | 2007년 | |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 | | | |
| | | 계 | 획 실 적 | | | | | | | | | | | | |
| 72,069 | 85,268 | 90,647 | 87,370 | 80,000 | 84,420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 당행은 지방(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꾸준히 자금을 공급,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10년말 현재 33.5%로 '09년말 33.1% 대비 0.4%p 증가)</p> <p>(단위 : 억원, %)</p> <table border="1"> <tr> <th rowspan="2">당 행</th> <th colspan="2">2008년말</th> <th colspan="2">2009년말</th> <th colspan="2">2010년말</th> </tr> <tr> <th></th> <th>구성비</th> <th></th> <th>구성비</th> <th></th> <th>구성비</th> </tr> <tr> <td>수도권</td> <td>528,142</td> <td>67.3</td> <td>589,091</td> <td>66.9</td> <td>619,105</td> <td>66.5</td> </tr> <tr> <td>비수도권</td> <td>256,864</td> <td>32.7</td> <td>291,001</td> <td>33.1</td> <td>311,892</td> <td>33.5</td> </tr> <tr> <td>합 계</td> <td>785,006</td> <td>100.0</td> <td>880,092</td> <td>100.0</td> <td>930,997</td> <td>100.0</td> </tr> </table> <p>○ 당행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꾸준히 늘여왔으나 다음의 이유로 인해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수요규모)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많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큼 - (자금수급) 지방의 예금비중은 23.9%에 불과(수도권 76.1%), 지역별 자금 수급상의 어려움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조달자금을 지방에 공여하는 상황 <p><향후 추진계획></p> <p>○ 당행은 그간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여신심사센터 설치·운영) 지방특성을 반영, 신속한 여신지원을 도모 <p>* 지방여신심사센터 : 충청, 부산, 대구, 호남</p> | 당 행 | 2008년말 | | 2009년말 | | 2010년말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수도권 | 528,142 | 67.3 | 589,091 | 66.9 | 619,105 | 66.5 | 비수도권 | 256,864 | 32.7 | 291,001 | 33.1 | 311,892 | 33.5 | 합 계 | 785,006 | 100.0 | 880,092 | 100.0 | 930,997 | 100.0 |
| 당 행 | 2008년말 | | 2009년말 | | 2010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도권 | 528,142 | 67.3 | 589,091 | 66.9 | 619,105 | 6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수도권 | 256,864 | 32.7 | 291,001 | 33.1 | 311,892 |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785,006 | 100.0 | 880,092 | 100.0 | 930,997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지방중소기업전용상품개발) 지방중소기업 및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내고장기업대출Ⅱ」 개발·판매('10.2.1. 출시) * 지원실적('10년말) : 2,194건, 9,122억원</div> <div>- (지자체협약대출 확대) 지자체 추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 (단위 : 억원, 개)</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2008년말</th><th colspan="3">2009년말</th><th colspan="3">2010년말</th></tr><tr><th>기관수</th><th>공 급</th><th>잔 액</th><th>기관수</th><th>공 급</th><th>잔 액</th><th>기관수</th><th>공 급</th><th>잔 액</th></tr><tr><td>수 도 권</td><td>19</td><td>6,980</td><td>11,416</td><td>22</td><td>7,794</td><td>15,131</td><td>24</td><td>7,792</td><td>16,345</td></tr><tr><td>비수도권</td><td>48</td><td>5,580</td><td>11,444</td><td>51</td><td>10,284</td><td>15,499</td><td>52</td><td>7,528</td><td>14,671</td></tr><tr><td>기 타</td><td>2</td><td>18</td><td>56</td><td>2</td><td></td><td>39</td><td>2</td><td>-</td><td>24</td></tr><tr><td>계</td><td>69</td><td>12,528</td><td>22,916</td><td>75</td><td>18,078</td><td>30,669</td><td>78</td><td>15,320</td><td>31,040</td></tr></table> <div>주) 기타는 자치단체 이외 기관 :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div> <div>- (유망중소기업 선정우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10점 (100점 만점)을 가점 (단위 : 억원, 개)</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수도권</th><th colspan="2">비수도권</th><th colspan="2">계</th></tr><tr><th>업체수</th><th>금액</th><th>업체수</th><th>금 액</th><th>업체수</th><th>금액</th></tr><tr><td>누 계</td><td>87</td><td>2,622</td><td>101</td><td>2,199</td><td>188</td><td>4,821</td></tr><tr><td>'09년중</td><td>47</td><td>1,436</td><td>58</td><td>1,088</td><td>105</td><td>2,524</td></tr><tr><td>'10년중</td><td>40</td><td>1,186</td><td>43</td><td>1,111</td><td>83</td><td>2,297</td></tr></table> <div>○ 앞으로도 우대정책 개발, 지자체협약대출의 지속 확대, 지방중소기업 전용상품 개발, 지방공업단지내 점포신설 등 지방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div> | 구 분 | 2008년말 | | | 2009년말 | | | 2010년말 | |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수 도 권 | 19 | 6,980 | 11,416 | 22 | 7,794 | 15,131 | 24 | 7,792 | 16,345 | 비수도권 | 48 | 5,580 | 11,444 | 51 | 10,284 | 15,499 | 52 | 7,528 | 14,671 | 기 타 | 2 | 18 | 56 | 2 | | 39 | 2 | - | 24 | 계 | 69 | 12,528 | 22,916 | 75 | 18,078 | 30,669 | 78 | 15,320 | 31,040 | 구 분 | 수도권 | | 비수도권 | | 계 |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 액 | 업체수 | 금액 | 누 계 | 87 | 2,622 | 101 | 2,199 | 188 | 4,821 | '09년중 | 47 | 1,436 | 58 | 1,088 | 105 | 2,524 | '10년중 | 40 | 1,186 | 43 | 1,111 | 83 | 2,297 |
| 구 분 | 2008년말 | | | 2009년말 | | | 2010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도 권 | 19 | 6,980 | 11,416 | 22 | 7,794 | 15,131 | 24 | 7,792 | 16,3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수도권 | 48 | 5,580 | 11,444 | 51 | 10,284 | 15,499 | 52 | 7,528 | 14,6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2 | 18 | 56 | 2 | | 39 | 2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69 | 12,528 | 22,916 | 75 | 18,078 | 30,669 | 78 | 15,320 | 31,0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수도권 | | 비수도권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 액 | 업체수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 계 | 87 | 2,622 | 101 | 2,199 | 188 | 4,8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년중 | 47 | 1,436 | 58 | 1,088 | 105 | 2,5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년중 | 40 | 1,186 | 43 | 1,111 | 83 | 2,2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의 비중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할 것 | <p><처리결과></p> <p>□ 신용대출 및 보증부대출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말 현재 신용대출 비율은 39.9%로 전년말 대비 1.1%p 증가○ '10년말 현재 보증부대출 비율은 23.0%로 전년말 대비 0.5%p 감소- 보증부대출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보증잔액은 '10년말 현재 21조 3,842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602억원 증가 <p>(단위 : 억원, %)</p>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07년말</th><th colspan="2">2008년말</th><th colspan="2">2009년말</th><th colspan="2">2010년말</th></tr><tr><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r><tr><td>담 보</td><td>300,869</td><td>43.9</td><td>331,964</td><td>42.3</td><td>331,729</td><td>37.7</td><td>345,231</td><td>37.1</td></tr><tr><td>신용보증</td><td>125,321</td><td>18.3</td><td>146,832</td><td>18.7</td><td>207,240</td><td>23.5</td><td>213,842</td><td>23.0</td></tr><tr><td>신 용</td><td>259,444</td><td>37.8</td><td>306,210</td><td>39.0</td><td>341,123</td><td>38.8</td><td>371,924</td><td>39.9</td></tr><tr><td>계</td><td>685,634</td><td>100.0</td><td>785,006</td><td>100.0</td><td>880,092</td><td>100.0</td><td>980,997</td><td>100.0</td></tr></table> <p>주) 중소기업대출 기준(투자, 대금금 제외)</p> <p>□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행은 신용도가 다소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왔음- B~BB등급 이하가 33.1%, CCC등급 이하 및 규모가 작은 소기업과 미평가 기업이 18.0%로 신용도 미흡 기업이 51.1%를 점유 | 구 분 | 2007년말 | | 2008년말 | | 2009년말 | | 2010년말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담 보 | 300,869 | 43.9 | 331,964 | 42.3 | 331,729 | 37.7 | 345,231 | 37.1 | 신용보증 | 125,321 | 18.3 | 146,832 | 18.7 | 207,240 | 23.5 | 213,842 | 23.0 | 신 용 | 259,444 | 37.8 | 306,210 | 39.0 | 341,123 | 38.8 | 371,924 | 39.9 | 계 | 685,634 | 100.0 | 785,006 | 100.0 | 880,092 | 100.0 | 980,997 | 100.0 |
| 구 분 | 2007년말 | | 2008년말 | | 2009년말 | | 2010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 보 | 300,869 | 43.9 | 331,964 | 42.3 | 331,729 | 37.7 | 345,231 | 3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보증 | 125,321 | 18.3 | 146,832 | 18.7 | 207,240 | 23.5 | 213,842 | 2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용 | 259,444 | 37.8 | 306,210 | 39.0 | 341,123 | 38.8 | 371,924 | 3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685,634 | 100.0 | 785,006 | 100.0 | 880,092 | 100.0 | 980,997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신용등급별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원)</div>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09년말</th><th colspan="2">2010년말</th><th colspan="2">전년대비</th></tr><tr><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r><tr><td rowspan="3">기업 평가 모형</td><td>BBB등급 이상</td><td>442,584</td><td>50.3</td><td>455,349</td><td>48.9</td><td>12,765</td><td>△1.4</td></tr><tr><td>B~BB</td><td>303,284</td><td>34.5</td><td>308,358</td><td>33.1</td><td>5,074</td><td>△1.4</td></tr><tr><td>CCC등급 이하</td><td>27,298</td><td>3.1</td><td>45,741</td><td>4.9</td><td>18,443</td><td>1.8</td></tr><tr><td colspan="2">소매평가모형</td><td>70,469</td><td>8.0</td><td>92,259</td><td>9.9</td><td>21,790</td><td>1.9</td></tr><tr><td colspan="2">미등급</td><td>36,457</td><td>4.1</td><td>29,290</td><td>3.2</td><td>△7,167</td><td>△0.9</td></tr><tr><td colspan="2">합 계</td><td>880,092</td><td>100.0</td><td>930,997</td><td>100.0</td><td>50,905</td><td>-</td></tr></table> <div>주) 중소기업대출 기준(외화포함, 투자/대금급/신탁 제외)</div> <div>□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이유</div> <div><div>○ 당행은 시설자금대출 비중*이 높아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div><div>* 당행의 ‘10.6월말 현재 장기 시설자금대출 비중은 29.6%(4대 시중은행 평균 : 25.1%)를 차지</div><div>○ 또한 시중은행이 지원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Risk 관리 차원에서 보증서담보를 취득, 신용을 보강하여 대출을 지원</div><div>* 종업원수 20인 이하 영세소기업에 지원 현황 - 대출비중 : ‘08년말 58.9% → ‘09년말 60.9% → ‘10년말 61.9% - 거래기업수 : ‘08년말 90.6% → ‘09년말 91.6% → ‘10년말 91.9%</div><div>○ 아울러 ‘10년중 중기대출 순증의 60.5%가 신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당행의 신용대출 취급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div></div> | 구 분 | | 2009년말 | | 2010년말 | | 전년대비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기업 평가 모형 | BBB등급 이상 | 442,584 | 50.3 | 455,349 | 48.9 | 12,765 | △1.4 | B~BB | 303,284 | 34.5 | 308,358 | 33.1 | 5,074 | △1.4 | CCC등급 이하 | 27,298 | 3.1 | 45,741 | 4.9 | 18,443 | 1.8 | 소매평가모형 | | 70,469 | 8.0 | 92,259 | 9.9 | 21,790 | 1.9 | 미등급 | | 36,457 | 4.1 | 29,290 | 3.2 | △7,167 | △0.9 | 합 계 | | 880,092 | 100.0 | 930,997 | 100.0 | 50,905 | - |
| 구 분 | | | | 2009년말 | | 2010년말 | | 전년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평가 모형 | BBB등급 이상 | 442,584 | 50.3 | 455,349 | 48.9 | 12,765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B | 303,284 | 34.5 | 308,358 | 33.1 | 5,074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CC등급 이하 | 27,298 | 3.1 | 45,741 | 4.9 | 18,443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매평가모형 | | 70,469 | 8.0 | 92,259 | 9.9 | 21,790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등급 | | 36,457 | 4.1 | 29,290 | 3.2 | △7,167 | △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880,092 | 100.0 | 930,997 | 100.0 | 50,9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 신용대출 확대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심사기법 제고 및 심사 전문인력 적극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용상태, 기술력, 성장성 및 미래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 지원 관행 정착유도 ○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신제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차주에 대하여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용대출 기반 확충 - Credit Line을 설정하여 동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신용을 공여해주는 「기업여신한도제」 운용 ○ 「신용대출」 제도 개발 및 확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어음[*](중소Royal어음, 중소골드어음 포함)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할인(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실적('10년말) : 1,287개 기업, 3조 2,457억원 - 「우선지원기업[*]」 및 「패밀리기업」 등 신용대출 우대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실적('10년말) : 1,111개 기업, 5조 8,132억원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보증부대출 확대방안</div> <div><div>○ 보증기금 특별출연 : 1,500억원(신보 1,000억원 vs 기보 500억원)</div><div>- 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 및 보험한도 : 5.3조원(협약보증 1.2조, 협약보험 0.3조, 보증료지원 3.8조) 발생 → 7.3조원의 보증부대출 여력 확보</div><div>○ 「IBK 보증협약 기업대출」 개발 · 판매(2011.2.11. 시행)</div><div>- 특별출연 보증부대출 전용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 확대 추진</div></div> <div>□ 신용도 미흡기업 지원방안</div> <div><div>○ 신용도가 미흡한 창업기업,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에 노력</div><div>< 신용도 미흡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현황 > (단위 : 억원)</div><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2009년</th><th colspan="3">2010년</th></tr><tr><th>계 획</th><th>실 적</th><th>달성률</th></tr><tr><td>창업기업자금</td><td>51,370</td><td>28,000</td><td>68,981</td><td>246.4</td></tr><tr><td>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td><td>56,405</td><td>32,000</td><td>71,597</td><td>223.7</td></tr><tr><td>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td><td>62,735</td><td>45,000</td><td>90,483</td><td>201.1</td></tr></table></div> | 구 분 | 2009년 | 2010년 | | | 계 획 | 실 적 | 달성률 | 창업기업자금 | 51,370 | 28,000 | 68,981 | 246.4 |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 56,405 | 32,000 | 71,597 | 223.7 |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 62,735 | 45,000 | 90,483 | 201.1 |
| 구 분 | 2009년 | | | 20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획 | 실 적 | 달성률 | | | | | | | | | | | | | | | | | | | | |
| 창업기업자금 | 51,370 | 28,000 | 68,981 | 246.4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 56,405 | 32,000 | 71,597 | 223.7 | | | | | | |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 62,735 | 45,000 | 90,483 | 201.1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4. 민영화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전문이라는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의 안정화”는 기은 민영화 추진의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기은은 중기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기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08.9월) 이후 '10년말 까지 은행권 중기대출 증가분인 19.3조원의 91%에 해당하는 17.6조원을 공급 ○ 중기 정책금융체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공사의 On-lending 확대에 적극 협조 ○ 금융권 최초의 대·중기 상생모델을 구현하여 동반성장의 가교 역할 수행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중기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가 기은 선진화의 대전제라는 인식하에 중기 자금난 해소를 위한 역할을 지속 추진</p> <p><input type="checkbox"/> 기은은 중소기업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지속 성장·발전하는 형태의 민영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금융 선도은행(Asia Super Regional Bank)으로 성장·발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5.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별도의 계정 관리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기업구분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계정 분리 작업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분류코드 신설 등 7월까지 완료 예정 * 2011년 산업발전법안 개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시행 시 관련내용 반영 예정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와 자금지원에 관한 MOU 체결 (목표 : 1조원) ○ 지식경제부의 “World-Class 300” 프로젝트에 지원기관으로 참여 ○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초과한 중견기업에는 여신전결권, 여신금리 등 우대기준 운용 ○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온렌딩” 대출상품 판매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특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중견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6. '잡월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잡월드를 통한 범국민적 일자리창출 동참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업종, 지역 등 구인기업 · 구직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추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특성화고등학교 등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해 언론보도 와 채용인식 조사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와의 공동추진을 통해 잡월드 구인기업 특집기사 보도 ○ 특성화고교생에 대한 중소기업 채용인식 조사 실시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잡월드 채용박람회 추진시 지역별, 테마별 유관기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산업 잡월드 채용박람회 (‘11.3.3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천시, 부천대학,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11년 총 8회 예정 <input type="checkbox"/> 특성화고교생의 중소기업 취업활성화 를 위한 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 기부금 지원 등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7. 창업기업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행은 창업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 <p><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 (단위 : 개, 억원)</p> <table><tr><td>구 분</td><td>2008년</td><td>2009년</td><td>2010년</td></tr><tr><td>업체수</td><td>20,751</td><td>31,639</td><td>42,627</td></tr><tr><td>공급액</td><td>28,750</td><td>51,370</td><td>68,981</td></tr></table> <p>주) 설립 3년 이내 중기대출</p>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의 확대와 아울러 「창업IBK Challenge 1,000 프로젝트」, 보증기관과 연계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 기반 확대 및 이들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 <p>※ 창업기업 지원 세부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지속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노력○ (「창업IBK Challenge 1,000 프로젝트」 추진) 예비창업자를 위한 종합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IBK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영업점 창업서포터 운영(본점과 600여개 전국 영업점에 창업전용 상담창구를 설치)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업체수 | 20,751 | 31,639 | 42,627 | 공급액 | 28,750 | 51,370 | 68,981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 | | | | | | |
| 업체수 | 20,751 | 31,639 | 42,627 | | | | | | | | | | |
| 공급액 | 28,750 | 51,370 | 68,981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관과 연계 창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IBK창업대출’ 및 ‘4050세대 창업 자금’ 지원 * ‘10년말 현재 IBK창업대출은 2,236건, 1,347억원, 4050세대 창업은 232건, 165억원 지원 ○ (지역보증재단과의 특화지원 프로 그램 운용) 「스마트론」, 「나들가게 육성자금」 등 지역보증 재단별 특화된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10년말 현재 스마트론 447건, 78억원, 나들가게 육성자금 1,008건, 382억원 지원 ○ (창업기업 대상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운용)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 한 신용평가 기준을 세분화(「소기업 신청평점표」 및 「소기업 행동평점표」) 하여 신용대출 지원 활성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8. PF대출 관련 심사시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능력을 강화하고, 대출 이후 사후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 본부 소속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53명, 금융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 인력의 조기 전력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7명): 3월 교육 완료(주간8일) ○ 기존 인력 정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46명): 4월부터 총 4회차에 걸쳐 교육 진행 할 예정(주간8일) (현재 1회차 교육 진행 중)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핵심요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계약직과 공동업무를 부여, 업무능력 흡수 및 향상 ○ 업무지식 위주의 세미나 적극 참여 ○ 규정, 과거 딜 우수/실패 사례 등의 실무교육으로 사후관리에 만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9. 기업은행 해외지점의 연체율이 높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div><처리결과></div> <div><div><div><input type="checkbox"/> 연체감축을 위한 총력조치 이행</div><div><div><div>○ 신속한 법적절차 추진</div><div>- 담보물 조기매각과 부실여신 상각 조기집행 추진</div></div><div><div>○ 잠재 부실기업 사전적 관리강화 등</div><div>- 업체별 영업현황, 건전성 사전진단을 통해 경영애로 예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등 실시</div></div></div></div><div><div>※ 국외점포 연체감축 현황</div><table><tr><td>구 분</td><td>‘10. 10월</td><td>‘11. 2월</td><td>‘11. 3월</td></tr><tr><td>금 액</td><td>56.1백만불</td><td>47.9백만불</td><td>46.7백만불</td></tr><tr><td>연체율</td><td>3.81%</td><td>3.12%</td><td>3.09%</td></tr></table></div><div><div><input type="checkbox"/> 국외점포 영업구조 리모델링을 추진을 통한 건전자산 구조 구축</div><div><div><div>○ 결제업무 강화 및 Treasury & Trading 등 신규업무 도입, Trade Finance(외국환) 확대 등을 통한 영업구조 리모델링 추진으로 업무 확대 및 건전자산 구축 유도</div></div></div></div><div><향후 추진계획></div><div><div><input type="checkbox"/> Clean 자산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 연체감축 활동 추진</div><div><input type="checkbox"/> 영업구조 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업무확대로 국외점포의 수익력 강화</div></div></div> | 구 분 | ‘10. 10월 | ‘11. 2월 | ‘11. 3월 | 금 액 | 56.1백만불 | 47.9백만불 | 46.7백만불 | 연체율 | 3.81% | 3.12% | 3.09% |
| 구 분 | ‘10. 10월 | ‘11. 2월 | ‘11. 3월 | | | | | | | | | | |
| 금 액 | 56.1백만불 | 47.9백만불 | 46.7백만불 | | | | | | | | | | |
| 연체율 | 3.81% | 3.12% | 3.09% | | | | | | | | | | |

한국거래소

11. 한국거래소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대리운전비, 사설학원비, 연수 중 연차 보상비 지급 등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리운전비 지원대상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을 임원 및 업무상대방으로 한정 <p><input type="checkbox"/> 과도한 복지혜택 등 축소('10.12월 단협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생 사설학원비 지원 폐지 ○ 대학생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 경조사비 지원 폐지 ○ 동반부임자 사택관리비 지원 폐지 ○ 기념품 지급 횟수 및 금액 축소 ○ 주택자금대여 이자율 상향 조정 ○ 요양비 지원 항목 통폐합 및 한도 축소 ○ 유급휴가제도 통폐합 및 축소 |
| 2. 파다연봉 개선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수 삭감 등을 통한 연봉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도 전직원 임금총액 5% 삭감 * '08, '09년도 2년연속 임금 동결 ○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축소 ○ 연수자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폐지 ○ 장기연수자 경영평가성과금 지급 제외 |
| 3. 채용·승진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사차별 금지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및 모성보호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할당제 도입 및 장애인 인턴 채용 등으로 장애인 고용률 초과 달성 ○ '10년 채용시 신규 입사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 ○ 육아휴직 신청기간 확대 등 모성 보호 강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4.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기부 활성화 필요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체계적·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사업 전개 ○ KRX행복나눔봉사단 창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끝전 등 임직원 기부금으로 나눔펀드 조성 ○ KRX국민행복재단 출범 및 기금 출연(228억원)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 성실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X행복나눔봉사단 활성화로 지역사회 기여 ○ KRX국민행복재단 중심 전국적 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출연을 통해 대표재단으로 적극 육성 |
| 5.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및 선물연구소 등 부산설립 | |
| 5-1)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부산 접속장비설치 결정, 회원사와 협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사 대표(22개사)로 구성된 CIO협의회 (3회)와 쉐회원사 전산부서장 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거래소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10.11~'11.4)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1년내 가동예정이며, 추진 과정에서 회원사 CIO·부서장·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회원사간 형평성, 비용최소화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회원사들이 부산 IT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코스콤 등과 협의를 통해 공동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입지선정 경쟁을 없애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추진 중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5-2) 선물연구소 등 부산설립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R&D센터의 설립형태에 대해 부산시,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KRX, 금융투자업계 및 부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p> |
| 6. 임직원 가족 및 서울 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 필요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임직원 가족 부산 이전 관련 지원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동반 부임자에 대한 사택 지원 ○ 부산 본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 동반 부임자 문화교통비 지원 확대 |
| 7. 우회상장심사시 추정재무제표반영, 지정감사인제도 도입, 직원역량강화 등 우회상장제도 정비방안 마련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상장수준의 질적심사 도입 및 심사 대상 확대 등으로 우회상장 관리 강화 <p>*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10.12.1)</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사항의 홍보 및 모니터링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상장제도 안내 및 M&A시장 변화 등 시장효과 분석으로 지속적인 Feed-Back 수행 |
| 8. MSCI지수편입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MSCI 선진국지수 편입요건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단기원화차입 허용('10.11), 수시공시 영문서비스 제공('10.9) 등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성 개선 노력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투자자에 대한 한국시장 홍보 강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해외 기관투자자대상 설명회 및 면담·홍보 * JP모건 등 4개기관 면담, 동경 IR실시('11.3)</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투자자, MSCI 대상 지속적 홍보 실시</p>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자 의견수렴·제도개선 지속 추진</p> <p>※ MSCI의 영리를 위한 시장정보 이용은 분리 대응</p> |
| <p>9. ELW시장에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ELW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등과 공청회 등을 거쳐 'ELW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시행('10.11)</p> <p>○ (투자자 진입절차 강화) 신규투자자 별도 청약서 작성 및 ELW 교육이수 의무 부과 등</p> <p>○ (ELW 기초자산 제한) 기초자산 거래규모 기준 도입(유동성 높은 기초자산대상 ELW 발행 유도)</p> <p>○ (LP호가제출 의무 강화) LP호가제출 의무 기간을 최종거래일 5일전까지 확대</p> <p>○ (LP평가기준 강화) 의무이행도 평가항목의 세분화, 내재변동성 일관성 기준 추가 등</p> <p>○ (LP평가 조치 강화) LP평가 최하위등급의 제재 강화 및 평가결과의 공개범위 확대</p> <p>○ (내재변동성 실시간 공개) LP 내재변동성 내역 공개</p> <p>※ ELW시장 건전화 방안 시행 효과</p> <p>– 투자 과열의 안정화* 및 가격급등락 완화**</p> <p>* 일평균거래대금 감소 : (시행전) 2.1조원 → (시행후) 1.4조원</p> <p>** 이상거래적출 감소 : (시행전) 0.84건 → (시행후) 0.13건</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ELW시장 건전화 방안 시행효과 및 보완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 건전화 노력 추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10. 알고리즘거래에 따른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 | <div><처리결과></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알고리즘매매 효율적 수용 및 안정적 시장 관리를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 마련·시행*</div><div>* 회원사의 거래소 시스템 접속기준, 알고리즘매매 관련 시장감시기준, 착오매매방지 모범규준 개선 (금투협 공동) 등 단기방안 기시행</div><div>o 호가건수 증가에도 평균 주문처리 속도 유지 등 시스템 안정적 운영</div></div> <table><tr><td></td><td>10.12월</td><td>11.1월</td><td>11.2월</td></tr><tr><td>일평균호가건수<만건></td><td>875</td><td>1,047(19%↑)</td><td>1,176(12%↑)</td></tr><tr><td>평균처리속도<ms></td><td>32</td><td>33</td><td>35</td></tr></table> <div><향후계획></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안정적 시장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장기 제도·시스템적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div><div>o(제도 측면) 호가단위·매매수량단위 개선, DMA관리기준, 알고리즘호가 식별장치 도입 등</div><div>o(시스템 측면) 고빈도호가 모니터링 체계 및 데이터센터 구축, 시스템 성능·용량 확충, FIX 도입 등</div></div> | | 10.12월 | 11.1월 | 11.2월 | 일평균호가건수<만건> | 875 | 1,047(19%↑) | 1,176(12%↑) | 평균처리속도<ms> | 32 | 33 | 35 |
| | 10.12월 | 11.1월 | 11.2월 | | | | | | | | | | |
| 일평균호가건수<만건> | 875 | 1,047(19%↑) | 1,176(12%↑) | | | | | | | | | | |
| 평균처리속도<ms> | 32 | 33 | 35 | | | | | | | | | | |
| 11. IFRS도입과 관련하여 新회계기준 때문에 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 <div><처리결과></div> <div><div><input type="checkbox"/>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div><div>o '11~12년에는 별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상장·공시규정을 적용, 기존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최소화</div></div> <div><향후계획></div> <div><div><input type="checkbox"/> '13년부터 IFRS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상장·공시 관리시스템으로 전환</div><div>o IFRS를 완전 수용하여 상장·공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div></div>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12. 불법사설 거래소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코스콤/금감원과 협의 하여 개선방안 마련</p> | <p><처리결과(코스콤과 공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설 선물거래행위가 적발된 인터넷업체 (8개사)에 대해 정보제공중단 조치('10.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설 선물거래 관련 정보이용계약 업체 전무 <input type="checkbox"/> 시세정보이용자(273사)에 대해 사설거래 관련 정보제공금지요청 공문 발송('10.11월) <input type="checkbox"/> 불법사설거래업체 적발 및 예방활동(~'1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금감원에 관련 업체 명단 등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수사기관 이첩 o 사설 거래업체에 대해 불법행위 고지 및 무단정보이용금지 공문 발송 <p><향후계획(개선사항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보이용관리 강화(코스콤 공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정보이용 이전 단계(정보이용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정보 이용목적 및 업체 신뢰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업체 현장실사 - 사설 선물거래 관련 사례 및 정보이용자 준수 의무 등 계도활동 - 불법이용시 조치강화(즉시 정보제공 중단 시행 등) o 정보이용 단계(정보이용계약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준수여부 등 정보이용 실태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업체 계약 후 3월내 점검실시 <input type="checkbox"/> 금감원과 협조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불법 사설 선물거래 관련 수시 정보제공 등 업무협조 강화 |
| <p>13.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상장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 개선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기술평가를 통한 진입요건 완화 및 상장 폐지 특례적용, 소속부 관리 등 시장관리 개선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공청회 개최('10.12) 및 상장규정 개정('11.3.2) * 제도설명회('11.3월, 7회)</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상장활성화 제도 홍보 및 교육</p> <p>○ 상장안내 책자 발간 및 우량기업 방문유치</p> <p>○ 지역거점별 상장제도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p> |
| 14.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랩어카운트 관리자 등의 극초단타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마련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극초단타 거래 포함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 중</p> <p>○ 허수성호가 및 분할호가, 선행매매 등에 대한 감시기준 운영 중</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행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의 대응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新 감시기준 등 마련</p> <p>○ 극초단타(알고리즘)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발생 시 감리 실시</p> |
| 15. 충청지역 상장기업/투자자를 위한 대전사무소 설치 검토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충청지역 상장기업, 상장예비기업, 투자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있으며,</p> <p>○ 사무소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검토 중</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지역 상장기업에 대한 IR지원, 투자자 교육 등을 실시해나가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사무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16. (코스콤) 보드보안 제품의 구매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키보드 보안제품을 교체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구매과정에 대한 자체감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시스템에 적용된 제품의 구매과정은 회사의 감사절차(일상감사)에 따라 통제되었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구매과정에서 비리 또는 법에 저촉된 사실이 없어 추가적으로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결과에서 시정·처리를 요구하였으므로 자체감사 추진 예정 <input type="checkbox"/> 해당 키보드보안제품의 교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키보드보안제품의 해킹 가능성이 지적은 되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해킹되는 사례는 없었고 - 지적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된 버전으로 교체하였음 ※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2개의 외부기관 (공공기관, 정보보호전문대학원)에 의뢰하여 점검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보안 안전성이 현재 출시된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동일수준 이상으로 확인됨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구매과정에 대한 자체감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B 시스템에 적용된 제품의 구매과정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2/4분기)하고 결과를 보고 <input type="checkbox"/> 해당제품의 교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에도, 계속되는 해킹 시도에 대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취약점 기술검토 주기를 강화하여 키보드보안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 안전성 부족시 교체 또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2.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감사원 조사
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처분요구서(다만 처분
요구서에 대하여는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질문
답변서와 확인서)(그 '사본' 및 요약자료 제출
요망)

☐ 감사원 조사개시통보서, 수사요청서 : 해당없음

☐ 감사원 감사에 따른 처분요구서

| 감사 기관 | 감 사 명(목적) | 감사 기간 | 감사 결과 |
|----------|------------------------------|-------------------|-------------|
| 감사원 |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0.3.15 ~3.19 | 별첨1 |
| |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10.1.28 ~4.2 | 별첨2 |
| |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1.3.17 ~3.25 | 별첨3 |
| |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 '11.4.4 ~5.27 | 처분요구 미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0.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 1·2.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주의·시정)
3.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주의)
4.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주의)
5.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는지 여

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및 출처 등에 의하여 검증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3.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4. 2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 계 | | 정무직 | | 별정직 | | 일반직 | | 연구직 | | 계약직 | | 기능직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계 | 230 | 220 | 2 | 2 | 4 | 4 | 200 | 190 | 1 | 1 | 11 | 11 | 12 | 12 |
| 본 부 | 164 | 161 | 2 | 2 | 4 | 4 | 137 | 134 | 1 | 1 | 9 | 9 | 11 | 11 |
| 소속기관 | 66 | 59 | 0 | 0 | 0 | 0 | 63 | 56 | 0 | 0 | 2 | 2 | 1 | 1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함.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6,811억 원(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기금 55조 8,76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0.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2조 7,000억 원(한국산업은행 9,000억 원, 중소기업은행 8,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6,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억 원)을 출자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 회 계 구 분 | | '09세출예산 | '08세출예산 | 증감률 |
|---------|-----------------------|---------|---------|-------|
| 총 계 | | 586,811 | 424,263 | 38.3 |
| 일 반 회 계 | | 28,868 | 3,037 | 850.5 |
| 기금 | 소 계 (관리주체) | 558,766 | 421,457 | 32.5 |
| |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 | 110,362 | 89,972 | 22.6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 | 1,560 | 1,721 | △9.3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57,909 | 30,743 | 88.3 |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24,595 | 16,030 | 53.4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 20,912 | 13,250 | 57.8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11,168 | 9,757 | 14.4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 117,819 | 170,412 | △30.8 |
| |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 12,085 | 89,567 | △86.5 |
| |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 202,35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중 [표 3]과 같이 위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2조 7,719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 822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집행금액은 32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5억 원으로 전체의 68.8%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는 102억 원)한다.

[표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 집행 현황

(금액단위: 억 원)

| 일반회계 | 28,868 |
|--|-----------------------------|
| 인건비 | 139 |
| 기본경비* | 86 |
|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출자 27,0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0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39 - 역모기지론 출연 30 | 27,820 (좌측 금액 합은 27,719) |
|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786 - IBRD차관 원금상환 31 - IBRD차관 이자상환 5 | 822 |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만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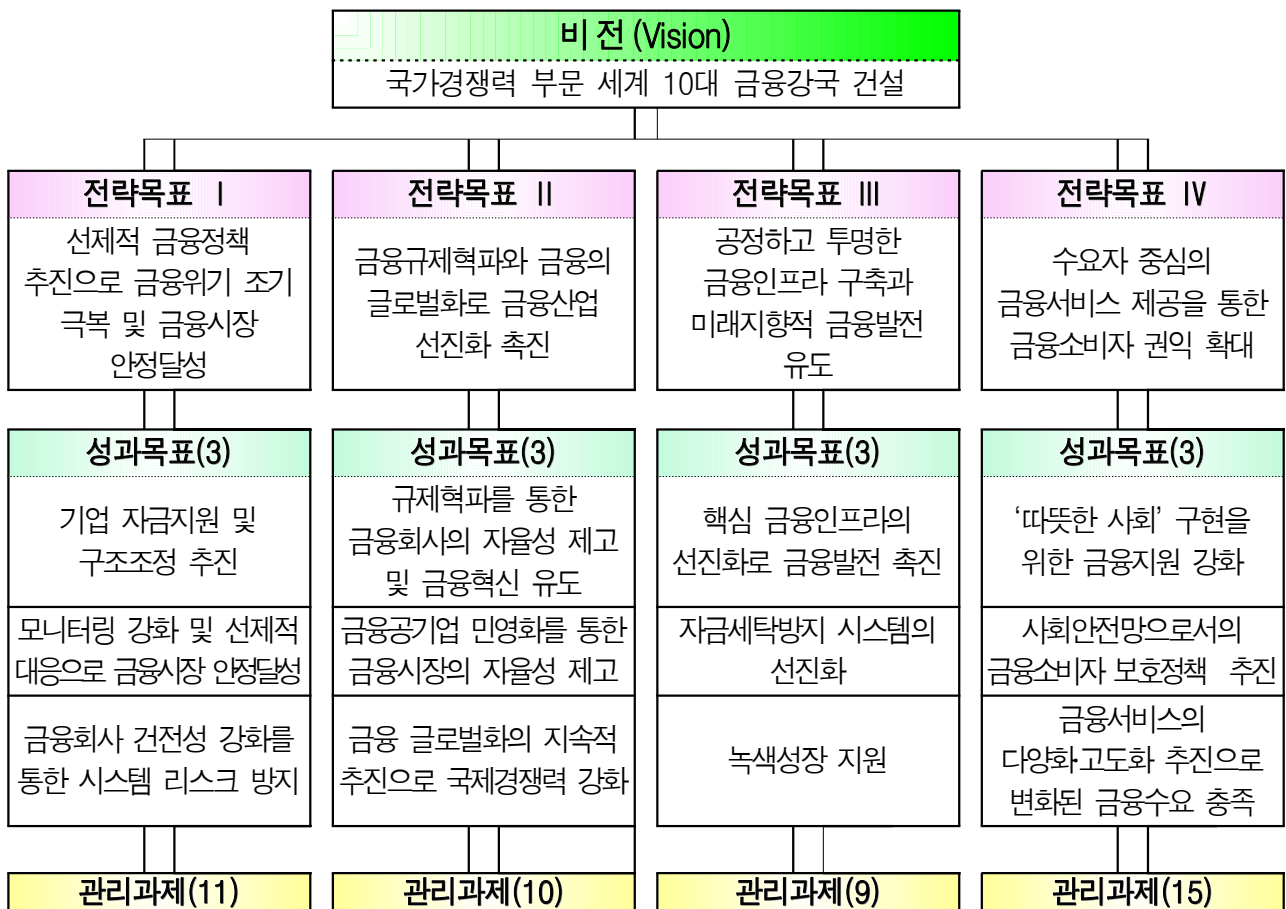
가. 임무(Mission) 및 비전(Vision)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성과목표, 45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3개와 64개, 계 7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시정요구

제 목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2005. 8. 31.)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2007. 1. 31.)에 근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리우대 모기지론으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개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00백만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실제 대출은 개별 은행에서 취급)해 주면서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인하(0.5~1.0%p)¹⁾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말 현재까지 6,871명에게 4,766백만 원을 이차보전 하였다.

1) 16백만 원 이하: 1.0%p 인하, 18백만 원 이하: 0.75%p 인하, 20백만 원 이하: 0.5%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전산자료를 조회²⁾하여 대출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대출실행 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다주택 소유 여부를 재확인하며 대출실행 시 1주택 초과 보유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출실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와 약정한 「추가약정서」에도 “대출 실행일 이후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 이하인 상태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2005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사후적으로 한번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위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약정서」에는 사후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10년 3월 감사원에서 대출자와 그 배우자의 다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3건(대출잔액 200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3백만 원), 대출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취급 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으로 사후적으로 다주택이 된 ‘사후적 자격 상실’ 사례가 31건(대출잔액 1,552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26백만 원)으로 다주택 소유자 총 34명에게 대출잔액 1,752,151,844원, 부당 이차보전금 29,131,935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³⁾

[표] 대출 부적격자 다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건, 원)

| 구 분 | 부적격 대출자 수 | 발견 주택수 | 부적격 대출잔액 | 부당 이차보전금 |
|-----------------------------------|-----------|-----------|---------------|--------------------------|
| 취급기준 위반 ¹⁾ | 3 | 6 | 200,072,054 | 2,939,440 |
| 사후적 자격 상실 ²⁾ (3주택자) | 31 (3) | 65 (9) | 1,552,079,790 | 26,192,495 ³⁾ |
| 계 | 34 | 71 | 1,752,151,844 | 29,131,935 |

주: 1.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실행

2. 세대별 1주택 사후유지 요건 위반(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 주택 추가 구입 21명)

3. 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은 결혼일자를 알 수 없어 부당 이차보전금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34명 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 더 취득하는 등 주택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 ** OO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던 OOO의 경우 2008. 5. 7. 위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하여 2008. 5. 8.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2008. 6. 20. 증여를 해제⁴⁾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 한편 대출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57건, 대출잔액 3,638백만 원으로 나타나 위 직계 존비속이 대출자의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앞으로 다주택 소유자에게 금리우대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시정] ①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의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금 200,072,050원을 회수하고 이차보전금 2,939,440원을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한편, '사후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31건의 대출금 1,552,079,79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사후적 자격 상실' 건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대출자와의 「추가약정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12개)-관리과제(4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성과지표 1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64개)를 설정하고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3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10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55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4개 전략목표의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84% 수준이다.

[표 1] 전략목표 달성현황

| 전 략 목 표 | 사업규모(억 원) |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
|---|-----------|-----------------------------|
|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 33,667 | 17/17 (100%) |
|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 23.1 | 15/19 (79%) |
|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 52.8 | 13/16 (81%) |
|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 4,709.5 | 20/25 (80%) |
| 총 계 | 38,452.4 | 65/77 (84%)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0. 3. 15.~3. 19.) 중 위 13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77개 성과지표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법 개정 여부”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64개 중 14%인 9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가 국회 심의·통과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등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표 2]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목표치 |
|-----------------------------------|-------------------------|------------|
|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Ⅰ-3-정책②) | RBC제도 시행 | 관련 법규 개정 |
|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Ⅱ-1-정책①) |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Ⅱ-1-정책②) |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 법 제정 |
|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Ⅱ-1-정책③)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회계·공시제도 개선 (Ⅲ-1-정책①) |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개정 | 시행령 및 규정개정 |
|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Ⅳ-2-정책①)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Ⅳ-2-정책②) | 관련 법령 개정 | 법령 개정 |
|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Ⅳ-2-정책③) | 내부통제개선 | 법 |
| 헤지펀드 도입 (Ⅳ-3-정책②) | 헤지펀드제도 도입 여부 | 시행령 개정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② 예산액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Ⅳ-2-재정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
 (성과지표) 기금출연실적(측정방법: 기금출연액, 목표치: 650억 원)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의 성과지표를 ‘기금출연실적’, 목표치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 예산액 ‘65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기금은 한국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 관서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기확정된 예산액 전액을 한국은행으로 전출하고 있어, 목표치인 기금출연액이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③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재정② 저축의 날 행사 개최
 (성과지표) 저축의 날 행사 개최(측정방법: 개최 여부, 목표치: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관리과제 “저축의 날 행사”의 경우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저축의 날 행사 개최’로 하고 있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에 따르면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저축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1973년 법령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등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④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3.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3-재정③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측정방법: FTA 금융협상 및 MOU체결실적, 목표치: 개선)

위 관서에서는 “금융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성과지표를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지원 실적’으로 설정하여 측정방법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치를 ‘개선’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는 2008년 대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목표치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달성률이 위 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과제의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정책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측정방법: 펀드규모, 목표치: 300억 원)

위 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추진계획」(2009. 9. 28.)에 따르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수정은 환경변화로 정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방법에 따르되, 각 부처가 참여하는 수정검토 TF를 반드시 거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무총리실 규정과 달리 목표치를 ‘100억 원(3년간 300억 원)’으로 임의로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를 근거로 100% 달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달성률은 33.3%에 불과하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② 당해 연도의 실적치가 아닌데도 실적치로 제시

(전략목표) Ⅰ.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성과목표) Ⅰ-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관리과제) Ⅰ-1-정책②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성과지표) 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측정방법: 구성 여부, 목표치: 구성 여부)
②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측정방법 및 목표치: 위원 신규 선임 및 인원 보강 여부)

위 관서에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2008년 11월 이미 설치되었고, 위원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장이 선정하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말 이미 각 기관에서 선정하는 등 위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되었거나, 과거 업무추진의 결과로 목표치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어 당해 연도 업무추진 성과와 무관한데도 당해 연도의 실적인 것처럼 표시하고는 목표달성으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있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과거연도의 실적을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로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 | |
|----------------------------|--|
| 임무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 |
| 비전 |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Ⅰ.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Ⅰ-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 성과목표 Ⅰ-2.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 성과목표 Ⅰ-3.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Ⅱ-1. 규제혁파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 성과목표 Ⅱ-2.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 성과목표 Ⅱ-3.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전략목표 Ⅲ.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Ⅲ-1. 핵심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 성과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 성과목표 Ⅲ-3. 녹색성장 지원 ▪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Ⅳ-1.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 성과목표 Ⅳ-3.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는 2009. 3. 16. ○○○○연구원과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3. 16. ~ 9. 16. 계약금액: 45,000,000원)을, 같은 해 8. 28.에는 ○○○○○ 산학협력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8. 28. ~ 11. 9.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상 최종보고서는 각각 2009. 9. 16. 및 같은 해 11. 9.까지 50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자 위 관서에서는 각각 같은 해 12. 15. 및 12. 28.까지로 작성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연구용역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사완료한 후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이들 최종보고서 초안⁵⁾을 2009년 12월 말경 컴퓨터 파일로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보고서 50부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3.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28. 두 과제의 용역비 전액 총 80,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보고서 50부는 2010년 3월 말 현재 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로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최종보고서 초안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차이: 최종보고서는 2010년 2월 FATF 총회에서 FATF 측과 협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이행계획(「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포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에게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 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과징금 등을 불납결손처분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표 1]과 같이 2008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26,194백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7,825백만 원을 수납받고 2,017백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미수납된 16,352백만 원 및 신규 13,921백만 원 등 총 30,273백만 원을 부과하여 7,251백만 원을 수납받고 834백만 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다.

1) 2005. 6. 29. 금융위원회 수입징수관(행정인사과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과징금 등 징수업무 및 결손처분관련 중요사항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표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 해당연도 | 징수결정액 ²⁾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D=A-B-C) | | | |
|-------|----------------------------|------------|--------------|----------------|--------|---------------|-------|
| | | | | 소계 | 납기 미도래 | 거소불명· 재력부족 | 징수유예 |
| 2008년 | 26,194 | 7,825 | 2,017 | 16,352 | 2,062 | 13,810 | 480 |
| 2009년 | 30,273 | 7,251 | 834 | 22,188 | 4,210 | 15,394 | 2,584 |

주: 전년도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면제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²⁾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불납결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채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징수결정 금액을 수납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통지 등의 사유가 있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때에만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관서의 결손처분 내역 중 결손액이 큰 대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결손액이 690백만여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4. 7. 15. 폐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43백만여 원³⁾과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 2001년 8월 14일 제작)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 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3) 2002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장부가액 12백만여 원, 시가 20백만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2007. 4. 27.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없었으며 2008. 11. 28. 현장조사 결과 최후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이 2010. 11. 23.⁴⁾인데도 과징금 51백만여 원은 2008. 10. 29.에, 639백만 원은 2009. 5. 2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납결손하였다.

[표 2] (주)○○○○○의 불납결손 내역

(금액단위: 원)

| 부과일 | 과징금 체납액 | 위원회 판단 소멸시효 완성일 | 불납결손 결정일 |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 |
|--------------|-------------|-----------------|---------------|---------------|
| 2003. 7. 23. | 51,400,000 | 2008. 10. 29. | 2008. 12. 11. | 2010. 11. 23. |
| 2002. 6. 14. | 639,000,000 | 2009. 5. 22. | 2009. 12. 29. | 2010. 11. 23. |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관서에서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였으면 회수할 수 있었던 과징금(○○○○공제조합 출자금만도 2002년 기준 20백만여 원, 2010년 기준 43백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⁵⁾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결손 처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2004. 5. 31. 위 관서는 (주)○○○○○에 부과한 과징금 51백만여 원과 639백만 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주)○○○○○ 소유 아파트(울산광역시 남구 *** ***** *****)를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이 2005. 11. 24. 법원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24.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 11. 23.임.

5) (주)○○○○○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없다가, 2007. 11. 27. 북부산세무서에서 889백만여 원을, 2008. 1. 17. 서대구세무서에서 51백만여 원을 압류함. 따라서 위 관서는 2007년 11월 이전에 채권압류한 후 법원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1.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주의)
3.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수준을 소극적으로 설정하였는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검증 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3. 17.부터 같은 해 3. 25.까지(7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4 . 2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2010. 12. 31. 현재)

(단위: 명)

| 구 분 | 계 | | 정무직 | | 별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경찰) | | 연구직 | | 계약직 | | 기능직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계 | 231 | 230 | 2 | 2 | 5 | 5 | 193 | 190 | 7 | 7 | 1 | 1 | 11 | 11 | 12 | 14 |
| 본 부 | 167 | 167 | 2 | 2 | 5 | 5 | 140 | 139 | - | - | 1 | 1 | 8 | 8 | 11 | 12 |
| 공자위 사무국 | 12 | 11 | - | - | - | - | 12 | 11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 52 | 52 | - | - | - | - | 41 | 40 | 7 | 7 | - | - | 3 | 3 | 1 | 2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9,104억 원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기금 55조 7,6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3조원 으로 전년도에 위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 787억 원 보다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 회 계 구 분 | | '10세출예산 | '09세출예산 | 증감률 |
|---------|-----------------------|---------|---------|-------|
| 총 계 | | 589,104 | 586,811 | 0.4 |
| 일반회계 | | 31,464 | 28,868 | 9.0 |
| 기금 | 소 계 (관리주체) | 557,640 | 558,766 | △0.2 |
| |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 201,758 | 110,362 | 82.8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 1,559 | 1,560 | △0.1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42,206 | 57,909 | △27.1 |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20,821 | 24,595 | △15.3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 15,736 | 20,913 | △24.8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14,577 | 11,168 | 30.5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 132,668 | 117,820 | 12.6 |
| |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 21,899 | 12,086 | 81.2 |
| |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 106,416 | 202,353 | △47.4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중 [표 3]과 같이 회계기금 간 거래 3조 33억 원,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1,097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사업금액은 334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2억 원으로 전체의 66.5%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112억 원)한다.

[표 3]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세부 현황

(단위: 억 원)

| 일반회계 | 31,464 |
|--|------------------------------|
| 인건비 | 150 |
| 기본경비 ¹⁾ | 72 |
|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 4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2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45 | 1,209 (좌측 금액 합은 1,097) |
|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0,000 - IBRD차관 원금상환 30 - IBRD차관 이자상환 3 | 30,033 |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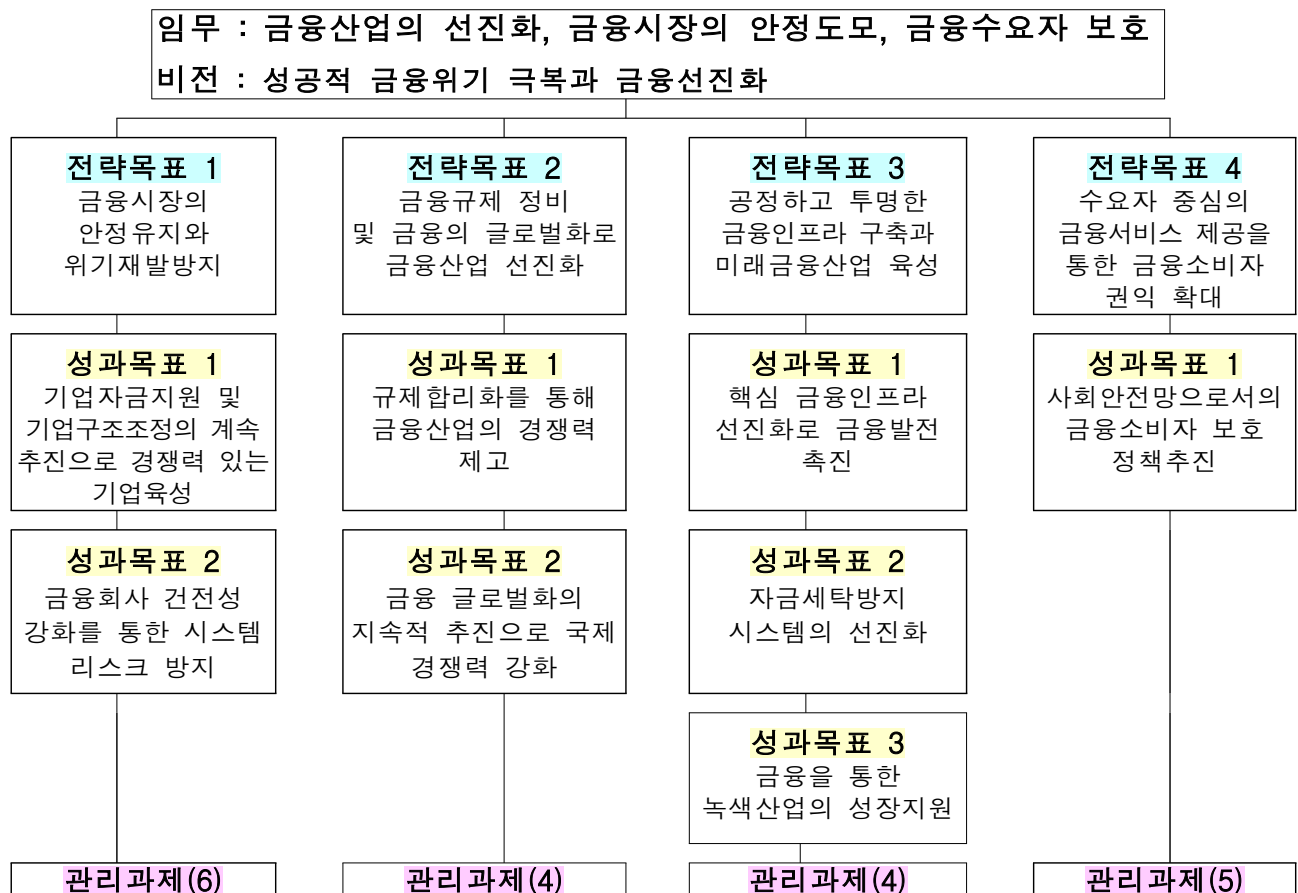
가. 임무 및 비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8개의 성과목표, 19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2010. 1. 15. “2010년 녹색금융 특화 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및 같은 해 2. 2. “녹색금융 특화 MBA 심사·선정 계획(안)”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과 고려대학교를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 5억 원,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당초 2010년 녹색금융특화 MBA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과 교수채용비 6억 원 총 15억 원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2009. 12. 3.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녹색금융 MBA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교수채용비 6억 원을 삭감하여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¹⁾만이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국회 예산심의·확정 취지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은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했다.

또한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내 녹색금융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국내 전문인력 양성에 앞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1) 국내학생장학보조비 5억 원,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

4억 원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지적²⁾이 있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도국 학생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9. 12. 18. “녹색금융 특화MBA 지원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교수채용 예산을 삭감한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을 교수채용비, R&D투자비용³⁾ 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려대학교와 KAIST에서 2010. 7월 [표]와 같이 학생장학보조비 545백만여 원, 연구개발비 160백만여 원, 교육인력 지원비 84백만여 원, 기타 사업경비(사업 운영경비 + 간접경비) 109백만여 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같은 해 8. 17. 이를 승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국회 예산 및 보조금 예산 신청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 구 분 | 국회 심의·확정 예산(A) | KAIST | | 고려대 | | 합계(B) | |
|-------------|-------------------|---------|---------|---------|---------|---------|---------|
| |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 국내 학생장학보조비 | 500,000 | 151,600 | 151,600 | 270,000 | 270,000 | 421,600 | 421,600 |
|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 400,000 | 124,000 | 119,300 | - | - | 124,000 | 119,300 |
| 연구개발비 | - | 90,640 | 88,450 | 70,000 | 70,000 | 160,640 | 158,450 |
| 교육인력지원 | - | 44,040 | 29,704 | 40,000 | 40,000 | 84,040 | 69,704 |
| 사업 운영경비 | - | 64,720 | 62,714 | 20,000 | 14,897 | 84,720 | 77,611 |
| 간접경비 | - | 25,000 | 25,000 | - | - | 25,000 | 25,000 |
| 미집행잔액 | - | - | 23,232 | - | 5,101 | - | 28,335 |
| 총 계 | 900,000 | 500,000 | 500,000 | 400,000 | 400,000 | 900,000 | 900,000 |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대학교들에서 2010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 한 내용과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가 아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359백만여 원을 집행하였다.

2) 2009. 11. 12.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상 지적함

3) 사실상 교수채용비 성격이며 교과목개발비는 수당, 영어강의 개발수당, 책임교수 직책관공비 등으로 지급함

또한, 위 관서에서는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개도국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도 개도국 학생 유치계획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고려대학교는 2010년 개도국 학생을 1명도 유치하지 못하였고 KAIST는 개도국학생보조비 예산 400백만 원 중 281백만 원⁴⁾을 개도국 학생보조비와는 다르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기존에 자체 학교운영비로 개도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녹색금융 MBA예산으로 대체하여 120백만여 원을 사용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¹⁾을 지급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89,206백만 원, 65,000백만 원, 65,200백만 원을 출연(법정장려금 재원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부담)하였다.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 관서에서 위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추가 출연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2010년 11월²⁾, 추가 출연 필요금액³⁾ 10,363백만 원보다 5,937백만 원 많은 16,300백만 원을 위 기금에 출연하는 등

1)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리(일반 1.5 ~ 2.5%, 저소득 6.0 ~ 9.6%) 추가 제공

2) 금융위원회는 2, 5, 8, 11월, 한국은행은 3, 6, 9, 12월에 출연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참고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기간이 3년, 5년으로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법정장려금 지급금액이 거의 확정되어 있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였다.

[표] 정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 10월 말 기금 잔액(A) |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 ¹⁾ 까지 지급 예상액(B) | 추가 출연 필요금액 [C=(B-A)/2] | 11월 실제 출연금액(D) | 과다 출연금액 (D-C) |
|------|-------------------|--|------------------------------|-------------------|------------------|
| 2008 | 39,748 | 48,037 | 8,289 ²⁾ | 22,301 | 14,012 |
| 2009 | 12,290 | 28,976 | 8,343 | 16,250 | 7,907 |
| 2010 | 14,286 | 35,013 | 10,363 | 16,300 | 5,937 |

주: 1. 차년도 1월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출연계획이 없어 차년도 1월분만큼 해당연도에 추가 출연하여 여유 자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은 한국은행이 3월에 연간 출연금 전액을 출연하였으므로 추가 출연 필요금액이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임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실제 지급액’은 2008~2010년 각각 46,464백만 원, 28,660백만 원, 33,307백만 원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기금에서는 연도 말에 법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금액⁴⁾ 중 위 과다 출연금액만큼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등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여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 출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위 기금의 2008 ~ 2010년 말 잔액은 각각 36,579백만 원, 27,040백만 원, 27,697백만 원임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8개)-관리과제(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40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가 22개(55%), 초과 달성한 지표가 13개(32.5%), 목표치에 미달한 지표가 5개(12.5%)로 [표]와 같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성과지표가 35개로 전체적으로 87.5%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표] 전략목표 달성현황

(단위 : 억 원, %, 개)

| 전략목표 | 사업규모 | | | 성과지표 실적 | |
|--|---------|--------|-------|---------|------|
| | 예산 | 결산 | 집행률 | 달성/전체 | 달성률 |
| 전략목표Ⅰ :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재발 방지 | 147,944 | 66,928 | 45.2 | 7/10 | 70 |
| 전략목표Ⅱ :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 34.2 | 31.6 | 92.1 | 9/9 | 100 |
| 전략목표Ⅲ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 76.8 | 76.3 | 99.3 | 11/11 | 100 |
| 전략목표Ⅳ :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 3,932 | 4,271 | 108.6 | 8/10 | 80 |
| 총계 | 151,987 | 71,307 | 46.9 | 35/40 | 87.5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1. 3. 17. ~ 3. 25.) 중 11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29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Ⅱ-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Ⅱ-2-재정①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성과지표) ②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의 성과지표를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로 설정하고 측정방법을 ‘(조치 및 답변제공건수/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100’으로 하여 목표치를 70%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측정방법은 외국금융회사의 애로 해소와는 무관하게 답변만 있으면 100% 달성되는 것이고, 위 관서에서 설정한 목표치도 2008년 및 2009년 모두

100% 답변이 완료되었는데도 2010년에 70%로 낮게 설정하는 등으로 위 측정방법과 목표치는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3.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
(성과지표) 녹색금융계획 수립(건)

성과목표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의 경우 성과지표를 ‘녹색금융계획 수립(건)’ 및 측정방법을 ‘분기별 보고횟수’로 하여 목표치를 ‘4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라 녹색금융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므로 ‘분기별 보고횟수’를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③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재발 방지
(성과목표) I-2.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리과제) I-2-재정.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
(성과지표)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성과지표를 ‘은행권 부실채권비율(%)’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포함하는 시장상황 및 금융회사 여건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재정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서는 부적정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제시한 측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적치를 산정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2-재정②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관련 국제협력’의 성과지표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으로 ‘면담, 협상, 정보교류, 회의 참석 및 MOU 체결횟수’로 하고서는 목표치는 ‘협상’으로만 측정하기로 하여 5회로 설정하였으나 막상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면담, 협상, 정보교류 등을 모두 포함하여 19회로 제출하여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쉽게 달성하였다.

② 설문조사를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1.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관리과제) III-1-재정②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성과지표)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행정지원 효율화’의 성과지표를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으로 설정하고 위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위 관서에서는 ‘주요 금융정책별 평균 인지도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목표치를 10%로 제시하였고 실적은 56.7%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햇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 관서에서는 ‘쌀과 관련된 정책’ 또는 ‘대북정책’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까지 위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햇살론을 서민 대출로 알고 올바르게 응답한 비율은 43.4%에 불과한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56.7%로 나타나 실적이 다소 과장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할 때 당연히 달성되거나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어려운 지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를 당초 설정한 측정방법과 다르게 측정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3.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1년까지)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및 제출한 자료

☐ 목록 CD별첨, 문서사본 별도제출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4.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

| 기관명 | 지 적 사 항 | 처 리 결 과 |
|---------|----------------------|---|
| 국민권익위원회 | 임의적 절차(진행) 규정의 강행규정화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2010.11.12일) |
| | 제재기준의 세분화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10.1.5) -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제재기준을 시행세칙에 반영 |
| |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방안 검토 | ·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금전적 행정 제재(과징금) 확대 추진중 |
| | 감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 ·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시행(2010.1.28) - 재판상 공개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4-1.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

□ 정무위 예비검토 사업별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2010년)

| 지적사항 | 처리결과 |
|-------------------------------------|--|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연구 용역 등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 | <p>□ 11년부터는 금융인력의 현황 및 수급전망 안정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비를 금융 중심지 사업에 편성</p> |
| 추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p>1. 금융중심지 추진위원 구성의 문제점</p> <p>□ 2010년 금융중심지 법령상 추진위원회 위원은 총 28 명으로, 위원수가 과다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불어 민간위원(10명)에 비해 정부·유관기관 위 원이 과다(18명)하여 조정이 필요 <p>2. 개편방안</p> <p>□ 28명 → 21명으로 축소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원) 현행대로 10명을 유지하되, 금융중심 지로 선정된 지자체 등으로부터도 추천을 받아 후보를 구성 ○ (유관기관) 금융중심지와 관련성이 높은 한국투 자공사(KIC), 한국거래소 및 협회 중심으로 정비 *하여 10명 → 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 총재, 산업은행장, 수출입은행장, 한국정 책공사 사장 제외 ○ (정부위원) 금융중심지로의 금융기관 유치, 경영 환경 개선과 직접 연관된 부처 및 선정 지자체 중심으로 정비하여 8명 → 5명* <p>* 금융위, 기재부, 지경부, 서울시, 부산시</p> |

| | |
|--|--|
| <p>금융중심지법 통과에 따른 내년도 예산 대응 계획 (예산 지원 범위, 규모 등)</p> | <p><input type="checkbox"/>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사전적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음 * 타법례(외투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을 참고</p> <p><input type="checkbox"/> 향후 금융중심지법 개정시 연구 용역 등을 거쳐 객관적인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한 후 도출된 예산 지원 기준을 금추위에 보고하여 심의토록 할 예정</p> |
| <p>법령 영문화 사업을 체계화 할 필요</p> | <p><input type="checkbox"/> 2011년도에는 금융법령과 금융감독법규의 영문화 사업을 일원화하여 금융중심지지원센터에서 수행</p> |
| <p>실무전문금융인력 양성 지원 사업 중단 사유</p> | <p><input type="checkbox"/>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장기과정개설, 해외 사례를 포함한 수준 높은 강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p> <p>○ 금융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소득 업종이며 향후 교육의 효과도 금융권에 귀속된다는 등 부정적 시각이 존재</p> <p><input type="checkbox"/> 당초 금융위는 녹색금융 인력과 부산실무 인력 양성을 위하여 약 200명 지원에 4.2억원을 신청하였으나</p> <p>○ 예산 심의과정에서 실무금융전문인력 양성 사업 추진 예산은 전액 삭감</p> |
| <p>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p> | <p><input type="checkbox"/> '09.5월, 부산의 금융중심지 조성 지원을 위해 부산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분원을 설치하여 5명 직원을 두고 운영 중</p> <p>○ 현 인원으로 현재 부산의 업무 소요를 커버하고 있으며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내에 설치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향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발전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금감원(금융중심지지원센터) 등과 협의하여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하겠음</p> |

□ 예결위 예비검토 사업별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2010년)

| 지적사항 | 처리결과 |
|---|---|
| ‘녹색금융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전망’ 관련 자료요구 | <p>□ 녹색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녹색 금융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p> <p>* 신재생에너지 시장규모는 2020년, 500억달러 → 2030년 1,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모건스탠리)</p> <p>○ ‘녹색금융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전망*</p> <p>* 녹색금융 전문인력은 09년 81.1백명에서 13년 87.9백명으로 4년간 약 68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국고용정보원 「녹색금융 일자리 현황 및 전망」, '09.11)</p> <p>□ 다만, 녹색금융 인력양성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교육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만큼 민간부문이 성숙하지 않아</p> <p>○ 민간의 참여를 유도(pull)하고 관련 분야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p>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예산을 정부가 아닌 금감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 <p>□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의 소요경비중 금융위는 주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융위 지원금액을 제외한 기타 소요경비는 금융감독원이 부담하고 있음</p> <p>□ 09년의 경우 금융위는 주요사업비(영어전문인력 채용 등 인건비, 금융중심지IR 등 사업비)로 4.5억원을 교부하였고</p> <p>○ 금융감독원은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인프라, 행정인력 등 16억*(추정)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하였음</p> <p>* 인건비 10.6억원, 경상경비 및 자본예산 5.4억원 등</p> |

□ 정무위 예결산 소위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2011년)

| 지적사항 | 처리결과 |
|---|---|
| <p>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편성 내용과 달리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안 제출시 학생장학금 9억원, 교수채용비 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수채용비 6억원은 삭감 □ 실제 사업추진시 학생장학금만으로는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대상 학교 선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금융전문인력분과위원회('09.12)의 의견*에 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금융은 아직 민간에서 교과과정이 개설될 만큼 시장이나 교육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수준 높은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서는 커리큘럼 개발 등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제7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10.1)에서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을 학생장학금 및 교과과정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에 사용하기로 심의 □ 내실있는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장학금 외에 연구개발비 등을 편성한 것이고 국회에서 삭감한 교수채용비는 지급한 바 없음 □ '11년 예산편성시부터는 예산설명자료에 이러한 내용을 이미 반영하였음 |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4-2.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

| 기관명 | 지 적 사 항 | 처 리 결 과 |
|-------------|-------------------------------|--|
| 국민권익 위원회 | 우체국 예금 건전성에 관한 감독기구 협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우리 위원회는 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전달 ·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우체국예금 건전성기준 제정 |
| |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관련자 제재수준 강화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은행법(10.4월 국회 통과, 11.18일 시행예정)에서 은행의 예금 구속행위(깍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재규정 신설 |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4-3. 최근 2년간('10~'11)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1. 국민권익위원회

| 권고일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처리결과 |
|-----------|--|---|
| '10.10.19 | 【보험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 <input type="checkbox"/> 보험계약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구체화, 상품별 예정사업비 공개의무 등을 보험업법 등에 명시할 필요 | ○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안 중 수용가능한 의견의 경우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시('11.1.24시행) 반영 |

2. 국가인권위원회

| 권고일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처리결과 |
|----------------------|--|---|
| '10.7.28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 차별금지】 |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을 조사하여 장애인 차별 조항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조치 |
| 권고일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처리결과 |
| '10.10.4 '10.11.4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 검토 및 감독강화 | -보험가입심사시 비장애인과 동일기준으로 심사하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강화 및 설계사 자격시험시 관련 문항 출제하도록 조치 |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4-4. 최근 2년간(2010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및 그 처리결과

| 기관명 | 처분 종류 | 지적사항 | 처리결과 |
|-------|----------|---|---|
| 국가인권위 | 권고 | □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 □ 장애인에 대한 발급편의 제공관련 행정지도* * "신청서 기재 내용에 대한 구두 녹취", "대리인 작성 및 장애인 본인 확인" 등의 방법으로 발급 편의를 제공 할 것 ○ 금년 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개정* 하여 권고를 이행할 계획 *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카드발급신청서 자필 작성 의무를 완화 |

고승덕 의원(한나라당)

5. 최근 2년간 징계 현황

6. 최근 2년간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5. 최근 2년간 징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최근 2년간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

| 성명 | 직위(직급) | 퇴직일자 | 재취업 기관(퇴직당시) |
|-----|----------|----------|--------------|
| 김○○ | 전산서기보 | 10.2.17 | 한국거래소 |
| 나○○ | 행정사무관 | 10.3.2 | 한국정책금융공사 |
| 남○○ | 행정사무관 | 10.10.14 | 한국정책금융공사 |
| 임○○ | 서기관 | 10.12.6 | 파인트리 파트너스 |
| 최○○ | 금융정보분석원장 | 11.2.16 | 금융감독원 |
| 권○○ | 부위원장 | 11.3.26 | 금융감독원 |

권 택 기 의원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 불공정한 신용카드 약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근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 제7항에 따라 신용카드 약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약관변경을 명령할 수 있음
- 약관변경 명령권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제10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 중임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2. 햇살론 실적(2011년 8월 1일 기준)

- 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 2) 대출기준 변경 연혁
- 3) 신용등급별 실적(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 4) 2008년 이후 분기말 실적(2011년은 월말 실적)

2-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 대출기준

<대출대상>

-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 6~10등급” 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신용등급 무관)” 인 근로자,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
-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자로서 소득 증빙이 가능한 자(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미신고자 포함)
- 신청일 현재 창업 준비 중이거나 영업 중인 자(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으로서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무등록·무점포자 포함)

<대출제한대상>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재된 자, 미소금융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및 신용회복기금, 한마음금융과 여신거래 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이 있는 자 등

□ 징구서류

- 본인확인서류, 근로 및 영업사실 확인서류 등

(표1) 근로자 구비서류

| 구 분 | | | 서류명칭 |
|---------------|-------------------------------------|-------------------|---|
| 공 통 | | | 주민등록등본 |
| 근로소득 신 고 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일용근로 자 제외) | 직전년도 이전 입사자 |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용) |
| | | 당해년도 입사자 | 1. 재직증명서(또는 고용계약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근무처 자격득실 이력 포함)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
| | 일용근로자 | | 1. 근로(고용) 계약서 2.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본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
| 근로소득 미신고자 | | | 1. 근로(고용) 확인서 2. 고용주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3. 급여통장 거래내역조회표 원본 |

(표2) 자영업자 및 농림어업인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명칭 |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 |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
| | 사업사실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무등록 자영업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 기청 고시)」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 인적용역제공자는 소득세납부 증빙서(사업소득원 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등) ◦ 농림어업 종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 확인서 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의 입증서류 등 |
| | 연간소득 증빙서류 ▪ 연간소득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부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 납부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3개월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 창업자 | 창업교육· 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등 창업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이수 확인서류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소상공인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별로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
| | 창업준비 소요 자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사(인테리어 등)계약서, 납품계약서 (냉동기·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 등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원본 |

2-2) 대출기준 변경 연혁

□ 여신심사 강화 및 제도적 미비점 보완('10.9)

- 업권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저신용·고소득자 대출제한** 등 미비점 보완

* 업권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기준 운영(근로자 50% 미만, 자영업자 60% 미만), 원격지 대출 제한,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마련 등

** 신용 6등급 이하라도 연소득 4천만원이하만 대출가능하도록 제한

□ 이용자 민원사항 개선 및 부정대출 방지('10.11~12)

- 보증료 일괄 선납금액 감소*, 근로자 지원조건 완화** 등 민원사항 개선

* 보증금액 1천만원(5년대출) 기준 : 보증료 50 → 37.5만원

** 근로자 지원요건 중 '3개월이상 계속근로'를 '최근 3개월간 매달 10일 이상 근로'인 경우로 명확화 하여 이직 등 단기간 근로 공백자 지원, 90일 이내의 출산휴가는 근로기간으로 인정

- 지역신보 중앙회에 리스크관리본부를 신설하고, 소득 증빙서류를 강화*하는 등 부정대출 방지책 마련

* 금융기관 발급 「거래내역조회표」, 「햇살론 신청 확인서」 추가 제출

□ 대출 지원범위 확대 등('11.2)

- 저소득자 범위 확대*, 자영업자의 대출요건 완화** 등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지원 확대

- * 저소득자 범위를 연소득 '2천만원'에서 연소득 '2천6백만원'으로 상향조정
- ** 자영업자의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제한기준을 '60%미만'에서 '70%미만'으로 상향조정

- 각 업권 내규에 구속성예금 금지규정을 반영토록 하여 불건전영업행위 방지 유도

□ 여신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대환목적의 대출 활성화 ('11.9월말 시행 예정)

- 경직적인 '소득대비 채무상환 비율(DTI)' 기준 대신 "종합신용평가 모형*"을 통해 차주의 대출적합성 및 대출금액을 심사

- * 연체기록, 근속년수, DTI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햇살론 신청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다각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스템

- 기존의 고금리채무를 상환할 목적으로 햇살론을 대출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출한도 상향조정 인센티브 부여

2-3) 신용등급별 실적('11.7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

| 신용 등급 | 1등 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 급 | 총계 |
|-------------------------|---------|-----|-----|-------|-------|-------|----------|----------|------|----------|--------|
| 대출 금액 | 94 | 256 | 436 | 1,191 | 2,904 | 5,005 | 4,777 | 1,818 | 363 | 75 | 16,922 |
| 평균 금리 ¹⁾ | 9.4 | 9.7 | 9.7 | 9.8 | 9.9 | 9.9 | 10. 0 | 10. 0 | 9.9 | 9.9 | 10.0 |
| 보증 사고율 ²⁾ | - | 0.4 | 0.9 | 1.3 | 2.1 | 4.1 | 6.0 | 9.7 | 12.7 | 10.7 | 4.8 |

1) 금리별 대출금액에 따른 가중평균 금리

2) 보증사고율=보증사고액/보증공급액

2-4) 분기말 실적(2011년은 월말 실적)

(단위 : 억원, %, %)

| | 2010.2/4 | 2010.3/4 | 2011. 1. | 2011. 2. | 2011. 3. | 2011. 4. | 2011. 5. | 2011. 6. | 2011. 7. | 총계 |
|-----------|----------|----------|----------|----------|----------|----------|----------|----------|----------|--------|
| 대출 금액 | 9,754 | 4,105 | 502 | 386 | 514 | 434 | 400 | 415 | 412 | 16,922 |
| 평균 금리 | 9.9 | 9.9 | 10.0 | 10.0 | 10.0 | 10.1 | 10.2 | 10.3 | 10.3 | 10.0 |
| 보증 사고율 | - | 0.7 | 1.2 | 1.7 | 2.3 | 2.9 | 3.5 | 4.0 | 4.8 | 4.8 |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3. 미소금융 실적(2011년 8월 1일 기준)

- 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 2) 대출기준 변경 연혁
- 3) 신용등급별 실적(신용등급은 외부 CB(10등급))

| | 1등급 | 2등급 | ... | ... | 9등급 | 10등급 | 총계 |
|------|-----|-----|-----|-----|-----|------|----|
| 대출금액 | | | | | | | |
| 평균금리 | | | | | | | |
| 연체율 | | | | | | | |
| 대손율 | | | | | | | |

4) 2008년 이후 분기말 실적(2011년은 월말 실적)

| | 2008.1/4 | 2008.2/4 | ... | ... | 2011.6 | 2011.7 | 총계 |
|------|----------|----------|-----|-----|--------|--------|----|
| 대출금액 | | | | | | | |
| 평균금리 | | | | | | | |
| 연체율 | | | | | | | |
| 대손율 | | | | | | | |

1 대출기준 및 징구서류

대출기준

① 지원대상

< 미소금융재단 공통 상품 >

☐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계층

- * 대출신청일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 중 1개 이상의 회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경우 신청자격 인정

☐ 연체가 있거나 보유재산 대비 채무가 과다한 경우 등도 제외

< 기업/은행미소재단지점이 취급하는 특성화 상품 >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법인세법상 소액 신용대출사업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 대상별로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등록된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

*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제2항

[2] 자금용도

- 창업임차자금, 프랜차이즈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무등록 사업자금

[3] 금리·금액

- 대출금리는 기존 미소금융 지원 수준인 4.5% 내외(무등록사업 자금은 2%), 대출한도는 자금용도에 따라 1~5천만원 이내

[4] 컨설팅

-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출 금액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컨설팅 병행 운영

징구서류

※ 전체 징구 서류 중 대출 종류 및 신청인 상황에 맞는 서류만 징구

| 구분 | | 구비서류 |
|------|------------------------------|---|
| 기본서류 | | <input type="checkbox"/>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신분증 <input type="checkbox"/> 소득증빙서류 <input type="checkbox"/> 재산관련서류(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상가·주택 임대차계약서 ○ 자동차등록증 등 <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활용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보고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금융거래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필요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필요서류 |
| 추가서류 | 프랜차이즈 창업자금 및 창업임차자금 |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창업교육수료증(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input type="checkbox"/>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
| | 운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 | <input type="checkbox"/> 컨설팅결과보고서(최근 3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종 1년간/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input type="checkbox"/> 사업장임대차계약서(현재·재계약) <input type="checkbox"/> 자금용도 및 활용 계획서(필요시) |
| | 무등록사업자 지원자금 | <input type="checkbox"/> 무등록사업자확인(진술)서 |

2 대출기준 변경 연혁

- '10.5.17, 긴급·소액 사업자금 지원요건 개선
 -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 완화(50%→30%): 2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에 한해 자기자본 비율을 30%로 완화
 - 운영자금·시설개선자금의 영업기간 요건 단축(2년이상 → 1년이상)
 - 컨설팅 절차 간소화: 500만원 이상의 사업자금 대출시 3회 이상인 컨설팅 횟수를 컨설팅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
- '10.7.2, 기업·은행 미소금융 재단 중심으로 긴급소액지원 성격의 미소금융상품(특성화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취급토록 허용

3 신용등급별 실적 (신용등급은 외부CB(10등급))

(‘11.7.31. 기준)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
| 대출금액 (천원) | 678,800 | 6,716,000 | 13,950,000 | 17,990,200 | 14,714,600 | 13,899,100 |
| 평균금리 |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2%) | | | | | |
| 연체율* | 0.0% | 0.0% | 0.0% | 0.1% | 0.1% | 0.1% |

| | 7등급 | 8등급 | 9등급 | 10등급 | 총계 |
|--------------|-----------------------|------------|------------|-----------|-------------|
| 대출금액 (천원) | 77,756,604 | 60,787,600 | 12,168,050 | 7,038,400 | 225,699,354 |
| 평균금리 |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2%) | | | | |
| 연체율* | 2.6% | 3.5% | 11.8% | 8.7% | 2.6% |

※ 미소금융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이하의 저신용계층을 지원하나, 기업/은행 재단 자체상품은 차상위계층(신용등급 1~6등급)일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31일 이상, 납입대상대출액 기준

4 2008년 이후 분기말 실적 (2011년은 월말 실적)

(‘11.7.31. 기준)

| | 2010.1/4 | 2010.2/4 | 2010.3/4 | 2010.4/4 | 2011.1월 | 2011.2월 |
|---------------|-----------------------|-----------|------------|------------|------------|------------|
| 대출금액 (천 원) | 4,695,400 | 6,205,700 | 21,083,370 | 47,578,300 | 13,248,800 | 12,706,600 |
| 평균금리 |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2%) | | | | | |
| 연체율 | - | - | - | 1.6% | 1.8% | 2.1% |

(‘11.7.31. 기준)

| | 2011.3월 | 2011.4월 | 2011.5월 | 2011.6월 | 2011.7월 | 총계 |
|---------------|-----------------------|------------|------------|------------|------------|-------------|
| 대출금액 (천 원) | 22,966,734 | 28,453,900 | 24,875,100 | 22,927,050 | 20,958,400 | 225,699,354 |
| 평균금리 | 4.5% 내외 (무등록사업자금은 2%) | | | | | |
| 연체율 | 2.7% | 2.4% | 2.4% | 2.2% | 2.3% | - |


※ 미소금융은 ‘09.12월부터 시작하여 2010. 1/4분기 이후 대출실적 산정

※ 연체율은 거치기간 등으로 인해 2010. 4/4분기 이후 산정하였으며, 그 기준은 31일 이상 대출잔액 기준임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4. 각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위원회가 제출받은 고졸 채용계획

- ☐ 최근 각 업권에서는 고졸채용 확대계획을 자율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행권, 금융투자업권, 여신전문 금융업권, 보험권이 발표한 고졸채용계획을 별첨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전국은행연합회 | 보도자료 | | 은행산업을 선도하는 최고의 금융단체 |
| | 보도일시 : 배포시 부터 | | |
| 작 성 일 | 2011년 7월 21일 | 작성부서 | 총 무 부 |
| 담당부서장 | 홍강호 부장(T:3705-5272) | 담 당 자 | 이종혁 차장(T:3705-5273) |

제 목 : 은행권 고졸인력 채용확대 추진

- 전국은행연합회(회장 신동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학력 인플레 및 고졸인력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은행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고자 18개 국내은행과 협의를 거쳐 고졸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를 위해 각 은행에서는 은행별 실정에 맞는 고졸인력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올해(상반기 포함)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은행권 고졸인력 채용규모는 2,700명을 상회(전체 채용인원의 12% 수준)할 전망이다
 - 이는 지난 2년보다 연평균 인원수가 약 2배(459명→907명) 증가한 것이며, 비율로는 6.4%p(5.7%→12.1%) 증가한 것임

은행권 고졸인력 채용 계획

(단위 : 명,%)

| 구분 | 2009~2010 (연평균) | 연도별 향후 채용 계획 | | | |
|-----------|--------------------|--------------|-------|-------|---------------|
| | | 2011 | 2012 | 2013 | 합계(연평균) |
| 총채용인원(A) | 7,991 | 7,426 | 7,570 | 7,569 | 22,565(7,522) |
| 고졸인원(B) | 459 | 787 | 939 | 996 | 2,722(907) |
| 고졸비율(B/A) | 5.7 | 10.6 | 12.4 | 13.2 | 12.1 |

- 18개 국내은행 기준

- 또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우수학생을 추천 받아 선발하는 등 고교 졸업예정자 중 은행업무 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집중 채용할 계획임

* 일부은행은 이미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추천을 통해 채용하고 있음

- 향후 각 은행들은 우수 고졸직원에 대하여 취업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일정근무기간 경과 후 야간대학 진학시 학자금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는 등 고졸인력이 단순업무 종사자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금융전문가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사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예정임

* 그동안 고졸인력은 대부분 창구텔러, 콜센터상담원 등 특정업무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일부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왔음

- 이번 고졸인력 채용 확대 계획에 따라, 은행은 젊은 인력의 확충 및 조직의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고졸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인플레 및 고졸인력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함은 물론 경제활동 연령을 낮춰 경제활동 인구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사원은행의 고졸인력 채용 확대방침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채용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우수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특성화고교 전문 커리큘럼 개발, 야간대학 진학 지원 등에 대해 관련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임. 끝.

이 자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fb.or.kr>)의 ‘은행연소식’과 ‘보도자료’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보 도 자 료 / '11. 7. 28(목) 오후2시부터 보도바랍니다.

| | | | |
|-------|--------------------|-------|--------------------|
| 작성부서 | 전략기획부 기획조정팀 | | |
| 책 임 자 | 오무영 부장(☎2003-9030) | 담 당 자 | 박응식 팀장(☎2003-9031) |
| 배 포 일 | 2011. 7. 28(목) | 배포부서 | 홍보실(☎2003-9311~7) |

금융투자업계, 고졸 채용 확대와 우수 고교인력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황건호)는 정부의 학력차별 철폐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 사교육비 문제 해소 등에 일조하기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고졸인력의 채용확대와 우수 고교인력 양성에 매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1. 고졸 채용 확대

금융투자업계는 각 회사별 실정에 맞는 고졸인력 채용확대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3년간 약 1,063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채용인원의 12.2% 수준으로 전년도(4.7%)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금융투자업계 고졸인력 채용 계획] (신규채용 기준)

| 구 분 | 2010년 | 연도별 채용 계획 | | | |
|-----------|--------|-----------|--------|--------|----------------|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계(연평균) |
| 채용인원(A) | 2,846명 | 3,325명 | 2,739명 | 2,646명 | 8,710명(2,903명) |
| 고졸인원(B) | 134명 | 293명 | 362명 | 408명 | 1,063명(354명) |
| 고졸비율(B/A) | 4.7% | 8.8% | 13.2% | 15.4% | 12.2% |

* 채용계획 미정사 제외

이와 함께, 협회는 고졸인력의 지속가능한 채용지원을 위해 고교 증권경시대회 수상자, 자격증소지자, 고교인턴 이력자 등으로 우수 고교인재 Pool을 구성하여 업계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 우수 고교인력 육성 강화

이와 아울러, 협회와 업계는 우수한 고졸인력이 금융투자업계로 진출하여 경쟁력있는 금융전문인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취업전 단계에서는 금융투자 업무에 적합한 예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특성화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운영(현재 3개교)해나갈 계획이다.

* CEO·전문가 특강 등 다양한 전문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제공

※ 협회는 이외에도 '05년부터 금융교육협력학교 지원사업(금년 상반기 94개교), 고교생증권경시대회 개최(매년 4천명),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교재 발간 사업, 청소년 금융교육(연간 10만명) 등을 통해 청소년의 금융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


아울러서, 실무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방학 중 금융투자회사의 특성화 고교생 대상 인턴제 실시를 지원하고, 금융투자교육원을 통해 자격증 취득 집중과정 및 온라인 교육과정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취업 이후단계에서는 업무적응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고졸인력에 대한 표준 경력개발프로그램(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을 설계·제시하고, 그에 상응하는 직무분야별 맞춤식과정도 개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내외 대학 등과 연계한 야간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일과 학업의 병행을 통한 자기계발 노력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협회 장건상 부회장은 “우리사회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고졸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성공경험 축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협회내 인재개발위원회 등을 통해 고졸인력의 채용여건 개선과 차별적 인사관행 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투자협회 보도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 | | | |
|---|---|-------|--------------------------|--|
|  여신금융협회 <small>THE CREDIT FINANCE ASSOCIATION</small> | 보 도 자 료 | | | |
| | 2011. 8. 4(목) 조건부터 보도 가능 (방송/통신/인터넷은 3일 12시부터) | | | |
| 작성부서 | 여신금융협회 카드부 | | | |
| 책 임 자 | 김인성 부장(2011-0773) | 담 당 자 | 백인수 선임조사역(2011-0787) | |
| 배 포 일 | 2011. 8. 3(수) | 배포부서 | 홍보부(2011-0781, 0720), 2매 | |

여신금융업계, 고졸인력 채용 확대 추진
- 학력 인플레 및 고졸인력 실업문제 해소 기대 -

여신금융업계는 그동안 업무 특성상 타 금융업권에 비해 높은 비율의 고졸인력을 채용해 왔으며, 앞으로도 학력 인플레 및 고졸인력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고졸인력 채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

- 여신금융업계는 지난 2년간 연평균 18.8% 수준으로 고졸인력을 채용해왔으며, 업권별(카드, 리스, 할부, 신기술) 실정에 맞게 연도별 고졸인력 채용 계획을 마련하여 향후 3년간 약 1,500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 여신금융업계 고졸자 채용 비율을 23%까지 끌어올릴 예정

<여신금융업계 고졸자 채용 계획>

(단위 : 명,%)

| 구분 | 2009~2010 (연평균) | 연도별 채용 계획 | | | |
|---------------|--------------------|-----------|-------|-------|--------------|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계(연평균) |
| 총채용인원 (A) | 2,656 | 2,423 | 2,306 | 2,316 | 7,045(2,348) |
| 고졸인원 (B) | 498 | 495 | 510 | 532 | 1,537(512) |
| 고졸비율 (B/A) | 18.8% | 20.4 | 22.1 | 23.0 | 21.8 |

특성화고 인력 채용 연계 및 고졸인력 수행 가능 직무 발굴 노력

- ☐ 상업고, 세무고 등 특성화고의 우수학생을 추천받아 특정 직무지원 전문 인력으로 채용하고, 향후 고졸인력이 수행 가능한 직무를 발굴

정규직 고졸인력에 대한 학자금 등 지원 및 계약직 우수 고졸인력의 정규직 전환 확대

- ☐ 정규직 고졸인력에 대해서는 야간대학 진학 시 학자금 지원 및 외부 위탁교육 등을 통하여 여신금융업계의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졸인력과 균등한 처우 개선
- ☐ 계약직 고졸인력의 경우 업무능력과 성과를 평가하여 정규직 전환 확대

대졸공채 학력기준 철폐와 더불어 여신금융업계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

- ☐ 여신금융업계는 향후 대졸공채 학력기준을 철폐하여 우수 고졸인력 취업의 문을 더욱 넓히고, 우수한 고졸인재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며,
- ☐ 이와 함께, 학력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 해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우대채용 및 남녀간 고른 채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 실천에도 앞장서 나갈 예정임

| | | |
|---|--|---|
|  |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h2 style="margin: 0;">2011. 8. 4 (목) 조간부터 보도가능</h2> |  |
|---|--|---|

| | | |
|-------|--------------------|---|
| 작성부서 | 생명보험협회 종합기획부 | 손해보험협회 총무부 |
| 책 임 자 | 김홍중 부장 (2262-6628) | 황양훈 부장 (3702-8571) |
| 담 당 자 | 강성규 팀장 (2262-6620) | 방태진 팀장 (3702-8573) |
| 배포일시 | 2011. 8. 3 (수) | 배포부서 (생보협회) 2262-6630 (손보협회) 3702-8582 <div style="float: right;">총 4매</div> |

보험업계, 고졸 채용 확대 추진

- 생·손보협회는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 및 사교육비 문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과 연계된 고졸자 실업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부응*하고자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고졸채용 인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음
 - * 보험업계는 8월부터 「보험회사의 사회적책임 가이드라인」을 제정·시행중임
 - 同 가이드라인 제34조(고용창출 및 능력개발) 참조
- 보험업계는 이미 고졸 채용비율이 17.8%('09~'10년)에 달하고 있어 타금융업계 보다 높은 수준이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고졸 채용을 더욱 확대키로 하였음
- 보험회사는 각자 실정에 맞는 고졸인력 채용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까지 약 2,953명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며, 이는 전체 채용인력의 22.5% 수준임
 - 이를 통해 고졸채용 연평균 인원수는 지난 2년보다 1.4배 (722명→984명), 비율로는 4.7%p(17.8%→22.5%) 증가됨

보험업계 고졸학력자 채용 계획

(단위 : 명)

| 구 분 | '09~'10년 (연평균) | 연도별 채용 현황 | | | |
|-----------|-------------------|-----------|-------|-------|---------------|
| | | 2011년 | 2012년 | 2013년 | 합계(연평균) |
| 총채용인원(A) | 4,058 | 4,782 | 4,246 | 4,106 | 13,134(4,378) |
| 고졸인원(B) | 722 | 960 | 988 | 1,005 | 2,953(984) |
| 고졸비율(B/A) | 17.8% | 20.1% | 23.3% | 24.5% | 22.5% |

주) 생보(9개사)·손보(10개사) 기준

- 보험업계에서는 우수한 남·여 고졸인력에 대한 채용확대 방안과 함께 고졸 채용인력이 보험업계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등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 우선, 기존 사무지원직·상담직 등 일부 직군에 대하여 고졸자에 대한 채용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개인의 능력을 위주로 직무를 조정하는 등 업무의 다양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성화고, 자동차전문 마이스터고 등의 우수인력 및 저소득층 자녀를 고교장 추천방식 등을 통해 채용하여 사무지원 및 자동차보상 전문인력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한편, 기존에 대학생 및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해 오던 인턴제도를 특성화고 등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우수인턴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와 함께, 인사·교육 시스템을 보완하여 고졸 인력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보험전문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하였음
- 이번 고졸채용 확대로 인해 보험회사는 인력구조의 개편과 조직의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 사회적으로도 고졸자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되어 학력 인플레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첨부 : 보험업계 고졸채용 확대방안 1부. 끝.

(첨부) 보험업계 고졸채용 확대방안

① 사무지원직군 등의 고졸 채용확대 및 업무의 다양성 확보

- (현황) 사회전반적인 학력인플레 및 고학력자 실업문제 등으로 과거 고졸자 위주로 채용되었던 사무지원직*, 상담직** 등 일부 직군에서도 전문대 및 대졸자 위주로 채용

* 일반사무 지원

** 콜센터, 고객센터 등의 대고객 상담업무

- (개선방향) 사무지원직, 상담직 등 일부 직군에 대하여 고졸자의 채용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학력이 아닌 개인 능력 위주의 직무조정을 통해 고졸자의 업무 다양성을 확보

② 고교장 추천 등을 통한 우수인력 채용 확대

- (현황) 대졸자의 우수인력 확보노력에 비하여 우수한 고교 졸업생의 확보노력은 미미하여 특성화고의 우수인력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

* 특성화고 상급학교 진학률 : (1990년) 7.8% → (2010년) 71.1%

- (개선방향) 특성화고, 자동차전문 마이스터고 등의 우수인력 및 저소득층 자녀를 고교장 추천방식 등을 통해 채용하여 사무지원 및 자동차보상 전문인력 등으로 고용확대

③ 인턴제도 활용

- (현황) 기존의 인턴십은 주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예정자를 위주로 운영
- (개선방향) 특성화고 등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인턴제도를 운용하여 우수인턴에 대해서는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가점을 부여

④ 보험전문인력으로 양성

- **(현황)** 현재 회사내 교육프로그램은 대졸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졸자의 대한 별도 교육체계 미미
- **(개선방향)** 인사·교육 시스템을 보완하여 고졸 인력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들이 보험전문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마련 검토

※ 상대적으로 고졸 채용자가 많은 TM설계사(텔레마케터)에 대해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FC(Financial Consultant)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5.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사의 외형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발송한 공문 사본

☐ 해당사항 없음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6. 2008년 이후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해 부과한 벌금·과태료 현황

- 2010.3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10.6.13. 시행)으로 신용카드 불법 모집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이후 총 14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있었음

| 구 분 | 일 시 | 대 상 | 부과액 | 비 고 |
|-----|-----------|-----|--------------------------------|------|
| 과태료 | 2011.6.1. | 14명 | 위반정도에 따라 120만원 에서 370만원을 부과 | |
| 벌 금 | - | - | - | 해당없음 |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7.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대출카드(마이너스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

☐ 저축은행이 발급하는 대출카드란 저축은행의 종합통장 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대출”)에 의한 대출금을 동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임

☐ 이에 동 대출카드 발급 관련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음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①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계속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4. 자금의 대출 업무

○ 상호저축은행표준업무방법서

제5조(업무의 종류) 상호저축은행은 다음의 업무를 영위한다.

5. 자금의 대출업무

마. 종합통장대출

제49조(현금카드를 이용한 입출금등)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의 거래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소 내부 또는 외부에 현금자동지급기 또는 현금자동입출기 등의 특수창구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8. 보험회사와 신용카드사간의 수수료 갈등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조정 또는 지시한 내용

- '10.10월 생보협회, 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주요 카드사 담당임원과 회의를 개최하여 수수료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수수료에 대한 업계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11.9월 회의를 개최*하여 보험업계와 카드업계간 상호 입장과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 * 참석 : 생보·손보·여신금융협회 및 주요 생보사·손보사·카드사 담당 임원
- 향후 소비자의 지급결제 편의를 확대하면서, 양 업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협의하도록 권고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9. 신용회복위원회 업무현황 자료
10. 자산관리공사에서 수행하는 채무조정, 바뀐 드림론, 소액대출 사업에 대해서
 - 신청자격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
 - 연도별(2011년은 월별)상담실적
 - 연도별(2011년은 월별)지원 인원 및 금액
 - 신용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점현황(업무협조된 지자체 포함)
11. 2010년 5.27 발표된 "금융채무불이행자 취업지원 방안"의 진행경과 및 실적

- ☐ 9번 자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음
- ☐ 10번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음
- ☐ 11번 자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하도록 조치하였음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2. 이자율 상한선이 낮아진 이후 대부업체의 대출심사기준이 강화되었는지 여부와 이자수입, 수수료수입이 감소했는지 여부

-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는 대다수가 법정상한 금리수준에서 결정되므로 최고이자율 상한 인하시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10.7 이전) 연49% → ('10.7) 연44% → ('11.6) 연39%

- 다만, 법정상한 금리 인하가 대부업체의 경영실적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평균적 대부이용기간(1~3년) 등을 감안할 때 장기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3. '08년 이후 개최한 대부업정책협의회 의사록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 ☐ 현재까지 개최된 대부업정책협의회의 일시, 회의안건, 참석자 등은 <붙임>과 같음

(붙임)

대부업정책협의회 회의개최 내역

| 일 시 | 장 소 | 출석위원 | 회의안건 |
|-----------|-----|---|---|
| '08.1.29 | 금융위 | 재경부장관, 금감위 부위원장, 법무부 차관, 행자부 균형발전지원본부장, 공정위 사무처장 | ○대부업 관리감독상 지자체와 협력 강화 ○사금융이용자 실태조사 ○대부업법령 개정 |
| '08.6.3 | 금융위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담당과장, 행안부 담당과장, 공정위 담당과장 |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
| '08.9.9 | 금융위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 ○대부업법 개정 추진 ○제4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
| '08.12.15 | 금융위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차관보, 행안부 지역경제발전과장 | ○대부업 관리·감독 우수 지자체 포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제4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 '09.3.30 | 금융위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공정위 약관제도과장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대부거래 표준약관 등의 제개정 계획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제5차 전국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계획 ○사이버금융감시반 운영 현황 |
| '09.4.24 | 금융위 | 금융위원장, 재정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행안부 지역경제과장, 공정위 사무처장 |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
| '09.10.15 | 금융위 | 서면 회의 |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 ○대부업 관련제도 개선 추진동향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실적 ○대부업 관리감독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대부업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

| 일 시 | 장 소 | 출석위원 | 회의안건 |
|-----------|-----|---|---|
| '09.12.30 | 금융위 | 서면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금융감독대상 포상계획(안) ○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 사금융 종합애로지원센터 개소 |
| '10.4.28 | 금융위 | 서면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차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
| '10.7.23 | 금융위 | 서면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및 계획 ○ 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 현황 ○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행위 근절방안 ○ 제7차 대부업 실태조사 추진계획 |
| '10.11.03 | 금융위 | 금융위 부위원장, 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 ○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향후 계획 ○ 대부업체 대출금리 및 불법광고 점검결과 |
| '11.5.13 | 금융위 | 서면 회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불법 사금융 단속실적 및 향후 계획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4. 햇살론 여신심사 기준 개선방안에서 “종합
신용평가 모형”에 대한 설명자료**

※ 첨부 『종합신용평가모형 도입방안』 참조

□ 도입 필요성 : 대출대상 및 대출한도 산정의 합리성 제고

- 현행 방식은 외부 CB 등급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대출대상 및 한도를 결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에 적합한 체계적인 상환능력 평가에 한계
- 여신심사 기준인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DTI)이 cut-off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출 불가

□ 도입 방안

- 햇살론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 구축

(1) 근로자 대출 : 「개인신용평가모형」 구축

-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근로자대출에 대한 보증 관련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탁보증기관(각 금융회사)에서 활용
- 최근 1년 이내 대출보유 총 건수, 최근 3/6개월내 연체 경험,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등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등급 부여(금융회사는 등급별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출)

(2) 자영업자 대출 : 기존 「소상공인평가모형」 수정 도입

-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현재 사용 중인 소상공인평가모형을 2,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심사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활용
- 자영업자의 업력, 사업자등록 여부, 거래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등급 부여

□ 향후 계획

- '11.8월 현재 전산시스템 구축 중으로 이르면 9월말부터 시행 예정

【 참 고 】

신용평가모형상 평가항목 구성

□ 개인신용평가모형(안)

| No | 항목구성 | 범주 | 배점 |
|-----|---|----|-----|
| 1 | 3년내 채무불이행 등록 총 건수 | 3 | 53 |
| 2 | 신용카드 보유 총 건수 | 3 | 27 |
| 3 | 보유 신용카드 중 최초 발급일로부터의 기간 | 4 | 42 |
| 4 | 최근 1년내 대출보유 총 건수(주택담보대출 제외) | 3 | 74 |
| 5 | 최근 3/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경험 | 3 | 85 |
| 6 | 업권별 대출보유 패턴 | 4 | 71 |
| 7 | 보유 대출 건 중 최초 개설일로부터의 기간 (최근 대출 개설기간과 비교) | 4 | 58 |
| 8 | 거주유형과 근속년수에 따른 고객특성 | 4 | 60 |
| 9 | 고용형태와 근속년수에 따른 고객특성 | 3 | 14 |
| 10 | 근속년수에 따른 총소득 대비 총부채 비율* | 4 | 75 |
| 11 | 성별 및 연령 그룹 | 3 | 31 |
| 전 체 | | | 590 |

* 총부채 : 주택담보대출 제외

□ 자영업자평가모형(안)

| No | 항목구성 | 범주 | 배점 |
|-----|------------------------------|----|-----|
| 1 | 개인신용등급 | 6 | 169 |
| 2 | 사업주의 연령 | 3 | 29 |
| 3 | 사업장 소유여부 | 2 | 22 |
| 4 | 거주주택 소유여부 | 2 | 22 |
| 5 | 최근 3/6개월내 5일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경험 | 2 | 15 |
| 6 | 영업유지기간 | 2 | 36 |
| 7 | 사업자등록 여부와 종업원수에 따른 고객특성 | 3 | 43 |
| 8 | 사업자등록 여부와 영업유지기간에 따른 고객특성 | 4 | 44 |
| 전 체 | | | 380 |

※ 지역재단에서는 위 평가모형 외에도 현장실사 결과, 소상공인 보증부대출과 관련된 내부 정보 등을 보증심사시 활용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5. 08년 이후 대부광고 규제 강화 연혁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광고 규제는 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지, ② 대부광고 표시규제, ③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음

(붙임) 현행 대부업법 광고관련 규제

【法律】

제9조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施行令】

제3조의2(상호 등)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제6조(대부조건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삭 제>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 불법광고 근절 대책

- 금융위는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실시 ('11.8.2~8.22, 입법예고)

※ 개별 업체의 광고비용 및 광고적발 건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

① 과도한 차입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의무 부과

- TV, 일정크기 이상의 지면 등을 통해 대부광고를 할 경우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의무화
- 경고문구는 아래 세가지 중 택일하도록 함
 -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경고문구 표시의무가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글자 크기 등의 기준을 제시
 - ◆ 경고문구의 글씨체는 고딕체, 글자크기는 해당 광고 최대글자의 1/3 이상
 - ◆ TV 광고의 경우, 경고문구의 노출시간이 해당 광고시간의 1/5 이상

② 대부업 광고의 식별 용이성 제고 (영 §6, §6의2, §6의3)

- 지면·인터넷 등에 대부광고시, 이용자가 해당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록번호 및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표기된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의무화
- 아울러,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대부이자율 및 부대비용의 글자크기는 해당 광고 최대글자의 1/3 이상으로 의무화
(예 해당 광고의 최대글자 크기 30pt → 필수사항 글자크기 최소 10pt 이상)

-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

③ 대부광고 자율규제 유도 (영 §11의2)

- 대부금융협회의 업무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올바른 대부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 대부업협회에 “대부광고 자율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스스로 과도하고 부적절한 대부광고를 시정 및 자제토록 유도

* (예시)

- 구성: 금융전문가, 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 기능: (i) 문제 소지있는 대부광고에 대한 사후심의
 (ii) 심의요청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iii) 시정권고 및 관계기관 통보조치(미시정시)
 (iv) 대부업계의 광고 자정노력 선도 등

- 대부업협회내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추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전담반을 설치·운영

*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위반시 형사처벌)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6. 2008년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교육 관련 예산 결산 현황 및 금융교육 실적

① 금융교육 관련 예산/결산 현황

| 사업명 | 예산액 및 상세내역 |
|---------|---|
| 금융소비자보호 | ○ 예산액 : 128백만원 - 금융소비자보호 현황조사 : 40백만원 - 금융교육협의회 운영비 : 18백만원 - 금융소비자 교육콘텐츠 개발 : 70백만원 |

* 금융소비자보호 사업은 2011년 신규사업으로 결산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② 금융교육 실적

- ☐ 금융교육의 기본방향 수립 및 금융교육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금융교육협의회」를 구성*(09.12)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
협의회, 한국투자자보호재단, 개별협회 등 13개 기관

- 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10.1)하여 금융교육 현황을
점검하고 10년도 금융교육 추진방안 선정*

* 청소년 금융교육 네트워크 운영활성화,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은퇴설계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

-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10.11)하여 10년도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11년도 추진방향 선정*

* 금융소비자 관련 현황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마련** 및 소비자편에선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등

- 현재 금융교육 중장기 비전 및 콘텐츠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금년말 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 용역사업으로 KDI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교육협회 실무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하고 있음

-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는 실시완료(11.8)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7. 2005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부실금융기관 리스트, 지정당시 의사록

<저축은행>

| 번호 | 저축은행명 | 부실금융기관 결정일 | 회의제목 |
|----|----------|---------------|-------------------|
| 1 | (서울)한중 | 2005-01-13 | 제2차 금융감독위원회 서면회의 |
| 2 | (부산)인베스트 | 2005-07-21 | 제12차 금융감독위원회 서면회의 |
| 3 | (경기)좋은 | 2006-09-08 | 제15차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
| 4 | (전남)대운 | 2007-01-19 | 제1차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
| 5 | (전남)홍익 | 2007-03-16 | 제4차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
| 6 | (경북)경북 | 2007-05-25 | 제9차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 |
| 7 | (경기)분당 | 2008-02-21 |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 정례 |
| 8 | (전북)현대 | 2008-03-24 | 제2차 금융위원회 임시 |
| 9 | (전북)전북 | 2008-12-26 | 제18차 금융위원회 정례 |
| 10 | (제주)으뜸 | 2009-08-11 | 제2차 금융위원회 임시 |
| 11 | (전북)전일 | 2009-12-31 | 제3차 금융위원회 임시 |
| 12 | (서울)삼화 | 2011-01-14 | 제1차 금융위원회 임시 |
| 13 | (대전)대전 | 2011-02-17 | 제2차 금융위원회 임시 |
| 14 | (부산)부산 | 2011-02-17 | 제2차 금융위원회 임시 |
| 15 | (부산)부산2 | 2011-02-19 | 제3차 금융위원회 임시 |
| 16 | (서울)중앙부산 | 2011-02-19 | 제3차 금융위원회 임시 |

| 번호 | 저축은행명 | 부실금융기관 결정일 | 회의제목 |
|----|----------|---------------|--------------|
| 17 | (전남)보해 | 2011-02-19 | 제3차 금융위원회 임시 |
| 18 | (전북)전주 | 2011-02-19 | 제3차 금융위원회 임시 |
| 19 | (강원)도민 | 2011-04-29 | 제6차 금융위원회 임시 |
| 20 | (대전)대전 | 2011-04-29 | 제6차 금융위원회 임시 |
| 21 | (부산)부산 | 2011-04-29 | 제6차 금융위원회 임시 |
| 22 | (부산)부산2 | 2011-04-29 | 제6차 금융위원회 임시 |
| 23 | (서울)중앙부산 | 2011-04-29 | 제6차 금융위원회 임시 |
| 24 | (전남)보해 | 2011-04-29 | 제6차 금융위원회 임시 |
| 25 | (전북)전주 | 2011-04-29 | 제6차 금융위원회 임시 |
| 26 | (울산)경은 | 2011-08-05 | 제7차 금융위원회 임시 |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7-1. 2000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부실금융 기관 리스트, 지정당시 의사록

☐ 부실금융기관리스트(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권역 | 금융회사 | 지정일 | 금융위 차수 |
|----|-------|------------|---------|
| 보험 | 삼신생명 | 2000.11.30 | 36차(서면) |
| 보험 | 한일생명 | 2001.01.11 | 2차(서면) |
| 보험 | 현대생명 | 2001.01.11 | 2차(서면) |
| 보험 | 국제화재 | 2001.03.06 | 8차(서면) |
| 보험 | 리젠트화재 | 2001.03.06 | 27차(서면) |
| 보험 | 대한화재 | 2001.03.06 | 27차(서면) |
| 보험 | 대신생명 | 2001.07.12 | 27차(서면) |
| 보험 | 한일생명 | 2002.10.25 | 18차 |

붙임 : 1. 부실금융기관리스트 지정당시 의사록.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7-2. 2005년 이후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부실금융 기관 리스트, 지정당시 의사록

- ☐ 2005년 이후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금융위원회 의사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 2 차
금융감독위원회 서면의결 의사록
(2005. 1. 13.)

| 과 장 | | 위 원 장 |
|-----|--------|-------|
| | 기획행정실장 | |
| | | |

금 용 감 독 위 원 회

2005년도 제 2 차
금융감독위원회 서면의결 의사록
(2005. 1. 13.)

금 융 감 독 위 원 회

1. 의 안 : 의결안건 제2호 『(서울)한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
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안』

2. 의결일자 : 2005년 1월 13일(목)

| | | |
|-----------|-------|-------|
| 3. 참여위원 : | 위 원 장 | 윤 증 현 |
| | 부위원장 | 양 천 식 |
| | 위 원 | 이 우 철 |
| | 위 원 | 김 광 립 |
| | 위 원 | 이 성 태 |
| | 위 원 | 최 장 봉 |
| | 위 원 | 이 태 훈 |
| | 위 원 | 하 성 근 |
| | 위 원 | 전 성 빈 |

4. 불참위원 : 없 음

5. 서면의견 : 없 음

6. 의결결과 : 원안의결

7. 표결내용 : 가결 9, 부결 0

| | |
|-------|-------|
| 위 원 장 | 윤 증 현 |
| 간 사 | 정 채 웅 |

2005년도 제 12 차
금융감독위원회 서면의결 의사록
(2005. 7. 21.)

| 과 장 | | 위 원 장 |
|-----|--------|-------|
| | 기획행정실장 | |
| | | |

금 용 감 독 위 원 회

2005년도 제 12 차
금융감독위원회 서면의결 의사록
(2005. 7. 21.)

금 융 감 독 위 원 회

1. 의 안 : 의결안건 제216호 『(부산)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2. 의결일자 : 2005년 7월 21일(목)

| | | |
|-----------|------|-------|
| 3. 참여위원 : | 위원장 | 윤 증 현 |
| | 부위원장 | 양 천 식 |
| | 위원 | 이 우 철 |
| | 위원 | 이 성 태 |
| | 위원 | 최 장 봉 |
| | 위원 | 전 성 빈 |
| | 위원 | 표 성 수 |
| | 위원 | 장 범 식 |
| | 위원 | 박 병 원 |

4. 불참위원 : 없 음

5. 서면의견 : 없 음

6. 의결결과 : 원안의결

7. 표결내용 : 가결 9, 부결 0

| | |
|-----|-------|
| 위원장 | 윤 증 현 |
| 간 사 | 석 일 현 |

제15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

(2006. 9. 8.)

금 융 감 독 위 원 회

1. 일 시 : 2006년 9월 8일(금) 08:15~9:30

2.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 | | | |
|---|---|---|------|
| 양 | 천 | 식 | 부위원장 |
| 박 | 병 | 원 | 위 원 |
| 문 | 재 | 우 | 위 원 |
| 이 | 승 | 일 | 위 원 |
| 전 | 성 | 빈 | 위 원 |
| 표 | 성 | 수 | 위 원 |
| 장 | 범 | 식 | 위 원 |

4. 결석위원

| | | | |
|---|---|---|-------|
| 윤 | 증 | 현 | 위 원 장 |
| 최 | 장 | 봉 | 위 원 |

□ 의안 제179호 『(경기)좋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해당회사의 BIS비율이 -22%인데 감독당국의 사전조치가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 질의함

(이에 대해 해당 저축은행의 의도적 전산조작 등으로 인해 정확한 부실규모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우리원의 상시감시 과정에서 위규 사실이 포착되어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은행의 부실규모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변)

⇒ 원안 의결함

제1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

(2007. 1. 19.)

금 융 감 독 위 원 회

1. 일 시 : 2007년 1월 19일(금) 08:50~09:35

2.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 | | | |
|---|---|---|------|
| 김 | 석 | 동 | 부위원장 |
| 최 | 장 | 봉 | 위 원 |
| 문 | 재 | 우 | 위 원 |
| 전 | 성 | 빈 | 위 원 |
| 표 | 성 | 수 | 위 원 |
| 장 | 범 | 식 | 위 원 |

4. 결석위원

| | | | |
|---|---|---|-------|
| 윤 | 증 | 현 | 위 원 장 |
| 박 | 병 | 원 | 위 원 |
| 이 | 승 | 일 | 위 원 |

□ 의안 제1호 『(전남)대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비은행 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해당 기관의 자본금 증액 시한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 경영명령개선명령 중 자본금 증액 기한을 영업정지일로부터 2월 이내로 수정하라고 지시

⇒ 수정 의결함

위원장

기획행정실장

과 장

제4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

(2007. 3. 16.)

금 융 감 독 위 원 회

1. 일 시 : 2007년 3월 16일(금) 8:15~10:00

2.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윤 증 현 위 원 장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최 장 봉 위 원

전 성 빈 위 원

표 성 수 위 원

장 범 식 위 원

4. 결석위원

윤 용 로 부위원장

김 석 동 위 원

□ 의안 제27호 『(전남)홍익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BIS비율이 △29.39로 떨어지기 전까지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함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의 부실 은폐 등으로 인해 금감원이 부실규모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으며,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은 연체기간이 6개월 경과하거나 검사지적후 6개월(동일인한도초과대출)이 경과하여야 부실여신으로 분류가 가능한바, 홍익저축은행의 경우 거액의 불법·부실여신에 대한 6개월의 연체기간 등이 2006년 하반기에 도래함에 따라 BIS비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라고 답변)

⇒ 원안 의결함

위원장

기획행정실장

의사운영팀장

제9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

(2007. 5. 25.)

금 융 감 독 위 원 회

1. 일 시 : 2007년 5월 25일(금) 8:10~9:00

2.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 | | | |
|---|---|---|------|
| 윤 | 용 | 로 | 부위원장 |
| 박 | 대 | 동 | 위 원 |
| 최 | 장 | 봉 | 위 원 |
| 표 | 성 | 수 | 위 원 |
| 장 | 범 | 식 | 위 원 |
| 조 | 현 | 연 | 위 원 |

4. 결석위원

| | | | |
|---|---|---|-------|
| 윤 | 증 | 현 | 위 원 장 |
| 김 | 석 | 동 | 위 원 |
| 이 | 승 | 일 | 위 원 |

□ 의안 제127호 『(경북)경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 저축은행이 경영개선요구에 대한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함

(소액대출의 부실 및 기존 부실여신 은폐로 인해 동 저축은행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답변)

-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예금보험기금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경영개선권고 미이행시에도 경영개선명령 발동 가능·경영개선명령 이행기간 최소화 등 적기시정조치 절차를 개선하였다고 답변)

⇒ 원안 의결함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3. 2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3월 24일(금) 07:00~07:2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용 환 위 원

이 우 철 위 원

이 승 일 위 원

박 대 동 위 원

4. 결석위원

최 중 경 위 원

조 현 연 위 원

5. 회의결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나. 의사진행

□ 의안 제2호 『(전북)현대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난 금요일에 상당한 금액의 예금 인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이었는지 특별한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함

(소문이 번져서 금요일 마감시간에 대량 인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현재 이 은행은 유동성 잔액이 3억원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시기를 앞당기게 되었다고 답변)

- 저축은행의 예금보험 재정적자 규모가 거의 2조원에 이르고 있는 만큼, 감독당국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됨
- 저축은행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6. 폐 회

위원장이 2008년도 금융위원회 제2차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 | |
|-------|-------|
| 위 원 장 | 전 광 우 |
| 간 사 | 고 승 범 |

제3차 금융감독위원회 의사록

(2008. 2. 21.)

금 융 감 독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2월 21일(목) 15:10~17:40

2. 장 소 : 금융감독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용 덕 위 원 장

이 승 우 부위원장

김 용 환 위 원

이 승 일 위 원

표 성 수 위 원

장 범 식 위 원

조 현 연 위 원

4. 결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박 대 동 위 원

□ 의안 제30호 『(경기)분당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비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신용대출의 급격한 증가가 대주주의 형사소추와 관련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함

(신용대출의 증가는 공격적 경영에 기인한 것으로 대주주의 형사소추와는 무관하다고 답변)

⇒ 원안 의결함

| |
|-------|
| 위 원 장 |
| |

기 획 조 정 관

의사운영정보팀장

제1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12. 2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12월 26일(금) 14:20~17:1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281호 『(전북)전북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8. 1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8월 11일(화) 07:30~07: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종 창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채 희 율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나.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191호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사후 어떤 대책이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함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거나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부하여 타 금융기관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여신거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규 대출 취급은 제한되지만 기존 대출금의 기일 연장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답변)

-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처리방안에 대해 질의함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원칙에 따라서 처리될 것이며 계약이전 결정시 예금보험공사의 가교저축은행에 계약이전 후 으뜸저축은행의 순자산 부족분에 대하여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존하고 향후 동 가교저축은행은 매각할 예정이라고 답변)

- 제주도의 2개 저축은행 중 1곳이 적기시정조치 되는 것이므로 관련 유관 기관이 함께 이에 대한 과장이 최소화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5. 폐회선언

위원장이 2009년도 금융위원회 제2차 임시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12. 3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12월 31일(목) 15:30~16: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376호 『(전북)전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실규모가 증가된 이유에 대해 질의함

(지역 경제 악화, 기존에 취급되었던 여신 건전성의 악화 등으로 부실규모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자율적인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통해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을 줄여 줄 수 있지만, 구조조정 실패시 부실규모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간 사례를 통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관련 기관과 함께 건전성 상시감독 등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감독제도에 대해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제1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1. 1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1월 14일(금) 07:30~ 07: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10호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예금자 보호 차원에서 가지급금 지급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저축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신속한 검사 실시 및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요청함

⇒ 원안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제1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2. 1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2월 17일(목) 07:30~ 08: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35호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 제36호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조치로 자회사들의 예금인출사태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지 질의함

(각 자회사의 유동성 상황이 다르고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긴급자금지원 등 유동성 지원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답변함)

- 다른 일반 저축은행으로 동 조치의 영향이 파급되지 않도록 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예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각각 원안 의결함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2. 1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2월 19일(토) 07:30~ 08:1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임 종 룡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39호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 제40호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 제41호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 제42호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각하므로 영업정지 조치안에 이견은 없으나, 유동성 부족 문제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질의함

(표면상으로는 유동성 부족으로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 단계에 이르렀지만,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재무상태에 있어서 순자산 부족의 문제가 그 근원에 깔려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 지난 브리핑 내용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유지되면 좋으나, 어떤 불안요인이 나타날 시 견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를 대비한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저축은행중앙회 등의 지원을 통해 저축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건전한 저축은행의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 각각 원안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제3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6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4. 2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4월 29일(금) 11:20~12:0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92호 『(강원)도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3호 『(전남)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4호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5호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6호 『(서울)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7호 『(전북)전주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 제98호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동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이 전 분기에 비해 급격히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질의함

(영업정지 후 실시한 검사 과정 등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부분이 BIS비율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업정지 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분이 아닌지 질의함

(과거 영업정지 처분시 상호저축은행법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모두 근거로 든 사례가 있으며, 기존의 판례, 법률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중처분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 자구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매각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매각조치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질의함

(충분한 기간동안 자구 노력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화 됐다는 점, 검사결과 확인된 부실규모가 매우 커서 자체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증자명령 이행기간 중에 매각절차를 병행하고자 함.

다만, 증자명령 이행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매각작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답변함)

- 7개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조치가 지난 조치와 무엇이 다른지, 저축은행들의 BIS비율이 급격히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오해 및 혼란이 없도록 적극 대응을 해 줄 것을 요청함

⇒ 각각 원안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제6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제7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8. 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8월 5일(금) 18:10~18: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신 제 윤 부위원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의결안건 심의

□ 의안 제173호 『(울산)경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등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지난 저축은행 영업정지시 대주주, 임직원 등의 부당인출 문제가 있었는데 재발할 위험은 없는지 질의함

(동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의 통합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중앙회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하며, 금감원 및 예보직원이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부당지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함)

-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부당인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후에도 적기시정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함
- 지난 번에 발표한 저축은행 관련 하반기 대책에서, 9월 하순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발표시점까지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유동성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

“다만, 이미 상반기중 검사가 종료되어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로서 충실한 자구노력이 미흡한 경우이거나 과도한 예금인출로 유동성 부족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전에 관련 조치가 부과될 수 있음”이라고 발표한 바,

시장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조치가 발표 내용 중 단서에 따라 부과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홍보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원안 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11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임시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8. 대부업 관련

가. 대부업체 등록 현황 및 금융당국 추산 미등록 업체수

□ 등록 대부업체 현황 : '10.12월말 기준 14,014개 업체

| 구 분 | '09.3말 | '09.12말 | '10.6말 | '10.12 |
|-------|--------|---------|--------|--------|
| 등록업체수 | 15,723 | 14,783 | 15,380 | 14,014 |

* 영업형태별 : 대부업 9,985개, 대부중개업 2,196개, 대부 및 대부중개업 1,833개

□ 미등록 업체수

-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중인 미등록 대부업체수를 파악하기 곤란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8. 대부업 관련

나. 자산규모 상위 10개 등록대부업체의 자본금, 수익현황 및 금융기관 대출현황

□ 대형 대부업체 경영현황 (11.3월 감사보고서 기준, 출처 : DART)

(단위 : 억원, %)

| 번호 | 업체명 | 총자산 | 대출 채권 | 자기자본 | | 당기 순이익 |
|-----|--------------|--------|----------|--------|-------|-----------|
| | | | | | 자본금 | |
| 1 | 에이애피 파이낸셜 | 16,433 | 12,383 | 7,198 | 300 | 1,451 |
| 2 | 산와 | 10,388 | 9,408 | 5,613 | 200 | 1,421 |
| 3 | 웰컴크레디라인 | 5,350 | 5,017 | 1,154 | 196 | 302 |
| 4 | 바로크레딧 | 2,945 | 2,617 | 614 | 114 | 198 |
| 5 | 리드코프 | 2,571 | 2,084 | 1,046 | 138 | 187 |
| 6 | 태강코퍼레이션 | 1,663 | 1,559 | 173 | 44 | 61 |
| 7 | 원캐싱 | 1,615 | 1,489 | 563 | 34 | 103 |
| 8 | 미즈사랑 | 1,577 | 1,510 | 156 | 50 | 102 |
| 9 | 하이캐피탈 | 1,328 | 1,213 | 256 | 164 | 60 |
| 10 | 스타크레딧 | 1,144 | 981 | 263 | 30 | 3 |
| 합 계 | | 45,014 | 38,261 | 17,036 | 1,270 | 3,888 |

주 : 1. 상기 자료는 DART(전자공시시스템)에 있는 각 업체의 감사보고서상 수치임
2. 소매금융 취급 상위업체 기준임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8. 대부업 관련

다. 자산규모 상위 10개 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비용,
불법광고 적발건수 및 불법광고 근절대책

☐ 불법광고 근절 대책 (상세 : 붙임)

- 금융위는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실시 ('11.8.2~8.22, 입법예고)

※ 개별 업체의 광고비용 및 광고적발 건수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붙임 : 대부광고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 과도한 차입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의무 부과

- TV, 일정크기 이상의 지면 등을 통해 대부광고를 할 경우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표시토록 의무화
- 경고문구는 아래 세가지 중 택일하도록 함
 -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 ◆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 경고문구 표시의무가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글자 크기 등의 기준을 제시
 - ◆ 경고문구의 글씨체는 고딕체, 글자크기는 해당 광고 최대글자의 1/3 이상
 - ◆ TV 광고의 경우, 경고문구의 노출시간이 해당 광고시간의 1/5 이상

② 대부업 광고의 식별 용이성 제고 (영 §6, §6의2, §6의3)

- 지면·인터넷 등에 대부광고시, 이용자가 해당 대부업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 등록번호 및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표기된 상호를 좌측 최상단에 배치토록 의무화
 - 아울러, 상호·등록번호·전화번호·대부이자율 및 부대비용의 글자크기는 해당 광고 최대글자의 1/3 이상으로 의무화
(예: 해당 광고의 최대글자 크기 30pt → 필수사항 글자크기 최소 10pt 이상)
-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

③ 대부광고 자율규제 유도 (영 §11의2)

○ 대부금융협회의 업무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업계 자율적으로 올바른 대부광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 대부업협회에 “대부광고 자율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업계 스스로 과도하고 부적절한 대부광고를 시정 및 자제토록 유도

* (예시)

- 구성: 금융전문가, 업계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
- 기능: (i) 문제 소지있는 대부광고에 대한 사후심의
(ii) 심의요청 대부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iii) 시정권고 및 관계기관 통보조치(미시정시)
(iv) 대부업계의 광고 자정노력 선도 등

- 대부업협회내에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를 추적하여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전담반을 설치·운영

* 현행 대부업법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광고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위반시 형사처벌)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8. 대부업 관련

라. 대부업체 광고 규제 관련 규정

- ☐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광고 규제는 ①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 금지, ② 대부광고 표시규제, ③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음 (상세 : 붙임)

(붙임) 현행 대부업법 광고관련 규제

【法律】

제9조 (대부조건외의 게시와 광고) ①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 이자계산방법, 변제방법·연체이자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하여야 한다.

②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업 등록번호
3.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2.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3. 중개를 통하여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
4.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5. 그 밖에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대부업자등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제2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3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등) ① 대부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부이자율,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거래상대방, 대부중개를 통하여 대부할 대부업자, 그 밖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의 내용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
 - 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
 - 다.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가 다른 대부업자등의 대부 또는 대부중개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2. 대부 또는 대부중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유인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
 - 나.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방법
 3. 그 밖에 대부업자등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행위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대부업자등에게 제2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施行令】

제3조의2(상호 등) ② 제1항에 해당하여 상호(商號) 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대부업자등이 대부업등과 관련하여 광고 등의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상호와 함께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글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한다.

제6조(대부조건외의 게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부업 등록번호
2. <삭 제>
3.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② 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③ 법 제9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2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대부중개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

3.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제6조의2(대부업자등의 광고)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 대부업자등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2.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19. '08년 이후, 각 업권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심사위원회 의사록**

- ☐ (붙임1) 대주주 적격성심사 관련 금융위원회 안건 목록
- ☐ (붙임2) 대주주 적격성심사 관련 금융위원회 의사록 사본 일체

< 붙임 1>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 금융위 안건목록

| 연번 | 안건제목 | 금융위 회차 |
|----|---|-----------|
| 1 |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 ‘08년 제1차 |
| 2 | 현대자동차(주) 등의 신흥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 |
| 3 | 밸류에프투유한회사의 리딩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 |
| 4 |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주식 취득 승인안 | ‘08년 제3차 |
| 5 | 대우캐피탈(주)의 (주)기보캐피탈 주식 취득 승인안 | |
| 6 |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08년 제6차 |
| 7 |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 | ‘08년 제7차 |
| 8 |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 | ‘08년 제9차 |
| 9 | (주)현대미포조선의 씨제이투자증권(주) 및 씨제이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 ‘08년 제11차 |
| 10 |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트레이드 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 ‘08년 제12차 |
| 11 |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 및 한국아이비금융(주)의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 주식취득 승인안 | |
| 12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08년 제14차 |
| 13 | Deutsche Holdings (Malta) Ltd.의 도이치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 ‘08년 제16차 |
| 14 |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충북)중부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08년 제15차 |
| 15 |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케이티비이천철사모투자전문회사의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
| 16 |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
| 17 | (주)한화건설,한화엘앤씨(주),(주)한화갤러리아,한화리조트(주), 한화테크엠(주)의 (경기)새누리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

| 연번 | 안건제목 | 금융위 회차 |
|----|--|-----------|
| 18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8.6월말 기준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 | '09년 제1차 |
| 19 | 현대커머셜(주)의 현대카드(주) 주식취득 승인안 | '09년 제3차 |
| 20 |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09년 제4차 |
| 21 |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 자회사 소유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 | '09년 제7차 |
| 22 |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8.12월말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 | |
| 23 | 산은캐피탈(주)의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 '09년 제9차 |
| 24 |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안 | '09년 제11차 |
| 25 | (주)신한은행의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 |
| 26 | (주)케이비금융지주의 케이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 |
| 27 |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
| 28 | (주)케이티캐피탈의 뱅가드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 '09년 제13차 |
| 29 | (주)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주) 신용카드업 예비인가안 | '09년 제14차 |
| 30 | 비씨카드(주)의 스마트페이(주)에 대한 출자승인안 | '09년 제14차 |
| 31 | (주)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주) 신용카드업 인허가안 | '09년 제17차 |
| 32 | 산은캐피탈(주)의 KDBC-JKL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 |
| 33 |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제주)미래상호저축은행의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09년 제21차 |
| 34 | (주)보고비씨투자목적회사의 비씨카드 대주주 승인안 | |
| 35 |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시피2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 | |
| 36 | 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9.6월말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09년 제22차 |

| | 안건제목 | 금융위 회차 |
|----|---|-----------|
| 37 |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3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 ‘09년 제22차 |
| 38 |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1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 |
| 39 | 한국종합캐피탈의 케이케이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 |
| 40 | (주)골든브릿지캐피탈의 (주)굿이에프 주식취득 승인안 | ‘09년 제23차 |
| 41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하나카드(주)대주주 승인안 | ‘10년 제3차 |
| 42 |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금호생명보험(주)대주주 변경 승인안 | ‘10년 제4차 |
| 43 | 흥국증권(주) 및 흥국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 |
| 44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의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10년 제7차 |
| 45 | 한화증권(주)의 푸르덴셜투자증권(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및 출자승인안 | ‘10년 제9차 |
| 46 |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9.12월말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10년 제10차 |
| 47 | 삼공개발(주)의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10년 제11차 |
| 48 | (주)대유신소재 및 (주)대유디엠씨의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
| 49 | 아이엔지증권(주)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 | |
| 50 |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10년 제12차 |
| 51 | 메트라이프글로벌매니지먼트(주)의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대주주 변경 승인안 | ‘10년 제13차 |
| 52 | 롯데카드(주)의 (주)이비카드에 대한 출자 승인안 | |
| 53 | 웅진금융제일유한회사의 (경기)늘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10년 제14차 |
| 54 |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
| 55 | 케이디비칸서스밸류 유한회사의 케이디비생명보험(주)대주주 변경 승인안 | ‘10년 제16차 |
| 56 | (주)신동해인터내쇼널 및 (주)안스코퍼레이션의 (광주)동양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주식취득 승인안 | ‘10년 제17차 |

| | 안건제목 | 금융위 회차 |
|----|---|-----------|
| 57 |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PEF(KoFC-QCP IBKC 그로쓰 챔프2010)에 대한 출자 승인안 | ‘10년 제18차 |
| 58 | 오릭스코퍼레이션의 (서울)푸른2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10년 제20차 |
| 59 | 강나영의 (부산)우리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
| 60 |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10년 제23차 |
| 61 | 한국씨티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
| 62 | 에이스아이앤에이홀딩스(주)의 뉴욕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 ‘11년 제1차 |
| 63 | 동양생명보험(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 | ‘11년 제5차 |
| 64 | (주)한국의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
| 65 | 웅진캐피탈의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11년 제8차 |
| 66 | 태광산업(주)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의 대주주 승인안 | ‘11년 제10차 |
| 67 | 하나에스케이카드(주)의 에프앤유신용정보(주) 주식 취득 승인안 | ‘11년 제11차 |
| 68 | 최정인 및 오선민의 (충북)한성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11년 제12차 |
| 69 |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
| 70 | 한국씨티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 ‘11년 제12차 |
| 71 | 공병채 및 공문규의 (광주)무등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 ‘11년 제13차 |

<붙임 2>

기획조정관

의사운영정보팀장

| |
|-----|
| 위원장 |
| |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3. 2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3월 28일(금) 14:05~16:2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용 환 위 원

이 중 구 위 원

최 중 경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 의안 제15호 『오영수의 KIDB채권중개(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16호 『현대자동차(주) 등의 신흥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17호 『밸류에프투유한회사의 리딩투자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기 획 조 정 관

의사운영정보팀장

| |
|-----|
| 위원장 |
| |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4. 2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4월 25일(금) 14:05~15:2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김 중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41호 『대우캐피탈(주)의 (주)기보캐피탈 주식 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기보인수로 향후 대우캐피탈의 자산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에 대해 질의함

(현재 동사의 재무상태를 볼 때 당장 크게 건전성이 나빠질 것 같지는 않으나, 향후 금융환경 급변에 따라 대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독상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42호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주식 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본 건 이외에 대주주변경 승인도 해야 할텐데, 동시에 처리하지 않고 따로따로 처리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규정에 의하면 동 건에 대해 금융위가 처리해야 하는 기한이 30일이고, 대주주 변경 승인건에 대한 처리기한은 60일임. 대주주 변경 승인건의 경우 담당부서에서 검토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여 기한이 촉박한 동 건을 우선 상정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는 가능한 한꺼번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

⇒ 원안 의결함

기획조정관

의사운영정보팀장

| |
|-----|
| 위원장 |
| |

제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6. 1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6월 16일(월) 14:40~16: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101호 『(서울)HK상호저축은행의 (부산)동광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만큼 위험요인 또한 커질 수 있으므로 큰 저축은행일수록 내부통제 장치 등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기획조정관

의사운영정보팀장

| |
|-----|
| 위원장 |
| |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6. 2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6월 27일(월) 14:10~16:1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119호 『(주)한화건설 등 5개사의 제일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
| 위 원 장 |
| |

의사운영정보팀장

제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7. 2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7월 25일(금) 14:05~16: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112호 『(주)두산캐피탈의 비엔지증권중개(주) 대주주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동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법률적인 취지에 대한 해석은 법률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으나, 사면복권의 권능이 있는 법무부의 공식적인 유권 해석이 그러하다면 동 해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난번 회의 때도 법리해석을 떠나서 정책적 판단에 따라 대주주 자격을 허용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터였는데, 더욱이 법무부에서도 자격을 회복해주는 것이 상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됨
-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률비전문가로서 느끼는 바는 우선적으로 증권거래법 상에 규정된 문구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해석방법이라고 보여지며,

정책적 판단의 측면에서 볼 때, 분식회계 등 범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에서 좀 더 엄격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과거에 분식회계로 인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중요하게 판단되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라는 의견이 제시됨

- 동 건은 사면복권에 따른 효과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해석을 따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위 원 장

기획조정관

의사운영정보팀장

제1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9. 1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9월 12일(금) 14:10~16: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195호 『(주)현대미포조선의 씨제이투자증권(주) 및 씨제이자산운용(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위 원 장

기획조정관

의사운영정보팀장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9. 2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9월 26일(금) 14:05~16:1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노대래 차관보 대리출석

- ☐ 의안 제205호 『지앤에이케이비아이씨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이트레이드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
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213호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
예비허가 및 한국아이비금융(주)의 (가칭)에이앤에이신용정보(주)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
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10. 2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10월 27일(월) 17:40~18:5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보고안건 제61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62호 『2008년도 3/4분기중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63호 『2008년도 3/4분기중 전자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64호 『2008년도 3/4분기중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65호 『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권한위임사항(회계관련) 처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66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제정 보고』, 보고안건 제67호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4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제정 보고』를 서면보고함

⇒ 각각 원안 접수함

위 원 장

기획조정관

의사운영정보팀장

제1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11. 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11월 7일(금) 14:10~15: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부위원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242호 『(서울)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의 (충북)중부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의안 제243호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 및 케이티비이천칠사모투자전문회사의 (대전)대전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의안 제244호 『(부산)부산상호저축은행 및 (부산)부산2상호저축은행의 (전북)고려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의안 제245호 『(주)한화건설, 한화엘앤씨(주), (주)한화갤러리아, 한화리조트(주), 한화테크엠(주)의 (경기)새누리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승인요건 중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제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증자자금이 차입자금이 아닐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동 조항의 취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부채를 사용하지 않고 보유 현금 또는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증자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이 확인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함

(동 조항은 자기의 돈으로 저축은행을 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현금이든 유가증권이든 또는 대출을 통하든 자기자본 범위 내에만 있으면 자기 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답변)

- 부산저축은행이 두 개 은행을 인수하기 위한 증자 여력이 충분한지, 인수 후 경영 능력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투자여력이나 자기자본은 충분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 현재 자산순위도 저축은행업계 3위로서 BIS비율이나 PF 대출 연체율 등이 모두 양호한 편이며, PF분야 전담조직도 잘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경영능력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

- 저축은행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따른 리스크도 커지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BIS비율 산출 내역이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 부동산 및 금융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므로 혹시 현재 시점에서 BIS비율을 산출하였을 때 7%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됨

(6월 검사 직후부터 M&A를 하는 과정까지 금감원 및 예보에서 감독관이 파견되어 대출 적정성 여부 점검 등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BIS비율 변동이 크지 않다고 답변)

- M&A 이후 저축은행이 또 다시 부실화되는 일이 없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점검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음

⇒ 각각 원안 의결함

위 원 장

기획조정관

의사운영정보팀장

제16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8. 11. 2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8년 11월 21일(금) 14:00~14: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김 용 환 위 원

이 종 구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이장영 부원장 대리참석

- 의안 제253호 『Deutsche Holdings (Malta) Ltd.의 도이치 증권(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기획조정관

의사운영정보팀장

| |
|-----|
| 위원장 |
| |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1. 1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1월 14일(수) 14:15~15:5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전 광 우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노대래 차관보 대리참석

- 보고안건 제2호 『KB투자증권(주)의 내부통제 운영계획 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3호 『2008년도 4/4분기 중 전자금융거래약관 처리결과보고』, 보고안건 제4호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및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8.6월말 기준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5호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서면 보고함

⇒ 각각 원안 접수함

| |
|-------|
| 위 원 장 |
| |

기 획 조 정 관

의사운영정보팀장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2. 1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2월 18일(수) 14:10~14:5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김 종 창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이 승 일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51호 『현대커머셜(주)의 현대카드(주)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취득금액이 신청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실화 가능성 등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의함

(법규상의 승인 요건에는 문제가 없으나, 유동성 리스크 등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는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 2008년말 현재 유동성 비율이 여전사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식취득에 따라 자기자본비율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대커머셜의 자체 대응방안 등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답변)

⇒ 원안 의결함

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3. 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3월 4일(수) 14:00~15:3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창 용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박 대 동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노대래 차관보 대리참석

※ 김용환 부위원장 대리참석

- 의안 제58호 『(경기)토마토상호저축은행의 (부산)양풍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보다 규모가 더 커지는 등 대형 저축은행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러한 곳은 은행 수준의 강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저축은행 산업이 양극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저축은행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4. 1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4월 15일(수) 14:00~16: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노대래 차관보 대리참석

□ 의안 제88호 『대한생명보험(주)의 한화투자신탁운용(주) 자회사 소유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보험회사 주주의 이익과 자산운용사 주주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방호장치 같은 것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내부통제 제도나 양 회사 간 협약을 통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

- 한 개 회계법인의 심사만 거쳐서 인수가격을 결정하였는데, 향후에는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두 개 회계법인 정도의 심사를 거쳐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개별 신청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도 중요하나, 신청을 하게 된 배경 등 업계의 전체적인 변화와 흐름을 파악하고 대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당부가 있었음

⇒ 원안 의결함

□ 보고안건 제42호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8.12월말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접수함

제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5. 20.)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5월 20일(수) 14:05~15: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창 용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김용환 부위원장 대리참석

- ☐ 의안 제118호 『산은캐피탈(주)의 리더스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6. 1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6월 17일(수) 14:10~16:1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중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 의안 제142호 『(주)신한은행의 에스에이치앤씨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143호 『(주)케이비금융지주의 케이비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 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146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 설립인가안 등』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150호 『(주)골든브릿지의 (전남)상업상호저축은행의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7. 1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7월 16일(수) 14:00~15: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배성환 예보 부사장 대리참석

※ 김용환 금감원 부원장 대리참석

- ☐ 의안 제190호 『(주)케이티캐피탈의 뱅가드사모투자전문 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7. 2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7월 29일(수) 14:00~16: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김용환 부위원장 대리참석

- ☐ 의안 제196호 『비씨카드(주)의 스마트페이(주)에 대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198호 『(주)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주)신용카드업 예비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9. 2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9월 23일(수) 14:00~16:1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이 창 용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이 주 열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노대래 차관보 대리참석

- ☐ 의안 제242호 『산은캐피탈(주)의 KDBC-JKL사모투자전문 회사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 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243호 『하나은행의 신용카드부문 분할 및 하나카드(주) 신용카드업 인,허가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2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11. 1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11월 18일(수) 14:05~15: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노대래 차관보 대리참석

- ☐ 의안 제285호 『엠에이치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및 (제주)미래상호저축은행의 (전북)한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향후 실제 경영권은 누가 행사하게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미래저축은행에서 책임경영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

- 재무실화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질의함

(전국적으로 영업구역의 점포 추가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답변)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286호 『(주)보고비씨씨투자목적회사의 비씨카드 대주주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287호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2호 기업구조개선회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2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12. 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12월 2일(수) 14:00~15: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322호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1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제323호 『큐캐피탈파트너스의 큐씨피3호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 제324호 『한국종합캐피탈의 케이케이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 보고안건 제97호 『2008년중 금산법상 다른회사의 주식초과 소유주주에 대한 초과소유요건 심사결과 보고』, 제98호 『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9.6월말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제99호 『2009년도 3/4분기 금융거래약관의 처리결과 보고』, 제100호 『2009년도 3/4분기중 전자금융업 등록(등록말소) 및 전자금융거래 약관처리 결과 보고』, 제101호 『'09. 3/4분기중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위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서면 보고함

⇒ 각각 원안 접수함

제2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09. 12. 1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09년 12월 18일(금) 14:00~15:1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노대래 차관보 대리참석

□ 의안 제325호 『(주)골든브릿지캐피탈의 (주)굿이에프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출자대상회사의 영업 형태에 대해 질의함

(일반적인 대부업의 영업형태가 아니며,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특화된 영업이라고 답변)

○ 대부업의 관리, 감독 등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일반금융회사의 자금이 고금리로 영업하는 대부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금번 사항은 일반적인 대부업이 아니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짐

⇒ 원안 의결함

제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2. 10.)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2월 10일(수) 14:05~15:2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 의안 제24호 『에스케이텔레콤(주)의 하나카드(주) 대주주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3. 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3월 3일(수) 14:00~16: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임 승 태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노대래 차관보 대리참석

□ 의안 제29호 『케이디비컨서스밸류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금호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 제30호 『금호생명보험(주)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의안 29호 관련,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어떤 자금으로 출자하는지와 자기자본 대비 투자규모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자산운용사의 고유계정 자금이며, 관련 규정상 자기자본 대비 구체적 투자규모 제한은 없다고 답변)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안 제35호 『홍국증권(주) 및 홍국투자신탁운용(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홍국증권의 지배구조 변경 이후 대주주 이외 주주들의 지배력 관련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함

(대주주의 실권 등으로 문제는 없다고 답변)

⇒ 원안 의결함

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4. 2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4월 21일(수) 14:05~16: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94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서울)한신상호저축은행의 (충북)하나로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5. 2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5월 26일(수) 15:00~17: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강호인 차관보 대리참석

- 의안 제118호 『한화증권(주)의 푸르덴셜 투자증권(주)에 대한 대주주 변경 및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6. 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6월 9일(수) 14:00~15: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최 종 구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강호인 차관보 대리참석

※ 김용환 부위원장 대리참석

- 보고안건 제31호 『(주)한국씨티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09.12월말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제32호 『신용정보업 관련 금융위원회 위탁업무 처리결과 보고』를 일괄 서면보고함

⇒ 각각 원안 접수함

제1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6. 2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6월 23일(수) 14:00~15:5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137호 『(주)비에스투자증권의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안』, 제138호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변경 예비인가안』, 제139호 『아이엔지증권(주)의 증권업 허가조건 취소 및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국기관에 대한 영업 인허가시 법적 요건 뿐 아니라 상호 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상대국에서 인허가 신청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각각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47호 『삼공개발(주)의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48호 『(주)대유신소재 및 (주)대유디엠씨의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6. 23.)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6월 23일(수) 14:00~15:5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 의안 제147호 『삼공개발(주)의 (인천)신라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 의안 제148호 『(주)대유신소재 및 (주)대유디엠씨의 (광주)창업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7. 7.)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7월 7일(수) 14:05~15: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 보고안건 제40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접수함

제1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7. 2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7월 21일(수) 14:00~16: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임 종 룡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김용환 부위원장 대리참석

□ 의안 제161호 『메트라이프글로벌매니지먼트(주)의 메트라이프 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현행 규정상 지주회사가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시 지정하는 자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어 지주회사 자체에 대한 검토를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향후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함께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178호 『롯데카드(주)의 (주)이비카드에 대한 출자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4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8. 1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8월 18일(수) 14:00~16: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강호인 차관보 대리참석

- 의안 제190호 『웅진금융제일유한회사의 (경기)늘푸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 제191호 『웅진금융제이유한회사의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의결함

제1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10. 1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10월 19일(화) 15:00~15:4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강호인 차관보 대리참석

※ 김용환 부위원장 대리참석

- ☐ 의안 제240호 『큐캐피탈파트너스(주)의 PEF(KoFC-QCP IBKC 그로쓰챔프 2010)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2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11. 18.)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11월 18일(목) 09:50~11:4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강호인 차관보 대리참석

※ 이원태 부사장 대리참석

- 의안 제262호 『오릭스코퍼레이션의 (서울)푸른2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 의안 제263호 『강나영의 (부산)우리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2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0. 12. 29.)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0년 12월 29일(수) 14:00~16:2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진 동 수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강호인 차관보 대리참석

- 보고안건 제85호 『한국씨티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제86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서비스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접수함

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1. 12.)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1월 12일(수) 14:00~16:0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임 종 룡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김용환 부원장 대리참석

□ 의안 제2호 『에이스아이앤에이홀딩스(주)의 뉴욕생명보험(주)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외국지주회사의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시 신청회사가 지정하는 회사를 대상으로 심사하는 현행 규정하에서는 자회사가 여럿일 경우 자의적으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향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심사시 대주주 요건을 지주회사와 지정회사에 모두 적용하여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지주회사에 적용이 곤란한 것만 지정회사가 충족하면 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원안 의결함*

* 외국지주회사가 신청한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하여 권역별로 향후 금융위에 보고할 것을 요청

제5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3. 1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3월 16일(수) 14:30~16:0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권 혁 세 부위원장

이 종 구 위 원

최 종 구 위 원

임 종 룡 위 원

김 종 창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채 희 율 위 원

- 의안 제69호 『동양생명보험(주)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3) 보고안전 심의

- 보고안전 제10호 『(주)한국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은행서비스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적격성 심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 질의함

(감독당국은 2003년 9월 론스타 인수 이후로 2006년 6월말 기준 적격성 심사까지 매반기 단위로 심사를 진행해 왔음. 그러나 2006년말 기준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던 중에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가 쟁점이 됨에 따라 그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확인작업을 진행해 왔음. 또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한 헐값매각 소송 등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등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적격성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고 답변함)

- 제출된 자료만을 기초로 비금융주력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함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방법은 신청자가 내국인이냐 외국인 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내국인은 우리나라 법과 행정력이 미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반면, 외국인인 경우 그 신청 서류의 진위나 정확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권한 밖이라 아주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우리나라 은행법의 효력과 행정력이 외국에 대해 적용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비금융주력자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짐
- 수시적격성 심사결과 적격성 충족여부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리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함

(현재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이 지난 3월10일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 내용도 꼼꼼히 뜯어봐야 될 것 같고, 1심이나 2심 판결 내용도 봐야 될 것 같음. 검찰의 기소유예라든지, 양벌규정이 위헌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그동안 판례가 많이 나와 있고, 위헌심판 재판진행 현황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앞으로 적격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함)

- 외환은행 주가조작 판결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거친 후 그 내용에 대해 지체 없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함

⇒ 원안 접수함

제8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5. 4.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5월 4일(수) 14:05~14:5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 ☐ 의안 제103호 『웅진캐피탈의 (서울)서울상호저축은행 주식
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제10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6. 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6월 1일(수) 14:30~15: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신 제 윤 부위원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 강호인 차관보 대리참석

※ 최수현 부위원장 대리참석

□ 의안 제121호 『태광산업(주)의 흥국화재해상보험(주) 대주주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태광산업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함

(흥국화재의 지분 매각 당시 태광산업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협약서 및 흥국화재가 부실화 되었을 때 태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태광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함)

- 태광산업이 지분을 인수하기 전에 대주주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태광산업이 흥국화재의 대주주 자격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의함

(현행법상 대주주 승인 심사시 당해 본인만을 대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어 대주주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함)

⇒ 원안 의결함

제1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6. 1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6월 15일(수) 14:00~16:0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신 제 윤 부위원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 최수현 부위원장 대리참석

□ 의안 제132호 『에프앤유신용정보(주)의 지배주주 변경 승인안』, 제133호 『하나에스케이카드(주)의 에프앤유신용정보(주) 주식 취득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서민금융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에프앤유신용정보(주)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함

(동 회사의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증권(주)의 실질적인 모회사인 (주)에스케이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의해 주식을 처분하게 되었다고 답변함)

○ 하나에스케이카드(주)가 40%의 주식을 인수하게 되면 에프앤유신용정보(주)의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함

(주식의 50%를 소유한 에스케이텔레콤이 주도권을 가지고 경영에 관여할 것으로 보이며, 하나에스케이카드(주)는 재무적 투자자의 역할을 주로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함)

⇒ 각각 원안 의결함

제12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7. 6.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14:00~15:30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신 제 윤 부위원장

이 석 준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 강호인 차관보 대리참석

- 의안 제143호 『최정인 및 오선민의 (충북)한성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3) 보고안전 심의

- 보고안전 제30호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 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 제31호 『한국씨티금융지주(주)의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 접수함

제13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11. 7. 20.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11년 7월 20일(수) 09:30~12:05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김 석 동 위 원 장

이 석 준 위 원

이 상 제 위 원

권 혁 세 위 원

이 주 열 위 원

이 승 우 위 원

심 인 숙 위 원

- ☐ 의안 제165호 『공병채 및 공문규의 (광주)무등상호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 의결함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20. '08년 이후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추진한 정책 및 지도공문 발송 내역

1. 소액신용대출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기준 합리화(감독규정 개정)

- ☐ (내용) 소액신용대출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기준을 일반 대출과 동일하게 변경

| 기 준 | | | | | | 개 선 | | | | |
|----------|------|-----|-----|----------|----------|------|-----|-----|----------|----------|
|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 의문 | 추정 손실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 의문 | 추정 손실 |
| 일반 | 0.5% | 2% | 20% | 75% | 100% | 0.5% | 2% | 20% | 75% | 100% |
| 소액 신용 | 1% | 7% | | | | | | | | |

- ☐ (추진배경) '03년 가계대출위기이후 소액신용대출(300만원 이하)에 대해 일반대출에 비해 높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였으나,

- (i) 소액신용대출의 연체율 등이 일반신용대출 및 주택 담보대출과 유사한 수준이며,
- (ii) 주요 저축은행들의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확대 등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위험관리능력이 확충된 점을 감안

▶ 개정 · 시행시기 : '10. 3월 개정, '10. 9월 시행

2.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햇살론” 출시

□ 은행에 비해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한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회사들은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이에, 저신용(6등급 이하)·저소득층에 대한 신용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기관*을 통해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을 출시

*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기관(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 정부와 서민금융기관이 각각 1조원씩 보증재원으로 출연

□ ‘10.7월 “햇살론” 출시후 ‘11.8월말까지 전체 서민금융기관의 “햇살론” 취급실적은 192,840건, 17,373억원이고,

- 저축은행은 15,236건, 1,257억원을 취급

▶ 시행시기 : ‘10. 7월 출시

3.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확대 유도

□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신용평가기반 구축을 통한 저축 은행의 서민금융활성화 및 대출관행 개선 등을 위해

- 저축은행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저축은행별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유도

* ‘11.6말, 57개 저축은행이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 시행시기 : 저축은행별 시스템 구축 등(계속)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
(경유)

제목 신용평가시스템(CSS) 구축 관련 협조 요청

1. 정부는 '09.12월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및 '10.4월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에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신용평가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2. 이에 귀 중앙회에서는 귀 중앙회의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별 저축은행이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활용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역량 확충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10.1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4. 앞으로도 저축은행의 신용평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및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관련 내용 1부.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서기관 중소기업관 과 11/14
장

협조자

시행 중소기업융과-840

접수

☎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위원회 중소 / <http://www.fsc.go.kr>
서민금융과

전화 02-2156-9852 전송 02-2156-9849 / kyklim22@korea.kr / 비공개(5)

붙임

1 201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 선진화 >

- **[현황]** 서민금융회사는 저신용층에 대한 금융중개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신용평가능력 등 여력이 부족

< 신용평가 시스템(CSS)의 문제점 >

- ① '97년 이전에는 서민금융 수요층의 신용이 우량하여 CSS 불필요 하였으나, 서민범위 확대로 CSS 구축 필요성 제기
- ② '97년 이후 대형사를 중심으로 CSS 구축하였으나 당시 CB정보 부족 등으로 동 CSS에 의한 가계대출 부실화로 가계신용위기 초래
 - * '02년 시작된 개인CB의 중복대출 등의 정보부족과 소형사의 CSS없는 무분별한 소액신용대출로 가계신용위기 가중
- ③ 위기 이후 개인CB 구축 등으로 일부 은행등 대형사는 CSS가 개선 되었으나 서민금융회사는 예산·인력 부족으로 CSS 개선·구축에 한계

- **[추진방안]** 현재 저축은행중앙회가 개발·보급 중인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 및 CB 정보범위 확대 추진

- 저축은행의 신용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신용평가에 필요한 양질의 CB 정보범위를 확대하여 신용평가 신뢰도 제고

2

시민금융 활성화 방안

< 저축은행의 개인신용평가 역량 제고 >

□ 상환위험이 큰 저신용층의 대출을 위해서는 정확한 신용 평가가 필수적이거나,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총 104개 중 23개(22.1%)에 불과

⇒ 저축은행 중앙회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확충

- 개별 저축은행은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거나 개별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 '10.6월까지 29개사가 추가로 자체적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계획



금융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산 및 목포·전남지역 햇살론 지원확대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 지역경제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및 목포·전남지역에서는 역내 자산규모가 가장 큰 저축은행이 문제되어 상기 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이같은 상황에서 부산 및 목포·전남지역 서민 여러분들의 금융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햇살론'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햇살론' 취급확대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붙임]와 같이 조치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저축은행 관련 햇살론 지원 방안.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농협중앙회장, 신한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중소기업청장)

행정사무관

중소금융과 과 03/04
장

협조자

시행 중소기업과-529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빌딩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864 전송 02-2156-9849 / genshine@korea.kr / 대국민공개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저축은행 관련 핫살론 지원 방안

1. 기본 방향

- ☐ 부산 및 목포·전남지역 소재 서민금융회사*의 핫살론 취급 관련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완화 등 지원책 마련

*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 ☐ '11.8월 말까지 한시적 운용

- 다만, 해당 지역의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경영정상화되는 경우 한시적 운용기간 조기종료

2. 세부 방안

- ☐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기준 완화

- (현행) 근로자 50%, 자영업자 70%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대안) 부산 및 목포·전남만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을 근로자 60%, 자영업자 80%미만으로 완화

- ☐ 핫살론 대출 소요기간 단축 노력

- 부산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

[첨부 1] 부산 및 목포·전남지역 현황

[첨부 2] 부산지역 지원 대책('11.2.21 발표)

[첨부 3] 목포·전남지역 지원 대책('11.2.22 발표)

첨부 1 부산 및 목포·전남지역 현황

□ '햇살론' 대출추이

(단위 : 백만원)

| 지역 | 구분 | 21 | 7 | 8 | 9 | 10 | 11 | 14 | 15 | 16 | 17 | 18 |
|----|----|-----|----|-----|-----|-----|-----|-----|-----|-----|-----|-----|
| 부산 | 건수 | 21 | 6 | 15 | 14 | 17 | 14 | 12 | 16 | 13 | 11 | 19 |
| | 금액 | 172 | 44 | 117 | 126 | 152 | 121 | 117 | 133 | 128 | 130 | 139 |
| 전남 | 건수 | 18 | 6 | 16 | 11 | 11 | 8 | 17 | 13 | 24 | 18 | 10 |
| | 금액 | 9 | 7 | 7 | - | 9 | - | 39 | 21 | 24 | 9 | 11 |

□ 업권별 본·지점수

○ 부산

|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계 |
|-------|-----|----|----|------|------|-----|
| 229 | 100 | 49 | 84 | 1 | 25 | 488 |

○ 목포·전남

| 새마을금고 |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저축은행 | 계 |
|-------|-----|----|----|------|------|-----|
| 125 | 437 | 62 | 76 | 22 | 5 | 727 |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본·지점은 제외

부산지역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 대책

‘11. 2. 21(月)

| | |
|-------------|---------------|
| 금 융 위 원 회 | 부 산 광 역 시 |
| 금 융 감 독 원 | 예 금 보 험 공 사 |
| 정 책 금 융 공 사 | 신 용 보 증 기 금 |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미소금융중앙재단 | 저 축 은 행 중 앙 회 |

목 차

| | |
|--------------------------------|---|
| I. 최근 저축은행 현황 | 1 |
| II. 예금자 및 저축은행 지원 대책 | 2 |
| 1.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 불편 해소 / 2 | |
| 2. 저축은행 지원 대책 / 3 | |
| III. 지역 서민 금융애로 해소 대책 | 4 |
| IV.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 5 |

I. 최근 저축은행 현황

- '11.1.14.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후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예금인출이 급증하였으나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여왔음
 - 다만,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급격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17. 부득이하게 영업정지 처분 부과
 - 2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이 급증한 4개
저축은행(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도 지급불능에 이르러 불가피
하게 추가 영업정지('11.2.19)
- 현재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사 이외 부산지역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분 재무·경영상태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판단
 - 따라서 불안심리로 인한 과도한 예금인출만 없다면 상반기 중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으로 판단
- 부산 지역에서 부산계열 저축은행이 차지하는 예금거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금자, 저축
은행 및 여신거래기업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 최소화
 - 건전한 저축은행이 단지 시장 불안심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최대한 유동성 지원
 - 가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사항 해소

II. 예금자 및 저축은행 지원 대책

1.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 불편 해소

①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 단축

-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후부터 지급하던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2주후부터 지급

② 은행을 통한 긴급 예금담보대출 실시

-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 은행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실시

-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 등 긴급자금 대출

- 국민, 농협, 기업, 부산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대출취급

* 필요시 대출취급 창구 확대 추진

③ 추가 예금담보대출 실시

- 가지급금 지급 개시 직후 추가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 담보대출 한도 확대(예금의 80% 이내)

2. 저축은행 지원 대책

- ①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에 기 지원한 유동성*의 만기 연장
및 이자 부담 완화

* '11.2.18. 현재 24개 저축은행, 5,377억원

- ② 저축은행중앙회의 유동성 지원 확대

○ 적격대출채권의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 상향 조정

- ③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저축은행 부실 PF대출 매입 추진

* 현재 구조조정기금 보증동의안 국회 심의중

< 부산지역 저축은행 관련 >

- ① 부산지역 저축은행에 대한 중앙회의 유동성 최우선 지원

- ② 감독당국·예보·중앙회의 순회설명회 개최 및 저축은행중앙회와
부산지역 저축은행의 공동 광고를 통한 예금자 안정 대책 추진

○ 지역 예금자들에게 현재 부산지역 저축은행의 정확한 현황을
알려 막연한 시장 불안 심리 해소

* 덕천초등학교(2.21.) 등 대규모 인원 수용가능 장소 활용

Ⅲ. 지역서민 금융애로 해소 대책

1. 현 황

- ☐ 서민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을 지원 중

| 구 분 | 미소금융 | 햇살론 | 새희망홀씨 |
|----------|-------------------------|--|--|
| 지원 계획 | 연 2천억원 내외 (10년간 2조원) | 연 2조원 내외 (5년간 10조원) | 은행 영업이익의 10%내외 (*09년기준, 연 7,700억원) |
| 지원 대상 | 7~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6~10등급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소득 2,600만원이하 | 5~10등급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연소득 3천만원이하 |
| 금리 | 연 2~4.5% | 연 10~13% (보증수수료 1% 별도) | 연 6~14% |
| 자금 용도 | 사업자금 위주 (창업·운영자금 등) | 생계자금, 운영자금 | 일반가계자금 (용도 불문) |

2. 지원방안

- ☐ 부산 지역의 서민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3대 서민우대금융을 집중 지원

① 미소금융

- 부산지역 미소금융지점(9개)의 연간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지점별 5억원 → 10억원)

② 햇살론

- 부산 지역소재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출 취급 확대* 유도

* 例)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완화 등

③ 새희망홀씨

- 은행들로 하여금 부산지역 점포에 우선적으로 해당자금을 배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금감원을 통해 대출실적을 관리

- ☐ '11.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IV.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① (대상) 저축은행 영업정지('11.1월 이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②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제공한 기존 담보의 여유액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지원 범위) 기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 범위내 지원

- ① 기보증 :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 연장

* 휴·폐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업체는 제외

- ② 신규보증 : 보증한도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

- 기 보증에도 불구하고 담보여유액 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100% 이내

③ (지원 시한) '11.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2. 중소기업은행 자금지원

- ① (대상) 저축은행 영업정지('11.1월 이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② (지원방법) 경영안정자금 대출(1기업당 3억원내에서 추가지원)

*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p 추가 감면권 부여

3. 정책금융공사(KoFC)의 온렌딩 지원 확대

-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한도 확대(1.4조원→2.3조원, 0.9조원 증액)

* 확대금액 : 부산은행(0.2조원 ↑), 경남은행(0.2조원 ↑), 대구은행(0.2조원 ↑) 광주은행(0.14조원 ↑), 전북은행(0.15조원 ↑)

4.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거래 기업 등의 자금 수요 흡수

- 인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 수요 흡수

-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지역 지방은행내에 전담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해 추가 여신이 필요한 저축은행 거래자 흡수 유도

목포 · 전남 지역 저축은행 예금자 및 기업 · 서민금융 지원 대책

‘11. 2. 22(火)

| | |
|-------------|-------------|
| 금 융 위 원 회 | 목 포 시 |
| 금 융 감 독 원 | 예 금 보 험 공 사 |
| 정 책 금 융 공 사 | 신 용 보 증 기 금 |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미소금융중앙재단 | 저축은행중앙회 |
| 중 소 기 업 은 행 | |

목 차

| | |
|---------------------------------|---|
| I. 최근 저축은행 현황 | 1 |
| II.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 불편 최소화 | 2 |
| III. 지역 서민 금융애로 해소 대책 | 3 |
| IV.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 4 |

I. 최근 저축은행 현황

- '11.1.14.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직후 저축은행 전반적으로 예금인출이 급증하였으나 이후 점차 안정세를 보여왔음
 - 다만, 부산 및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급격한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2.17. 부득이하게 영업정지 처분 부과
 - 2개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이후 예금인출이 급증한 4개 저축은행(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도 지급불능에 이르러 불가피하게 추가 영업정지('11.2.19)
- 보해저축은행은 '10.10.14. ~ 12.10. 금감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11.2.8.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적극 추진중이며
 - 당초 일정에 따라 금년 2월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
 - 자구노력이 성공적으로 이행되어 BIS비율 등 경영상태가 건전하고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되는 경우 영업정지기간 이내더라도 영업재개가 가능
 - 그렇지 못할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
- 전남 지역 저축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보해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금자, 여신거래기업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자 불편 최소화
 - 가게,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사항 해소

II.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 불편 최소화

①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 단축

-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후부터 지급하던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2주후부터 지급

② 은행을 통한 긴급 예금담보대출 실시

-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내 은행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실시

-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 등 긴급자금 대출

- 국민, 농협, 기업, 광주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대출취급

* 필요시 대출취급 창구 확대 추진

③ 추가 예금담보대출 실시

- 가지급금 지급 개시 직후 추가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예금 담보대출 한도 확대(예금의 90% 이내)

Ⅲ. 지역서민 금융애로 해소 대책

- 목포 지역의 서민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하여 금융애로를 겪지 않도록 3대 서민우대금융을 집중 지원

① 미소금융

- 목포지역 미소금융지점(9개)의 연간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지점별 5억원 → 10억원)

- 목포지역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지원 확대방안 검토

* '09년 이후 5개 전통시장 상인회에 1억원씩 총 5억원 지원

② 햇살론

- 목포 지역소재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출 취급 확대* 유도

* 例)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소득대비 채무상환액 비율) 완화 등

③ 새희망홀씨

- 은행들로 하여금 목포지역 점포에 우선적으로 해당자금을 배정하여 지원토록 하고, 금감원을 통해 대출실적을 관리

- '11.8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IV.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1.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① (대상) 저축은행 영업정지('11.1월 이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①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제공한 기존 담보의 여유액 이내에서 추가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② (지원 범위) 기보증 금액에 관계없이 최대 1억원 범위내 지원

① 기보증 :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 연장

* 휴·폐업 등 지원 실익이 없는 업체는 제외

② 신규보증 : 보증한도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

- 기 보증에도 불구하고 담보여유액 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의 100% 이내

③ (지원 시한) '11.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2. 중소기업은행 자금지원

- ① (대상) 저축은행 영업정지('11.1월 이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② (지원방법) 경영안정자금 대출(1기업당 3억원내에서 추가지원)

* 영업점장 금리감면권에 1%p 추가 감면권 부여

3. 정책금융공사(KoFC)의 온렌딩 지원 확대

- 지방은행에 대한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한도 지원을 확대하여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

* 확대 금액 : 광주은행(0.14조원 ↑), 전북은행(0.15조원 ↑)

4.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거래 기업 등의 자금 수요 흡수

- 인근 지방은행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여신거래자의 자금 수요 흡수

- 광주은행, 전북은행 등 지역 지방은행내에 전담 상담창구 개설 등을 통해 추가 여신이 필요한 저축은행 거래자 흡수 유도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금융위원회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산 및 목포·전남지역 햇살론 지원확대 관련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중소기업과-529(2011.03.17) 관련입니다.

2. 부산 및 목포·전남지역의 서민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기준 완화조치 등을 '11.12.31.까지 연장하오니 해당 지역에 햇살론이 적극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농협중앙회장, 신한중앙회장, 수협중앙회장, 산림조합중앙회장, 새마을금고연합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행정사무관

중소금융과 과 08/29
장

협조자 서민금융팀 팀
장

시행 중소기업과-1441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빌딩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472 전속 02-2156-9849 / genshine@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21. 미소금융 목표대비 실적, 지점별 실적(지역지점, 기업계지점, 은행계 지점 구분)

□ 목표 대비 실적

- (목표) 사업 개시 후 10년간 2조원 재원을 목표로 약 20만~25만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이 미소금융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서민의 자활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확대방안』 발표 ('09.9.17.)

- (지원실적) '10년부터 '11.7.31. 현재까지 17,753명에 대해 2,257억원 대출

□ 지점별 실적

('11.7.31. 기준, 단위 : 백만원)

| 구분 | 대출건수 | 대출금액 |
|------|--------|---------|
| 기업재단 | 10,591 | 141,335 |
| 은행재단 | 5,539 | 70,506 |
| 지역지점 | 1,623 | 13,858 |
| 계 | 17,753 | 225,699 |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22. 금융위가 파악하고 있는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실적

□ 미소금융 이외의 민간마이크로크레딧 실적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미소금융중앙재단은 08년부터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음
- 창업지원 분야 : 822건, 17,461백만원 대출('11.7.31. 현재)
- 사회적기업지원 분야 : 117건, 13,810 백만원 대출('11.7.31. 현재)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23. 미소금융 실무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및 실적

□ 한국금융연수원과 공동개발한 「미소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2011년도 미소아카데미를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음

○ 교육대상 : 총 4,000여명(지역법인 대표자, 실무자, 수혜자 등)

○ 교육일정

- 교육기간 : '11.3.29~12.22, 총 130일간

- 교육과정 : 15개 과정 (70과목)

- 교육횟수 : 총 72회*

* 집합교육 : 56회 · 92일, 합숙교육 : 16회 · 38일

□ '11.7.31. 현재, 기업 및 은행재단 · 지역지점 실무자, 자원 봉사자 등 872명*이 수료

*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11.10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며, 대상규모는 약 2,000~3,000명임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24. 미소금융 지역지점 예산/ 결산 현황

○ '10년 지역지점 예산현황 : 12억원

- 자산취득비 : 2.8억원
- 인건비 : 5억원
- 기타운영비 : 4.2억원

○ '10년 지역지점 결산현황 : 12억원* (25개 지점)

- 자산취득비 : 2.8억원
- 인건비 : 5억원
- 기타운영비 : 4.2억원

* 지점당 0.48억원을 운영비로 사용

※ 10년도 신규 설립된 지역지점은 사업초기인 특성상, 중앙재단으로부터 실제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으로 지원 받아 집행함. 이에 예산금액과 결산금액이 일치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25. '08년 이후, 미소금융중앙재단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와 복지사업 지원 계약을 작성한 현황 및 계약서 사본

□ 복지사업 지원 계약 현황

- 재단은 아래표와 같이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를 복지사업자로 선정하고 지원계약을 체결

| 구분 | 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단체 | 복지사업자 선정연도 |
|-----------|---------------|------------|
| 창업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2009년 |
| | 해피월드복지재단 | 2009년 |
| | 소상공인진흥원 | 2009년 |
| | 사회연대은행 | 2008년 |
| | 신나는조합 | 2008년 |
| | 나눔과기쁨 | 2010년 |
| | 함께일하는사람들 | 2010년 |
| | 부산복지개발원 | 2010년 |
| 사회적 기업 | 열매나눔재단 | 2009년 |
| | 민생포럼대부 | 2009년 |
| | 민생경제정책연구소 | 2009년 |
| | 함께일하는재단 | 2008년 |
| | 사람사랑 | 2010년 |
| 신용회복 | 신용회복위원회 | 2008년 |
| | 한마음금융 | 2008년 |

□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사본 : 첨부 자료 참조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복지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①“지원금”은 을이 수행하는 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대출하는 금전을 말한다.

②“대출사업”은 을이 “지원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전대출 방식의 복지사업을 말한다.

③“수혜자”는 을로부터 “대출사업”을 통하여 금전을 대출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④“대출약정”은 “대출사업”을 위하여 을이 “수혜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⑤“대출금”은 “대출약정”에 따라 을이 “수혜자”에게 대출

하는 금전을 말한다.

⑥“대손”은 “수혜자”가 “대출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대출금의 손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의 교부)지원금은 배정된 금액을 한도로 2회 분할 교부하며 이자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단, 2회차 교부금은 1회차 교부금의 100분의 80이상을 수혜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읍의 서면 청구에 의해 교부한다.

제4조(지원조건 및 지원금 상환의무)①읍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별지 1의 지원조건에 따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②읍은 별지1의 지원금 교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대출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 잔액에 대하여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사용)읍은 지원금을 대출금의 용도로만 사용 하여야 하며 그 밖의 대출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충당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계장부

내부통제

제6조(구분계리)읍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장부를 별지 1의 지원기간 종료 이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지연배상금)①읍이 제4조에 따른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갑은 읍에게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혜자의 채무이행의 지체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지연배상금의율은 갑의 주거래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하며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등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 교부 결정의 취소)①갑은 을이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거나 거짓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을은 취소된 부분의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계약의 해지)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파산·화의개시·회사정리절차 개시·채무불이행 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을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개시 등이 **발생한 경우**

3. 을이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영업정지·주무관청으로 부터의 인·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4. 을의 업무와 관련하여 을 또는 을의 대표자가 사기·횡령·배임·조세범처벌법 등 범죄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

5.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복지사업자로서의 자격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더 이상의

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수혜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의 1호 내지 4호의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대출조건의 설정) 갑은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혜자에 대한 대출조건을 별지 2와 같이 설정하며, 을은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양도에 관한 계약 체결)①을은 지원금 관련하여 별지 3의 채권양도계약을 갑과 체결한다.

②을은 제1항의 내용을 수혜자에게 대출약정한 때에 통지하여 승낙 확인서를 받아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을에 대한 감독)①갑은 대출사업과 관련 있는 을의 업무에 대해 감독한다.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무)①을은 매년도 대출사업 등에 대한 사업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실적보고서의 작성방법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 기한

30일 이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제14조(을에 대한 평가)갑은 갑이 정하는 평가지표에 따라 을의 매연도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을에 대한 차기 사업연도의 지원내용에 반영한다.

제15조(신용정보 관련 자료제출)①을은 수혜자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를 수혜자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실행 익영업일 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경우 을은 수혜자로부터 사전에 갑이 정하는 양식에 의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제출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제출방법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지원금의 대출약정서류 제출 협조 의무)을은 을과 수혜자간에 체결한 대출약정서류 원본을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을에게 다시 제출한다.

제17조(대출 및 상환 등의 전산시스템 이용)①을은 갑의 지원금으로 수행된 대출 및 상환 등의 정보 공유를 위하여 갑이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부속 절차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계약내용의 변경)①갑은 대출사업의 부진 및 연체·대손의 과다 발생 등으로 계속적 지원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 대한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또는 교부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②을이 지원금 배정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경우 갑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갑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③그 밖의 계약 내용은 갑과 을의 합의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미상환시의 처리 등)①수혜자의 채무 불이행에 따라 을이 제4조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갑은 갑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이를 대손 처리 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에 의하여 대손 처리한 경우 그 규모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을에 대한 차기 사업연도의 지원여부를 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①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발생**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발생이나 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소송관할법원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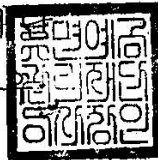
이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1 년 4월 28일

(갑)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지

이사장 김 승



(을) 서울시 서대문구 충청로2가 157번지 사조빌딩200호


(사)한국마이크로파이낸셜서비스 신나는조합

이사장 정 명




(별지 1)

지 원 조 건

| | | |
|---|------|---|
| 지원금 배정금액(한도) | | 금 일억 원(₩ 100,000,000) |
| 지원금 | 교부기간 | 2011. 5 . 16 ~ 2011 . 12. 31 |
| | 분할교부 | 2회 분할 (1차 오천만 원, 2차 오천만 원) |
| | 교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교부 : 2011 년 5 월 16 일 ◦ 2회 교부 : 1회 교부금의 80% 이상 사용시점에서 을의 서면 청구에 의해 교부 ※ 을의 청구 시, 갑은 사전·사후관리 관련 서류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서류검토 후 교부 |
| 지원기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금을 최초로 교부한 날부터 수혜자별 대출약정의 최종 만료일까지 |
|  상환방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약정에 따른 수혜자별 상환방식 및 상환 일정과 연동하며, ◦ 을은 수혜자가 실제 받은 금액 중 원금 상환 상당금액을 지원기간 중 월 1회 갑에게 상환하되, ◦ 수혜자에게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상환 받은 금액은 매월 말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갑에게 상환 |

(별지 2)

대출조건의 설정

| | |
|-------|---|
| 대출자격 | <input type="checkbox"/>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내인 자 |
| 자금용도 | <input type="checkbox"/> 운영자금, 임차자금, 프랜차이즈창업자금 |
| 대출금액 | <input type="checkbox"/> 2,000만원이내(운영자금 및 임차자금(월세보증금)) <input type="checkbox"/> 5,000만원이내(임차자금(전세보증금), 프랜차이즈창업자금) |
| 대출기간 | <input type="checkbox"/> 5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단, 거치기간은 전체상환기간의 1/10을 넘을 수 없음 |
| 적용이자율 |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input type="checkbox"/> 연 6% |
| 상환방법 | <input type="checkbox"/>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별지 3)

채 권 양 도 계 약 서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제9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자(양도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과 채권자(양수인)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2011년 4월 28일 자 일금 일억원(₩100,000,000)의 금전 대차 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수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채권양도 통지의무】

제1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담보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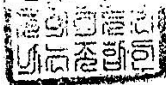
제2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채무자는 제1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통지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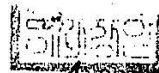
제3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본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의 반환】

제4조 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때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본건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에게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1년 4월 2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나는조합

양도인: 이사장 정 명 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양수인: 이사장 김 승



(별지 4)

채 권 양 도 계 약 서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제9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자(양도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과 채권자(양수인)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2008 년 9 월 8 일자 일금 삼억원(₩300,000,000)의 금전 대차 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수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채권양도 통지의무】

제1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담보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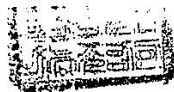
제2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채무자는 제1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통지의무】

제3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본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의 반환】

제4조 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때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본건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에게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1 년

4 월 28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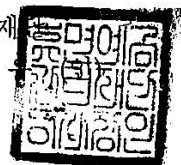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나는조합

양도인: 이사장 정 명 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양수인: 이사장 김 승



(별지 5)

채 권 양 도 계 약 서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제9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자(양도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과 채권자(양수인)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2008 년 12 월 22 일자 일금 삼억원(₩300,000,000)의 금전 대차 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수혜자)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채권양도 통지의무】

제1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담보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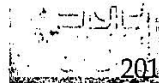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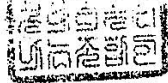
제2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채무자는 제1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통지의무】

제3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본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의 반환】

제4조 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때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본건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에게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011 년 4 월 28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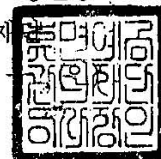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홍릉로 157
신나는조합

양도인: 이사장 정 명 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양수인: 이사장 김 승



(별지 6)

채 권 양 도 계 약 서

「복지사업 지원 계약서 제9조에 의해 계약의 해지」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무자(양도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과 채권자(양수인)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2009년 10월 21일자 일금 오억원(₩500,000,000)의 금전 대차 계약에 의거 제3채무자(수혜자)에게 가지고 있는 대출금 채권을 아래 조건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채권양도 통지의무】

제1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즉시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제3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담보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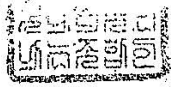
제2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항할 사유가 없음을 보증한다. 채무자는 제1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에 이르기까지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통지의무】

제3조 채무자는 제3채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본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는 즉시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채권의 반환】

제4조 본건 대금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때 채권자는 지체 없이 본건 채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에게 즉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상기 통지에 소요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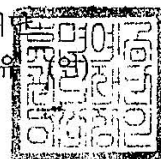


2011년 10월 28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나는조합
양도인: 이사장 정 명 기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136번지
휴면예금관리재단
양수인: 이사장 김 승 유



권택기 의원(한나라당)

26. 채무에 대해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자의 신용 등급을 상향시키기 위해서는 제도권 금융회사와 비제도권(민간 마이크로크레딧,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의 거래정보, 신용정보를 통합 또는 공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의견은?

- ☐ 현재 금융위원회는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신복위의 서민우대금융 지원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임
- 다만, 대부업체 신용정보의 공유는 신용정보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기대효과와 신용정보 공유에 대한 관리·감독 가능성, 대부업 이용 고객의 평판 저하에 따른 서민금융 애로 발생 우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임

김 영 선 의원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1.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서

□ 금융위원회 설립(2008.2월)이후 감사원 감사현황

| 감사 기관 | 피감기관 | 감 사 명(목적) | 감사 기간 | 감사 결과 |
|-------|------|------------------------------|-------------------|-------------|
| 감사원 | 금융위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 ‘09.6.15 ~7.17 | 별첨1 |
| | |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0.3.15 ~3.19 | 별첨2 |
| | |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10.1.28 ~4.2 | 별첨3 |
| | |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1.3.17 ~3.25 | 별첨4 |
| | |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 ‘11.4.4 ~5.27 | 처분요구 미통보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

2009 . 11.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통보)
2.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검사·감독 부적정(주의·통보)
3.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주의2)
4.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주의2)
5.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주의2)
6.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7.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주의)
8.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시장 질서 유지, 금융산업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운영과 예산·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방만한 기관운영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범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본부 및 대전·대구·광주·부산지원을 대상으로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9. 25. ~ 11. 3.) 종료 후 2006년 2월부터 2009년 5월 말까지 집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은행·증권·보험·비은행 업무권역별 금융감독업무가 적정한지, 인건비·경비 등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조직 운영과 인력 운용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데 감사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인원 등

2009. 5. 28.부터 같은 해 6. 10.까지 10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6. 15.부터 7. 17.까지 감사인원 2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11. 12. 감사위원회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라 한다)을 운용하는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1.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등록 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 부적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2009. 5. 4.부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판매회사는 간투법에 따른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¹⁾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별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전환등록이 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에는 추가 자금모집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환매만 발생하는 등 펀드 수탁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전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

1)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됨

의 전환등록 여부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09년 6월 말 현재 간투법상 펀드의 전환등록 현황²⁾을 보면 공모·추가형펀드 3,423개 중 2,216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 등록된 반면, [별표 1] “공모·추가형펀드의 미전환 현황”과 같이 증권펀드 등 1,207개(계좌 수: 605,944개)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등록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중 수탁고 100억 원 미만인 펀드가 1,136개(94%)로 대부분 소규모 펀드에 해당되어 나중엔 전환등록 되지 않는 한 신규자금 모집이 불가능한데도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들이 개별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법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개별통보하도록 하는 등 간투법상 펀드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소규모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부적정

수탁고 규모가 적은 소규모 펀드는 분산투자의 어려움이 있는 등 펀드재산의 운용효율성이 떨어지고, 법정보고서 작성비용, 회계감사비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비용이 대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 계상될 뿐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 수가 증가하여 소규모 펀드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기 쉽다.

2) 간투법 시행으로 2004. 1. 5.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도 포함

실제로 2009년 6월 말 현재 펀드의 수익률은 [별표 2]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률 현황”과 같이 수탁고 100억 원 이상의 펀드의 수익률이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보다 1년 및 3년 펀드수익률이 최고 128.72%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규모 펀드의 수는 2006년 4,368개, 2007년 5,136개, 2008년 6,18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9. 6. 30. 현재 소규모 펀드의 수는 [표 1]과 같이 6,054개로 전체 펀드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수탁고별 펀드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 펀드 규모 | 10억 원 미만 | | 10~100억 원 | | 100억 원 이상 | | 합 계 | |
|----------|----------|-----|-----------|--------|-----------|---------|-------|---------|
| | 펀드 수 | 수탁고 | 펀드 수 | 수탁고 | 펀드 수 | 수탁고 | 펀드 수 | 수탁고 |
| 공모 | 1,479 | 603 | 1,679 | 8,231 | 1,400 | 248,364 | 4,558 | 257,198 |
| 사모 | 598 | 286 | 2,298 | 7,902 | 1,841 | 108,758 | 4,737 | 116,946 |
| 합계 | 2,077 | 889 | 3,977 | 16,133 | 3,241 | 357,122 | 9,295 | 374,144 |

자료: 금융투자협회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 2-11조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펀드의 판매회사가 투자자 개인의 펀드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잔고통보제를 실시하고 있고,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에 펀드조회 등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환매 등의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여 통보하거나 공시하는 등 펀드 투자자가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펀드를 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② 펀드 판매회사에게 펀드조회 내용 등에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공모·추가형 펀드의 미전환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 구 분 | | 펀드 수 | 계좌 수 |
|-------------|-------|-------|---------|
| 증권펀드 | 주식형 | 75 | 4,380 |
| | 채권형 | 479 | 389,387 |
| | 혼합주식형 | 161 | 34,915 |
| | 혼합채권형 | 370 | 24,589 |
| 파생상품펀드 | | 12 | 3,935 |
| 부동산펀드 | | - | - |
| 실물펀드 | | - | - |
| 단기금융펀드(MMF) | | 102 | 148,518 |
| 재간접펀드 | | 8 | 220 |
| 특별자산펀드 | | - | - |
| 합 계 | | 1,207 | 605,944 |

주: 1) 펀드구분기준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펀드 분류기준

2) 모펀드, 종류형 클래스펀드 및 기금 개별펀드 제외, 계좌 수는 '09. 5. 31.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별표 2]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률 현황(2009. 6. 30. 기준)

(단위: 억 원, 개, %)

| 구 분 | 운용 사명 | 수탁고 합계 | 펀드 유형 | 펀드 수 | | 1년 수익률 | | | 3년 수익률 | | |
|--------|----------|-----------|----------|--------------|--------------|-----------------|-----------------|---------|------------------|-----------------|---------|
| | | | | 1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A) | 100억 원 이상(B) | (B)-(A) | 100억 원 미만 (C) | 100억 원 이상(D) | (D)-(C) |
| 1 | ○○○ | 566,482 | 채권형 | 44 | 48 | 6.89 | 8.59 | 1.7 | 15.45 | 17.05 | 1.6 |
| | | | 주식형 | 59 | 59 | -15.8 | -14.75 | 1.05 | 28.94 | 11.01 | -17.93 |
| | | | 단기금융 | 9 | 11 | 3.48 | 4.35 | 0.87 | 13.2 | 14.35 | 1.15 |
| 2 | ○○○ | 462,979 | 채권형 | 7 | 25 | 9.64 | 9.4 | -0.24 | 17.28 | 18.08 | 0.8 |
| | | | 주식형 | 45 | 88 | -21.68 | -14.95 | 6.73 | 18.78 | 21.67 | 2.89 |
| | | | 단기금융 | - | 8 | - | 4.08 | - | - | 13.33 | - |
| 3 | ○○○ | 255,206 | 채권형 | 74 | 33 | 0.04 | 7.36 | 7.32 | -0.39 | 15 | 15.39 |
| | | | 주식형 | 24 | 46 | -25.42 | -19.06 | 6.36 | 7.5 | 30.79 | 23.29 |
| | | | 단기금융 | 11 | 9 | -0.44 | 4.13 | 4.57 | 6.36 | 13.96 | 7.6 |
| 4 | ○○○ | 228,635 | 채권형 | 27 | 38 | 11.64 | 3.82 | -7.82 | 13.24 | 14.65 | 1.41 |
| | | | 주식형 | 13 | 23 | -22.49 | -17.8 | 4.69 | 7.26 | 20.11 | 12.85 |
| | | | 단기금융 | 14 | 6 | 2.69 | 4.44 | 1.75 | 11.05 | 14.79 | 3.74 |
| 5 | ○○○ | 202,539 | 채권형 | 94 | 35 | 5.98 | 8.77 | 2.79 | 14.16 | 17.42 | 3.26 |
| | | | 주식형 | 54 | 45 | -10.85 | -4.39 | 6.46 | 17.02 | 26.17 | 9.15 |
| | | | 단기금융 | 15 | 8 | 3.42 | 4.56 | 1.14 | 12.28 | 15.03 | 2.75 |
| 6 | ○○○ | 186,070 | 채권형 | 59 | 26 | 5.79 | 8.84 | 3.05 | 13.89 | 17.78 | 3.89 |
| | | | 주식형 | 37 | 31 | -16.73 | -14.12 | 2.61 | 3.72 | 14.69 | 10.97 |
| | | | 단기금융 | 6 | 7 | 4.17 | 4.25 | 0.08 | 13.33 | 13.95 | 0.62 |
| 7 | ○○○ | 135,423 | 채권형 | 142 | 25 | 7.76 | 4.27 | -3.49 | 35.19 | - | - |
| | | | 주식형 | 7 | 14 | -26.85 | -24.37 | 2.48 | -12.67 | 116.05 | 128.72 |
| | | | 단기금융 | 18 | 3 | - | 7.32 | - | - | 18.06 | - |

자료: 금융투자협회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검사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을 검사·감독¹⁾하고 있다.

실손(實損)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²⁾가 질병·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³⁾으로 2003. 9. 30.까지는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라 한다)에서만 판매하였고,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한다)는 같은 해 10. 1.부터 단체, 2008. 5. 1.부터는 개인에게도 위 보험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2003년 9월 이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 등 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

1)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1조와 「보험업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검사 그리고 「보험업법」 제1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위탁받은 보험회사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음.

2)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보험수익자와 다를 수 있으나 이 처리안에는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서술하였음.

3) 주로 상해·질병·운전자 보험의 주계약이 아닌 특별약관(특약)으로 부가되어 판매되고, 1999년 이전부터 판매된 상해의료비 및 1999년부터 판매된 입·통원의료비(상해, 질병) 상품이 있음.

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보험금액을 중복하여 지급⁴⁾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에게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등 [표 1]과 같이 2003회계연도까지 손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표 1] 실손의료보험 현황

(단위: 천 건, 백만 원, %)

| 회계연도 | 경과계약 건수 ¹⁾ | 사고건수 | 납부보험료 (A) | 사고발생률 | 지급보험금 (B) | 건당 지급보험금 | 손해율 ²⁾ (B/A) |
|------|-----------------------|-------|--------------|-------|--------------|-------------|----------------------------|
| 2001 | 13,291 | 681 | 230,213 | 5.12 | 291,613 | 0.4282 | 126.7 |
| 2002 | 15,940 | 814 | 273,563 | 5.11 | 349,482 | 0.4291 | 127.8 |
| 2003 | 18,397 | 1,078 | 352,342 | 5.86 | 465,139 | 0.4316 | 132.0 |
| 2004 | 21,239 | 1,144 | 374,246 | 5.38 | 485,160 | 0.4242 | 129.6 |
| 2005 | 25,370 | 1,600 | 512,848 | 6.30 | 594,471 | 0.3717 | 115.9 |
| 2006 | 30,437 | 2,327 | 650,794 | 7.65 | 715,904 | 0.3076 | 110.0 |
| 2007 | 38,122 | 3,382 | 861,311 | 8.87 | 947,010 | 0.2799 | 109.9 |

주: 1) 회계연도 중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약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회계기간 동안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경우 1건으로 간주함. 만약 회계기간 중 6개월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0.5건으로 간주함.

2)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됨.

자료 : 보험개발원

이에 따라 2003. 7. 10. 위 감독원에서는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어 경영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4) 「상법」 제672조에서 보험계약을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비례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자신의 책임금액 이상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이고, 고객신뢰보호 상 관례적으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었던 것임.

해 보험사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같은 해 10. 1. 이후에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한다)은 보험약관대로 비례분담⁵⁾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다.

한편, 손보사들은 같은 해 9. 30.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구계약”이라 한다)과 여러 개의 신계약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시 구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본인 부담금 의료비가 기존 계약에서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남은 보험금 잔액을 신계약에서 비례분담하도록 협의하여 보험금을 보상(이하 “잔액보상방식”이라 한다)하는 등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상법」 제672조의 실손보상 원칙⁶⁾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발생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간 비례분담하여 보상하고 있다.

1.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계약자료 관리 부적정

위 감독원에서는 2009. 4. 14. 손보사⁷⁾들이 신계약의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분담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고, 가입금액을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보험모집 시 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비보험 계약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반드시

5) 2003. 10. 1.부터 각 손보사의 신계약 자료를 손해보험협회에 집적하여 각 손보사에서 공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고 있음.

6)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실제손해를 초과한 무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임.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과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과거부터 계약 간에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실손의료보험의 성격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과 유사하므로 위 감독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7) 생보사는 2008년 5월부터 개인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으로 판매(단체보험은 이전부터 판매)하였으므로 중복가입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 위 감독원에서 손보사만을 언급.

신계약의 중복가입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후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7. 1.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제4-31조의3을 개정하였고, 위 감독원에서는 같은 해 6. 30. 위 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같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신계약의 중복가입 뿐만 아니라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을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별표 1]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와 같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비례보상 받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감독원에서는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76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집적·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여야 했으며, 위 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 전산자료에 구계약 자료입력을 누락하거나 실효·해지 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별표

8) 보험계약자가 보장내용(상해, 질병 등)이 같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다수 가입(보장금액 100만 원, 1,000만 원 등)하여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장금액이 중복되는 부분(100만 원까지)은 각각의 보험상품에서 보험금을 비례분담 받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의 문제가 발생함.

2]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과 같이 2002년 8월까지의 집적률이 최대 30%에 불과하며, 같은 해 8월 이후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이 낮은데도 손보사로 하여금 유효한 계약자료를 모두 입력하도록 감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가 구계약 자료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위 위원회도 위 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2009. 5. 31. 현재 225만여 건의 유효한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 중복여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계약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다.

[표 2] 손해보험회사의 구계약 보유 현황

(단위: 천 건)

| 보험사명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 등 6개 ^{주)} 손해보험사 | 합계 |
|------|-------|-----|-----|-----|-----|-----|-----------------------------|-------|
| 보유건수 | 1,288 | 273 | 238 | 187 | 84 | 58 | 125 | 2,253 |

주) ●●손해보험(43천 건), ■■손해보험(34천 건), ◆◆해상보험(21천 건), □□손해보험(15천 건), △△해상보험(9천 건), ○○손해보험(3천 건)

자료 : 금융감독원

2.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방식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는 2003년 7월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다른 보험사에 중복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가 최초로 청구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별 분담액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시달하였고, 2007. 11. 2. 보험금을 처음 청구받은 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지급액을 포함한 해당 보험금 전액을 지급 후 다른 회사와 각사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도록 ‘다수보험 중 의료실손 보험계약의 보상체계 정비’ 공문을 각 보험회사에 시달하였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막연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만 시달하였을 뿐 아니라 지침을 최초로 시달한 지 6년이 지난 2009. 7. 17. 현재까지 보험업계에서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각각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⁹⁾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2009. 6.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0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검토한 결과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과 같이 총 537,189명이 총 550,124건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들 중 12,230명은 중복 가입으로 2개 이상 보험회사에 25,165건(1인당 평균 2.06건)을 각각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진단서 발급비용¹⁰⁾을 최대 12백만여 원¹¹⁾만큼 부담¹²⁾하였고, 보험금

9) 금융감독원에서는 2007. 12. 28.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경우 발급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제출서류(진단서 등) 대신 간이서류(입·퇴원확인서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중복제출 및 중복청구를 방지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 등을 통보한 바 없음.

10) 보험금 청구 시 필수서류인 진단서는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므로 1부를 초과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1부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11) $(25,165\text{건} - 12,230\text{건}) \times 1,000\text{원} = 12,935,000\text{원}$

12)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거서류의 요구기준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진단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액의 기준이 보험사별로 다르고, 일부 보험사에서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진단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최대 12,935회 중복 방문¹³⁾하는 등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치할 사항 [통보] 금융감독원장은

- ① 보험개발원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험회사가 신계약과 구계약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② 각 보험회사로 하여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하여 보험료를 낭비하거나 보험금 수령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 시행세칙 개정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3)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방법을 검토한 결과 직접 방문, 우편, FAX, 모집인 대행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어떤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별표 1]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

| 보험회사 종류 | 보험회사명 | 보험금 지급방식 | | |
|--------------------|-------|--------------------------------|------------------------|---|
| | | 구계약 ¹⁾ +구계약 | 신계약 ²⁾ +신계약 | 구계약+신계약 |
| 손해보험 | ◇◇◇ | 사업방법서가 동일하면 비례 보상, 다르면 중복보상 | 비례보상 |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할 경우 구계약에서 선차감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신계약 간 비례보상 |
| 생명보험 ³⁾ | ◇◇◇ | 해당사항 없음 | |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하 지 못할 경우 신계약 간 비 례보상 |

주: 1) 2003. 9. 30.까지 체결한 보험계약

2) 2003. 10. 1.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3) 현재 11개 생보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5개 생보사에서는 구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 없이 신계약 간에서만 비례분담하고 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

(단위: 건, %)

| 회사명 | 상해의료비 | 입원 80% | 입원 100% | 통원 100% | 계 |
|-----------------------|------------|-----------|---------|---------|------------|
| ○○ | 334,879 | 0 | 0 | 0 | 334,879 |
| ○○ | 224,096 | 2,164 | 0 | 0 | 226,260 |
| ○○ | 102,487 | 0 | 0 | 0 | 102,487 |
| ○○ | 94,655 | 1,423 | 1,036 | 0 | 97,114 |
| ○○ | 83,491 | 0 | 1,885 | 0 | 85,376 |
| ○○ | 159,699 | 0 | 3,349 | 3,349 | 166,397 |
| ○○ | 50,732 | 0 | 0 | 0 | 50,732 |
| ○○ | 1,400,212 | 109,680 | 0 | 0 | 1,509,892 |
| ○○ | 711,634 | 43,839 | 0 | 0 | 755,473 |
| ○○ | 545,782 | 5,089 | 426 | 9,096 | 560,393 |
| ○○ | 635,038 | 46 | 195,788 | 0 | 830,872 |
| 계 ¹⁾ | 4,342,705 | 162,241 | 202,484 | 12,445 | 4,719,875 |
| 경과계약 건수 ²⁾ | 12,715,429 | 1,418,907 | 788,362 | 582,761 | 15,505,459 |
| 집적률 | 34.2 | 11.4 | 25.7 | 2.1 | 30.4 |

주: 1) 손보사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자료로 2002년 8월 기준 계약건수로 집계한 것임. 이에 따라 경과계약 건수로 환산할 경우 합계액보다 적어져 집적률이 더 낮아짐.

2) 2002회계연도(2002. 4. 1.~2003. 3. 31.)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경과계약 건수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보

현료율을 산출하기 위해 손보사로부터 받는 자료로 위 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운용되며, 손보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

(단위: 건, 명, %)

| 회사명 | 총보상 건수 | 1개 회사 청구건수 | 다수 보험회사 간 비례분담 건수 및 인원 ^{주)} | | | | | | | |
|-----|-----------|---------------|--------------------------------------|--------|-------|-----|--------|----|--------|--------|
| | | | 2개사 | | 3개사 | | 4개사 이상 | | 합계 | |
| | |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 ○○ | 70,469 | 67,873 | 2,596 | 1,298 | 0 | 0 | 0 | 0 | 2,596 | 1,298 |
| ○○ | 26,757 | 25,606 | 961 | 481 | 150 | 50 | 40 | 10 | 1,151 | 541 |
| ○○ | 12,199 | 11,243 | 856 | 428 | 80 | 27 | 20 | 5 | 956 | 460 |
| ○○ | 15,360 | 13,809 | 1,361 | 681 | 154 | 51 | 36 | 9 | 1,551 | 741 |
| ○○ | 27,044 | 26,192 | 752 | 376 | 78 | 26 | 22 | 6 | 852 | 408 |
| ○○ | 13,643 | 12,399 | 1,050 | 525 | 146 | 49 | 48 | 12 | 1,244 | 586 |
| ○○ | 130,787 | 128,708 | 1,922 | 961 | 149 | 50 | 8 | 2 | 2,079 | 1,013 |
| ○○ | 97,963 | 93,273 | 4,304 | 2,152 | 350 | 117 | 36 | 9 | 4,690 | 2,278 |
| ○○ | 58,371 | 52,711 | 5,038 | 2,519 | 482 | 161 | 140 | 35 | 5,660 | 2,715 |
| ○○ | 97,531 | 93,145 | 4,386 | 2,193 | 0 | 0 | 0 | 0 | 4,386 | 2,193 |
| 합계 | 550,124 | 524,959 | 23,226 | 11,613 | 1,589 | 530 | 350 | 88 | 25,165 | 12,230 |
| 비율 | 100 | 95.42 | 4.58 | | | | | | | |
| | - | - | 92.30 | | 6.31 | | 1.39 | | 100 | |

주) 보험계약자 1명이 3개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총 보상건수는 3건임.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면서 위 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1. 인력감축계획의 형식적 추진

금융위원회에서 2008. 3. 31. 2008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금융규제기관의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5. 2. 금융감독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53명씩 총 159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589명에서 1,430명으로 10% 축소하는 내용의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정원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제 운용하는 총 인원을 축소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1999년 설립 당시부터 1년 이상 국내·외 학술연수 및 외부파견 인력 등을 「정원의 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하면서, 국내·외 학술연수 인력을 1999년 15명(당시 현원 1,266명의 1.2%)에서 2007년 61명(당시 현원 1,680명의 3.6%)으로, 국제기구 연수인력을 1999년 1명에서 2007년 8명으로 각각 증가시키는 등 [별표 1] “정원의 인력의 연도별 추이”와 같이 2007년 말 현재 총 137명의 「정원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정원 10%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2008. 5. 29. 연령 기준에 따른 팀장 보임해지 직원 18명을 위 기관 소속 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들을 「정원의 인력」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6개월 이상 파견”의 경우를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항목에 신규로 추가하였다.

또한 같은 해 8. 29. 위 기관에서 종전에는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던 교육연수 휴직, 국외유학 휴직, 배우자 동반 휴직, 가족 간병휴직 등 청원휴직 인력을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말 현재 청원휴직자 18명이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08. 6. 23. 및 같은 해 7. 1. 4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에 10명의 인력을 신규로 파견하는 등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증가시

킨 결과,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현원 연도별 추이”와 같이 정원 및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감소하였으나, 「정원의 인력」은 2007년 137명에서 2008년 175명으로 38명 증가하여 위 기관의 총 현원은 2007년 1,680명에서 2008년 1,684명으로 4명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 되도록 인력감축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정원의 인력」의 한도를 엄격히 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채, 위 기관에서 인력감축계획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2. 상위직 인력 과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장, 실장, 팀장 등 직위별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원은 가급적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하고 국장, 실장, 팀장 등 상위직 인력을 직위별 정원보다 많이 운용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2009. 4. 6. 정기인사를 하면서, 팀장 이상 정원은 총 265명(국장 25명, 실장 24명, 팀장S 118명, 팀장J 98명)에 불과한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국장급, 실장급, 팀장급 인사발령을 내고 이들에게 각각 국장, 실장, 팀장과 동일한 직무급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원보다 78명을 초과하여 총 343명(국장 27명, 실장 73명, 팀장S 119명, 팀장J 124명)을 팀장 이상 상위직으로

1) 직무급(1년 기준): 부서장 27,863,000원, 실장 24,530,000원, 팀장S 19,719,000원, 팀장J 15,141,000원, 미보 임직원 12,895,000원(또한, 직무급의 차이는 평가급, 특별상여급, 연차휴가보전수당, 퇴직금 등의 차이를 가져옴)

운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2007년 말 동 기관의 실장 정원은 26명인데도 실장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을 45명으로 하여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별표 3]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와 같이 매년 팀장 이상 상위 직에 대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3. 보임해지 인력 선정 및 운용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 국·실장 및 팀장이 일정 연령이 되면 보임 해지한 후 이들을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일정기간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취업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되어 있고, 「팀장 보임해지 가이드라인」에서 팀장에 대한 보임해지는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 건강상태 등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임해지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실적 등이 아닌 단순한 연령기준에 따라 정년이 4년 이상 남은 국·실장 및 팀장을 강제로 보임 해지하여서는 안 된다.²⁾

또한,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인력을 현업부서가 아닌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것은 조직 운용상 비효율적이고,

2) 위 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86조의 3의 규정 등에 따르면 정년이 1년 남은 1급에서 3급 직원은 총무국 소속 자문역으로 발령을 내어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보임이 없는 무보임자에게 보임자와 같은 수준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직무급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04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표 4]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과 같이 국·실장의 경우 주로 고령자 위주로 보임 해지자가 선정되고 있고, 팀장의 경우에도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보임 해지 사례는 감소하는 반면 주로 연령(만 54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임 해지가 결정되고 있었다.

또한 위 기관에서는 국·실장을 보임 해지한 후 인력개발실 교수, 원장 자문위원, 감독역량 강화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면서 2년간 실장급으로 발령하여 실장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팀장의 경우에도 2007년 이전에는 보임 해지 후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업부서에 배치하였으나, 2008년부터 연령 기준에 따른 보임 해지자에 대해서는 1년간 교육훈련 파견(정원의 인력으로 관리) 후 현업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었다.

4. 수견직원 과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인력을 수견 받아 민원상담,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에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수견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외부기관과의 공동업무 수행 또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기관 인력을 수건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건인력의 수와 기간은 그 사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인력 운용의 편의 또는 단순 보조업무를 위해 인력을 수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 2008년 현재 연수·파견·휴직 등 총 163명³⁾의 자체 잉여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감축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말 현재 총 86명(총원 대비 4.9%)의 인력을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수건 받아 운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86명 중 41명은 민원상담 업무를, 24명은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지원업무를, 19명은 금융 인·허가 등 상담업무를, 나머지 2명은 금융감독원의 고유 업무인 보험대리점 등록을 대행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단순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민원상담 업무는 이해상충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7. 10. 18. 위 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자체 채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2009년 6월 말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지 않은 채 수건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① 정원 뿐 아니라 정원외 인력에 대하여도 인력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는 연수·파견 인력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정원 외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3) 2008년 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정원의 인력」 175명 중 육아휴직 11명과 가족 간병휴직 1명을 제외한 인원

- ② 앞으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상위직 인력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③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보임직원을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보임해지한 후 교수,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④ 수견직원 운용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도로 하고 민원상담업무를 수견직원이 주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연수·파견 인력 등 정원외 인력은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정원만 형식적으로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외 인력 관련 예산 심사 등을 철저히 하고
- ② 금융감독원에서 미보임직원 등을 정원에 근거가 없는 상위직위에 임용하여 사실상 상위직위 인력을 정원보다 과도하게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정원외 인력」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 분 | 1999년 ¹⁾ | 2000년 | 2002년 | 2004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국가기관 파견 | 미상 | 미상 | 36 | 49 | 51 | 49 | 32 |
| 지방자치단체 파견 | 미상 | 미상 | 0 | 0 | 1 | 1 | 14 |
| 공공단체 파견 | 미상 | 미상 | (2) | 3 (3) | 5 (5) | 5 (6) | 5 (9) |
| 민간단체 파견 | 0 | 0 | 0 | 0 | 0 | 0 | (2) |
| 국가기관 겸임 | 미상 | 미상 | 7 | 6 | 0 | 0 | 0 |
| 국내외 학술연수 | (15) | (32) | (38) | 54 | 72 | 61 | 65 |
| 국제기구 연수 | (1) | (1) | (2) | 3 | 6 | 8 | 9 |
| 교육연수 휴직 | 0 | 0 | 0 | (1) | (9) | (6) | 2 |
| 육아휴직 | 0 | (3) | (4) | 5 | 3 | 5 | 11 |
| 국외유학 휴직 | 0 | (4) | (10) | (4) | (13) | (10) | 10 |
| 자문역 ²⁾ | - | - | 0 | 6 | 4 | 8 | 3 |
| 배우자 동반휴직 ³⁾ | - | - | - | - | (1) | (6) | 5 |
| 가족 간병휴직 ⁴⁾ | - | - | - | - | (1) | (1) | 1 |
| 교육훈련 파견 ⁵⁾ | - | - | - | - | - | - | 18 |
| 합 계 | 미상 | 미상 | 43 | 126 | 142 | 137 | 175 |

주: 1) 해당연도 연도말 기준 인원임(괄호 안의 숫자는 정원내 인력으로 합계에서 제외됨)

2) 2002. 5. 11.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 남은 1~3급 직원을 자문역으로 발령하여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3) 2005. 9. 20.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4) 2006. 2. 17.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5) 2008. 5. 29.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인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 분 | | 1999년 1월 | 2002년 말 | 2004년 말 | 2006년 말 | 2007년 말 | 2008년 말 |
|------|--------|----------|---------|---------|---------|---------|---------|
| 정 원 | | 1,342 | 1,529 | 1,545 | 1,585 | 1,589 | 1,536 |
| 총 인원 | 계 | 1,266 | 1,533 | 1,643 | 1,673 | 1,680 | 1,684 |
| | 정원내 인력 | 미상 | 1,490 | 1,517 | 1,531 | 1,543 | 1,509 |
| | 정원외 인력 | 미상 | 43 | 126 | 142 | 137 | 175 |

주) 매년 말 총 인원에는 12월 31일 퇴직자(12월 31일까지 근무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

(단위: 명)

| 구 분 | | 국장 | 실장 | 팀장S | 팀장J |
|-------|-----------------------|----|----|-----|-----|
| 2005년 | 2004년 말 정원(A) | 30 | 24 | 129 | 114 |
| | 예산편성인원(B) | 30 | 32 | 126 | 116 |
| |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 0 | 8 | -3 | 2 |
| 2006년 | 2005년 말 정원(A) | 28 | 24 | 120 | 100 |
| | 예산편성인원(B) | 30 | 35 | 123 | 110 |
| |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 2 | 11 | 3 | 10 |
| 2007년 | 2006년 말 정원(A) | 28 | 26 | 124 | 101 |
| | 예산편성인원(B) | 29 | 40 | 133 | 110 |
| |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 1 | 14 | 9 | 9 |
| 2008년 | 2007년 말 정원(A) | 28 | 26 | 125 | 104 |
| | 예산편성인원(B) | 29 | 45 | 133 | 111 |
| |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 1 | 19 | 8 | 7 |

주: 1) 팀장J로 승진한 자에게 승진한 해에는 팀장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J 직무급을 실제 지급한 인원은 정원 및 예산편성인원보다 적음

2)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승인은 개별적인 인건비 산출근거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자연증가율, 인력감축 및 임원보수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의 2008년도 인건비 예산 총액을 조정하여 이루어짐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직위별 정원 현황 제출자료 분석

[별표 4]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심사대상 선정사유 | 2006년 | |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
| | | 심사대상 | 보임해지 | 심사대상 | 보임해지 | 심사대상 | 해지 | 심사대상 | 보임해지 |
| 국·실장 | 연 령 | 6 | 6 | 11 | 11 | 14 | 13 | 18 | 17 |
| | 보임기간 | 5 | 2 | 4 | 3 | 3 | 1 | 2 | 0 |
| | 기 타 | | | 1 | 1 | | | | |
| 팀 장 | 연 령 | 2 | 2 | 18 | 18 | 9 | 8 | 13 | 13 |
| | 성과저조 | 14 | 5 | 21 | 4 | 19 | 2 | 5 | 4 |
| | 기 타 | 3 | 3 | 1 | 0 | 1 | 1 | | |

자료: 금융감독원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1. 인건비 과다 편성 및 집행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민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2009년도 수입 예산의 73.5%)이 주된 재원이므로, 민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현원¹⁾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인원과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보수를

1) ①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전년 말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되 정원과 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여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③ 정부의 경우 정원에 (1-결원율)을 곱해 인건비 예산을 산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율을 인건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음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별표 1] “연도별 예산 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인원을 전년도 현원보다 최소 26명에서 최대 68명까지 더 많이 산정하고, 인건비 지급단가도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와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2002년 이후 매년 기본급(연공제 직원의 경우 기준봉급)을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과 같이 최소 1,753백만 원에서 최대 4,751백만 원까지 과다하게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급(기준봉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평가급, 수당, 상여금 등 다른 보수지급항목도 함께 과다 편성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위 기관에서 2002년에 전년도 특별상여금 지급분(기본급의 150%) 중 일부(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화²⁾하고서도 다시 인건비 집행잔액 3,869백만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과 같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224백만 원을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인원과 단가를 과다 산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집행잔액으로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2) 기본급에 통합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본급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도 함께 증가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특별상여금 정액 지급

금융감독원에서 「급여규정」 제32조 제4항 및 제4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상여금 성격의 특별상여금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임직원의 경영 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록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³⁾의 경우에 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그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전체의 특별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특별상여금 제도가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명세”와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특별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2005년부터 지급시기를 3차례로 나누어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기준봉급(1개월)의 50%씩 기준봉급의 100%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기준봉급의 50%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⁴⁾.

이에 대해, 2007년 감사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직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각 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결정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액을 다시 임직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

4) 집행간부, 사무서무직원, 해외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위 연공제 직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연봉의 1/36씩 총 2/36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연봉의 1/36을 차등지급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위 기관에서는 2007년 이후에도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차등 지급 폭만을 일부 확대⁵⁾한 채 근로자의 날 및 추석에는 특별상여금을 여전히 정액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성과 향상의 동기부여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 지급률 결정 등의 성과평가 요소 없이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앞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인원 및 지급단가 등을 실제보다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인건비를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를 부당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임직원의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5) 연공제 직원의 경우 2006년 기준봉급의 50%±6% → 2007년 100%±6% → 2008년 150%±6%로 확대

[별표 1]

연도별 예산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

(단위: 명)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전년 말 총현원주)(A) | 1,476 | 1,544 | 1,613 | 1,654 | 1,653 | 1,686 | 1,693 |
| 예산편성 인원(B) | 1,523 | 1,612 | 1,675 | 1,680 | 1,690 | 1,738 | 1,740 |
| 실제 보수지급 인원(C) | 1,524 | 1,598 | 1,660 | 1,661 | 1,667 | 1,684 | 1,692 |
| 총현원대비 차이(B-A) | 47 | 68 | 62 | 26 | 37 | 52 | 47 |
| 실제인원대비 차이(B-C) | -1 | 14 | 15 | 19 | 23 | 54 | 48 |

주) 총 현원은 연수·파견 인력 등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

가. 연봉제 직원의 기본급 지급단가(1년 기준)

(금액단위: 천 원)

| 구 분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 '02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44,016 | 40,025 | 30,515 | 24,851 | 18,202 |
| | 실제 지급단가(B) | 43,751.40 | 39,241.44 | 28,863.12 | 25,548.72 | 17,566.20 |
| | 차이(A-B) | 264.60 | 783.56 | 1,651.88 | -697.72 | 635.80 |
| '03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45,391 | 41,108 | 29,914 | 27,339 | 19,436 |
| | 실제 지급단가(B) | 44,994.84 | 40,556.64 | 28,639.92 | 28,483.92 | 19,414.44 |
| | 차이(A-B) | 396.16 | 551.36 | 1,274.08 | -1,144.92 | 21.56 |
| '04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48,638 | 43,825 | 38,022 | 30,489 | 0 |
| | 실제 지급단가(B) | 47,590.92 | 43,325.76 | 37,367.64 | 29,675.64 | 0.00 |
| | 차이(A-B) | 1,047.08 | 499.24 | 654.36 | 813.36 | 0.00 |
| '05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49,136.40 | 44,711.30 | 38,584.20 | 31,274.80 | 0.00 |
| | 실제 지급단가(B) | 48,664.44 | 44,457.36 | 38,505.24 | 30,907.08 | 0.00 |
| | 차이(A-B) | 471.96 | 253.94 | 78.96 | 367.72 | 0.00 |
| '06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0,072 | 45,899 | 39,818 | 32,119 | 0 |
| | 실제 지급단가(B) | 49,484.04 | 45,575.04 | 39,652.08 | 31,972.92 | 0.00 |
| | 차이(A-B) | 587.96 | 323.96 | 165.92 | 146.08 | 0.00 |
| '07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1,555 | 47,539 | 41,411 | 33,428 | 0 |
| | 실제 지급단가(B) | 50,838.84 | 47,219.16 | 41,039.04 | 33,045.00 | 0.00 |
| | 차이(A-B) | 716.16 | 319.84 | 371.96 | 383.00 | 0.00 |
| '08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1,603 | 47,826 | 41,683 | 31,947 | 0 |
| | 실제 지급단가(B) | 52,075.92 | 48,326.52 | 41,893.56 | 33,359.40 | 0.00 |
| | 차이(A-B) | -472.92 | -500.52 | -210.56 | -1,412.40 | 0.00 |

주: 1) 실제 지급단가는 각 직급 월 평균 지급단가에 12를 곱해 1년 기준으로 작성(이하 같음)

2) 실제 지급단가는 별도로 편성된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 예산에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이하 같음)

3) 2008년에 예산상 지급단가보다 실제 지급단가가 높은 것은 2007년에 예산상 인건비 동결방침과 달리 인건비를 2% 인상한 부분이 2008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상 지급단가는 2% 인상이 되지 않은 단가로 편성이 되고, 2008년에 실제로는 지급은 2% 인상된 단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이하 같음)

나. 연공제 국내직원의 기준봉급 지급단가(1개월 기준)

(금액단위: 천 원)

| 구 분 | | 2급 | 3급 | 4급 | 5급 | 사무직원 | 서무직원 |
|------|-------------|-----------|----------|----------|----------|----------|----------|
| '02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3,090 | 2,845 | 2,247 | 1,661 | 1,255 | 1,553 |
| | 실제 지급단가(B) | 3,013.19 | 2,761.07 | 2,108.71 | 1,538.79 | 1,216.06 | 1,541.55 |
| | 차이(A-B) | 76.81 | 83.93 | 138.29 | 122.21 | 38.94 | 11.45 |
| '03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3,293.3 | 3,136.6 | 2,393.7 | 1,754.4 | 1,378.9 | 1,683.4 |
| | 실제 지급단가(B) | 3,268.12 | 2,965.82 | 2,288.32 | 1,629.60 | 1,340.46 | 1,669.99 |
| | 차이(A-B) | 25.18 | 170.78 | 105.38 | 124.80 | 38.44 | 13.41 |
| '04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0 | 4,315 | 3,351 | 2,432 | 1,914 | 2,372 |
| | 실제 지급단가(B) | 4,574.58 | 4,122.57 | 3,182.88 | 2,248.63 | 1,730.11 | 2,285.61 |
| | 차이(A-B) | -4,574.58 | 192.43 | 168.12 | 183.37 | 183.89 | 86.39 |
| '05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203 | 4,618 | 3,586 | 2,655 | 2,182 | 2,596 |
| | 실제 지급단가(B) | 4,888.87 | 4,441.63 | 3,403.66 | 2,448.41 | 1,931.18 | 2,476.60 |
| | 차이(A-B) | 314.13 | 176.37 | 182.34 | 206.59 | 250.82 | 119.40 |
| '06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236 | 4,711 | 3,658 | 2,749 | 2,160 | 2,684 |
| | 실제 지급단가(B) | 5,054.25 | 4,498.97 | 3,458.56 | 2,529.27 | 2,036.72 | 2,561.40 |
| | 차이(A-B) | 181.75 | 212.03 | 199.44 | 219.73 | 123.28 | 122.60 |
| '07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468 | 4,710 | 3,699 | 2,771 | 2,284 | 2,800 |
| | 실제 지급단가(B) | 5,194.79 | 4,641.32 | 3,543.32 | 2,624.07 | 2,166.63 | 2,681.09 |
| | 차이(A-B) | 273.21 | 68.68 | 155.68 | 146.93 | 117.37 | 118.91 |
| '08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394 | 4,853 | 3,699 | 2,826 | 2,226 | 2,844 |
| | 실제 지급단가(B) | 5,085.93 | 4,793.48 | 3,627.51 | 2,665.59 | 2,228.47 | 2,761.31 |
| | 차이(A-B) | 308.07 | 59.52 | 71.49 | 160.41 | -2.47 | 82.69 |

주) 임원의 기본급과 해외직원의 기준봉급은 그 지급단가가 「급여규정」에 정해져 있어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 간 차이 분석대상에서 제외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기본급(연봉제) | 602 | 715 | 882 | 1,286 | 641 | 1,006 | 380 |
| 기준봉급(연공제) | 1,151 | 2,236 | 2,743 | 2,462 | 3,879 | 3,745 | 3,183 |
| 합계 | 1,753 | 2,951 | 3,625 | 3,748 | 4,520 | 4,751 | 3,563 |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합계 |
|----------|-------|-------|-------|-------|-------|-------|-------|--------|
| 추가 보수인상 | - | - | - | 2,325 | - | 2,741 | - | 5,066 |
| 특별상여금 지급 | 3,869 | 4,572 | - | - | - | - | 717 | 9,158 |
| 합 계 | 3,869 | 4,572 | - | 2,325 | - | 2,741 | 717 | 14,224 |

주)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예산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한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수 및 특별상여금 예산 자체를 전년보다 과도하게 인상하여 편성한 부분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 명세

(금액단위: 천 원)

| 지급일자 | 차등 여부 | 집행간부 | 연봉제 직원 | 연공제 직원 | 해외근무직원 | 계 |
|---------------|--------------|-----------|------------|------------|---------|------------|
| 1999. 12. 29. | 정액 지급 | 19,901 | 231,314 | 2,509,225 | 0 | 2,760,440 |
| 2001. 9. 28. | 정액 지급 | 0 | 297,836 | 1,079,545 | 0 | 1,377,381 |
| 2001. 12. 28. | 정액 지급 | 0 | 0 | 2,351,162 | 0 | 2,351,162 |
| 2002. 9. 16. | 정액 지급 | 0 | 385,387 | 1,472,376 | 0 | 1,857,763 |
| 2002. 12. 27. | 정액 지급 | 29,998 | 403,596 | 1,577,395 | 0 | 2,010,989 |
| 2003. 12. 31. | 정액 지급 | 63,894 | 913,702 | 3,537,104 | 57,373 | 4,572,073 |
| 2004. 9. 23. | 정액 지급 | 44,999 | 805,296 | 1,982,392 | 29,165 | 2,861,852 |
| 2004. 12. 31. | 정액 지급 | 46,111 | 838,913 | 2,100,475 | 33,247 | 3,018,746 |
| 2005. 4. 29. | 정액 지급 | 52,717 | 900,970 | 2,123,563 | 30,454 | 3,107,704 |
| 2005. 9. 15. | 정액 지급 | 52,717 | 871,302 | 2,145,314 | 34,120 | 3,103,453 |
| 2005. 12. 30. | 차등 지급 | 52,717 | 870,906 | 2,206,461 | 30,726 | 3,160,810 |
| 2006. 4. 28. | 정액 지급 | 72,826 | 939,273 | 2,189,135 | 28,758 | 3,229,992 |
| 2006. 10. 2. | 정액 지급 | 79,076 | 904,020 | 2,247,892 | 31,814 | 3,262,802 |
| 2006. 12. 29. | 차등 지급 | 84,057 | 914,972 | 2,334,207 | 32,770 | 3,366,006 |
| 2007. 4. 30. | 정액 지급 | 86,666 | 1,024,624 | 2,282,670 | 31,946 | 3,425,906 |
| 2007. 9. 20. | 정액 지급 | 86,666 | 973,933 | 2,301,517 | 31,946 | 3,394,062 |
| 2007. 12. 31. | 차등 지급 | 94,999 | 959,600 | 2,331,720 | 33,500 | 3,419,819 |
| 2008. 4. 30. | 정액 지급 | 88,958 | 1,080,305 | 2,314,518 | 29,168 | 3,512,949 |
| 2008. 9. 11. | 정액 지급 | 95,624 | 1,031,957 | 2,323,530 | 32,405 | 3,483,516 |
| 2008. 12. 31. | 차등 지급 | 95,624 | 1,025,788 | 2,364,728 | 30,571 | 3,516,711 |
| 2008. 12. 31. | 3급이하 정액지급 | 0 | 80,087 | 631,026 | 5,562 | 716,675 |
| 2009. 4. 30. | 정액 지급 | 0 | 1,088,678 | 2,285,798 | 36,340 | 3,410,816 |
| 합 계 | | 1,147,550 | 16,542,459 | 46,691,753 | 539,865 | 64,921,627 |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가 2008. 10. 2. 금융투자업(증권중개업)의 인가를 신청하자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위탁한 후, 심사안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08-25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인가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하여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와 그 임원이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이번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 전인 2008. 2. 29.에 증권 위탁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설립하고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 9개 대부업자의

311개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수탁한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5. 7. “◆◆◆◆이 대부업체의 선물·옵션 계좌 대여행위임을 알고도 불건전 매매주문을 수탁한 것은 증권업의 건전영위를 곤란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¹⁾

따라서 ◆◆◆◆에서 불과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 2. 『자본시장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미 인가받은 ◆◆◆◆에 증권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가 신청하였으므로 위 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부의안건을 작성할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었음을 명시하여야 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부의안건을 검토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감독원에서는 ◆◆◆◆이 대부업체의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수탁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24. 위 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기관주의’는 금융감독원의 내부기준상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2009. 1. 20. 부의안건을 작성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부의하였다.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 21.과 같은 해 1.

1) ◆◆◆◆에서 금융위원회 최종의결 하루 전인 2008. 5. 8.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함

28. ◆◆◆◆에 대하여 위 심사안건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권중개업을 인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심사안건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증권중개업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1997. 7.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용정보업자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하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¹⁾를 등록 조치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과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위 위원회는 위 연합회에 집중되는 정보는 각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과 회계법인 등에서 여신심사, 여신 건전성 감독, 회계감사 등에 폭넓게 이용되므로 신용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위 연합회가 2008. 10. 2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실시한 일제 정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위 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 1,000만

1)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을 정사원으로 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위 법에 따라 7천여 개의 금융기관, 공공기관, 각종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정책당국의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여 건의 1.88%에 해당하는 188,903건이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어 일제정비를 통하여 수정되는 등 오류 및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바로 등록 또는 해지하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은행연합회 일제정비 결과

| 구 분 | 연체 정보 | 개인대출 정보 | 개인채무보증 정보 |
|----------|-----------|-----------|-----------|
| 전체 등록 건수 | 1,000만여 건 | 3,200만여 명 | 410만여 명 |
| 정비 대상 건수 | 188,903건 | 776,834명 | 22,522명 |
| 비 율(%) | 1.88 | 2.42 | 0.54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자료 재구성

그러나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신용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협의회 안전을 보고받거나 2007. 7. 12.부터 같은 해 7. 16.까지 4일간 금융감독원을 통해 위탁검사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지도·감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위와 같이 일제정비²⁾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결과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거나 정비상태를 표본 점검하는 등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9. 7. 2.부터 같은 해 7. 8.까지 감사원 감사 시 위 일제 정비 후 6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변동 사항을 통보한 실적을 조사³⁾한 결과, [표 2]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위 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있는 자로 등록된 100명이 분할 상환 등으로

2)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2003. 2. 24.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일제 정비 작업을 한 지 5년이 지난 2008년 에 다시 실시.

3)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7,000여 개의 기관 중 특정 기관에 대하여 조사.

「신용정보 관리규약」(2009. 6. 12.)에 따른 신용정보 등록해제 대상자인데도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해제를 요청하지 않아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09. 6. 30. 현재까지 짧게는 62일 길게는 1,586일간 연체 등록되어 있는 등 두 기관에서 443명이 짧게는 11일에서 길게는 1,586일간 신용정보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연체 등록 또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표 2] 신용정보 변동 미반영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연체 정보 등록 | | 연체 정보 해제 | |
|----------|-------------------|-------|----------|-------|
| | 대상자 ⁴⁾ | 미 등록자 | 대상자 | 미 해제자 |
| 한국주택금융공사 | 107,502 | - | 33,783 | 100 |
| 한국자산관리공사 | 4,654 | 238 | 25,969 | 96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처 신용정보 등록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연체등록자 100명 중 카드 발급을 신청한 5명 모두 위 연합회의 연체등록자라는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었고 2명은 카드 사용이 중지된 후 해제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아 신용정보 제공자의 경제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그 외에도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을 취급하면서 잘못된 신용정보를 기초로 이들에게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국은행연합회와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 변동사항 관리를 게을리하여 신용양호자가 피해를 입거나 신

4) 대상자는 2006년부터 연체 등록이나 해제 사실을 위 연합회에 통보해 준 건수를 집계한 것임.

용불량자에게 신용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7. 6. 4. 감독행정을 체계적·단계적으로 규범화하고자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회의를 거쳐 확정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2007. 6. 8. 언론 보도)에 따라 금융법규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중 “금융감독 법규의 적법성·투명성 확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및 실무해석사례가 공유 또는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관련 기관의 법규 해석사례를 공유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08. 3. 3. 출범 이후, 같은 해 7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개통하면서 그간 민원에 회신하는 형태로 질의 당사자에게만 통보하여 오던 유권해석사례를 같은 해 7. 1.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 홈페이지인 “e-금융민원센터”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 방안”의 취지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등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신속하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전신인 구 금융감독위원회와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3. 3.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2009. 6. 30.까지의 유권해석사례의 공개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공개가 가능한 유권해석사례 총 326건 중에서 82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244건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¹⁾

[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공개 현황(2009. 6. 30. 현재)

(단위: 건, %)

| | 접수건수 | 완료건수 (A) | 비공개사유 ²⁾ 해당건수 (B) | 공개건수 (C) | 미공개 건수 (A-B-C) | 공개 비율 [C/(A-B)] |
|-----------|------|-------------|---------------------------------|-------------|-------------------|--------------------|
| 2008년 | 259 | 257 | 74 | 80 | 103 | 25.2% |
| 2009년 상반기 | 298 | 226 | 83 | 2 | 141 | 1.4% |
| 합 계 | 557 | 483 | 157 | 82 | 244 | 25.2% |

자료: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위 홈페이지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의 유권해석사례 총 134건(2006년도 회신 60건, 2007년도 회신 74건)만 등록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전체 유권해석사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위원회 출범 이전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회신한 유권해석사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1) 따라서 유권해석사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위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시중에서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동일·유사 내용, 신청인 철회, 유선 답변, 회신 후 법령 개정, 단순 법령안내 등

그 결과 위 유권해석사례 공개제도가 금융정책의 일관성·투명성 확보라는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권해석사례를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는 등 유권해석사례 공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외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거나 소속 공무원을 국가기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위 위원회에서는 2008. 2. 29.부터 2009. 6. 30. 현재까지 민간기관으로부터 총 73명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게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41조의2 및 「공무원 임용규칙」(2008.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제42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미리 파

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 발령하고 파견목적 및 심의결과 등을 첨부하여 민간전문가의 파견사실을 파견 후 1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파견 전에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심의·검토함으로써 제도에 맞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제도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로 파견 받은 직원을 비서로 활용

그러나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17.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8. 3. 21.부터 위 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공사 산하 ○○○○공사 계약직 ○○○은 위 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에서 ●●●●공사에 위 사람을 공적자금 업무 관련 민간전문가로 파견 요청을 하여 같은 해 4. 21.부터 2010년 3월¹⁾까지 같은 과에 인사 발령을 내고도 실제로는 2008. 3. 21.부터 2009. 5. 31.까지 위 위원회 △△△△에 비서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사람과 금융불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 파견받은 ○○○○공사 ◎◎◎◎²⁾을 파견 사유와 다르게 비서로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³⁾

1) 위 두 사람을 대상으로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파견 요청을 하여 파견 근무토록 하고 이후 2009. 3. 20. ●●●●공사에 파견기간 연장 협조요청을 하여 1년간 파견 기간을 연장.

2) ◎◎◎◎은 2008. 3. 21.부터 2009. 6. 3.까지 △△△△△△, 같은 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였고 ◎◎◎◎과 ○○○은 감사원 예비조사(2009. 5. 28.) 이후에 각각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3) ◎◎◎◎은 은행과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에 위 사람이 필요하고 부보금융기관의 경영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아 지원업무에 적임자로 선정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문서를

또한, 위 위원회 혁신행정과(현 행정인사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민간전문가 파견사실을 통보하면서 ○○○은 공적자금과 관련된 업무 등에서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파견받은 것이며 ●●●●공사에서 부보금융권별 보험료 납부를 통한 목표기금규모 설정 등 예금보험제도 연구, 정리금융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등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위 두 사람⁴⁾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것처럼 파견목적과 원 소속기관 담당업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민간전문가 파견

한편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6. 위 위원회에서 제출한 민간전문가 파견 현황과 실제 근무 인력을 비교해 본 결과,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견 명세”와 같이 위 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직무파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도 파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 직원 ◆◆◆ 등 2명을 2009. 2. 17. 및 같은 해 3. 23.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각각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위원회 3개 과에서 민간전문가 4명⁵⁾을 위와 같이 심의절차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해 2. 17.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짧게는 54일에서 길게는 136일 동안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기안 작성하여 2008. 4. 11. 혁신행정과에 관련 문서 송부.

4) ○○○은 금융 불공정거래 감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파견받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업무와 금융기관 상시 감시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으나 위 두 사람은 ●●●●공사에서 비서나 서무 업무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근무토록 하다가 금융위원회에 파견하기 위하여 정리금융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인력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전혀 경험 및 전문지식이 없음.

5) 이 중 자본시장과에 근무한 ◆◆◆ 등 3명은 감사원 예비조사 실시(2009. 5. 28.) 이후인 2009. 7. 2.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건 명세

| 구 분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
| 소속 및 직위 | ◇◇◇◇ 대리 | ◇◇◇◇ 대리 | ■■■■ 과장 | ◇◇◇◇ 대리 |
| 실제파견 근무일 | 2009. 2. 17. | 2009. 2. 17. | 2009. 3. 22. | 2009. 5. 10. |
| 근무 부서명 | 자본시장과 | 자본시장과 | 자산운용과 | 공정시장과 |
| 파견종료일(실제) | 2009. 7. 2. | 2009. 7. 2. | 2009. 5. 22. | 2009. 7. 2.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3. 전문성 없는 업무에 민간전문가 파견 운용

한편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는 국회 대응 등의 목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를 들어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소속 ◆◆◆ 등 2명을 파견 받아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국회대응자료 작성 및 지원에 활용하는 등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1항”과 “3항”의 내용과 같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부서에서도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위 위원회 직원처럼 운용하는 등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일부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전문가라는 명목으로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위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2008. 9. 23. 부터 2009. 6. 10.까지 약 9개월간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상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민간전문가 파견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근무시키거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0.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 1·2.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주의·시정)
3.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주의)
4.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주의)
5.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는지 여

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및 출처 등에 의하여 검증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3.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4. 2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 계 | | 정무직 | | 별정직 | | 일반직 | | 연구직 | | 계약직 | | 기능직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계 | 230 | 220 | 2 | 2 | 4 | 4 | 200 | 190 | 1 | 1 | 11 | 11 | 12 | 12 |
| 본 부 | 164 | 161 | 2 | 2 | 4 | 4 | 137 | 134 | 1 | 1 | 9 | 9 | 11 | 11 |
| 소속기관 | 66 | 59 | 0 | 0 | 0 | 0 | 63 | 56 | 0 | 0 | 2 | 2 | 1 | 1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함.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6,811억 원(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기금 55조 8,76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0.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2조 7,000억 원(한국산업은행 9,000억 원, 중소기업은행 8,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6,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억 원)을 출자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 회 계 구 분 | | '09세출예산 | '08세출예산 | 증감률 |
|---------|-----------------------|---------|---------|-------|
| 총 계 | | 586,811 | 424,263 | 38.3 |
| 일 반 회 계 | | 28,868 | 3,037 | 850.5 |
| 기금 | 소 계 (관리주체) | 558,766 | 421,457 | 32.5 |
| |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 | 110,362 | 89,972 | 22.6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 | 1,560 | 1,721 | △9.3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57,909 | 30,743 | 88.3 |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24,595 | 16,030 | 53.4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 20,912 | 13,250 | 57.8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11,168 | 9,757 | 14.4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 117,819 | 170,412 | △30.8 |
| |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 12,085 | 89,567 | △86.5 |
| |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 202,35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중 [표 3]과 같이 위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2조 7,719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 822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집행금액은 32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5억 원으로 전체의 68.8%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는 102억 원)한다.

[표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 집행 현황

(금액단위: 억 원)

| 일반회계 | 28,868 |
|--|-----------------------------|
| 인건비 | 139 |
| 기본경비* | 86 |
|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출자 27,0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0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39 - 역모기지론 출연 30 | 27,820 (좌측 금액 합은 27,719) |
|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786 - IBRD차관 원금상환 31 - IBRD차관 이자상환 5 | 822 |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만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가. 임무(Mission) 및 비전(Vision)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성과목표, 45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3개와 64개, 계 7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시정요구

제 목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2005. 8. 31.)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2007. 1. 31.)에 근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리우대 모기지론으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개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00백만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실제 대출은 개별 은행에서 취급)해 주면서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인하(0.5~1.0%p)⁶⁾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말 현재까지 6,871명에게 4,766백만 원을 이차보전 하였다.

6) 16백만 원 이하: 1.0%p 인하, 18백만 원 이하: 0.75%p 인하, 20백만 원 이하: 0.5%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전산자료를 조회⁷⁾하여 대출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대출실행 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다주택 소유 여부를 재확인하며 대출실행 시 1주택 초과 보유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출실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와 약정한 「추가약정서」에도 “대출 실행일 이후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 이하인 상태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2005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사후적으로 한번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위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약정서」에는 사후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10년 3월 감사원에서 대출자와 그 배우자의 다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3건(대출잔액 200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3백만 원), 대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취급 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으로 사후적으로 다주택이 된 ‘사후적 자격 상실’ 사례가 31건(대출잔액 1,552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26백만 원)으로 다주택 소유자 총 34명에게 대출잔액 1,752,151,844원, 부당 이차보전금 29,131,935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⁸⁾

[표] 대출 부적격자 다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건, 원)

| 구 분 | 부적격 대출자 수 | 발견 주택수 | 부적격 대출잔액 | 부당 이차보전금 |
|-----------------------------------|-----------|-----------|---------------|--------------------------|
| 취급기준 위반 ¹⁾ | 3 | 6 | 200,072,054 | 2,939,440 |
| 사후적 자격 상실 ²⁾ (3주택자) | 31 (3) | 65 (9) | 1,552,079,790 | 26,192,495 ³⁾ |
| 계 | 34 | 71 | 1,752,151,844 | 29,131,935 |

주: 1.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실행

2. 세대별 1주택 사후유지 요건 위반(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 주택 추가 구입 21명)

3. 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은 결혼일자를 알 수 없어 부당 이차보전금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34명 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 더 취득하는 등 주택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 ** OO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던 OOO의 경우 2008. 5. 7. 위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하여 2008. 5. 8.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2008. 6. 20. 증여를 해제⁹⁾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8) 한편 대출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57건, 대출잔액 3,638백만 원으로 나타나 위 직계 존비속이 대출자의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앞으로 다주택 소유자에게 금리우대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시정] ①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의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금 200,072,050원을 회수하고 이차보전금 2,939,440원을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한편, '사후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31건의 대출금 1,552,079,79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사후적 자격 상실' 건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대출자와의 「추가약정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12개)-관리과제(4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성과지표 1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64개)를 설정하고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3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10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55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4개 전략목표의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84% 수준이다.

[표 1] 전략목표 달성현황

| 전 략 목 표 | 사업규모(억 원) |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
|---|-----------|-----------------------------|
|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 33,667 | 17/17 (100%) |
|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 23.1 | 15/19 (79%) |
|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 52.8 | 13/16 (81%) |
|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 4,709.5 | 20/25 (80%) |
| 총 계 | 38,452.4 | 65/77 (84%)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0. 3. 15.~3. 19.) 중 위 13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77개 성과지표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법 개정 여부”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64개 중 14%인 9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가 국회 심의·통과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등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표 2]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목표치 |
|-----------------------------------|-------------------------|------------|
|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Ⅰ-3-정책②) | RBC제도 시행 | 관련 법규 개정 |
|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Ⅱ-1-정책①) |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Ⅱ-1-정책②) |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 법 제정 |
|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Ⅱ-1-정책③)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회계·공시제도 개선 (Ⅲ-1-정책①) |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개정 | 시행령 및 규정개정 |
|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Ⅳ-2-정책①)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Ⅳ-2-정책②) | 관련 법령 개정 | 법령 개정 |
|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Ⅳ-2-정책③) | 내부통제개선 | 법 |
| 헤지펀드 도입 (Ⅳ-3-정책②) | 헤지펀드제도 도입 여부 | 시행령 개정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② 예산액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Ⅳ-2-재정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
 (성과지표) 기금출연실적(측정방법: 기금출연액, 목표치: 650억 원)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의 성과지표를 ‘기금출연실적’, 목표치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 예산액 ‘65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기금은 한국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 관서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기확정된 예산액 전액을 한국은행으로 전출하고 있어, 목표치인 기금출연액이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③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재정② 저축의 날 행사 개최
(성과지표) 저축의 날 행사 개최(측정방법: 개최 여부, 목표치: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관리과제 “저축의 날 행사”의 경우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저축의 날 행사 개최’로 하고 있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에 따르면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저축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1973년 법령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등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④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3.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3-재정③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측정방법: FTA 금융협상 및 MOU체결실적, 목표치: 개선)

위 관서에서는 “금융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성과지표를 ‘우리 금융회사의 상

대국 진출지원 실적'으로 설정하여 측정방법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치를 '개선'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는 2008년 대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목표치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달성률이 위 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과제의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정책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측정방법: 펀드규모, 목표치: 300억 원)

위 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추진계획」(2009. 9. 28.)에 따르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수정은 환경변화로 정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방법에 따르되, 각 부처가 참여하는 수정검토 TF를 반드시 거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무총리실 규정과 달리 목표치를 '100억 원(3년간 300억 원)'으로 임의

로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를 근거로 100% 달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달성률은 33.3%에 불과하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② 당해 연도의 실적치가 아닌데도 실적치로 제시

(전략목표) Ⅰ.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성과목표) Ⅰ-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관리과제) Ⅰ-1-정책②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성과지표) 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측정방법: 구성 여부, 목표치: 구성 여부)
②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측정방법 및 목표치: 위원 신규 선임 및 인원 보강 여부)

위 관서에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2008년 11월 이미 설치되었고, 위원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장이 선정하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말 이미 각 기관에서 선정하는 등 위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되었거나, 과거 업무추진의 결과로 목표치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어 당해 연도 업무추진 성과와 무관한데도 당해 연도의 실적인 것처럼 표시하고는 목표달성으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있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과거연도의 실적을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로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 | |
|----------------------------|--|
| 임무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 |
| 비전 |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Ⅰ.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Ⅰ-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 성과목표 Ⅰ-2.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 성과목표 Ⅰ-3.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효과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Ⅱ-1. 규제효과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 성과목표 Ⅱ-2.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 성과목표 Ⅱ-3.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전략목표 Ⅲ.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Ⅲ-1. 핵심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 성과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 성과목표 Ⅲ-3. 녹색성장 지원 ▪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Ⅳ-1.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 성과목표 Ⅳ-3.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는 2009. 3. 16. ○○○○연구원과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3. 16. ~ 9. 16. 계약금액: 45,000,000원)을, 같은 해 8. 28.에는 ○○○○○ 산학협력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8. 28. ~ 11. 9.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상 최종보고서는 각각 2009. 9. 16. 및 같은 해 11. 9.까지 50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자 위 관서에서는 각각 같은 해 12. 15. 및 12. 28.까지로 작성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연구용역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사완료한 후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이들 최종보고서 초안¹⁰⁾을 2009년 12월 말경 컴퓨터 파일로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보고서 50부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3.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28. 두 과제의 용역비 전액 총 80,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보고서 50부는 2010년 3월 말 현재 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로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보고서 초안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차이: 최종보고서는 2010년 2월 FATF 총회에서 FATF 측과 협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이행계획(「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포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에게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 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과징금 등을 불납결손처분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표 1]과 같이 2008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26,194백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7,825백만 원을 수납받고 2,017백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미수납된 16,352백만 원 및 신규 13,921백만 원 등 총 30,273백만 원을 부과하여 7,251백만 원을 수납받고 834백만 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다.

1) 2005. 6. 29. 금융위원회 수입징수관(행정인사과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과징금 등 징수업무 및 결손처분관련 중요사항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표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 해당연도 | 징수결정액 ²⁾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D=A-B-C) | | | |
|-------|----------------------------|------------|--------------|----------------|--------|---------------|-------|
| | | | | 소계 | 납기 미도래 | 거소불명· 재력부족 | 징수유예 |
| 2008년 | 26,194 | 7,825 | 2,017 | 16,352 | 2,062 | 13,810 | 480 |
| 2009년 | 30,273 | 7,251 | 834 | 22,188 | 4,210 | 15,394 | 2,584 |

주: 전년도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면제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²⁾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불납결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채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징수결정 금액을 수납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통지 등의 사유가 있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때에만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관서의 결손처분 내역 중 결손액이 큰 대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결손액이 690백만여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4. 7. 15. 폐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43백만여 원³⁾과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 2001년 8월 14일 제작)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3) 2002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장부가액 12백만여 원, 시가 20백만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2007. 4. 27.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없었으며 2008. 11. 28. 현장조사 결과 최후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이 2010. 11. 23.⁴⁾인데도 과징금 51백만여 원은 2008. 10. 29.에, 639백만 원은 2009. 5. 2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납결손하였다.

[표 2] (주)○○○○○의 불납결손 내역

(금액단위: 원)

| 부과일 | 과징금 체납액 | 위원회 판단 소멸시효 완성일 | 불납결손 결정일 |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 |
|--------------|-------------|-----------------|---------------|---------------|
| 2003. 7. 23. | 51,400,000 | 2008. 10. 29. | 2008. 12. 11. | 2010. 11. 23. |
| 2002. 6. 14. | 639,000,000 | 2009. 5. 22. | 2009. 12. 29. | 2010. 11. 23. |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관서에서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였으면 회수할 수 있었던 과징금(○○○○공제조합 출자금만도 2002년 기준 20백만여 원, 2010년 기준 43백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⁵⁾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결손 처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2004. 5. 31. 위 관서는 (주)○○○○○에 부과한 과징금 51백만여 원과 639백만 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주)○○○○○ 소유 아파트(울산광역시 남구 *** ***** *****)를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이 2005. 11. 24. 법원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24.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 11. 23.임.

5) (주)○○○○○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없다가, 2007. 11. 27. 북부산세무서에서 889백만여 원을, 2008. 1. 17. 서대구세무서에서 51백만여 원을 압류함. 따라서 위 관서는 2007년 11월 이전에 채권압류한 후 법원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1.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주의)
3.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수준을 소극적으로 설정하였는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

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검증 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3. 17.부터 같은 해 3. 25.까지(7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4 . 2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2010. 12. 31. 현재)

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⁶⁾ 등 총 9인으로 구성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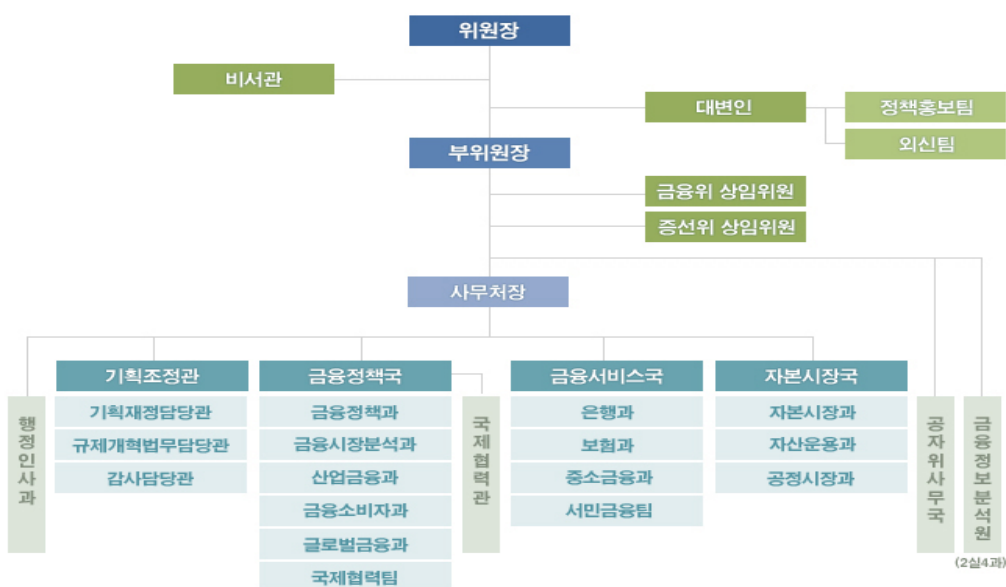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한시조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6) 당연직: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2010. 12. 31. 현재)

(단위: 명)

| 구 분 | 계 | | 정무직 | | 별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경찰) | | 연구직 | | 계약직 | | 기능직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계 | 231 | 230 | 2 | 2 | 5 | 5 | 193 | 190 | 7 | 7 | 1 | 1 | 11 | 11 | 12 | 14 |
| 본 부 | 167 | 167 | 2 | 2 | 5 | 5 | 140 | 139 | - | - | 1 | 1 | 8 | 8 | 11 | 12 |
| 공자위 사무국 | 12 | 11 | - | - | - | - | 12 | 11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 52 | 52 | - | - | - | - | 41 | 40 | 7 | 7 | - | - | 3 | 3 | 1 | 2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9,104억 원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기금 55조 7,6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3조원으로 전년도에 위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 787억 원 보다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 회 계 구 분 | | '10세출예산 | '09세출예산 | 증감률 |
|---------|-----------------------|---------|---------|-------|
| 총 계 | | 589,104 | 586,811 | 0.4 |
| 일반회계 | | 31,464 | 28,868 | 9.0 |
| 기금 | 소 계 (관리주체) | 557,640 | 558,766 | △0.2 |
| |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 201,758 | 110,362 | 82.8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 1,559 | 1,560 | △0.1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42,206 | 57,909 | △27.1 |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20,821 | 24,595 | △15.3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 15,736 | 20,913 | △24.8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14,577 | 11,168 | 30.5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 132,668 | 117,820 | 12.6 |
| |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 21,899 | 12,086 | 81.2 |
| |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 106,416 | 202,353 | △47.4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중 [표 3]과 같이 회계기금 간 거래 3조 33억 원,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1,097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사업금액은 334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2억 원으로 전체의 66.5%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112억 원)한다.

[표 3]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세부 현황

(단위: 억 원)

| | |
|--|------------------------------|
| 일반회계 | 31,464 |
| 인건비 | 150 |
| 기본경비 ¹⁾ | 72 |
|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 4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2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45 | 1,209 (좌측 금액 합은 1,097) |
|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0,000 - IBRD차관 원금상환 30 - IBRD차관 이자상환 3 | 30,033 |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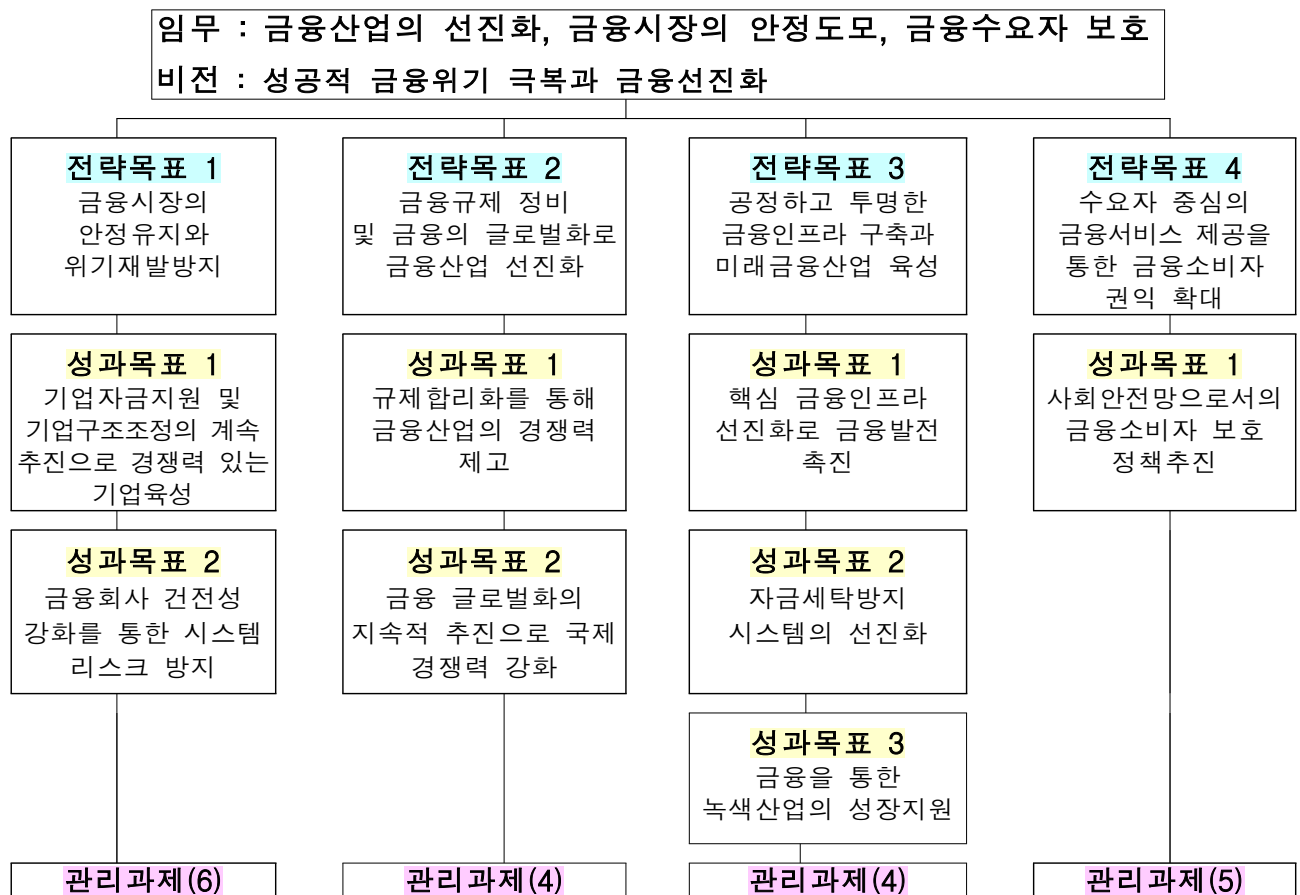
가. 임무 및 비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8개의 성과목표, 19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2010. 1. 15. “2010년 녹색금융 특화 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및 같은 해 2. 2. “녹색금융 특화 MBA 심사·선정 계획(안)”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과 고려대학교를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 5억 원,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당초 2010년 녹색금융특화 MBA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과 교수채용비 6억 원 총 15억 원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2009. 12. 3.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녹색금융 MBA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교수채용비 6억 원을 삭감하여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¹⁾만이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국회 예산심의·확정 취지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은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했다.

또한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내 녹색금융관련

1) 국내학생장학보조비 5억 원,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국내 전문인력 양성에 앞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4억 원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지적²⁾이 있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도국 학생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9. 12. 18. “녹색금융 특화MBA 지원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교수채용 예산을 삭감한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을 교수채용비, R&D투자비용³⁾ 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려대학교와 KAIST에서 2010. 7월 [표]와 같이 학생장학보조비 545백만여 원, 연구개발비 160백만여 원, 교육인력 지원비 84백만여 원, 기타 사업경비(사업 운영경비 + 간접경비) 109백만여 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같은 해 8. 17. 이를 승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국회 예산 및 보조금 예산 신청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 구 분 | 국회 심의·확정 예산(A) | KAIST | | 고려대 | | 합계(B) | |
|-------------|-------------------|---------|---------|---------|---------|---------|---------|
| |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 국내 학생장학보조비 | 500,000 | 151,600 | 151,600 | 270,000 | 270,000 | 421,600 | 421,600 |
|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 400,000 | 124,000 | 119,300 | - | - | 124,000 | 119,300 |
| 연구개발비 | - | 90,640 | 88,450 | 70,000 | 70,000 | 160,640 | 158,450 |
| 교육인력지원 | - | 44,040 | 29,704 | 40,000 | 40,000 | 84,040 | 69,704 |
| 사업 운영경비 | - | 64,720 | 62,714 | 20,000 | 14,897 | 84,720 | 77,611 |
| 간접경비 | - | 25,000 | 25,000 | - | - | 25,000 | 25,000 |
| 미집행잔액 | - | - | 23,232 | - | 5,101 | - | 28,335 |
| 총 계 | 900,000 | 500,000 | 500,000 | 400,000 | 400,000 | 900,000 | 900,000 |

자료: 금융위원회

2) 2009. 11. 12.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상 지적함

3) 사실상 교수채용비 성격이며 교과목개발비는 수당, 영어강의 개발수당, 책임교수 직책관공비 등으로 지급함

그 결과 위 대학교들에서 2010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된 내용과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가 아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359백만여 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개도국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도 개도국 학생 유치계획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고려대학교는 2010년 개도국 학생을 1명도 유치하지 못하였고 KAIST는 개도국학생보조비 예산 400백만 원 중 281백만 원⁴⁾을 개도국 학생보조비와는 다르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기존에 자체 학교운영비로 개도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녹색금융 MBA예산으로 대체하여 120백만여 원을 사용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¹⁾을 지급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89,206백만 원, 65,000백만 원, 65,200백만 원을 출연(법정장려금 재원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부담)하였다.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 관서에서 위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추가 출연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2010년 11월²⁾, 추가 출연 필요금액³⁾

1)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리(일반 1.5 ~ 2.5%, 저소득 6.0 ~ 9.6%) 추가 제공

2) 금융위원회는 2, 5, 8, 11월, 한국은행은 3, 6, 9, 12월에 출연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참고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기간이 3년, 5년으로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법정장려금 지급금액이 거의 확정되어 있음

10,363백만 원보다 5,937백만 원 많은 16,300백만 원을 위 기금에 출연하는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였다.

[표] 정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 10월 말 기금 잔액(A) |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 ¹⁾ 까지 지급 예상액(B) | 추가 출연 필요금액 [C=(B-A)/2] | 11월 실제 출연금액(D) | 과다 출연금액 (D-C) |
|------|-------------------|--|------------------------------|-------------------|------------------|
| 2008 | 39,748 | 48,037 | 8,289 ²⁾ | 22,301 | 14,012 |
| 2009 | 12,290 | 28,976 | 8,343 | 16,250 | 7,907 |
| 2010 | 14,286 | 35,013 | 10,363 | 16,300 | 5,937 |

- 주: 1. 차년도 1월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출연계획이 없어 차년도 1월분만큼 해당연도에 추가 출연하여 여유 자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은 한국은행이 3월에 연간 출연금 전액을 출연하였으므로 추가 출연 필요금액이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임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실제 지급액'은 2008~2010년 각각 46,464백만 원, 28,660백만 원, 33,307백만 원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기금에서는 연도 말에 법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금액⁴⁾ 중 위 과다 출연금액만큼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등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여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 출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위 기금의 2008 ~ 2010년 말 잔액은 각각 36,579백만 원, 27,040백만 원, 27,697백만 원임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8개)-관리과제(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40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가 22개(55%), 초과 달성한 지표가 13개(32.5%), 목표치에 미달한 지표가 5개(12.5%)로 [표]와 같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성과지표가 35개

로 전체적으로 87.5%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표] 전략목표 달성현황

(단위 : 억 원, %, 개)

| 전략목표 | 사업규모 | | | 성과지표 실적 | |
|--|---------|--------|-------|---------|------|
| | 예산 | 결산 | 집행률 | 달성/전체 | 달성률 |
| 전략목표Ⅰ :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재발 방지 | 147,944 | 66,928 | 45.2 | 7/10 | 70 |
| 전략목표Ⅱ :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 34.2 | 31.6 | 92.1 | 9/9 | 100 |
| 전략목표Ⅲ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 76.8 | 76.3 | 99.3 | 11/11 | 100 |
| 전략목표Ⅳ :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 3,932 | 4,271 | 108.6 | 8/10 | 80 |
| 총계 | 151,987 | 71,307 | 46.9 | 35/40 | 87.5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1. 3. 17. ~ 3. 25.) 중 11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29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Ⅱ-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Ⅱ-2-재정①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성과지표) ②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의 성과지표를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로 설정하고 측정방법을 ‘(조치 및 답변제공건수/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100’으로 하여 목표치를 70%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측정방법은 외국금융회사의 애로 해소와는 무관하게 답변만 있으면 100% 달성되는 것이고, 위 관서에서 설정한 목표치도 2008년 및 2009년 모두 100% 답변이 완료되었는데도 2010년에 70%로 낮게 설정하는 등으로 위 측정방법과 목표치는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3.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
 (성과지표) 녹색금융계획 수립(건)

성과목표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의 경우 성과지표를 ‘녹색금융 계획 수립(건)’ 및 측정방법을 ‘분기별 보고횟수’로 하여 목표치를 ‘4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라 녹색금융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므로 ‘분기별 보고횟수’를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③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재발 방지
 (성과목표) I-2.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리과제) I-2-재정.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
 (성과지표)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성과지표를 ‘은행권 부실채권비율(%)’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포함하는 시장상황 및 금융회사 여건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재정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제시한 측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적치를 산정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2-재정②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관련 국제협력’의 성과지표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으로 ‘면담, 협상, 정보교류, 회의 참석 및 MOU 체결횟수’로 하고서는 목표치는 ‘협상’으로만 측정하기로 하여 5회로 설정하였으나 막상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면담, 협상, 정보교류 등을 모두 포함하여 19회로 제출하여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쉽게 달성하였다.

② 설문조사를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1.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관리과제) III-1-재정②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성과지표)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행정지원 효율화’의 성과지표를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으로 설정하고 위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위 관서에서는 '주요 금융정책별 평균 인지도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목표치를 10%로 제시하였고 실적은 56.7%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햇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 관서에서는 '쌀과 관련된 정책' 또는 '대북정책'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까지 위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햇살론을 서민대출로 알고 올바르게 응답한 비율은 43.4%에 불과한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56.7%로 나타나 실적이 다소 과장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할 때 당연히 달성되거나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어려운 지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를 당초 설정한 측정방법과 다르게 측정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2.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감사계획서

☐ 금융위원회 설립(2008.2월)이후 자체감사 현황

| 감사대상 | 감 사 명(목적) | 감사 기간 | 감사계획 | 감사결과 |
|----------------|-----------|---------------------|------|------|
| 각 실국 및 소속기관 | ‘08년 자체감사 | ’08.06.23 ~06.27 | 별첨1 | 별첨3 |
| 각 실국 및 소속기관 | ‘10년 자체감사 | ’10.12.16 ~12.22 | 별첨2 | 별첨4 |

‘08년 자체감사 실시계획(안)

< 목 적 >

- ◇ 청사 이전비용 집행 등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을 통하여 위원회 출범 후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1. 감사방법

- 일부 부서의 업무를 선정하여 표본감사로 실시
- 수감부서 부담 경감을 위하여 서류점검 위주로 실시
 - 감사반이 필요서류 열람 또는 기초자료 징구
 - 담당 공무원 면담은 가급적 지양하되, 본감사에서는 필요시 면담

2. 감사 실시계획

- 감사기간 : ‘08.6.23(월)~6.27(금) (5일간)
 - 감사대상 부서(3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구성 : 감사담당관실 전원 (과장1, 5급3, 6급2명)
 - 감사 대상 주요업무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3. 행정사항 및 감사결과 조치

- 의사운영정보팀은 감사반이 수감부서의 전자문서 열람 가능토록 조치
- 수감부서에 감사일정(예비감사 및 본감사) 및 점검사항 통보
- 감사결과 문제점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 모범사례는 격려 및 공지

【별 첨】

감사대상 업무별 중점 착안사항

| 분 야 | 점검내용 | 비 고 |
|--------------------|--|-------------------------------------|
| ①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 여부 | 국고금 관리법 국가계약법 예산집행지침 |
| | 제비용 집행이 편성된 예산과목과 부합 여부 | |
| | 이사 및 인테리어 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 | |
| | 경비 지출 절차 및 금액의 적정성 여부 | |
| | 기존 물품의 재활용도 | |
| | 잉여물품 여부 및 동 물품의 처분의 적정성 | |
| | 공공요금 등의 연체료 여부 | |
| ②물품관리 현황 |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여부 | 국가계약법 물품관리법 미술품관리규정 예산집행지침 |
| | 정기 재물조사 실시여부 | |
| | 물품분류번호 부여 여부 | |
| | 물품구입 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 |
| | 물품관리 회계직 임명여부(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 출납공무원) | |
| | 회계직 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여부 | |
|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보유물품과의 일치여부 | |
| | 예산과목과 부합한 물품 구매 여부 | |
| | 주요물품(50만원 이상) 불용처분의 적정성 | |
| | 물품 관리전환의 적정성 | |
| ③비정규직 운영 현황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 여부 | 근로기준법 예산집행지침 |
| | 채용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공고, 게시 등) | |
| | 계약서와 근무부서와 일치 여부 | |
| | 채용의 필요성, 관련예산의 확보 여부 | |
| | 보수체계의 적정성(출신별, 근무연수별 등) | |
| | 급여가 적정한 예산과목에 편성되었는지 여부 | |
| | 4대보험 가입 및 동 예산집행의 적정성 | |
| |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속 급여지급 여부 | |

| 분 야 | 점검내용 | 비 고 |
|---------------------------|---|--------------------------|
| ④ 정책연구과제 (국회지적사항) | 정책연구용역 기본계획 수립 여부 | 국가계약법 예산집행지침 |
| | 연구용역 선정절차 및 방법의 적정성 | |
| | 중복 연구과제 선정 여부 | |
| | 연구용역계약 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 |
| | 용역과제의 활용도 | |
| | 용역과제 수행기간의 연도 이월 비율 | |
| | 용역과제의 특정기관 편중 여부 | |
| | 용역과제 납기·검수·검사 등의 적정성 | |
| | 계약금액의 지출절차 및 지출액의 적정성 | |
| | 정책연구비 연도이월 비율 및 예산 불용률 | |
| ⑤ 산기보 보증 제도 (감사원 지적사항) | 신·기보 간 중복 보증문제 근원적 해소방안 |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 기금법 |
| | 보증의 축소정비, 실질적 보증졸업 등을 통한 보증규모의 적정관리 방안 | |
| | 중복 보증문제 유발하고 있는 전담보증제도의 개선방안 | |
| | 기술평가보증제도의 취지에 맞는 보증 운용방안 | |
| | 설립 목적과 무관한 보증연계투자의 폐지방안 | |
| | 보증용도외로 사용된 대출금 회수 및 보증해지, 신용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방안 | |

감사반 구성 및 담당업무

| 직위(급) | 성 명 | 담당 감사업무 |
|-------|-------|--------------------|
| 감사담당관 | 원 중 희 | 감사반장 |
| 5급 | 나 성 대 | 총괄, 청사이전 경비집행 |
| 5급 | 김 정 명 | 감사원 감사 조치실태 (신·기보) |
| 5급 | 이 문 규 | 결산국회 지적사항 (정책연구과제) |
| 6급 | 이 홍 민 | 물품구입 및 관리 실태 |
| 6급 | 조 대 성 | 비정규직 운영실태 |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실시계획

〈목 적〉

- ◇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및 예산집행·회계처리 등에 대한 정기점검
- ⇒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 및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 「'10년 자체감사계획」('10.2.8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감사실시 개요

-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 감사방법: 서면점검(필요시 현장실사)
 - *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서면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실사

2 감사중점 및 세부 점검내용

- ☐ 감사중점
 - 국정과제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예산편성·집행 및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 계약사무 및 물품관리의 적정성

□ 세부 점검내용(Check List)

| 분 야 | 세부 점검내용(Check List) |
|---------|---|
| 각종 지시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과제 추진실태 ■ 대통령지시사항 관리·이행실태 ■ 권익위 권고과제 이행실태 ■ 규제개혁과제 이행실태 |
| 예산·회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불용·이용·전용의 적정성 ■ 예산집행지침(기재부) 준수여부 ■ 회계처리의 적정성 ■ 각종 기금 운용실태 |
| 계약사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관련 법령 준수여부 ■ 정책연구용역 추진·관리실태 ■ 수의계약의 적정성 ■ 발주·계약·검수·관리의 적정성 |
| 물품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장 작성·비치 여부 ■ 재물조사 및 물품관리의 적정성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운용실태(인력·배치·보수등) ■ 파견직원 운용실태(적법절차 및 업무분장등) ■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관리실태 ■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

3 이전 감사시 주요 지적사항

□ 청사이전비용 집행 등에 대하여 '08.6.23 ~ 6.27 기간중 실시

① 중형차량(1600cc 이상, 4대)을 업무용차량으로 운영 (시정)

☞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용 효율화에 적합토록 운영

② 공무국외여행 출장비(기내숙박비) 과다 지급 (현지조치)

☞ 항공기내 숙박에 대한 숙박비 직급액(\$190) 즉시 환수

③ 업무추진비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미기재등 (현지조치)

☞ 건당 50만원이상 사용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철저 등 예산집행지침 이행 철저 요구

④ 직원교육 전·후 식사비용을 수용비로 처리 (현지조치)

☞ 합당한 비목(특근매식비 또는 업무추진비)으로 처리 요구

⑤ 지급사유가 소멸된 자에 대하여 대우수당 계속 지급 (현지조치)

☞ 초과 지급된 대우수당(703,640원) 즉시 환수조치

⑥ 물품관리장에 일부 물품(노트북 21건) 등재 누락 (시정)

☞ 누락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물조사 재 실시 요구

⑦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 등록 누락 (현지조치)

☞ 정책연구용역과제 현황관리 및 PRISM 등록 철저 요구

4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

□ 감사담당관외 5명(사무관 3, 주무관 2)

| 직위(직급) | 성명 | 업무분장 내용 |
|--------|-----|--|
| 감사담당관 | 이보현 | ■ 감사반장 |
| 사무관 | 공영도 | ■ 예산·회계(본부) ■ 계약사무(연구용역 포함) 처리실태 ■ 비정규직 및 파견직원 운용실태 |
| | 임충태 | ■ 예산·회계(금정, 서비스) ■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 종전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
| 주무관 | 신육선 | ■ 예산·회계(자본시장국) ■ 물품관리실태 |
| | 정현태 | ■ 예산·회계(공자위, FIU) ■ 과징금·과태료 관리실태 |

5 향후 처리방안

□ 감사결과 각 부서 통보 및 필요조치 요구(2011년 1월중)

2008년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08. 9.

감사담당관실

| | |
|-----|-----------|
| 작성자 | 원중희 감사담당관 |
| | 나성대 사무관 |

- 목 차 -

I . 감사개요

II .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청사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나. 물품관리 실태

다. 비정규직 운영실태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마.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신용보증 제도)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5. 감사결과 처리요령

◇ 청사 이전비용 집행, 외부기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금융위원회 업무처리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

- 감사실시 기간 : 2008.6.23(월) ~ 6.27(금) (5일간)
 - 감사대상 기간 : '07.1. ~ '08.5. (단, 예산집행은 08.1~5.)
 - 감사대상 부서 : 혁신행정과, 기획재정담당관실, 산업금융과
 - 감사반 :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 (과장, 5급3, 6급2)
 - 감사방법 : 표본감사, 서류감사
 - 감사대상업무 : 청사이전 비용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정책 연구용역, 보증제도
 - ① 조직개편으로 인한 청사이전 관련 제비용 집행 실태 (혁신행정과)
 - ② '07년 이후 물품 관리 현황 (혁신행정과)
 - ③ '07년 이후 비정규직 운영현황 (혁신행정과)
 - ④ '07년 결산국회 지적사항(정책연구과제) 처리실태 (기획재정, 혁신행정과)
 - ⑤ '07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보증제도) 처리실태 (산업금융과)
- * 조치 이행여부 점검에 한하고, 정책내용의 판단은 제외

1. 총 평

- 금번 감사는 구 재정경제부(금융정책국)과 구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출범한 우리 위원회가 업무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였음
- 주요 감사대상 업무를 조직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한 청사이전 경비 등 각종 예산집행실태와 물품관리 실태, 구 재경부 및 구 금감위에서 각각 채용하여 운영중에 있던 비정규직 공무원의 금융위 출범 후 통합운영 실태
- 또한, 결산국회에서 지적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정성 여부, '07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실태 등으로 선정하였음
- 감사실시 전 감사대상 부서에 감사대상 업무 및 선정이유, 감사 착안사항을 사전 통보하여 자체적으로 점검·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했음
- 감사결과, 조직개편에 따른 신규업무 증가담당자 변경 등으로 업무처리체계가 정착되지 않아 예산집행·차량 및 물품관리, 비정규직 급여, 연구용역 현황관리 등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음

- 금번 감사를 계기로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관리소홀·규정 미숙지 등에 따른 잘못된 업무처리를 바로 잡는 등 금융위 업무시스템이 조기 정착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부문별 총평]

① 청사이전 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청사이전 및 사무실 재배치 업무를 큰 문제점 없이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 , 다만
 - 일반업무용 차량의 중형위주 임차·운영, 국외출장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숙박비 초과 수령,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의 사례가 있었음

② 물품관리 실태

- 재물조사의 부적정으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관리되고 있는 현물과 일치하지 않음

③ 비정규직 운영실태

- 금융위 본부와 FIU 근무자간의 보수체계가 상이하고 보수 수준도 일관성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됨

④ 정책연구과제 운영실태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등으로 용역결과물(보고서)의 관리 및 활용 등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⑤ **보증제도**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 및 조치 계획을 회신한바,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 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 없음

2. 부문별 감사결과

| | |
|----|-----------------------------|
| 가. | 청사 이전관련 경비 등 예산집행 실태 |
|----|-----------------------------|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원회는 조직규모와 기능면에서 구 금융감독위원회보다 확대되어 구 금감위사무실(금융감독원 건물내)을 계속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금융위 사무실을 현재 청사(서초구 반포로)로 이전하게 되었는바, 사무실 이전 및 재배치 작업은 짧은 기간내에 신속하게 실시해야 하는 반면, 복잡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의 예산집행은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는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청사 이전과정에서의 예산집행 실태」를 표본 감사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평소 공무원들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국외출장 경비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 대한 '08.1~5월 기간중 실태를 감사대상으로 선정함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금번 감사는 별도의 감사장을 설치하지 않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반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서,

- 짧은 감사기간(5일)에 선정된 감사대상업무(청사이전 및 국외출장 경비 등)전반을 감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청사이전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청사이전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여부, 관련업체 선정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으며
 - 업무용차량 운영의 경우 조직개편 후 신규추가 수량 및 차종 · 운영의 적정성 등을 감사했으며, 국외출장 경비 집행실태 및 정부구매카드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감사
- 혁신행정과에서 비치하고 있는 관련서류(청사이전계획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차량운행일지, 지출관련 영수증 등)를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고,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금융위 '08년 총예산은 1,037억31백만원으로서, 금융위 본부 (160억78백만원), 금융정책사업비* (792억52백만원), FIU사업비 (53억60만원), IBRD차관 원리금상환금(30억41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정책 사업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669억4백만원), 역모기지론 출연(70억원), 금융전문대학출연(20억원), 모기지론 이차보전(16억39백만원), 금융시스템 시스템선진화(10억78백만원), 정책연구개발(6억3천만원)등으로 구성

- 금번 청사이전 과정에서 지출한 경비는 총 14억25백만원으로서 주로 금융위 본부예산을 집행하였는바, 주요 지출내역은
 - 이사비용 및 사무실 재배치 공사 등 356백만원, 사무실 등 임차료 297백만원, 집기 등 구입비 133백만원, 통신시설 관련 경비 500백만원 등임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 경비 소요 부문 | 집행액 | 총집행액 대비비율 | 비 고 |
|------------|-------|--------------|------------------------------------|
| 계 | 1,425 | 100 | |
| 이사비용 | 31 | 2.2 | |
| 사무실재배치공사 등 | 325 | 22.8 | |
| 사무실 임차료 등 | 297 | 20.8 | 사무실(281), 차량(16) |
| 집기 등 구입비 | 133 | 9.3 | 책상, 의자, PC 등 |
| 통신시설 관련 | 500 | 35.1 | 전화시설, 전산실 이전, 전자회의시스템, 메신저 도입 등 |
| 기 타 | 139 | 9.8 | 인건비, 무인경비시스템 등 |

* 세부집행내역 : <별표 1>

- 감사결과, 청사이전 기본계획 수립·관련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업무용 차량 운영, 국외출장비(숙박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음

① 업무용 차량운영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신설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인원수가 대폭 증가하고 (80→155명, FIU제외), 업무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업무용차량 수요가 증가

- 금감원장을 겸직했던 구 금감위원장은 금감원의 차량을 사용했었으나, 금융위 출범에 따라 금감원장 직위가 분리되어 금융위원장 전용차량 소요가 신규로 발생하였음
- 또한, 금융위는 소관법률은 많아서(45개) 관련부처 및 국회 등과의 잦은 업무협약이 발생하는데, 단독청사에 입주해 있는 관계로 차량소요가 증가
- o 그러나, 구 금감위는 업무용차량을 2대(부위원장, 일반업무용)만 운영했고, 구 재경부(금융정책국)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으므로 증가된 차량 소요에 비하여 운영차량 수는 적었음
- 이런 관계로 금융위는 조직개편 직후 업무용차량 6대를 신규로 추가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음

업무용차량 운영현황

(단위 : 대)

| 종 전(구 금감위) | | | | 변 경(금융위) | | | |
|------------|----|----|---|----------|----|----|---|
| 대형 | 중형 | 소형 | 계 | 대형* | 중형 | 소형 | 계 |
| 1 | | 1 | 2 | 3 | 4 | 1 | 8 |

* 대형(3대)는 위원장·부위원장·외빈의전용

- o 한편,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 제5조는 차종 및 차형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면서,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1,600cc 이하로 운영(동규정 별표1)토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금융위는 특수업무용(외빈의전 등)으로 중형차량 4대를 신규로 임차했으나 실제운영의 대부분을 일반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일반업무용차량은 1,600cc 이하로 운영토록 하고 있는 규정과 배치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② 기타 예산집행의 불합리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공무 국외출장 경비지급 부적정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16조④항은 국외 공무출장을 함에 있어서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한·캐나다 FTA 협상(3.25~29)을 위한 국외출장시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그 숙박비(\$95)를 지급하였고, 한·인도 CEPA협상(4.1~4)을 위한 국외출장시에도 항공기에서 1박을 하는데 숙박비(\$95)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음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관련지침 이행 불철저

- 예산집행지침(기획재정부)은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08년부터 시행),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예산집행 서류를 조사('08.1~5월분)한 결과,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면서 카드영수증에 실명서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소속부서명' 또는 '금융위' 등으로 서명을 하고 있었음

-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 시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대부분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있었으나, 1.1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995,000원)함에 있어서는 주된 상대방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라고만 기재한 사실이 있었음

o 예산 지출과목의 부적정

- 일과 전후 직무수행으로 인한 식사비용은 특근매식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함이 타당한데도 혁신행정과는 211일 아침 학습동아리(외 부강사 초빙 모닝클래스 : 김&장 정성구 변호사)를 마친 후 조찬비용(76,000원)과 5.13일 저녁 직원친절 교육 후 석식비용(73,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o 수당지급의 부적정

- 5급에서 4급으로 승진('07.10.24)하면서 대우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한 공무원에 대하여 전산오류로 '07.12월부터 '08.5월까지 대우수당이 매월 지급(6회, 703,640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07.12~'08.2월분은 구 재정경제부에서, '08.3~5월분은 금융위에서 지급

《조치할 사항》

- o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청사이전 관련 경비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세부 사업 | 예산과목 | '08예산 현액 (A) | 집행액(B)* | | 집행률 (B/A×100)(%) |
|-------------|---------|--------------------|-----------------|---------|---------------------|
| 계 | | 2,693,330 | 1,424,557 | | 52 |
| 기본경비 | 소계 | 2,137,330 | 1,091,779 | | 51 |
| | 일반수용비 | 950,900 | 이사비용 | 31,359 | 15 |
| | | | 사무실 파티션 작업 등 | 78,000 | |
| | | | 전산실 이전 인건비 등 | 22,062 | |
| | | | 네트워크 공사 인건비 등 | 8,984 | |
| | | | 전자메일 라이선스 구입 | 2,200 | |
| | | | 소계 | 142,605 | |
| | 임차료 | 475,986 | 사무실 임차료 | 280,786 | 62.5 |
| | | | 차량 임차료(3~5월) | 16,547 | |
| | | | 소계 | 297,333 | |
| | 시설장비유지비 | 211,823 | 통신시설 유지보수비 등 | 223,305 | 105 |
| | 시설비 | 339,325 | 사무실 이전 재배치 공사 | 246,699 | 87 |
| | | |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 33,000 | |
| | | | 금융위회의실 음향설비 | 10,230 | |
| | | |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 5,868 | |
| | | | 소계 | 295,797 | |
| | 자산취득비 | 159,296 | 사무용 집기, pc 등 구입 | 132,739 | 83 |
| 정보화 지원사업 | 소계 | 556,000 | 332,778 | | 60 |
| | 일반수용비 | 9,650 | - | - | |
| | 연구개발비 | 193,000 |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등 | 55,800 | 29 |
| | 자산취득비 | 353,350 | 전산실 이전 | 195,938 | 78 |
| | | | 정책고객관리서버 도입 | 15,967 | |
| | | |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 49,060 | |
| | | | 메신저시스템 신규 도입 | 16,013 | |
| | | | 소계 | 276,978 | |

*집행액은 청사이전과 관련된 비용만 기재

〈별표2〉

공용차량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 차종 (차량번호) | 기사 | 임대 (구입)일 | 임대료 (월) | 연료 | 유류비(월) | | | | | | 용 도 | 월평균 주행 (km)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계 | | |
| 에쿠스 35허7871 | | 08.03.06 | 1,485 | 휘발유 | | | 843 | 776 | 778 | 2,397 | | 2,324 |
| 제어맨 47허2026 | | 08.04.04 | 1,058 | 휘발유 | | | 642 | 900 | 658 | 2,200 | | 1,885 |
| 그랜저 35허7929 | | 08.03.11 | 677 | LPG | | | 161 | 139 | 68 | 368 | | 845 |
| SM5 35허7972 | | 08.03.19 | 580 | LPG | | | 116 | 195 | 200 | 511 | | 1,062 |
| SM5 35허7959 | | 08.03.14 | 580 | LPG | | | 115 | 196 | 200 | 511 | | 1,257 |
| SM5 35허5560 | | 08.03.14 | 580 | LPG | | | 10 | 194 | 230 | 434 | | 1,112 |
| SM5 35허7958 | | 08.03.14 | 580 | LPG | | | 199 | 202 | 235 | 636 | | 1,385 |
| 아반떼 01모7285 | | 04.04.20 | 14,040 | 휘발유 | | | 192 | 163 | 277 | 632 | | 1,013 |
| 계 | | | | | | | 2,278 | 2,765 | 2,646 | 7,698 | | |

| |
|--------------------|
| 나. 물품 관리 실태 |
|--------------------|

(1)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이 출범한 금융위는 구 금감위보다 조직 규모가 확대되어 보유물품 수량 및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물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
 - 이에 따라 새로 보유·운용하게 되는 물품의 관리상태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으로 선정
- 감사 범위는 소수의 감사인력으로 물품관리 업무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어
 - 물품의 재고관리, 관리기관 설치,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법상의 기본 규정 준수 여부를 감사범위로 한정함

<2008년도 금융위원회 수시재물 조사 현황>

(‘08.5월 현재, 단위 : 원)

| 합계 | 관리대장계 | 실사계 | 활용대상 | 불용대상 | |
|----|-------------|-------------|-------------|------------|-----------|
| | | | | 사용가능품 | 사용불가능품 |
| 수량 | 1,482 | 1,482 | 1,218 | 193 | 71 |
| 금액 | 801,607,532 | 801,607,532 | 701,274,952 | 94,947,780 | 5,384,800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07년~'08년 물품수급계획서, 수시재물조사결과표, 물품관리대장을 제출받아 물품수급계획의 수립여부 및 내용, 정기재물조사의 실시 및 결과 등을 서면으로 먼저 감사하고
-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물품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관리대장과 대조하며 실지 감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였음
- 실지감사는 재물조사표상 **1,482개** 물품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과 감사인력 등의 여건이 충분치 않아
 - 식별이 용이하고 비교적 고가의 사무기기인 복사기와 노트북을 선별하여 시행하였음

[Ⅲ] 감사 결과

- 서면감사 결과 물품수립 계획 및 정기 재물조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연1회 수립·집행되었고
 - 조달청의 「정부조직 통폐합 기관의 재물조사 실시」 요청('08.4.28)에 따라 수시재물조사를 실시, 재물조사표가 조달청에 통보('08.5.22)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현재 금융위는 총 **28대**의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리대장에는 **7대**만 기재되어 있고

- 조직개편 이후 추가 구입한 노트북 19대와 구 재정부에서 이관된 노트북 5대 중 2대가 미기재 되어 있는 등 총 21대가 미기재 되어 있음

<물품관리대장 미기재 노트북 현황>

| 구 분 | 대 수 | 실지 관리과 |
|----------|-----|---------|
| 금융위 회의용 | 19 | 의사운영정보팀 |
| 구 재정부 이관 | 1 | 시장분석과 |
| | 1 | 글로벌금융과 |
| 미기재 총계 | 21 | |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다. 비정규직 운영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구 재정부(금융정책국, FIU)와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비정규직을 각각 11명, 14명 등 총 25명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 바,
 - 두 기관의 통폐합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처우는 없었는지, 두 기관의 비정규직 운영(근무조건, 급여, 4대보험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인 요소는 없는지,
 - 조직개편 직후 신규채용(8명)의 필요성·절차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가 있었음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비정규직 운영 기본계획 수립여부, 채용절차 및 방법, 예산 현황 및 보수체계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면서,
 - 특히, 비정규직(총 31명)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무보조원 (21명)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방법은 근로계약서·관련 예산서 및 급여지급서·4대보험료 납부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서류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했으며,
 - 관련서류 점검 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인사담당자의 설명을 듣는 방식을 취했으며, 필요한 통계는 별도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음

[Ⅲ] 감사 결과

- 비정규직 관련 서류를 점검한 결과, 금융위 본부는 비정규직 운영에 관한 기본지침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07.9.27, 금감위 제정)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 FIU는 본부와 달리 근로계약서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비정규직은 총 31명으로서, 속기사·YP·에디터·사무보조원·운전원 등으로 구성
 - 조직개편 이후 2명* 퇴직, 8명 신규채용으로 6명이 순증 되었음
 - * 1명은 금감원 취업, 1명은 건강상 이유로 퇴직
 - 이는 조직규모 및 업무범위 확대로 사무보조원 2명, 공용차량 증설에 따른 운전원 4명 등 신규 추가소요가 발생한 것에 기인

| 구 분 | 인원 수 | 근무부서 및 담당업무 |
|-------|------|-----------------------|
| 속기사 | 2 | 의사운영팀, 위원회 속기업무 |
| YP | 1 | 금융정책과, 규제개혁 업무 |
| 에디터 | 3 | 금융정책과, FIU(2명), 영문 교열 |
| 운전원 | 4 | 업무용차량 운전 |
| 사무보조원 | 21 | 각과 및 비서실, 사무보조 |
| 계 | 31명 | |

- 비정규직 신규채용시 홈페이지에 모집공고 후 공개적으로 채용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는바, 신규채용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4대보험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음

- 다만, 금융위 본부와 FIU와의 보수체계 상이 및 보수수준의 불균형이 있었음

□ 본부와 FIU의 사무보조원의 보수체계를 비교해 보면

- 본부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금융위 훈령)에 근거하여 근속연수별 연봉표에 근거한 기본연봉에 더하여 정근수당·성과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 * 정근수당은 근무년수에 비례하여 지급비율이 상향(월봉의 100%까지)되며, 성과급은 최대 80만원까지 지급
- FIU소속 비정규직의 보수는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명시하고 매년초 연봉 재계약을 하며, 정근수당과 성과급은 없음
 - * 구 재경부(금융정책국) 소속이었다가 금융위 본부로 소속이 바뀐 직원은 본부 보수체제로 운영
- 시간외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본부는 시간외 근무를 월간 최대 15시간(시간당 8,092~8,680원* 최대 13만원)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 *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정규직 시간당 보수 산출근거에 따름
- FIU는 월간 최대 20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를 인정 (시간당 5,000원, 최대 10만원)

□ 본부와 FIU 사무보조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해 보면

- 본부 신규직원('08년 채용)의 경우 연봉이 13.5백만원 수준에 이르는데 반하여, FIU의 '05년 채용자는 12.9백만원에 불과함

본부와 FIU 보수체계 및 수준 비교

(단위 : 만원)

| 구 분 | 보 수 체 계 | | | | 연 간 보 수 수 준 (채 용 연 도 별) | | | | |
|-----|----------------------|--|-----------|---|-------------------------|-------|-------|-------|-------|
| | 기 본 연 봉 | 정 근 수 당 | 성 과 금 | 시 간 외 수 당 | '01 | '04 | '05 | '06~7 | '08 |
| 본 부 |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 근무연수에 따라 상향 조정 (월 봉 의 10~100%) | 32~ 38 | 월 한도: 15시간 단가: 8,092~8,680원 최대지급: 월13만원 | 1,525 | 1,488 | - | 1,414 | 1,353 |
| FIU | | 없음 | 없음 | 월 한도: 20시간 단가: 5,000원 최대지급: 월10만원 | 1,588 | 1,436 | 1,285 | - | 1,224 |

* 연간 보수수준은 시간외 수당,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임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FIU가 소속기관이므로 독립성을 어느정도 보장한다 할지라도, FIU소속 비정규자의 근무환경·업무량·업무난이도·전문성 등이 본부 소속 비정규직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이 보수체계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함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별표1>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연봉현황

(금액단위 : 천원)

| 연도 | 본 부 | | | | F I U | | |
|------|-----|-----|----------------|--------|-------|-----|--------|
| | 채용월 | 성 명 | 근무부서 | 연 봉* | 채용월 | 성 명 | 연 봉 |
| 2001 | 7월 | | 의사운영팀 | 15,248 | 5월 | | 15,876 |
| | 11월 | | 대 변 인 실 | 15,248 | 7월 | | 15,876 |
| 2002 | - | | - | - | 6월 | | 15,876 |
| 2003 | 6월 | | 중소서민과 | 14,998 | - | | - |
| | 7월 | | 혁신행정과 | 14,998 | | | |
| | 11월 | | 구조개선과 | 14,998 | | | |
| 2004 | 12월 | | 사무처장실 | 14,877 | 12월 | | 14,364 |
| | 12월 | | 금정국장, 서비스국장 | 14,877 | | | |
| 2005 | - | | - | - | 5월 | | 12,852 |
| 2006 | 7월 | | 보 험 과 | 14,139 | - | | - |
| | 11월 | | 정책홍보팀 | 14,139 | | | |
| | 12월 | | 공정시장과 | 14,139 | | | |
| 2007 | 3월 | | 법무담당관 | 14,139 | - | | - |
| | 4월 | | 자산운용과 | 14,139 | | | |
| 2008 | 4월 | | 위 원 장 실 | 13,530 | 7월 | | 12,240 |
| | 4월 | | 운전원 | 23,400 | | | |
| | 4월 | | 운전원 | 23,400 | | | |
| | 4월 | | 운전원 | 23,400 | | | |
| | 5월 | | 증선위원실 | 13,530 | | | |
| | 5월 | | 혁신행정과 | 13,530 | | | |
| | 5월 | | 글로벌금융 | 13,530 | | | |
| | 5월 | | 운전원 | 23,400 | | | |

* 본부 비정규직 연봉은 성과상여금이 미반영된 금액임

** 속기사 2명, 에디터:3명, YP 1명 등 6명은 제외함

<별표2>

2008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연봉표

□ 사무보조원

(단위 : 원)

| 본 부 | | | | FIU |
|---------|-----------|----------------|-------------|--------------|
| 근무기간 | 기본급 | 정근수당 | 연봉액 | 연봉액 |
| 1년미만 | 1,127,500 | 미지급 | 13,530,000 | 연봉계약서에 따름 |
| 1년 ~ 2년 | 1,168,500 | 58,425 × 2회 | 14,138,850 | |
| 2년이상 | 1,209,500 | 120,950 × 2회 ~ | 14,755,900~ | |

* 1) 정근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 지급기준 준용

| 근무년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 근무년수 |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연2회) |
|-----------|----------------------|------------|----------------------|
| 1년미만 | 미지급 | 6년이상 7년미만 | 30% |
| 1년이상 2년미만 | 5% | 7년이상 8년미만 | 35% |
| 2년이상 3년미만 | 10% | 8년이상 9년미만 | 40% |
| 3년이상 4년미만 | 15% | 9년이상 10년미만 | 45% |
| 4년이상 5년미만 | 20% | 10년이상 | 50% |
| 5년이상 6년미만 | 25% | | |

2)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연봉외 급여로 성과급(별표 6) 지급 가능

3) 시간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48시간 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2008년은 최대 월 15시간 지급)

라. 정책연구과제 운영 실태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정책연구용역은 국회 예·결산 심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 금융위 발족에 따라 기존에 수행한 용역결과물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 향후 유사정책 수립이나 용역과제 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 '07년 이후 정책연구용역(구 재경부와 구 금감위에서 수행)의 「관리현황 및 활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

< 2007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정책연구용역 현황 >

(백만원)

| 구 재경부 금융정책국 | | 구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 | | 구 금감위 | | 합계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7 | 553 | 4 | 133 | 3 | 88 | 24 | 774 |

(Ⅱ) 감사의 방향 및 방법

- 정책연구용역의 내용적 충실성 보다는, 관리실태 및 활용실태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
- 감사방법은 먼저 정책연구용역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07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파악한 후 담당과를 방문하여 확인·점검하고

- 정책연구용역심의회철, 연구용역관리현황, 연구용역결과물 관련철을 제출받아 그 관리·활용이 관련 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서면 점검했으며
- 현황(리스트)에서 과제 누락 및 PRISM 미등록과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대면하여 확인했음

〔Ⅲ〕 감사 결과

- 용역과제선정은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과제의 중복여부, 계약방법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 '07.6월 국회 결산 심사시 정무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당초 계획과 다른 용역사업은 문제가 있으므로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차년도 용역과제를 선정하여 용역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 담당과에서 '09년 예산 확정전에 자체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거쳐 용역과제를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과제의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음
- 용역대금결제 부분을 점검한 결과 납기를 준수하고 있고, 하자 검수부분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정책연구용역예산의 이·불용을 점검한 결과 '07년 용역과제 24건중 2건만 이월되었으며, '08년 용역예정과제 약 20건도 이월 또는 불용 비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
- 다만, 조직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신설된 관계 등으로 현황관리 및 PRISM 미등록 등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지적사항》 (또는 우수사례)

- 정책연구용역 현황을 각 과로 부터 받아본 결과, 2개부서 (△△△과, △△△과)가 '07년 수행과제 24과제 중 3과제를 리스트에서 누락했으며
- '08.6.24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등록 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과제 중 13과제만 등록되어 있고 △△△과, △△△과, △△△과, △△△과, △△△과 등에서 11과제를 등록하고 있지 않았음

《조치할 사항》

- (시정요구, 표창상신 등)

2007년도 금융위원회소관(재경부 및 금감위) 정책연구용역 현황

| 과 명 | 과 제 명 | 계약자 | 계약 방식 | 기간 | 계약금 (천원) | 현황 | 비고 |
|---------|--|-----|-------|--------------------|----------|----|----|
| 구 금융정책과 | 어음제도 개선방안 연구 | | 수의 | 07. 2. 9 - 5. 8 | 14,250 | × | ○ |
| | 금융산업 선진화에 대한 의견 조사 | | 수의 | 07. 7.25 - 8.24 | 28,500 | | × |
| | 소비자금융현황 및 제도화 방안 | | 수의 | 07. 8. 3 - 11. 2 | 23,750 | | × |
| | 금융법령 · 법규 영문화 | | 수의 | 06.12.11 - 5.10 | 150,000 | | × |
| | 금융시장 현황지표 산출과정 자동화프로그램 개발 | | 수의 | 07. 6.26 - 8.25 | 19,000 | | × |
| |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독체계의 선진화방안 연구 | | 수의 | 07. 9.21 - 12.20 | 28,500 | | ○ |
| | 국민소득 2만불시대 금융의 역할 | | 수의 | 07.10.19 - 12.18 | 28,500 | | × |
| | 해외단기 금융시장 제도에 관한 연구 | | 수의 | 07.10.12 - 12.11 | 28,500 | | × |
| | 홍콩사례를 중심으로 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해외진출 전략 모색 | | 경쟁 | 07.10.26 - 12.11 | 38,000 | | × |
| |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은행지배구조 개선방안 | | 경쟁 | 07.10.29 - 12.13 | 28,500 | × | ○ |
| | 금융업의 직무와 업무수행 역량 분석 | | 경쟁 | 07.11.2 - 12.17 | 19,000 | | × |
| | 뉴욕 런던시 등의 금융클러스터 조성사례의 정책적 시사적 연구 | | 수의 | 07.11.5 - 12.20 | 33,000 | | ○ |
| | 장외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방안 | | 수의 | 07.11.15 - 12.20 | 25,000 | | × |
| |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금융관련 행정의 국제화 방안 연구 | | 수의 | 07.11.19 - 12.24 | 29,000 | | × |
| | 제로베이스 금융규제개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 | 경쟁 | 07.11. 7 - 12. 7 | 7,800 | | ○ |
| | 주요선진국의 금융인프라 관련 제도현황 연구 | | 수의 | 07.10.25 - 12.14 | 21,800 | | ○ |
| 구 FIU | 아시아 전자금융시장 분석과 한국 기업의 진출 전략 | | 수의 | 07.12.20 - 08.2.19 | 30,000 | × | × |
| | FATF 40+9 권고사항의 평가방법론 연구 및 국내 이행실태 파악 | | 경쟁 | 07. 7.30 - 12.14 | 33,200 | | ○ |
| | 역외금융기관, 역외 기업을 이용한 자금세탁 유형 및 대응방안 | | 경쟁 | 07. 9. 5 - 12.20 | 38,000 | | ○ |
| |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에 대응한 자금세탁 방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 | 경쟁 | 07.10. 5 - 12.20 | 28,500 | | ○ |
| 금 감 위 | 고객확인제도의 일환으로서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 경쟁 | 07.10. 5 - 12.20 | 33,000 | | ○ |
| | 우리나라 회계관련 제도의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 | 수의 | 07.10.19 - 08.3.4 | 45,000 | | ○ |
| | 펀드판매망(채널) 선진화 방안 | | 수의 | 07. 9. 7 - 12.20 | 21,000 | | ○ |
| 계 | 기업상장제도의 국제적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 | 수의 | 07. 7.24 - 10. 8 | 22,000 | | ○ |
| | | | | | 773,800 | | |

라.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Ⅰ) 감사대상 선정배경 및 범위

- 감사원 처분요구 이행실태는 향후 감사원의 기관감사, 특별감사* 등에서 주요 점검대상이 되므로 사전 자체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영역임

* '07.3월 감사원은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조치 이행실태」 감사실시

- '07년 이후 우리 위원회(舊 금감위, 재경부 금융정책국 포함)에 대한 감사원 감사 대상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등 5개 부문*

*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특정업무 경비집행, 문서보안 실태, 공무국외여행 경비집행, 금융법규 영문화사업 사후관리

- 이중 최근 5년간 감사원 처분요구가 가장 많았던(8건) 산업금융과 소관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실태」 부문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 부서에 전파하여 참고토록 함

(Ⅱ) 감사방향 및 방법

- 감사원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 내용보다는 조치여부 및 조치절차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하도록 함

- 조치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를 점검

- 감사 방법으로는 우선 감사대상부서(산업금융과)로부터 조치 결과계획 및 관련자료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하고,

-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자 면담 및 유관기관(산기보 등)으로부터의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완

(Ⅲ) 감사 결과

□ 산업금융과는 감사원의 6개 처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1개사항) 및 조치 계획(5개 사항)을 회신

○ (조치 결과) 보증부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부동산 매입 등)
방지를 위한 신·기보 업무 지도·감독 강화 요구에 대하여

- 신·기보가 보증금을 회수토록 하고 금감원 등 지시로 은행이
보증부 대출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음을 조치결과로 회신

○ (조치계획) ‘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 ①총 보증규모 적정관리 ②장기보증이용기업 보증축소 ③중복보증 해소
④기술평가보증제도 합리적 운용 ⑤보증연계투자 폐지 등 방안마련

- 신·기보 공동발주 용역결과를 참고하여 금년 중 정부정
책에 반영 예정임을 조치계획으로 회신

□ 이밖에도 조치결과 및 계획 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하였거나
추진예정임

○ 신·기보 보증부 약정서 개정(신·기보 사후관리 업무 감독강화),
보증업무 선진화방안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예정
(조치계획에 따른 정책수립 절차상 객관성 확보) 등

□ 따라서 당초 감사기준으로 설정했던 조치실시 여부 및 절차상
문제점 측면에서 지적사항은 발견되지 않음

3.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일련 번호 | 지 적 내 용 | 조치구분 |
|----------|---|------|
| 1 |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 시정 |
| 2 | 국외출장시 숙박비 과다 수령 | 현지조치 |
| 3 |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이행 및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초과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 현지조치 |
| 4 |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 현지조치 |
| 5 |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 현지조치 |
| 6 |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 시정 |
| 7 |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 현지조치 |

4.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 「금융위원회 감사규정」 제14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적의 조치토록 요구

자체감사(정기)

12.16 ~ 12.22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

2011. 1.

금 융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실〕

- 목 차 -

I . 감사개요

II .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2. 부문별 감사결과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나.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

라.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수준

마.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수준

3.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4. 감사결과 처리요령

(표 1) 법령 제·개정 절차

(표 2) 부패영향평가 의뢰 현황

I. 감사실시 개요

〈목 적〉

◇ 예산집행·회계처리 및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이행·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기점검

⇒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대안 마련 및 기관운영의 안정성·효율성 제고

* 「'10년 자체감사계획」('10.2.8 기보고)에 따른 감사임

1

실시개요

-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 ☐ 감사반원: 감사담당관실 5명(감사담당관, 5급 2, 주무관 2)
 - ☐ 감사방법: 서면점검
- * 수감부서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서면위주로 실시

2

감사중점

- ☐ 예산집행·회계처리의 적정성
- ☐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의 적정성
-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실태

Ⅱ. 감사실시 결과

1

총 평

- 금번 감사는 '08년 자체감사('08.6.23~6.27) 이후 2년6월만에 실시
 - 예산집행 등 기관운영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조직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하는데 중점을 둠
- 감사결과 금융위 설립('08.2.28) 초기 업무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나타났던 불안정성은 상당부분 안정화된 것으로 평가
 - 다만, 회계 관련 서류의 관리 등 예산집행의 세부적인 부분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완할 부분도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분야별 주요 발견사항]

- ①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관서운영경비 출납부서)
 - ☞ 출납서류 편철·관리 및 지출증빙·집행방법 등 부적정
- ② 대통령 지시사항등 주요사업 추진·관리(행정인사과)
 - ☞ 정상적으로 추진·관리 → 특이사항 발견되지 아니함
 - * 대부분 과제가 완료되었거나 종료요청중이며, 일부 미완료과제도 정상 추진중
- ③ 법령 제·개정절차 이행 → 부패영향평가 의뢰 미흡(관련부서)
 - ☞ '09.7 ~ '10.6 기간중 21건의 제·개정(안)중 14건 기한도과 등
- ④ '09년 감사원의 기관운영감사 지적사항 이행(관련부서)
 - ☞ 관련 제도 개선등 적절히 조치

가.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①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 출납 관련서류 편철·관리 부실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제31조 내지 제33조)에 따라 매월 출납업무 마감 후 출납계산서, 국고예금월계대사표 및 비목별 지출증빙서류를 편철·관리하여야 함

<관서운영경비 출납서류 편철방법>

| | |
|-------------------------------|--|
| ① 출납계산서(규칙 제7호 서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단위로 편철 • 세목별로 구분 • 5년간 보관 |
| ② 국고예금월계대사표(00년 00월분) | |
| ③ 세목별 간지(본월지출액: 00원, 건수: 00건) | |
| ④ 지급결의서 | |
| ⑤ 내부결재(품의서) | |
| ⑥ 기타 증빙자료(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등) | |

- 그러나 금융정책국 등은 예산집행 서류를 연간 목별로만 관리하는 등 계산증명규칙과 다르게 관리하여 출납계산서와 국고예금월계대사 및 지출증빙간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함

< 부서별 지적사항 >

| 부서명 | 지 적 내 용 |
|----------|--------------------------------|
| ■ 금융정책국 |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 ■ 금융서비스국 |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 ■ 자본시장국 | • '10.1~'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 ■ 대변인실 | • '08.7~'10.11 기간중의 출납서류 관리 부실 |

□ 사전품의 없이 공공요금 등 관서운영경비 집행

- 「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은 예산 집행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도록 규정
 - 또한, 「금융위원회 위임전결규정」은 예산 집행시 중요사항은
국장, 일반사항은 과장이 전결토록 규정
-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공공요금, 기타운영비 등을 집행하면서
사전 품의 없이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 * 예산집행시에는 집행건별로 집행사유, 집행대상, 소요예산 및 해당 예산과목
등에 대하여 결재권자의 결재(품의)를 득하여 집행하여야 함

□ 예산집행 품의서에 결재권자의 서명이 아닌 도장 날인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3조제8호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문서는
서명(행정전자서명 포함)에 의한 결재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일부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등 품의서에 부서장 서명이 아닌
도장을 날인하여 증빙자료로 관리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 서명 및 특근매식비 현금집행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24p 및 101p)」에 따라 정부구매
카드 사용시에는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하여야 하며,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그러나, 상당수 실·국에서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팀 등)
으로 서명하였고, 대변인실은 특근매식비 집행시 현금으로 집행*
 - * '08.12.18(273,000원) 및 '08.12.23(25,000원)

< 부서별 지적사항 >

| 지 적 내 용 | 부서명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일부 부서명(○○과 등)으로 서명 • 특근매식비를 정부구매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집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변인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등 일부 지급건에 품의서 누락 및 도장날인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일부 부서명(○○과 등)으로 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인사과 • 기획조정관실 • 금융정책국 • 금융서비스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등 일부 지급건에 품의서 누락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일부 부서명(○○과 등)으로 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시장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품의서에 도장 날인('09.7~12월)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일부 부서명(○○과 등)으로 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분석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등 일부 집행품의서에 결재 누락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일부 부서명(○○과 등)으로 서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자위사무국 |

②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정

□ 통역비 지급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미실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그러나 대변인실은 '09.9.29 김○○에게 통역료 80만원을 지급하면서 관련 세금(기타소득세)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 단, 지급금액의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비과세(소득세법 제21조제2항, 84조제3호, 시행령 제87조제1항)

- 강의료 25만원 지급시: 25만원의 80%(20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5만원으로 기타소득세 비과세
- 강의료 30만원 지급시: 30만원이 80%(24만원)를 공제하면 기타소득은 6만원으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 09년도 발생 에디터 비용을 '10년도 예산으로 집행

- 국고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전년도 발생 채무확정액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됨

* 예외) 공무원보수, 군인사망급여금, 군인전상급여금, 보험료, 이자 등

-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은 '09년 12월 발생한 영문에디터(2명) 비용 2,664,690원을 '10년도 예산(수용비)에서 지급

□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 지급

-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제33조에 따라 출납공무원은 예산과목별 사용한도액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기획조정관실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지급*

* '09.3, 6, 9월에 각각 1,580,000원, 393,000원, 6,160,000원씩을 초과 지급

⇒ 첫째, 예산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집행할 것

- 반드시 정당한 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사전 결재로 집행
-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는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특근매식비는 정부구매카드로 집행
- 연도내 발생경비는 당해 연도 예산으로 집행(법령상 예외는 제외)
- 예산과목별 교부액을 준수하여 집행

둘째, 예산집행 서류는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할 것

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 출납업무 담당자 운용 개선 필요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부서 중 출납 관련 서류의 관리 등이 상대적으로 부실한 부서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경력이 없는 초임자(주무관) 1인이 출납업무를 담당
- 출납업무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 등 다른 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출납업무에 상대적으로 소홀

| 대변인실 | 금융정책국 | 금융서비스국 | 자본시장국 |
|-------------|-------------|-------------|-------------|
| • 주무관 1(담당) | • 주무관 1(담당) | • 주무관 1(담당) | • 주무관 1(담당) |

- 반면, 출납업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부서의 경우 실무관이나 사무원이 출납업무 담당자를 보조
- 출납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수행의 안정성 · 효율성을 제고

| 행정인사과 | 기획조정관실 | 금융정보분석원 | 공자위사무국 |
|----------------------------|----------------------------|----------------------------|----------------------------|
|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 주무관 1(담당) • 주무관 1(보조) | • 주무관 1(담당) • 사무원 1(보조) |

⇒ 출납업무 담당 1명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는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공무원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할 것

*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에서 실시하는 예산·회계교육,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교육 등

다. 대통령 지시사항 등 주요사업 추진 · 관리

①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총 38개 지시사항중 36개 완료, 2개 지시사항 추진중

< 미완료 대통령지시사항 추진현황 >

| 지시일 | 지시내용 | 이행단계 | 담당과 | 처리기한 |
|----------|-------------|--------|-----|----------|
| 09.09.03 | 구조조정 추진 관련 | 추진 중* | 기재단 | 10.12.31 |
| 10.12.21 | 전국민 보안의식 강화 | 추진 중** | 감사 | 11.12.31 |

* 추진계획 수정 · 보완하여 승인요청 중으로 승인시 처리기한 연장 예정

** 추진계획 수립 및 승인 완료

② 국정과제 추진현황 : 특이사항 없음

□ '11.01 현재 27개의 과제중 23개 완료, 4개 과제 추진중

< 미완료 국정과제 추진현황 >

| 세부실천과제 | 계기 | 시한 | 단계 |
|---------------------|--------------|------|-------|
| 단기사채 제도 법적 근거 마련 | 인수위 국정과제 | 10.하 | 연장요청* |
| 산업은행의 원활한 민영화 여건 마련 | '09 8.15 경축사 | 12.하 | 추진 중 |
| 체계적인 금융교육실시 | 인수위 국정과제 | 12.하 | 추진 중 |
| 햇살론의 안정적 정착 | '10 8.15 경축사 | 12하 | 추진 중 |

* '11년 상반기까지 기한연장을 요청 중에 있으며 1월중 연장승인 예정

⇒ '10.3.4 ~ 4.16 기간중 우리 위원회등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원의 「주요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도 지적사항 없었음

다. 법령 제·개정시 필요절차 이행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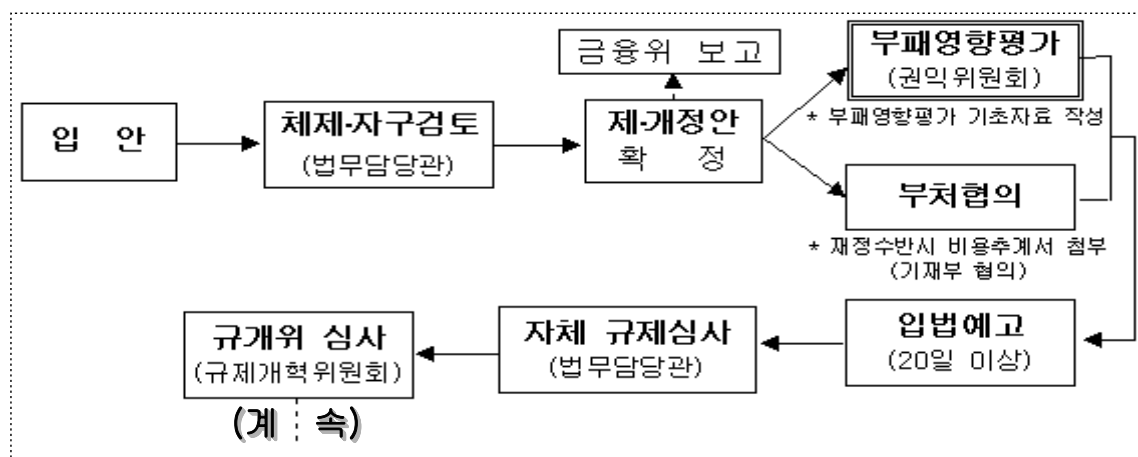
□ 현 황

- 법령 제·개정시에는 부패영향평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준수 하여야 함 (표1 참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령 입안시 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의뢰토록 규정(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0조)

-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09.10.1 ~ '10.9.30 기간중 총 21건의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 : 부처협의와 병행 실시 >



□ 점검결과

- 법령 입안시 필요한 절차는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으나, 부패영향평가 의뢰가 다소 미흡
- 총 21건 중 7건만이 기한내 부패영향평가를 의뢰, 12건은 입법예고 이후에 의뢰, 2건은 의뢰하지 않음 (표2 참조)

⇒ 향후 법령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를 입법예고 전에 부처협의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것

라.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수준

□ 현 황

- '09.6.15 ~ 7.17 기간중 감사원은 금융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
 - 펀드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 사항 등 총 8건을 지적

□ 점검결과

-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적절이 이행

| 지 적 내 용 | 조치내용 |
|-----------------------|---|
| ■ 펀드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 | •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 개정 |
| ■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방지조치 |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
| ■ 금감원 정원·인력운용 지도·감독 | • 금감원 예산심사 철저 |
| ■ 금감원의 인건비 예산 지도·감독 | |
| ■ 금융투자업(증권중개업) 인가 부적정 | •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철저 |
| ■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 • 점검(2년주기 정기점검) 철저 |
| ■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 • 분기별 점검 및 공개 (‘11.1.10 현재 670건 공개) |
| ■ 파견인력 운용 부적정 | • 민간전문가 운용 감소 (‘09.7 / 69명 → ‘10.12 / 43명) |

- 다만, 파견인력(민간전문가) 운용은 '09.7월 69명에서 '10.12월 43명으로 감소하는 등 개선되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운용하는 사례도 발견됨

⇒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아 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상의 절차를 준수할 것

□ 지적사항 및 조치구분

| 지 적 사 항 | 조치구분 |
|--|------|
|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도록 집행 관련 서류 편철 → 1개월 이내 감사담당관실로 그 결과 회보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 (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집행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카드 영수증에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기획조정관실, 행정인사과, FIU, 공자위사무국) ·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변인실) | 주 의 |
|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대변인실) · 법령과 다르게 지난 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FIU) · 교부받은 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관실) | 주 의 |
|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등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업무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여 출납업무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 권 고 |
| ■ 민간전문가 파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용령(제41조의2) 및 공무원임용규칙(제42조)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할 것 (전부서) · 민간전문가 파견·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인사과) | 현지조치 |

※ 위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모든 부서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영향평가 의뢰(국민권익위원회)를 부처협의를 병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 향후 조치계획

- 감사결과 각부서 및 감사원에 통보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육 (1월중)

4

감사결과 처리요령

1. 처분요구 사항의 조치기한

- 가. 문책사항은 1월 이내
- 나. 변상사항은 3월 이내
- 다. 개선·개선통보·시정·권고사항은 2월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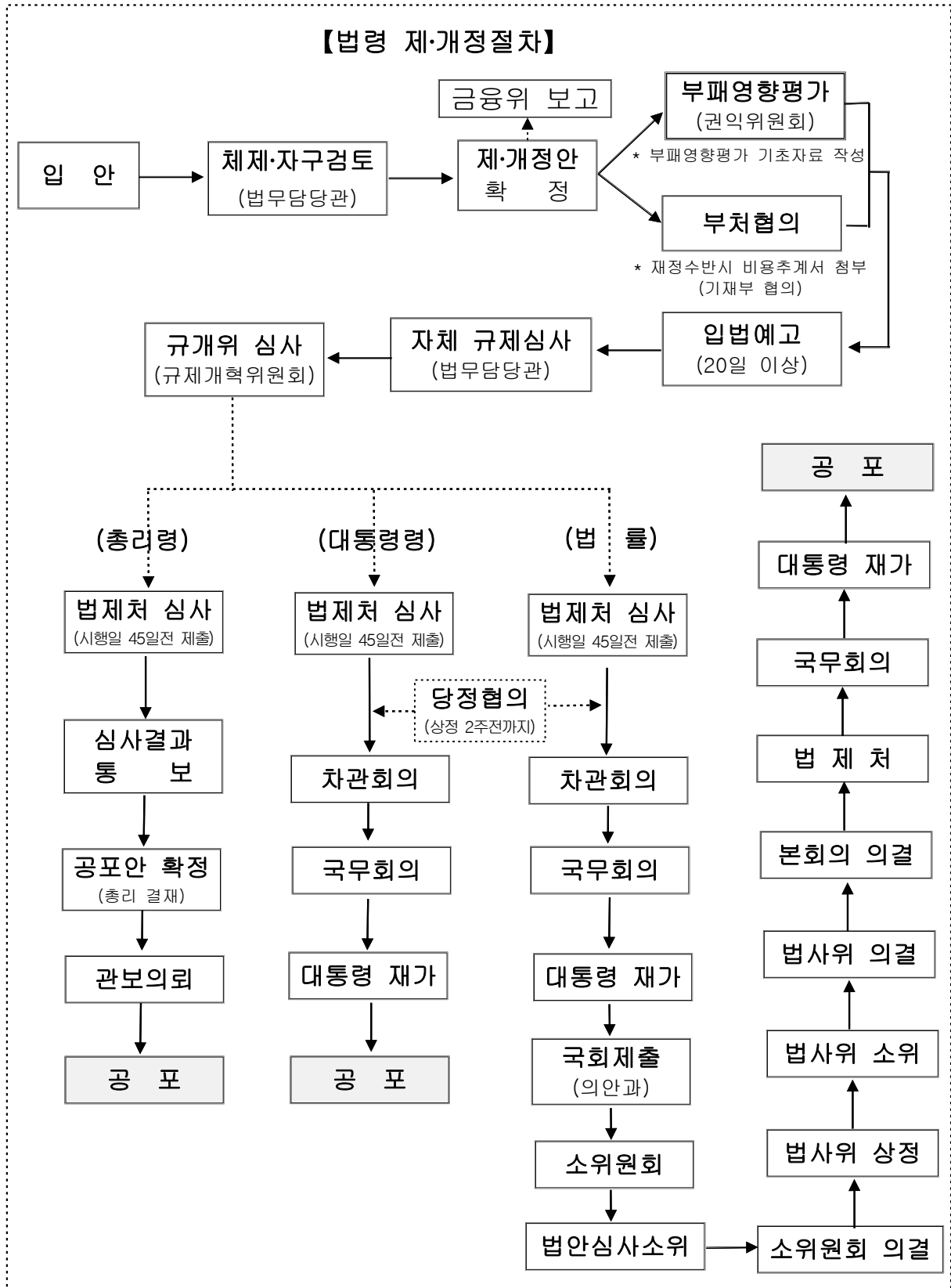
2. 조치결과 보고

처분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상기 조치기한 이내에 자체 조치한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함

3. 이의신청

소관부서는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요구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서 및 증빙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표 1] 법령 제·개정절차



[표 2] 부패영향평가 의뢰현황 ('09.10.1 ~ '10.9.30)

□ 부패영향평가 의뢰법령(19건 / 입법예고 후 14건)

| 법령명 | 부서명 | 제출기한준수 |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F I U | 입법예고 후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험과 | 입법예고 후 |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험과 | 입법예고 후 |
| 예금자보호법 | 금융소비자 | 입법예고 전 |
| 은행법 시행령 | 은행과 | 입법예고 후 |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F I U | 입법예고 후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중소서민 | 입법예고 전 |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 중소서민 | 입법예고 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서민 | 입법예고 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본시장과 | 입법예고 후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 중소서민 | 입법예고 후 |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중소서민 | 입법예고 후 |
| 금융중심지의 구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제협력팀 | 입법예고 전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서민 | 입법예고 후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F I U | 입법예고 후 |
| 보험업법 시행규칙 | 보험과 | 입법예고 후 |
| 보험업법 시행령 | 보험과 | 입법예고 후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금융정책과 | 입법예고 전 |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정시장과 | 입법예고 전 |

□ 부패영향평가 미의뢰법령(2건)

| 법령명 | 의견조회일시 | 의뢰 여부 |
|-----------------------|----------|-------|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09/10/12 | 미의뢰 |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09/10/12 | 미의뢰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3.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 기관명 | 지 적 사 항 | 처 리 결 과 |
|-------------|-------------------------|--|
| 국민권익 위원회 | 임의적 절차(진행) 규정의 강행규정화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2010.11.12일) |
| | 제재기준의 세분화 |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2010.1.5) -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제재기준을 시행 세칙에 반영 |
| |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방안 검토 | ·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금전적 행정 제재(과징금) 확대 추진중 |
| | 감독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신뢰성 제고 | · 「제재내용 공개수준 확대방안」 시행 (2010.1.28) - 재판상 공개 곤란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 원칙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3-1.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 정무위 예비검토 사업별 지적사항(2010년)

| 사업명 | 주요질의 및 지적사항 요지 |
|-------------|---|
| 금융중심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 ○ 추진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 필요 ○ 금융중심지법 통과에 따른 내년도 예산 대응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지원 범위, 규모 등 ○ 법령 영문화 사업을 체계화할 필요 |
| 금융전문인력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전문금융인력 양성 지원사업 중단 사유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 |

□ 예결위 예비검토 사업별 지적사항(2010년)

| 사업명 | 주요질의 및 지적사항 요지 |
|-------------|---|
| 금융전문인력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금융 전문인력 수요에 대한 전망' 관련 자료요구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보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예산을 정부가 아닌 금감원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정무위 예결산 소위 지적사항(2011년)

| 사업명 | 주요질의 및 지적사항 요지 |
|-----------|--|
| 금융전문인력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편성 내용과 달리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3-2.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 기관명 | 지 적 사 항 | 처 리 결 과 |
|-------------|-------------------------------|--|
| 국민권익 위원회 | 우체국 예금 건전성에 관한 감독기구 협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기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우리 위원회는 기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전달 · 우정사업본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우체국예금 건전성기준 제정 |
| | 예금의 구속행위에 대한 관련자 제재수준 강화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은행법(10.4월 국회 통과, 11.18일 시행예정)에서 은행의 예금 구속행위(깍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5천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제재규정 신설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3-3.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1. 국민권익위원회

| 권고일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처리결과 |
|-----------|--|--|
| '10.10.19 | 【보험피해방지 제도개선 권고】 ○보험계약시 계약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 구체화, 상품별 예정사업비 공개의무 등을 보험업법 등에 명시할 필요 | -국민위의 제도 개선 권고안 중 수용가능한 의견의 경우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시('11.1.24시행) 반영 |

2. 국가인권위원회

| 권고일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처리결과 |
|----------|---|---|
| '09.6.30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시정 및 예방교육 강화 | -생·손보험회를 통해 장애인 보험가입차별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및 신고센터 설치·운영 |
| '10.7.28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 차별금지】 | -보험가입 및 대출심사 기준을 조사하여 장애인 차별 조 |

| 권고일 | 제도개선 권고 내용 | 처리결과 |
|----------------------|--|---|
| | | 항이 있는 경우 시정하도록 조치 |
| '10.10.4 '10.11.4 |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금지 등】 ○보험상품 이용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방지를 위한 규정 검토 및 감독강화 | -보험가입심사시 비장애인과 동일기준으로 심사하도록 모집인에 대한 교육강화 및 설계사 자격시험시 관련 문항 출제하도록 조치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3-4. 최근 5년간 각종 위원회에 의한 지적사항

| 기관명 | 처분 종류 | 지적사항 | 처리결과 |
|-------|----------|--|--|
| 국가인권위 | 권고 | <input type="checkbox"/>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 | <input type="checkbox"/> 장애인에 대한 발급편의 제공관련 행정지도* * "신청서 기재 내용에 대한 구두 녹취", "대리인 작성 및 장애인 본인 확인" 등의 방법으로 발급 편의를 제공 할 것 ○ 금년 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을 개정* 하여 권고를 이행할 계획 * 자필작성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카드발급신청서 자필 작성 의무를 완화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4. 최근 3년간 고유업무와 관련한 자체평가, 서비스 혹은 정보화 등의 수준평가, 설문조사 또는 각종 모니터링

□ 우리 위원회는 '08년부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 최근 3년간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별도 제출
- '09년도, '10년도 결과보고서('11년 평가는 현재 진행 중)

금융위원회

1. 조직관리

□ 총 평

- 금융위는 소규모 인원(정원 226명)으로 금융산업·감독 정책,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위기 대응 등의 막중한 업무를 수행
- 이에 따라 조직관리의 효율화를 통하여 현재의 조직·인원으로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노력
-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금융위는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등 조직분야 평가지표상의 기준을 대부분 충족

□ 세부 평가결과

《 조직관리체계의 효율화 정도 》

- 금융위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신용정보법 등에서 금융위에 부여한 업무의 일부를 금감원 및 유관협회 등 민간기관으로 위탁
- 「금융발전심의위원회」 등 정책자문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위의 금융정책 수립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정부기능분류시스템(BRM)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가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정부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도 》

- 지원부서 인력을 사업부서로 적극 재배치하여 금융위기 대응 등 금융위 현안업무를 원활히 수행
- 임시 T/F 운영을 활성화하여 금융위의 적은 인력으로 금융위기 대응 등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

- 그동안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정보공개 처리절차 준수 부문은 무리 없이 규정 준수
- 특히 전년도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초에 정보공개 운영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특화된 교육 및 정보목록의 주기적 공개 실시

《 고객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 제공 》

- 일반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주요정보(금융위·증권위 회의결과, 공적자금 관련 정보 등) 및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미치는 소액 영세상인 지원, 금융소외자 지원, 사금융 피해방지 등) 적극 공개
-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65.24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전년도(66.46점)와 비슷한 실적

《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 정도 》

-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도 불구하고 실용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급·특성을 고려하여 워크숍 및 토론회를 실시하고, 국정 기조 및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 경주
- 또한 창의역량 개발 및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 심사단, 전문가 초청 간담회, 직원 역량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

《 수요자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

- 행정 내부 업무분야의 비효율 및 산화기관 내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국별 업무토론회, 업무 관련 인센티브 마련하였으며, 담당 자금 워크숍을 통해 조직의 장기 비전 수립 및 조직 효율화 도모
- 시장 및 국민과 호흡하는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민원업무처리와 전화친절도에 대한 내부 평가 및 포상을 실시

- 대국민 정책홍보를 위해 블로그 운영, UCC 제작 등 다양한 홍보수단 마련
- 특히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정책 및 다양한 사금융 피해예방을 도입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피해상담센터도 운영

□ 향후 개선·보완사항

- 민간에 위탁된 업무의 사후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할 필요
-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65.24점으로 다소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만족도 제고방안 마련 필요
- 연간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환류 체계를 정비하여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필요

2. 인사관리

□ 총 평

- 인사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금융위 업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 개방형·공모직위의 효율적인 운영,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 장애인 고용을 비롯한 균형인사 등의 측면에서 높은 성과 시현
 -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를 위해 교육훈련 및 성과급 지급 등과 관련한 각종 제도정비 및 집행결과가 양호

□ 세부 평가결과

《 효율적인 기관 인사시스템 구현 분야 》

- 행정인턴의 내실있는 운영
 - 행정인턴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취업역량을 제고
 - * 총 인턴 계약인원 8명중 6명이 취업

- 기관장을 포함한 간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금융위내 업무 수행에서의 애로를 해소

* 간담회 : 기관장(2회), 부기관장(6회), 실국장급 간담회 수시 개최

○ 균형인사 실시

- 4급 이상 관리직 여성 임용목표 100% 달성 및 이공계 임용목표 100% 달성

○ 다만, “e-사람” 인사관리 시스템 활용 및 기관간 인사교류 실적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 분야 》

○ 능력개발의 적극성

- 녹색성장·경제마인드 배양 교육 및 중간관리자 교육 등 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이행실적이 양호

○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 행안부 기준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평가등급을 적정하게 부여
 - * 평가대상 11명을 S등급~C등급까지 평가등급을 고르게 분산
-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위원장 결재)하여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성과상여금 지급
 - * 이익제기 기간 운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공정성 관련 설문조사 실시, 성과급 운영위원회 개최 등

□ 향후 개선·보완사항

- “e-사람” 인사관리 시스템 활용 및 기관간 인사교류 실적이 저조 하여 향후 이에 대한 보완노력이 절실

3. 정보화관리

□ 총 평

- 금융위는 ‘10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충실히

수립하고 전자정부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이용편의 및 이용활성화를 위해 노력

-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웹 접근성 확보 및 이기종간 웹 호환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개선할 필요
-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율은 30.2%로 우수한 수준으로 그동안 정보 시스템 도입시 공개S/W 도입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한 결과임

□ 평가결과

| 평 가지 표 | 1. 국가정보화 추진방향과의 부합성 | 2. 정보보호체계의 적절성 | 합 계 |
|--------|---------------------|----------------|-------|
| 배 점 | 60 | 40 | 100 |
| 평가 결과 | 49.44 | 37.67 | 87.11 |

□ 우수사례 분석

- e-금융민원센터는 민원인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금융민원센터에만 접속하면 복잡한 금융업 관련 인·허가부터 단순 민원까지 모든 금융민원을 한곳에서 접수·처리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또한, 민원서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민원 신청 진행결과를 SMS 및 메일로 실시간 통지

□ 향후 개선·보완사항

-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웹 접근성 확보 및 이기종간 웹호환성은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

금융위원회

I.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09년 성과관리 시행계획 상의 전략목표는 4개, 성과목표는 12개이며, 전체 관리과제 31개를 평가대상으로 선정
- 평가지표

| 평가지표 | 측정방법 |
|------------------------|---|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도 |
| 성과지표의 적절성 |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 ○ 관련통계현황·사례 조사 및 이해 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 추진일정의 충실성 |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총 18명

- 외부 민간위원 14명, 내부위원 4명

II. 평가결과

(1) 총 평

□ '09년도 12개 성과목표, 31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5개(15%), 다소 우수 8개(25%), 보통 12개(40%), 다소 미흡 5개(15%), 미흡과제 1개(5%)로 나타남
- 우수한 과제는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은행 자본확충 추진, 파생상품시장 모니터체계 개편,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이며, 미흡한 과제는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인 것으로 평가됨

□ 전체 4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율은 84%로

- 37개 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 7개 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
- 성과목표 미달성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지연 및 금융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변경

(2) 주요성과

□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은행 자본확충 추진, 파생상품시장 모니터체계 개편,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자금 공급으로 세계적 금융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등 효과적으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
- (은행 자본확충 추진) 은행의 자본확충 지원을 통해 본연의 기능인 실물지원 여력을 제고시켜 경기 침체 가속화 및 금융부실을 방지하였으며, BIS비율을 '09.9월말 14.07%로 개선하여, 은행의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실물지원 및 구조조정 여력 확보
- (파생상품시장 모니터체계 개편) 시장리스크 인지도표(VKOSPI) 개발, 파생정보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파생상품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글로벌 ETF시장과 견줄 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ETF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신종ETF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이 요구하는 상품이 적기에 출시되도록 지원
-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국정목표와 금융정책의 비전 달성과 연계하여 산은 민영화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완료하여 산은 지주회사 및 정책금융공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함으로써 향후 산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개선 · 보완 사항

□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은 미흡한 과제로 평가

- 은행 · 보험권 법령 정비를 위해 '08.12월 국회에 은행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의 지연으로 은행법시행령 및 보험업법시행령의 개정작업이 추진되지 못함

- 향후 은행법 및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비하여 은행법 및 보험업법 하위규정 조문화 작업 진행하는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

(4) 평가결과 종합

| 관리과제명 |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
|--------------------------|------------------|
| 기업자금조달 확대 방안 마련 | 우수 |
|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 다소우수 |
| 취약산업 구조조정 추진 | 보통 |
| 현장 밀착형 신속 대응체제 강화 | 다소우수 |
| 한국금융 바로 알리기 지원단 운영 | 보통 |
| 파생상품시장 모니터체계 개편 | 우수 |
| 외화유동성 지원 | 다소우수 |
| 은행 자본확충 추진 | 우수 |
|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 보통 |
|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 미흡 |
|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 다소우수 |
|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 다소미흡 |
| 산업은행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 우수 |
| 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 매각 | 보통 |
| FTA 금융부문 효과 극대화 추진 | 보통 |
| 회계·공시 제도 개선 | 다소미흡 |
| 전자증권제도 도입 | 보통 |
|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선진화 및 국제공조 강화 | 다소우수 |
| 심사분석 효율성 향상 등 제도 운용의 내실화 | 보통 |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수준 제고 | 다소미흡 |
| 금융업권별 녹색금융 실천계획 마련 유도 | 보통 |
|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다소미흡 |
| 마이크로 크레딧 활성화 | 보통 |
| 신용회복기금 확대를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 보통 |
|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 보통 |
|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 다소우수 |
|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 개선 | 다소우수 |
| 금융교육 활성화 | 다소미흡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보통 |
| 다양한 파생상품 도입 추진 | 우수 |
| 헤지펀드(Hedge Fund) 도입 | 다소우수 |

금융위원회

I. 평가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공급 등 35개 주요정책과제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측정방법 | 비 고 |
|------------|------------------------|---|---------------------------------|
| 계획 수립의 적절성 | 계획수립시 사전조사, 의견 수렴의 충실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통계현황 사례 조사 및 이해 관계자(정책수요자)·전문가 의견수렴 여부 | 대부분의 과제가 법령개정·제도개선 과제로 의견수렴이 중요 |
| 시행 과정의 적절성 | 추진일정의 충실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 평가수행 객관성과 평가결과 수용가능성이 높은 지표 |
| 정책 효과성 |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 해당과제가 상위목표(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 | 정책수행의 궁극적 목표인 정책효과성 측정 필요성 |
| 성과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 지표의 목표달성도 | 목표달성도에 따라 4등급 구분 및 연속지표 적용 |
| | 성과지표의 적절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 목표치의 하향편준화 방지를 위한 지표 |

II. 평가결과

(1) 총 평

- ☐ '10년도 총 35개 주요정책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우수 5개(14%), 다소 우수 9개(26%), 보통 15개(43%), 다소 미흡 2개(6%), 미흡 4개(11%)로 나타남
 -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5개 과제는 우수한 과제로 평가됨
 - ☐ 총 35개 관리과제의 59개 성과지표 중 58개 성과지표의 목표는 달성하였고,
 - 1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국제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新국제감사기준 채택 시기를 2011년으로 연기하였기 때문임
- * 新국제감사기준의 적용을 주도한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시기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하여 결정

(2) 주요성과

- ☐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 지원 등 5개 과제는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
 - 금융회사의 원화·외환 유동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잠재취약요인을 개선
- * 은행권 예대율 규제 도입, 외환건전성 관리 적용범위를 비은행권으로 확대 등
- 주요국 정상들간의 금융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기념비적인 합의 이끌어 내는 등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
- *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체계 확정,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감독 강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규제개혁 완결

(3) 개선·보완 사항

□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고령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수요 충족,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투자 자금 조달 지원, 금융소비자보호의 획기적 제고 등 4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간 연관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 “고령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수요 충족” 과제의 경우 성과지표가 정책성과를 대표하기에 다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4) 평가결과 종합

| 번호 | 관리과제명 | 자체평가결과 |
|--------|-------------------------------|--------|
| I-1-① | 금융공기업을 통한 원활한 기업자금공급 | 다소우수 |
| I-1-② | 기업구조조정 가속화 | 다소미흡 |
| I-2-① | 회사채등 증권발행 여건 개선 | 보통 |
| I-2-② | 우량기업 상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투자 자금 조달 지원 | 미흡 |
| I-2-③ | 중소·중견기업 투자 펀드 등 자금공급 수단 확충 | 보통 |
| I-3-① | 녹색금융활성화 | 보통 |
| II-1-① |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우수 |
| II-1-② | 외부충격에 대비한 비상조치 계획 마련 | 다소우수 |
| II-2-① | 예금보험기능 강화 | 다소우수 |
| II-2-② | 단기자금시장 체계 개선 | 보통 |

| 번호 | 관리과제명 | 자체평가결과 |
|-------|---------------------------------|--------|
| Ⅲ-1-① |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 우수 |
| Ⅲ-1-② | 영업규제에 대한 개혁을 지속 추진 | 보통 |
| Ⅲ-1-③ | 금융정책 대언론 홍보강화 | 다소우수 |
| Ⅲ-1-④ | 금융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법무 서비스 강화 | 보통 |
| Ⅲ-1-⑤ | 금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미흡 |
| Ⅲ-1-⑥ | 조직의 안정 및 내실화 추진 | 보통 |
| Ⅲ-2-① | 국제회계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 우수 |
| Ⅲ-2-② |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선진화 | 보통 |
| Ⅲ-2-③ | 기업신용평가의 품질과 투명성 제고 | 보통 |
| Ⅲ-3-①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 개선 추진 | 보통 |
| Ⅲ-3-② | 구조조정기업 매각촉진 | 보통 |
| Ⅲ-3-③ | 공적자금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 다소우수 |
| Ⅳ-1-① | 미소금융의 성공적 착근 | 다소우수 |
| Ⅳ-1-② |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강화 | 우수 |
| Ⅳ-2-①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 보통 |
| Ⅳ-2-② |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보통 |
| Ⅳ-3-① | 금융소비자보호의 획기적 제고 | 미흡 |
| Ⅳ-3-② | 금융교육 활성화 | 다소미흡 |
| Ⅳ-3-③ | 고령층의 노후대비를 위한 금융수요 충족 | 미흡 |
| Ⅳ-3-④ | 보험산업의 민원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 | 다소우수 |
| V-1-① | G-20회의의 성공적 개최지원 | 우수 |

| 번호 | 관리과제명 | 자체평가결과 |
|-------|----------------------------|--------|
| V-2-① | 사전적·적극적 IR 활동 전개 | 다소우수 |
| V-2-② | 해외금융관련지수 평가에 적극대응 | 보통 |
| V-3-① |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제도를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 | 다소우수 |
| V-3-② | 심사분석 효율성 향상 | 보통 |

금융위원회

I. 자체평가 총평

☐ 조직관리

- 그동안 금융위는 소규모 조직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 및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등 핵심 현안을 효율적으로 수행
 - 이는 적시에 조직을 개편하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는 등 조직의 상황적응능력을 배양하였기에 가능

☐ 인사관리

- 인사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금융위 업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 인력 유지·관리·운영의 적절성, 인사운영의 전문성 및 성과관리 운영의 적정성 부분에서 높은 성과를 시현

☐ 정보화관리

- 금융위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고령자의 웹접근성이 양호하고 홈페이지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II. 분야별 평가결과

☐ 조직관리

- 정부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고객중심의 정보공개·민원 제공 등 조직관리 부분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조직관리 체계의 효율화 정도 및 정보공개 운영기반 구축실적 및 처리 절차준수 부분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

□ 인사관리

- 효율적인 기관인사시스템 구현 및 성과지향적 인재 육성·관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인력 유지·관리·운영 및 인사운영의 전문성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성과관리 부분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 정보화관리

- 금융위 정보화관리 부분은 국가정보화 추진방향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정보보호 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평가
 - 기관의 정보화 추진실적 및 정보보호 대책 수립·실행 부분에서 특히 우수하다는 평가

Ⅲ. 주요 사례 분석

□ 조직관리

-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유동정원제 시행을 통해 조직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작은 정부 구현에 이바지
- (정보공개처리절차 준수) 정보공개청구 관련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결정통지 및 기간연장통지 기한 준수
- (민원제도 및 서비스 개선도) 유사민원을 통폐합하고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민원사무 간소화 업무를 적극 추진

□ 인사관리

- (성과상여금 지급의 적정성) 성과급 지급계획 수립을 위해 각 직급별 대표로 성과급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하는 등 성과평가의 공정성 강화

☐ 정보화관리

- (e-금융민원센터) 민원인이 금융위와 금감원을 구별할 필요 없이 금융민원센터에만 접속하면 모든 금융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IV. 개선·보완 방안

☐ 조직관리

- (온라인 민원 이용율) 온라인 이용 활성화를 위해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의 민원안내 정보를 정비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강화

☐ 인사관리

- (유연근무제 운영 활성화) 시간제 직무에 적합한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시간제공무원 등 대체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
- (연가사용 활성화) 연가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계약 평가에 반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정보화관리

- 금융위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이기종간 웹호환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지속적으로 개선
- 금융위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 증대를 통해서 EA 성숙도 향상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5. 최근 5년간 소송현황

□ 최근 5년간 소송사건 처리 현황(종결사건)

'11.9.7 기준

| 원고 | 사건 번호 | 사건명 | 사건내용 | 소 제기일 | 소 결과 및 종국일 |
|-------------------|---------------------------|--------------------|--|-----------|-----------------|
| 신○ 순 외 169명 | 서울중앙지법 2004가합29649 | 손해배상 | ○○정기 발행주식에 대한 유가증권 심사과실 등 주장 | '04-04-21 | 승소 '08-09-12 |
| 플○○ ○이(주)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396 1 | 시정조치 처분 취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로 과징금을 부과 받자 제재 과중을 주장 | '06-04-11 | 승소 '10-04-15 |
| 권○섭 |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2509 | 부당이득 금반환 등 | 회사정리절차 개시로 회 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 으므로 회사의 모든 부 실책임을 자신의 책임 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주장 | '06-05-18 | 승소 '09-04-23 |
| 권○섭 | 서울중앙지법 2006가합49593 | 손해배상 | 산업은행 등에 대한 국가 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06-06-12 | 승소 '09-10-15 |
| 삼○회 계법인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9270 | 감리결과 조치 처분취소 | 감리조서제출 거부로 벌 점 등의 처분을 받자 처분 과중을 이유로 취 소 요구 | '06-08-14 | 승소 '09-04-07 |
| 우○상 호저축 은행 |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42810 | 손실보전 금 등 청구 |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하였 으나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 으므로 손실보전 요구 | '07-05-18 | 승소 '09-05-14 |
| ○○ 건설 (주) |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79195 | 손해배상 | 플○스저축은행에 대한 영 업정지 조치로 손해를 입었 다며 손해배상 요구 | '07-09-12 | 승소 '09-02-12 |

| 원고 | 사건 번호 | 사건명 | 사건내용 | 소 제기일 | 소 결과 및 종국일 |
|-----------------|----------------------------|---------------------|---|-----------|------------------|
| 권○대 외 41명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8028 | 불합격처 분 취소 | 공인회계사2차시험 불합 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 | '07-10-09 | 승소 '09-02-12 |
| 남○순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228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 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 공개거부결정 취소 요 구 | '07-11-22 | 승소 '08-10-24 |
| 김○일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408 | 불공정거 래조치 처분취소 |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 정거래를 이유로 면직 요구처분을 받자 불공 정거래행위가 없었음 등 을 이유로 취소 요구 | '07-12-06 | 승소 '08-11-25 |
| 손○기 외1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156 | 해임요구 처분 취소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 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 구)의 취소요구 | '08-01-16 | 패소 '08-11-14 |
| 송○영 외1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561 | 해임요구 처분 취소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 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 구)의 취소요구 | '08-02-14 | 패소 '09-12-01 |
| (주)○○ 은박지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0383 | 과징금부 과처분취 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로 제재를 받자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 구 | '08-05-16 | 승소 '09-11-12 |
| 김○호 | 서울동부지법 2008가단5756 3 |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국 가의 감독부실책임을 주 장하며 손해배상 위자 료 청구 | '08-08-18 | 소취하 '09-03-11 |
| (주)○○ 에너지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785 5 | 과징금부 과처분 취소 |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 출의무 위반으로 금융위 제재를 받자 적법요건 결 여를 이유로 과징금부과 취소 요구 | '08-09-24 | 승소 '10-04-15 |
| 정○겸 외 4명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606 00 | 손해배상(기) | 국가의 희망모아 유동 화전문화사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요 구 | '08-12-08 | 승소 '11-01-11 |

| 원고 | 사건 번호 | 사건명 | 사건내용 | 소 제기일 | 소 결과 및 종국일 |
|--------------------|---------------------------|------------------------|---|-----------|------------------|
| 고○민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5106 6 | 과징금부 과처분 취소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 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 하여 금융위로부터 과 징금을 부과받자 소 제 기 | '08-12-30 | 승소 '10-07-01 |
| 오○수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517 | 계약이전 결정 제외 취소 | 5천만원이상 예금자에 대 해 계약이전을 제외하는 결정은 불법이라며 금융 위를 상대로 소 제기 | '09-02-05 | 승소 '10-04-15 |
| 장○룡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422 | 감리결과 조치 취소 | 회계 부실감사에 대한 책 임을 묻어 증선위가 제제 를 하자 소 제기 | '09-01-28 | 승소 '10-02-18 |
| 최○현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594 4 | 정직조치 요구처분 취소 | 불공정거래 주문수탁금 지 및 일임매매거래 제 한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조치를 받자 소 제기 | '09-04-27 | 승소 '09-09-11 |
| (주)인○ 트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07 6 | 과징금부 과처분 취소 | 최대주주 변동과 관련된 신고·공시 의무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09-05-27 | 승소 '11-02-01 |
| 박○영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46 3 | 과징금부 과처분 취소 |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 무 위반 등으로 증선위 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 자 소 제기 | '09-07-08 | 승소 '11-01-11 |
| 네○○ 크(주)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31 6 | 과징금부 과처분 취소 | 최대주주 변동 허위 공 시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09-09-02 | 승소 '10-05-20 |
| 한○회 계법인 외 3명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986 5 | 감리결과 조치 취소 | 부실감리로 증선위로부터 조치를 받자 소 제기 | '09-09-22 | 소취하 '10-03-17 |
| (주)○흥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085 8 | 과징금부 과처분 취소 | 최대주주변동 허위공시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 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09-09-28 | 승소 '10-08-13 |

| 원고 | 사건 번호 | 사건명 | 사건내용 | 소 제기일 | 소 결과 및 종국일 |
|----------------------|---------------------------|------------------------------|--|-----------|------------------|
| 곽○지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42 4 | 금융행정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특정 개인의 신용정보 의 공개를 금융위에 요 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 제기 | '09-09-30 | 승소 '10-04-22 |
| 차○환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67 3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특정 기업에 대한 과징 금부과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 소의 소 제기 | '09-12-16 | 소취하 '10-06-17 |
| 윤○엽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874 1 | 감사보고 서감리결 과조치처 분 취소 |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 제기 | '10-04-23 | 승소 '10-09-02 |
| 김○숙 | 용인시법원 2010차1764 | 구상금 | 국가의 보험업무 감독소 홀이 있었다며 지급명령 신청 | '10-05-27 | 소취하 '10-07-16 |
| (주)○○ 디자인 외 1명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683 4 | 과징금부 과처분취 소 |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 재누락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금융위를 상대로 소 제기 | '10-06-28 | 승소 '10-10-08 |
| 김○원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474 3 | 조치처분 취소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 차 소홀로 제재를 받자 금융위 위원장을 상대로 소제기 | '10-09-01 | 소취하 '11-03-19 |
| 도○저 축은행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6806 | 부실금융 기관지정 취소 | 임시 휴업 등으로 부실금융 기관으로 결정하자 소제기 | '11-02-28 | 승소 '11-06-08 |
| 이○춘 외 2명 |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8518 | 손해배상 | 특정금융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11-04-27 | 소취하 '11-06-24 |
| 김○환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395 8 |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취소 |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 식을 취득하였으나 대량 보유 보고 미이행으로 주식처분 명령을 받자 소 제기 | '08-03-28 | 소취하 '08-05-19 |

| 원고 | 사건 번호 | 사건명 | 사건내용 | 소 제기일 | 소 결과 및 종국일 |
|--|---------------------------|---|---|---------------|------------------|
| 이○옥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702 8 | 해임요구 처분 취소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 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 구)의 취소요구 | '08-04-21 | 패소 '08-11-21 |
| ○○ 파트 너스 외 1명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327 6 | 주시처분 명령취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로 제재를 받자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 구 | '08-06-05 | 승소 '08-12-24 |
| 전○재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45 3 | 보험설계 사등록취 소처분 취소 |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 재처분을 받자 제재처 분 유효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 | '08-06-16 | 승소 '08-10-16 |
| 임○희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701 8 | 과징금부 과처분취 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로 제재를 받자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 구 | '08-07-03 | 승소 '08-11-14 |
| (주)로○ ○이 |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383 6 | 과징금부 과처분 취소 | 자산양수도 신고불이행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부과받자 취소 요구 | '08-11-03 | 승소 '11-06-23 |
| ○○ 시멘 트(주) | 서울중앙법원 2010가합8360 | 의결권 확인 |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 자산운용 (주) 주식을 추가 취득한 데 대해 금융위가 의결 권을 제한하자 소 제기 | '10-01-26 | 승소 '11.07.28 |
| 전국 금융 산업 노동조 합 한국○ ○은행 자부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22 5 | 비금융주 력자의 한도초과 보유지분 처분명령 거부처분 취소 | 비금융주력자임을 이유로 초과소유지분에 대한 처 분을 명할 것을 청구하였 으나, 거부하자 소 제기 | '11-03-2 8 | 소취하 '11.07.28 |

| 원고 | 사건 번호 | 사건명 | 사건내용 | 소 제기일 | 소 결과 및 종국일 |
|-----------------|---------------------------|------|---|-----------|-----------------|
| 이○ 외 150명 | 서울중앙지법 2010가합5657 4 | 손해배상 | (주)○○○○테크놀로지 회 계처리기준 위반 및 상장 폐지 과정에서 국가의 감 독소홀이 있었다며 손해 배상 청구 | '10-06-03 | 승소 '11-08-06 |

□ 소송사건 계류 현황

'11.9.7 기준

| 원고 | 사건 번호 | 사건명 | 사건내용 | 소 제기일 |
|---------------------|---------------------------|---------------------------------------|---|---------------|
| 플○스저 축은행 외 1명 |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68 4 |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 처분 취소 |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취소 되자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 유로 취소요구 | '06-04-2 6 |
| ○○개혁 연대 외 1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16 6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외환은행 주식 취득 승인관련 판단 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 '07-09-1 2 |
| ○○시멘 트(주)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904 9 | 대주주 변경승인 조치통보 취소 |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 ○ 자산운용(주) 주식을 추가 취득 한 데 대해 금융위가 의결권을 제 한하자 소 제기 | '09-09-17 |
| 황○기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49 9 | 제재처분 취소 |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 로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 제기 | '09-12-16 |
| 부○저축 은행 외 76명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542 8 | 부실금융 기관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 취소 |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영업정지, 임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등)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 며 소제기 | '11-05-17 |
| 김○순 외 23명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677 9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삼○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1-06-0 7 |

| 원고 | 사건 번호 | 사건명 | 사건내용 | 소 제기일 |
|----------------------|----------------------------|-------------|--|---------------|
| 강○희 외 80명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956 3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부○저축 은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1-06-1 3 |
| 강○우 외 123명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5907 5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부○2저축 은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1-06-1 3 |
| 강○미 외 18명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210 8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삼○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1-07-1 3 |
| 김○욱 외 9명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7277 1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중○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 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1-07-1 5 |
| 이○로 |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2924 00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중○부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 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1-08-1 1 |
| 강○휘 외 192명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470 5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부○저축 은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1-08-1 6 |
| 강○학 외 93명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296 9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부○2저축 은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1-08-1 0 |
| 강○순 외 140명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8829 5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삼○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1-08-2 4 |
| ○○리츠 주식회사 외 1명 |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2768 9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경영정상화활 기회를 잃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며 소 제기 | '11-03-24 |
| 이○남 |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2094 9 | 손해배상 (기) | 금융위원회에서 민원사항을 지연시 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소 제기 | '11-04-12 |

| 원고 | 사건 번호 | 사건명 | 사건내용 | 소 제기일 |
|--------------------|---------------------------|-------------------------------------|--|---------------|
| 공○성 외 2명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500 1 | 감사보고 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처분 취소 |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금융위 위원장을 상대로 소 제기 | '10-03-29 |
| 삼○회계 법인 외 3명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83 1 | 감리결과 조치통보 처분취소 |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증선위를 상대로 소 제기 | '10-06-18 |
| 라○토이 엔씨 외 1명 |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43 1 | 과징금부 과처분 취소 | 주식 공개매수 허위공고 및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자 소 제기 | '09-12-04 |
| 코○콤(주)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887 8 | 과징금부 과처분취 소 | 선금금 허위계상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증선위를 상대로 소 제기 | '10-07-1 4 |
| (주)○○오 션 |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10 9 | 과징금부 과처분등 취소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으로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자 증선위를 상대로 소제기 | '10-10-27 |
| 하○셀주 식회사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5889 | 과징금부 과처분취 소 | 자기주식 처분관련 금융위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 제기 | '11-02-22 |
| 조○구 |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963 5 | 보험설계 사등록취 소처분취 소 | 보험료 대납의 방법으로 보험가입자에 대해 특별이익을 제공하여 보험설계사 등록이 취소되자 소 제기 | '11-06-2 2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6. 최근 3년간 본부처 관련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과 배상 및 보상현황

□ 금융위 출범('08.3월) 이후 현재('11.7월)까지 각종 계약
및 해약 현황

(단위:백만원)

| 연도 | 계약 내용 | 계약금액 | 해약여부 |
|-----|--|------|------|
| 08년 |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 30 | 무 |
| 08년 |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용역 | 49 | 무 |
| 08년 |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 47 | 무 |
| 08년 | 메신저시스템 도입 | 25 | 무 |
| 08년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정기회의 회의장 임대 | 85 | 무 |
| 08년 | 외환시장 발전방향 | 19 | 무 |
| 08년 |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 40 | 무 |
| 08년 |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 30 | 무 |
| 08년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 22 | 무 |
| 08년 |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 40 | 무 |
| 08년 |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 46 | 무 |
| 08년 | PR 자문 서비스 계약 | 월 8 | 무 |
| 08년 | 홈페이지 연계 홍보 블로그 구축 용역 | 27 | 무 |
| 08년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 37 | 무 |

| 연도 | 계약 내용 | 계약금액 | 계약여부 |
|-----|--------------------------------|------|------|
| 08년 |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 20 | 무 |
| 08년 | 홈페이지 개편 | 30 | 무 |
| 08년 |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 25 | 무 |
| 09년 | 네트워크 및 PC 유지보수 | 33 | 무 |
| 09년 |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 | 33 | 무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파티션 및 가구 이전 설치 | 21 | 무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FIU 이전 설치 공사 | 21 | 무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 26 | 무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과별파티션 및 유리벽체칸막이 공사 | 49 | 무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통신망 구축 | 35 | 무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전산실 구축 및 전산장비 이전설치 | 49 | 무 |
| 09년 | 통신장비 유지보수 | 61 | 무 |
| 09년 |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 45 | 무 |
| 09년 | 금융상품판매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 30 | 무 |
| 09년 |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 30 | 무 |
| 09년 |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 30 | 무 |
| 09년 |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 28.8 | 무 |
| 09년 |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 20.5 | 무 |

| 연도 | 계약 내용 | 계약금액 | 계약여부 |
|-----|--|------|------|
| 09년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195 | 무 |
| 09년 |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 구축 | 33 | 무 |
| 09년 | 금융민원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267 | 무 |
| 09년 |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실 이전 구축 | 389 | 무 |
| 09년 | 금융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 30 | 무 |
| 09년 | 2009년도 법령 영문화사업 | 55 | 무 |
| 09년 | 금융위원회 영문 홍보 브로슈어 제작 | 20 | 무 |
| 09년 |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 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40 | 무 |
| 09년 |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 35 | 무 |
| 09년 |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 금융역 | 32 | 무 |
| 09년 |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 35 | 무 |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 20 | 무 |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20 | 무 |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 20 | 무 |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 30 | 무 |
| 09년 |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 20 | 무 |
| 09년 |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 40 | 무 |
| 09년 |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 | 23 | 무 |

| 연도 | 계약 내용 | 계약금액 | 계약여부 |
|-----|--|------|------|
| 10년 |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 30 | 무 |
| 10년 |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 30 | 무 |
| 10년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 30 | 무 |
| 10년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 45.5 | 무 |
| 10년 |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 40 | 무 |
| 10년 |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 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 20 | 무 |
| 10년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 30 | 무 |
| 10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 30 | 무 |
| 10년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 30 | 무 |
| 10년 | 금융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 50 | 무 |
| 10년 |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에 대한 연구 | 30 | 무 |
| 10년 |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 25 | 무 |
| 10년 |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 30 | 무 |
| 10년 |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현황 및 감독체계 검토 | 25 | 무 |
| 10년 |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 방안 | 30 | 무 |
| 10년 |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 선안 연구 | 30 | 무 |
| 10년 | 우리나라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 30 | 무 |
| 10년 | 자금세탁행위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금세 탁 혐의거래지표 연구 | 28 | 무 |

| 연도 | 계약 내용 | 계약금액 | 계약여부 |
|-----|---------------------------------------|------|------|
| 10년 |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부 문을 중심으로 | 48 | 무 |
| 10년 | 온실가스 의무저감 등에 대한 공시·감독체계 개 선한 연구 | 40 | 무 |
| 10년 | 녹색금융 활성화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40 | 무 |
| 10년 | 블로그 개편 및 온라인 홍보 활성화 사업 | 20 | 무 |
| 10년 | 정보보안 개선사업 | 36 | 무 |
| 10년 | FSB 서울총회 행사진행 용역 | 20 | 무 |
| 11년 |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 36 | 무 |
| 11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Based Android OS) 개발용역 | 28.6 | 무 |
| 11년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244 | 무 |
| 11년 | 2011년도 네트워크 및 PC 유지보수 | 49 | 무 |
| 11년 | 가계부채대응방향 | 40 | 무 |
| 11년 | 금융감독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 20 | 무 |
| 11년 |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 30 | 무 |
| 11년 | 개인정보보호 사업 | 29.4 | 무 |
| 11년 | 공자위 홈페이지 서버이전 및 유지보수 사업 | 29.6 | 무 |
| 11년 |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 | 40 | 무 |
| 11년 |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 15 | 무 |
| 11년 | 대형 IB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 30 | 무 |

☐ 금융위 출범('08.3월) 이후 현재('11.7월)까지 각종 배상
및 보상현황

- 해당사항 없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7. 최근 3년간 행정소송관련 전문 변호사 선임 내역

□ 최근 3년간 행정소송관련 전문 변호사 선임 내역

'11.9.7 기준

| 원고 | 사건명 | 심급 (연도) | 선임 대리인 | 선임비용(단위 천원, VAT제외) | | | 비고 |
|----------------------------|---|--------------|-------------|--------------------|--------|--------|---------|
| | | | | 계 | 착수금 | 성공보수 | |
| 전국○○ 조합 한국○○ 은행지부 | 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보유 지분 처분명령 거부처분 취소 | 1심 (2011) | 법무법인 화우 | 5,000 | 5,000 | 0 | 소취 하 |
| 도○ 저축은행 외 2 | 부실금융기관 지정취소 | 1심 (2011) | 법무법인 태평양 | 10,000 | 5,000 | 5,000 | 승소 |
| | 집행정지 | 1심 (2011) | 법무법인 태평양 | 10,000 | 5,000 | 5,000 | 패소 |
| | | 2심 (2011) | 법무법인 태평양 | 0 | 0 | 0 | 패소 |
| 황○기 | 제재처분 취소 | 1심 (2010) | 정부법 무공단 | 14,000 | 7,000 | 7,000 | 패소 |
| | | 1심 (2010) | 변호사 김용찬 | 14,000 | 7,000 | 7,000 | 패소 |
| | | 2심 (2011) | 법무법인 바른 | 25,000 | 10,000 | 15,000 | 진행중 |
| | 집행정지 | 1심 (2011) | 법무법인 바른 | 0 | 0 | 0 | 패소 |
| | | 2심 (2011) | 법무법인 바른 | 0 | 0 | 0 | 패소 |
| | | 3심 (2011) | 법무법인 바른 | 0 | 0 | 0 | 진행 중 |
| | | | | | | | |
| 부○저축 은행 외 76명 |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취소 | 1심 (2011) | 법무법인 태평양 | 6,000 | 2,000 | 4,000 | 진행 중 |
| | 집행정지 | 1심 (2011) | 법무법인 태평양 | 10,000 | 4,000 | 6,000 | 승소 |

| 원고 | 사건명 | 심급 (연도) | 선임 대리인 | 선임비용(단위 천원, VAT제외) | | | 비고 |
|--------------------|------------------------|--------------|------------|--------------------|--------|----------|---------|
| | | | | 계 | 착수금 | 성공보 수 | |
| (주)○○ 시멘트 | 대주주 변경승인 조치통보 취소 | 1심 (2009) | 정부법무 공단 | 4,500 | 4,500 | 0 | 승소 |
| | | 2심 (2010) | 정부법무 공단 | 3,000 | 3,000 | 0 | 진행 중 |
| 송○영 | 해임요구처분 취소 | 2심 (2009) | 정부법 무공단 | 3,000 | 3,000 | 0 | 패소 |
| ○○개혁 연대 외 1명 |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 3심 (2009) | 정부법 무공단 | 2,000 | 2,000 | 0 | 진행 중 |
| 계 | - | - | - | 106,500 | 57,500 | 49,000 | -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8. 최근 5년간 이사회 회의록

☐ 이사회 관련 해당사항 없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9. 최근 3년간 금융위 위원장 및 금융위원회 직원의 언론 인터뷰, 기고문 등 언론보도 내용 일체

☐ 언론 인터뷰, 기고문 등 언론보도 현황

| 연 번 | 매체명 | 인터뷰·기고 | 일시 |
|--------|-------------------------|--------------------|----------|
| 1 | KBS 1TV | 금융시장 현황 | 09.02.19 |
| 2 | KBS 1라디오 | 주요금융현안 | 09.07.06 |
| 3 | Bloomberg | 금융정책 전반 | 09.09.15 |
| 4 | Le Figaro | 금융정책 전반 | 09.09.15 |
| 5 | KBS 1TV | 주요금융현안 | 09.09.17 |
| 6 | SBS TV | 주요금융현안 | 09.09.18 |
| 7 | KBS 1TV | 서민금융 관련 | 09.09.20 |
| 8 | 불교방송 뉴스파노라마 | 금융위기 극복 등 | 09.09.21 |
| 9 | 중앙일보 | 미소금융관련 좌담회 | 09.10.01 |
| 10 | 중앙일보 | 미소금융관련 좌담회 | 09.10.05 |
| 11 | KBS1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전반 | 09.12.03 |
| 12 | SBS 라디오 전망대 | 금융정책 전반 | 09.12.17 |
| 13 | MBC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금융정책 전반 | 09.12.17 |
| 14 | KTV 정보와이드 모닝 | 금융정책 전반 | 09.12.18 |
| 15 | PBC 열린세상, 아침! 이석우입니다 | 금융정책 전반 | 09.12.22 |
| 16 | SBS CNBC | 금융정책 전반 | 10.01.05 |
| 17 | 한국경제 | 서민금융 관련 | 10.01.06 |
| 18 | SBS 나이트라인 | 비상경제정부 출범 1주년 성과 | 10.01.07 |
| 19 | 연합뉴스 | 미소금융 관련 | 10.01.15 |
| 20 | 조선일보 | 금융정책 전반 | 10.01.22 |
| 21 | 한국경제TV | 금융선진화 비전 및 금융현안 | 10.02.02 |
| 22 | 매일경제 | 금융선진화 비전 및 서민금융 대책 | 10.02.16 |
| 23 | 서울경제 | 출범2주년 정부성과 및 현안 | 10.02.19 |
| 24 | 외신인터뷰 | 블룸버그 | 10.03.05 |
| 25 | 이데일리 | 금융선진화 | 10.03.25 |
| 26 | SBS 나이트라인 | 서민금융 활성화방안 | 10.04.08 |
| 27 | MBN 'MBN 오늘' | 서민금융 활성화방안 | 10.04.09 |
| 28 | 한국경제TV '성공투자 오후증시' | 서민금융 활성화방안 | 10.04.09 |

| 연 번 | 매체명 | 인터뷰·기고 | 일시 |
|--------|---------------------|------------------------------|----------|
| 29 | KBS 뉴스라인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 10.04.12 |
| 30 | 중앙일보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 10.04.15 |
| 31 | 영남일보 인터뷰 | 금융정책 전반 | 10.04.16 |
| 32 |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 10.04.16 |
| 33 | MBC경제매거진(월간) |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 10.04.19 |
| 34 | 한국일보 인터뷰 | 금융정책 전반 | 10.04.22 |
| 35 | KBS 1라디오 '홍지명입니다' | 금융정책 전반 | 10.04.27 |
| 36 | BBS 라디오 '아침저녁' | 금융정책 전반 | 10.05.27 |
| 37 | 매경 인터뷰 | 금융정책 전반 | 10.05.27 |
| 38 | KBS 1TV, '일요진단' | 남유럽 재정위기 및 천안함 사태 관련 대응방향 | 10.05.30 |
| 39 | 코리아 타임즈(기고문) | 금융규제 개혁 | 10.06.05 |
| 40 | 매일경제 | 미소금융 | 10.06.15 |
| 41 | 조선일보 인터뷰 | 금융정책 | 10.06.24 |
| 42 | 동아일보(기고문) | 미소금융 | 10.07.07 |
| 43 | MBN TV '뉴스M 2부' | 햇살론 | 10.07.20 |
| 44 | SBS TV '나이트라인' | 햇살론 | 10.07.20 |
| 45 | BBS라디오 '아침저녁' | 햇살론 등 서민금융 | 10.07.21 |
| 46 |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 햇살론 등 서민금융 | 10.07.21 |
| 47 | KBS 1TV '뉴스라인' | 햇살론 등 서민금융 | 10.07.23 |
| 48 | KBS 1라디오 '홍지명입니다' | 햇살론 등 서민금융 및 금융정책 현안 | 10.07.27 |
| 49 | MBC TV '뉴스24' | 햇살론 등 서민금융 및 금융정책 현안 | 10.07.27 |
| 50 | PBC 라디오 '이석우입니다' | 햇살론 등 서민금융 및 금융정책 현안 | 10.07.28 |
| 51 | KBS 1TV '뉴스광장' | 햇살론 | 10.08.10 |
| 52 | 국제신문 | 금융중심지 | 10.08.19 |
| 53 | 경향신문 | 서민금융 | 10.08.23 |
| 54 | PBC 라디오 '이석우입니다' | 서민금융 등 | 10.10.06 |
| 55 | 중앙데일리 | FSB서울총회 등 | 10.10.13 |
| 56 | 한국경제 | FSB서울총회 | 10.10.14 |
| 57 | 코리아타임즈 | FSB서울총회 | 10.10.18 |
| 58 | KBS 1라디오 '홍지명입니다' | G20 및 서민금융 등 금융정책 현안 | 10.10.27 |
| 59 | 「신용경제」(11월호) | 금융정책 전반 | 10.10.27 |

| 연 번 | 매 체 명 | 인터뷰 · 기 고 | 일 시 |
|--------|--------------------|-----------------------|----------|
| 60 | 로이터 | 금융규제 개혁 및 G20 정상회의 관련 | 10.11.11 |
| 61 | mbn '뉴스광장' | 2011년 금융위 업무보고 | 10.12.15 |
| 62 | SBS TV '나이트라인' | 2011년 금융위 업무보고 | 10.12.15 |
| 63 | BBS라디오 '아침저널' | 2011년 금융위 업무보고 | 10.12.16 |
| 64 | 한경TV(10:30) '뉴스광장' | 2011년 금융위 업무보고 | 10.12.17 |
| 65 | 중앙일보 | 2011년 금융위 업무보고 | 10.12.17 |
| 66 | 중앙데일리 | 2011년 금융위 업무보고 | 10.12.20 |
| 67 | KBS 1라디오 홍지명입니다 | DTI 규제 완화 등 | 11.03.28 |
| 68 | YTN '포커스' | DTI 규제 완화 등 | 11.03.30 |
| 69 | 블룸버그 인터뷰 | 자본시장 경쟁력 제고 등 | 11.04.05 |
| 70 | 세계파이낸스 | 금융정책 전반 | 11.04.21 |
| 71 | 중앙데일리 인터뷰 | 금융정책 전반 | 11.05.20 |
| 72 | KBS, MBC, SBS 인터뷰 | 헤지펀드 도입 관련 | 11.05.24 |
| 73 | 로이터통신 | 가계부채, 자본시장법 등 | 11.06.09 |
| 74 | MBC 100분토론 | 가계부채 대책 | 11.06.22 |
| 75 | 월간 신용경제 인터뷰 | 금융시장 현황 관련 | 11.07.22 |
| 76 | 국민일보 인터뷰 | 금융시장 현황 관련 | 11.08.10 |
| 77 | KBS1라디오 김방희입니다. | 금융시장 동향 등 관련 | 11.08.11 |
| 78 | 이데일리 인터뷰 | 금융정책 현안 | 11.08.17 |
| 79 | 서울경제 인터뷰 | 금융정책 현안 | 11.08.19 |
| 80 | 문화일보 인터뷰 | 주요 금융시장 동향 등 | 11.08.29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10. 최근 3년간 언론에 대한 보도해명자료 및 그 내용

☐ 보도해명자료 목록

| 번호 | 제 목 | 작성일 |
|----|--|----------|
| 1 | 한국일보('11.9.7) 「저축은행 5곳 회생불능 판정」 기사 관련 | 20110907 |
| 2 | 조선일보('11.9.6) 「영업정지 저축은행 5~6곳 압축」 및 중앙일보 「저축은행 12곳 영업정지 대상」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906 |
| 3 | 머니투데이의 「구조조정 저축銀 16곳 확정」 보도 ('11.9.3.) 관련 | 20110905 |
| 4 | 한국경제('11.9.1) 「새마을금고, 영업구역외 대출 줄인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901 |
| 5 | 조선일보('11.8.31.), 「저축은행 15곳 不實」 및 매일경제('11.8.31.), 「저축銀 구조조정 3가지 시나리오로 진행」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20110831 |
| 6 | SBS뉴스(2011.8.26(금)) 「"거꾸로 가는 보안대책...선택권·자율성이 명분"기사 관련 | 20110829 |
| 7 | 연합뉴스('11.8.18)「일부 시중은행 가계대출 전면중단」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818 |
| 8 | 서울경제(2011.8.12(금) 「증안펀드, 추가 대신 기존펀드 증액으로」 인터넷 기사 관련 | 20110812 |
| 9 | 중앙일보('11.8.6), 「김석동 "9월까지 없다" 해놓고 ... 울산 경은저축은행 영업정지」 제하 기사... | 20110808 |
| 10 | 한국경제('11.8.8), 「9월까지 문 닫는 곳 없다는 말 믿고 예금 댔는데」 제하 기사 관련 | 20110808 |

| | | |
|----|--|----------|
| 11 | 파이낸셜뉴스('11.8.3, 14:44), 「저축은행 특별계정에 공적자금 5000억 투입」 제하 기사 관련 | 20110803 |
| 12 | 한국경제('11.7.26.)"年30% 넘는 불법 사채이자 몰수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26 |
| 13 | 이투데이('11.7.22.)"저축은행 주범 8·8클럽 낙담만에 10·8로 부활"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22 |
| 14 | 연합뉴스(11.7.20) 「금융당국, 상장사 소액공모 폐지검토」, 「외국기업 상장심사 주먹구구... 소액공모 허점 많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21 |
| 15 | 머니투데이(11.7.14) 「'고정금리 대출 30%' 없던 일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14 |
| 16 | 문화일보('11.7.11) 「총자산 90조 새마을금고 가계부채 대책에서 빠졌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11 |
| 17 | 한국경제('11.7.7) 「농·수협 예금 비과세 한도 2천만원으로 축소」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07 |
| 18 | 매경('11.7.5) 「금융위 혼선...영업정지 조건 뒤늦게 수정」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05 |
| 19 | 중앙일보('11.7.5), 「부실저축은행 퇴출에 10조 투입」, 「20조원 쏟아부어 저축은행 불신 씻기」 제하 기사 및 한겨레('11.7.5), 「저축은행 구조조정 자금 25조원 추가조성」 제하 기사 관련 | 20110705 |
| 20 | 이데일리('11.7.5.)"지방저축銀, 수도권 대출 규제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705 |
| 21 | 연합뉴스('11.6.30) 「정부, 은행 예대율 90%대로 인하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30 |
| 22 | 서울경제(2011.6.29 가판) 「美 경제실세 서머스 김석동 만났다는데...」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28 |
| 23 | 한겨레신문(11.6.21) 「DTI 규제, 지방대도시로 확대」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21 |

| | | |
|----|--|----------|
| 24 | 한국경제(2011.6.20(월) 인터넷판) 「증권사 빅5, 합병 안해도' 종합 IB'할 수 있다」 기사 관련 | 20110620 |
| 25 | 서울경제('11.6.17. A01, A05면)“정책은 오락가락 시장은 갈팡질팡”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17 |
| 26 | 연합뉴스('11.6.16)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제한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16 |
| 27 | 연합뉴스('11.6.12 06:15), 「저축銀 구조조정 대비 공적자금 조성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20110612 |
| 28 | 연합뉴스('11.6.9 06:09), 「500만원 이하 금융분쟁 소송금지 추진」 제하 기사 및 「소액금융분쟁 소송금지, 과연 가능할까」 제하 기사 관련 | 20110609 |
| 29 | 경향신문('11.6.3. 3면)“삼화저축은행 인수 때 써낸 금액 금감원서 하달”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03 |
| 30 | 경향신문('11.6.2)“금융당국, 또 저축은행 부실 덮나”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02 |
| 31 | 2011.6.1일 파이낸셜 뉴스 「수출입銀·무역보험公 통합 추진」 기사 관련 | 20110601 |
| 32 | 문화일보('11.6.1) 「카드대출 고삐 죄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601 |
| 33 | 매일경제('11.5.30)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해 은행별 대출 증가율 규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30 |
| 34 | 연합뉴스('11.5.26.)“저축은행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26 |
| 35 | 한국경제 「'산은+우리' 정부지분 50%대로 낮춘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6 |
| 36 | 한국경제신문 「퇴직연금, 자사상품 운용 못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6 |
| 37 | 서울경제 「우리금융 소유규제 풀어 일괄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6 |

| | | |
|----|---|----------|
| 38 | 노컷뉴스('11.5.11.)"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20일 전에 이미 결정됐다""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1 |
| 39 | 연합인포맥스(2011.5.11(수)) 「금융위, 금융주 공매도 허용 검토」 기사 관련 | 20110511 |
| 40 | 한국경제 「정부, 우리금융 민영화 포기」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11 |
| 41 | 헤럴드경제(2011년 5월 9일자) 「과태료 부과자 '보험료 할증' 물 건너가나」 기사 관련 | 20110509 |
| 42 | 헤럴드경제('11.5.6)의 「경제부처간 이견...외환銀 처리 장기 표류?」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506 |
| 43 | 이데일리"우리금융소유규제완화후재매각검토,산은입찰허용될듯" 기사 관련 | 20110505 |
| 44 | 서울경제('11.4.27일자 가판) 「미소금융 "울고 싶어라"」 제하 기사 관련 | 20110426 |
| 45 | 이데일리('11.4.25.)"상장 저축銀 IFRS 고민 풀린다..당국 해법 '가닥""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25 |
| 46 | '11.4.21일 연합뉴스 「'악마의 유혹'ELW시장에 금융당국 수수방관」 기사 관련 | 20110421 |
| 47 | 머니투데이('11.4.18) 「부실 PF채권 특화 '민간 배드뱅크'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18 |
| 48 | '11.4.19일자(가판) 서울경제 a01면, 파이낸셜뉴스 001면 등의 「부실PF 처리 민간 배드뱅크 추진」에 관한 기사 관련 | 20110418 |
| 49 | 매일경제('11.4.12.)"해킹방어 금융공동망 추진"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12 |
| 50 | 머니투데이(인터넷, '11.4.7.) "저축銀 먹거리 대책, 여신전문 출장소로 가닥"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07 |
| 51 | 한국경제 ('11.4.4일자) "불법 사채업과 전쟁 ... 이자 연 6% 제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404 |
| 52 | 한국경제('11.3.24) 「발표 이틀만에" 강남3구 혜택 제외"시장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24 |

| | | |
|----|--|----------|
| 53 | 매일경제(2011.3.20(일), 인터넷판) 「금융위"한국 거래소 문제 많다. 확 바꿀것"」 기사 관련 | 20110321 |
| 54 | 연합뉴스('11.3.18일자) 「미소금융 대출자격 완화 추진, 다음달 서민금융활성화종합대책에 포함」 제하 기사 관련 | 20110318 |
| 55 | 머니투데이('11.3.17) 「DTI 규제완화, 이달 말 종료」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17 |
| 56 | 쿠키뉴스(2011.3.10(목) 인터넷판) 「또 만수야? 강만수 靑특보 산은회장‧연봉최고 수준」 기사 관련 | 20110310 |
| 57 | 매일경제(2011.3.9(수)) 「예보법 수정안 국회통과 청신호」, 서울경제(2011.3.9(수)) 「예보법 개정안 타협점 찾나」 제하의 기사 등 관련 | 20110309 |
| 58 | 매일경제(2011.3.9(수) 가판) 「금융당국 쏙직원 취업제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09 |
| 59 | 헤럴드경제('11.3.9)의 "론스타 적격성 심사 불가능... 당국 감독행위 포기?"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09 |
| 60 | 서울경제(2011년 3월 8일자) "가계부채 종합대책, 어떤내용이 담기나"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07 |
| 61 | (서울경제,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저축은행 간 지분매입 한도 부활 검토 관련 | 20110304 |
| 62 | 연합인포맥스('11.3.2)의 「금융위, "론스타는 금융자본, 적격성 문제 없어" 결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302 |
| 63 | 연합뉴스('11.2.28) 「금융위, DTI 규제 원상복귀 결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8 |
| 64 | 연합뉴스('11.2.28)의 「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3월16일 승인 될 듯」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8 |
| 65 | 매일경제('11.2.28) 「금융위, 풀었던 DTI 규제 원래대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8 |

| | | |
|----|---|----------|
| 66 | 이데일리(2011.2.21일자) 김석동"증장기 과제로 저축銀 예금보장 한도 축소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1 |
| 67 | 매일경제 "대우증권·우리투자증권 합병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21 |
| 68 | 서울경제(2011년 2월 17일자(가판)) 「DTI 규제완화 연장 가닥 잡았나」 제하의 기사 등 관련 | 20110216 |
| 69 | 매일경제 ('11.2.9일자 인터넷판) ("4대은행, 저축銀에 2조 긴급지원")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10 |
| 70 | 매일경제(2011.2.10(목) 가판) 「옵션쇼크 도이치뱅크 제재 착수」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10 |
| 71 | 이데일리(2011.2.9(수) 인터넷) 「[단독] '옵션쇼크' 도이치 서울지점 '6개월 영업정지」 제하의 기사 등 관련 | 20110209 |
| 72 | 동아일보(2011.2.7(월) A02면) 「도이체뱅크, 2004년 옵션 거래로 200억대 이득」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07 |
| 73 | 연합인포맥스(2011.2.7(월) 인터넷) 「금감원,도이치 獨본사 검찰 고발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207 |
| 74 | 매일경제(2011년 2월 7일자(인터넷판)) 「전세난, 주택매매 활성화로 푼다, DTI규제 완화 연장될듯」 기사 관련 | 20110207 |
| 75 | 파이낸셜 뉴스('11.1.31일 1면, 3면) ("기금마련후 부실 저축銀 일 괄제재")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30 |
| 76 | 아시아경제(2011.1.27(목) 3면) 「부실증권사 퇴출 심사」 기사 관 련 | 20110127 |
| 77 | 매일경제 「정부, 블록세일로 우리금융 연내 민영화」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26 |
| 78 | 한국경제 「경남광주은행, 우리금융과 묶어 판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25 |
| 79 | MTN 뉴스('11.1.24) 「금융당국, 저축銀 공적자금 검토 구조조정'세계」 제하 보도에 대한 해명 | 20110124 |

| | | |
|----|---|----------|
| 80 | 매일경제('11.1.19일 인터넷판) ("정부, 부실 저축은행 일괄 매각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9 |
| 81 | 조선일보(2011.1.17(월) B01면) 「금융株 공매도 다시 허용될 듯」 기사 관련 | 20110117 |
| 82 | 연합인포('11.1.17일 인터넷) ("삼화 포함 부실 위험 저축은 10곳")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7 |
| 83 | 뉴시스('11.1.17일 인터넷) ("대형저축은행이 더 부실... 평균 BIS비율 9%")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7 |
| 84 | 머니투데이(2011년 1월 16일자(인터넷판)) 「DTI 규제유예, 3월말 종료될 듯」 기사 관련 | 20110116 |
| 85 | 서울경제(2011년 1월 13일자(가판)) 「DTI 규제완화 추가연장 검토」 기사 관련 | 20110112 |
| 86 | 조선일보(2011.1.11일자) 「차명계좌 실소유주 형사처벌」 기사 관련 | 20110111 |
| 87 | 헤럴드경제(2011년 1월 11일자) 「금융위 금감원, 자보료 인상 "담합 아니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1 |
| 88 | 서울경제('11.1.10일자)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달부터 0.3~0.4%P 인하")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10 |
| 89 | 이데일리('11.1.7일자 인터넷판) (김석동式 구조조정 저축은행 6곳..상장사 없어]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07 |
| 90 | 문화일보('11.1.6일자 17면) ("부실 저축은행 인수시 공적자금 투입하겠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10106 |
| 91 | 한국경제(2011.1.5(수) A30면) 「김석동 금융위원장 "자본시장법 손질"」 기사 관련 | 20110105 |
| 92 | 매일경제(2011.1.5(수) A02면) 「공모주 개인물량 25~40%까지 늘어날까」 기사 관련 | 20110105 |
| 93 | 서울경제신문('11.1.5일자 가판) 「자본시장통합법 전면 손질하겠다」 기사 관련 | 20110104 |

| | | |
|-----|--|----------|
| 94 | 한국경제(2011년 1월 4일자(가판)) 「변동금리 장기 주택대출 소득공제 제외」 기사 관련 | 20110104 |
| 95 | 연합뉴스(2010년 12월 28일자) 「무사고 18년 이상때 차보험료 70% 할인 추진」 기사 관련 | 20101228 |
| 96 | 서울경제(2010년 12월 27일자(가판)) 「장기 무사고 차보험료 할 인 5~10% 확대」 기사 관련 | 20101226 |
| 97 | 한국경제 「우리금융 예비입찰 예정대로 실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215 |
| 98 | 매일경제 「현대건설 매각 원점으로 가나」 및 MBN 「진동수 "현대그룹 인수가격 터무니 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215 |
| 99 | 경향신문('10.12.10일자 17면) ('공정사회' 뜨자 '서민금융' 찬바람) 제하 기사 관련 | 20101210 |
| 100 | 매일경제(인터넷, '10.12.10. 17:28) "우량저축은행도 거액대출 못 해"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210 |
| 101 | 서울경제(인터넷 '10.12.7 17:24), 「은행·증권·보험 유사상품 비교 한눈에」 제하 기사 관련 | 20101208 |
| 102 | 파이낸셜뉴스 (옵션쇼크 대책, 실시간 관리는 말뿐 재발가능성] 기사 관련 | 20101208 |
| 103 | 연합뉴스(2010년 12월 8일자) 「중고 소형차 보험료 인하..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기사 관련 | 20101208 |
| 104 | 헤럴드경제('10.12.8일자 1면/6면) (부실 저축銀 8곳 파산위기] 제 하의 기사 관련 | 20101208 |
| 105 | 한국경제 「광주·경남銀, 우리금융서 분리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206 |
| 106 | 파이낸셜뉴스('10.11.29일자 가판)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면 개편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128 |
| 107 | 서울경제('10.11.26자 가판) 「예금자 보호한도 차별화 최대 1억서 3,000만원까지」, 이데일리('10.11.25) 「예금자보호 한도 3천만원~1억원 차등화 추진」 기사관련 | 20101125 |

| | | |
|-----|---|----------|
| 108 | 문화일보(2010년 11월 22일자) 「자기부담금 확대·법규 위반 차량 할증강화 자동차 보험요율 조정한다」 기사 관련 | 20101122 |
| 109 | 연합뉴스('10.11.22자)의 「불법 차명계좌 개설시 금융기관 처벌 강화」 기사관련 | 20101122 |
| 110 | 매일경제(차사고 자기부담금 늘린다」,[금융위가 마련한 차보험개선안 살펴보니] 기사 관련 | 20101119 |
| 111 | 매일경제('10.11.19,15:35 인터넷판) (진동수 위원장"옵션쇼크 금감원도 책임크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119 |
| 112 | 연합뉴스('10.11.18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118 |
| 113 | 서울경제('10.11.18자 가판)의 「상습사고 운전자 보험료 크게 오른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117 |
| 114 | 매일경제"시장교란하는 외국銀지점 한국서 영업 못할 각오해야" | 20101107 |
| 115 | 서울신문 가판(2010.11.3), 「1000만원 이하 거래도 불법의심땀 보고 의무화」 제하 기사 관련 | 20101103 |
| 116 | 서울경제 가판(2010.11.1), 「은행 커버드본드 독자발행 어려워져」 제하 기사 관련 | 20101101 |
| 117 | 국민일보('10.10.29/가판) 「예보, 우리은행 지분 절반만 팔고 남을 것」 제하 기사 관련 | 20101029 |
| 118 | 서울경제('10.10.28) a10면 「금융위 상호금융사·대부업 공동검사 추진」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20101028 |
| 119 | 연합인포맥스의 「하나금융-골드만, 풋백옵션 진실공방」 보도 관련 | 20101022 |
| 120 | 이데일리의 「국제표준에 맞나 안맞나...'랩 규제안'논란 확산」 기사 관련 | 20101020 |
| 121 | 매일경제('10.10.18자 가판) 「예대율 100%규제 폐지 검토」 및 서울경제('10.10.18자 가판) 「은행 예대율 규제 사실상 폐지」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017 |

| | | |
|-----|---|----------|
| 122 | SBS 8시뉴스('10.10.15) 「'폭발적 인기'햇살론, 3개월도 안돼 중단 위기?」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20101015 |
| 123 | 연합뉴스 등의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추진」에 관한 기사 관련 | 20101014 |
| 124 | 머니투데이('10.10.11), 뉴시스('10.10.11), 이데일리('10.10.11) , 아시아경제('10.10.11) 제하의 기사관련 | 20101012 |
| 125 | 한겨레('10.10.11) 「서민에겐 쌀쌀한'미소금융'」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011 |
| 126 | 내일신문('10.10.11) 제11면 「금융감독기구 재편 논란 재점화」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011 |
| 127 | 조선일보('10.10.11) 「미소금융·햇살론, 9~10등급엔 냉랭」 , 세계일보('10.10.11) 「햇살론·미소금융 최저신용충엔'그림의 떡」 제하의 기사관련 | 20101011 |
| 128 | 연합인포맥스 「외국인 채권 과세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1011 |
| 129 | 서울경제('10.10.7), 「'우량저축은행되기' 문턱 높아진다」 제하 기사 관련 | 20101007 |
| 130 | 매일경제('10.10.5), 「키코피해 中企 2차지원대책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 20101005 |
| 131 | 머니투데이·노컷뉴스('10.10.3), 「서민금융'햇살론'... 조회만 해도 신용등급↓」 제하 기사 관련 | 20101004 |
| 132 | 「퇴직 고위공직자 유관기관 재취업」 제하의 기사 관련(한겨레, 경향, 한국일보/10.1조간) | 20101001 |
| 133 | 연합인포맥스 「은행 후계자 계획, 내년 4월부터 공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920 |
| 134 | 연합뉴스('10.9.16, 14:18분 입력) 「금융위, 금융회사 CEO 연임제한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916 |
| 135 | 연합뉴스('10.9.5 07:01입력) 「햇살론 조기소진 우려..보증재원 확충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905 |

| | | |
|-----|---|----------|
| 136 | 서울경제신문(8.27자 가판) 「캠코 '저금리로 전환대출' 대상 늘리기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827 |
| 137 | 연합뉴스('10.8.27 16:02 입력), 「DTI 풀 때 실수요자 연소득기준도 완화 검토 | 20100827 |
| 138 | 연합뉴스('10.8.25 15:40 입력), 「경제장관 긴급회동...DTI 부분완화 가닥」 제하 기사 관련 | 20100825 |
| 139 | 이데일리('10.8.22), MBC('10.8.21), 조선일보('10.8.21) 등의 DTI 규제완화 기사 보도 관련 | 20100822 |
| 140 | 서울경제('10.8.22 17:40 입력), 「헌집 사는 1주택자도 DTI 규제완화하기로, 고가주택 강남권 등 제외...부동산대책 이달내 발표」 제하 기사 등 관련 | 20100822 |
| 141 | 동아일보 「최저 신용등급자에도 서민금융 지원」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820 |
| 142 | 한국경제('10.8.20 18:32 입력),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부동산 활성화案 월말께 나올 것"」 제하 기사 관련 | 20100820 |
| 143 | 서울신문 「이럴 바엔 만들지나 말지... 허울뿐인 中企정책 2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818 |
| 144 | 서울경제('10.8.11), 「입장누그러진금융위...DTI완화 저울질」 제하 기사 관련 | 20100811 |
| 145 | 서울경제('10.8.12 가판), 「시장조성제도 부활한다」 제하 기사 관련 | 20100811 |
| 146 | 헤럴드경제(10.8.10), 「금융소비자 보호업무 대폭 강화」 제하의 보도 관련 | 20100810 |
| 147 | 이데일리('10.8.9 11:19), 「예금보험대상 변액포함...CMA·ELS 제외」 제하 기사 관련 | 20100809 |
| 148 | 연합뉴스('10.8.8), '연소득 5천만원 넘으면 햇살론 제한검토' 제하의 기사관련 보도해명 | 20100808 |

| | | |
|-----|--|----------|
| 149 | 국민일보('10.8.4) 「서민들 되레 사채시장 내몰린다」 관련 기사에 대한 설명 | 20100804 |
| 150 | SBS 8시 뉴스('10.7.31) 「가뭄의 단비 '햇살론'...재원마련 문제없나?」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 | 20100731 |
| 151 | 연합뉴스('10.7.29) 「햇살론 연체이자율 제각각 '혼선」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20100729 |
| 152 | 연합인포맥스, 「DTI, 서울 60%, 인천·경기 70%로 완화 검토」 제하 기사 관련 | 20100719 |
| 153 | 내일신문 「금융위'행복잡이 프로젝트' 혼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715 |
| 154 | 헤럴드경제('10.7.9) 「보험연구원 분리 논란 심화...보개원'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709 |
| 155 | 한국경제('10.7.2) 「금감원 '펀드 시세조종 조사」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702 |
| 156 | 한국경제('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충돌조짐」 제하 기사 등 관련 | 20100629 |
| 157 | 파이낸셜뉴스('10.6.30) 「금융위-금감원 또 제재권 신경전」 제하 기사 관련 | 20100629 |
| 158 | 연합인포맥스 「정부, 은행세 걷어 '환율안정펀드' 조성」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623 |
| 159 | 서울경제('10.6.23) 「금융위 '금융상품 백화점' 도입재추진」 제하 기사 관련 | 20100622 |
| 160 | 헤럴드경제('10.6.20) 「대부업체 고객정보 공개 반대 여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620 |
| 161 | 이데일리 「은행세 요율, 금융 재정거래 억제수준 부과 검토」 제하의 보도 관련 | 20100617 |
| 162 | 헤럴드 경제 「KB·우리지주 합병돼도 독과점 문제없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616 |

| | | |
|-----|---|----------|
| 163 | 한겨레신문 「은행세 20조원 부과 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609 |
| 164 | 한국경제 「보험사에서 증권계좌 만들면 불법?」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608 |
| 165 | 서울신문 「은행세 내년 도입 확정」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601 |
| 166 | 동아일보 「대부업체"고객정보 못줘"... 10조원 규모 서민대출 무산 ?」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522 |
| 167 | [보도해명]서울경제 「변호사·회계사도'자금세탁 보고'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제하 기사 (10.5.17 A01면, A06면) 관련 | 20100517 |
| 168 | 한국경제신문의 「세계단일 회계기준 2013년 새로 도입한다」 보도 관련 | 20100514 |
| 169 | 헤럴드경제 「보이스피싱 관련법 급조 ... 피해자들 두 번 운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430 |
| 170 | 이데일리 「금감원 제재권한 축소 법안 기습제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420 |
| 171 | 문화일보의 「감사의견 거절 급증... 해당 상장폐지기업 감리 강화」 보도 관련 | 20100420 |
| 172 | 헤럴드경제 「은행권 외화차입 규제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419 |
| 173 | 연합뉴스 등의 「지방미분양 문제 완화방안검토」 에 관한 기사 관련 | 20100414 |
| 174 | 뉴스핌, 「은행 사외이사제 석달만에 또 재수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412 |
| 175 | 연합뉴스 「서민금융사 보증부 대출금리 11%대」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411 |
| 176 | 이투데이 「금융위"직접 징계의 칼을 들겠다"」 및 「금융위-금감원 제재권 놓고 '신경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408 |
| 177 |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금리 두자리수로 올려 모럴해저드 막는다」 및 「모럴해저드 차단불구 지나친 고금리 도마에」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407 |

| | | |
|-----|---|----------|
| 178 | 헤럴드경제 「정부, 서민금융위해 저축은행에도 이익출연 강요」 및 이데일리 「금융위 서민금융TF, 개인프리워크아웃制 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406 |
| 179 | 연합뉴스 「저신용자 신용대출 받기 쉬워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401 |
| 180 | 경향신문, 「車요일제보험 할인 준비부족에 또 연기」 보도 관련 | 20100401 |
| 181 | 매일경제 「개인신용정보 종합DB 만든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328 |
| 182 | 연합뉴스 「저축銀 감독강화.. 자산운용 규제도 검토」 및 「대형 저축은행 매년 종합검사 받는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314 |
| 183 | 한국경제 「모든 스마트폰서 인터넷뱅킹 된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307 |
| 184 | 서울경제 「저축銀도 유동성비율 100%이상 맞춰야」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305 |
| 185 | 경향신문 등의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제도」에 관한 기사 관련 | 20100303 |
| 186 | 서울경제 「금융안정을 위한 상시협의체 신설 검토」 및 「금융권 충당금체계 확 바뀐다」 제하기사 관련 | 20100301 |
| 187 | 연합뉴스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 차등화 검토」 제하기사 관련 보도해명 | 20100226 |
| 188 | 연합인포맥스 「금융당국, 외은지점 달러차입제한 강력규제 본격 검토」, 매경 「국민연금과 통화스왑 늘려 제2 외환보유액 확보한다」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 20100226 |
| 189 | 헤럴드경제 「우리지주 자사주 차입매입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223 |
| 190 | 이데일리, 「금융당국, 증권사 신규인가 전면 재검토」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222 |

| | | |
|-----|---|----------|
| 191 | 서울경제 「예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제하기사 관련 | 20100216 |
| 192 |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 쉽게'예보 MOU'준다」 등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209 |
| 193 | 한국경제 「우리금융, 합병통해 민영화한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208 |
| 194 | 서울경제 인터넷판 「예금보장제 10여년만에 대수술」 제하 기사 관련 | 20100126 |
| 195 | 서울경제 「2금융권 미소금융 출자'난색」 제하기사 관련 | 20100120 |
| 196 | 서울경제 "은행서도 '랩어카운트'판매한다 | 20100119 |
| 197 | 세계일보 「公자금 상환 부진 '혈세만 줄줄」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119 |
| 198 | 서울경제 「새 보험료 산출방식 의무도입 "유예"」 제하 기사 관련 | 20100113 |
| 199 | 연합뉴스 「KB회장, 사외이사제 개선후 뽑아야」 제하기사 관련 | 20100110 |
| 200 | 서울경제 등 「우리금융 등 은행간 M&A 빨라진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104 |
| 201 | 매일경제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 내주 발표」 제하의 기사 관련 | 20100103 |
| 202 | 한국경제신문, 「대우건설 産銀에 넘겨라」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1228 |
| 203 | 연합뉴스, 서울신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제도 허점투성이」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1228 |
| 204 | 헤럴드경제 "금융회장 선출에 주주대표 참여"관련 | 20091204 |
| 205 | 연합뉴스의 「빅4 회계법인에 외부감사 몰아주기」 보도 관련 | 20091203 |
| 206 | 매일경제"부실보험판매대리점이배상..."(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 20091203 |

| | | |
|-----|--|----------|
| 207 | 매일경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금융위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관련 | 20091202 |
| 208 | 연합뉴스 "돈세탁 의심거래 무조건 신고추진"관련 | 20091127 |
| 209 | 동아일보의 「은행장 후보, 금융당국이 사전심사」 보도 관련 | 20091119 |
| 210 | 매일경제 「은행 美국채 보유 의무화 내년 7월 시행」 제하의 기사 관련 | 20091109 |
| 211 | 연합뉴스 「우리금융지분 7%, 11월내 매각」 제하의 기사 관련 | 20091027 |
| 212 | 10.21 연합인포맥스 「증권·자산운용사 콜시장 참여제한」 , 「콜시장 제한·통안증권 국채전환 등 단기자금시장 대개편」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 20091021 |
| 213 | 동아일보 「경영권 무관한 우리금융지주 지분 23% - 정부, 전량매각 미리 의결키로」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 20091005 |
| 214 | 헤럴드경제 「'미소금융' 불참...외국계銀 해도 너무하네」 관련 보도 해명 | 20090925 |
| 215 | 아시아투데이 「정부, 신용평가사 자회사 보유 금지 추진」 제하의 기사 관련 | 20090911 |
| 216 | CBS 노컷뉴스 「정부, 금융공기업도 임금 5% 반납」 제하의 기사 관련 | 20090903 |
| 217 | 머니투데이 「우리금융, 조기 민영화 금융위에 요청」 제하의 기사 관련 | 20090813 |
| 218 | 연합뉴스 「금융당국 주택대출 확대 은행에 불이익」 제하의 기사 관련 | 20090811 |
| 219 | 위원장 기자간담회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20090720 |
| 220 | OCI(주) 조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 20090715 |

| | | |
|-----|--|----------|
| 221 | 주택담보대출 LTV‧DTI 규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20090618 |
| 222 | “보험사기 합동조사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20090604 |
| 223 | “정부 유동성공급 지속 곤란”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20090527 |
| 224 | 한국경제 「車운행 많으면 보험료 더 낸다」 기사 관련 | 20090527 |
| 225 | 공매도 냉각기간제도 시행여부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20090524 |
| 226 | 매일경제 「주식 공매도 곧 재개」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20090513 |
| 227 | 파이낸셜뉴스, 「증권사’허술한 입단속’어쩌나」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511 |
| 228 | 서울경제, 「금융당국, “저축은행 합쳐라”」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417 |
| 229 | 이데일리 「상장중소 2011년 국제회계기준 적용 연기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20090326 |
| 230 |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등 「주식 공매도 재허용 검토」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20090324 |
| 231 | 이데일리 「정부, 회사채 신속인수제 부활 검토」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 20090320 |
| 232 | 연합뉴스 「금감원 “정상기업도 신용위험 재평가”」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309 |
| 233 | 파이낸셜뉴스 「정부, 해운사 배 100척 매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 20090303 |
| 234 | 국내은행 외화차입금 현황(보도참고자료) | 20090227 |
| 235 | The Economist 「Domino theory」 (09.2.26일자)기사 관련 | 20090227 |
| 236 | 연합뉴스 「BIS비율 8% 이상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제하 보도 관련 해명자료 | 20090219 |

| | | |
|-----|---|----------|
| 237 | 서울경제 「올해 만기 중기대출 2금융권도 전액 연장」 관련 보도 해명 | 20090216 |
| 238 | 한국경제 「기업대출보증 모두 만기연장」 및 「파격적 보증으로 中企 자금난 해소…수출보험도 무제한 지원」 (09.2.12)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211 |
| 239 | 연합뉴스, 「정부, 구조조정 속도 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209 |
| 240 | 한국일보, 「부실징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206 |
| 241 | 한국경제 「자통법에 발목잡힌 국민연금」 기사 관련 | 20090205 |
| 242 | 매일경제 「은행 BIS비율 내달 완화한다」 가판 기사 관련 | 20090130 |
| 243 | 머니투데이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미진 때 은행문책」 및 연합뉴스 「금감원, A.B등급 부도나면 은행문책」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119 |
| 244 | 연합뉴스 「은행들 건설·조선사 퇴출 없다」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116 |
| 245 | 한국경제 「금감원 건설·조선사 옥석가리기 직접 나설 것」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115 |
| 246 | 이데일리 「전광우·동부·두산 등 중견그룹 모니터링」 제하 기사 관련 | 20090113 |
| 247 | 이데일리, 「금감원장 'BIS10%' 발언...금융위와 주도권선점용?」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112 |
| 248 | 서울경제, 「부실 저축은행 내달중 속아낸다」 기사에 대한 해명 | 20090109 |
| 249 | 문화일보 제14면 「기업'자사株'담보펀드 나온다」 제하 기사 관련 | 20090107 |
| 250 | 내일신문 제1면 「모든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 20090106 |

| | | |
|-----|--|----------|
| 251 | 연합뉴스 「건설·조선 구조조정시 경영진 평판 고려」 제하 기사 및 이데일리 「조선·건설사 구조조정 기준 확정」 제하 기사 관련 | 20081231 |
| 252 | 서울경제 「미분양 해소 대책 어떻게 나올까?」 제하 기사 관련 | 20081216 |
| 253 | 연합인포맥스 「금융위, BIS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투입.. 법개정 검토」 기사 관련 | 20081216 |
| 254 | 조선일보, 「은행BIS비율 12% 채워라, 정부, 미달땐 강제 구조 조정」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1211 |
| 255 | 「문화일보'정부, 건설업 신용보증 확대 올 3000억원→ 내년 2조원」 제하 기사 관련 | 20081208 |
| 256 | 연합뉴스 「이창용"내년 성장률 2% 밀돌수 있다"」 제하 기사 관련 | 20081208 |
| 257 | 매일경제 「통합민간구조조정기구 곧 설립」 제하 기사 관련 | 20081208 |
| 258 | 조선일보 「대주단 가입 신청 29개사 모두 승인 추진」 제하 기사 관련 해명 | 20081205 |
| 259 | 「연합뉴스'저축은행에공적자금1조원투입」 제하 기사 관련 | 20081203 |
| 260 | 연합뉴스 「구조조정위 부활검토」 제하 기사 관련 | 20081201 |
| 261 | 매일경제 제1면(가판) 「정부, 은행부실채 산다」 제하 기사 관련 | 20081127 |
| 262 | 한겨레 제1면 「정부, 은행에 공적자금 투입 검토」 제하 기사 관련 | 20081126 |
| 263 | 매일경제신문의 「PF대출 부실 굶아터지기전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속히」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1121 |
| 264 | 2008. 11. 20 연합뉴스 등 「전광우 금융위원장 은행권 구조조정 시사」 제하 기사 관련 | 20081120 |

| | | |
|-----|--|----------|
| 265 | 문화일보 1면 「한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긴급자금 투입」 제하 기사 관련 | 20081119 |
| 266 | 11. 18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 | 20081118 |
| 267 | 「서울신문'사채7조'서민빚 눈덩이」 제하 기사 관련 | 20081118 |
| 268 | 동아일보 B1면 「16개 시중銀 지급보증 140억달러 신청하기로」 제하 기사 관련 | 20081117 |
| 269 | 매일경제 제1면 「산은·연기금, 은행에 자본투입」 제하 기사 관련 | 20081113 |
| 270 | 경향신문 제21면 「'뒷북대응' 금융위」, 세계일보 제18면 「...뒷북행정 빈축」 제하 기사 관련 | 20081106 |
| 271 | 매일경제 제a03면 「산은 민영화 무기한 보류」 제하 기사 관련 | 20081104 |
| 272 | 매일경제 A01면 「기업보유주식·채권 시가평가 유예」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1103 |
| 273 | 이데일리(인터넷판), 「건설경기 부양에 올인... DTI·LTV 더 푼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081028 |
| 274 | 매일경제 A01면 등 「모든기업환손실 회계처리 안한다」 제하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1027 |
| 275 | 한국경제 A04면 등 「펀드런맨 韓銀이 유동성 지원」 제하 기사 관련 | 20081023 |
| 276 | Financial Times, "Sinking feeling" 기사 (08.10.14일자) 관련 | 20081014 |
| 277 | 한국경제(08.10.13 A1면), 「건설업계 자금 숨통 트인다... 정부, 만기어음 상환연장」 제하의 기사 관련 | 20081013 |
| 278 | 국내 일반은행의 예대율 현황 | 20081013 |
| 279 |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한국의 은행들 과거 실수 망각」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1009 |

| | | |
|-----|---|----------|
| 280 | 국제신문(08.9.29 1~3면), 「금융중심지'부산탈락 說」 등 제하의 기사 관련 | 20080929 |
| 281 | 머니투데이(08.9.26 1면), 「금산분리 단번에 대폭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 20080926 |
| 282 | KBS 「공매도 무방비」 제하 기사 관련 | 20080923 |
| 283 | 연합뉴스 「'펀드런'나면 한은 통한 유동성 지원 추진」 제하 기사 관련 | 20080916 |
| 284 | 서울경제(08.9.9 인터넷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방안 백지화 가능성 높아」 제하의 기사 관련 해명 | 20080909 |
| 285 | 한국경제 제 a38면 「불확실성 키우는 정부」 제하 기사 관련 | 20080909 |
| 286 | 연합뉴스(08.9.4 인터넷판), 문화일보(08.9.4) "금융시장 혼란속 금융위 어디있나" | 20080904 |
| 287 | 2009.9.1(월) The Times 「South Korea heads for black September as problems pile up for the ailing won」 제하 기사 관련 | 20080902 |
| 288 | 아시아경제(08.8.26 인터넷판) "금융위, HSBC 외환銀 인수 추석前 승인 보도해명자료 | 20080826 |
| 289 | "금융위 국제·국내 금융 기능 통합을"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825 |
| 290 | "신·기보 1~2년 뒤 통합 추진"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819 |
| 291 |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도 통폐합」 제하 기사 관련 | 20080813 |
| 292 | 연합뉴스(2008.7.30, 06:01) 「건보 가입자 질병정보 유사시 민영 보험과 공유 추진」 | 20080730 |
| 293 | 금융위의 건보공단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권 관련 시민단체 등의 제기사안에 대한 입장 | 20080730 |

| | | |
|-----|--|----------|
| 294 | "기업은행 2011년 이후 민영화","기업은행 민영화 지연"취지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729 |
| 295 | 서울경제(7.28일자 인터넷판) 「예대율 한도설정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728 |
| 296 | 조선일보(08.7.24일자 a01면) 「HSBC, 외환은행 인수할 듯」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724 |
| 297 | 한국경제 제a25면 「외환銀, 산업은행 품으로?」 제하 기사 관련 보도해명 | 20080723 |
| 298 | 연합뉴스 「기업 은행소유 2011년 허용 검토」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721 |
| 299 | 서울경제 「은행'방카'판매인력 제한 없앤다」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627 |
| 300 | 서울신문 「인터넷 뱅크 설립땐 실명제 폐기?」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624 |
| 301 | 연합뉴스 「내년 6월까지 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완화」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612 |
| 302 | 헤럴드경제 제1면 및 제6면 「우리·기업銀 2012년까지 매각」 제하 기사 등 관련 | 20080604 |
| 303 | 이데일리 「NDF 규제확대..“환율하락 심리 저지 역할”」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604 |
| 304 | 헤럴드경제, 금융'낙하산인사'부활 파문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0528 |
| 305 | 파이낸셜타임즈 아시아판 「HSBC는 외환은행(KEB) 문제 해결을 주목」 제하 인터넷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526 |
| 306 | 국민일보, 『금융지주 자회사 고객정보 멋대로 활용』 ('08.5.23.)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0523 |
| 307 | 이데일리 「제2의 송례문 되지 않으려면」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20080521 |

| | | |
|-----|--|----------|
| 308 | 이데일리 「10년째 내부파벌싸움」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20080521 |
| 309 | 이데일리 「밥그릇싸움에 산업만 멎는다」 제목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 | 20080520 |
| 310 | 서울경제 A3면 「국책은행 민영화, 한미 FTA 복병되나」 제하 기사 관련 | 20080519 |
| 311 | 매일경제 제a05면 「금융위·법무부'포이즌필'도입 합의」 제하 기사 관련 | 20080516 |
| 312 | 매일경제 제a11면 「産銀지주, 3년내 우체국금융 인수 검토」 제하 기사 관련 | 20080513 |
| 313 | 연합인포맥스 「전광우 금융위원장, "다음달 금리인하 얘기 있어"」 제하 기사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509 |
| 314 | 동아일보 「퇴직연금 괴담」 제하 기사(08.5.7 B 2면) 관련 | 20080507 |
| 315 | 아시아경제, "금융위·금감원'氣' 싸움"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0507 |
| 316 | 「펀드 보수·수수료 체계 합리화」 관련 보도 참고 자료 | 20080507 |
| 317 | 금융위원장의 산업은행 민영화관련 발언에 대한 보도해명 | 20080502 |
| 318 | 동아일보 「2012년부터 은행거래 자금 실소유자 확인」 제하 기사 (08.4.25 B 2면) 관련 | 20080425 |
| 319 | 연합뉴스 「금융기관장 이번주 희비 갈린다」 제하의 기사 관련 | 20080422 |
| 320 | 중앙일보 제E1면 「공기업 매각 주간사, 국내 IB(투자은행)에 우선권」 제하 기사 관련 | 20080422 |
| 321 | "금융 공기업 기관장 일괄사표 제출" 보도 관련 | 20080417 |
| 322 | 매일경제 「저축은행에 신탁·외환 업무 허용」 제하의 기사 관련 | 20080407 |
| 323 | 문화일보 「금융사 분담금 축소.....퇴직자 민간취업 제한은 완화」 제하의 기사 관련 | 20080401 |

| | | |
|-----|--|----------|
| 324 | 한국경제 「한국판골드만삭스물거품우려」 제하의 기사 관련 | 20080331 |
| 325 | 서울경제 『기업어음 전자증권제 도입』 (08.3.26) 제하의 기사 관련 | 20080326 |
| 326 | 한국경제 『대우조선해양 매각 기대감에 5일째 상승』 (08.3.25)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0325 |
| 327 | 이데일리,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종창씨 추천』 | 20080324 |
| 328 | 금융감독당국은 지금 패닉? | 20080128 |
| 329 | 이데일리, 『금융감독체계 개편 지켜보는 금감원 명퇴안』 ('08.1.21.)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해명 | 20080122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11. 최근 3년간 각종 명목의 용역내역 일체

□ 금융위 출범('08.3월) 이후 현재('11.7월)까지 용역명 및 용역 내용, 용역비, 용역선정절차 등

(단위:백만원)

| 연도 | 용역명 및 용역내용 | 용역비 | 용역선정 절차 | 추진현황 |
|-----|--|-----|-------------|------|
| 08년 |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연구용역 | 30 | 수의 | 완료 |
| 08년 |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용역 | 49 | 수의 | 완료 |
| 08년 | 온라인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 47 | 수의 | 완료 |
| 08년 | 메신저시스템 도입 | 25 | 수의 | 완료 |
| 08년 |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정기회의 회의장 임대 | 85 | 수의 | 완료 |
| 08년 | 외환시장 발전방향 | 19 | 수의 | 완료 |
| 08년 |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운영실태 연구 | 40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8년 |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 30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8년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 22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8년 | FTA, 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 40 | 수의 | 완료 |
| 08년 | 서브프라임사태이후 금융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연구용역 | 46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8년 | PR 자문 서비스 계약 | 월 8 | 수의 | 완료 |
| 08년 | 홈페이지 연계 홍보 블로그 구축 용역 | 27 | 수의 | 완료 |
| 08년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 효율화 방안 | 37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연도 | 용역명 및 용역내용 | 용역비 | 용역선정 절차 | 추진현황 |
|-----|-----------------------------------|------|-------------|------|
| 08년 | 단기금융시장 제도 개편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 20 | 수의 | 완료 |
| 08년 | 홈페이지 개편 | 30 | 수의 | 완료 |
| 08년 |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 25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9년 | 네트워크 및 PC 유지보수 | 33 | 수의 | 완료 |
| 09년 | 금융위원회 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 | 33 | 수의 | 완료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파티션 및 가구 이전 설치 | 21 | 수의 | 완료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FIU 이전 설치 공사 | 21 | 수의 | 완료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 26 | 수의 | 완료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과별파티션 및 유리벽체칸막이 공사 | 49 | 수의 | 완료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통신망 구축 | 35 | 수의 | 완료 |
| 09년 | 청사 이전 관련 전산실 구축 및 전산장비 이전 설치 | 49 | 수의 | 완료 |
| 09년 | 통신장비 유지보수 | 61 | 일반경쟁 | 완료 |
| 09년 |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 45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9년 | 금융상품판매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 | 30 | 수의 | 완료 |
| 09년 |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 30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9년 | 수도권 광역금융벨트 조성 방안 | 30 | 수의 | 완료 |
| 09년 | 위탁보증 제도 개선방안 연구 | 28.8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9년 | 국내 자본시장-외환시장 연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 20.5 | 수의 | 완료 |

| 연도 | 용역명 및 용역내용 | 용역비 | 용역선정 절차 | 추진현황 |
|-----|---|-----|-------------|------|
| 09년 |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 195 | 일반경쟁 | 완료 |
| 09년 | 전자문서시스템 기록물 이관 구축 | 33 | 수의 | 완료 |
| 09년 | 금융민원시스템 등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 267 | 일반경쟁 | 완료 |
| 09년 | 금융정보분석원 전산실 이전 구축 | 389 | 일반경쟁 | 완료 |
| 09년 | 금융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 | 30 | 수의 | 완료 |
| 09년 | 2009년도 법령 영문화사업 | 55 | 수의 | 완료 |
| 09년 | 금융위원회 영문 홍보 브로슈어 제작 | 20 | 수의 | 완료 |
| 09년 |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 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40 | 수의 | 완료 |
| 09년 |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 35 | 수의 | 완료 |
| 09년 |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 32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9년 |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제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연구 | 35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한국 자본시장의 정책방향 | 20 | 수의 | 완료 |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20 | 수의 | 완료 |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금수취 비은행 금융 회사 발전방안 등에 관한 연구 | 20 | 수의 | 완료 |
| 09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국내 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 30 | 수의 | 완료 |
| 09년 | 금융정보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 20 | 수의 | 완료 |
| 09년 |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사례 연구 | 40 | 수의 | 완료 |
| 09년 |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 | 23 | 수의 | 완료 |

| 연도 | 용역명 및 용역내용 | 용역비 | 용역선정 절차 | 추진현황 |
|-----|--|------|-------------|------|
| 10년 | 장외파생상품 인프라 도입 방안 | 30 | 수의 | 완료 |
| 10년 |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 30 | 수의 | 완료 |
| 10년 |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자본시장 활용방안 | 30 | 수의 | 완료 |
| 10년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 45.5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10년 |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 40 | 수의 | 완료 |
| 10년 |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 시장 조기 경보모형 개선 | 20 | 수의 | 완료 |
| 10년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 30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10년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 연구 | 30 | 수의 | 완료 |
| 10년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 30 | 수의 | 완료 |
| 10년 | 금융전문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 50 | 수의 | 완료 |
| 10년 |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에 대한 연구 | 30 | 수의 | 완료 |
| 10년 |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 25 | 수의 | 완료 |
| 10년 |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 30 | 수의 | 완료 |
| 10년 | 금융기관 해외진출 관련 현황 및 감독체계 검토 | 25 | 수의 | 완료 |
| 10년 |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파생시장 제도 개선 방안 | 30 | 수의 | 완료 |
| 10년 |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 30 | 수의 | 완료 |
| 10년 | 우리나라 비금융전문직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 30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10년 | 자금세탁행위 조기경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자금 세탁 혐의거래지표 연구 | 28 | 경쟁입찰 →수의 | 완료 |

| 연도 | 용역명 및 용역내용 | 용역비 | 용역선정 절차 | 추진현황 |
|-----|---------------------------------------|------|------------|------|
| 10년 | 한국의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방안 - 금융 부분을 중심으로 | 48 | 수의 | 완료 |
| 10년 | 온실가스 의무저감 등에 대한 공시·감독체계 개선안 연구 | 40 | 수의 | 완료 |
| 10년 | 녹색금융 활성화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40 | 수의 | 완료 |
| 10년 | 블로그 개편 및 온라인 홍보 활성화 사업 | 20 | 수의 | 완료 |
| 10년 | 정보보안 개선사업 | 36 | 수의 | 완료 |
| 10년 | FSB 서울총회 행사진행 용역 | 20 | 수의 | 완료 |
| 11년 | 홈페이지 유지보수사업 | 36 | 수의 | 진행 |
| 11년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Based Android OS) 개발용역 | 28.6 | 일반경쟁 | 완료 |
| 11년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244 | 일반경쟁 | 진행 |
| 11년 | 2011년도 네트워크 및 PC 유지보수 | 49 | 수의 | 진행 |
| 11년 | 가계부채대응방향 | 40 | 수의 | 완료 |
| 11년 | 금융감독원장 및 감사 성과평가 개선방안 | 20 | 수의 | 완료 |
| 11년 | 회계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 30 | 수의 | 완료 |
| 11년 | 개인정보보호 사업 | 29.4 | 수의 | 완료 |
| 11년 | 공자위 홈페이지 서버이전 및 유지보수 사업 | 29.6 | 수의 | 진행 |
| 11년 | 금융능력 및 금융이해도 조사 | 40 | 수의 | 진행 |
| 11년 | 저축은행 경영부실 실상 및 원인 규명 | 15 | 수의 | 진행 |
| 11년 | 대형 IB 자기자본 규제에 관한 연구 | 30 | 수의 | 진행 |

김영선 의원(한나라당)

12. 퇴직자 재취업 현황

□ 퇴직자 재취업 현황(금융위 출범이후, 계약직 제외)

| 성명 | 직위(직급) | 퇴직일자 | 재취업 기관(퇴직당시) |
|-----|-----------|----------|--------------|
| 김○○ | 위원장 | 08.3.5 | - |
| 이○○ | 부위원장 | 08.3.13 | LS네트웍스 |
| 이○○ | 금융정보분석원장 | 08.3.28 | 한국거래소 |
| 전○○ | FIU제도운영과장 | 08.4.30 | 은행연합회 |
| 김○○ | 혁신행정과장 | 08.5.15 | 법무법인 |
| 김○○ | 상임위원 | 08.12.9 | 금융감독원 |
| 정○○ | 부이사관 | 09.1.5 | 금융투자협회 |
| 이○○ | 행정사무관 | 09.1.9 | 법무법인 |
| 전○○ | 위원장 | 09.1.20 | - |
| 홍○○ | 서기관 | 09.3.17 | 법무법인 |
| 양○○ | 부이사관 | 09.3.26 | 한국자금중개 |
| 김○○ | 행정주사 | 09.4.30 | 금융투자협회 |
| 나○○ | 서기관 | 09.5.13 | 산업은행 계약직 |
| 한○○ | 서기관 | 09.5.15 | 신영증권 |
| 박○○ | 부이사관 | 09.9.11 | SK C&C |
| 김○○ | 행정사무관 | 09.10.12 | - |
| 김○○ | 금융정보분석원장 | 09.11.17 | 증권금융 |
| 김○○ | 전산서기보 | 10.2.17 | 한국거래소 |
| 나○○ | 행정사무관 | 10.3.2 | 한국정책금융공사 |
| 임○○ | 상임위원 | 10.4.15 | 한국은행(금통위원) |
| 남○○ | 행정사무관 | 10.10.14 | 한국정책금융공사 |
| 임○○ | 서기관 | 10.12.6 | 파인트리 파트너스 |

| 성명 | 직위(직급) | 퇴직일자 | 재취업 기관(퇴직당시) |
|-----|----------|---------|--------------|
| 최○○ | 금융정보분석원장 | 11.2.16 | 금융감독원 |
| 유○○ | 고위공무원 | 11.3.21 | 한나라당 |
| 권○○ | 부위원장 | 11.3.26 | 금융감독원 |
| 이○○ | 상임위원 | 11.3.27 | - |
| 김○○ | 고위공무원 | 11.5.2 | 한국거래소 |
| 안○○ | 행정사무관 | 11.6.2 | - |

김 용 태 의원

김용태 의원(한나라당)

1. 임직원 퇴직, 재취업 및 징계 현황

□ 임직원 퇴직 및 재취업 현황

| 성명 | 직위(직급) | 퇴직일자 | 재취업 기관(퇴직당시) |
|-----|-----------|----------|--------------|
| 김○○ | 위원장 | 08.3.5 | - |
| 이○○ | 부위원장 | 08.3.13 | LS네트웍스 |
| 이○○ | 금융정보분석원장 | 08.3.28 | 한국거래소 |
| 전○○ | FIU제도운영과장 | 08.4.30 | 은행연합회 |
| 김○○ | 혁신행정과장 | 08.5.15 | 법무법인 |
| 김○○ | 상임위원 | 08.12.9 | 금융감독원 |
| 정○○ | 부이사관 | 09.1.5 | 금융투자협회 |
| 이○○ | 행정사무관 | 09.1.9 | 법무법인 |
| 전○○ | 위원장 | 09.1.20 | - |
| 홍○○ | 서기관 | 09.3.17 | 법무법인 |
| 양○○ | 부이사관 | 09.3.26 | 한국자금중개 |
| 김○○ | 행정주사 | 09.4.30 | 금융투자협회 |
| 나○○ | 서기관 | 09.5.13 | 산업은행 계약직 |
| 한○○ | 서기관 | 09.5.15 | 신영증권 |
| 박○○ | 부이사관 | 09.9.11 | SK C&C |
| 김○○ | 행정사무관 | 09.10.12 | - |
| 김○○ | 금융정보분석원장 | 09.11.17 | 증권금융 |
| 김○○ | 전산서기보 | 10.2.17 | 한국거래소 |
| 나○○ | 행정사무관 | 10.3.2 | 한국정책금융공사 |
| 임○○ | 상임위원 | 10.4.15 | 한국은행(금통위원) |
| 남○○ | 행정사무관 | 10.10.14 | 한국정책금융공사 |

| 성명 | 직위(직급) | 퇴직일자 | 재취업 기관(퇴직당시) |
|-----|----------|---------|--------------|
| 임○○ | 서기관 | 10.12.6 | 파인트리 파트너스 |
| 최○○ | 금융정보분석원장 | 11.2.16 | 금융감독원 |
| 유○○ | 고위공무원 | 11.3.21 | 한나라당 |
| 권○○ | 부위원장 | 11.3.26 | 금융감독원 |
| 이○○ | 상임위원 | 11.3.27 | - |
| 김○○ | 고위공무원 | 11.5.2 | 한국거래소 |
| 안○○ | 행정사무관 | 11.6.2 | - |

□ 징계 현황

| 징계 현황 | 처분사유 | 처분당시직급 |
|-------|--------|--------|
| 견책 | 음주운전 | 서기관 |
| 견책 | 음주운전 | 행정사무관 |
| 감봉2월 | 청렴의무위반 | 서기관 |
| 감봉2월 | 청렴의무위반 | 서기관 |

김용태 의원(한나라당)

2. 최근 5년간 금융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서 사본

□ (첨부) 2007년 이후 경영평가 결과 공문사본

- 경영예산심의회는 2008년부터 시행됨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융위원회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대외경제총괄과장)

(경유)

제목 08년 경영평가 지침 및 07년 경영실적 평가 결과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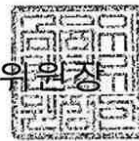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에서确定的한 08년 국책 은행 경영평가지침과 07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은행명 | 점수 | 등급 | 지급률 | 비고 |
|---------|------|-----|------|----|
| 한국수출입은행 | 96.8 | S등급 | 100% | |

붙임 : 08년 국책은행 경영평가지침 1부.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이기현 과장 전결 05/30 유재수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238 (2008.05.30.) 접수 @D-@N ()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 <http://www.fsc.go.kr>

전화 2156-9755 /전송 2156-9749 / lee3759@fsc.go.kr / 비공개(5)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융위원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08년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 및 07년 경영실적 결과 통보

1.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확정된 08년 국책 은행 경영 평가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성과중심의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동 심의회에서 평가한 07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은행명 | 점수 | 등급 | 지급률 | 비고 |
|------|------|-----|------|----|
| 기업은행 | 97.0 | S등급 | 100% | |
| 산업은행 | 96.7 | S등급 | 100% | |

붙임 08년 국책은행 경영평가지침 1부. 끝.

금융위원회 위원장



수신자 한국산업은행총재, 중소기업은행장

★행정사무관 이기현 과장 전결 05/30
유재수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237 (2008.05.30.) 접수 @D-@N ()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번지 / <http://www.fsc.go.kr>

전화 2156-9755 /전송 2156-9749 / lee3759@fsc.go.kr / 비공개(5)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대외경제총괄과장)
(경유)

제목 한국수출입은행 09 경영평가 지침 및 '08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확정된 한국수출입은행의 '09년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며

2. 아울러 동 심의회에서 평가한 '0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은행명 | 점수 | 등급 | 지급률 | 비고 |
|---------|------|----|------|----|
| 한국수출입은행 | 97.8 | S | 100% | |

*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도 동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김태훈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01
장 우상현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93

접수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 <http://www.fsc.go.kr>

전화 02-2150-9755 전송 02-2150-9749

/ taehoon@fsc.go.kr

/ 비공개(5)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한국산업은행
(경유)

제목 '09 경영평가 지침 송부 및 '08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확정된 '09년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성과중심의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심의회에서 평가한 '0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은행명 | 점수 | 등급 | 지급률 | 비고 |
|--------|------|----|------|----|
| 한국산업은행 | 96.3 | S | 100% | |

*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도 동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김태훈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01
장 우상현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94

접수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 <http://www.fsc.go.kr>

전화 02-2150-9755

전송 02-2150-9749

/ taehoon@fsc.go.kr

/ 비공개(5)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융위원회

수신자 기업은행
(경유)

제목 '09 경영평가 지침 송부 및 '08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국책은행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확정된 '09년 국책은행 경영평가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성과중심의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동 심의회에서 평가한 '0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은행명 | 점수 | 등급 | 비고 |
|------|------|----|----|
| 기업은행 | 96.2 | S | |

*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도 동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

금융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관 김태훈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01
장 우상현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95

접수

우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 <http://www.fsc.go.kr>

전화 02-2150-9755 전송 02-2150-9749

/ taehoon@fsc.go.kr

/ 비공개(5)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한국수출입은행
(경유)

제목 '09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평가한 귀 기관의 '0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명 | 점수 | 등 급 | 지급률 | 비 고 |
|---------|-------|-----|-----|-----|
| 한국수출입은행 | 93.68 | A | 90% | |

*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도 동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이범수 행정사무관 송용민 산업금융과장 전결 05/27
김학수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97 접수
우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위원회 산업 / <http://www.fsc.go.kr>
금융과
전화 02-2156-9756 전송 02-2156-9749 / picaresqu@korea.kr / 비공개(5)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융위원회

수신자 중소기업은행
(경유)

제목 '09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평가한 귀 기관의 '0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명 | 점수 | 등급 | 지급률 | 비고 |
|--------|-------|----|-----|----|
| 중소기업은행 | 93.25 | A | 90% | |

*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도 동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이범수 행정사무관 송용민 산업금융과장 전결 05/27
김학수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98 접수
우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위원회 산업 / <http://www.fsc.go.kr>
금융과
전화 02-2156-9756 전송 02-2156-9749 / picaresqu@korea.kr / 비공개(5)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한국산업은행
(경유)

제목 '09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평가한 귀 기관의 '09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명 | 점수 | 등급 | 지급률 | 비 고 |
|--------|-------|----|-----|-----|
| 한국산업은행 | 92.42 | A | 90% | |

*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해서도 동 경영평가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이범수 행정사무관 송용민 산업금융과장 전결 05/27
김학수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94 접수
우 150-7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번지 금융위원회 산업 / <http://www.fsc.go.kr>
금융과
전화 02-2156-9756 전송 02-2156-9749 / picaresqu@korea.kr / 비공개(5)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금융위원회



수신자 수출입은행장
(경유)

제목 '10년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평가한 귀 기관의 '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명 | 등 급 | 지급률 | 비 고 |
|-------|-----|------|-----|
| 수출입은행 | S | 100% | |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김준환 행정사무관 김경관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20
장 윤창호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38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빌딩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56 전송 02-2156-9749 / casalscello@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금융위원회



수신자 중소기업은행장
(경유)

제목 '10년도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평가한 귀 기관의 '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명 | 등 급 | 지급률 | 비 고 |
|--------|-----|---------------------|-----|
| 중소기업은행 | A | 100% ^{주1)} | |

주1) 기획재정부 주관 「2010년도 자율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획득하여 성과급지급률 1등급 가산(90%→100%).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김준환 행정사무관 김경관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20
장 윤창호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34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빌딩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56 전송 02-2156-9749 / casalscello@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금융위원회



수신자 한국산업은행장
(경유)

제목 '10년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평가한 귀 기관의 '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명 | 등 급 | 지급률 | 비 고 |
|--------|-----|-----|-----|
| 한국산업은행 | A | 90% | |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김준환 행정사무관 김경관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20
장 윤창호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35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빌딩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56 전송 02-2156-9749 / casalscello@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금융위원회



수신자 산은금융지주(주)회장
(경유)

제목 '10년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평가한 귀 기관의 '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명 | 등 급 | 지급률 | 비 고 |
|-----------|-----|-----|-----|
| 산은금융지주(주) | A | 90% | |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김준환 행정사무관 김경관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20
장 윤창호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36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빌딩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56 전송 02-2156-9749 / casalscello@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미래로! 세계로! 함께하는 선진금융

금융위원회



수신자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경유)

제목 '10년 경영평가 결과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심의회에서 평가한 귀 기관의 '1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관명 | 등 급 | 지급률 | 비 고 |
|----------|-----|-----|-----|
| 한국정책금융공사 | A | 90% | |

끝.

금융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김준환 행정사무관 김경관 산업금융과 과 전결 06/20
장 윤창호

협조자

시행 산업금융과-737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빌딩 금융위원회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756 전송 02-2156-9749 / casalscello@korea.kr / 비공개(5)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김용태 의원(한나라당)

3. 외부기관에 위탁한 각종 연구용역 리스트

□ 2008년~2010년 연구용역 리스트

<2008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 수행기관 |
|----|---------------------------------------|---------------|--------------------------|-----------------|
| 1 | 여신전문금융산업의 발전방향 | 30 | 2008년 7월 ~ 2008년 10월 | 한국금융연구원 |
| 2 | 파생상품 관리.감독체계 선진화방안 | 30 | 2008년 7월 ~ 2008년 10월 | 한국금융연구원 |
| 3 | 미국 FINCEN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운영실태 연구 | 40 | 2008년 7월 ~ 2008년 11월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4 | 단기금융시장 제도개편에 따른 영향분석 | 20 | 2008년 7월 ~ 2008년 8월 | 한국금융연구원 |
| 5 | 외환시장 발전방향 | 19 | 2008년 7월 ~ 2008년 8월 | 대외경제정책연 구원 |
| 6 | 금융시장 조기경보모형 개선 | 46 | 2008년 8월 ~ 2008년 11월 | (사)국제금융센터 |
| 7 |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한 감독 검사효율화 방안 | 37 | 2008년 8월 ~ 2008년 12월 | 언스트앤영어드 바이저리 |
| 8 | FTA,DDA 등 금융서비스분야 국제협상 법률적 검토 연구용역 | 40 | 2008년 8월 ~ 2008년 12월 | 법무법인태평양 |
| 9 | 성장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시장 개설 필요성 및 기본방향 | 22 | 2008년 9월 ~ 2008년 11월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 10 | 비명시적규제 개혁 외부평가 | 25 | 2008년 11월 ~ 2008년 12월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 11 | 금융중심지 선정에 관한 금융 전문가 의견조사 | 19 | 2008년 12월 ~ 2008년 12월 | KDI경제정보센터 |

<2009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 수행기관 |
|----|---|---------------|--------------------------|----------------|
| 1 | FATF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 방안 연구 | 45 | 2009년 3월 ~ 2009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
| 2 | 자본시장 등 금융부문별 노동력 특성 분석 및 수급 전망 | 30 | 2009년 4월 ~ 2009년 8월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3 | 금융상품 판매제도 도입에 따른 불완전판매 완화 방안 | 30 | 2009년 4월 ~ 2009년 8월 | 자본시장연구원 |
| 4 | 위탁보증제도 개선방안 | 28.8 | 2009년 5월 ~ 2009년 11월 | 한국금융연구원 |
| 5 | 광역 금융클러스터 조성 방안 | 30 | 2009년 5월 ~ 2009년 11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6 |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간 연 계성 증가의 파급효과 분석 | 20.5 | 2009년 6월 ~ 2009년 8월 | 자본시장연구원 |
| 7 | 금융위기 이후(post-crisis) 대비 금융 감독체제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 40 | 2009년 6월 ~ 2009년 8월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 8 |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분석 및 시사점분석 | 35 | 2009년 7월 ~ 2009년 11월 | 한국금융연구원 |
| 9 |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 국제화 방안 연구 | 35 | 2009년 8월 ~ 2009년 12월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 10 | 금융투자산업의 현황 및 선진화 방안에 대한 연구 | 32 | 2009년 8월 ~ 2009년 12월 | 자본시장연구원 |
| 11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자 본시장의 정책방향 | 20 | 2009년 9월 ~ 2009년 11월 | 자본시장연구원 |
| 12 | 예금수취 비은행금융회사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연구 | 20 | 2009년 9월 ~ 2009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
| 13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험산업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20 | 2009년 9월 ~ 2009년 12월 | 보험연구원 |
| 14 | 주요국에서의 금융변혁기에 대응한 금융정책 사례연구 | 40 | 2009년 10월 ~ 2009년 12월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15 | 금융정보 생산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방안 연구 | 20 | 2009년 10월 ~ 2009년 12월 | 한국금융학회 |
| 16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은행의 비전 및 정책과제 | 30 | 2009년 10월 ~ 2009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
| 17 |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 및 정책적 과제 | 23 | 2009년 11월 ~ 2009년 12월 | 한국채권연구원 |
| 18 | 위기 이후의 금융중심지 조성 발전방향 연구 | 40 | 2009년 11월 ~ 2010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

<2010년>

| 연번 | 과제명 | 계약금액 (백만원) | 계약기간 | 수행기관 |
|----|--|---------------|--------------------------|------------------|
| 1 | 지역금융활성화 방안 연구 | 30 | 2010년 3월 ~ 2010년 7월 | 한국개발연구원 |
| 2 | 우리나라 특정 전문직 및 비금융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방안 | 30 | 2010년 4월 ~ 2010년 11월 | 한국금융연구원 |
| 3 |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연구 | 45.5 | 2010년 4월 ~ 2010년 7월 | 한국개발연구원 |
| 4 | 장외과생상품 인프라 도입방안 | 30 | 2010년 4월 ~ 2010년 7월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5 |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기능 활성화 방안 | 40 | 2010년 4월 ~ 2010년 8월 | 한국개발연구원 |
| 6 | 저출산고령화대비 자본시장 활용 방안 | 30 | 2010년 4월 ~ 2010년 9월 | 자본시장연구원 |
| 7 | 국내외 조기경보 활동 동향 점검 및 금융시장 조기경보모형 개선 | 20 | 2010년 5월 ~ 2010년 10월 | 한국금융연구원 |
| 8 | 금융회사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검토 | 30 | 2010년 6월 ~ 2010년 7월 | 한국금융연구원 |
| 9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방안 검토 | 30 | 2010년 6월 ~ 2010년 7월 | 법무법인 율촌 |
| 10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의 내용 및 시사점 검토 | 30 | 2010년 8월 ~ 2010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
| 11 | 국제금융체제 개편 논의와 평가 | 30 | 2010년 9월 ~ 2010년 12월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 12 | 효과적인 외환건전성 규제에 관한 연구 | 25 | 2010년 9월 ~ 2010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
| 13 | 신용정보 유통체계 개선방안 | 30 | 2010년 10월 ~ 2010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
| 14 | 기업경영 안정 등을 위한 상품과생시장 제도개선 방안 | 30 | 2010년 10월 ~ 2010년 12월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15 | 한국 국가경쟁력 분석 및 제고 방안 -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 47.5 | 2010년 10월 ~ 2010년 12월 | 한국과학기술원 |
| 16 | 회계감독제도 개편 등에 대응한 감리조치기준 개선안 연구 | 30 | 2010년 10월 ~ 2010년 12월 | 한국법제연구원 |
| 17 |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대한 효과적 사후감독 방안 | 25 | 2010년 10월 ~ 2010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
| 18 | 금융회사 자금세탁 판단지표(Rule)의 유용성 연구 | 27.7 | 2010년 10월 ~ 2010년 12월 | (주)데이타메이 션컨설팅 |
| 19 | 미국 금융개혁과 보험규제에 대한 시사점 연구 | 3 | 2010년 11월 ~ 2010년 12월 | 보험연구원 |
| 20 | 미국 금융규제개혁법 중 자본시장 관련 규제내용 및 시사점 | 10 | 2010년 11월 ~ 2010년 12월 | 자본시장연구원 |

| | | | | |
|----|----------------------------------|----|-------------------------|---------------|
| 21 | 녹색금융 활성화 제고방안 연구 | 40 | 2010년 10월~ 2010년 12월 | 한국금융연구원 |
| 22 | 온실가스 의무저감 등에 따른 공시감독체계 개선안 연구 | 40 | 2010년 10월~ 2010년 12월 | 자본시장연구원 |
| 23 | 녹색금융 특화 MBA 심사기준 연구 | 9 | 2010년 1월~ 2010년 3월 | 한국경영 교육인증원 |
| 24 | 2010년 금융인력 현황조사 및 수급전망 | 50 | 2010년 9월~ 2010년 12월 |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

김용태 의원(한나라당)

4. 장애인, 여성, 보훈대상자 고용 현황

□ 장애인, 여성 보훈대상자 고용 현황

| 비고 | 장애인 현황 | 여성 현황 | 보훈대상자 현황 |
|-----|--------|-------|----------|
| 고용수 | 8명 | 55명 | 4명 |
| 비율 | 3.4% | 20.1% | 1.5% |

※ 장애인 고용 비율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정원(233명)대비 비율이며, 여성 및 보훈대상자는 총 현원(273명)대비 비율

김용태 의원(한나라당)

5. 업무보고 자료

☐ 2011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별첨하여 제출

| |
|---------------|
| 제298회 국회(임시회) |
|---------------|

| |
|-------|
| 정무위원회 |
|-------|

업 무 현 황

2011. 3. 9.



금 융 위 원 회

I. 일반 현황

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III.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대응
2. 실물경제 지원 강화
3.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4. 서민금융 내실화
5. 금융시스템 선진화
6. 글로벌 경쟁력 확충

[붙임1]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붙임2] 금융위원회 간부현황

I.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재정경제부 (금융, 15과) | | 금융감독위원회 (12과) | | 금융위원회 (21과) |
|---|---|---------------|---|--|
| 금융정책국(1국 1심의관 7과), 공적자금관리위원회(1국 2과), 금융정보분석원(1원 6과) | + | 1관 1실 2국 12과 | ⇒ | 본부(1관 2국 1대변인 1심의관 15과) 소속기관(금융정보분석원 1원 6과) |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5과 3팀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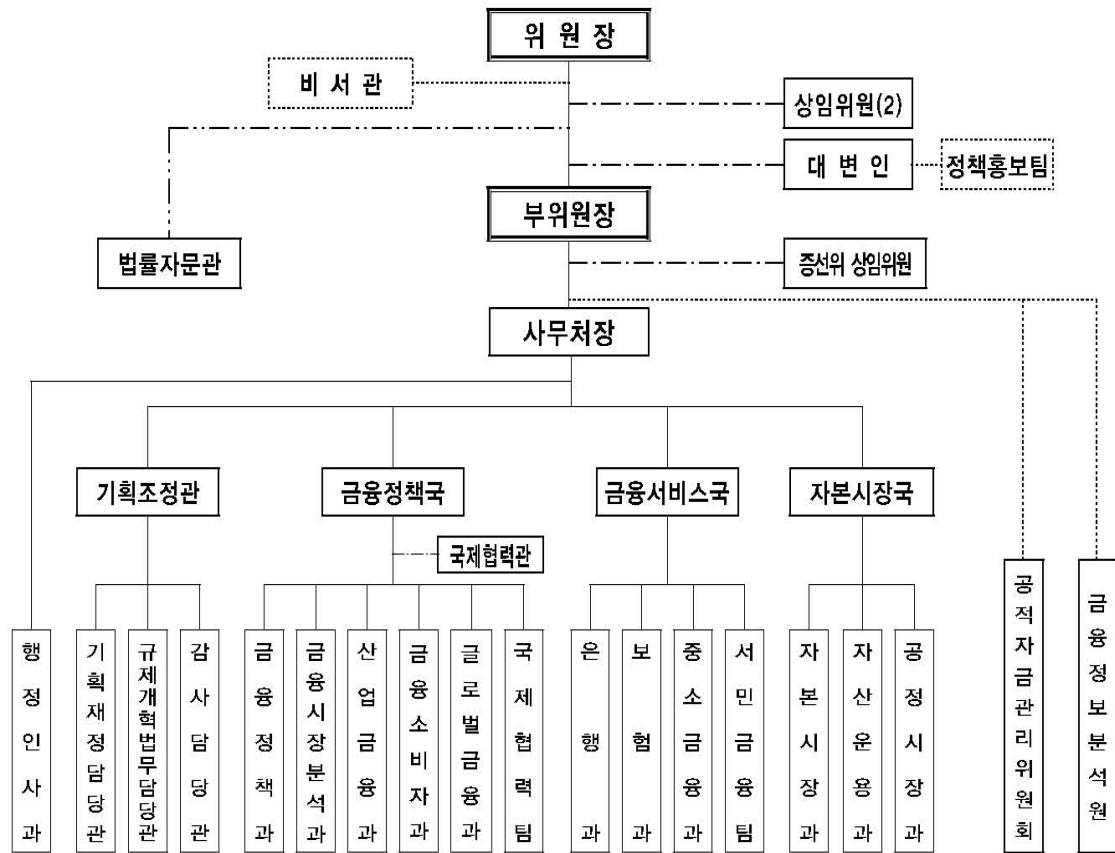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 실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31명('11.3월 현재)

| | 정무직 |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 기능직 | 계 |
|---------|-----|-----|-----|-----|-----|-----|
| 합 계 | 2 | 208 | 4 | 7 | 10 | 231 |
| 본부 | 2 | 151 | 4 | - | 10 | 167 |
| 금융정보분석원 | - | 45 | - | 7 | - | 52 |
| 공자위 사무국 | - | 12 | - | - | - | 12 |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억원, 세출예산 1조 5,556억원('11년도)

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국내·외 금융시장은 연초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가. 국제 금융시장 동향

□ 주요국 증시는 금년 들어 상승세를 보였으나, 리비아 사태 이후 유가상승*, 중동지역 불안확산 가능성 등으로 하락세

* (2.14 → 3.7, \$/B): (Dubai) 97.23 → **111.18** (WTI) 84.81 → **105.44** (Brent) 103.08 → **115.04**

| | '09말 | '10말 | '11.1말 | 2말 | 3.7 | 전년말비 | 리비아 사태 (2.14) 이후 |
|---------|--------|--------|--------|--------|--------|-------|------------------|
| 다우(美) | 10,428 | 11,577 | 11,891 | 12,226 | 12,090 | +4.4% | △ 1.5% |
| FTSE(英) | 5,413 | 5,899 | 5,863 | 5,994 | 5,973 | +1.3% | △ 1.4% |
| 독 일 | 5,957 | 6,914 | 7,077 | 7,272 | 7,162 | +3.6% | △ 3.2% |

□ 美 국채금리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동지역 CDS 금리는 정정불안으로 큰 폭으로 상승중

| | '09말 | '10말 | '11.1말 | 2말 | 3.7 | 전년말비 | 리비아 사태 (2.14) 이후 |
|-------------|------|------|--------|------|------|--------|------------------|
| LIBOR(3m) | 0.25 | 0.30 | 0.30 | 0.31 | 0.31 | +1bp | - |
| UST(2y) | 1.14 | 0.59 | 0.56 | 0.68 | 0.70 | +11bp | △ 14bp |
| UST(10y) | 3.84 | 3.29 | 3.37 | 3.43 | 3.51 | +22bp | △ 11bp |
| 사우디 CDS(bp) | 90 | 75 | 119 | 137 | 126 | +51bp | +8bp |
| 이집트 CDS(bp) | 255 | 238 | 422 | 370 | 371 | +133bp | +42bp |
| 바레인 CDS(bp) | 210 | 186 | 215 | 306 | 295 | +109bp | +53bp |

□ 달러화는 유가상승에 따른 美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요국 통화대비 약세

| | '09말 | '10말 | '11.1말 | 2말 | 3.7 | 전년말비 | 리비아 사태 (2.14) 이후 |
|--------|--------|--------|--------|--------|--------|--------|------------------|
| 달러/유로 | 1.4326 | 1.3387 | 1.3694 | 1.3806 | 1.3968 | +4.3% | +3.6% |
| 위안/달러 | 6.8271 | 6.5897 | 6.5950 | 6.5716 | 6.5565 | △ 0.5% | △ 0.6% |
| 달러 인덱스 | 77.86 | 79.03 | 77.74 | 76.9 | 76.53 | △ 3.2% | △ 2.7% |

나. 국내 금융시장 동향

- (외환시장)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해온 원/달러 환율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
- 2월 들어 중동지역 불안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으로 다소 상승하였으나, 글로벌 달러 약세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

| | '09말 | '10말 | '11.1말 | 2말 | 3.7 | 전년말비 | 리비아 사태 (2.14) 이후 |
|--------|---------|---------|---------|---------|---------|-------|---------------------|
| 원/달러 | 1,164.5 | 1,134.8 | 1,121.5 | 1,128.7 | 1,119.2 | △1.4% | △0.3% |
| 원/100엔 | 1,252.0 | 1,398.2 | 1,367.0 | 1,380.2 | 1,360.9 | △2.7% | +1.0% |

- (채권시장) 금리는 1월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상승하다, 중동 불안으로 다소 하락한 후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재상승 기조

-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잔고는 전년말 수준을 유지

* 보유잔고(조원): ('09말) 56.5 → ('10말) 74.2 → ('11.1) 73.9 → ('11.2) 74.2

| % | '09말 | '10말 | '11.1말 | 2말 | 3.7 | 전년말비 | 리비아 사태 (2.14) 이후 |
|----------|------|------|--------|------|------|-------|---------------------|
| 국고채(3y) | 4.41 | 3.38 | 3.96 | 3.84 | 3.92 | +54bp | △5bp |
| 회사채(AA-) | 5.53 | 4.19 | 4.68 | 4.58 | 4.66 | +47bp | △2bp |

- (주식시장) 1월말 이후 차익실현, 글로벌 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따른 외국인 매도(2월중 3.5조원 순매도) 등으로 이어지며 하락

- 중동지역 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등 대외 위험요인도 하락 압력으로 작용

| | '09말 | '10말 | '11.1말 | 2말 | 3.7 | 전년말비 | 리비아 사태 (2.14) 이후 |
|--------|-------|-------|--------|-------|-------|--------|---------------------|
| KOSPI | 1,682 | 2,051 | 2,069 | 1,939 | 1,980 | △3.45% | △0.70% |
| KOSDAQ | 513 | 510 | 521 | 504 | 519 | +1.58% | △0.30% |

Ⅲ.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

1 시장불안요인에 대한 대응

- ◇ 가계부채 및 저축은행 문제가 경제·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 ◇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금융 체질개선 유도

가.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대출 비중 및 일시상환·변동금리 중심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관리
 - * 금융권 가계대출은 746조원('10년말)이며, 외환위기 이후 풍부한 유동성, 집값상승 기대 등으로 빠르게 증가 ('00~'10년중 연평균 가계대출 13.1%↑, 경상GDP 6.8%↑)
 - * 가계부채/가처분소득('09년, %) : (韓)143, (美)126, (日)112, (OECD평균)123
 -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비중('08년말, %) : (韓)93, (美)26, (英)72, (日)20
- LTV·DTI·예대율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향후 도입이 예정된 유동성규제 등도 활용
 - * 2014년까지 은행예대율을 100% 이내로 관리('10.8월 감독규정 개정)
 - ** Basel Ⅲ 주요내용 : ①자본비율규제 강화(기본자본비율 4% → 6%), ②유동성규제 도입(장단기 유동성비율 ≥ 100%), ③레버리지규제 신설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 구조개선 노력 강화
 - * (예) 변동-고정금리 혼합대출상품 활성화, 과도한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
-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종합 대응방안의 신속한 마련
 - * 현재 관계기관 및 학계·시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TF 운영중
 - * (TF논의과제) ①유동성조절 등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 관리방안, ②가계 채무 상환능력 제고방안, ③가계대출 구조개선방안, ④취약계층 금융지원방안 등

나. 저축은행 구조조정 및 건전경영 유도

□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 금년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은 자체 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어려울 경우 매각 등 구조조정을 신속 추진
- 수시 검사 및 전담검사역 등을 통해 부실우려 저축은행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통한 정상화 우선 유도
- 구조조정 재원확보를 위해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상(0.35% → 0.40%), 예금보험기금에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계정 설치 추진

□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건전한 저축은행 지원 및 예금자 불편 완화

- 건전한 저축은행이 유동성 부족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한 유동성 지원* 확대
- * 정책금융공사 및 은행의 저축은행중앙회에 대한 지원(2조원), 증권금융의 환매조건부 채권거래(RP) 등을 통한 저축은행 지원(1조원)
- 가지급금 한도 확대(1,500→2,000만원) 및 접수창구 다양화 등을 통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 불편 완화

□ 저축은행 재부실화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 및 과징금 부과, 감사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 우량저축은행의 여신한도 우대조치 폐지, 고위험 자산 운용 제한 등을 통해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 경영공시 확대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검찰·금감원·예보의 업무공조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부실책임 추궁

다.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대응체계 정비

- ☐ 유럽 재정위기, 중동지역 불안,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 및 파급효과 모니터링 강화
- ☐ 既시행중인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의 이행현황 및 효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방안 마련

* ('09.11월 제1차, '10.6월 제2차) 금융회사에 대한 외화안전자산 보유의무 부과,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 관리 등

- ☐ 최근 크게 증가한 자문형 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대한 감독 강화

* 증가추이(억원): '09.3월) 284 → '10.3월) 6,519 → '11.1월) 72,640

라.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 정착

- ☐ 대기업·중소기업에 대한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지속 추진
- * 대기업그룹 대상 재무구조평가(4월), 개별대기업 대상 신용위험평가(4~6월), 중소기업 대상 분기별 평가 및 정기평가(7~10월)를 통한 워크아웃 등 추진

-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추진 등 제도적 뒷받침 강화
 - 시장 자율적 구조조정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 강화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실효되어 정무위에서 논의 중

-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측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정비 추진

* 구조조정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기업측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

2 실물경제 지원 강화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
-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저출산·고령화에 철저하게 대비

가. 중소기업 및 新성장동력 지원 확대

- 중소기업에 대해 위기 이전보다 확대된 **92.3조원** 수준의 자금을 공급
 - * 금융공기업 중기자금 지원 : ('08년) 80.6조원 → ('11년) **92.3조원**
-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미래성장동력분야(수출·녹색 등) 보증공급계획(조원) : ('10)22.0 → ('11)24.2
 - * IBK의 부품소재 및 기술개발 자금공급계획(조원) : ('10)2.2 → ('11)2.4
- **Fast-Track 프로그램**('08.10월 도입)도 금년말까지 연장하되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
-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금융공기업을 통해 녹색·신성장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총 **21.9조원**의 설비투자자금을 공급
 -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간 원활한 공조를 통해 원전·고속철 등 대규모 해외프로젝트 사업 지원
 - 녹색금융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마련
 - * 녹색산업 공급자뿐만 아니라 녹색 수요자(녹색설비 수요기업 등)에 대해서도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보증

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자금지원 활성화

□ 코스닥 및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 新성장동력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을 완화하여 상장을 촉진하되,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은 강화
-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증권사가 자금조달·기업공개 등을 지원하는 지정자문사 제도 도입 등 프리보드 시장 활성화

□ 회사채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

- 비상장·중소기업 등이 채권시장에서 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적격기관투자자 제도를 도입
- 상장기업이 발행할 수 있는 회사채 유형을 다양화하고, 장기·고수익 채권의 발행 및 투자를 활성화

다.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력 강화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고용창출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를 '10년 대비 4.9조원 확대 [계획기준, ('10년)15.4조원 → ('11년)20.3조원]
- 보증 조건도 우대(보증한도 우대, 보증료를 차감)하여 지원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금융상품 활성화

- 사적 연금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인의 노후소득 창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유도

* 예시 : [개인연금보험] 무배당 상품 개발 금지, 사망보험금 설정의무 부과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및 개인퇴직계좌의 주식형펀드 등에 대한 투자 제한

- 다자녀가정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 대출 한도를 증액(1억원 → 1억5천만원)하여 출산 유인 제고

3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체제 재정비하고, 금융시장에서의 공정한 시장규율을 확립

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업종에 상관없이 유사한 금융상품에 대한 공통 판매행위 규제* 적용,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강도높은 제재
 - * 설명의무,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구속성계약 체결금지, 광고규제 등
-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로 인해 소비자 피해구제가 지연되지 않도록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강구
-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 금융교육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 「금융소비자보호법(가칭)」 제정 추진 (금년중 국회 제출)

☐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기능 강화

- 개정 보험업법('11.1.24일 시행)에 새롭게 도입된 소비자 보호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 * 보험계약 중요사항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허위과장광고 규제 등
- 보험요율체계 합리화, 보험금 누수 방지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10.12.29)의 차질없는 추진
 - * 장기 무사고자의 보험료 할인 확대(60 → 70%), 차량수리시 자기부담금을 비례공제방식으로 전환(현행: 정액형), 보험사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나. 공정한 시장규율 정립 및 신뢰받는 금융감독체계 구축

☐ 차명거래를 이용한 불법금융거래 방지노력 강화

- 해외사례 및 국내의 현실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차명거래를 이용한 불법금융거래의 효율적 근절방안 마련

-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이행 감독과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금융거래시 고객의 실명,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차명거래 의심 등 자금세탁 우려시 거래당사자 여부와 거래목적을 확인

☐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 주식연계증권(ELS)을 이용한 시세조종 처벌요건 정비 및 미공개 시장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제재 강화

- 분식회계로 인한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회계 감독제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개편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도 도입, 다수이해관계 비상장기업 회계감독 강화 등

- 공시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시내용 사전심사 및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

* 투자위험이 높은 사업의 공시심사기간 연장, 수시공시 이행여부의 사후심사 강화 등

☐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 옵션 만기일 주가급락 사건과 관련하여 도이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 정지 등 조치 ('11.2.23일)

4

서민금융 내실화

- ◇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금융인프라를 개선하여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
- ◇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신용회복 지원제도를 보강
- ⇒ “서민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

가.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

□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에게 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 미소금융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사무실로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중

- 서민금융회사를 통해 공급 중인 “햇살론”이 서민전용 대출상품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출기준 등을 지속 보완
-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

□ 금융인프라의 개선 등을 통한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

-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서민금융회사들이 서민들에 대한 금융공급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의 안내 및 상담기능을 확충

나.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 ☐ 고금리 원인 해소, 금리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 ☐ 중소기업 대상 신용·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 추가 완화(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계획('11.1.31 발표))
 - 낮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적용 중소기업 가맹점 범위 단계적 확대
 - * 중소기업 가맹점 범위 : 연매출 9,600만원 → 1.2억원('11.5월) → 1.5억원('12.1월)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11.3월부터)
 - * (중소기업 가맹점) 약2% → 1% 이하, (일반가맹점) 2.0~2.5% → 1.5~1.7%

다. 신용회복 지원제도 보강 및 서민 금융피해 방지

- ☐ 신용회복 지원자의 자활의지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체 채무의 상환기간 및 상환유예기간을 조정
- ☐ 신용회복기금에서 운용 중인 취업지원펀드(200억원) 등을 활용하여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취업지원 강화
- ☐ 부당한 대출관행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
 - 꺾기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예방을 강화
 - 대부시장에서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광고심의제 도입 추진
 - 불법사채 등에 의한 금융피해 사례 및 예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5 금융시스템 선진화

◇ 자본시장법 개정, 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 등 금융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제도를 정비하고, 우리금융 민영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

가. 금융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도모
 - 자본시장법 시행('09.2월)을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마련
 - 그간 금융위기의 여파 속에서 제정 당시 기대했던 선진 투자은행의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는 미흡한 상황
- ⇒ 금융투자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에 대한 전반적 개정 추진(금년중 국회 제출)
- 경영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회사 의사결정체계의 투명성 제고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등 그동안 도입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 개선
 -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경영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금융회사 의사결정체계 등의 투명성·객관성 강화
- ⇒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추진(금년중 국회 제출)

□ 파생상품시장의 건전한 발전 도모

-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여 보다 건전하면서 효율적인 자본시장 조성('11.1.11일 발표)

* 사후위탁증거금 개선, 일중 주문한도 제한, 소수투자자의 단기간 대규모 거래시 기관투자자 등에게 반대매매 기회 보장 등

- 파생상품 관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영업현장 불시점검, 투자 정보제공 강화 등 판매관행 개선 노력 강화

나. 민영화 추진 등을 통한 금융산업 활력 제고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조속히 대안을 마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 환경과 민영화 여건을 재점검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

* 민영화 방안 발표('10.7.30) 이후 잠재투자자 이탈로 유효경쟁 여건조성이 어려워 '10.12.17일 공자위에서 매각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대안 검토중

□ 산은지주 민영화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

- 산은지주의 매각가치 제고 등을 위해 재무·수익구조 개선 등 체질개선 추진중

* 산업은행 총부채 중 예수금 비중 : 13%('09년말) → 19.5%('10년말)

* 산업은행 순이자마진(NIM) : 0.7%('09년말) → 1.5%('10년말)

6 글로벌 경쟁력 확충

- ◇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을 계기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 강화

가. G20 정상회의 등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G20 금융규제개혁 작업이 국제적 공조하에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기준 제정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특히, 지난 G20 서울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새로운 금융 규제개혁 의제* 논의에도 우리 입장을 반영
 - * 거시건전성 정책체계,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개혁, 금융소비자보호 등
- 「G20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T/F」(11.1월 구성)를 통해 합의사항에 대한 입법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국제 논의동향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 중 실행계획 마련
 -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항*은 금년 중 관련 법규 개정
 - * (예시) Basel III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준비, 장외파생상품시장 중앙 청산소 설립근거 마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 금융산업의 내실있는 안정성장을 유도
 -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모색
 - * (예시) 은행의 경우 해외진출 규제 완화(사전협의 → 사후보고)에 따른 틈새시장 개척 등 적극 지원
 -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등에 맞추어 회계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중·장기 회계산업 발전방안 마련

- 자금세탁방지 국제회의* (APG/FATF 공동) 개최(11월~12월중, 부산), 후발국 기술지원 확대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자금세탁 유형 및 분석기법 등 논의, 자금세탁방지 아태 지역기구(APG) 및 FATF 회원국(약60개국), IMF·World Bank 관계자 등 300여명 참석 예정

나.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노력을 지속 추진

- 제2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11~'13년) 수립
 - 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금년도 3/4분기 중 계획 확정

- 금융회사 유치에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 금융중심지로 이전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추진
 - * 금융중심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중
 -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금융중심지의 경영 환경 및 사회적 인프라를 개선

-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신성장 동력인 녹색금융 분야의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녹색금융 MBA 과정(KAIST·고려대)을 지속적으로 지원
 - * ('10년) KAIST 5억원, 고려대 4억원 → ('11년) KAIST 7억원, 고려대 6.5억원

붙임 1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 구 분 | 법 률 |
|-------------|--|
| 금융정책 관련(3)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산업금융 관련(6) |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 구조개선 관련(5) |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
| 글로벌금융 관련(1) |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 은행 관련(5) | ·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 보험 관련(2) |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서민금융 관련(6) |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
| 자본시장 관련(5) | · 공사채등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
| 자산운용 관련(1)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 회계 관련(2)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금융정보분석원(2)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소계 (38) | |

붙임 2**금융위원회 간부현황**

| 직명 | 성명 | 연락처 |
|------------|-----|-----------|
| 위원장 | 김석동 | 2156-9500 |
| 부위원장 | 권혁세 | 2156-9501 |
| 금융위 상임위원 | 이종구 | 2156-9503 |
| 금융위 상임위원 | 최종구 | 2156-9504 |
| 중선위 상임위원 | 최규연 | 2156-9505 |
| 사무처장 | 김주현 | 2156-9502 |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 | 2156-9400 |
| 대변인 | 진웅섭 | 2156-9540 |
| 기획조정관 | 정지원 | 2156-9600 |
| 금융정책국장 | 정은보 | 2156-9700 |
| 금융서비스국장 | 고승범 | 2156-9800 |
| 자본시장국장 | 조인강 | 2156-9801 |
| 국제협력관 | 이헌석 | 2156-9701 |
| 공자위 사무국장 | 김용범 | 2156-9440 |

| |
|---------------|
| 제299회 국회(임시회) |
|---------------|

| |
|-------|
| 정무위원회 |
|-------|

업 무 현 황

2011. 4. 15.



금 융 위 원 회

I. 일반 현황

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III. 주요 현안사항

1.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 대응
2. 서민금융 기반강화
3. 저축은행 현황 및 대응방안
4.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5.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
6. 해외경제 불안요인 대응

IV. 4월 중점 추진법안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2.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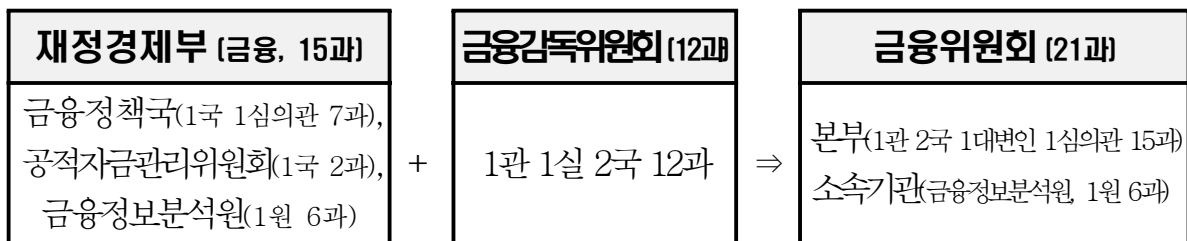
[붙임1]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붙임2] 금융위원회 간부현황

I.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 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 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5과 3팀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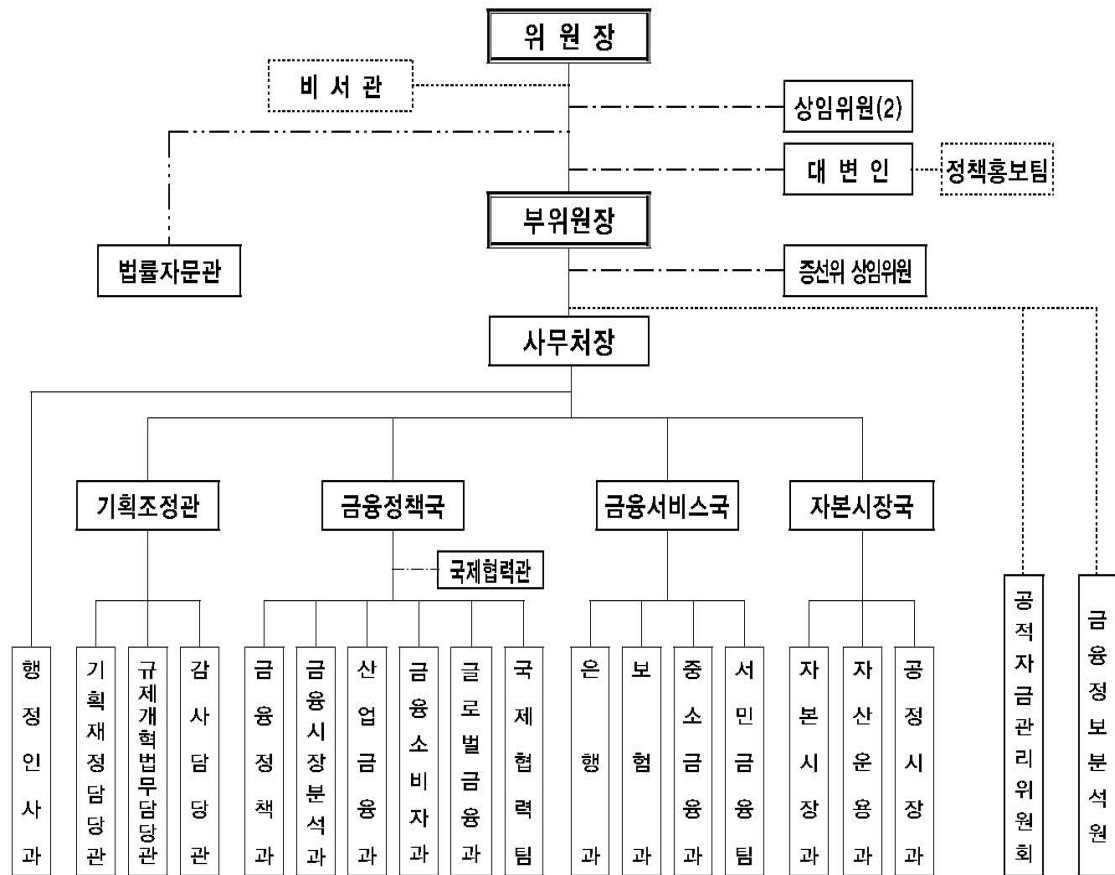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 실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31명('11.3월 현재)

| | 정무직 |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 기능직 | 계 |
|---------|-----|-----|-----|-----|-----|-----|
| 합 계 | 2 | 208 | 4 | 7 | 10 | 231 |
| 본부 | 2 | 151 | 4 | - | 10 | 167 |
| 금융정보분석원 | - | 45 | - | 7 | - | 52 |
| 공자위 사무국 | - | 12 | - | - | - | 12 |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억원, 세출예산 1조 5,556억원('11년도)

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 국내·외 금융시장은 일본 대지진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나, 이후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
- 다만, 중동 불안, 유로존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 상존

가. 국제 금융시장 동향

- 세계증시는 일본 대지진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대지진 이전 수준 회복

※ 일본 증시는 대지진으로 급락(△16.1%)한 후 상당폭 회복

| | '09말 | '10말 | '11.3말 | 4.7 | 4.8 | 전년말비 | 일본지진 이후 |
|---------|--------|--------|--------|--------|--------|--------|---------|
| 다우(美) | 10,428 | 11,577 | 12,320 | 12,409 | 12,380 | +6.93% | +3.30% |
| FTSE(英) | 5,413 | 5,899 | 5,909 | 6,007 | 6,056 | +2.64% | +3.61% |
| 일 본 | 10,546 | 10,229 | 9,775 | 9,591 | 9,768 | △4.73% | △6.38% |

- 주요국 금리는 대지진, 중동불안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하였다가, ECB 금리인상 및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상승

| 국채금리(%) | '09말 | '10말 | '11.3말 | 4.7 | 4.8 | 전년말비 | 일본지진 이후 |
|---------|------|------|--------|------|------|-------|---------|
| 미국(2년) | 1.14 | 0.59 | 0.82 | 0.78 | 0.81 | +21bp | +17bp |
| 미국(10년) | 3.84 | 3.29 | 3.47 | 3.55 | 3.58 | +28bp | +17bp |
| 일본(10년) | 1.30 | 1.13 | 1.26 | 1.32 | 1.33 | +20bp | +7bp |
| 독일(10년) | 3.39 | 2.96 | 3.35 | 3.42 | 3.48 | +52bp | +27bp |

- 달러화는 통화정책 완화기조 지속 전망 등으로 약세, 엔화는 지진 직후 강세를 보였으나 G7 외환시장 공조(3.18) 이후 안정

| | '09말 | '10말 | '11.3말 | 4.7 | 4.8 | 전년말비 | 일본지진 이후 |
|-------|--------|--------|--------|--------|--------|--------|---------|
| 달러/유로 | 1.4326 | 1.3387 | 1.4168 | 1.4308 | 1.4484 | +8.19% | +4.98% |
| 엔/달러 | 93.01 | 81.16 | 83.13 | 84.91 | 84.75 | +4.46% | +2.17% |

- 아일랜드('10.11월)에 이어 최근 포르투갈(4.6일)까지 구제 금융을 신청하면서 유럽 재정위기 확산 우려 부각

* 포르투갈 CDS(5년물, bp): (09말) 92 → (10말) 501 → (11.3말) 579 → (4.8) 539

나. 국내 금융시장 동향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일본 대지진 이후 1,135원 (3.17일)까지 급등하였으나,

- 이후 외국인 주식 순매수 지속 등으로 '08.9월 이후 처음으로 1,100선을 하회

| | '09말 | '10말 | '11.3말 | 4.8 | 4.11 | 전년말비 | 일본지진 이후 |
|---------|-------|-------|--------|-------|---------|--------|---------|
| 원 / 달 러 | 1,165 | 1,135 | 1,097 | 1,083 | 1,084.3 | △4.45% | △3.49% |

- (채권시장) 채권금리는 기준금리 인상(3.10일)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지진 등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하락한 뒤 소폭의 등락을 거듭

- 외국인 국내채권 보유잔고는 전년말 대비 소폭 증가

* 보유잔고(조원) : ('09) 56.5 → ('10) 74.2 → ('11.3) 75.3 → (4.8) 75.6

| % | '09말 | '10말 | '11.3말 | 4.8 | 4.11 | 전년말비 | 일본지진 이후 |
|----------|------|------|--------|------|------|-------|---------|
| 국고채(3년) | 4.41 | 3.38 | 3.73 | 3.76 | 3.78 | +40bp | +9bp |
| 회사채(AA-) | 5.53 | 4.19 | 4.50 | 4.53 | 4.56 | +37bp | +12bp |

- (주식시장) 주가는 기업실적* 및 수출** 호조 등으로 사상 최고치(4.5일 2,130.43p)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

* '10년 상장사 영업이익 94.8조원(전년비 +38.2%)

** 3월 수출, 484억 달러(전년비 +30.3%, 사상 최고치)

- 2월중 3.4조원의 순매도를 보이던 외국인은 3.17일 이후 순매수를 지속(3.17~4.11일간 +4.9조원, '11년중 +0.3조원)

| | '09말 | '10말 | '11.3말 | 4.8 | 4.11 | 전년말비 | 일본지진 이후 |
|--------|-------|-------|--------|-------|-------|--------|---------|
| KOSPI | 1,682 | 2,051 | 2,107 | 2,128 | 2,122 | +3.48% | +8.53% |
| KOSDAQ | 513 | 510 | 525 | 534 | 533 | +4.39% | +2.81% |

Ⅲ. 주요 현안사항

1 가계부채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 속도를 적정관리하고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강화

□ 가계부채는 외환위기 이후 실물경제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 '00~'10년 증가율(연평균) : (가계부채) 12.7%, (경상 GDP) 6.8%

* 가계부채/GDP('08년, %) : **79**(美 97, 英 102, 日 65, 獨 61, 佛 51, OECD 평균 **69**)

* 가계부채/가처분소득('08년, %) : **140**(美 129, 英 169, 日 112, 獨 98, 佛 81, OECD 평균 **126**)

○ 대출구조도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위주로 금리상승 및 신용경색 등 외부충격에 취약

* 일시상환 비중 : (韓) 41%('10말), (美) 26%('07말)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일시상환+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 80%('10말)]

*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비중('08말, %) : (美)26, (英)72, (佛)30, (獨)16, (韓)**93**

□ 가계부채 규모 및 증가속도 관리,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 노력이 긴요

○ 보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 창출 등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이 제고될 필요

○ 또한,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필요

□ 금년초부터 관계부처 합동 TF 운영,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방안 검토 중

* ① 가계부채 규모·증가속도 관리 방안, ②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 방안
③ 가계대출 건전성 강화 방안, ④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 향후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추진 예정

※ '11.3월말까지 한시 적용되었던 DTI 자율심사는 예정대로 금년 3월말로 종료

2 서민금융 기반강화

- ◇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보강하고 금융인프라를 개선하여 서민층의 금융애로를 적극 해소
 - ◇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서민의 재환을 적극 지원
-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

가. 서민금융 지원제도 보강

- ☐ 미소금융이 “한국형 마이크로크레딧”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 * (예) 지역·직능별 단체와의 연계강화 등으로 경영컨설팅 강화
- ☐ 햇살론이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를 보완
 - 일선 창구에서 수렴된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지원기준 등을 지속 정비
 - * (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 및 지원서류 간소화
- ☐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서민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가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

나. 금융인프라의 개선 등을 통한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

- ☐ 개인신용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서민금융지원 유관기관의 안내 및 상담기능 강화

다. 서민층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 ☐ 최고이자율 인하, 금리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 ☐ 금년 4월부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

* (중소가맹점) 약 2%→1% 이하, (일반가맹점) 2.0~2.5%→1.5~1.7%

** 중소가맹점 범위 : 연매출 9,600만원 → 1.2억원('11.5월)→1.5억원('12.1월)

라. 서민의 재할지원 제도 보강 및 서민금융 피해방지 강화

- ☐ 신용회복 지원자의 자활의지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체 채무의 상환기간 및 상환유예기간을 조정
- ☐ 신용회복 지원자에 대한 취업 및 재할자금 지원을 강화
- ☐ 부당한 대출관행 등으로 인한 서민피해 방지
 - 꺾기 등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예방 강화
 - 대부업 감독시스템 개편, 부당 대부 관행 쇄신 등을 통해 대부시장의 질서 확립
- ☐ 전화금융사기 예방 노력 및 피해구제 활동 강화
 -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협의 계좌 모니터링 강화
 - 피해금 반환에 관한 특별절차*를 활용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

* '11.9.30.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예정

3 저축은행 현황 및 대응방안

- ◇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되 어려울 경우 법에 따른 절차대로 신속·투명하게 구조조정 추진
- ◇ 반복되는 부실을 최소화하고 본연의 서민금융중개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

가.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 금년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중 7개*는 자체정상화를 최대한 지원하되 어려울 경우 우량 금융자본 등에게 신속하게 매각

* 삼화저축은행(1.14일 영업정지)의 경우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금융지주 자회사)에 계약이전 방식으로 매각되었고 3.25일부터 영업재개

-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BIS** 자기 자본비율과 순자산 등에 대하여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등을 통지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있으며 동 계획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관련법상 절차 진행 예정

-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역 및 정기·수시 검사 등을 통해 저축은행 경영상황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 부실우려 저축은행은 철저한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자구 노력을 전제로 구조조정 지원

- 구조조정기금을 활용한 **PF대출 매입*** 등 지원

* 저축은행과 금감원간 **MOU 체결** 등을 통해 자구노력 이행 유도

나. 저축은행 경영정상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시행

- ☐ 금년 3.17일 발표한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 강화방안은 차질없이 추진중
- ☐ 저축은행의 서민금융중개기능 강화, 수익기반 확충 등을 담은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할 계획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

- ☐ 대주주 私金庫化 방지
 - 대주주 견제기능 강화,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한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 ☐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및 건전 경영 유도
 - 여신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 강화, 계열저축은행 연결 감독 강화 등을 통한 건전·내실 경영 유도
-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회계 투명성 제고, 공시제도 개선 및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 억제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 ☐ 부실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 강화
 -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철저한 부실책임 규명, 엄격한 민·형사상 부실책임 추궁 등을 통한 正道 경영 유도

4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시행 2년이 지난 자본시장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자율을 보장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

① (중점 추진과제) 자본시장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되 다음과 같은 중점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 예정

①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 대형 IB 육성* 등을 통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지원

* 차이니즈월(Chinese Wall), 순자본비율(NCR) 등 규제완화, 신규 업무(프라임브로커, 기업대출 등) 허용 등

②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 거래시스템(ATS) 및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 도입 등

③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 글로벌 수준의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되, 감독·규제는 글로벌 수준보다 강화

④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富 축적 지원 → 공모펀드 규제 완화, 퇴직연금의 정착 등

⑤ 엄정한 자본시장 질서의 확립 → 신종 시세조종 규제를 위한 처벌요건 정비 및 과징금 도입 등 규제 실효성 강화

② (추진방식) 제도개선 추진에 있어서 시장·업계의 의견을 적극 경청 :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 현재, 학계·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운영중

5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

◇ 신용카드사간 경쟁심화에 따라 위험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신용카드사간 건전한 경쟁 유도

□ 카드대출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 등 건전성 강화

- 카드대출 자산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높여* 카드대출 과당 경쟁을 억제

* (정상) 1.5% → 2.5% (요주의) 15 → 50, (고정) 20 → 65, (회수의문) 60 → 75 등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3장→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여 다중채무자 확대에 의한 부실화를 예방

□ 건전한 마케팅 경쟁 유도

- 과도한 할인혜택 및 포인트 제공 등을 통한 회원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수익성을 현저히 초과하는 부가서비스 제공 상품 출시 제한

* 예)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의무화(신용판매 이익 > 부가서비스 비용)

- 마케팅 활동 핵심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카드대출 영업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차단

* 예) 신규회원 유치, 모집인 운영, 총 마케팅비용, 경품·사은품 제공 등

□ 불법 회원모집 행위 점검·제재 강화

- 금감원, 합동점검반(여신협회)의 점검인력을 확충하고 모집현장 중심의 특별점검을 확대

- 신용카드사의 소속 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자율적 점검 및 제재를 통한 단속효과 극대화

6 해외경제 불안요인 대응

◇ 일본 대지진, 중동불안, 유럽 재정위기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해외 불안요인 상존

⇒ 금융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정책금융 등을 통한 자금지원 추진

< 해외 불안요인 >

- **(일본 대지진)** 대지진 및 원전 사태 등으로 불안감 증대
 - * 피해액 : 16조~25조엔(일본 내각부, 3.23일), 2분기 GDP : $\Delta 0.5 \sim 1.4\%$ (OECD, 4.5일)
- **(중동 불안)** 금년초 튀니지에서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최근 리비아, 예멘, 시리아 등으로 확대되며, 유가상승폭 확대
 - * 유가 추이('10말 대비 4.8일 현재): Dubai 31.6%, WTI 23.4% 상승
- **(유럽 재정위기)** 최근 포르투갈* 구제금융 신청(4.6일) 등 남유럽 재정 위기가 향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체로 전이될 가능성
 - * 3.29일, 4.1일, 신용등급 추가강등으로 투자적격 등급 중 최하위 등급(BBB-) 수준
- **(글로벌 인플레이션)** 중동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BRICs 등 신흥국의 성장에 따른 원자재 수요 지속 증가 및 위기극복 과정에서 과다한 유동성 공급 등을 배경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발생 우려

□ 現 단계에서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시화 되고 있지는 않으나

- 해외 불안요인들이 글로벌 경기둔화, 국제금융시장 불안 으로 이어져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

□ 이에 외국인 자금유출입 등 금융시장 동향 및 파급효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운영중

* 24시간 비상운영체제 가동, 금융위·금감원 합동 점검회의 개최 등

- 기재부, 한은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와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국외 금융시장간 연관된 움직임에 체계적으로 대응중
- 또한, 일본지진사태 등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체에는 정책금융 등을 통한 자금지원* 추진중

* 산기보 : 금년 9월까지 보증한도 확대(1기업당 최대 2억원) 및 보증료 감면(0.2%p)

* 기은 : 기존대출 1년간 만기연장 및 신규대출 지원 등

IV. 4월 중점 추진법안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이하 '기촉법']

가. 현황

-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10.10.28일, 김용태 의원안)되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법의 시한이 만료('10.12.31일)
- 이에 따라 기촉법 신규 제정 필요
 - * 법무부는 위헌소지 등을 이유로 신규제정을 반대했으나 최근 재입법 동의

나. 재입법 필요성

◇ 4월 실시 예정인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5~6월중 부실기업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감안할 때, 4월 국회중 재입법 필요

- 기촉법이 있는 경우 ⇒ 워크아웃 가능
 - 일시적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신속한 경영정상화 유도 →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 최소화
- 기촉법이 없는 경우 ⇒ 법정관리(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 또는 청산)
 - 채권금융기관간 합의 도출(자율 워크아웃)이 어려워 해당 기업의 조기 회생 곤란 → 법정관리 신청 불가피
 - 법정관리 이행시 협력업체 및 하청기업의 연쇄부도 초래 → 종업원 대량실직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예상
 - * 특히, 건설업체의 경우 법정관리 기업은 신규수주가 어려워 사실상 회생 곤란

※ 기촉법 부재시 파급효과 추정

- 워크아웃 추진중인 금호산업의 경우 워크아웃이 되지 않았다면 기업 가치 손실, 협력업체 부도, 종업원 대량 실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
- 금년중 전년도 수준('10년 9개사)의 건설사가 모두 회생절차에 들어간다고 가정하는 경우 금호산업 케이스의 수배의 파급효과 예상

다. 기촉법 제정안 주요내용

- ☐ 워크아웃 추진을 주채권은행이 결정하는 방식에서 기업의 신청에 의해 추진되는 방식으로 변경
 - 기업이 주채권은행에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협의회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판단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
 -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기업측에 주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 부여
- ☐ 반대채권금융기관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매수토록 의무 부과
 - * (현행) 경영정상화 이행기간 내 → (변경) 6개월 이내
- ☐ 기촉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통합도산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도산절차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
 - * 당해 기업에 대한 해산청산파산의 요구(§7②), 회생계획의 사전제출(§15),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16) 등

라. 향후 계획

- ☐ 기촉법 재입법시 동 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실시
- ☐ 한시법 기간 동안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의 자율 협약 제정 등 자율적 상시구조조정 체제 구축을 유도

2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가. 필요성

- ☐ 현재 기업들의 주요 단기자금 조달수단인 기업어음증권(CP)을 대체할 새로운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를 도입
 - 실물발행으로 위조의 가능성이 있으며, 어음법 적용 등으로 분할유통 및 초단기발행이 곤란한 현행 CP제도를 대체
 - 전자적 등록·유통을 통한 기업단기자금 조달시장의 투명성도 제고 가능

* 현재 30개 OECD국가 중 25개국(83%)이 전자증권제도를 도입

나. 주요내용

- ☐ (정의) 전자단기사채는 1년이하 만기, 사채 금액 1억원 이상 등 일정한 성립요건을 갖추고 전자적으로 등록된 것
- ☐ (발행 및 유통) 실물 없이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발행되고, 계좌부를 통해 양도, 부수적 권리관계(담보·신탁) 처리
- ☐ (상법상 특례) 이사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발행권한을 위임할 수 있고 상법상 사채원부 작성의무 등이 면제되어 발행 및 관리가 편리
- ☐ (정보 공개) 발행되는 단기사채의 종류, 종목, 금액 및 발행조건 등을 예탁원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

붙임 1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 구 분 | 법 률 |
|--------------|--|
| 금융정책 관련 (3)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산업금융 관련 (6) |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 구조개선 관련 (5) |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
| 글로벌금융 관련 (1) |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 은행 관련 (6) | ·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 보험 관련 (2) |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서민금융 관련 (6) |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
| 자본시장 관련 (5) | · 공사채등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
| 자산운용 관련 (1)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 회계 관련 (2)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 금융정보분석원 (2)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소계 (39) | |

붙임 2**금융위원회 간부현황**

| 직명 | 성명 | 연락처 |
|------------|-----|-----------|
| 위원장 | 김석동 | 2156-9500 |
| 부위원장 | 신제윤 | 2156-9501 |
| 금융위 상임위원 | 이상제 | 2156-9503 |
| 금융위 상임위원 | 이석준 | 2156-9504 |
| 증권위 상임위원 | 홍영만 | 2156-9505 |
| 사무처장 | 김주현 | 2156-9502 |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김광수 | 2156-9400 |
| 대변인 | 진웅섭 | 2156-9540 |
| 기획조정관 | 정지원 | 2156-9600 |
| 금융정책국장 | 정은보 | 2156-9700 |
| 금융서비스국장 | 고승범 | 2156-9800 |
| 자본시장국장 | 조인강 | 2156-9801 |
| 공자위 사무국장 | 김용범 | 2156-9440 |
| 국제협력관 | 이헌석 | 2156-9701 |

| |
|---------------|
| 제301회 국회(임시회) |
|---------------|

| |
|-------|
| 정무위원회 |
|-------|

업 무 현 황

2011. 6. 14.



금 융 위 원 회

I. 일반 현황

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III. 주요 현안사항

1.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2. 저축은행 현황 및 대응방안
3.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4.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
5. 우리금융지주 매각

IV. 6월 중점 추진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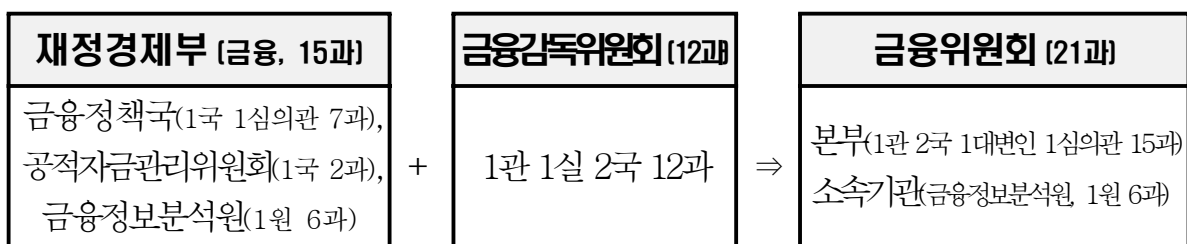
1. 공인회계사법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붙임] 금융위원회 간부현황

I.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 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 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 금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5과 3팀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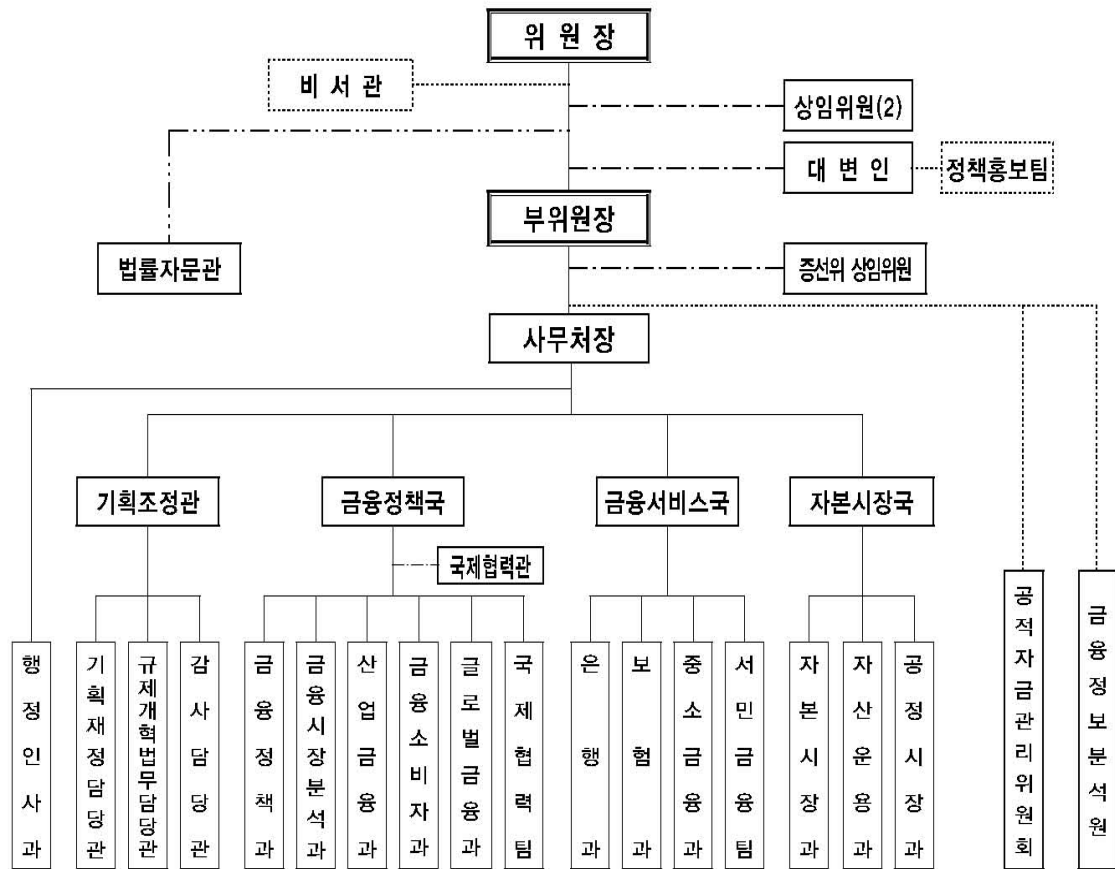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에 설치되어 공적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 실무지원을 위해 사무국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31명('11.6월 현재)

| | 정무직 |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 기능직 | 계 |
|---------|-----|-----|-----|-----|-----|-----|
| 합 계 | 2 | 208 | 4 | 7 | 10 | 231 |
| 본부 | 2 | 151 | 4 | - | 10 | 167 |
| 금융정보분석원 | - | 45 | - | 7 | - | 52 |
| 공자위 사무국 | - | 12 | - | - | - | 12 |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07억원, 세출예산 1조 5,556억원('11년도)

II.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 5월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그리스 채무재조정 우려 증대, 주요국 경제지표의 둔화 등으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

가. 국제 금융시장 동향

□ 세계증시는 5월 이후 주요국 경제지표 둔화*, 그리스 채무 재조정 우려 등 불안요인 증대로 전반적으로 하락세

* 美 베이지북 '12개의 지역 연준 관할 지역 중 4개 지역 경제회복속도 둔화',
日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전분기비 △0.9%, 연률 △3.7%) 등

| | '09말 | '10말 | '11.4말 | 5말 | 6.9 | 6.10 | 4말대비 | 전년말비 |
|---------|--------|--------|--------|--------|--------|--------|--------|--------|
| 다우(美) | 10,428 | 11,578 | 12,811 | 12,570 | 12,124 | 11,952 | △6.70% | +3.23% |
| FTSE(英) | 5,413 | 5,900 | 6,070 | 5,990 | 5,856 | 5,766 | △5.00% | △2.27% |
| 일 본 | 10,546 | 10,229 | 9,850 | 9,694 | 9,467 | 9,514 | △3.40% | △6.99% |

□ 주요국 금리는 유로존 재정우려와 함께 경기회복 속도 둔화 가능성*, 美 제2차 양적완화 종료 등 불확실성 증대로 하락세

* 모건 스탠리, 선진국 경제의 더딘 성장이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채금리(%) | '09말 | '10말 | '11.4말 | 5말 | 6.9 | 6.10 | 4말대비 | 전년말비 |
|---------|------|------|--------|------|------|------|-------|-------|
| 미국(2년) | 1.14 | 0.59 | 0.70 | 0.47 | 0.42 | 0.40 | △30bp | △19bp |
| 미국(10년) | 3.84 | 3.29 | 3.29 | 3.06 | 3.00 | 2.97 | △32bp | △32bp |
| 일본(10년) | 1.30 | 1.13 | 1.21 | 1.17 | 1.14 | 1.14 | △7bp | +1bp |
| 독일(10년) | 3.39 | 2.96 | 3.24 | 3.02 | 3.03 | 2.96 | △28bp | +0bp |

□ 달러화는 5월 중순이후 유로존 재정우려 심화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소폭 강세전환

○ 엔화는 5월들어 경기둔화 우려, 무디스의 日本 신용등급(현재 Aa2) 강등 검토 등으로 약세를 보인다, 6월 들어 강세 전환

| | '09말 | '10말 | '11.4말 | 5말 | 6.9 | 6.10 | 4말대비 | 전년말비 |
|-------|--------|--------|--------|--------|--------|--------|--------|--------|
| 달러인덱스 | 77.86 | 79.03 | 72.93 | 74.64 | 74.18 | 74.80 | +2.56% | △5.35% |
| 달러/유로 | 1.4326 | 1.3387 | 1.4806 | 1.4397 | 1.4510 | 1.4347 | △3.10% | +7.17% |
| 엔/달러 | 93.01 | 81.16 | 81.20 | 81.52 | 80.37 | 80.33 | △1.07% | △1.02% |

나. 국내 금융시장 동향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5월초 무역수지 흑자 지속, KOSPI 상승 등으로 '08.8월(1,062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1,065원, 5.2일)

- 이후 외국인 주식 순매도 증가(5월중 2.5조원 순매도) 등으로 상승세 전환

| | '09말 | '10말 | '11.4말 | 5말 | 6.9 | 6.10 | 4말대비 | 전년말비 |
|---------|-------|-------|--------|-------|-------|-------|--------|--------|
| 원 / 달 러 | 1,165 | 1,135 | 1,072 | 1,079 | 1,083 | 1,083 | +1.06% | △4.57% |

- (채권시장) 채권금리는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유로존 재정 우려 등에 기인한 글로벌 금리 하락세에 동조하며 하락

- 외국인은 5월 중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적인 채권 수익률 등으로 인해 채권 순투자를 지속

* 보유잔고(조원) : ('09) 56.5 → ('10) 74.2 → ('11.3말) 75.3 → ('11.5말) 78.8

| % | '09말 | '10말 | '11.4말 | 5말 | 6.9 | 6.10 | 4말대비 | 전년말비 |
|----------|------|------|--------|------|------|------|-------|-------|
| 국고채(3년) | 4.41 | 3.38 | 3.77 | 3.59 | 3.57 | 3.65 | △12bp | +27bp |
| 회사채(AA-) | 5.53 | 4.27 | 4.56 | 4.33 | 4.32 | 4.39 | △17bp | +12bp |

- (주식시장) KOSPI는 5월초 사상최고치를 경신(5.2일 2,228.9p)한 이후 유로존 재정우려 등 불안요인 증대로 하락세

- 외국인은 유로존 불안 등에 기인한 위험자산 회피심리에 따라 5월 중 큰 폭의 순매도를 보였으나 최근 소폭 순매수 전환

*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 ('09)32.3 ('10)22.6 ('11.3)1.0 (4)3.2 (5)△2.5 (6.1~8)0.3

| | '09말 | '10말 | '11.4말 | 5말 | 6.9 | 6.10 | 4말대비 | 전년말비 |
|--------|-------|-------|--------|-------|-------|-------|--------|--------|
| KOSPI | 1,682 | 2,051 | 2,192 | 2,142 | 2,071 | 2,047 | △6.59% | △0.21% |
| KOSDAQ | 513 | 511 | 511 | 485 | 473 | 467 | △8.62% | △8.57% |

Ⅲ. 주요 현안사항

1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 가계부채가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 속도를 적정관리하고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강화

가. 현황

- '11.3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801.4조원으로 경제규모 및 가계소득과 대비해 볼 때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

* 가계부채/GDP('09년, %): **86**(美 100, 英 110, 日 80, 獨 64, 佛 70, OECD 평균 77)

* 가계부채/가처분소득('09년, %): **153**(美 132, 英 172, 日 130, 獨 99, OECD 평균 133)

- 가계부채는 '00년~'10년중 연평균 12.7% 증가하여 경상 GDP 증가율(6.8%)을 상회

나. 평가

- 연체율, 대출구성 및 금융사 손실흡수 능력을 고려할 때 통제가능한 수준

-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가계대출 연체율(전업권, %): ('06)2.44, ('07)1.94, ('08)1.91, ('09)1.76, ('10)1.68

*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전업권, %) : ('10.12월) 0.87, (美, '10.4/4) 8.22

- 고소득·고신용층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

* 고소득계층(4~5분위) 대출이 전체 대출의 72% 차지(2010 가계신용조사)

* 고신용등급(1~4등급) 대출 비중(%) : ('06말) 48.5, ('08말) 50.3, ('10말) 57.8

- 담보인정비율(LTV)이 낮고 BIS 비율·당기순이익 등 금융사의 충격흡수능력도 개선

* LTV비율(%) : 韓 47%, 美 75%, 英 61%, 佛 80%, 獨 74%, 香港 64%('09말 기준)

* BIS 비율(은행, %) : ('06)12.8, ('07)12.3, ('08)12.3, ('09)14.4, ('10)14.6

* 당기순이익(은행, %) : ('07년) 15.0, ('08년) 7.7, ('09년) 6.9, ('10년) 9.3

- 다만, 가계부채 수준이 높고 대출구조도 취약해 향후 여건 변화시 우리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형 대출 비중이 높아 가계의 금리리스크 및 만기시 상환 부담이 큰 상황

* 일시상환 비중 : (韓) 41%('10말), (美) 26%('07말), (EU) 7.5%('09말)

[주담대 중 이자만 내는 대출(일시상환+거치식 분할상환) 비중 : 80%('10말)]

* 주담대 변동금리 비중('09말, %) : (韓)95, (美)10, (英)62, (佛)13, (獨)10

다. 가계부채 대응방안 마련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며 6월중 발표 예정

- 시중유동성 관리, 일자리 창출 등 가계 채무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거시경제 환경 조성
- 거시 경제정책적 뒷받침 하에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를 위한 금융부문의 선제적 대응을 강화
 -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해 증가속도를 조절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활성화 등 대출구조를 개선
 - 금융회사의 가계부채 위험관리 및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
 -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층을 위한 금융기반 강화 방안('11.4월 既발표)을 차질없이 추진

2 저축은행 현황 및 대응방안

◇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및 예금 부당인출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가.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 금년 1.14일, 삼화저축은행은 경영 부실 심화로 영업정지
- 부산·대전(2.17), 부산2·중앙부산·전주·보해(2.19), 도민(2.22) 등 7개사는 대량 예금인출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영업정지
 - 7개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 BIS 비율이 기준에 크게 미달하고 자본도 완전잠식되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4.29)

| | <u>부산</u> | <u>부산2</u> | <u>중앙부산</u> | <u>대전</u> | <u>전주</u> | <u>보해</u> | <u>도민</u> |
|------------|-----------|------------|-------------|-----------|-----------|-----------|-----------|
| · BIS비율(%) | △50.3 | △43.4 | △28.5 | △25.4 | △11.6 | △91.4 | △5.5 |
| · 순자산(억원) | △16,800 | △8,557 | △1,120 | △2,263 | △432 | △4,381 | △135 |

-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 중 1개사(삼화)는 우리금융지주에 매각 완료(3.16), 7개사는 현재 예보가 매각 추진 중
 - 매각공고(5.24), 인수의향서 접수(5.30), 매수자 실사 및 입찰 등을 거쳐 계약이전 등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
-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및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다각적 지원 대책 강구
 -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유예,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 89개 저축은행 469개 PF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6월 중 부실 PF대출채권 매입 (11.3월 기준 PF대출 총액 7조원)

-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담 검사역 배치 및 정기·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밀착 모니터링
-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 하되, 자체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 처리

나. 예금 부당인출 관련

- 금감원 검사(4.27~) 후 금융실명법,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해 엄중 제재 추진 중
- 예금자의 정당한 계약의 자유(예금계약 해지)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당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화
 - 저축은행 임직원·대주주의 영업정지 예정사실 등 미공개 정보 누설 금지 법제화
 - 예금인출 및 가용자금 현황 등 보고를 의무화하여 저축은행의 부당 예금인출 유인을 축소

다. 저축은행 예금자 피해 지원 관련

- 5천만원 초과예금자 지원을 위해 대주주·경영진 재산환수, 채권자 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배당재원을 최대한 확충
 - 파산절차 개시 전 파산배당금을 개산지급금으로 신속 지급
- 후순위채권자에 대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금감원 조사 및 분쟁조정절차를 활용토록 하되 소송제기시 소송비용 지원 검토

라. 후순위채 제도개선 관련

-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관투자자 및 대주주 대상 사모발행만 허용
-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 판매를 금지하고, '증권사 창구를 통한 판매(모집주선)'만 허용

3 자본시장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 ◇ 투자은행 활성화, 자산운용제도 선진화·대체거래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제고
 - 이와 함께, 기업금융을 내실화하고 투자자의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

가.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

- 증권회사의 기업금융 업무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비
 - 영업용순자본규제(NCR)의 산정방식과 적용기준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위험인수 및 효율적 자본활용을 유도
 - 정보교류차단장치(Chinese Wall) 규제를 합리화하여 투자은행으로서 기업발굴·정보생산 기능 등을 활성화
- 자본력, 위험관리 능력을 갖춘 국내 증권회사에 대하여 신규 업무를 허용하는 등 투자은행의 대형화도 유도

나. 자산운용 제도 선진화

- 100세 시대 대비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신성장동력분야 등으로 자금흐름 등을 유도하기 위해 펀드규제체계 선진화
- 퇴직연금 공정경쟁 및 활성화, 펀드판매채널·공모펀드·신탁업 관련 규제 정비 등 자산운용제도 전반의 선진화 추진

다.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 매매체결 등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 거래시스템인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

○ 해외 대형거래소간 M&A 추진* 등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감안하여, 우리 자본시장 인프라의 효율성을 제고

* 런던LSE-토론토TSX('11.2월), 독일DB-뉴욕NYSE('11.2월)

□ G20 정상회의 합의내용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외 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

라. 직접금융의 내실화 및 엄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등

□ 기업의 직접금융 창구가 되는 기업공개(IPO)·회사채발행 등 관련 시장의 여건을 합리적으로 개선

○ 국제적 기준(美·英·EU·日 등)에 비추어 제한적인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회사채·메자닌금융 등)도 보다 다양화

□ 자본시장의 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 제도로서 불공정거래 규제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

* 시장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선위의 조사수단·제재수단 확대 등

○ 다양화된 자금수단을 한계기업이 남용하거나 대주주 등이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도 강화

4 신용카드시장 건전경쟁 유도

- ◇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외형경쟁 차단,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을 통해 건전 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 대응
- ※ 「신용카드사 등의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특별대책」 발표(‘11.6.7일)

□ 과도한 외형 확대경쟁 차단

- 레버리지(총자산/자기자본) 규제 도입을 통해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건설한 성장 유도
- 신용카드자산이 적정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과당경쟁을 지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 예) 경상 GDP 증가율, 가처분소득 증가율 등

□ 카드대출 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조정

- 카드대출 자산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대폭 높여* 카드대출에 대한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

* (정상) 1.5% → 2.5% (요주의) 15 → 50, (고정) 20 → 65, (회수의문) 60 → 75 등

- 복수카드 정보공유 범위를 3장에서 2장 이상 소지자로 확대하여 다중채무자 확대에 의한 부실화를 예방

□ 불법 회원모집 행위 점검·제재 강화

- 소속 모집인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자발적 관리 강화 유도 및 금감원·합동점검반(여신협회)의 모집현장 중심의 특별점검 강화
- 불법 모집행위가 발생할 경우 모집인 및 회사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

5 우리금융지주 매각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를 중심으로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

□ 입찰참가의향서(LOI) 접수 등 매각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 5.17일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5.18일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6.29일까지 LOI* 접수 예정

* LOI에는 제출자명 등 기본적인 정보만 기재하며, 입찰금액 및 예상 인수 지분율 등은 기재하지 않음

- LOI 접수 후 예비입찰, 최종입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순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할 계획

□ 공자위를 중심으로 법으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매각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 등 주요 사항은 매각심사소위*와 공자위**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

* 매각심사소위는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 공자위는 여·야 추천 인사 2인을 포함하여 민간위원 중심(민간위원 6인, 정부위원 2인)으로 구성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 법으로 정해진 매각목표*에 적합한 인수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자위를 중심으로 노력

* 금융지주회사법 부칙 제6조

IV. 6월 중점 추진법안

1. 공인회계사법

- ☐ (현황) 2008년에 한·미 FTA 시행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중
- ☐ (내용) 외국 공인회계사도 등록할 경우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회계법인에 50% 미만까지 출자 허용
- ☐ (필요성) 최근 한·EU FTA 발효일(11.7.1)에 맞춰 6월말까지 법개정 완료 및 발효 필요

* 회계서비스 개방 관련 한·미 FTA, 한·EU FTA 협정안의 내용이 동일

2.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 (현황) '10.12월 국회에 제출되어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중
- ☐ (내용) 범위반에 상응하는 제재 명확화, 전산시스템 관리자 등의 특정금융거래정보 비밀보장 의무 부과 등
- ☐ (필요성) 금년 10월 FATF*총회에서 한국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므로 조속한 처리 필요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법

- ☐ (현황) '10.10월 국회에 제출되어 정무위 법안소위 계류중
- ☐ (내용) 테러자금조달 정의 및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테러리스트·단체에 대한 거래제한 범위도 확대
- ☐ (필요성) 금년 10월 FATF총회에서 한국의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므로 조속한 처리 필요

붙임**금융위원회 간부현황**

| 직명 | 성명 | 연락처 |
|------------|-----|-----------|
| 위원장 | 김석동 | 2156-9500 |
| 부위원장 | 신제윤 | 2156-9501 |
| 금융위 상임위원 | 이상제 | 2156-9503 |
| 금융위 상임위원 | 이석준 | 2156-9504 |
| 중선위 상임위원 | 홍영만 | 2156-9505 |
| 사무처장 | 김주현 | 2156-9502 |
| 금융정보분석원 원장 | 김광수 | 2156-9400 |
| 대변인 | 진웅섭 | 2156-9540 |
| 기획조정관 | 정지원 | 2156-9600 |
| 금융정책국장 | 정은보 | 2156-9700 |
| 금융서비스국장 | 고승범 | 2156-9800 |
| 자본시장국장 | - | 2156-9801 |
| 공자위 사무국장 | 김용범 | 2156-9440 |
| 국제협력관 | 이헌석 | 2156-9701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2011. 8. 9



금 융 위 원 회

I. 국제 금융시장 동향

II. 국내 금융시장 동향

<참고1>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III. '08년 위기이후 외환건전성 등 제고 노력 및 효과

IV. 평가 및 전망

IV. 대응방향

<참고2> 미국·유럽 경제상황 및 전망

<참고3> 주요국 신용등급 현황

I. 국제 금융시장 동향

1 최근 동향

◇ 8월 들어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유럽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글로벌 주가 급락 및 달러화 강세

- ① (주가) 美 더블딥 우려 등으로 美 주가는 8.2~8일 동안 10.9% 하락(8.2~8일간 변동률 : 英 △12.2%, 獨 △14.8%, 佛 △12.9%)

* 美 Dow : (7월말)12,143 (8.2)11,867 (8.3)11,896 (8.4)11,384 (8.5)11,445 (8.8)10,809
獨 Dax : (7월말) 7,159 (8.2) 6,797 (8.3) 6,641 (8.4) 6,415 (8.5) 6,236 (8.8) 5,923

- ② (환율) 8월중 달러화는 글로벌 경기둔화 가능성 대두, 유럽 재정위기 우려 확산 등으로 전월 대비 소폭 강세

* 달러/유로: (7월말)1.4399 (8.2)1.4203 (8.3)1.4323 (8.4)1.4092 (8.5)1.4282 (8.8)1.4179
엔 /달러: (7월말) 76.8 (8.2) 77.2 (8.3) 77.1 (8.4) 78.9 (8.5) 78.4 (8.8) 77.8
달러Index: (7월말) 73.9 (8.2) 74.5 (8.3) 74.0 (8.4) 75.1 (8.5) 74.6 (8.8) 74.9

- ③ (금리) 8월중 美 국채금리(10년물)는 글로벌 경기둔화 전망 등으로 안전자산 매수세가 유입되며 하락세

* 美 국채금리(10년물, %) : (7월말)2.80 (8.2)2.61 (8.3)2.62 (8.4)2.40 (8.5)2.56 (8.8)2.32

- 이탈리아·스페인 CDS 프리미엄*은 8.4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한뒤, ECB의 국채매입 발표(8.5) 이후 하락세

* CDS(bp) : <그 리 스> (7월말)1700 (8.2)1711 (8.3)1714 (8.4)1716 (8.5)1691 (8.8)1657
<이탈리아> (7월말) 316 (8.2) 360 (8.3) 366 (8.4) 390 (8.5) 387 (8.8) 344
<스 페 인> (7월말) 365 (8.2) 407 (8.3) 418 (8.4) 430 (8.5) 408 (8.8) 353

2 최근 변동성 확대 배경

◇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는 美 더블딥 우려·유럽 재정불안·美 신용등급 강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① (美 신용등급 강등) 8.5일, S&P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AAA→AA+) 하향조정하며 부정적 전망을 유지

○ S&P는 미흡한 재정적자 감축안*(최대 2.4조달러), 정치과정의 비효율성 등을 이유로 美 신용등급을 강등

* S&P는 그동안 4조달러 이상의 재정지출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② (美 더블딥 가능성) 최근 美 경제지표가 시장예상을 하회하면서, 美 더블딥 가능성이 대두

○ 2/4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한 데다 1/4분기 성장률도 대폭 하향조정되고, 생산과 소비지수도 전월 대비 하락

* 성장률(전기비연율, %): (1/4분기) 1.9→0.4% 하향, (2/4분기) 1.8^e→1.3%

* ISM 제조업 활동지수(기준=50) : ('11.1/4)61.1 (5)53.5 (6)55.3 (7)50.9

* 소비심리지수 : ('11.1/4)73.1 (4) (5)71.9 (5)74.3 (6)71.5 (7)63.7

○ 다만, 고용사정은 7월중 취업자수 증가폭이 예상보다 확대되고, 실업률이 소폭 하락하는 등 다소 개선

* 취업자수(만명): (3월)19.4 → (4월)21.7 → (5월)5.3 → (6월)4.6 → (7월)11.7
실업률(%) : (3월)8.8 → (4월)9.0 → (5월)9.1 → (6월)9.2 → (7월)9.1

③ (유럽 재정위기)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이 합의*(7.21)되었지만, 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의 재정위기 확산 우려 제기

* 그리스 2차 구제금융 합의안:Eu-IMF 1,090억유로, 민간참여 500억유로

○ 최근 이탈리아·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가 6%를 상회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

II. 국내 금융시장 동향

◇ 8월 들어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주식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1 주식시장

□ (주가) 8월 들어 KOSPI는 美 더블딥 우려, 유럽 재정불안, 美 신용등급 강등의 영향으로 급락

* 8.2일 이후 KOSPI 지수 $\Delta 302p$ 하락, 시가총액 약 $\Delta 171$ 조원 감소

○ 8.8일, 美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개인 투매로 인해 '09.11월 ($\Delta 4.69\%$, 두바이월드 모라토리엄 선언) 이후 최대 폭 하락($\Delta 3.82\%$)

* KOSPI: 매도 사이드카(직전 '09.1.15), KOSDAQ: 서킷브레이커(직전 '08.10.24)

〈참고〉 8.2~8일간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8~15%대 급락을 보인 가운데, 한국($\Delta 13.9\%$)은 프랑스·독일* 등과 함께 하락폭이 큰 편

* 佛·獨(유로존 위기 증폭), 韓(자동차 및 IT 등 경기민감 업종 집중)

< 주요국 증시 지수 등락 현황(%) >

| 기간 | 미국 | | 유로존 | | | 아시아 | | | |
|---------|---------------|---------------|---------------|---------------|---------------|--------------|---------------|--------------|---------------|
| | DOW | NASDAQ | 영국 | 프랑스 | 독일 | 일본 | 대만 | 홍콩 | 싱가포르 |
| 8/2~8/8 | $\Delta 10.9$ | $\Delta 14.1$ | $\Delta 12.2$ | $\Delta 12.9$ | $\Delta 14.8$ | $\Delta 8.7$ | $\Delta 13.2$ | $\Delta 9.6$ | $\Delta 10.3$ |

□ (외국인 동향) 외국인은 美 디폴트 우려 등이 제기된 7.12일 이후 지속적으로 순매도

* 국가별 국내주식 순매수액(조원, '11.1~7월):
(미국)+6.5 (영국) $\Delta 4.7$ (유럽-영국제외) $\Delta 3.1$ (아시아)+1.8 (중동)+0.3

○ 특히, 美 부채한도 합의(8.2일) 이후 집중 순매도

* 외국인 순매수(코스피+코스닥, 조원) : (7.12~8.8) $\Delta 4.1$ (8.2~8.8) $\Delta 2.3$

2 채권시장

- (금리) 8월 들어 국고채 금리는 위험자산 기피현상 확대 등으로 국채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면서 큰 폭 하락

* 8.1일 → 8.8일(%) : (국고 3년) 3.90 → 3.60, (국고10년) 4.24 → 4.06

- (외국인 동향) 금년중 외국인은 국내채권을 지속 순투자

* 국가별 국내채권 순투자(조원, '11.1~7월):
(중국)+2.4 (룩셈부르크)+2.2 (미국)1.6 (카자흐스탄)1.2 (태국)△3.0 등

- 8월에도 외국인은 9,854억원의 채권*을 순매수

* 외국인 현물채권 순매수 규모(억원) : (8.1~5일)2,523 (8일)7,331

3 외환시장

- '11년중 원/달러 환율은 수출호조, 글로벌 달러 약세*, 외국인 채권자금 순유입 등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 美 QE2 종료 후 통화정책 완화 유지, 美 부채한도 증액 협상 난항 등에 기인

** 7.27일 장중 1,049원을 기록하며 '08.8.21일 이후 최저치 갱신

- 8월 이후 美 더블딥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달러 강세)되며 상승세 전환

* 원/달러 : (10말)1,135 (11.6말)1,068 (7말)1,058 (8.4)1,062 (8.5)1,067 (8.8)1,082

- 원/엔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다 8월초 日 정부 개입(8.4일)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상승 전환

* 원/100엔 : (10말)1,398 (11.6말)1,325 (7말)1,374 (8.4)1,346 (8.5)1,361 (8.8)1,392

4 외화 자금시장

◇ '11년중 외화차입 여건은 대체적으로 안정적 유지

□ (국내은행 외화차입) 국내은행의 외화차입은 금년중 소폭 증가하였으나, '08년말 보다 △109억달러 감소

<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규모(억달러) >

| 구 분 | '08말(A) | '09말 | '10말 | '11.6말(B) | 증감(B-A) |
|--------|--------------|--------------|--------------|--------------|--------------|
| 외화차입 계 | 1,277 (100%) | 1,139 (100%) | 1,141 (100%) | 1,168 (100%) | △109 (-) |
| 유럽 | 331 (26%) | 350 (31%) | 403 (35%) | 421 (36%) | +90 (+10%p) |
| 북미 | 308 (24%) | 334 (29%) | 316 (28%) | 324 (28%) | +16 (△4%p) |
| 아시아 | 626 (49%) | 440 (39%) | 416 (36%) | 408 (35%) | △218 (△10%p) |

* 외화차입(본점+국외점포) = 외화콜머니+외화차입금+외화채권+RP, ()내는 비중

□ (차환율) 7월중 국내은행의 단기차입금 중 상당부분이 장기로 전환되어 외화차입 구조가 개선

< 국내은행의 장·단기차입 차환율(기간중, %) >

| | 09년 | 10년 | 11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
| 단기차입 차환율 ¹⁾ | 99.9 | 91.3 | 89.3 | 91.5 | 88.0 | 121.6 | 63.2 | 94.9 | 107.4 | 67.3 |
| 중장기차입 차환율 ²⁾ | 155.5 | 118.1 | 123.1 | 72.1 | 96.3 | 262.4 | 130.3 | 52.4 | 110.6 | 195.3 |

1) 약정만기 2일~1년 이내 차입금 2) 약정만기 1년 초과

□ (외환 건전성) 7월말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비율은 101.4%로 규제비율(85%)을 상당폭 상회

< 국내은행의 외환건전성 비율 현황(기간말, %, %p) >

| 지도비율 | 09년말 | 10년말 | 11.5말 | 6말 | 7말 ^p | 지도비율 대비 |
|----------------|-------|------|-------|------|-----------------|---------|
| 외화유동성비율(≥85%) | 105.1 | 99.3 | 99.1 | 99.8 | 101.4 | +16.4 |
| 7일갭 비율(≥△3%) | 2.8 | 1.2 | 1.0 | 1.3 | 1.5 | +4.5 |
| 1개월갭 비율(≥△10%) | 1.1 | 0.3 | 0.0 | 0.1 | 1.4 | +11.4 |

참고 1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동향

◇ 금년 1~7월중 외국인은 국내주식은 순매도(△0.3조원), 국내채권은 순투자(9.6조원)

- (주식투자) 금년중 유럽 재정위기, 선진국 경기침체 우려 등의 대외 불확실성 등으로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순유출
 - 7월 중순 이후 유럽 재정 우려, 美 부채한도 증액 문제 등으로, 8월 들어서는 美 더블딥 우려 등으로 순유출 확대
 - 영국(△4.6조원), 독일(△0.8조원), 일본(△0.6조원) 등은 순유출을 보인 반면, 미국(6.9조원), 중국(1.1조원) 등은 순유입
- (채권투자) 금년중 외국인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화 절상 기대 등으로 국내채권에 지속적 순투자
 - 룩셈부르크(2.2조원), 미국(1.6조원), 독일(1.4조원) 등은 순유입을 보인 반면, 태국(△3.0조원), 영국(△1.0조원) 등은 순유출
 - 특히, 중국(2.4조원)이 외환 보유고 통화 다변화 등의 목적으로 국내 채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작년에는 국내 채권에 관심이 적었던 싱가포르('10년:△1.2조원, '11년: 2.3조원), 카자흐스탄('10년:0원, '11년:1.2조원) 등이 순유입 기록

<외국인 주식 순매수 및 채권 순투자 현황>

(단위: 조원,%)

| | 10년 | 1~7월 | 11년 | 상반기 | 7월 | 11.7월말 잔액(비중) |
|----|------|------|------|------|-----|------------------|
| 주식 | 22.9 | 8.8 | △0.3 | △2.4 | 2.2 | 399.3 (30.2) |
| 채권 | 16.9 | 15.1 | 9.6 | 6.7 | 2.9 | 84.2 (7.2) |
| 합계 | 39.8 | 23.9 | 9.3 | 4.3 | 5.1 | 483.5 |

* 금융감독원 기준

* 순투자 = 순매수 - 만기상환

Ⅲ. '08년 위기이후 외환건전성 등 제고 노력 및 효과

◇ '08년 위기이후 대외·은행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대외·은행부문 대응능력이 한층 제고

1 건전성 제고 노력

① 은행부문 외환건전성 규제 강화(1차: '10.1월, 2차: '10.7월)

-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강화^①, 중장기 외화대출 조달비율 규제 강화^②, 외화안전자산 보유제도 도입^③ 등

* ① 자산유형별 유동화 가중치 적용, ② 비율(중장기재원/중장기대출) 상향조정(80% → 100%) ③ 총외화자산의 2%이상 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등

② 선물환포지션 한도 규제 도입('10.10월) 및 강화('11.7월)

- '11.7월,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규모를 국내은행의 경우 40%, 외은지점은 200%로 강화

③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도입('11.8월 시행)

- 은행 비예금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에 따라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차등 부과(1년 이내 20bp ~ 5년초과 2bp)

④ '원화용도' 김치본드 투자제한('11.7월), 여전사 외화차입 축소('11.7월) 등 불요불급한 외화차입 증가 억제 조치

* 김치본드 발행액 추이(억불) : ('09) 77.8, ('10) 61.9, ('11.3) 16.8, ('11.6) 1.2

* 여전사 외화부채(억불) : ('08말) 112.9, ('09말) 94.8 ('10말) 107.7, ('11.3) 132.3

⑤ 예대율 규제 도입('14.1월→'12.7월 시행시기 단축)

-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인 은행을 대상으로 예대율(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을 100% 미만 유지

2 효과

- 그간의 조치 등으로 대외부문과 은행부문의 경우 '08년 위기직전에 비해 건전성과 대응능력이 한층 제고
- (대외부문)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07말 48%, '08.9월말 52%, '11.3월말 38% 수준으로 대폭 감소
 - 은행부문 외채도 단기외채를 중심으로 큰 폭 감소

(단위 : 억불)

| | 07년말 | 08.9월말(A) | 11.3월말(B) | 증감(B-A) |
|--------------|---------|-----------|-----------|-----------|
| 총외채(a) | 3,334 | 3,651 | 3,819 | 168 |
| 단기외채(b) | 1,603 | 1,896 | 1,467 | △ 429 |
| 단기외채 비율(b/a) | 48.1% | 51.9% | 38.4% | △ 13.5% |
| 외환보유액 | 2,622 | 2,397 | 2,986 | 589 |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 61.1% | 79.1% | 49.1% | △ 30.0% |
| 은행부문 외채 | 1,929 | 2,195 | 1,919 | △ 276 |
| 국내은행 | 1,090 | 1,221 | 1,155 | △ 66 |
| - 단기 | 546 | 655 | 485 | △ 170 |
| (비중) | (50.1%) | (53.6%) | (42.0%) | (△ 11.6%) |
| 외은지점 | 839 | 974 | 764 | △ 210 |
| - 단기 | 794 | 939 | 666 | △ 273 |
| (비중) | (94.5%) | (96.4%) | (87.2%) | (△ 9.2%) |

* 외환보유고: ('08.8말) 2,432억불, ('11.7말) 3,110억불

- (은행부문) 예대율의 경우 규제수준인 100% 미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BIS비율 등도 대폭 상승
- 외화유동성 비율의 경우 지도기준인 85%를 지속 상회

| | '08년 위기전 ('08.8말) | 현재 상황 ('11.6말) | 증감 |
|------------|----------------------|----------------------|---------|
| 예대율(CD 제외) | 124.0% | 97.8% | △ 26.2% |
| BIS 비율 | 11.36% ¹⁾ | 14.34% ²⁾ | +2.98% |
| 기본자기자본 비율 | 8.50% ¹⁾ | 11.28% ²⁾ | +2.78% |
| 외화유동성 비율 | 102.7% ³⁾ | 100.3% | △ 2.4% |

1) '08.6말, 2) '11.3말, 3) '07.12말(유동화가중치 미적용)

IV. 평가 및 전망

- ① 최근 금융시장 불안은 국내요인 보다는 美·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경기 하방리스크와 부채문제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
 - 최근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 확대는 차익실현 목적과 더불어 글로벌 경기둔화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과정으로 관측
- ② '08년 금융위기시와 다른 점은 '실물'부문 침체 우려가 금융시장(특히, 주식시장)에 투영된 결과라는 것
 - 최근 금융불안은 금융문제가 아니라, 국가부채나 성장 동력 약화와 같은 경제 펀더멘탈에 관한 문제에서 야기
 - 또한, 해당 국가들의 정책 대응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③ 양호한 재정건전성,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할 때, 대외 불안요인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 97년 외환위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최근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향상

* 국가채무가 GDP대비 33.5%, '11.7말 외환보유고 3,110억불, 38% 수준의 낮은 단기외채 비중, 100% 이하의 은행 예대율, 14%대의 은행 BIS비율 등
- ④ 다만, 우리 자본·외환시장의 개방도가 커서 대외 불안요인이 파급·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
 - 우리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은 아직까지 양호한 상황이지만, 글로벌 신용경색이 발생될 경우 국내 금융기관의 차입여건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V. 대응방향

◇ 국내외 자금흐름, 주요지표 등 금융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위기 진행상황 별로 기 마련된 위기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

① 국내 금융시장 관련 모니터링 및 협조체계 강화

- 주식·채권·외화자금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유출입 동향과 금융기관·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점검

* 이를 위해 종전 금융위·금감원 ‘금융합동점검회의’를 금융위 부위원장 중심으로 확대·개편(8.5일)하고, 산하에 3개팀(자금·외환·자본팀) 운영

- 재정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내외 금융시장 움직임에 대한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고 체계적 대응

② 위기상황에 대비한 은행별 외화조달·운용계획 마련

- 대외충격시 정부와 한국은행에 의존하기 보다는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도록 적극 독려

- 위기발생시 은행들이 스스로 최소 3개월을 견딜 수 있는 자금조달·운용계획 마련토록 stress test 실시중

* 금융기관 외화유동성, 외화차입 현황 등을 종합 점검하여, 대외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

③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대응

- 위기상황 발생시 기 마련된 ‘위기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

- 필요시 위기대응 계획의 재점검 및 수정·보완도 병행

1. 미국 경제상황 및 전망

- (경제상황) 미국경제는 상반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채무한도 협상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되는 등 미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 GDP성장률(%): (10.1/4)3.9 (2/4)3.8 (3/4)2.5 (4/4)2.3 (11.1/4)0.4 (2/4)1.3

- 금년 들어 경기회복세가 크게 약화된 것은 민간소비 둔화 및 정부지출 위축에 주로 기인

* 민간소비(%): (10.4/4)3.6 (11.1/4)2.1 (2/4)0.1 ['09.2/4 이후 최저치]

* 정부지출(%): (10.4/4)△2.8 (11.1/4)△5.9 (2/4)△1.1 [정부지출 감소세 지속]

- 다만, 7월 들어 고용시장에서 취업자가 전월 대비 증가하였고, 실업률도 0.1%p 하락하는 등 우려가 다소 진정

* 비농업취업자증감(만명, 전월비): (5월)5.3 (6월)4.6 (7월)11.7 [시장예상 8.5]

- (전망) 美 경제는 국제유가, 일본 대지진 등 경기둔화 요인이 상당부분 완화되어 앞으로 개선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다만, 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성장세 약화 가능성도 상존

* 8.2일 통과된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에 따라 10년간 최대 2.4조달러 재정지출 축소

- 또한, 최근의 美 신용등급 하락은 차입비용 상승 등을 통해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나,

- 신용등급 하락(AAA→AA+)이 美 국채의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시장에서 평가

* 바젤 II·III 체계내에서 위험가중치 산정에 있어 AAA~AA-는 동일하게 취급, 예) 국채(AAA~AA-)의 위험가중치: 0%

2. 유럽 경제상황 및 전망

□ (경제상황) 유로지역은 1/4분기중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는 모습

○ 1/4분기 GDP 성장률이 0.8%(전기대비)이었으나, 2/4분기는 다소 둔화될 전망이 다수

○ 7월 유로지역의 제조업 PMI, 경기체감지수 등이 하락

* 제조업 PMI : (5월) 54.6 → (6월) 52.0 → (7월) 50.4

* 경기체감지수 : (5월) 105.5 → (6월) 105.4 → (7월) 103.2

□ (전망) 금년중 유로지역은 정부 재정불안으로 성장률*이 다소 영향을 받겠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Nomura(8.5일)는 2011년 유로 성장률 전망을 2.0%→1.9%로 하향조정

○ 그리스 구제금융 방안 합의(7.21)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 그리스 채무축소효과 불충분, 위기관리기구(EFSF)의 규모 문제 등

*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가 6%를 상회하는 등 유로존 편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ECB의 伊국채 매입 결정^①(8.8~), G7^② 및 G20^③의 국제 공조 합의(8.8) 등을 감안할 때, 유럽 재정위기의 확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 ① 이탈리아가 균형예산 달성시기 조정('14년→'13년) 등 긴축 재정 개혁을 약속하면서 ECB는 8.8일부터 伊국채 매입하기로 결정

②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8일 오전 전화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 등 공조에 합의(8.8)

③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최근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공동 성명서 발표(8.8)

참고 3

주요국 신용등급 현황(11.8.7 현재)

| 구분 | 등급 | S&P | Fitch | Moody's |
|----------|------------|----------------------------|----------------------------|--------------------------------|
| 투자 등급 | AAA(Aaa) |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싱가포르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
| | AA+(Aa1) | <u>미국</u> , 벨기에 | 호주, 벨기에, <u>스페인</u> | 벨기에 |
| | AA(Aa2) | <u>스페인</u> | 일본 | 일본, <u>이탈리아</u> , <u>스페인</u> |
| | AA-(Aa3) | 중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 <u>이탈리아</u> , 사우디아라비아 |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
| | A+(A1) | <u>이탈리아</u> | <u>한국</u> , 중국 | <u>한국</u> |
| | A(A2) | <u>한국</u> | | |
| | A-(A3)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 |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바레인 |
| | BBB+(Baa1) | <u>아일랜드</u> ,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 <u>아일랜드</u> , 남아프리카공화국 | 러시아, 멕시코, 태국 |
| | BBB(Baa2) | 러시아, 멕시코, 바레인 | 러시아, 멕시코, 태국, 브라질, 바레인 | |
| | BBB-(Baa3) | 브라질, 인도, <u>포르투갈</u> | 인도, <u>포르투갈</u> | 브라질, 인도, |
| 투기 등급 | BB+(Ba1)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터키, | 인도네시아, <u>아일랜드</u> |
| | BB(Ba2) | 터키, 필리핀, 리비아, 이집트 | 필리핀, 리비아, 이집트 | 터키, <u>포르투갈</u> |
| | BB-(Ba3) | 베트남 | | 필리핀, 이집트 |
| | B+(B1) | 캄보디아 | 베트남 | 베트남 |
| | B(B2) |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 | 캄보디아 |
| | B-(B3) | | | 아르헨티나 |
| | CCC+(Caa1) | | | |
| | CCC(Caa2) | | <u>그리스</u> | |
| | CCC-(Caa3) | | | |
| | CC(Ca) | <u>그리스</u> | | <u>그리스</u> |

* 괄호안 등급은 Moody's 기준

김 정 의 원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

1. 대부업 관련

- 2008년 이후 대부중개 수수료 현황
- 2008년 이후 대부중개업자 현황

□ 대부중개업자 및 대부중개수수료 현황

- 「'10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인 중개업체(98개)는 총 9,461억원(290,154건)을 중개하고, 632억원(중개금액의 6.7%)의 중개수수료 수취

등록 대부중개업자수

(단위 : 명, %)

| 구 분 | 09.12 | 10.6 | 10.12 |
|-----------|-------|-------|-------|
| 등록 대부중개업자 | 3,879 | 3,957 | 4,029 |
| 중개수수료(평균) | 6.6 | 6.3 | 6.7 |

※ '09.4월부터 대부중개업 별도 등록 실시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

1-1. 대부업 관련


- 2000년 이후 대부업체 이자율 변화 추이
- 2006년 이후 대부업체 등록현황
-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
- 대부업체 조달금리
- 2006년 이후 대부업체 이용자수
- 2006년 이후 대부업 실태조사 참여율
- 대부업 평균 연체율

□ 대부업 현황 (상세 : 불임)

(자료 :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구 분 | '08.9 | '09.3 | '09.12 | '10.6 | '10.12 |
|-----------------|-----------|-----------|-----------|-----------|-----------|
| 등록업체수 (개) | 16,120 | 15,723 | 14,783 | 15,380 | 14,014 |
| 거래자수 (명) | 1,307,271 | 1,431,656 | 1,674,437 | 1,893,535 | 2,207,053 |
| 평균대출금리 (%) | 38.9 | 38.4 | 41.2 | 42.3 | 41.5 |
| 실태조사 참여율 (%) | 64.5 | 67.6 | 71.4 | 73.3 | 79.9 |
| 평균 연체율* (%) | 13.9 | 17.9 | 13.2 | 9.0 | 7.2 |

* 자산 100억이상 대부업체 기준 (09.12월 이전에는 자산 70억원 이상)

| | | |
|---|-------------------------|----------------|
|  금융위원회 | 보도자료 | ·금융산업의 선진화 |
| | 2008. 6. 3(화) 15:00시 부터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

| | | | |
|-------|-------------------|-------|----------------------------|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 | |
| 책 임 자 | 우상현 과장(2156-9850) | 담 당 자 | 이석란 사무관(2156-9854) |
| 배 포 일 | 2008. 6. 2.(월) | 배포부서 | 정책홍보팀(2156-9541 ~ 48) 총15매 |

제 목 : 제5회 대부업정책협의회 개최

- 정부는 2008.6.3(화) 15:00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제5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금융위원회 위원장(주재), 법무부·행안부·기획재정부 차관, 공정위부위원장 (☞참고1)

- 금번 협의회에서는 ①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②불법 사금융 단속 실적, ③지자체 대부업 관리 강화 추진현황, ④금감원 직권검사 추진실적 및 계획, ⑤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그 동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주요 논의결과》

- ① (사금융 실태조사) 등록 대부업체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금번 실태조사의 의의

- 그 동안 사금융 시장 규모는 각 연구소 등에서 18~45조원으로 추산
 - 그러나 동 추정치는 90년대 통계치, 등록 대부업체 조사 등 일부 제한적인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정책자료로 사용하기엔 부적합
- ➔ 이에 전국민과 사금융 이용자,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실태조사를 시행
 - 사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성 있는 현황 자료를 통해 현실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조사결과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전 국민(20세 이상 3,500만명)의 5.4%인 약 189만명인 것으로 추정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금융 이용자들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5조원으로 추정됨
-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이고, 사금융 이용자들은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 (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 기타 자세한 실태조사 결과는 별첨 참조(☞참고2)

- 동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중 금융소외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
- ② (불법 사금융 단속) 경찰과 검찰은 작년에 이어 금년 3~4월 중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

* '08.1~4월중 1,185명을 단속

- 하반기에도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추가하여 실시하되
 - 금감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과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할 예정
- 또한,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자를 적발해 등록하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 공정위에서는 그 동안 대부업체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조사('07.6~12)하여 시정권고·명령하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 대부보증 계약서의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

③ (지자체 대부업 관리강화) 대부업체 DB구축, 지자체 대부업 전담인력 보강*, 시·도관계기관협의회 운영** 등을 지속 추진중

* 지자체의 대부업 전담인력을 '07~'08.5월중 26명까지 확보

** 16개 시도중 12개 시도 개최

○ 각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 정보의 DB화를 완료('08.2)

- 향후 관계부처가 단속조사를 실시하거나, 일반국민이 대부업체 여부 확인시 동 DB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④ (금감원 직권검사) 대부업법 개정('08.3 시행)으로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되었음

* 2개 이상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경우,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인 경우

○ 이에따라, 금감원의 관련조직을 확대개편하고, 현재 지자체를 통해 검사대상 대부업자 현황을 파악중이며, 직권검사 대상 업체에게 설명회를 통해 검사내용 등을 안내

- 금년 하반기부터는 직권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지자체에 통보하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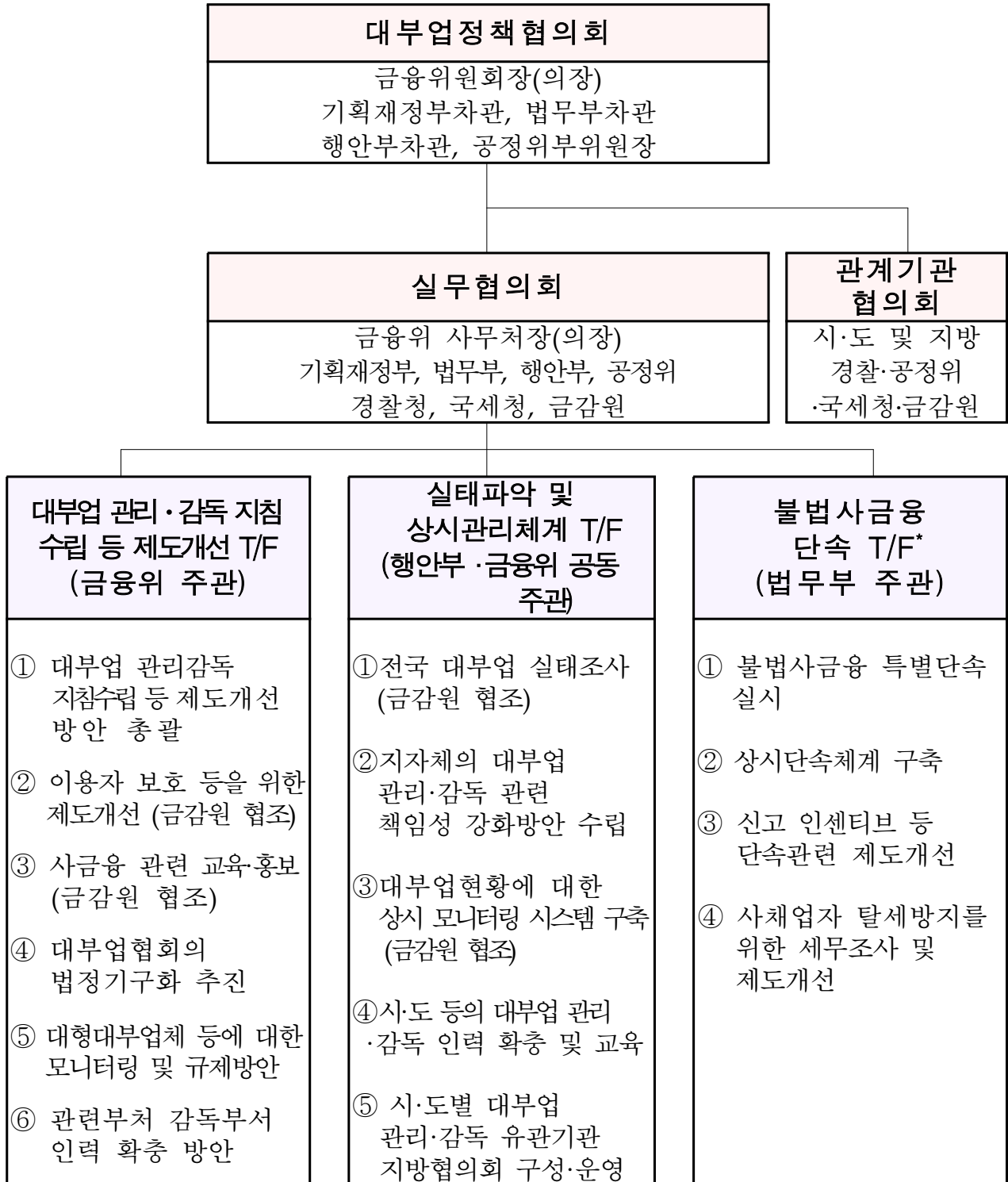
⑤ (금융소외자 지원방안) 금융소외자의 자활을 위해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추진

- ① 국민연금 기납부액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② 소액서민 금융재단을 통한 창업·취업지원, 신용대출, ③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통한 연체채무 재조정 및 고금리 채무 환승 지원, ④ '신용회복지원중' 기록말소, ⑤ 불공정 채권추심방지법 제정
- 이를 위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필요한 자원마련 방안도 논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참고1》

대부업 정책협의회 구성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

< 목 차 >

I. 조사개요

II.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III. 정책 시사점

I. 조사 개요

1. 목 적

- 금융소외자의 사금융 이용 현황 및 상환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
 - 사금융시장에서의 공급자(등록 대부업체)와 수요자(대부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 조사
 - ➡ 지원 가능한 대상의 범위, 지원한도 등을 정하고, 지원 대상자 수, 필요 예산 등을 산정하기 위함

2. 경 과

- ① 등록 대부업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체 등록업자 대상 : 전국 약 18,000개 등록 대부업자를 서면으로 조사
 - * 자료분석이 가능한 7,058개 대부업체의 자료를 기초로 분석
 - 일부 현장조사 : 247개* 등록 대부업자를 방문하여 업무 담당자 및 임원 면접
 - * 대형업체 67개, 중소법인 80개, 개인업체 100개
- ②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 ('08.4월 : 1개월)
 - 전국민 조사 : 1만명 전화조사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 사금융 이용자 조사 :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3,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 기존 데이터 활용 : 한신평정, 한신평 CB에 등록된 약 3,500만명의 대출정보 분석

Ⅱ. 사금융 시장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

① (사금융 이용자) 전국민(20세이상 3,500만명)의 5.4%인 189만 명이 현재 사금융을 이용

- 이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

* 사금융 이용자중 128만명이 대부업체(등록+무등록)를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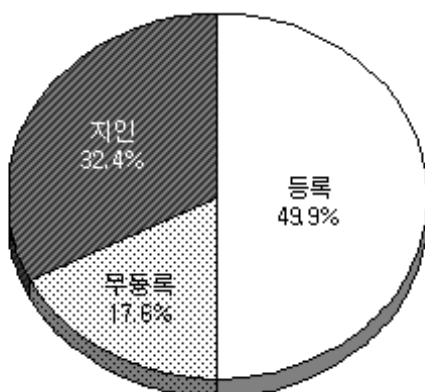
② (사금융 시장규모) 약 16.5조원(189만명×873만원*)으로 추정

* 1인당 평균 사금융 이용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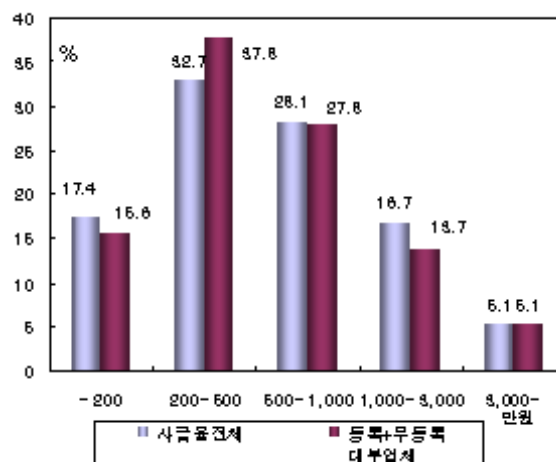
- 이중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규모는 총 10.0조원 (127.6만명×783.4만원*)

* 등록 및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의 평균 사금융 이용액

<사금융 이용 형태>



<사금융 대출 금액>



2. 사금융 이용자의 연체 및 제도권 대출 이용 현황

① (사금융 연체) 사금융 대출자중 연체자의 비율은 약 26.4%

* CB사에 등록된 대부업체 이용자의 연체율(23%)와 무등록 대부업체 연체율(대부업체 연체율의 1.55배=36%)의 평균

- 연체된 사금융 채무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가 46.5%로 다수이나,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함

② (제도권 대출 이용) 사금융 이용자중 57.4%가 제도권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

-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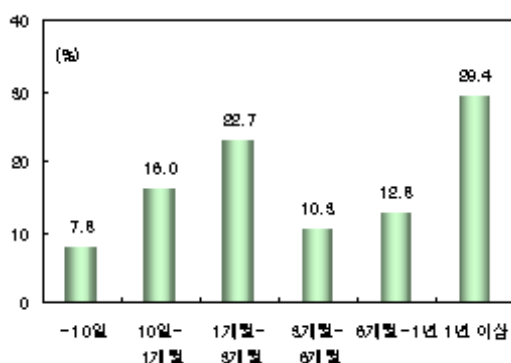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중 신용대출 이용자의 비율은 68.5%
(신용대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대출자가 53.0%, 3천만원 이하가 84.7%, 5천만원 이하는 91.7%로 평균신용대출 금액은 1,900만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자중 13.7%가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을 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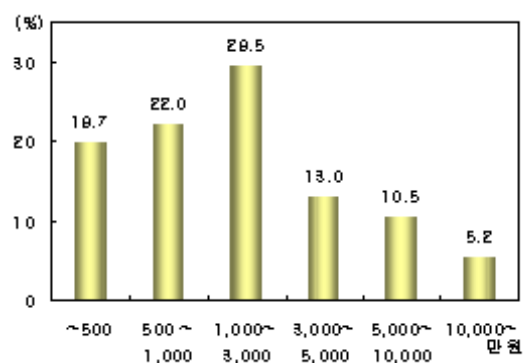
* 전체 국민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3개월 이상 연체)은 5.2%

- 이중 3개월 이하 연체자는 32.2%이고, 3개월~1년 연체는 29.2%, 1년이상 연체는 37.2%

<사금융 연체일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



3. 사금융 시장의 특성

① (이자율)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 평균은 연 72.2%

○ 연 30% 이하 대출이 17.8%, 연 30~49%가 33.9%, 연 49%이상 대출이 48.1%

* 등록 대부업체 이자율 평균이 연 68%인 반면, 무등록 대부업체는 이보다 높은 연 78%

** 대부업법상 이자한도 : 49% ('07.10.4일부터 시행)

*** 사금융 이자율이 법상 이자율보다 크게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용자는 자신이 부담하는 금리를 높게 인식하기 때문(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 신용대출 금리는 약 37~44%로 조사됨)

② (이용업체수) 사금융 이용자는 평균적으로 2곳에서 사금융을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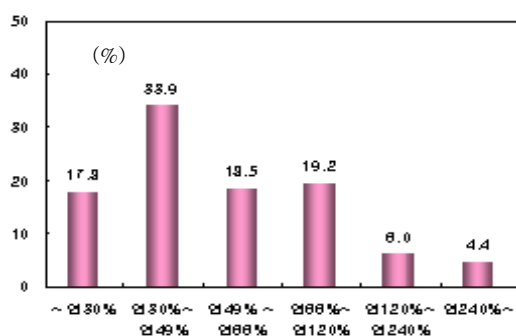
* 이용업체수 : 1군데(48.5%), 2군데(19.4%), 3군데(17.2%), 4군데(6.6%), 5군데 이상(5.1%)

③ (대출형태) 사금융 시장의 76.0%는 개인 신용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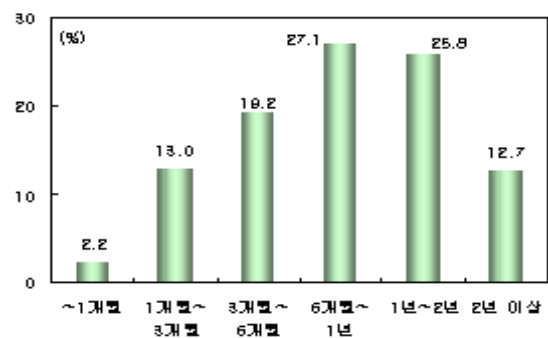
* 개인 담보대출은 15.4%, 타인신용보증 대출은 8.6%

④ (상환기간) 일반적인 사금융 상환기간은 3개월~1년(46.3%)이지만, 12.7%는 상환기간이 2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함

<사금융 연 이자율>



<사금융 평균 상환기간>



4.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

① (사금융 이용계기) 주로 가계 생활자금(47.4%)이나 사업(39.6%)을 위해 사금융을 이용

- 가계생활자금 용도로는 생활비 비중이 46.0%로 가장 높고, 교육비(24.5%), 병원비(14.9%) 순임

② (상환의지) 대다수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가 비교적 높고, 상환 가능성에 대해서도 스스로 긍정적으로 평가

- 자력(73.6%) 또는 주변사람들의 도움(10.4%)으로 상환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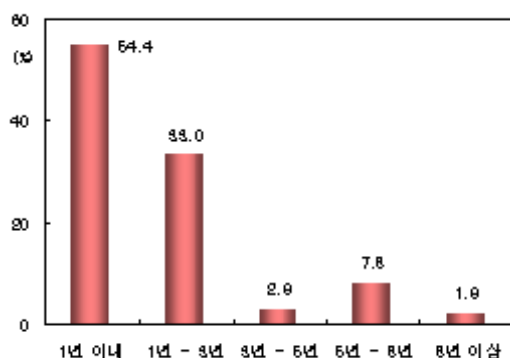
* 기타답변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음(6.2%), 추가대출로 상환(3.2%), 새로운 신용회복 대책 기다림(3.2%), 개인회생이나 파산 활용(1.8%), 현행 신용회복 기구 이용(1.5%)

-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에는 36.5%만이 상환할 수 있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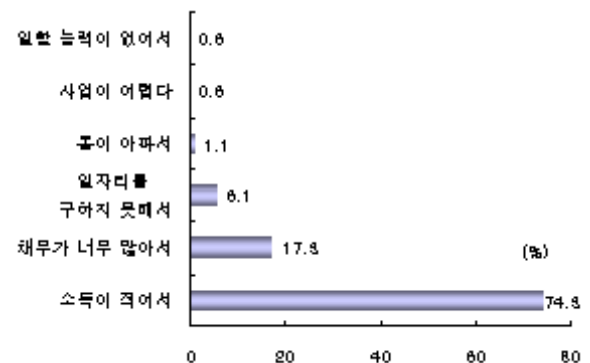
- 이들중 1년 이내에 상환 할 수 있다고 한 이용자는 54.4%

- 상환할 수 없는 이유로는 대체로 소득은 있지만 소득규모가 작거나 소득대비 채무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남

<사금융 연체 대출금 상환시기>



<연체 대출금 미상환 이유>



③ (상환능력)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대출상환 가능금액은 월평균 5만원, 정상상환자는 약 62만원

* 연체자 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은 166만원, 정상 상환자 월평균 가구 소득은 223만원, 월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 연간 가구소득 대비 총채무액(제도권+등록+무등록)은 100% 미만이 69.8%이고, 100~120%가 5.2%, 120% 이상이 25%

- 사금융 이용자중 6.3%는 무직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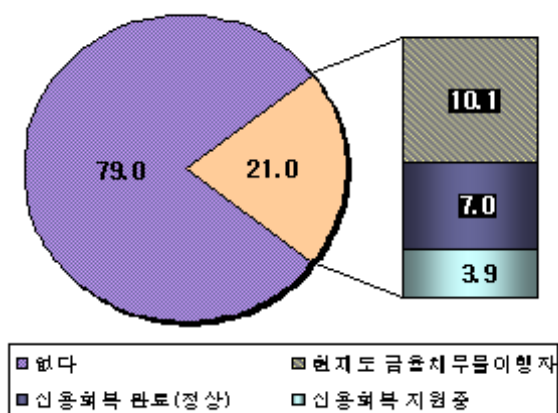
- 현재, 개인의 월평균 부채 상환액은 73만원으로 나타남

④ (금융채무불이행자) 사금융 이용자중 21%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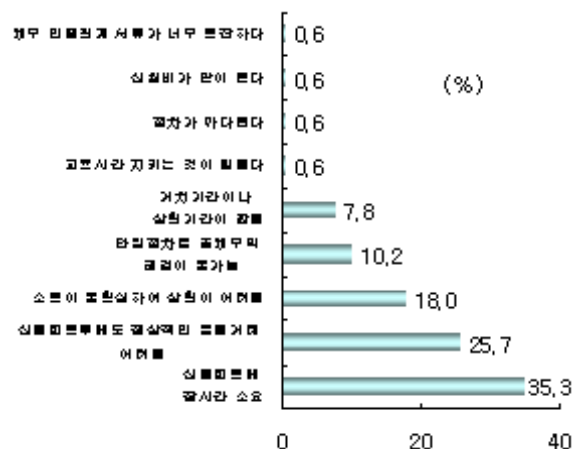
- 이중 현재도 금융채무불이행인 경우는 48.3%, 신용회복 지원금은 18.4%, 신용회복을 완료하고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는 33.1%로 나타남

-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과 관련한 불편 사항으로 '신용회복에 장시간 소요'(35.3%),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움(25.7%)' 등을 지적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신용회복 지원제도 불편사항>



⑤ (기초수급자) 제도권 금융기관 또는 사금융을 통한 대출이 있는 자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인 27만명

*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06년 현재 약 153만명으로 전국민의 3.2% 이지만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워 대출자중 비중이 낮음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을 연체중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0.3만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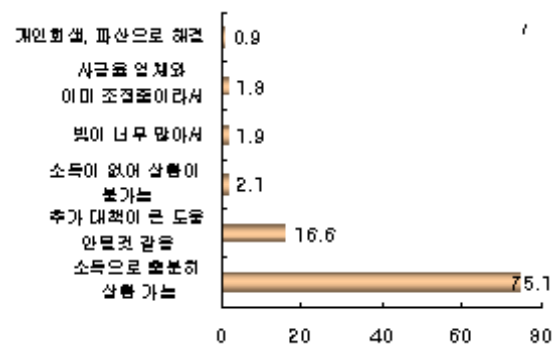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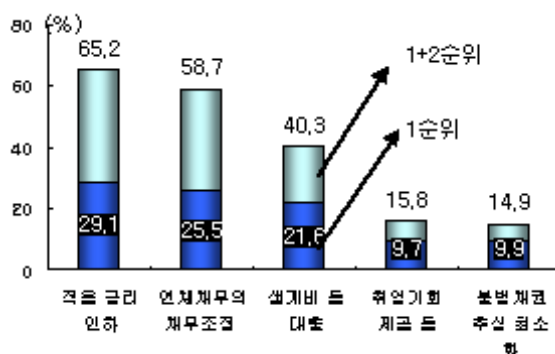
- 제도권 금융기관 및 사금융 대출 연체자(286만명)의 약 3.6%, 대출중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약 38%

⑥ (정부대책) 정부의 추가적인 신용회복 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61.6%)이 많은 반면, 추가대책 참여 의향은 다소 낮음 (46.2%)

○ 사금융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은 '적용금리 인하', '연체채무의 채무조정(장기분할 상환)', '생계비 대출' 순으로 나타남

○ 추가 신용회복 대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본인의 소득으로 충분히 상환 가능'하기 때문이 대부분 (75.1%)

<희망하는 추가 신용회복 대책> <신용회복 추가대책 비참여 이유>



○ 또한, 정부 자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3.5%가 참여의향을 밝힌 가운데, 창업관련 지원을 주로 희망

* 소상공인 창업자금 지원 37.3%,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금 대출 32.6%, 중소기업 취업지원 13.3%, 직업훈련 11.9%, 공공근로 4.7%

Ⅲ. 정책 시사점

① 금융소외자 지원 대상수 추정

| | | | | |
|----------------------------|---------------------------|-------------------------|--|-------------------------|
| 전 국 민 4,700 만명 | 대출 있음 (1,774 만명) | 제도권 대출만 있음 (1,646만명) | 대부업체 대출 있음(128만명) | |
| | | | 제도권 대출 있음 (71만명) | 제도권 대출 없음 (57만명) |
| | | 정상상환 (1,339만명) | 정상상환 (49만명) | 정상상환 (42만명) |
| | | 금융채 무불이행 (240만명) | 금융채 무불이행 (20만명) -둘다연체(17만명) -제도권만 연체(3만명) | 대부업체 대출 연체 (15만명) |
| | | 신용회복중 (67만명) | 대부업체 대출만 연체 (2만명) | |
| | 대출없음 (2,926만명) | | | |

➡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및 재정투입 여부
및 방식 등은 6월중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

② 대부업체의 정책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채무재조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청 대상자의 모든 제도권·사금융 채권을 일괄하여 조정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① 대부업협회와 공동으로 채권매각 등 대부업체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노력
 - ② 대부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채권을 매입함과 동시에 채무조정 대상자의 다른 사금융 채권도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 매입을 추진하며
 - ③ 불법대부업체의 참여등을 위해 신복위, 대부업 협회 등 민간기구의 채무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③ 매입대상 연체채권의 범위

-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 3개월 이상 연체인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서 금융활동이 제한되므로
 -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채무조정 대상으로 고려
- (대부업체 대출) 대부업체 연체채권(3개월 이상 연체)중에서 사실상 채권가격이 충분히 낮게 형성되고, 대부업체들도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는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이 정책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 * 대부업체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연체채권은 추심을 통해 어느정도 상환받을 수 있어 매각의사가 없음

4 사금융 이용자의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 실태조사 결과 대체로 사금융 이용자들은 상환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다만,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소득에 비해 채무규모가 커 채무상환이 어렵다는 답변이 다수
- ➡ 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규모에 맞는 상환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재조정하여 채무 상환 가능성을 높일 필요

5 사금융 이용자들의 정책 희망사항

- 사금융 이용자들은 적용금리 인하 방안을 가장 선호
 - 현재 사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대출을 제도권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조치가 필요
- 또한, 지원제도 시행시 혜택의 폭을 넓히고,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필요

6 채무외의 근로 및 창업지원 병행

- 현재 사금융 이용자중 실직자의 비율은 약 6.3%로 실질적인 자활지원과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
 - 사금융 이용자들은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근로보다는 창업 지원을 희망
 - 지원제도 참가자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창업교육을 완수하고 의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창업자금을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붙임>

‘0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I. 개 황

※ 보고서를 제출한 10,398개 대부업체 중 대부잔액이 없거나(3,676개사) 작성 오류가 심한 대부업체(64개사) 등 3,740개를 제외한 6,658개 만을 대상으로 분석

◇ ‘08.9말 현재 분석대상 대부업체의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는 ‘08.3말 대비 증가하였으며,

◦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로의 집중이 심화*되는 추세

* 전체 대부업체 총 대부금액의 85%를 차지

□ ‘08.9월말 현재 대부잔액은 5조 6,065억원이고 거래자는 130.7만명으로,

◦ ‘08.3월말 대비 금액기준 1.1조원(24.7%), 거래자기준 24.2만명(22.7%) 증가

※ 보고서 제출 업체 증가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각각 12.2%(금액), 20.3%(거래자) 증가하였으며 자산규모 70억원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증가분이 90% 이상을 차지

◦ 1인당 대출금액은 4.3백만원으로 ‘08.3월말(4.2백만원)과 비슷한 수준

□ 신용대출이 3조 5,800억원으로 전체의 63.9%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2조 265억원으로 36.1% 차지(‘08.3말 각각 61.7%, 38.3%)

Ⅱ. 대부업체 규모별 조사 결과

가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출 현황

- (대부금액) '08.9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이상 대부업체(83개사)의 대부잔액은 4조 7,675억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85.0%
 - 거래자수는 106.8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1.7% 수준
- (대출형태) 신용대출이 3조 2,073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부금액의 67.2%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1조 5,602억원으로 32.8%
 - 신용대출 중 개인신용대출은 2조 6,080억원(81.3%), 법인신용대출은 5,993억원(18.7%)
- (대출금리)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5.3% 수준
- (5백만원이하 대출현황) 전체 거래자(106.8만명) 중 5백만원 이하 거래자가 102.1만명으로 95.6% 차지('08.3월말 78만명)
 - 5백만원 이하 대출금은 2조 2,374억원으로 총 대출금의 46.9%를 차지('08.3월말 45.2%)
 - ※ 5백만원 이하 거래자 1인당 대출금액 : 2.2백만원
- (신규대출 직업별·용도별 현황) '08.1~6월 중 신규대출금액은 1조 2,324억원(42사 대부업체 응답)이며 이 중,
 - 회사원이 받은 대출금액은 4,618억원(37.5%)이며 대출금 사용용도는 사업자금이 5,602억원(45.5%) 차지

신규대출자의 직업 및 신규대출금의 사용용도 분포('08.1~6월)

(단위 : 억원, %)

| 신규대출금(비율) | 자영업자 | 회사원 | 학생, 주부 | 공무원 | 기타 |
|-------------|-------------|-------------|----------|----------|-------------|
| 12,324(100) | 1,973(16.0) | 4,618(37.5) | 655(5.3) | 146(1.2) | 4,932(40.0) |

(단위 : 억원, %)


| 신규대출금(비율) | 사업자금 | 타대출 상환 | 생활비 | 물품구매 | 기타 |
|-------------|-------------|------------|-------------|----------|-------------|
| 12,324(100) | 5,602(45.5) | 1,054(8.5) | 1,985(16.1) | 193(1.6) | 3,490(28.3) |

나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대출 현황

- (대부금액) 소규모법인 대부업체(387개사)의 대부잔액은 4,563억 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8.2%이고,
 - 거래자수는 6.7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5.1% 수준
 - 신용대출이 2,162억 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부금액의 47.4%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2,401억 원으로 52.6%

다 개인 대부업자 대출 현황

- (대부금액) 개인 대부업자(6,188개)의 대부잔액은 3,827억 원으로 전체 대부금액의 6.8%이고,
 - 거래자수는 17.2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13.2% 수준
 - 신용대출이 1,565억 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부금액의 40.9%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은 2,262억 원으로 59.1%

| | | | |
|---|-----------------------|--|----------------|
|  금융위원회 | 보 도 자 료 | | ·금융산업의 선진화 |
| | 2009. 8. 7. (금) 조간 보도 | |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

| | | | |
|-------|----------------------|-------|----------------------------|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기업금융과 | | |
| 책 임 자 | 배준수 과장 (2156-9850) | 담 당 자 | 장석인 사무관 (2156-9855) |
| 배 포 일 | 2009. 8. 6. (목) | 배포부서 |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11 매 |

제 목 :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 ☐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는 금융위(금감원)와 행안부(지자체) 공동으로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 금융위원장(의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 이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 '09.3월부터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2. 조사 개요

- ☐ 조사 기준일 : '09.3.31
- ☐ 조 사 대 상 : 전국 등록대부업체(15,723개*)
* '08.9월말(16,120개) 대비 397개(2.5%) 감소
- ☐ 조 사 방 법 : 시·도지사가 설문을 통해 실태 조사
- ☐ 보고서 제출업체수 : 10,632개(보고서 제출율 67.6%)
* '08.9월말 기준 조사시 보고서 제출율 64.5%

3. 조사결과 분석

<붙임>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09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I. 개 요

□ '09. 3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5,723개로 '08. 9월말 (16,120개) 대비 2.5% (△397개) 감소*

* 자진 등록취소 및 지자체에서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대부업체를 직권 등록취소함에 따라 개인 대부업체가 큰폭으로 줄어든 데 기인

- '08. 3월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08. 3월말 17,713개 → '08. 9월말 16,120개

□ 이중 10,632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 (응답률 67.6%) 하여 '08. 9월말 (64.5%) 대비 3.1%p (234개) 상승

* 자산 70억원 이상 96개, 자산 70억원 미만 849개, 개인 9,687개

※ 보고서 제출율 : '08. 3월말 53.3% → '08. 9월말 64.5%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p)

| 구 분 | | '08. 9월말 (A) | | '09. 3월말 (B) | | 증 감 (B-A) | |
|--------|------------|--------------|---------------|--------------|---------------|-----------|-----------|
| | | 등 록 | 제 출 (율) | 등 록 | 제 출 (율) | 등 록 | 제 출 (율) |
| 법 인 | 자산 70억원 이상 | 92 | 91 (98.9) | 100 | 96 (96.0) | 8 | 5 (△29) |
| | 자산 70억원 미만 | 1,107 | 813 (73.4) | 1,131 | 849 (75.0) | 24 | 36 (1.6) |
| 개 인 | | 14,921 | 9,494 (63.6) | 14,492 | 9,687 (66.8) | △429 | 193 (3.2) |
| 합 계 | | 16,120 | 10,398 (64.5) | 15,723 | 10,632 (67.6) | △397 | 234 (3.1) |

II.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0,632개중 대출잔액이 없거나(2,744개)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62개) 등 2,806개를 제외한 7,826개를 대상으로 분석('08.9월말기준 분석대상 대비 1,168개 증가)

1 전국 대부업체 영업 현황

대출 및 거래자 현황

- '09. 3월말 현재 7,826개 분석대상 대부업체가 1,431,656명에게 5조 1,576억원을 대출
 - '08. 9월말 대비 보고서 분석대상 업체가 증가(1,168개) 하였음에도 대출금은 감소*(△8.0%, △0.4조원)
- ※ 보고서 분석대상업체수 증가분(1,168개)을 제외할 경우에도 대출금은 감소(△1.8%, △858억원)
- 한편, 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가 소액신용대출 위주 영업을 계속 확대함에 따라 시장지배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 1인당 대출금은 3.6백만원으로 '08. 9월말(4.3백만원) 대비 70만원 감소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거 래 자 | | | 대 출 금 | | | 1인당 대출금 (백만원) |
|------------|-----------|-----------|-----------------|----------|----------|----------------|---------------------|
| | '08. 9월말 | '09. 3월말 | 증 감 (율) | '08. 9월말 | '09. 3월말 | 증 감 (율) | |
| 자산 70억원 이상 | 1,068,118 | 1,212,652 | 144,534 (13.5) | 47,675 | 44,748 | △2,927 (△6.1) | 3.7 |
| 자산 70억원 미만 | 66,946 | 55,725 | △11,221 (△16.8) | 4,563 | 3,092 | △1,471 (△32.2) | 5.5 |
| 개 인 | 172,207 | 163,279 | △8,928 (△5.2) | 3,827 | 3,737 | △90 (△2.4) | 2.3 |
| 합 계 | 1,307,271 | 1,431,656 | 124,385(9.5) | 56,065 | 51,576 | △4,489(△8.0) | 3.6 |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 신용대출이 4조 361억원으로 전체 대출금(5조 1,576억원)의 78.3%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이 1조 1,215억원으로 21.7%를 차지

◦ '08. 9월말 대비 신용대출은 증가* (12.7%, 4,561억원) 하였으나, 담보대출은 감소 (△44.7%, △9,050억원)

* 대형 대부업체가 소액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백만원이고, 담보대출금은 9백만원

□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38.4%로 '08. 9월말 대비 0.5%p 하락 하였으며, 담보대출 평균 금리 (15.6%) 도 1.1%p 하락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억원, %, %p)

| 구 분 | | '08. 9월말 (A) | '09. 3월말 (B) | 증 감 (B-A) |
|----------------|-------|--------------|--------------|-----------|
| 자산 70억원 이 상 | 신용대출금 | 32,073 | 36,802 | 4,729 |
| | 금 리 | 38.9 | 38.4 | △0.5 |
| | 담보대출금 | 15,602 | 7,946 | △7,656 |
| | 금 리 | 11.1 | 10.2 | △0.9 |
| 자산 70억원 미 만 | 신용대출금 | 2,162 | 1,928 | △234 |
| | 금 리 | 35.4 | 34.1 | △1.3 |
| | 담보대출금 | 2,401 | 1,164 | △1,237 |
| | 금 리 | 31.9 | 30.2 | △1.7 |
| 개 인 | 신용대출금 | 1,565 | 1,631 | 66 |
| | 금 리 | 43.1 | 42.3 | △0.8 |
| | 담보대출금 | 2,262 | 2,106 | △156 |
| | 금 리 | 39.0 | 37.7 | △1.3 |
| 합 계 | 신용대출금 | 35,800 | 40,361 | 4,561 |
| | 금 리 | 38.9 | 38.4 | △0.5 |
| | 담보대출금 | 20,265 | 11,215 | △9,050 |
| | 금 리 | 16.7 | 15.6 | △1.1 |

2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현황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96개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는 8개를 제외한 88개를 대상으로 분석('08.9월말기준 분석대상 대비 5개 증가)

대출 상대별 현황

□ '09.3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금은 4조 4,748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86.8%를 차지

◦ 거래자수는 1,212,652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4.7%

◦ 대출금 및 거래자 비중 모두 '08.9월말(85.0%, 81.7%) 대비 증가

□ 신용대출은 3조 6,802억원으로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82.2%를 차지하고, 전체 대부업체 신용대출금(4조 361억원)의 91.2% 차지

◦ 담보대출은 7,946억원으로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17.8%

※ 신용대출거래자 : 1,206,604명 (99.5%), 담보대출거래자 6,408명 (0.5%)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 거 래 자 | | | 대 출 금 | | |
|-----|-----|-----------|-----------|-----------------|----------|----------|-----------------|
| | | '08. 9월말 | '09. 3월말 | 증 감 (율) | '08. 9월말 | '09. 3월말 | 증 감 (율) |
| 개 인 | 신 용 | 1,055,837 | 1,203,311 | 147,474(14.0) | 26,080 | 29,563 | 3,483(13.4) |
| | 담 보 | 6,358 | 4,434 | △ 1,924(△30.3) | 8,827 | 5,924 | △ 2,903(△32.9) |
| | 소 계 | 1,062,195 | 1,207,745 | 145,550(13.7) | 34,907 | 35,487 | 580(1.7) |
| 법 인 | 신 용 | 4,685 | 3,293 | △ 1,392(△29.7) | 5,993 | 7,239 | 1,246(20.8) |
| | 담 보 | 1,238 | 1,614 | 376(30.4) | 6,775 | 2,021 | △ 4,754(△70.2) |
| | 소 계 | 5,923 | 4,907 | △ 1,016(△17.2) | 12,768 | 9,261 | △ 3,507(△27.5) |
| 전 체 | 신 용 | 1,060,522 | 1,206,604 | 146,082(13.8) | 32,073 | 36,802 | 4,729(14.7) |
| | 담 보 | 7,596 | 6,048 | △ 1,548(△20.4) | 15,602 | 7,946 | △ 7,656(△49.1) |
| | 계 | 1,068,118 | 1,212,652 | 144,534(13.5) | 47,675 | 44,748 | △ 2,927(△6.1) |

대출금액별 현황

□ 차주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은 2조 5,106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출의 56.1%를 차지('08. 9월말 46.9%)

◦ 5백만원 이하 신용대출 (2조 5,076억원)은 전체 신용대출금의
68.1%를 차지

※ 5백만원 이하 거래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2백만원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금액대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5백만원 이하 거래자 (비율) | | 5백만원 이하 대출금 (비율) | |
|------|------------------|------------------|------------------|---------------|
| | '08. 9월말 | '09. 3월말 | '08. 9월말 | '09. 3월말 |
| 신용대출 | 1,018,978 (96.1) | 1,155,104 (95.7) | 22,327 (70.6) | 25,076 (68.1) |
| 담보대출 | 2,076 (27.3) | 2,121 (35.1) | 47 (0.3) | 30 (0.4) |
| 합 계 | 1,021,054 (95.6) | 1,157,225 (95.4) | 22,374 (46.9) | 25,106 (56.1) |

주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신용, 담보, 총대출에서 5백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임

연체 현황

□ '09. 3월말 현재 연체율*은 17.9%로 '08. 9월말(13.9%) 대비 4.0%p 상승

* 1일 이상 연체율

◦ 담보대출 연체율(38.8%)이 신용대출 연체율(13.6%)의 3배 수준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 구 분 | | '08. 9월말 연체비율 (A) | '09. 3월말 | | | 비율증감 (B-A) |
|-----|------|----------------------|-----------|---------|---------|---------------|
| | | | 전 체 | 연 체 | 비 율 (B) | |
| 대출금 | 신용대출 | 10.2 | 35,009 | 4,751 | 13.6 | 3.4 |
| | 담보대출 | 21.5 | 7,246 | 2,808 | 38.8 | 17.3 |
| | 계 | 13.9 | 42,255 | 7,560 | 17.9 | 4.0 |
| 거래자 | 신용대출 | 9.1 | 1,204,868 | 159,188 | 13.2 | 4.1 |
| | 담보대출 | 23.1 | 6,048 | 1,870 | 30.9 | 7.8 |
| | 계 | 9.2 | 1,210,916 | 161,058 | 13.3 | 4.1 |

신규대출 이용자

- '08. 10월 ~ '09. 3월중 신규대출 (6,870억원) 이용자의 40.4% (2,776억원)가 회사원이고, 15.7% (1,079억원)는 자영업자임
- 주요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 충당 (1,937억원, 28.2%) 및 사업자금 조달 (1,819억원, 26.5%)이 많음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 직업 | 대출목적 | | | | | 계 (점유비) |
|-------|-------|-------|------|-------|-------|---------------|
| | 사업자금 | 타대출상환 | 물품구매 | 생활비 | 기타 | |
| 자영업 | 564 | 78 | 16 | 135 | 286 | 1,079 (15.7) |
| 공무원 | 29 | 165 | 19 | 182 | 428 | 823 (12.0) |
| 회사원 | 117 | 375 | 178 | 1,338 | 768 | 2,776 (40.4) |
| 학생·주부 | 21 | 40 | 13 | 216 | 216 | 506 (7.4) |
| 기타 | 1,088 | 71 | 80 | 66 | 381 | 1,686 (24.5) |
| 합계 | 1,819 | 729 | 306 | 1,937 | 2,079 | 6,870 (100.0) |

대출이용기간

- '08. 10월 ~ '09. 3월 이용자 (대출상환액 기준) 중 46% (5,874억원)는 3개월내 대출금을 상환하고, 1년 초과도 25.1% (3,200억원)나 됨

대출상환액의 대출기간별 현황

(단위 : 억원, %)

| 대출상환액 | 3월 미만 | 3~6월 미만 | 6~12월 미만 | 1년 이상 |
|--------|--------|---------|----------|--------|
| 12,772 | 5,874 | 1,473 | 2,223 | 3,200 |
| (비율) | (46.0) | (11.5) | (17.4) | (25.1) |

3

자산 7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체 현황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296개 ('08.9월 대비 91개 감소), 개인 대부업체는 7,442개 ('08.9월 대비 1,254개 증가) 를 대상으로 분석

대출 및 거래자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296개) 의 대출금은 3,092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6.0% 차지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10.4억원*, 평균 거래자수는 188명

* 이들 업체는 신용대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여의치 않아 신용대출 비중이 62.4%로 전체 평균 (82.2%) 보다 낮은 등 담보대출 위주로 영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5.5백만원

□ 개인 대부업체 (7,442개)의 대출금은 3,73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7.3% 차지

◦ 개인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금은 50백만원, 평균 거래자수는 22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3백만원

자산 7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체의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건, 억원, %, %p)

| 구 분 | 자산 70억 미만 | | | 개 인 | | |
|----------|--------------|--------------|----------|--------------|--------------|---------|
| | '08. 9월말 | '09. 3월말 | 증 감 | '08. 9월말 | '09. 3월말 | 증 감 |
| 거래자 | 66,946 | 55,725 | △ 11,221 | 172,207 | 163,279 | △ 8,928 |
| 대출금 | 4,563 | 3,092 | △ 1,471 | 3,827 | 3,737 | △ 90 |
| 신용 (점유비) | 2,296 (50.3) | 1,928 (62.4) | △ 368 | 1,565 (40.9) | 1,631 (43.6) | 66 |
| 담보 (점유비) | 2,267 (49.7) | 1,164 (37.6) | △ 1,103 | 2,262 (59.1) | 2,106 (56.4) | △ 156 |
| 1인당 대출금 | 6.8 | 5.5 | △ 1.3 | 2.2 | 2.3 | 0.1 |

지역별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296개) 는 서울 (166개, 56.1%), 경기 (42개, 14.2%), 인천 (8개, 2.7%) 등 수도권이 216개로 73%를 차지

※ 개인 대부업체 (7,442개) 는 수도권이 3,739개로 50.2%를 차지

◦ 거래자 (55,725명) 는 서울 (40,518명, 72.7%), 경기 (3,355명, 6.0%), 인천 (1,601명, 2.9%) 등 수도권이 45,474명으로 81.6% 차지

※ 개인 대부업체 거래자 (163,279명) 는 수도권이 73,002명으로 44.7% 차지

◦ 대출금 (3,092억원) 은 서울 (2,218억원, 71.7%), 경기 (289억원, 9.4%), 인천 (167억원, 5.4%) 등 수도권이 2,674억원으로 86.5% 차지

※ 개인 대부업체 대출금 (3,737억원) 은 수도권이 2,613억원으로 69.9% 차지

자산 7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체의 지역별 대출현황

(단위 : 건,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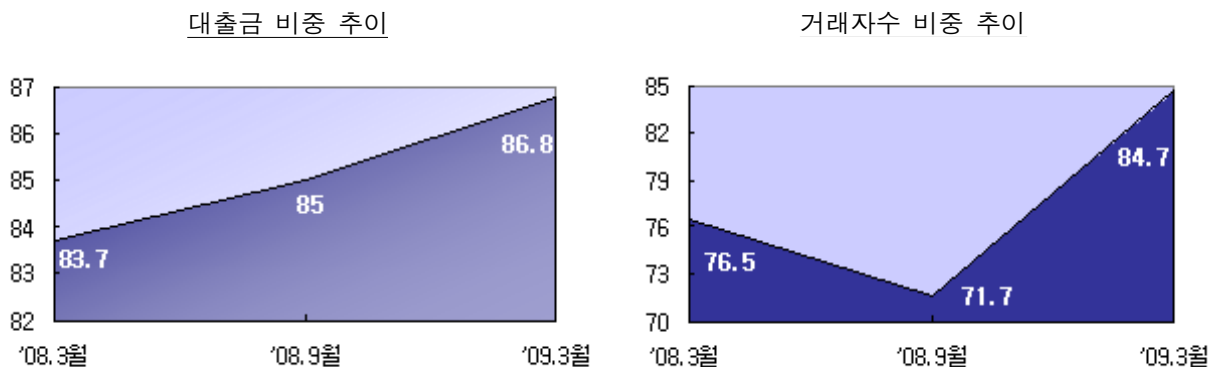
| 구 분 | 자산 70억 미만 법인 | | | | 개 인 | | | |
|-----|--------------|--------|-------|-----------------|-------|---------|-------|-----------------|
|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1인당대출금 (백만원)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1인당대출금 (백만원) |
| 서울 | 166 | 40,518 | 2,218 | 5.5 | 2,052 | 35,064 | 1,685 | 4.8 |
| 경기 | 42 | 3,355 | 289 | 8.6 | 1,416 | 29,567 | 807 | 2.7 |
| 인천 | 8 | 1,601 | 167 | 10.4 | 271 | 8,371 | 121 | 1.4 |
| 강원 | 4 | 75 | 11 | 14.7 | 250 | 4,811 | 93 | 1.9 |
| 충북 | 3 | 78 | 2 | 2.6 | 185 | 2,162 | 49 | 2.3 |
| 충남 | 11 | 360 | 42 | 11.7 | 274 | 2,278 | 73 | 3.2 |
| 대전 | 7 | 342 | 25 | 7.3 | 271 | 4,287 | 99 | 2.3 |
| 전북 | 6 | 504 | 46 | 9.1 | 151 | 1,878 | 59 | 3.1 |
| 전남 | 0 | 0 | 0 | 0 | 219 | 3,762 | 43 | 1.1 |
| 광주 | 5 | 59 | 3 | 5.1 | 190 | 4,623 | 80 | 1.7 |
| 경북 | 1 | 58 | 4 | 6.9 | 238 | 5,410 | 76 | 1.4 |
| 대구 | 9 | 212 | 31 | 14.6 | 537 | 12,970 | 85 | 0.7 |
| 경남 | 4 | 898 | 31 | 3.5 | 352 | 11,679 | 114 | 1.0 |
| 부산 | 22 | 7,158 | 151 | 2.1 | 734 | 29,802 | 253 | 0.8 |
| 울산 | 3 | 260 | 20 | 7.7 | 249 | 5,048 | 65 | 1.3 |
| 제주 | 5 | 247 | 52 | 21.1 | 53 | 1,567 | 38 | 2.4 |
| 계 | 296 | 55,725 | 3,092 | 5.5 | 7,442 | 163,279 | 3,737 | 2.3 |

Ⅲ. 평가 및 시사점

□ (대출규모) 대형 대부업체로의 집중도 지속

- 최고 이자율 인하(66% → 49%) 및 금융위기로 인한 자금조달의 어려움, 홍보효과 등으로 자본력이 풍부한 대형 대부업체로의 집중화가 점차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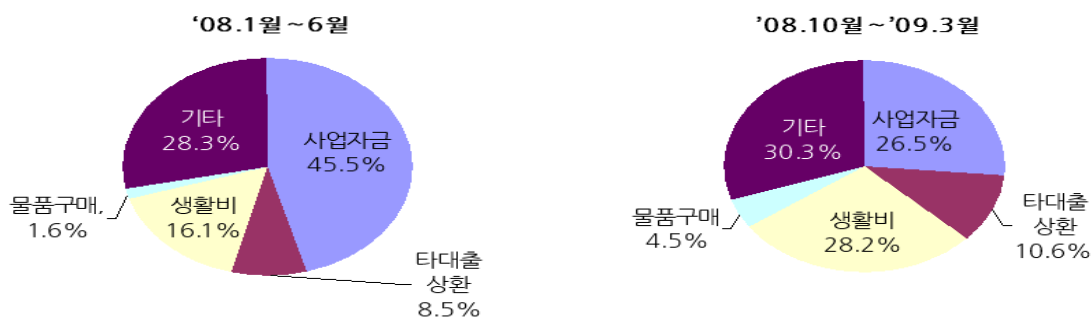
<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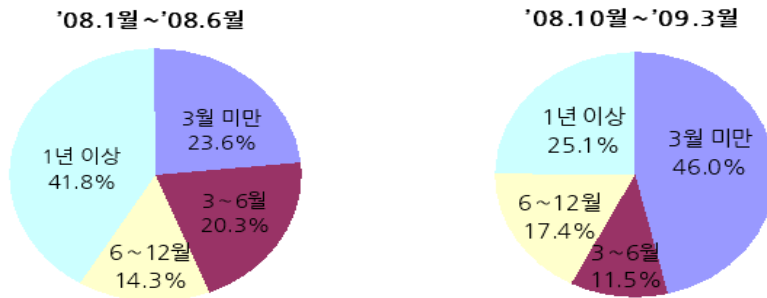
- ⇒ 특히, '08년 말 이후 검찰·경찰의 불법 사금융 집중단속으로 불법 대부업체의 영업이 제한을 받게 되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대형 대부업체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대출형태) 신용대출 및 단기·소액 대출의 비중 증가

- 경기침체에 따라 생활비관련 대출은 증가한 반면, 사업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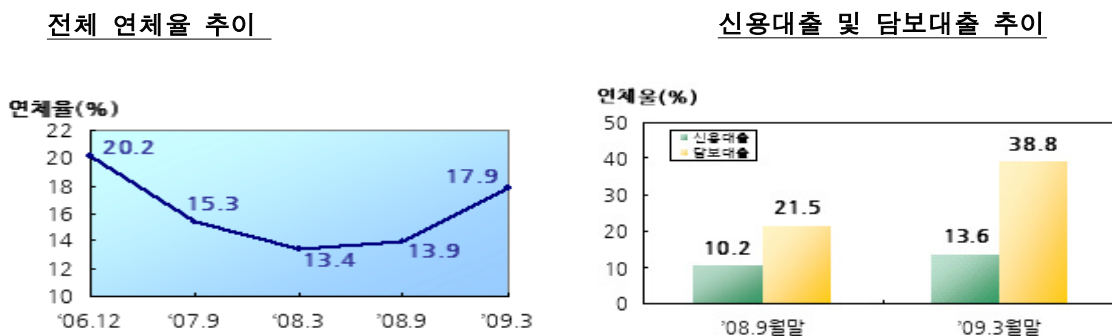
- '08.1월 ~ 6월 기간중에는 1년이상 이용자가 41.8%로 가장 많았으나, '08.10월 ~ '09.3월 기간에는 3월 미만 이용자가 46.0%로 가장 많았음





-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출 수요 증가와 더불어 법인 대부업체들의 보수적(소액화) 운용에 따라 단기·소액·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

□ (연체율 상승)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형 법인의 연체율 상승

- 특히, 담보대출 연체율(38.8%)이 신용대출 연체율(13.6%)의 3배 수준



- 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소득원은 적으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용대출보다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 | |
|---|---|---|
|  금융위원회 |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10px 0 0 0;">2010. 5. 20. [木] 석간 보도</p> |  금융감독원 |
|---|---|---|

| | | | |
|-------|--|-------|--|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금융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 |
| 책 임 자 | 배준수 과장 (2156-9850) 이한구 실장 (3145-8150) | 담 당 자 | 장석인 사무관 (2156-9855) 박원형 팀장 (3145-8140) |
| 배 포 일 | 2010. 5. 19. | 배포부서 | 정책홍보팀(2156-9542 ~ 48) 총 13매 공보실(3145-5788 ~ 91) |

제 목 :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 ☐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는 금융위(금감원)와 행안부(지자체) 공동으로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07.6)한 바 있으며

* 금융위원장(의장), 기획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 이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 '09.12월부터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

2. 조사 개요

- ☐ 조사 기준일 : '09.12.31

- ☐ 조 사 대 상 : 전국 등록대부업체(14,783개*)

* '09. 3월말 (15,723개) 대비 940개(6.0%) 감소

- ☐ 조 사 방 법 : 시·도지사가 설문을 통해 실태 조사

- ☐ 보고서 제출업체수 : 10,554개(보고서 제출율 71.4%)

* '09. 3월말 기준 조사시 보고서 제출율 67.6%

3. 조사결과 분석

<붙임>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09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I. 개 요

- '09.12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자는 14,783개사로 '09.3월말 (15,723개) 대비 6.0% (△940개) 감소
 - 영업형태별로는 대부업체가 10,904개, 대부 및 대부중개 겸업업체가 2,075개, 대부중개업체가 1,804개임
- 이중 10,554개 업체가 보고서를 제출* (응답률 71.4%) 하여 '09.3월말 (67.6%) 대비 3.8%p 상승

* 자산 70억원 이상 100개, 자산 70억원 미만(지점포함) 920개, 개인 9,534개

※ 보고서 제출율 : '08.9월말 64.5% → '09.3월말 67.6% → '09.12월말 71.4%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p)

| 구 분 | | '09.3월말 (A) | | '09.12월말 (B) | | 증 감 (B-A) | |
|-----|-----------|-------------|---------------|--------------|---------------|-----------|------------|
| | | 등 록 | 제 출 (율) | 등 록 | 제 출 (율) | 등 록 | 제 출 (율) |
| 법 인 | 자산 70억원이상 | 100 | 96 (96.0) | 100 | 100 (100.0) | - | 4 (4.0) |
| | 자산 70억원미만 | 1,131 | 849 (75.0) | 1,251 | 920 (73.5) | 120 | 71 (△1.5) |
| 개 인 | | 14,492 | 9,687 (66.8) | 13,432 | 9,534 (71.0) | △1,060 | △153 (4.2) |
| 합 계 | | 15,723 | 10,632 (67.6) | 14,783 | 10,554 (71.4) | △940 | △78 (3.8) |

II.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0,554개사중 대출잔액이 없거나(2,710개)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151개) 등 3,094개사를 제외한 **7,460개사**(대부업 6,688개, 대부중개업 610개, 겸업 162개)를 대상으로 분석

1 전국 대부업체 영업 현황

대출 현황

□ '09.12월 말 현재 **6,850개*** 대부업체가 **1,674,437명**에게 **5조 9,114억원**을 대출

* 분석대상업체 7,460개 중 대부중개업체(610개) 제외

◦ '09.3월말 대비 분석업체가 감소(△976개) 하였음에도 대출금은 증가(↑14.6%, ↑7,538억원)

- '09.3월 실태조사 분석대상과 동일한 업체(3,206개)의 대출추이 비교시에도 '09.3월말 대비 증가(↑7,581억원)

□ 1인당 대출금은 3.5백만원으로 '09.3월말(3.6백만원) 대비 10만원 감소

◦ 일부 대형 대부업체에서 소액 신용대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거 래 자 | | | 대 출 금 | | | 1인당 대출금 (백만원) |
|------------|-----------|-----------|----------------|---------|----------|--------------|---------------------|
| | '09.3월말 | '09.12월말 | 증 감(율) | '09.3월말 | '09.12월말 | 증 감(율) | |
| 자산 70억원 이상 | 1,212,652 | 1,397,805 | 185,153 (15.3) | 44,748 | 50,722 | 5,974 (13.4) | 3.6 |
| 자산 70억원 미만 | 55,725 | 106,590 | 50,865 (91.3) | 3,092 | 4,627 | 1,535 (49.6) | 4.3 |
| 개 인 | 163,279 | 170,042 | 6,763 (4.1) | 3,737 | 3,765 | 28 (0.7) | 2.2 |
| 합 계 | 1,431,656 | 1,674,437 | 242,781 (17.0) | 51,576 | 59,114 | 7,538 (14.6) | 3.5 |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 신용대출이 4조 6,445억원으로 전체 대출금 (5조 9,114억원) 의 78.6%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이 1조 2,669억원으로 21.4%를 차지
 - '09.3월말 대비 신용대출은 15.1% (↑6,084억원), 담보대출은 13.0% 증가 (↑1,454억원)
-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백만원이며, 담보대출금은 1천만원
-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41.2%로 '09.3월말 대비 2.8%p 상승* 하였으며, 담보대출 평균 금리 (19.5%) 도 3.9%p 상승**

* 고금리 신용대출(법정최고이자 49% 수취) 취급 대형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 일부 저금리(10%미만) 담보대출 취급 업체가 신규대출을 제한하여 대출 비중이 줄어든 데 기인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억원, %, %p)

| 구 분 | | '09.3월말 (A) | '09.12월말 (B) | 증 감 (B-A) |
|------------------|-------|-------------|--------------|-----------|
| 자 산 70억 원 이 상 | 신용대출금 | 36,802 | 42,152 | 5,350 |
| | 금 리 | 38.4 | 41.6 | 3.2 |
| | 담보대출금 | 7,946 | 8,570 | 624 |
| | 금 리 | 10.2 | 12.4 | 2.2 |
| 자 산 70억 원 미 만 | 신용대출금 | 1,928 | 2,790 | 862 |
| | 금 리 | 34.1 | 37.9 | 3.8 |
| | 담보대출금 | 1,164 | 1,837 | 673 |
| | 금 리 | 30.2 | 36.6 | 6.4 |
| 개 인 | 신용대출금 | 1,631 | 1,503 | △128 |
| | 금 리 | 42.3 | 35.7 | △6.6 |
| | 담보대출금 | 2,106 | 2,262 | 156 |
| | 금 리 | 37.7 | 32.6 | △5.1 |
| 합 계 | 신용대출금 | 40,361 | 46,445 | 6,084 |
| | 금 리 | 38.4 | 41.2 | 2.8 |
| | 담보대출금 | 11,215 | 12,669 | 1,454 |
| | 금 리 | 15.6 | 19.5 | 3.9 |

2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현황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심업체, 검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 등 21개사를 제외한 79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대출 현황

- '09.12월말 현재 자산규모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79개) 의 대출금은 5조 722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85.8%를 차지
 - 거래자수는 1,397,805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3.5%
 - 대출금 및 거래자 모두 '09.3월말 대비 증가 (각 ↑13.4%, ↑15.3%)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642억원, 평균 거래자는 17,694명
- 신용대출 (4조 2,152억원) 은 이들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83.1%를 차지하고, '09.3월말 대비 14.5% 증가
 - 담보대출 (8,570억원, 총 대출의 16.9%) 은 '09.3월말 대비 7.9% 증가
- 개인대출은 증가* (↑20.1%) 한 반면, 법인대출은 감소 (△12.6%)

* 대형 대부업체가 개인신용대출 (↑24.2%) 위주로 영업을 확대한 데 기인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 거 래 자 | | | | 대 출 금 | | | |
|-----|-----|-----------|-----------|---------|---------|---------|----------|--------|---------|
| | | '09.3월말 | '09.12월말 | 증 감 | (율) | '09.3월말 | '09.12월말 | 증 감 | (율) |
| 개 인 | 신 용 | 1,203,311 | 1,385,649 | 182,338 | (15.2) | 29,563 | 36,707 | 7,144 | (24.2) |
| | 담 보 | 4,434 | 7,156 | 2,722 | (61.4) | 5,924 | 5,919 | △5 | (△0.1) |
| | 소 계 | 1,207,745 | 1,392,805 | 185,060 | (15.3) | 35,487 | 42,626 | 7,139 | (20.1) |
| 법 인 | 신 용 | 3,293 | 3,587 | 294 | (8.9) | 7,239 | 5,445 | △1,794 | (△24.8) |
| | 담 보 | 1,614 | 1,413 | △201 | (△12.5) | 2,021 | 2,651 | 630 | (31.2) |
| | 소 계 | 4,907 | 5,000 | 93 | (1.9) | 9,261 | 8,096 | △1,165 | (△12.6) |
| 전 체 | 신 용 | 1,206,604 | 1,389,236 | 182,632 | (15.1) | 36,802 | 42,152 | 5,350 | (14.5) |
| | 담 보 | 6,048 | 8,569 | 2,521 | (41.7) | 7,946 | 8,570 | 624 | (7.9) |
| | 계 | 1,212,652 | 1,397,805 | 185,153 | (15.3) | 44,748 | 50,722 | 5,974 | (13.4) |

대출금액별 현황

- 차주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금은 3조 428억원으로 이들 업체 총 대출의 60.0%를 차지 ('09.3월말 56.1%)
 - 5백만원 이하 대출 중 신용대출 (3조 359억원) 이 99.8%를 차지
 - 5백만원 이하 거래자의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3백만원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금액대별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5백만원 이하 거래자 (비율) | | 5백만원 이하 대출금 (비율) | |
|------|------------------|------------------|------------------|---------------|
| | '09.3월말 | '09.12월말 | '09.3월말 | '09.12월말 |
| 신용대출 | 1,155,104 (95.7) | 1,309,488 (94.3) | 25,076 (68.1) | 30,359 (72.0) |
| 담보대출 | 2,121 (35.1) | 3,155 (36.8) | 30 (0.4) | 69 (0.8) |
| 합 계 | 1,157,225 (95.4) | 1,312,643 (93.9) | 25,106 (56.1) | 30,428 (60.0) |

주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신용·담보·총대출에서 5백만원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임

연체 현황

- '09.12월말 연체율은 13.2%로 '09.3월말 (17.9%) 대비 4.7%p 하락
 - 연체율 하락은 대출금이 증가 (↑5,974억원) 하고, 연체금이 감소 (△1,313억원) 한 데 기인
 - ※ 영업유형별 연체율 : 전업업체 13.9%, 겸업업체 4.6%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 구 분 | | '09.3월말 연체비율 (A) | '09.12월말 | | | 비율증감 (B-A) |
|-----|------|---------------------|-----------|---------|---------|---------------|
| | | | 전 체 | 연 체 | 비 율 (B) | |
| 대출금 | 신용대출 | 13.6 | 42,152 | 4,672 | 11.1 | △2.5 |
| | 담보대출 | 38.8 | 8,570 | 2,025 | 23.6 | △15.2 |
| | 계 | 17.9 | 50,722 | 6,697 | 13.2 | △4.7 |
| 거래자 | 신용대출 | 13.2 | 1,389,236 | 165,268 | 11.9 | △1.3 |
| | 담보대출 | 30.9 | 8,569 | 3,312 | 38.7 | 7.8 |
| | 계 | 13.3 | 1,397,805 | 168,580 | 12.1 | △1.2 |

신규대출 이용자

- '09.7월 ~ '09.12월중 신규대출 (1조 3,685억원) 이용자의 57.4% (7,855억원)가 회사원이고, 18.9% (2,582억원)는 자영업자임
- 주요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 충당 (4,583억원, 33.5%) 및 사업자금 조달 (2,760억원, 20.2%)이 많음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 직업 | 대출목적 | | | | | 계 (점유비) | |
|-------|-------|-------|------|-------|-------|---------|---------|
| | 사업자금 | 타대출상환 | 물품구매 | 생활비 | 기타 | | |
| 자영업 | 1,018 | 300 | 63 | 500 | 701 | 2,582 | (18.9) |
| 공무원 | 17 | 83 | 13 | 182 | 118 | 413 | (3.0) |
| 회사원 | 408 | 1,353 | 361 | 3,333 | 2,400 | 7,855 | (57.4) |
| 학생·주부 | 69 | 88 | 16 | 394 | 248 | 815 | (6.0) |
| 기타 | 1,248 | 93 | 86 | 174 | 419 | 2,020 | (14.7) |
| 합계 | 2,760 | 1,917 | 539 | 4,583 | 3,886 | 13,685 | (100.0) |

대출이용기간

- '09.7월 ~ '09.12월 이용자 (대출상환액 기준) 중 45.2% (4,192억원)는 1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고, 24.3% (2,252억원)는 3개월 내 상환

대출상환액의 대출기간별 현황

(단위 : 억원, %)

| 대출상환액 | 3월 미만 | 3~6월 미만 | 6~12월 미만 | 1년 이상 |
|-------|--------|---------|----------|--------|
| 9,266 | 2,252 | 1,304 | 1,518 | 4,192 |
| (비율) | (24.3) | (14.1) | (16.4) | (45.2) |

주 : 평균대출기간을 응답한 63개사의 '09.7~12월 중 대출상환액 기준임

업체별 현황

- 영업형태별로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79개) 중 전업업체가 55개사 (69.6%), 겸업업체*가 24개사 (30.4%)

* 대부업 이외 제조업 등 기타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겸업업체로 분류

- 전업업체 대출금이 4조 6,959억원으로 이들 업체 대출금의 92.6%를 차지 (겸업업체 : 대출금 3,763억원, 비중 7.4%)

※ 1인당 대출금 : 전업업체 (3.5백만원), 겸업업체 (8.4백만원)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전업·겸업업체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전업업체 (55사) | 겸업업체 (24사) | 합 계 (79사) |
|-----|------------------|--------------|-------------------|
| 거래자 | 1,353,173 (96.8) | 44,632 (3.2) | 1,397,805 (100.0) |
| 대출금 | 46,959 (92.6) | 3,763 (7.4) | 50,722 (100.0) |

주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전체 거래자, 대출금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 한편, 취급상품별로는 신용대출 전문업체*가 43개사 (54.4%), 담보대출 전문업체가 26개사 (32.9%), 신용 및 담보대출 전문업체가 10개사 (12.7%)

* 전체 대출금중 해당 대출금 비중이 80% 이상인 경우 전문업체로 분류

- 대출금은 신용대출업체가 82.8% (4조 2,005억원), 담보대출업체가 14.3% (7,240억원), 신용 및 담보대출업체가 2.9% (1,477억원)

※ 1인당 대출금 : 신용대출업체 (3백만원), 담보대출업체 (53백만원),
담보 및 신용대출 업체 (42백만원)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영업형태별 대출현황

(단위 : 억원, %)

| 구 분 | 신용대출업체 (43사) | 담보대출업체 (26사) | 신용및 담보대출업체 (10사) | 합 계 (79사) |
|-----|------------------|--------------|------------------|-------------------|
| 거래자 | 1,380,677 (92.7) | 13,589 (1.0) | 3,539 (0.3) | 1,397,805 (100.0) |
| 대출금 | 42,005 (82.8) | 7,240 (14.3) | 1,477 (2.9) | 50,722 (100.0) |

주 : ()내는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 전체 거래자, 대출금에서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임

3

자산 7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 현황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411개사 (대부업 395개, 중개업겸업 16개), 개인 대부업자는 6,360개사 (대부업 6,214개, 중개업겸업 146개)를 대상으로 분석

대출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411개) 의 대출금은 4,627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7.8% 차지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11.3억원, 평균 거래자수는 259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4.3백만원
- 개인 대부업자 (6,360개)의 대출금은 3,765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6.4% 차지
 - 개인 대부업자의 평균 대출금은 59백만원, 평균 거래자수는 27명
 - 거래자 1인당 평균 대출금은 2.2백만원
- 자산 70억원 미만(60.3%) 및 개인 대부업자(39.9%)의 신용대출 비중은 자산 70억원 이상 업체 신용대출 비중(90.8%)을 크게 하회
 - 신용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에 비해 대출심사 노하우,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등 인적·물적 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어 영세업체의 경우 신용대출 취급이 어려움

자산 7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의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p)

| 구 분 | 자산 70억 미만 | | | 개 인 | | |
|---------|--------------|--------------|-----------|--------------|--------------|------------|
| | '09.3월말 | '09.12월말 | 증 감 | '09.3월말 | '09.12월말 | 증 감 |
| 거래자 | 55,725 | 106,590 | 50,865 | 163,279 | 170,042 | 6,763 |
| 대출금 | 3,092 | 4,627 | 1,535 | 3,737 | 3,765 | 28 |
| 신용(점유비) | 1,928 (62.4) | 2,790 (60.3) | 862(△2.1) | 1,631 (43.6) | 1,503 (39.9) | △128(△3.7) |
| 담보(점유비) | 1,164 (37.6) | 1,837 (39.7) | 673 (2.1) | 2,106 (56.4) | 2,262 (60.1) | 156 (3.7) |
| 1인당 대출금 | 5.5 | 4.3 | △1.2 | 2.3 | 2.2 | △0.1 |

지역별 현황

- 자산 70억원 미만 대부업체 (411개) 는 서울 (231개, 56.2%), 경기 (66개, 16.1%), 인천 (13개, 3.2%) 등 수도권이 310개로 75.5%를 차지
 - 개인 대부업자(6,360개)는 수도권이 3,319개로 52.1%를 차지
- 거래자 (106,590명) 는 서울 (71,314명, 66.9%), 경기 (7,161명, 6.7%), 인천 (2,643명, 2.5%) 등 수도권이 81,118명으로 76.1% 차지
 - 개인 대부업자 거래자(170,042명)는 수도권이 85,904명으로 50.5% 차지
- 대출금(4,627억원)은 서울 (3,491억원, 75.4%), 경기 (417억원, 9.0%), 인천 (201억원, 4.3%) 등 수도권이 4,109억원으로 88.8% 차지
 - 개인 대부업자 대출금(3,765억원)은 수도권이 2,654억원으로 70.5% 차지

자산 7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의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 구 분 | 자산 70억원 미만 법인 | | | | 개 인 | | | |
|-----|---------------|---------|-------|-----------------|-------|---------|-------|-----------------|
|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1인당대출금 (백만원)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1인당대출금 (백만원) |
| 서울 | 231 | 71,314 | 3,491 | 4.9 | 1,864 | 45,654 | 1,742 | 3.8 |
| 부산 | 21 | 19,466 | 163 | 0.8 | 686 | 27,973 | 278 | 1.0 |
| 대구 | 12 | 898 | 34 | 3.8 | 320 | 12,549 | 91 | 0.7 |
| 인천 | 13 | 2,643 | 201 | 7.6 | 264 | 9,829 | 142 | 1.4 |
| 광주 | 15 | 407 | 25 | 6.1 | 155 | 3,587 | 78 | 2.2 |
| 대전 | 16 | 2,890 | 134 | 4.6 | 280 | 4,228 | 87 | 2.1 |
| 울산 | 1 | 3 | 0.05 | 1.7 | 153 | 4,607 | 45 | 1.0 |
| 경기 | 66 | 7,161 | 417 | 5.8 | 1,191 | 30,421 | 770 | 2.5 |
| 강원 | 3 | 41 | 8 | 19.5 | 218 | 4,022 | 75 | 1.9 |
| 충북 | 1 | 45 | 1 | 2.2 | 160 | 2,673 | 55 | 2.1 |
| 충남 | 9 | 353 | 22 | 6.2 | 183 | 2,520 | 91 | 3.6 |
| 전북 | 6 | 263 | 13 | 4.9 | 153 | 1,991 | 54 | 2.7 |
| 전남 | 1 | 21 | 0.03 | 0.1 | 120 | 2,089 | 39 | 1.9 |
| 경북 | 3 | 67 | 13 | 19.4 | 200 | 4,264 | 57 | 1.3 |
| 경남 | 7 | 665 | 45 | 6.8 | 373 | 12,620 | 143 | 1.1 |
| 제주 | 6 | 353 | 59 | 16.7 | 40 | 1,015 | 18 | 1.8 |
| 계 | 411 | 106,590 | 4,627 | 4.3 | 6,360 | 170,042 | 3,765 | 2.2 |

4

전국 대부중개업체 영업 현황

법인 대부중개업체 54개사(중개업 38개, 대부업겸업 16개), 개인 대부중개업체 718개사(중개업 572개, 대부업겸업 146개)를 대상으로 분석

- '09.7월 ~ '09.12월중 대부중개업체 (772개)의 대부중개 금액은 7,479억원 (중개건수 250,814건)
 - 법인 업체 (54개)의 대부중개 금액은 6,131억원, 중개건수는 225,891건
 - 중개실적 상위 4개 업체가 전체 중개금액의 66.8%(4,999억원) 차지
 - 개인업체 (718개)의 대부중개 금액은 1,348억원 (중개건수 24,923건)
- 업체당 평균 중개금액은 9.7억원, 평균 중개건수는 325건
 - ※ 법인 업체별 : 평균 중개금액 114억원, 평균 중개건수 4,183건
 - ※ 개인 업체별 : 평균 중개금액 1.9억원, 평균 중개건수 35건
- 동 기간중 대부중개업체는 총 454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 (전체 중개금액의 6.1%)
 - 법인 업체가 404억원 (중개금액의 6.6%), 개인 업체가 50억원 (3.7%)

법인 및 개인 대부중개업체 중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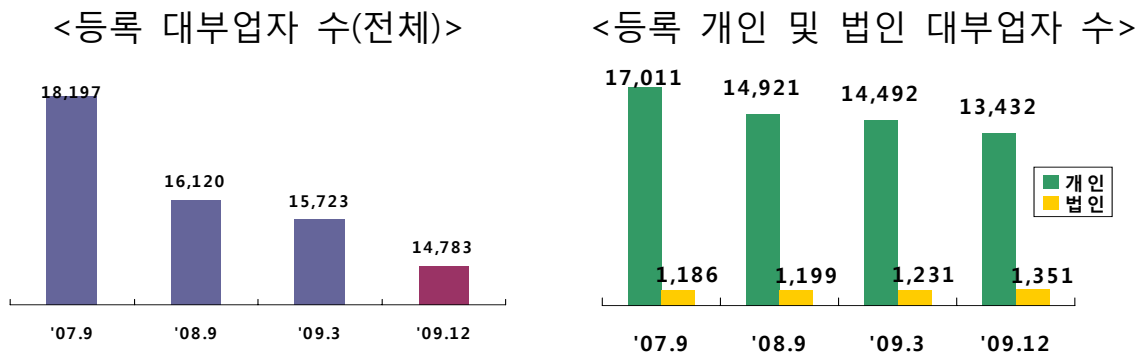
(단위 : 개, 건, 억원, %)

| 구 분 | 업체수 | 중개건수 | 중개금액 | 수입수수료 | (율) |
|-----|-----|---------|-------|-------|-----|
| 법 인 | 54 | 225,891 | 6,131 | 404 | 6.6 |
| 개 인 | 718 | 24,923 | 1,348 | 50 | 3.7 |
| 합 계 | 772 | 250,814 | 7,479 | 454 | 6.1 |

Ⅲ. 시사점

① 등록 대부업자 수 지속 감소

- 불법 대부업자 단속 강화 및 등록증 재교부시('09.4~7월)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의 자진폐업 증가로 등록 대부업자 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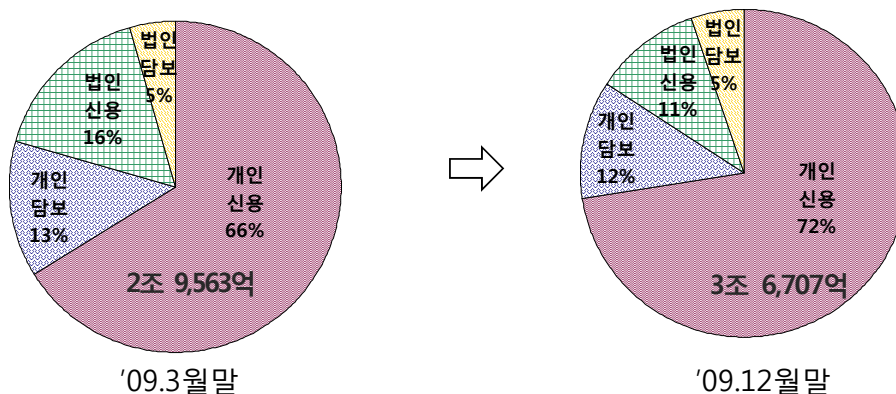
- 향후에도 제도권 금융회사의 서민대출 확대 및 최고이자율 인하(연 49% → 연 44%) 등에 따라 경쟁력이 낮은 중·소형 대부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폐업 대부업체가 음성화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단속 강화 필요

② 개인신용대출 확대

- 대형 대부업체가 개인신용대출 위주로 영업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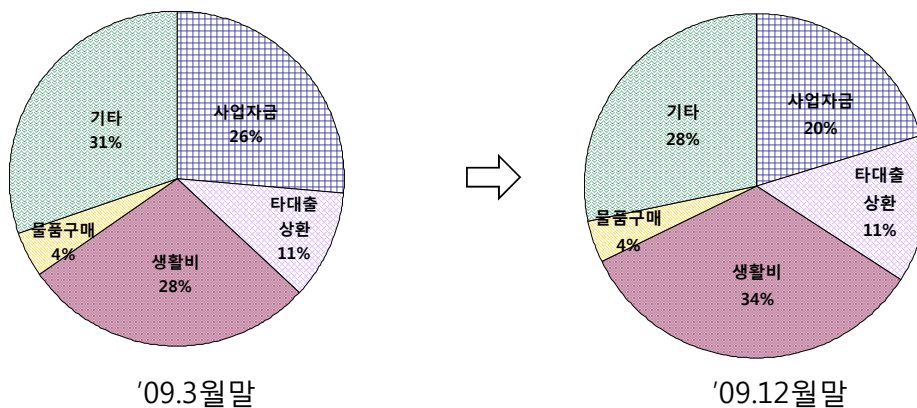
<개인신용대출 추이 (자산 70억원 이상 업체 기준)>



- 이자율이 최고이자율(연 49%)에 근접*한 개인신용대출의 확대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금리 상승

* 전업업체 55개사중 30개사가 연 45% 이상 금리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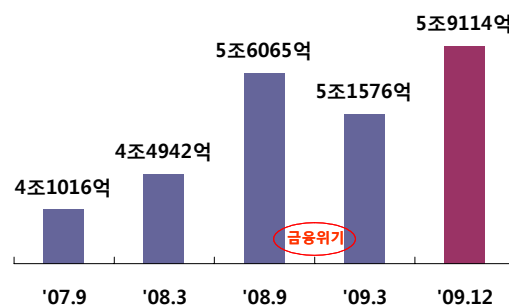
- 대부업자등의 개인신용대출 확대에 따라 소액인 생활비 목적 대출 비중 증가



③ 대부업체 수익성 개선



- 경기 회복세에 따라 자금조달이 용이해져 대출규모 증가

<대부 시장 규모>



- 특히 이자율이 높은 개인신용대출이 크게 확대되어 대부업자의 이익 증가

⇒ 자산 70억원 이상 대부업체(대출잔액이 있는 79개 업체)의 경우 '09 회계연도 중 3,10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

| | | |
|---|--|---|
|  금융위원회 |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10px 0 0 0;">11. 3(수), 13:30분부터 보도가능</p> |  금융감독원 |
|---|--|---|

| | | | |
|-------|--|-------|--|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 |
| 책 임 자 | 배준수 과장 (2156-9850) 조성목 실장 (3145-8150) | 담 당 자 | 이동욱 사무관 (2156-9855) 박원형 팀 장 (3145-8140) |
| 배 포 일 | 2010. 11.3(水) | 배포부서 | 정책홍보팀(2156-9542 ~ 48) 총 13매 공보실(3145-5788 ~ 91) |

제 목 : ‘10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 ☐ 대부업정책협의회*는 금융위(금감원)와 행안부(지자체) 공동으로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07.6)

* 금융위원장(의장), 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안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시·도 지사는 '10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7월부터 실시

2. 조사 개요

- ☐ 조사 기준일 : '10.6.30

- ☐ 조사 대상 : 전국 등록대부업체(**15,380개***) 【'10.1.1 ~ '10.6.30】

* '09.12월말(14,783개) 대비 597개(4.0%) 증가

- ☐ 조사 방법 : 제출된 사업보고서 및 기타 설문조사 결과

- ☐ 보고서 제출업체수 : **11,277개** (보고서 제출율 73.3%)

* 이중 분석대상 보고서는 7,666개 (대출잔액이 없거나, 작성오류 업체는 제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 결과

① 대부업 시장규모 증가추세

- 그동안 등록 대부업체수는 감소추세였으나, '10.6월말 현재 15,380개로 전년말대비 4% 증가
- 전년말대비 대부업체 거래자수(13.1%)와 대출규모(15.3%)는 증가세

| 구 분 | '07.9말 | '08.9말 | '09.3말 | '09.12말 (A) | '10.6말 (B) | 증감율 (B-A)/A |
|--------------|---------|-----------|-----------|----------------|---------------|-------------------|
| 등록업체수 (개) | 18,197 | 16,120 | 15,723 | 14,783 | 15,380 | 597 (4.0) |
| 거래자수 (명) | 893,377 | 1,307,271 | 1,431,656 | 1,674,437 | 1,893,535 | 219,098 (13.1) |
| 대출금액 (억원) | 41,016 | 56,065 | 51,576 | 59,114 | 68,158 | 9,044 (15.3) |

② 대형 대부업체의 시장지배력 증가

- 직권검사 대상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85개사 대출금은 약 5.9조원
 - 전체 대부시장 대출규모의 86.9% 차지(전년말 84.9%)
- 또한, 대형업체 거래이용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전체 거래자의 88%(167만명)가 대형업체를 이용

③ 개인신용대출 확대 및 평균대출금리 상승세

- 개인소액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대형업체의 영업확대 결과, 신용대출 비중이 전체대출의 80.0%(전년말 78.6%)로 확대되고,
 - 대형대부업체의 신용대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신용대출 평균금리도 연42.3%로 전년말보다 1.1%p 상승

④ 생활비 충당목적의 신규대출 증가세

- 신규대출금(1조5,261억원)중 회사원의 대출비중이 가장 높았고(57.5%),
- 생활비 충당을 위한 대출수요가 43.6%로 가장 높음(전년말 33.5%)

* 신규대출금 대출비중 : 회사원 > 자영업 > 기타 > 학생 및 주부 > 공무원

** 신규대출금 대출목적 : 생활비 > 기타 > 사업자금 > 타대출상환 > 물품구매

4. 시사점 및 대응방향

① 서민금융시장의 다양화·활성화 추진

- 금번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등록 대부업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활비 목적의 신규대출 비중이 늘어난 점을 감안시, 서민들의 단기자금 수요가 광범위하게 잠재되어 있음을 시사

-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시장의 부진 및 소득창출 기회의 미흡, 제도권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금번 결과는 햇살론 개시('10.7.26)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한 점을 감안할 필요

- 정부는 서민들의 자활의지를 돕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햇살론미소금융신용회복프로그램 등 서민금융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

⇒ 앞으로도 서민의 금융소외현상을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

② 최고이자율 추가인하 추진 검토

- 연49% 최고이자율(7.21일부터 연44%)에 근접한 개인소액신용대출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고금리 대출관행 형성

- 최근 단기신용대출시장의 성장세와 일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수익력을 감안할 때 업계 스스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율 인하노력 필요

⇒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를 보아가면서 1년 이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③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 관리 필요성 증가

- 전체 대부시장의 80% 이상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의 대형대부업체들이 시장지배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상황

- 이들 대형업체의 평균 거래자수가 1만 7천여명임을 감안할때 금융이용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 필요

⇒ 일정규모 이상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직접 관리·감독하고, 중·소형업체는 지자체가 밀착 관리하는 시스템 개편추진

* 11월초 현재 KDI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내년 초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④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대부시장의 관리·감독 강화

- 금번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통해 관계기관과 논의하여 대부업 관리·감독상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나갈 예정

<붙임 : 2010년도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



2010년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0. 11

I. 개 요

- '10.6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는 15,380개사로 '09.12월말 (14,783개) 대비 4.0%(597개) 증가

※ 영업형태별 : 대부업 11,423개, 대부중개업 2,007개, 대부및대부중개업 1,950개

대부업체 등록 및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p)

| 구 분 | | '09.12월말 (A) | | '10.6월말 (B) | | 증 감 (B-A) | |
|-----|------------|--------------|---------------|-------------|---------------|-----------|-----------|
| | | 등 록 | 제 출 (율) | 등 록 | 제 출 (율) | 등 록 | 제 출 (율) |
| 법 인 | 자산 100억원이상 | 83 | 83 (100.0) | 101 | 100 (99.0) | 18 | 17 (1.0) |
| | 자산 100억원미만 | 1,268 | 937 (73.9) | 1,542 | 1,124 (72.9) | 274 | 187 (1.0) |
| 개 인 | | 13,432 | 9,534 (66.8) | 13,737 | 10,053 (73.2) | 305 | 519 (6.4) |
| 합 계 | | 14,783 | 10,554 (67.6) | 15,380 | 11,277 (73.3) | 597 | 723 (5.7) |

- 지역별로는 서울 (2,452개), 경기 (1,209개), 인천 (276개) 등 수도권에 56.7%(3,937개)가 집중*

전국 지역별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 구 분 |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 | |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 | | 개 인 | | |
|-----|----------------|-----------|--------|----------------|--------|-------|-------|---------|-------|
|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 서울 | 73 | 1,646,797 | 57,579 | 271 | 41,911 | 3,568 | 2,108 | 45,298 | 1,885 |
| 인천 | 1 | 2,215 | 169 | 12 | 1,618 | 141 | 263 | 9,086 | 147 |
| 경기 | 4 | 10,724 | 857 | 77 | 7,182 | 594 | 1,128 | 28,735 | 781 |
| 부산 | 4 | 14,234 | 400 | 17 | 6,639 | 182 | 639 | 23,331 | 245 |
| 대구 | 1 | 6 | 7 | 10 | 139 | 20 | 308 | 8,079 | 84 |
| 광주 | - | - | - | 16 | 1,058 | 78 | 158 | 3,595 | 76 |
| 대전 | - | - | - | 15 | 5,125 | 237 | 258 | 3,622 | 101 |
| 울산 | - | - | - | 1 | 7 | 1 | 143 | 3,984 | 44 |
| 강원 | - | - | - | 3 | 39 | 7 | 202 | 3,525 | 66 |
| 충북 | - | - | - | 1 | 51 | 2 | 137 | 2,399 | 47 |
| 충남 | - | - | - | 13 | 533 | 31 | 179 | 1,998 | 105 |
| 전북 | - | - | - | 6 | 255 | 13 | 152 | 2,175 | 60 |
| 전남 | - | - | - | 2 | 51 | 5 | 127 | 2,869 | 41 |
| 경북 | 2 | 7 | 233 | 4 | 63 | 22 | 208 | 4,384 | 69 |
| 경남 | - | - | - | 11 | 797 | 50 | 341 | 9,641 | 120 |
| 제주 | - | - | - | 7 | 388 | 74 | 44 | 975 | 17 |
| 계 | 85 | 1,673,983 | 59,245 | 466 | 65,856 | 5,025 | 6,395 | 153,696 | 3,888 |

* 지역별 현황은 실태조사 분석이 가능한 업체(6,946개)를 대상으로 작성

II.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1,277개사중 대출잔액이 없거나(3,058개)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183개) 등 3,611개사를 제외한 7,666개사 중 대부실적을 제출한 6,946개를 대상으로 분석

1 전국 현황

대출 현황

□ '10.6월말 기준, 6,946개 대부업체가 189만명에게 총 6조 8,158 억원을 대출

◦ '09.12월말 대비 대출금은 15.3%(9,044억원), 거래자는 13.1% (219,098명) 증가

* '09.12월말 실태조사 분석대상과 동일한 업체(4,075개)의 대출추이 비교시에도 14.6%(7,771억원) 증가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거 래 자 | | | | 대 출 금 | | | |
|-------------|-----------|-----------|-----------|-----------------|---------|----------|---------|--------------|
| | '09.3월말 | '09.12월말 | '10.6월말 | 증 감 (율) | '09.3월말 | '09.12월말 | '10.6월말 | 증 감 (율) |
| 자산 100억원 이상 | 1,188,787 | 1,390,891 | 1,673,983 | 283,092 (20.4) | 44,202 | 50,194 | 59,245 | 9,051 (18.0) |
| 자산 100억원 미만 | 79,570 | 113,504 | 65,856 | △47,648 (△42.0) | 3,637 | 5,155 | 5,025 | △130 (△2.5) |
| 개 인 | 163,279 | 170,042 | 153,696 | △16,346 (△9.6) | 3,737 | 3,765 | 3,888 | 123 (3.3) |
| 합 계 | 1,431,656 | 1,674,437 | 1,893,535 | 219,098 (13.1) | 51,576 | 59,114 | 68,158 | 9,044 (15.3) |

대출유형 및 대출금리 현황

□ (유형별) 신용대출이 5조 4,539억원으로 전체 대출금(6조 8,158억원)의 80.0%를 차지하고, 담보대출이 1조 3,619억원으로 20.0%를 차지

◦ '09.12월말 대비 신용대출은 17.4%* (↑8,094억원), 담보대출은 7.5% 증가 (↑950억원)

-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06만원으로 전년(3백만원)과 유사

대출유형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자산 100억원 이상 | | 자산 100억원 미만 | | 개 인 | |
|------|-------------|--------|-------------|-------|---------|-------|
| | 거래자 | 대출금 | 거래자 | 대출금 | 거래자 | 대출금 |
| 신용대출 | 1,666,243 | 50,523 | 58,652 | 2,497 | 54,935 | 1,519 |
| 담보대출 | 7,740 | 8,722 | 7,204 | 2,528 | 98,761 | 2,369 |
| 합 계 | 1,673,983 | 59,245 | 65,856 | 5,025 | 153,696 | 3,888 |

- (대출금리) 신용대출 금리는 연 42.3%*(↑1.1%p), 담보대출 금리는 연 18.3%(△1.2%p)로 '09.12월과 유사

* 계열사 및 사업자 신용대출(예: 기협기술금융)을 포함한 가중평균금리

형태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억원, 연%, %p)

| 구 분 | | '09.12월말 (A) | '10.6월말 (B) | 증 감 (B-A) |
|-----------------|-------|--------------|-------------|-----------|
| 자산 100억원 이 상 | 신용대출금 | 41,914 | 50,523 | 8,609 |
| | 금 리 | 41.7 | 43.0 | 1.3 |
| | 담보대출금 | 8,280 | 8,722 | 442 |
| | 금 리 | 12.1 | 12.4 | 0.3 |
| 자산 100억원 미 만 | 신용대출금 | 3,028 | 2,497 | △531 |
| | 금 리 | 36.6 | 32.3 | △4.3 |
| | 담보대출금 | 2,127 | 2,528 | 401 |
| | 금 리 | 34.3 | 26.7 | △7.6 |
| 개 인 | 신용대출금 | 1,503 | 1,519 | 16 |
| | 금 리 | 35.7 | 36.7 | 1.0 |
| | 담보대출금 | 2,262 | 2,369 | 107 |
| | 금 리 | 32.6 | 30.7 | △1.9 |
| 합 계 | 신용대출금 | 46,445 | 54,539 | 8,094 |
| | 금 리 | 41.2 | 42.3 | 1.1 |
| | 담보대출금 | 12,669 | 13,619 | 950 |
| | 금 리 | 19.5 | 18.3 | △1.2 |

2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현황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100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심업체,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 등 15개사를 제외한 8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대출 현황

- '10.6월말 현재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85개사)의 대출금은 5조 9,245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의 86.9%를 차지
 - 거래자수는 167만명으로 전체 거래자의 88.4%
 - 대출금 및 거래자 모두 '09.12월말 대비 증가(각↑18.0%,↑20.4%)
- ※ 업체당 평균 대출금은 697억원, 평균 거래자는 19,694명
- (유형별) 신용대출은 5조 523억원으로 대형업체 총 대출금의 85.3%를 차지(전년말 83.1%)하고, '09.12월말 대비 20.5% 증가
 - 담보대출(8,722억원, 총 대출의 14.7%)은 '09.12월말 대비 5.3% 증가
- (차주별) '09.12월말 대비 개인대출은 20.5%, 법인대출은 4.5% 증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 거 래 자 | | | 대 출 금 | | |
|-----|-----|-----------|-----------|----------------|----------|---------|--------------|
| | | '09.12월말 | '10.6월말 | 증 감 (율) | '09.12월말 | '10.6월말 | 증 감 (율) |
| 개 인 | 신 용 | 1,379,525 | 1,662,567 | 283,042 (20.5) | 36,586 | 45,770 | 9,184 (25.1) |
| | 담 보 | 6,428 | 6,939 | 511 (7.9) | 5,765 | 5,279 | △486 (△8.4) |
| | 소 계 | 1,389,953 | 1,669,506 | 283,553 (20.5) | 42,351 | 51,049 | 8,698 (20.5) |
| 법 인 | 신 용 | 3,571 | 3,676 | 105 (2.9) | 5,328 | 4,753 | △575 (△10.8) |
| | 담 보 | 1,367 | 801 | △566 (△41.4) | 2,515 | 3,443 | 928 (36.9) |
| | 소 계 | 4,938 | 4,477 | △461 (△9.3) | 7,843 | 8,196 | 353 (4.5) |
| 전 체 | 신 용 | 1,383,096 | 1,666,243 | 283,147 (20.5) | 41,914 | 50,523 | 8,609 (20.5) |
| | 담 보 | 7,795 | 7,740 | △55 (△0.7) | 8,280 | 8,722 | 442 (5.3) |
| | 계 | 1,390,891 | 1,673,983 | 283,092 (20.4) | 50,194 | 59,245 | 9,051 (18.0) |

신규대출 이용자 직업

- 신규대출(1조 5,621억원) 이용자의 57.5% (8,981억원)가 회사원이고, 20.9%(3,263억원)는 자영업자 순
- 대출목적별 신규대출 규모는 생활비 충당(6,803억원, 43.6%), 사업자금 조달(3,201억원, 20.5%) 순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 직업 | 대출목적 | | | | | 계 (점유비) |
|-------|-------|-------|------|-------|-------|----------------|
| | 사업자금 | 타대출상환 | 물품구매 | 생활비 | 기타 | |
| 회사원 | 675 | 1,216 | 408 | 4,866 | 1,816 | 8,981 (57.5) |
| 공무원 | 19 | 64 | 16 | 249 | 68 | 416 (2.7) |
| 자영업 | 1,532 | 281 | 90 | 804 | 556 | 3,263 (20.9) |
| 학생·주부 | 104 | 152 | 34 | 682 | 394 | 1,366 (8.7) |
| 기타 | 871 | 36 | 90 | 202 | 396 | 1,595 (10.2) |
| 합계 | 3,201 | 1,749 | 638 | 6,803 | 3,230 | 15,621 (100.0) |

※ 생활비 점유비 : 28.2%('09.3월말) → 33.5%('09.12월말) → 43.6%('10.6월말)

대출금액

- 차주 1인당 5백만원 이하 대출금은 3조 7,819억원으로 대형 업체 총 대출잔액의 63.8% 차지('09.12월말 60.5%)
- 5백만원 이하 대출 중 신용대출(3조 7,757억원)이 99.8%를 차지

5백만원 이하 대부거래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분 | 대출금 (억원) | | 거래자 (명) | |
|------|----------|---------|-----------|-----------|
| | '09.12월말 | '10.6월말 | '09.12월말 | '10.6월말 |
| 신용대출 | 30,292 | 37,757 | 1,303,412 | 1,567,028 |
| 담보대출 | 61 | 62 | 2,869 | 3,369 |
| 합계 | 30,353 | 37,819 | 1,306,281 | 1,570,397 |

이용기간

- 장기(1년 이상)이용자 비중은 감소($\Delta 12.1\%p$)하고, 단기(3월미만)이용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uparrow 4.8\%p$)

대출상환액의 대출기간별 현황

(단위 : 억원, %)

| | 대출상환액 | 3월 미만 | 3~6월 미만 | 6~12월 미만 | 1년 이상 |
|----------|-------|--------|---------|----------|--------|
| '10.06월말 | 9,978 | 2,959 | 2,027 | 1,726 | 3,266 |
| | (비율) | (29.7) | (20.3) | (17.3) | (32.7) |
| '09.12월말 | 9,266 | 2,252 | 1,304 | 1,518 | 4,192 |
| | (비율) | (24.3) | (14.1) | (16.4) | (45.2) |

주) 평균대출기간을 응답한 60개사의 '10.상반기중 대출상환액 기준임

연체 현황

- '10.6월말 연체율은 9.0%로 '09.12월말 (8.7%) 대비 0.3%p 상승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 구 분 | | '09.12월말(A) | '10.6월말(A) | 증감(B-A) |
|-----|------|-------------|------------|--------------|
| 대출금 | 신용대출 | 7.2 | 7.7 | 0.5 |
| | 담보대출 | 14.5 | 17.9 | 3.4 |
| | 계 | 8.7 | 9.0 | 0.3 |
| 거래자 | 신용대출 | 8.4 | 7.4 | $\Delta 1.0$ |
| | 담보대출 | 33.5 | 36.8 | 3.3 |
| | 계 | 8.5 | 7.5 | $\Delta 1.0$ |

주) 저축은행 연체율 12.0%, 여전사(카드사 제외) 4.3% ('10.6월말, 30일이상 대출금연체 기준)

3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 현황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는 466개사*(대부업 445개, 중개업겸업 21개), 개인 대부업자는 6,395개사*(대부업 5,750개, 중개업겸업 645개)를 대상으로 분석

* 대부실적이 있는 제출 업체수 기준

대출 현황

-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466개)의 대출금은 5,025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7.4% 차지
- 개인 대부업자(6,395개)의 대출금은 3,888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5.7% 차지

대출 유형

- 신용대출 비중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담보대출은 증가세
 - 신용대출 비중은 자산 100억원 미만 업체는 49.7%, 개인 대부업자의 경우 39.1%로 대형업체의 신용대출 비중 85.3%에 비해 크게 하회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백만원, %, %p)

| 구 분 | 자산 100억 미만 법인 | | | 개 인 | | |
|----------|---------------|--------------|-------------|--------------|--------------|-----------|
| | '09.12월말 | '10.6월말 | 증 감 | '09.12월말 | '10.6월말 | 증 감 |
| 업체수 | 420 | 466 | 46 | 6,360 | 6,395 | 35 |
| 거래자 | 113,504 | 65,856 | △47,648 | 170,042 | 153,696 | △16,346 |
| 대출금 | 5,155 | 5,025 | △130 | 3,765 | 3,888 | 123 |
| 신용 (점유비) | 3,028 (58.7) | 2,497 (49.7) | △531 (△9.0) | 1,503 (39.9) | 1,519 (39.1) | 16 (△0.8) |
| 담보 (점유비) | 2,127 (41.3) | 2,528 (50.3) | 401 (9.0) | 2,262 (60.1) | 2,369 (60.9) | 107 (0.8) |
| 1인당 대출금 | 4.5 | 7.6 | 2.1 | 2.2 | 2.5 | 0.3 |

4

전국 대부중개업체 현황

법인 대부중개업체 74개사* (중개업 54개, 대부업겸업 20개), 개인 대부중개업자 794개사* (중개업 575개, 대부업겸업 219개)를 대상으로 분석



* 대부중개실적이 있는 제출 업체수 기준

- '10.상반기중 법인 중개업체(74개)는 총 3,435억원(중개건수 98,231건)을 중개하고, 216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수취
 -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대부중개 금액은 2,643억원(7,903건)이며, 중개 수수료는 179억원(중개금액의 6.8%)
- 한편, 개인 대부중개업자(794개)는 총 1,541억원(중개건수 37,974건)을 중개하고, 54억원(3.5%)을 중개수수료로 수취
 - 개인 중개업자당 평균 중개금액은 1.9억원, 중개건수는 48건

대부중개업체 중개현황

(단위 : 개, 건, 억원, %)

| 구 분 | 업체수 | 중개건수 | 중개금액 | 수입수수료 | (율) |
|-----------|-----|--------|-------|-------|-----|
| 법 인 | 74 | 98,231 | 3,435 | 216 | 6.3 |
| 상위 10개 업체 | 10 | 7,903 | 2,643 | 179 | 6.8 |
| 개 인 | 794 | 37,974 | 1,541 | 54 | 3.5 |

| | | |
|---|--|---|
|  금융위원회 | <h1 style="margin: 0;">보 도 자 료</h1> <p style="margin: 10px 0;">‘11.5.16(월) 조간부터 보도가능</p> |  금융감독원 |
|---|--|---|

| | | | |
|-------|--|-------|--|
| 작성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실 | | |
| 책 임 자 | 배준수 과장 (2156-9850) 조성래 실장 (3145-8150) | 담 당 자 | 이동욱 사무관 (2156-9831) 박원형 팀 장 (3145-8140) |
| 배 포 일 | 2011.5.13(금) | 배포부서 | 정책홍보팀(2156-9542 ~ 48) 총10매 공보실(3145-5788 ~ 91) |

제 목 : ‘1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 ☐ 대부업정책협의회*는 금융위(금감원)와 행안부(지자체) 공동으로 반기별로 「대부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07.6)
* 금융위원장(의장), 재정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안부 차관, 공정위 부위원장
-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에 따라, 시·도 지사는 '10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11.1월부터 실시

2. 조사 개요

- ☐ 조사 기준일 : '10.12.31
- ☐ 조사 대상 : 전국 등록대부업체(**14,014개***) 【'10.7.1 ~ '10.12.31】
* '10.6월말(15,380개) 대비 1,366개(8.9%) 감소
- ☐ 조사 방법 : 제출된 사업보고서 및 기타 설문조사 결과
- ☐ 보고서 제출업체수 : **11,194개** (보고서 제출율 79.9%)
* 이중 분석대상 보고서는 7,564개 (대출잔액이 없거나, 작성오류 업체는 제외)

3. 조사 결과 : 붙임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http://www.fss.or.kr>**<http://www.fss.or.kr>**

[붙임]

2010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1. 5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I. 개 요

- '10.12월말 현재 등록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는 14,014개*로 '10.6월말(15,380개) 대비 8.9%(1,366개) 감소

* 영업형태별 : 대부업 9,985개, 대부중개업 2,196개, 대부 및 대부중개업 1,833개

** '10.6월 비교 : 대부업 11,423개, 대부중개업 2,007개, 대부 및 대부중개업 1,950개

실태조사 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개, %, %p)

| 구 분 | | '10.6월말 (A) | | '10.12월말 (B) | | 증 감 (B-A) | |
|-----|------------|-------------|---------------|--------------|---------------|-----------|-------------|
| | | 등 록 | 제 출 (율) | 등 록 | 제 출 (율) | 등 록 | 제 출 (율) |
| 법 인 | 자산 100억원이상 | 101 | 100 (99.0) | 100 | 98 (98.0) | △ 1 | △ 2 (△1.0) |
| | 자산 100억원미만 | 1,542 | 1,124 (72.9) | 1,431 | 1,257 (87.8) | △ 111 | 133 (14.9) |
| 개 인 | | 13,737 | 10,053 (73.2) | 12,483 | 9,839 (78.8) | △ 1,254 | △ 214 (5.6) |
| 합 계 | | 15,380 | 11,277 (73.3) | 14,014 | 11,194 (79.9) | △ 1,366 | △ 83 (6.6) |

※ 보고서 제출률 : '09.12월말 71.4% → '10.6월말 73.3% → '10.12월말 79.9%

- 지역별로는 서울(2,276개), 경기(1,259개), 인천(274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총대출금(7조 5,655억원)의 96.7%(7조 3,157억원*)를 차지

* 지점 실적은 본점에 합산

전국 지역별 실태조사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 구 분 | 자산 100억원 이상 법인 | | |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 | | 개 인 | | |
|-----|----------------|-----------|--------|----------------|--------|-------|-------|---------|-------|
|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업체수 | 거래자수 | 대출금 |
| 서울 | 74 | 1,956,254 | 64,310 | 302 | 53,695 | 4,125 | 1,900 | 40,986 | 1,992 |
| 경기 | 5 | 10,496 | 816 | 81 | 7,265 | 754 | 1,173 | 31,155 | 837 |
| 인천 | 1 | 968 | 118 | 8 | 1,225 | 50 | 265 | 11,047 | 155 |
| 부산 | 3 | 406 | 45 | 14 | 6,435 | 180 | 672 | 26,524 | 425 |
| 대구 | 1 | 7 | 10 | 10 | 229 | 17 | 314 | 11,451 | 113 |
| 광주 | - | - | - | 18 | 1,308 | 102 | 150 | 3,826 | 63 |
| 대전 | - | - | - | 17 | 3,076 | 185 | 235 | 3,792 | 96 |
| 울산 | - | - | - | 1 | 12 | 4 | 128 | 4,364 | 46 |
| 강원 | - | - | - | 4 | 44 | 7 | 190 | 4,010 | 67 |
| 충북 | - | - | - | - | - | - | 134 | 2,202 | 49 |
| 충남 | - | - | - | 14 | 618 | 39 | 191 | 2,378 | 140 |
| 전북 | - | - | - | 7 | 211 | 14 | 160 | 2,309 | 78 |
| 전남 | - | - | - | 2 | 52 | 6 | 112 | 2,868 | 69 |
| 경북 | 2 | 6 | 263 | 5 | 140 | 101 | 200 | 4,718 | 80 |
| 경남 | - | - | - | 14 | 1,026 | 61 | 326 | 10,604 | 137 |
| 제주 | - | - | - | 7 | 399 | 85 | 34 | 947 | 16 |
| 계 | 86 | 1,968,137 | 65,562 | 504 | 75,735 | 5,730 | 6,184 | 163,181 | 4,363 |

* 지역별 현황은 실태조사 분석이 가능한 업체(6,774개)를 대상으로 작성

II.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11,194개사중 대출잔액이 없거나(3,153개) 작성 오류가 심한 업체(81개) 등 3,648개사를 제외한 **7,546개사**(대부업 6,064개, 대부중개업 703개, 겸업 779개)를 대상으로 분석

1 전국 현황

대출 현황

□ (총 합) '10.12월말 기준, **221만명**에게 총 **7조 5,655억원** 대출*

* 분석대상 업체 7,546개중 대부실적을 제출한 6,774개 업체 기준

◦ 전기대비 대출금은 **11.0%**(7,497억원), 거래자는 **16.6%**(31만명) 증가

* 10.6월 분석과 동일업체 4,367개의 대출금 비교시 전기대비 16.8% 증가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거 래 자 | | | 대 출 금 | | |
|-------------|-----------|-----------|----------------|---------|----------|--------------|
| | '10.6월말 | '10.12월말 | 증 감 (율) | '10.6월말 | '10.12월말 | 증 감 (율) |
| 자산 100억원 이상 | 1,673,983 | 1,968,137 | 294,154 (17.6) | 59,245 | 65,562 | 6,317 (10.7) |
| 자산 100억원 미만 | 65,856 | 75,735 | 9,879 (15.0) | 5,025 | 5,730 | 705 (14.0) |
| 개 인 | 153,696 | 163,181 | 9,485 (6.2) | 3,888 | 4,363 | 475 (12.2) |
| 계 | 1,893,535 | 2,207,053 | 313,518 (16.6) | 68,158 | 75,655 | 7,497 (11.0) |

□ (신용대출) 총대출금은 **6조 3,150억원**으로 전체의 **83.5%** 차지

◦ '10.6월말 대비 **15.8%**(8,611억원) 증가하였으나, 1인당 평균 신용대출금은 **304만원**으로 '10.6월말(306만원)과 유사

□ (담보대출) '10.6월말 대비 **8.2%**(1,114억원) 감소한 **1조 2,505억원**

◦ 전기대비 대형대부업체는 담보대출 거래자수는 감소(20%↓), 중소형(37.4%↑) 및 개인업체(13.0%↑)의 담보대출 이용자는 증가

대출유형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자산 100억원 이상 | | 자산 100억원 미만 | | 개 인 | |
|------|-------------|--------|-------------|-------|---------|-------|
| | 거래자 | 대출금 | 거래자 | 대출금 | 거래자 | 대출금 |
| 신용대출 | 1,961,950 | 58,432 | 65,840 | 3,045 | 51,548 | 1,673 |
| 담보대출 | 6,187 | 7,130 | 9,895 | 2,685 | 111,633 | 2,690 |
| 합 계 | 1,968,137 | 65,562 | 75,735 | 5,730 | 163,181 | 4,363 |

대출금리 현황

□ (신용대출) 연 41.5%*: 전기대비 0.8%p ↓

* 개인소액신용대출 외 계열사·사업자대출 등을 포함한 가중평균금리

- '10.7.21. 법정금리를 인하(연 49% → 44%)하였으나 신규(갱신)대출에 적용됨에 따라 평균 신용금리는 소폭 감소

□ (담보대출) 연 18.6% : 전기대비 0.3%p ↑

☞ 2010년 금감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신고된 미등록(미상) 업체의 평균금리 : 연210%

대부업체 영업유형별 대출금 및 대출금리 현황

(단위 : 억원, 연%, %p)

| 구 분 | | '10.6월말 (A) | '10.12월말 (B) | 증 감 (B-A) |
|-----------------|-------|-------------|--------------|-----------|
| 자산 100억원 이 상 | 신용대출금 | 50,523 | 58,432 | 7,909 |
| | 금 리 | 43.0 | 42.3 | △0.7 |
| | 담보대출금 | 8,722 | 7,130 | △1,592 |
| | 금 리 | 12.4 | 12.9 | 0.5 |
| 자산 100억원 미 만 | 신용대출금 | 2,497 | 3,045 | 548 |
| | 금 리 | 32.3 | 31.2 | △1.1 |
| | 담보대출금 | 2,528 | 2,685 | 157 |
| | 금 리 | 26.7 | 23.6 | △3.1 |
| 개 인 | 신용대출금 | 1,519 | 1,673 | 154 |
| | 금 리 | 36.7 | 31.6 | △5.1 |
| | 담보대출금 | 2,369 | 2,690 | 321 |
| | 금 리 | 30.7 | 28.6 | △2.1 |
| 합 계 | 신용대출금 | 54,539 | 63,150 | 8,611 |
| | 금 리 | 42.3 | 41.5 | △0.8 |
| | 담보대출금 | 13,619 | 12,505 | △1,114 |
| | 금 리 | 18.3 | 18.6 | 0.3 |

2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대형대부업체) 현황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98개사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심업체, 겸업업체로서 대출잔액이 없는 업체 등 12개사를 제외한 8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대출 현황

□ (총 합) 대출금 6조 5,562억원, 거래자수 197만명

- 전기 대비 대출금 및 거래자 모두 증가(각↑10.7%,↑17.6%) 하였으나 증가세는 소폭 둔화

※ 10.6월말 기준 : 대출금 5조9,245억원(↑ 18.0%), 거래자수 167만명(↑ 20.4%)

- 전체 대부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6.7%(전기 86.9%), 89.2% (전기 88.4%)로 전기와 유사하게 매우 높음

□ (유형별) 신용대출은 5조 8,432억원으로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총 대출금의 89.1% 차지 (전기 85.3%)

- 담보대출은 7,130억원으로 총대출의 10.9% 차지 (전기 14.7%)

※ 신용대출 점유비 : 대형업체(89.1%) > 중소형업체(53.1%) > 개인업체(38.3%)

□ (차주별) 전기대비 개인대출은 16.6% 증가, 법인대출은 26.1% 감소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상대별 대출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 거 래 자 | | | 대 출 금 | | |
|-----|-----|-----------|-----------|-----------------|---------|----------|-----------------|
| | | '10.6월말 | '10.12월말 | 증 감 (율) | '10.6월말 | '10.12월말 | 증 감 (율) |
| 개 인 | 신 용 | 1,662,567 | 1,956,089 | 293,522 (17.7) | 45,770 | 54,832 | 9,062 (19.8) |
| | 담 보 | 6,939 | 5,269 | △ 1,670 (△24.1) | 5,279 | 4,676 | △ 603 (△11.4) |
| | 소 계 | 1,669,506 | 1,961,358 | 291,852 (17.5) | 51,049 | 59,508 | 8,459 (16.6) |
| 법 인 | 신 용 | 3,676 | 5,861 | 2,185 (59.4) | 4,753 | 3,600 | △ 1,153 (△24.3) |
| | 담 보 | 801 | 918 | 117 (14.6) | 3,443 | 2,454 | △ 989 (△28.7) |
| | 소 계 | 4,477 | 6,779 | 2,302 (51.4) | 8,196 | 6,054 | △ 2,142 (△26.1) |
| 전 체 | 신 용 | 1,666,243 | 1,961,950 | 295,707 (17.7) | 50,523 | 58,432 | 7,909 (15.7) |
| | 담 보 | 7,740 | 6,187 | △ 1,553 (△20.1) | 8,722 | 7,130 | △ 1,592 (△18.3) |
| | 계 | 1,673,983 | 1,968,137 | 294,154 (17.6) | 59,245 | 65,562 | 6,317 (10.7) |

영업형태별 현황

□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86개)중 전업업체는 61개사(70.9%), 겸업업체*는 25개사(29.1%)

* 대부업 이외 제조업 등 기타 영업을 겸영하는 경우 겸업업체로 분류
(단 리드코프<석유사업>, 동양파이낸셜·캐피탈<보험대출중개>은 겸업이나 대부잔액이 많아 전업으로 분류)

◦ 전업업체(61개) 중에서는 개인신용대출 취급업체(40개)가 가장 많고, 법인신용(8개), 개인담보(7개), 법인담보(6개) 순

* 각 대부업체가 취급하는 대출상품 중 취급비중이 가장 높은 상품을 기준으로 영업형태 구분

□ (대출현황) 전업업체의 대출금은 6조 4,257억원(전체의 98.0%)

◦ 이중 개인신용대출 전문취급업체(40개)의 대출금은 5조 5,496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의 84.6%를 차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업체별 대출금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

| 구 분 | | 업체수 | 거래자 | 신용 | 담보 | 대출금 | 신용 | 담보 |
|-----|------|-----|-----------|-----------|-------|--------|--------|-------|
| 전업 | 개인신용 | 40 | 1,961,277 | 1,960,637 | 640 | 55,496 | 55,018 | 478 |
| | 법인신용 | 8 | 650 | 484 | 166 | 3,389 | 2,721 | 668 |
| | 개인담보 | 7 | 4,608 | 458 | 4,150 | 4,140 | 24 | 4,116 |
| | 법인담보 | 6 | 800 | 271 | 529 | 1,232 | 41 | 1,191 |
| | 소 계 | 61 | 1,967,335 | 1,961,850 | 5,485 | 64,257 | 57,804 | 6,453 |
| 겸업 | | 25 | 802 | 100 | 702 | 1,305 | 628 | 677 |
| 계 | | 86 | 1,968,137 | 1,961,950 | 6,187 | 65,562 | 58,432 | 7,130 |

신규대출 이용자 직업

□ '10.하반기중 신규대출 이용자의 56.8%가 회사원이고, 21.2%는 자영업자임 (전기 회사원 60.2%, 자영업자 20.9%)

◦ 주요 대출 목적으로는 생활비 충당(43.3%) 및 사업자금 조달(17.6%) 이 많음 (전기 생활비 43.6%, 사업자금 20.5%)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단위 : 억원, %)

| 직업 | 대출목적 | | | | | 계 | (비중) | '10년 상반기 비중 |
|--------------------|--------|--------|--------|-------|--------|---------|---------|-------------------|
| | 생활비 | 사업자금 | 타대출상환 | 물품구매 | 기타 | | | |
| 회사원 ^{주2)} | 5,301 | 640 | 1,737 | 553 | 2,277 | 10,510 | (56.8) | (60.2) |
| 자영업 | 872 | 1,701 | 273 | 278 | 802 | 3,926 | (21.2) | (20.9) |
| 학생·주부 | 752 | 73 | 173 | 23 | 454 | 1,475 | (8.0) | (8.7) |
| 기타 | 1,071 | 829 | 191 | 93 | 392 | 2,576 | (14.0) | (10.2) |
| 합계 | 7,996 | 3,243 | 2,374 | 947 | 3,925 | 18,487 | (100.0) | (100.0) |
| (비중) | (43.3) | (17.6) | (12.8) | (5.1) | (21.2) | (100.0) | | |

주) 1. 신규대출 이용자 현황을 제출한 65개사의 '10.하반기중 신규대출액 기준

주) 2. 회사원에는 공무원 포함

대출이용 기간

□ '10.하반기 이용자(대출상환자 기준) 중 39.3%는 1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고, 24.7%는 3개월 내 상환

◦ 전기 대비 1년 이상 이용자의 비중은 증가(↑6.6%p)하고, 3개월 내 이용자의 비중은 감소(↓5.0%p)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대출기간 현황

(단위 : 억원, %)

| 대출상환액 | 3월 미만 | 3~6월 미만 | 6~12월 미만 | 1년 이상 |
|--------------|--------|---------|----------|--------|
| 12,149 | 3,006 | 1,767 | 2,602 | 4,774 |
| (비중) | (24.7) | (14.5) | (21.4) | (39.3) |
| ('10.상반기 비중) | (29.7) | (20.3) | (17.3) | (32.7) |

주) 평균대출기간을 응답한 70개사의 '10.하반기중 대출상환액 기준임

신용등급별 현황

□ 대부업체 이용자 73.6%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대부업체가 거래중인 신용등급회사의 신용등급(거래자 기준)

◦ 이중 신용등급 7등급자가 1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신용등급 현황

(단위 : 명, 억원, %)

| 구 분 | 거래자 | (비중) | 대출금 | (비중) |
|------|-----------|-------|--------|-------|
| 1등급 | 14,451 | 0.8 | 418 | 0.8 |
| 2등급 | 37,073 | 2.0 | 1,057 | 2.0 |
| 3등급 | 86,797 | 4.6 | 2,444 | 4.7 |
| 4등급 | 130,593 | 6.9 | 3,615 | 6.9 |
| 5등급 | 230,573 | 12.2 | 6,510 | 12.4 |
| 6등급 | 310,153 | 16.4 | 9,002 | 17.1 |
| 7등급 | 371,042 | 19.6 | 10,733 | 20.4 |
| 8등급 | 299,139 | 15.8 | 8,287 | 15.7 |
| 9등급 | 156,732 | 8.3 | 4,031 | 7.7 |
| 10등급 | 115,059 | 6.0 | 3,258 | 6.2 |
| 기타 | 140,845 | 7.4 | 3,200 | 6.1 |
| 계 | 1,892,457 | 100.0 | 52,556 | 100.0 |

주) 1. 개인신용대출의 신용등급별 현황을 제출한 33개사의 신용등급 기준
 주) 2. 기타 : 신용등급이 없는 거래자 또는 신용등급 확인 불가능자 등
 주) 3. '10.12월말 개인신용대출 대출금 잔액 및 거래자 기준

연체 현황

□ '10.12월말 연체율*은 7.2%로 '10.6월말 대비 1.8%p 하락

* 30일 이상 대출금 연체 기준(장기연체채권<NPL채권> 매각분 제외)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의 연체율 현황

(단위 : 억원, %, %p)

| 구 분 | | '10.6월말 연체율(A) | '10.12월말 연체 | | | 비율증감 (B-A) |
|-----|------|-------------------|-------------|---------|--------|---------------|
| | | | 전체대출금 | 연체대출금 | 비 율(B) | |
| 대출금 | 신용대출 | 7.7 | 58,432 | 3,365 | 5.8 | △ 1.9 |
| | 담보대출 | 17.9 | 7,130 | 1,324 | 18.6 | 0.7 |
| | 계 | 9.0 | 65,562 | 4,689 | 7.2 | △ 1.8 |
| 거래자 | 신용대출 | 7.4 | 1,961,950 | 138,040 | 7.0 | △ 0.4 |
| | 담보대출 | 36.8 | 6,187 | 1,222 | 19.7 | △ 17.1 |
| | 계 | 7.5 | 1,968,137 | 139,262 | 7.1 | △ 0.4 |

3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중소형 대부업체) 및 개인업자 현황

대부실적을 제출한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 504개사, 개인 대부업자 6,184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 자산 100억원 미만 대부업체(504개)의 대출금은 5,730억원으로 전체 대부업체 대출금의 7.6%를 차지(거래자수 75,735명)
 - 대출금 및 거래자 모두 '10.6월말 대비 증가(각↑14.0%,↑15.0%)
 - 신용대출은 3,045억원(53.1%), 담보대출은 2,685억원(46.9%)
- 개인 대부업자(6,184개)의 대출금은 4,363억원으로 전체 업체 대출금의 5.8%를 차지(거래자수 163,181명)
 - 대출금 및 거래자 모두 '10.6월말 대비 증가(각↑12.2%,↑6.2%)
 - 신용대출은 1,673억원(38.3%), 담보대출은 2,690억원(61.7%)

※ 자산 100억원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는 대출심사 노하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취급을 선호하는 경향

자산 100억원 미만 법인 및 개인 대부업자 현황

(단위 : 개, 명, 억원, 백만원, %, %p)

| 구 분 | 자산 100억 미만 법인 | | | 개 인 | | |
|---------|---------------|--------------|------------|--------------|--------------|------------|
| | '10.6월말 | '10.12월말 | 증 감 | '10.6월말 | '10.12월말 | 증 감 |
| 업체수 | 466 | 504 | 38 | 6,395 | 6,184 | △211 |
| 거래자 | 65,856 | 75,735 | 9,879 | 153,696 | 163,181 | 9,485 |
| 대출금 | 5,025 | 5,730 | 705 | 3,888 | 4,363 | 475 |
| 신용(점유비) | 2,497 (49.7) | 3,045 (53.1) | 548 (3.4) | 1,519 (39.1) | 1,673 (38.3) | 154 (△0.8) |
| 담보(점유비) | 2,528 (50.3) | 2,685 (46.9) | 157 (△3.4) | 2,369 (60.9) | 2,690 (61.7) | 321 (0.8) |
| 1인당 대출금 | 7.6 | 7.6 | - | 2.5 | 2.7 | 0.2 |

4

전국 대부중개업체 현황

대부중개실적을 제출한 법인 대부중개업체 98개사, 개인 대부중개업자 816개사를 대상으로 분석

□ '10.하반기중 법인 중개업체(98개)는 총 9,461억원(290,154건)을 중개하고, 632억원(중개금액의 6.7%)의 중개수수료를 수취

※ 10년 상반기 : 74개 업체, 3,435억원 중개, 98,231건 중개, 216억원 수취

◦ 상위 10개 법인 업체의 대부중개 금액은 6,803억원(238,626건)이며, 중개수수료는 494억원(중개금액의 7.3%)

※ 10년 상반기 : 2,643억원 중개, 7,903건 중개, 179억원 수취 (중개료 6.8%)

□ 한편, 개인 대부중개업자(816개)는 총 2,104억원(중개건수 38,073건)을 중개하고, 75억원(3.6%)을 중개수수료로 수취

※ 10년 상반기 : 794개 업체, 1,541억원(37,974건) 중개, 54억원 수취 (중개료 3.5%)

대부중개업체 중개 현황

(단위 : 개, 건, 억원, %)

| 구 분 | 업체수 | 중개건수 | 중개금액 | 수입수수료 | (율) | 10.6월 |
|----------|-----|---------|-------|-------|-----|-------|
| 법 인 | 98 | 290,154 | 9,461 | 632 | 6.7 | 6.3 |
| 상위10개 업체 | 10 | 238,626 | 6,803 | 494 | 7.3 | 6.8 |
| 개 인 | 816 | 38,073 | 2,104 | 75 | 3.6 | 3.5 |

박 병 석 의원

박병석 의원(민주당)

- | |
|---|
| <p>1. 2010년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지적사항, 조치내역, 향후계획</p> |
|---|

☐ 2010 국정감사 업무보고 및 조치사항 별첨하여 제출

1.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 1부
2.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 1부

| |
|-------------|
| 2010년도 국정감사 |
|-------------|

| |
|-----------|
| 정 무 위 원 회 |
|-----------|

업 무 현 황

2010. 10. 11



금 용 위 원 회

I. 일반 현황

II.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1. 금융시장 동향
2. 금융산업 현황

III.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1. 잠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 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 나. 부동산 PF 대출 감독 강화
- 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 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가. 서민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 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 다.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
- 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마.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가. 금융공기업의 기업자금 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 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 확대
- 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 유도

4.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국제정합성 제고

- 가. 건전성 감독제도 정비
- 나. 국제적 수준의 금융인프라 선진화
- 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5.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재도약 기반 마련

- 가. 금융선진화 비전 수립
-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 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 라. 미래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제고
- 마. 특색 있는 금융중심지 육성

6. G20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우리 금융의 국제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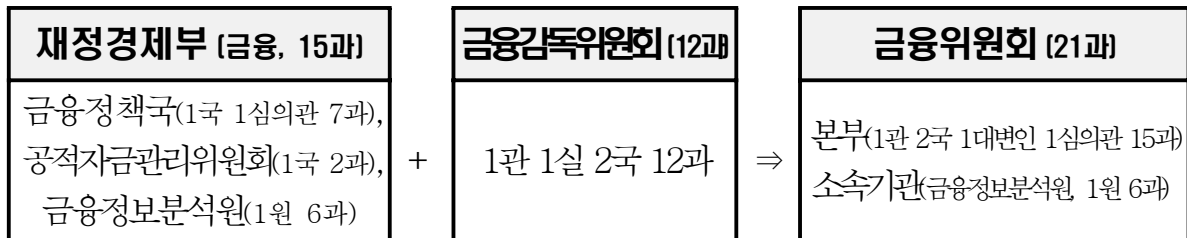
IV. 정기국회 중 주요 제·개정 추진 법률안

< 참고자료 >

I. 일반 현황

1 설립경위 및 목적

- (설립경위) '08.2,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립



* 09.8.24 금융위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1국, 2팀) 설치

- 금융감독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겸임을 폐지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설립목적) 금융산업 발전,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 확립 및 금융수요자 보호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2 주요 기능

- 금융정책 및 금융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 금융기관의 감독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 금융기관의 설립, 합병, 영업 양수·도 등과 관련된 인·허가
- 증권·선물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 금융중심지의 조성·발전 관련 정책의 수립

3 조 직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 **(사무처)** 금융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관 3국 1대변인 15과 3팀으로 사무처를 구성

-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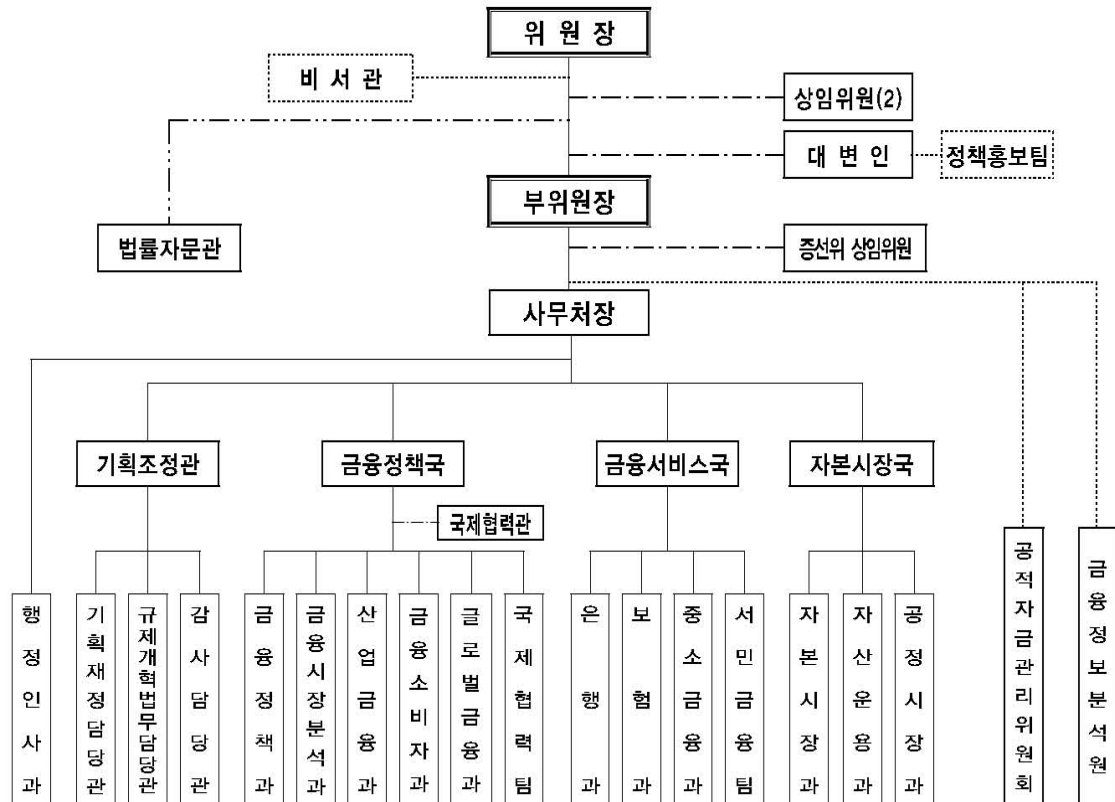
-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규제 등에 관한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공적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

-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업무보좌와 실무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등 조직현황 >



4 인원 및 예산

□ 정원 : 231명

| | 정무직 | 일반직 | 별정직 | 특정직 | 기능직 | 계 |
|---------|-----|-----|-----|-----|-----|-----|
| 합 계 | 2 | 206 | 4 | 7 | 12 | 231 |
| 본부 | 2 | 150 | 4 | - | 11 | 167 |
| 금융정보분석원 | - | 44 | - | 7 | 1 | 52 |
| 공자위 사무국 | - | 12 | - | - | - | 12 |

□ 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122억원, 세출예산 3조 1,464억원(10년도)

II.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산업 현황

1 금융시장 동향

가. 국제 금융시장

◇ 국제 금융시장은 금년 들어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둔화 우려 등 불안요인도 상존

□ 글로벌 증시는 금년 중 세계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와 함께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유럽재정위기와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둔화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등락을 반복

○ 美 증시는 5~6월 남유럽 재정우려, 8월 美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하락하였으나, 9월 들어 불안요인이 다소 완화되며 '09년말 대비 상승(다우지수 '09말 10,428 → '10.10.7일 10,949)

○ 유럽 주요국 증시도 5~6월 및 8월중 다소 하락하였으나 9월 이후 전반적인 상승세

| | '09년말 | '10.3월말 | 6월말 | 7월말 | 8월말 | 9월말 | 10.7 | 전월말비 | 전년말비 |
|---------|--------|---------|-------|--------|--------|--------|--------|-------|-------|
| 다우(美) | 10,428 | 10,097 | 9,774 | 10,466 | 10,015 | 10,608 | 10,949 | +3.2% | +5.0% |
| FTSE(英) | 5,413 | 5,680 | 4,917 | 5,258 | 5,225 | 5,508 | 5,662 | +2.8% | +4.6% |
| DAX(獨) | 5,957 | 6,154 | 5,966 | 6,148 | 5,925 | 6,210 | 6,276 | +1.1% | +5.4% |

○ 주가변동성지수(VIX)도 5~6월 중 상승하였다가 8월 이후 하락하여 현재는 '09년말 수준을 회복

* VIX 지수 : ('09말)22 ('10.3말)18 (6말)35 (7말)24 (8말)26 (9말)24 (10.7일)22

□ 美 국채금리는 5월 이후 글로벌 변동성 확대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 및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양적완화정책 장기화 기대 등으로 연중 하락세

| | '09년말 | '10.3월말 | 6월말 | 7월말 | 8월말 | 9월말 | 10.7 | 전월말비 | 전년말비 |
|-----------|-------|---------|------|------|------|------|------|--------|---------|
| LIBOR(3m) | 0.25 | 0.29 | 0.53 | 0.45 | 0.29 | 0.29 | 0.29 | - | +4bp |
| UST(2y) | 1.14 | 1.01 | 0.60 | 0.55 | 0.46 | 0.42 | 0.35 | △ 7bp | △ 79bp |
| UST(10y) | 3.84 | 3.82 | 2.93 | 2.91 | 2.46 | 2.51 | 2.38 | △ 13bp | △ 146bp |

나. 국내 금융시장

◇ 국내금융시장도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확대

□ (주식시장) KOSPI 지수는 견조한 경기회복세와 양호한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월 들어 1,900선을 상회

* 다만, 국내증시도 남유럽 재정우려(5~6월), 지정학적리스크(5월) 등 대내외 불안요인 발생시 일시적으로 등락을 보여왔음

○ 외국인 투자도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았던 '10년 2분기를 제외하고 순매수를 시현('10.1월~10.7일중 15.2조원 순매수)

| | '09년 | '10.1Q | 2Q | 3Q | 7월 | 8월 | 9월 | 10.7 | 전월말비 | 전년말비 |
|--------|---------|--------|--------|--------|--------|--------|--------|--------|------|-------|
| KOSPI | 1,683 | 1,693 | 1,698 | 1,873 | 1,759 | 1,743 | 1,873 | 1,901 | 1.5% | 13.0% |
| 외국인순매수 | 322,693 | 61,434 | △2,580 | 69,122 | 29,821 | △6,024 | 45,326 | 23,771 | - | - |

* 코스피 주가는 기간말 기준, 외국인 순매수는 기간 중 합계(억원)

□ (채권시장) 채권금리는 6~7월에 기준금리 인상 기대에 따라 일시 상승했으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연중 하락세 시현

* 순투자(순매수-민기도래, 조원) : ('09) 18.5 ('10 1~3분기) 18.1 [(1Q) 5.3 (2Q) 6.0 (3Q) 6.8]

< 채권시장 주요 금리 추이(%) >

| | '09년말 | '10.5월말 | 6월말 | 7월말 | 8월말 | 9월말 | 10.7 | 전월말비 | 전년말비 |
|----------|-------|---------|------|------|------|------|------|-------|---------|
| CD(91d) | 2.86 | 2.45 | 2.46 | 2.63 | 2.66 | 2.66 | 2.66 | 0bp | △ 20bp |
| CP(91d) | 3.07 | 2.69 | 2.71 | 2.81 | 2.82 | 2.79 | 2.79 | 0bp | △ 28bp |
| 국고(3y) | 4.41 | 3.58 | 3.86 | 3.80 | 3.55 | 3.32 | 3.31 | △ 1bp | △ 110bp |
| 회사채(AA-) | 5.53 | 4.66 | 4.83 | 4.72 | 4.41 | 4.08 | 4.06 | △ 2bp | △ 147bp |

○ 또한,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도 고수익 채권 수요 확대 등으로 하락세 지속

* 회사채(AA-, 3y) - 국고채(3y) : ('09말) 112bp ('10.6) 97bp (8) 86bp (9) 76bp (10.7일) 75bp

□ **(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금년 들어 경상수지 호조와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순유입 지속으로 전반적으로 하락세

○ 5월 이후 유럽 재정우려가 부각되고, 천안함 사건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6월말 이후 글로벌 불안요인이 완화되면서 다시 하락세

○ 한편, 원-엔 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5월 이후 나타난 엔화 강세 등으로 상승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

< 주요 환율추이 >

| | '09년말 | '10.3월말 | 6월말 | 7월말 | 8월말 | 9월말 | 10.7 | 전월말비 | 전년말비 |
|------|---------|---------|---------|---------|---------|---------|---------|-------|--------|
| 원-달러 | 1,164.5 | 1,131.3 | 1,222.2 | 1,182.7 | 1,198.1 | 1,130.7 | 1,114.0 | △1.5% | △4.3% |
| 엔-달러 | 93.01 | 93.46 | 88.44 | 86.47 | 84.21 | 83.52 | 82.86 | △0.8% | △10.9% |
| 원-엔 | 1,252.0 | 1,210.5 | 1,382.0 | 1,367.8 | 1,422.8 | 1,365.2 | 1,345.0 | △1.5% | +7.4% |

□ **(외화자금시장)** 스왑시장 등 외화조달 여건도 '09.4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양호한 상황

○ 5월 중 유럽 재정불안 등 대외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으나, 6월말 이후 은행권 중장기 차입 확대, 외국인 주식순매수 전환 등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 회복

< 외화자금시장 주요 지표 추이(%) >

| | '09년말 | '10.3월말 | 6월말 | 7월말 | 8월말 | 9월말 | 10.7 | 전월말비 | 전년말비 |
|-----------------|-------|---------|------|------|------|------|------|-------|-------|
| 스왑레이트 (3개월) | 1.20 | 1.38 | 1.16 | 1.59 | 1.95 | 1.58 | 1.20 | △38bp | 0bp |
| 재정거래 유인(3개월) | 1.41 | 1.11 | 0.76 | 0.59 | 0.41 | 0.79 | 1.17 | +38bp | △24bp |
| CRS* (1년) | 2.25 | 2.08 | 1.28 | 1.83 | 2.18 | 1.75 | 1.68 | △7bp | △57bp |
| 재정거래 유인(1년) | 1.27 | 0.65 | 1.86 | 1.32 | 1.03 | 1.17 | 1.27 | +10bp | 0bp |

* CRS(통화스왑금리, Currency Rate Swap) : 1년 이상 원화와 외화를 교환하는 거래에서 외화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대신 수취하는 원화고정금리

2 금융산업 현황

은행

- '08년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경기회복,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부실자산 정리 등으로 은행의 건전성은 전반적으로 개선
 - 다만, 기업구조조정 추진 및 부동산 PF대출 관련 부실의 선제적 인식 등으로 최근들어 자산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
- **(자본적정성)** '10.6월말 국내은행 BIS비율은 14.29%로 안정적인 수준 유지

<국내은행 자본적정성 추이(%)>

| 연(월)말 | '07 | '08 | '09 | '10.3 | '10.6 |
|--------|-------|-------|-------|-------|-------|
| BIS 비율 | 12.28 | 12.31 | 14.36 | 14.70 | 14.29 |

- **(수익성)** '10.2분기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09.2분기(2.1조원) 대비 감소한 1.2조원 시현

<국내은행 당기순이익 추이(조원)>

| 연(분기)중 | '07 | '08 | '09 | '10.1분기 | '10.2분기 |
|--------|------|-----|-----|---------|---------|
| 당기순이익 | 15.0 | 7.7 | 6.9 | 3.4 | 1.2 |

- **(자산건전성)** '10.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1.94%, 부실채권 규모는 25.5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6.6조원 증가

* 대손충당금 적립비율(Coverage ratio) : 103.2% ('10.6월말)

- '10.8월말 총대출 연체율은 1.45%로 지난해말 0.74%에 비해 상승

<은행권 연체율 추이(%)>

| 연(월)말 | '04 | '05 | '06 | '07 | '08 | '09 | '10.3 | '10.6 | '10.8 |
|-------|-----|-----|-----|-----|------|------|-------|-------|-------|
| 연체율 | 1.7 | 1.2 | 0.7 | 0.7 | 1.03 | 0.74 | 0.99 | 0.96 | 1.45 |

보 험

□ '10.6월말 현재 전체 보험회사 평균지급여력비율은 278.5%
(생명보험 267.3%, 손해보험 308.8%)

- '10.6월 지급여력비율은 생보사 상장으로 인한 자본확충, 유가증권 평가이익 증가에 따라 '09.6월 대비 33.5%p 상승
- '10.9월에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별 지급여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

* 보험회사 적기시정조치 부과 기준은 지급여력비율 100%이나, 감독당국은 동비율을 150% 이상 유지토록 유도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단위 :%)

| 구 분 | '08.3월말 | '09.3월말 | '09.6월말 | '10.3월말 | '10.6월말 |
|--------|---------|---------|---------|---------|---------|
| 생명보험회사 | 237.1 | 214.3 | 228.8 | 271.1 | 267.3 |
| 손해보험회사 | 288.4 | 275.2 | 289.1 | 302.5 | 308.8 |
| 계 | 250.4 | 230.5 | 245.0 | 279.6 | 278.5 |

□ **FY'09('09.4~'10.3)** 보험회사는 총 4조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이전수준(FY'07 3.78조원)을 회복

- FY'10 1분기에도 금융시장 안정으로 투자손익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 실적은 양호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단위 : 억원)

| 구 분 | FY'07 ('08.3월말) | FY'08 ('09.3월말) | FY'09('10.3월말) | | FY'10 1분기 ('10.6월말) |
|--------|---------------------|---------------------|----------------|-------------------|----------------------------|
| | | | | 1분기 ('09.6월말) | |
| 생명보험회사 | 21,054 | 5,703 | 24,549 | 6,914 | 12,850 |
| 손해보험회사 | 16,787 | 13,107 | 15,414 | 5,390 | 8,870 |
| 계 | 37,841 | 18,810 | 39,963 | 12,304 | 21,720 |

금융투자

□ (증권사) '10.6월말 현재 총 62개사가 영업중

- '10.6월말 현재 증권사 총자산은 201.4조원으로 '09.6월말 (174.9조원) 대비 15.1%증가하여 규모 확대 지속
- 증권사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529%로 건전성 지표도 양호한 수준* 유지
 - * 적기시정조치 대상(NCR 150% 미만)인 증권사는 없음
- FY'09 당기순이익은 2.9조원으로 FY'08(2조원) 대비 45% 증가, FY'10.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1.1조원) 대비 0.6조원 감소

< 증권산업 주요 경영 지표 >

| 구 분 | FY'06 ('07.3월말) | FY'07 ('08.3월말) | FY'08 ('09.3월말) | FY'09 ('10.3월말) | FY'10.1분기 ('10.6월말) |
|-------------|---------------------|---------------------|---------------------|---------------------|-------------------------|
| 총자산(조원) | 95.8 | 130.9 | 148.8 | 177.0 | 201.4 |
| 자기자본(조원) | 22.1 | 29.7 | 31.8 | 35.3 | 35.1 |
| 당기순이익(조원) | 2.6 | 4.4 | 2.0 | 2.9 | 0.5 |
| 영업용순자본비율(%) | 606 | 591 | 617 | 580 | 529 |
| 수수료 수익(조원) | 6.1 | 9.3 | 6.7 | 8.0 | 2.0 |
| 자기매매 수지(조원) | 0.5 | 0.7 | 0.3 | 0.8 | -0.3 |

□ (자산운용사) '10.6월말 현재 총 73개사가 영업중

- 총 수탁고(순자산가치)는 주식형펀드의 환매 지속 등으로 인해 '10.6월말 현재 320조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
- FY'10 1분기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956억원) 대비 119억원 증가,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490%로 안정적인 수준*
 - * 적기시정조치 대상(NCR 150% 미만)인 자산운용사는 없음

< 자산운용산업 주요 경영 지표 >

| 구 분 | FY'06 ('07.3월말) | FY'07 ('08.3월말) | FY'08 ('09.3월말) | FY'09 ('10.3월말) | FY'10.1분기 ('10.6월말) |
|-------------|---------------------|---------------------|---------------------|---------------------|-------------------------|
| 총 수탁고(조원) | 242.9 | 325.3 | 323.5 | 329.0 | 320.0 |
| 당기순이익(억원) | 2,632 | 5,038 | 4,025 | 4,578 | 1,075 |
| 영업용순자본비율(%) | 383.2 | 504.4 | 532.0 | 506.1 | 490.0 |

비은행

- **(신용카드사)** 카드 이용실적 증가, 자금조달비용 감소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에 따라 수익성, 건전성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
- **(상호저축은행)** 최근 3년간 자산규모가 연평균 18%씩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은 하락
 - '10.6월 PF대출의 충당금 증가 및 매각손실 등으로 적자 전환
 - 다만, 부실 PF대출(3.7조원)을 구조조정기금 및 캠퍼에 매각('10.6월말) 함에 따라 연체율이 전년동기대비 3.1%p 하락
- **(신협)** 자산규모가 '09년 중 비과세예금 한도 확대(2천→3천만원)에 힘입어 급증한 이래 금년들어 다소 둔화되는 추세
 - 예대마진 증가로 이자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은 개선되는 추세이나 자산건전성은 다소 악화

< 신용카드사 · 상호저축은행 · 신협 주요 경영지표(조원,%) >

| | | '07 | '08 | '09 | '10.6 |
|----------------------|-------|------|------|------|-------|
| 신용카드사 ¹⁾ | 총자산 | 39.3 | 42.7 | 44.4 | 48.3 |
| | 당기순이익 | 2.4 | 1.7 | 1.9 | 0.9 |
| | 연체율 | 3.8 | 3.4 | 2.2 | 1.8 |
| 상호저축은행 ²⁾ | 총자산 | 52.7 | 63.5 | 74.4 | 86.8 |
| | 당기순이익 | 0.69 | 0.38 | 0.05 | △0.47 |
| | 연체율 | 13.7 | 14.0 | 15.1 | 12.0 |
| 신용협동조합 | 총자산 | 27.1 | 30.9 | 39.7 | 43.3 |
| | 당기순이익 | 0.14 | 0.12 | 0.18 | 0.19 |
| | 연체율 | 9.2 | 8.1 | 6.9 | 7.5 |

주1) 전업카드사 기준(전업사 수 : '07, '08년 5개사, '09, '10년 6개사)

주2) 저축은행은 6월말 결산법인으로 각 회계연도말(6월) 기준

Ⅲ. 주요 정책과제 추진현황

1 잠재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독

◇ 위기 재발 방지 및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 취약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

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

(1) 추진 실적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계부채 관련 동향 및 가계부실화 가능성 사전 점검

□ 은행의 과도한 자산확대 경쟁을 억제하여 가계부채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 목표 관리를 지속 추진

* 일반은행 예대율(%) : 08말(121.9) → 09말(112.1) → 10.6월(101.2)

□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지속

* 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및 저금리 전환대출 지원 등을 통해 저신용층 신용회복 지원을 지속

(2) 향후 계획

□ 위험요인 조기진단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예대율 규제·서민층 금융지원 등 기존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

□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 다양화, 장기고정금리 확대 유도* 등 차주의 이자 변동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 지속

* 장기고정금리 대출 및 잔액기준 COFIX 연동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별로 계획수립 지도 및 이행상황 점검 중

〈참고〉 가계대출 건전성 현황 및 전망

- 그간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 상승, 은행권 자산확대 경쟁 등의 영향으로 다소 빠르게 증가**한 측면

* 10.6말 현재 가계부채(자금순환표상 개인부분 금융부채)는 877.7조원

** GDP 대비 금융부채 : 00년말 52.0% → 09년말 80.4%

-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1% 미만으로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

* 가계대출 연체율(은행, %) :

(08말)0.60, (09말)0.42 (10.1)0.59, (3)0.54, (5)0.62, (6)0.57, (7)0.67, (8)0.78

- 가계대출의 구성, 금융회사 충격흡수능력 등을 감안시 가계부채가 급격한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① 가계부채 중 상위신용등급 및 고소득층 비중이 높음

* 상위등급(1~4등급) 비중(전업권, %) : (05말)49.7, (08말)50.3, (09년말)56.9

* 소득 상위 4.5분위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64% 보유(09.3말)

② LTV 비율(47%)이 낮아 금융회사의 담보여력이 양호

* 주요국 LTV 비율(09.7말) : 韓 47.1%, 美 74.9%, 英 85.2%(07.12말)

③ 손실발생시 금융회사의 충격흡수능력도 대체로 양호

* 은행 당기순이익(조원): (09.1Q) 0.5, (2Q) 2.1, (3Q) 2.9, (4Q) 1.5, (10.1Q) 3.4, (2Q) 1.3

* BIS비율(%) : (09.1Q) 12.9, (2Q) 13.7, (3Q) 14.1, (4Q) 14.4, (10.1Q) 14.7, (2Q) 14.3

나. 부동산 PF 대출 감독 강화

(1) 배 경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용산 등 주요 PF사업들이 부진하면서 부실화 우려 제기

* 부동산 PF대출 잔액(조원) : (08말)83.1 (09말)82.4 (10.6월)74.3

(2) 추진 실적

-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부실 PF대출채권에 대해서는 조기 정리 추진

-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등을 통해 금융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

* 예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 은행 : 정상여신 (기존) 0.7% → (변경) 0.9%
- 저축은행 : 정상여신 (기존) 0.5% → (변경) 0.5~3%

- PF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 증권·여전·종금사의 PF한도를 총대출 대비 30%이내로 규제

* 저축은행 여신 대비 PF한도 : (현행)30%→(11년중)25%→(13년중)20%

-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PF대출의 조기 정리*를 유도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 및 구조조정 추진**

* 저축은행 부실 PF대출(3.7조원)을 구조조정기금 및 캠프에 매각(10.6월말)

** 61개 저축은행과 자본확충 0.7조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10.7월말)하고, 향후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

- 부실 우려 건설사에 대한 구조조정 병행 추진

(3) 향후 계획

- PF대출 부실화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및 감독 강화 추진

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1) 배 경

- 저축은행은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여신을 확대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화

(2) 추진 실적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10.4.9)하여 이를 제도화하는 등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 강화 추진
 - PF 등 부동산 관련 여신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강화
 - * 단계적인 PF대출 한도 축소와 별도로 부동산PF·건설업·부동산업 등 부동산 관련 여신 포괄한도(총 여신의 50%이내) 신설('10.9월)
 - 재무건전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
 - * 적기시정조치 대상 : (현행) BIS비율 기준 5% → ('14) 7%
 - 주기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dynamic fit & proper test)의 시행('10.9월)으로 부적격 대주주의 소유·경영권을 제한
 -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을 매년(현행 2년) 검사하고 금감원·예보의 공동검사 범위를 확대
- 저축은행 부실에 따른 예보기금 손실에 대응하여 예보요율을 인상('11년중 0.35%→0.40%)하고 예보의 사전 감시 기능을 강화

(2) 향후 계획

- 유가증권 운용 및 여신한도 등 자산 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여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
-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예보기금의 부실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라.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1) 추진 실적

-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 및 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2차례에 걸쳐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시행

< 1차·2차 외환건전성 제고 방안 >

| | 주요 내용 | 시행 |
|--------------------|------------------------------|---------|
| 1차 (’09.11월 발표) | ①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 | ’10.1월 |
| | ②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 |
| | ③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 |
| | ④ 외화유동성 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 ’10.7월 |
| | ⑤ 외화안전자산 보유 의무화 | |
| 2차 (’10.6월 발표) | ① 외화유동성 비율 일별관리 | ’10.8월 |
| | ②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강화 | |
| | ③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 |
| | ④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의무화 | ’10.11월 |

- 시행 이후 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등이 상승하는 등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

| | (%) | ’08.12말 | ’09.12말 | ’10.3말 | ’10.6말 | ’10.7말 | ’10.8말 ^p |
|-----------------------------|------------|---------|---------|--------|--------|--------|---------------------|
| 유동성 비율 ¹⁾ | 유동화가중치 未적용 | 98.9 | 105.1 | 106.8 | 107.4 | 109.7 | 109.2 |
| | 유동화가중치 적용 | - | - | 94.6 | 97.1 | 98.7 | 98.8 |
| 중장기 ²⁾ 재원조달비율 | 1년 이상 외화차입 | 105.6 | 139.6 | - | - | - | - |
| | 1년 초과 외화차입 | - | 128.9 | 134.5 | 132.7 | 138.5 | - |

1) 10.1.1일부터 유동성 비율 산출시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하여 35~100%까지 가중치 차등 적용

2) 10.1.1일부터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산출시 중장기 외화차입금 기준을 1년이상에서 1년초과로 강화

(2) 향후 계획

- 2차례에 걸쳐 추진한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

- 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발굴하여 필요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2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이용자 보호 강화

- ◇ 서민과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

가. 서민의 금융이용 접근성 제고

(1) 추진 실적

- '09.12월 미소금융 출범이후 서민들의 성공적 자활을 위해 자금지원과 함께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
 - 전국적으로 총 86개 지점을 설립하고(수도권 37개, 지방 49개),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한 대출도 지속 지원('10년 400억원 지원 예정)
 - 미소금융 활성화를 위해 미소금융지점의 공공기관 사무실 무상사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국회 심의중)
 - 대출실적은 사업초기 더딘 측면이 있었으나, 7월 이후 증가 추세(9월말 현재, 총 523억원)
 - 미소금융지점의 경우 지점 확대·대출기준 개선(5.17)·취약계층 대상의 특성화 상품 출시(7.2부터) 등에 따라 7월 이후 실적이 본격 증가(1~9월중 총 320억원, 9월중 95억원)
 - 기존 복지사업자를 통해서도 1~9월 중 총 203억원의 대출을 지원

- '10.7월 햇살론을 출시하여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
 - 정부와 서민금융회사 공동으로 조성한 보증재원(2조원)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0조원을 대출할 계획
 - 7.26일 출시 이후 10.6일까지 50영업일간 112,158명에 총 1조 328억원을 대출하는 등 서민전용대출 상품으로 안착
 - 저신용·고소득자 대출제한, 상환능력을 감안한 대출한도 설정 등 보완을 통해 건전한 서민대출 상품으로 육성
 - * '서민금융지원 점검단 회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 내용(9.29)
 - ① 저신용·고소득자 대출제한(6등급이하의 연소득 4천만원이하만 대출)
 - ② 여신심사 강화(소득대비 채무상환액 제한기준 운영, 현장실사 강화 등)
- 은행권은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을 개시하여 저신용·저소득층에의 대출을 확대(11월예정)
 - * '신용등급 5등급 이하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

(2) 향후 계획

- 서민들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제고
 - **(미소금융)** 지점확대, 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지속하는 한편, '찾아가는 미소금융' 등을 통해 실효성 제고
 - 아울러, 공공기관 사무실 무상사용을 통한 운영비 절감·성공사례 축적 등으로 지속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전통시장 상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 **(햇살론)** 여신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실화를 예방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 방지
 - **(새희망홀씨)** 은행의 서민대상 대출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운영상황 및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

나. 금융채무불이행자 등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1) 추진 실적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자산관리공사 운영)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50만원이상, 3개월이상 연체자)에 대한 이자 감면, 만기연장 등 신용회복 지원^{**}

* 금융채무불이행자 추이(만명) : ('08말) 227 → ('09말) 193 → ('10.7) 170

** '10.1~9월, 총 10만여명(신용회복위원회 5.8만명, 신용회복기금 4.2만명)

-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신용회복에 성공할 수 있도록 생활자금 대출(500만원이내) 및 취업(7월 개시) 지원도 실시

* 생활자금대출 : '10.1~9월, 1.5만명 · 482억원

취업 지원 : '10.7~9월, 214명

□ 전환대출 확대를 통해 서민가계의 금리부담 완화

- 신용회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서민들의 20%이상 고금리대출(대부업체 · 캐피탈 등)을 은행의 12%내외 대출로 전환토록 지원(1~9월, 10,350명 1,045억원)

(2) 향후 계획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기금의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필요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 관계기관과의 연계 강화^{*}, 언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기 프로그램 이용을 활성화

* 예 : 고용노동부 · 대한상의 등과 취업지원 MOU 체결('10.9월)

다. 중산·서민층의 금융이용 부담 경감

(1) 추진 실적

□ 중소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 대형마트와의 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 및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3~4월)

* 재래시장·중소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대형마트·백화점 수준 이하로 인하하여 '10년중 약 1천억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예상

□ 서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대부업법령상 최고이자율 인하

- 대부업법령상 최고 금리를 연49% → 44%로 인하(7.21)

* 5%p 인하에 따른 금리부담 완화 효과 : 연간 2,300억원(추정치)

□ 서민금융회사 대출금리 인하

- 최근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을 중심으로 대출금리 인하 및 취급수수료 폐지

* 8개 대형 여전사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2.1%p 하락(7~9월)

(2) 향후 계획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대상 가맹점을 정기적으로 갱신

- 아울러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보다 경감하기 위하여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 방안 검토

*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10.상반기 기준) : 신용카드 2.10%, 체크카드 1.87%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시장금리·경제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1년 내에 5%p 추가 인하 추진

□ 햇살론 등 저금리 서민금융공급 확대, 금리 비교공시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서민 신용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금리·수수료의 인하 유도

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1) 추진 실적

- ☐ 보험상품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 허위·과장광고 규제 등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10.7.23)
- ☐ 초중고교 금융교육 내실화를 위해 금융교육시범학교를 확대('09년 20개교→'10년 222개교)하고 금감원, 신복위 등 유관기관을 통해 청소년, 다문화가정, 군인 등을 대상으로 수요자별 맞춤교육 실시
- ☐ 금융상품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여 개별 금융업법간 규제 차익해소 등을 위한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추진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개최(KDI, '10.6.30)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주요내용 >

- ① 업권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동일한 판매행위 규제 적용
- ②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융기관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강도 높게 제재
- ③ 분쟁조정 결과의 구속력을 강화하는 등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

(2) 향후 계획

- ☐ 전화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관련 법안*과 더불어 보험사기, 불법대부추심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민생침해문제에 대한 분야별 대응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 전화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소송절차 없이 금감원을 통하여 피해금을 신속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특별절차를 마련('10.9.29 정무위 통과)

- ☐ 공청회안(6.30일 발표), 업권별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가칭)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추진

마.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1) 추진 실적

□ 자본시장내 불공정거래 규제강화 및 우회상장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

- 증권 불공정거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상습적 공시 의무 위반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강화

*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불공정 거래 등 신종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펀드 판매보수·수수료 인하 및 공시 강화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장의 신뢰성 제고

- 신규 및 기존 펀드에 대해서 판매보수·수수료를 인하*하고 펀드매니저의 운용이력 등을 공시

* 신규펀드 : 판매보수 5%→1%, 판매수수료 5%→2%
기존펀드 : 판매보수를 3~4년내 1% 이하로 인하

(2) 향후 계획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및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확대

□ 우회상장제도 개선방안 마련

- 거래소 우회상장 심사시 질적심사제도와 비상장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정 감사인 제도* 도입 추진

* 분식회계 기업 등에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의무화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회계감독제도를 선진화

*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고 외부감사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TF 운영중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 ◇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 및 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
- ◇ 상시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체질 개선 유도

가. 금융공기업의 기업자금 공급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1) 추진 실적

- 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원활히 공급
 - '10.9월까지 **18.6조원**의 설비투자자금을 공급('10년 계획 23조원)
- 중소기업에 대한 적절한 자금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
 - '10.9월까지 중소기업에 **78.0조원**의 자금을 공급
 - * 국책은행 : '10.9월까지 34.9조원 공급('10년 계획 41.0조원)
 - 보증기관 : '10.9월까지 43.1조원 공급('10년 계획 52.6조원)
 -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 만기연장, 보증비율 상향 등 중소기업 보증확대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
 - '10년 상반기까지 보증 만기연장을 유지하고, 하반기부터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
 - 위기시 95%였던 보증비율을 상반기 90%, 하반기 85%로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
 - 예측치 못한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Fast Track**은 '10년말까지 연장하여 운용

□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경주

- 신·기보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10년 보증한도를 상향(62.2조원 → 64.7조원)
- 보증기관에서 대기업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 상생특별 보증을 운영

* '10.9월말 현재 9개 대기업과 4개 은행에서 320억원을 신·기보에 출연하여 관련 협력업체에 4,700억원의 보증을 지원

- 재도전 기업주에 대해 신규보증 지원 등을 통해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재기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한 신규보증 지원, 기업주의 사전적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 재기 기업주의 신용회복 범위 확대 등

(2) 향후 계획

□ 중소기업 자금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실물분야에 원활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방안의 실효성 제고

* 상생 특별보증의 실효성 제고, 재도전 기업주 지원방안의 차질없는 시행 등

- 관계부처, 금융회사 등과 공동으로 기술력·성장가능성은 있으나 유동성 애로를 겪는 KIKO 거래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나.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자금 공급 확대

(1) 추진 실적

-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FreeBond) 및 채권몰(Bondmall) 개설로 채권시장을 통한 원활한 자금조달 기반 마련
 - 채권거래 전용시스템 도입('10.4월)으로 사설메신저에 의존하는 현행 채권거래시스템이 개선되어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
 - 채권몰 개설('10.2월)에 따라 소액채권투자자의 거래비용 경감 등 거래편의성이 제고되어 채권 수요기반 확대
-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및 상장 기회 확대
 - * '10.9월말 현재 15개 SPAC이 상장(유가증권: 3개, 코스닥: 12개)
- ☐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한 기업범위 확대 등 자산유동화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 학계, 업계 등 전문가 중심으로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10.8.19)

(2) 향후 계획

- ☐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도록 코스닥 및 프리보드 활성화 추진
- ☐ SPAC 관련 불공정거래, 주가급등에 따른 시장과열에 대비하여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M&A 유도
- ☐ 자산유동화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 제출 추진

다. 상시적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 유도

(1) 추진 실적

□ 향후 경제의 잠재불안 요인 대비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상시구조조정 지속 추진

○ 41개 대기업그룹에 대한 재무구조평가를 거쳐 재무상황이 악화된 그룹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5월)

○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678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65개사*(C38, D27)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6월)

* 건설업(144개사중 16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 조선업(16개사중 3개사), 해운업(26개사중 1개사), 개별대기업(492개사중 45개사)

□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 재무안정 PEF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

* 경영권 이전 없이도 구조조정 기업의 다양한 재산(주식, 부동산 등)에 50% 이상 투자 가능(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10.6월)

(2) 향후 계획

□ 워크아웃 업체에 대한 정상화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자구노력과 채권단 금융지원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도

* 하반기중 감독당국이 채권은행 구조조정 진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독려

□ 10월말까지 신용공여액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1,286개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완료 예정

4

금융시스템 선진화 및 국제정합성 제고

- ◇ 우리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건전성 감독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확충

가. 건전성 감독제도 정비

(1) 배 경

- 금번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건전성 감독 등 관련 제도를 정비
 - G-20,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등 국제논의와 연계

(2) 추진 실적

- (예대출 규제)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을 억제하고 유동성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 예대출 규제를 도입
 - 예대출 목표비율을 100%로 설정하되, 2013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 유도
- (단기 자금시장 개선) 금융회사의 단기자금조달이 콜시장에 편중되어 외부충격 등으로 콜시장 위축시 전체 금융권의 단기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 이에 따라 콜시장 건전화, RP활성화, 단기지표채권 육성 등을 통한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발표('10.7.27)
 - 콜시장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RP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금융투자회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기준**을 발표(8.17)하고 10월부터 시행

□ **(임직원 보상체계 개편)** FSB 논의 동향을 반영하여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 금융지주회사 등 4개 업권에 대해 **“보상체계 모범기준”** 마련

* 보상체계 모범기준 주요내용

- (지배구조) 보상위원회 설치 및 리스크관리·준법감시 부서의 독립성 강화
- (성과와 리스크 연계) 성과급 이연지급 의무화, 성과 목표 미달시 성과급 축소 등
- (공시 관련) 보수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 **(예금보험제도 개선) 목표기금제 시행**(‘09년)으로 적정 규모의 기금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목표기금제 : 기금의 계정별 사전적립 목표치를 정하고 적립수준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을 조정(인하)하는 제도

- **차등보험료율제를 도입**(‘09년, ‘14년부터 시행)하여 보험료 부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리스크 감축을 유도

* 차등보험료율제 : 개별 금융회사가 영업활동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크를 측정하여 이에 상응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

(3) 향후 계획

□ G-20, FSB 등 국제적 논의 동향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나. 국제적 수준의 금융인프라 선진화

(1) 추진 실적

- ☐ **(IFRS 도입)**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시행을 위해 회계기준, 감독 제도 등을 정비하고 기업의 IFRS 도입을 지원
 - 현재 대부분(96%)의 의무적용기업이 이미 도입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
- ☐ **(신용평가제도 개선)** 국제 논의동향을 반영하여 신용평가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시행('10.1)
 - 이해상충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구축, 신용평가업무 행위 준칙 및 윤리기준 등 제시
- ☐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개선)** 신용등급 산정기초가 되는 신용정보 확충*('10.8) 및 일상적 거래에 수반되는 신용조회 기록의 신용평가 반영 제한** 등 제도 개선('10.7)

* 현금서비스정보 건별 온라인 조회 → DB 제공 등

** 연 3회이내('11년부터) 및 비대면 신용조회기록의 신용평가 미반영

(2) 향후 계획

- ☐ **IFRS 도입 준비상황** 지속 점검 및 미착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실시
- ☐ 개별 신용평가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운용실태 점검(10월중)을 통해 성공적 제도 정착 유도
-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등급 산정체계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다.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1) 추진 실적

□ 자금세탁방지관련 법령·제도의 선진화

- 혐의거래보고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인하(2천→1천만원) 하여 국제기준에 접근 (10.3월)

* 선진국은 기준금액이 없으나, 일시에 폐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하 추진

- 금융회사의 제도 이행수준 제고를 위해 고객확인·내부 통제·자료보존 의무 등에 대한 세부절차 마련 (10.7월)

□ 심사분석보고서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법집행기관과의 협의회 설치 및 심사분석관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2) 향후 계획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 정회원 가입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관련법 개정안 연내 국회 제출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ECD 산하, 우리나라는 09.10월 가입

- 테러자금조달 관련자의 거래제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개정안」 마련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기관제재를 도입하는 등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 마련

□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국제적 역할 강화를 위해 후발국에 대한 경험 전수, 아-태지역 국제회의 개최(11.10월말 예정) 추진

- ◇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금융선진화 비전을 제시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추진
- ◇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을 제고하고 특색있는 금융중심지 육성전략 수립·추진

가. 금융선진화 비전 수립

(1) 추진 실적

-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금융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정책·산업 관련 중장기 청사진 마련이 필요
 - 이에 따라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에 공동 작업을 의뢰, 3개 연구원이 올해 2월 연구결과를 발표

◇ “아시아 금융리더로 도약”을 금융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제시

- ① 금융규제개편, 예금보험제도 등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 ② 기능별 규율, 소비자 보호, 지배구조 강화 등 인프라 확충
- ③ 금융산업 해외진출 및 현지화 등 글로벌화 전략 추진
- ④ 글로벌 은행·IB 육성, 서민금융 강화 등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 ⑤ 단기금융시장, 코스닥, 퇴직연금 등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 심화

- 3개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발전심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일부 과제를 정책화

* 서민금융활성화, 외환건전성 제고, 단기자금시장 개선 등

(2) 향후 계획

-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세부 과제들의 정책화 추진

* 현재 논의중인 과제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 예금보험제도 개편 등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1) 추진 실적

- 협회, 금융회사 등이 참여하는 T/F를 통해 은행 등의 사외이사 모범기준*을 마련(은행 1.25일, 금융투자 및 보험 3.31일)

* 주요내용 : CEO·의장직 분리 및 선임사외이사제 도입, 총임기상한제(5년) 및 시차임기제(재적사외이사의 1/5 매년 교체) 등

- 사외이사 결격요건을 강화하고 이사회에 사외이사 비중을 상향조정(50%이상→과반수)하는 은행법 개정안 국회통과('10.5.17일 공포)

- 기능적으로 동일하지만 업권마다 다르게 규정된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최근 국제 논의동향*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 제정 추진

* 예시) 금융회사 보상제도, 사외이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등

- T/F 구성·운영, 금융연구원 주관 공청회 개최('10.6.23), 업권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존제도의 개선방향을 검토

(2) 향후 계획

- 공청회·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 추진

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1) 추진 실적

- 공자위 출범(09.8월) 이후 09.11월, 10.4월 2차례의 블록세일을 통해 공적자금 2조원을 회수하고 지분율을 73%에서 57%로 축소

(10.9.30일 현재, 단위:억원)

| 지원 | 회수 | | | | | | |
|---------|-------|------------------------|------------------------|-------------------------|------------------------|--------|--------|
| | 공모 | 제1차 블록세일 (04.9월) | 제2차 블록세일 (07.6월) | 제3차 블록세일 (09.11월) | 제4차 블록세일 (10.4월) | 배당금 등 | 계 |
| 127,663 | 3,672 | 3,240 | 9,168 | 8,660 | 11,606 | 16,667 | 53,014 |

- 공자위는 금년초부터 블록세일 추진과 병행하여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
 - '10.7.30 민영화 방안을 의결하고, '10.9.10 민영화 추진을 위한 매각주관사를 선정

(2) 향후 계획

-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
- 금년내 최종입찰대상자(Short-list) 선정을 목표로 추진중
 - 현재 진행중인 실사를 거쳐 10월말을 전후하여 매각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라. 미래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제고

(1) 추진 실적

□ (녹색금융)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금융지원 추진

- 녹색예금·채권·펀드에 대한 세제혜택*('10.1월) 및 녹색인증제 시행('10.4월)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유도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조특법)

-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 에너지절약 전문업체(ESCO)에 대한 신용보증 우대 등 녹색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

* 녹색산업 정책금융 지원 실적 : (09년)6.2조원 → (10.9말)6.7조원

□ (고령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금융상품 활성화

- 주택연금('역모기지') 적용 범위를 실버주택까지 확대('10.7월) 하여 고령층의 노후소득 창출을 지원

- 다자녀가구에 대한 예금금리 우대 상품 출시 등을 통해 출산 인센티브 제공

* 채움레이디적금(농협), 행복맘적금(국민) 등 은행별로 금리우대 상품 출시

□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 대출·보증시 고용창출실적이 좋은 기업을 우대하는 신용·기술평가시스템 구축

* (기은) 최근 1년 내에 고용이 증가한 경우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우대('10.3~)

* (기보) 최근 1년 내 기술인력 등의 신규고용실적 등이 있는 경우 기술 평가시 우대('10.4~)

- 고용창출 실적이 큰 기업에 특별자금, 특례보증 공급
 - (산은) 특별시설자금 지원분야(녹색산업 등 5개 분야)에 고용창출산업*을 추가하여 특별자금(2천억원 한도) 지원 ('10.6~)
 - * 창업기업, 고용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5% 이상 증가하고 증가인원이 6인 이상인 기업 등)
 - (신보) 상시 근로자수 증가(직전년도 대비 30%이상) 기업 등에 대해 특례보증(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 감면) 공급
 - * 특례보증 공급 규모('10.1~9월) : 4.0조원
 - (기보) 신규고용창출 기업에 신규고용인원당 2천만원, 기업당 최대 2억원(10명)까지 특별운전자금 지원
 - * 총 1,240명 신규채용에 대해 248억원 지원 ('10.1~9월)

(2) 향후 계획

- ☐ 녹색산업에 대한 건전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 ☐ 안정적인 노후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및 활성화 유도
 - 자산운용 규제완화 등을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강구
 - * 노동부, 금감원, 학계, 업계 등과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논의 진행 중
- ☐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 고용창출기업을 우대하는 신용·기술평가시스템을 다른 금융 공기업(신보, 정책금융공사)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특례보증·특별자금 공급을 지속

마. 특색있는 금융중심지 육성

(1) 추진 실적

- ☐ 서울 여의도 지구와 부산 문현 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09.1월)하고 이들 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확정(10.1월)
 - 서울 및 부산국제금융센터(SIFC 및 BIFC)가 건설중으로 외국 금융회사와 금융 공공기관의 이전·입주 추진 중*
- * (SIFC) 딜로이트, ING 자산운용 등 (BIFC) KRX, 기술보증기금, KAMCO 등
- ☐ 금융 MBA 설립과 실무인력 교육과정 지원 등을 통해 금융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마련
- ☐ 금융중심지지원센터(09.8)와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09.5)를 설치하여 금융회사 진·출입에 대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 외국인을 위한 경영환경 개선*과 적극적인 해외 IR(10.5월, 싱가포르·호주)을 통해 외국 금융회사 입주 유도
- * 임직원의 출입국편의 제공, 금융법규 영문화, 주거·의료·교육 환경 개선 등

(2) 향후 계획

- ☐ 글로벌 금융질서 재편기인 現 시점이 금융산업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 지속
 - 해외 금융회사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을 토대로 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유도
 - * 금융중심지내에 입주하는 금융기관에게 자금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중심지법 개정안이 국회(법사위) 계류중
 - 자산운용, 파생상품,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 등 경쟁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금융중심지 육성전략을 수립·추진
 - 우리가 강점을 가진 우수한 IT기술력, 양질의 인적자본 수준과 건실한 실물부분 등을 적극 활용

◇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하는 FSB 서울총회에서 주요 핵심과제 합의도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

(1) 추진 실적

□ G-20 금융개혁과제의 총괄·조정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적극 참여하여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

* 종전 G-7 중심의 금융안정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에 한국, BRICs 등 12개국 추가 및 역할 확대

○ G-20 정상들이 추진기로 합의한 주요 금융개혁 과제가 11월 서울 정상회의에서 완결될 수 있도록 FSB를 통해 적극 조율

* '10년중 FSB 회의 : 총회(3회), 운영위(4회), 상임위(4회), 기타 컨퍼런스콜 다수

□ G-20/FSB 주요 회원국 및 국제기준제정기구의 주요 인사*와의 양자면담을 통해 긴밀히 협의

* '10년중 미국·중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금융당국 수장 및 FSB·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의장 등과 총12회 면담 개최

(2) 향후 계획

□ FSB 총회를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서울에서 개최(10.20)

○ G-20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강화' 등 핵심 의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

* SIFI :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국내 전문인력의 금융분야 국제기구 진출 확대 및 우리 금융에 관한 대외 홍보 강화 적극 추진

[참고] G-20 정상회의 주요 논의의제

- ☐ **(균형성장 협력체계)**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고 신흥국 등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공동목표 수립
- ☐ **(국제금융기구 개혁)** IMF·세계은행의 지배구조 등 국제 금융기구 개혁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
- ☐ **(보호무역주의 저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새로운 투자·무역장벽 배제
- ☐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사전적 위기 예방 등을 위한 글로벌차원의 견실한 금융안전망 구축 추진
- ☐ **(개도국 개발)** 개도국의 성장은 세계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개도국 지원
- ☐ **(금융규제 개혁)** 금융회사의 과도한 위험부담을 방지하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 추진
 - 은행건전성 규제 및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등 주요 금융규제개혁을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까지 마무리

※ 주요 금융규제 개혁 과제

- 은행건전성 규제 강화, 보상체계 개선, 장외파생상품 시장 개혁,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규제 및 감독강화, 회계제도 개선 등

IV. 정기 국회 중 주요 제·개정 추진 법률안

- ◇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을 규율하는 총 39개 법률의 주무기관임
- ◇ '10.1~9월중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13개 법률이 개정되었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해 금융관련 법률의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

□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길 희망하는 주요 법안은

- 기업들의 단기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전자단기사채 제도를 도입하는 전자단기사채법안
- 미소금융업자에 대한 사무실 무상제공 근거 마련 등을 통해 미소금융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법안
-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신탁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고 단위신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법안
- 법 존속기한('10년말) 연장 및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
-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을 행정형벌(징역 또는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하는 금융위 설치법 등 4개 법안* 등임

* 금융위 설치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자산관리공사법

[참고] 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현황

| 구 분 | 법 률 |
|--------------|--|
| 금융정책 관련 (4) |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산업금융 관련 (6) | ·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 구조개선 관련 (5) |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
| 글로벌금융 관련 (1) | ·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
| 은행 관련 (5) | ·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
| 보험 관련 (2) | · 보험업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서민금융 관련 (6) | ·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
| 자본시장 관련 (5) | · 공사채등록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법, 담보부사채신탁법 |
| 자산운용 관련 (1) |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 회계 관련 (2) | · 공인회계사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
| 금융정보분석원 (2)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소계 (39) | |

[참고] '10년도 법률 제·개정 실적

| 일련 번호 | 법률명 | 공포 일자 | 주요 내용 |
|----------|-------------------------------------|-----------|--|
| 1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0.01.25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고정사업장 요건 신설 등) |
| 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 ○주택저당채권 통합운용 관리 ○CP발행 법적 근거 마련 |
| 3 | 주택저당채권 유통화 회사법 | '10.02.04 | ○양별 규정 정비 |
| 4 |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0.03.12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 으로 법률용어 수정 |
| 5 | 중소기업은행법 | " | " |
| 6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 " | " |
| 7 | 공적자금상환기금법 | " | " |
| 8 | 자본시장법 | " | ○기업재무안정 PEF 및 기업 재무안정투자회사 제도 신설 ○기업어음 전자발행 면제 ○판매수수료·보수한도 신설 ○금융투자협회에 장외파생 금융상품 심의기구 설치 |
| 9 | 여신전문금융업법 | " | ○신용카드결제대상 범위확대 ○카드모집인 처벌규정 도입 |
| 10 | 상호저축은행법 | '10.03.22 | ○영업구역 광역화 및 자기 자본 산정기준 개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 |
| 11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 | ○다중이용업소와 운수시설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
| 12 | 은행법 | '10.05.17 | ○은행 부수업무범위 확대 등 규제 완화 ○양별규정 개정 |
| 13 | 보험업법 | '10.07.23 |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보험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

<參考資料>

1. 200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2. 2011년도 예산안 개요
3. 주요 통계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1. 2009년도 국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금융위기 대응 및 출구전략 관련 | |
| 1-1) 외환관리에 있어 예대율 관리, 통화스왑 등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통해 건전성 감독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 및 감독강화 방안' 시행('10.1.1일)</p> <p>* 외화유동성비율 산정시 유동화가중치 적용 및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 강화,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 거래 리스크 관리 신설</p> <p><input type="checkbox"/> '2차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시행('10.8.1일)</p> <p>* 외화유동성비율 일일 관리 및 중장기 외화 자금관리 추가 강화, 외은지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 신설, 외환파생상품거래 리스크 관리 추가 강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각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 제고방안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p> |
| 1-2)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등 세계 경제의 침체(더블딥) 우려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노력* 강화</p> <p>* 금융회사 외화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감독 강화 방안 마련, 글로벌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적극 참여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융시장의 잠재적 취약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 대응</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1-3) 경제위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루어진 각종 조치(기금, 펀드등)의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내실있는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p> | <p>○ 또한, G20, FSB 등 국제적 논의와 연계 하에 국내 금융 건전성 규제체제 정비 추진</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비상조치*의 내실 있는 운용과 점검 추진</p> <p>* 은행자본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구조조정 기금, 중소기업 보증만기 연장,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 등</p> <p>○ 아울러 경제·금융 여건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정상화 추진</p> <p>* 은행 외화채무지급보증 종료('09.12)</p> <p>* 중소기업신용보증 확대조치 정상화('10.7)</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아직 불안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비상조치를 경제여건과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추진</p> |
| <p>1-4) 출구전략을 시행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비상조치 환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지속</p> <p>○ 중소기업 활성화·설비투자 등 민간의 자생적 경기 회복기반 마련</p> <p>○ 기업구조조정추진 등 금융불안에</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선제적으로 대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경기회복과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p> |
| 2. 미소금융 및 금융소외자 지원 관련 | |
| 2-1) 미소금융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있어 관치금융 논란이 없도록 조치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기업·은행의 기부금은 자체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재출연되어 각 기업·은행재단이 자율적으로 미소금융 사업을 수행중</p> <p>○ '10.10.6일 현재, 86개 기업·은행권 재단 및 지역지점 설립이 완료</p> <p>○ 기업·은행이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해당 기업·은행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p> |
| 2-2)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년중 미소금융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그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령정비를 추진 중</p> <p>○ 휴면예금법 개정안 국회심의 ('10.9.29, 법안심사소위 회부)</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input type="checkbox"/> 또한 미소금융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선정위원회 (7인)」를 외부전문가(5인) 중심으로 기 재편하고 사업자 선정기준도 이사회에서 사전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09.12) · 2차('10.4) 지역법인 대표자 공모 과정에 기 적용했고 앞으로도 선정 기준·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
| 2-3) 미소금융재단 이사회가 방만 경영을 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재단의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는 철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음 (금융위원회는 당연직 이사로 미소금융 재단이사회에 참석) * '10.2월, 6월중 감사원의 미소재단 감사실시 |
| 2-4) 미소금융이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의 전문 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운영인력의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운영인력의 전문능력 제고 등 운영의 내실화방안을 시행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 미소희망봉사단을 통한 전문인력 재능기부, 현대차미소학습원 운영, 금융연수원과 공동으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
| 2-5) 미소금융이 기존의 서민금융 (희망홀씨 대출 등)과 중복, 상충됨이 없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과 희망홀씨대출은 대출자금의 용도가 상이하여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수행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소금융 : 창업자금 · 운영자금 등 희망홀씨대출 : 생계비 등 일반대출 □ 미소금융지점 방문자 중 미소금융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희망홀씨대출 등 기타 서민금융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병행 중 ○ 다만, 과도한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를 연계 관리 |
| <p>2-6) 서민에 대한 대출시 정부의 보증을 통한 신용을 보장하는 방안과 실직·폐업 상태에 있는 서민에 대한 긴급 소액 생계비 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책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부 서민대출인 ‘햇살론’을 출시(‘10.7월)하여 저신용 · 저소득 서민에게 생계자금, 사업자금을 지원 ○ 정부와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으로 보증재원(2조원)을 마련하여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서민에게 향후 5년간 총 10조원 대출 추진 ○ ‘10.7.26~10.6일까지 50영업일간 총 112,158건, 1조 328억원을 지원하여 서민 전용 대출상품으로 안착 |
| <p>3. 녹색금융추진관련</p> | |
| <p>3-1) 녹색금융의 정의와 지원기준을 시급히 마련하여 과거 벤처 거품과</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금융기관들이 인증대상 녹색기술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같은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p> | <p>· 녹색산업(지경부 고시)을 바탕으로 자금운용 기준 등을 정비</p> <p>□ 또한 금년 4월부터 녹색인증제를 시행하여, 세제혜택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의 녹색금융상품 지원대상을 녹색인증을 받은 사업 등으로 함</p> |
| <p>4.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 관련</p> | |
| <p>4-1)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MOU 점검방식의 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p> | <p><처리결과></p> <p>□ 예금보험공사는 MOU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MOU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1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예방기능을 강화 ○ MOU 재무목표 부여방식과 재무지표 산정방식 개선 <p><향후 추진계획></p> <p>□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예보가 MOU 이행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적절한 사후 조치 등을 취하도록 관리 감독</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5. 한국은행법 개정관련 5-1) 지난 9월 체결한 정보공유 MOU를 충실히 이행하고,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 검사권부여 등이 우리 금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 |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정보공유 MOU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 등 각 기관은 관련정보를 원활히 공유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5개 기관 부기관장으로 구성된 정보공유 협회 등을 통해서 MOU 운영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개선 |
| 6. 신용카드 관련 6-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하여 원가공개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인하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처리결과> ① (재래시장 가맹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재래시장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상한을 20~22%에서 1.6~1.8%로 인하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재래시장 (약 1,550개) ○ 다만, 유흥주점, 무도장, 성인오락실, 귀금속점 등 영세업종으로 보기 어려운 가맹점은 제외(중소 가맹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제외) ※ (참고) 현재 서울시내 3大 대형마트 신용카드수수료율 : 1.6~1.9% ② (중소 가맹점) 재래시장 가맹점 이외에 연간 매출 9,600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신용카드수수료율 상한을 3.3~3.6%에서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2.0~2.15%로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사별 중소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이 2.0~2.15%로 대폭 인하됨에 따라 기존에 2.0~2.3%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영세가맹점(간이과세자)도 일부 인하 ※ (참고) 현재 서울시내 3대 대형백화점 신용카드수수료율 : 2.0~2.4% ③ 민간영리기업의 원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라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 * (예시) 원가를 절감하는 경영·영업 노하우가 경쟁사에 노출될 가능성, 경영효율성에 의한 원가절감이 가격인하 압박으로 귀결될 가능성 등 ○ '09년말 여전법 개정을 위한 정무위 법안 소위에서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독당국의 카드수수료 관련자료 요구권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 |
| <p>6-2)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 폐지 등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인하하는 한편, 체크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서비스 이자율) '10.9월 기준 카드사는 취급수수료 폐지(8개사) 또는 일부 인하 등의 방법으로 현금서비스 금리를 인하 ○ 카드사별 인하폭(취급수수료 포함)은 0.3%p~4.06%p 수준이며, 평균 현금서비스 금리*도 '09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 지속 * 26.4%('09.1Q)→25.9%('09.2Q) → 25.7%('09.3Q) →25.7%('09.4Q)→24.6%('10.1Q)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3/4분기 중 취급수수료를 폐지하지 않고 일부 인하한 카드사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 카드사가 추가로 취급수수료를 폐지할 예정 ⇒ 서민들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하여 취급수수료 폐지 및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지속 유도 □ (체크카드 수수료율) 다음과 같이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旣 마련 ○ 기존에는 직불·체크카드 결제 가능 범위를 재화·용역의 공급 대가로 한정(신용카드 결제 가능 범위와 동일)하고 있었으나 결제 가능 범위 규정을 네거티브 형태로 변경하는 한편,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체크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 등도 결제가 가능토록 결제 범위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의 경우 대출 상환, 주식·펀드 투자에 대해 결제 금지 규정 신설('10.3월 법개정) ○ 2010년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율 차별화*(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 : 20%, 체크카드 : 25% ⇒ 이에 따라 향후 소비자의 체크카드 사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카드사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유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6-3) 포인트·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p> | <p>*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비중 · 2.9%(’05)→6.0%(’07)→9.9%(’09)→10.8%(’10.1Q)</p>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거래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포인트,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음(09.2월 입법예고)</p> <p>○ 다만 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 (민간위원 18인) 논의과정에서 철회권고(09.7월)되어 국회 제출안에서는 삭제</p> <p><input type="checkbox"/> 이후 유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09.11월, 이성남의원)</p> <p>○ 국회 논의과정에서 포인트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한 합리적인 감독강화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p> |
| <p>7. 주택담보대출관련</p> | |
| <p>7-1) 주택담보대출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자산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 DTI등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각 개별법에 근거한 감독규정으로 규제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주택 및 주택금융시장 동향, 금융회사 건전성 추이 등 관련동향을 보아가며</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 모색 |
| <p>8.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의 폭증의 배경에는 해당 은행들의 과다 경쟁과 비이성적인 영업 행태가 지적되고 있는 바, 특히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이 다단계 업체처럼 강제 할당식 꺾기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2010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을 영업점 경영실적평가 기준(KPI)에서 제외('10. 1. 11) 하여 영업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과당 유치 유인 구조를 개선 <input type="checkbox"/> 불완전 판매 방지 직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캠페인 등 과당 경쟁을 지양하고 정상적인 실수요자 중심의 영업 추진 |
| <p>9.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설립 이후 지원 실적이 미흡하므로 실적 개선에 노력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08년 9월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어 2년째 운영 중 <input type="checkbox"/> 그동안 지원센터는 금융기관의 질의·건의사항 처리와 애로사항 해소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금융환경개선에 노력해왔으며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진입, 국내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금융기관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중심지 정책 홍보를 위한 해외 IR('09.11월, '10.5월)을 실시 - 서울시-맥쿼리그룹간 한국내 사업 확대를 위한 MOU('09.11월) 및 부산시-칼리온 은행간 선박금융 협력강화 MOU 체결지원('09.11월) - 부산시-佛 Orbeo社간 탄소배출권시장 협력을 위한 MOU 체결지원('10.5월) ○ 또한, 금융감독법규 영문화('09.12월), 금융거래 가이드북 발간('10.1월), 금융회사 외국인 임원의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10.4월) 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앞으로도 국내사의 해외진출과 외국사의 국내진입 원활화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p> |
| 10. 중소기업지원관련 | |
| 10-1) 향후 중소기업 대출 및 보증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신·기보 적정 보증 규모 확보 등)의 마련과 함께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한시적 확대지원조치의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에 주는 충격을 완화⇒'10년 업무계획에 반영</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포함한 구조조정 노력도 지속 추진할 것</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중에도 위기이전인 '07~'08년 보다 확대 보증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보 보증공급(조원): ('07) 40.6 → ('08) 41.6 → ('09) 55.4 → ('10) 52.6 ○ Fast Track을 연말까지 연장하여 운영 ○ 신·기보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10년 보증한도를 상향('10.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보 보증한도(조원) : 62.2 → 64.7 □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구조조정 지연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조치도 병행 추진 ⇒ '10년 업무 계획에 반영 ○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제한적으로 보증 만기연장 ○ 비효율적 부문(한계기업 고액·장기보증기업 등)에 대해서는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보증감축 및 구조조정 유도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대응조치의 단계적 정상화 추진 상황과 중기대출·보증 및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중점 모니터링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한편 한계기업 등의 구조조정 촉진 |
| <p>10-2)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및 여신거래약정서에 금리를 미기재하는 등의 문제를 T/F 구성 등을</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부대출의 고금리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 <p>방안” 발표(4월) 및 시행(8월)</p> <p>* (주요내용) ① 보증부분에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 ② 보증부 대출 금리 보증기관에 통보, ③ 보증부 대출 금리관련 은행 내부통제 강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보증부 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방안 정착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p> |
| <p>10-3) 중견기업의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금융위·기재부·지경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견기업 육성 방안 발표(3.18)</p> <p>* (주요내용) ①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범위 규정(지경부), ② 중견기업 조세 부담 완화(기재부), ③ 중견기업 금융 부담 완화(금융위)</p> <p>○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를 통한 중견기업 자금 공급, 신기보 보증 종료 부담완화 등을 추진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 즉시 중견기업 지원 정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완료</p> <p>* 정책금융공사 : 자금공급 기준 마련 * 신·기보 : 보증 종료 부담 기준 마련</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과 동시에 중견기업 지원 개시</p> |
| <p>11. 현행 대출금리의 산정기준인 CD+가산금리 “체계에 대하여 CD 금리가 자의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있고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조사하고 금리결정 구조에 대한 개선책 및 금리 인하 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은행연합회가 ‘10.2월부터 새로운 대출 기준금리인 코픽스를 고시하고, 시중 은행이 이를 이용한 대출상품을 출시</p> <p>○ 은행 자금조달비용을 적절히 반영하는 코픽스 연동 대출 도입으로 고가산금리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p> <p>※ CD연동 대출의 코픽스 전환 허용으로 기존 차주의 고가산금리 문제도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p> <p><input type="checkbox"/> 다만, 금리는 시장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나, 코픽스 도입 전후 신규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소폭 하락</p> <p>* (1월) 5.88 (3월) 5.47 (5월) 4.78 (7월) 4.70</p> |
| <p>12. 저축은행의 고금리 문제 해소와 저축은행계정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의 고금리 서민대출 문제 해소를 위해</p> <p>○ ‘10.4.7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보증부 서민대출 방안(“햇살론”)을 마련하여 발표</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보증 공급을 통해 서민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함으로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유도 □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화 방지를 위해 감독 및 검사 강화방안*을 포함한 저축은행법 개정안 국회 의결('10.3.22 공포, '10.9.23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제도 (Dynamic fit & proper test) 실시 등 소유·경영 지배구조 개선, 계열저축은행에 대한 대출한도 설정 등 자산운용 규제 강화 등 ○ 아울러, '10.4.9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방안을 마련하여 발표(시행령 및 감독규정 반영완료 '10.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의 PF 등 부동산 대출 쏠림현상 완화를 위한 자산운용규제 강화 - 저축은행의 외형 확대에 걸맞는 건전성 기준 강화(예: BIS비율을 5%에서 7%로 단계적 상향조정 등) |
| <p>13. 해운산업의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선박펀드 활용도 제고('09.11월) ○ 구조조정기금 투입 비율을 상향(40% → 60%)하고 건조 중 선박*도 매입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대상에 포함하는 등 운영방식 개선</p> <p>*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선박에 대해서는 지원을 약정하고, 건조완료 후 매입대금 지급 및 인수</p> <p>○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 중</p> <p>* '10.8월까지 7척(건조중 선박 2척 포함)을 매입하였고, 이중 6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 투입비율 상향조정(40%→60%)</p> <p>□ 한편, 금년 해운업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6월말)를 통해 1개사(C1)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p> <p>○ 워크아웃 추진 업체는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는 등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추진중</p> <p><향후 추진계획></p> <p>□ '10년 하반기에도 선박펀드 등을 통해 해운사 선박 매입을 지속 추진</p> <p>□ 현재 추진중인 워크아웃 등을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채권단을 적극 독려</p> |
| <p>14.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체계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 '서민금융활성화 대부업 분과 TF' 운영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 방안 논의('10.2~)</p> <p>○ “서민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방안”</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발표('10.4)</p> <p>- 대형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등 대부업 관리·감독체계를 이원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향을 포함하여 발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TF 등을 통해 대부업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p> |
| <p>15. 시중은행이 설립한 민간배드뱅크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면책기록의 보존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년정도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 <p>< 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09.10월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파산면책 정보 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p> <p><input type="checkbox"/> 파산면책정보 관리기간의 추가 단축은 금융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p> <p><input type="checkbox"/> 향후 민간 배드뱅크의 과잉·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및 모니터링을 철저히 추진</p> |
| <p>16. 금융소비자보호관련</p> | |
| <p>16-1)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 교육을 강화(정책 수립)하고, 금융민원의</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원활한 해소 등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원 설립 등을 비롯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p>연구용역 발주(KDI, '10.04.13.)</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구용역(KDI)을 토대로 전문가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추진</p> |
| 17. 금융중심지 추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 지역 등에 대해 금융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올해부터 실무금융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지역의 전문인력양성을 지원(전체 교육비의 35%)</p> <p><부산지역 교육 세부내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 123명 교육에 총 3.4억원 지원 ○ 과정: 선박금융·국제금융(교육기관 : 금융연수원) 해양파생상품(금융투자협회), 해상보험(보험연수원)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교육기관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p> |
| 18. 금융전문인력 양성 관련 자격증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분야 자격제도는 금융투자협회가 '09.12월 제도를 전면 개편하였고, '10.2.4일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협회 내에 전문인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격 및 시험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중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금융투자분야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며, 자격제도는 자율규제사항으로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고 운영</p> <p><참고 : 자격제도 개편안의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격증을 20종 → 7종(시험은 11종 → 6종)으로 대폭 통폐합함으로써 자격제도를 단순명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 ○ 영업현실을 반영하되, 시험 내실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 <p>□ 공인회계사 자격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가자격제도로써 업무감독과 교육은 금융당국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체계적으로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부터 전문인력 양성확대를 위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1,000명으로 100%확대했으며 2007년에는 절대평가제를 도입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투자분야 전문인력은 향후로도 자율규제기관인 금융투자협회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인력위원회와 전담부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양성·관리해나갈 계획</p> |
| <p>19. 펀드 관련</p> <p>19-1) 대리인에 의한 펀드 개설시 적합성 원칙과 투자자 편의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p> | <p><처리결과></p> <p>□ 대리인을 통한 펀드가입시 절차 관련</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방안을 마련할 것 | <p>국내실태·외국 사례조사를 진행 하였음</p> <p><input type="checkbox"/>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조화방안*을 마련하여 '10년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에 반영('10.8.27일)</p> <p>* (예시)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투자자성향 파악을 허용하는 방안 등</p> |
| 19-2) 펀드 판매 수수료 및 펀드 운용보수 인하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펀드 판매 보수·수수료 상한을 인하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09.12.21 시행)</p> <p>○ 판매 보수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1.0% 이내</p> <p>* 체감식인 경우 1.5%까지 허용하되, 2년 이후부터 1.0%이내로 인하</p> <p>○ 판매 수수료 : (종전) 연 5.0% 이내 → (변경) 연 2.0% 이내</p> <p><input type="checkbox"/> 신설펀드에 준해서 기존펀드 판매보수도 자율적으로 인하('10.5.3부터 단계별 시행중)</p> |
| 19-3)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인덱스펀드의 이해상충 발생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방지 측면에서 문제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덱스펀드의 운용사는 미리 발표된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대로 자산을 편입하는 소극적 운용을 담당하므로, ○ 이해상충 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여짐 <p>□ 한편, 계열사 주식 투자 등에 대한 외국사례를 조사한 결과 원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제한은 없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운용사가 자기계열 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도 존재 <p><향후 추진계획></p> <p>□ 인덱스펀드가 수익자와 계열그룹간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임</p> |
| <p>19-4) 펀드 판매회사가 높은 판매 보수를 수취하고 있어 장기투자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지속되므로, 숨겨진 비용인 판매보수 폐지 및 판매 수수료와의 이중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p> | <p><처리결과></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발의)에 대한 심사과정에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보수를 완전히 없앨 경우 판매수수료가 올라가는 풍선효과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 판매보수제 자체는 존치하되, 판매보수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상한을 설정(연간 1.5% 이내) 하였음</p> <p><향후 추진계획></p> <p>□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상한 인하에 따른 시장변화를 보아가며, 판매보수추가 인하 및 판매보수·수수료 일원화가 필요한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p> |
| <p>19-5)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미스터리쇼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바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09년중에 미스터리쇼핑을 2차례 실시한바 있음</p> <p>○ (제1차: 3~ 4월) 20개 판매사, 200개 지점</p> <p>○ (제2차: 9~10월) 30개 판매사, 450개 지점</p> <p>□ 금년의 경우, 6.7~7.6 기간 중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였으며 35개 판매사 600개 지점을 대상으로 하였음</p> <p>○ 모범사례와 개선 권고사항 등을 판매회사에 서면통지하여 판매업무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였음</p> <p><향후 추진계획></p> <p>□ 개선권고사항 등의 이행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예정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input type="checkbox"/> 감독역량, 효과 극대화 요소 등을 감안하여 대상 판매사 및 점포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나갈 예정임 |
| <p>20. 은행의 DCDS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법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할 것</p> | <p>< 처리결과 ></p> <p><input type="checkbox"/> 현재 DCDS 업무가 은행의 부수업무로 영위가 가능한지, 보험업의 일부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에 DCDS 취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조항은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란이 있어, 계속 논의중</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의 부수업무에 DCDS를 허용하는 은행법 개정안(박종희 의원안, 09.9.9)이 발의되었으나,</p> <p>○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을 감안하여 대안 폐기되었음</p> |
| <p>21. 은행연합회를 자율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법적단체로 은행법상 규정하되, 그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배구조 개선</p> | <p>< 향후 추진계획 ></p> <p><input type="checkbox"/> 금융감독시스템 측면에서 은행연합회에 대한 자율규제기능의 법적 부여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이후 은행업 규제기관을 통합·일원화하는 국제적 경향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 □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단체로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 □ 한편, 은행연합회는 신용정보법상 모든 금융업권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므로 ○ 집중기관으로서의 객관성 및 대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음 * 신용정보협의회 구성 및 운용 개선, 자문위원회 설치 등 검토 |
| <p>22. 금융보안체계 구축 관련</p> <p>□ 금융위 보안 업무 관련 조직 및 인력 확충 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 행안부 및 재정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하여 '11년 정보화 인력을 일부 확충(7급 1명) 하였고, 향후 사이버 테러의 증가 등 위기 대응 업무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보화 인력 추가 확충 및 금융보안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위해 유관 기관과 지속적</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 |
| <p>23. 신용평가사의 자회사가 신용평가업을 영위할 수 있는 업체로 오인될 활동 및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p> | <p>< 처리결과 ></p> <p><input type="checkbox"/> 개정 신용정보법('09.10월시행)은 국회에서 지정한 신용평가업 영위 업체로 오인될 활동(기업 신용도 인증업무)을 “신용정보 주체의 신용도를 산정하는 행위”로서 “신용조회업”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독 당국의 규율범위에 편입</p> <p>○ 따라서 앞으로 기업신용도 인증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아야 함</p> <p>○ 또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조회와 관련된 업무에 한하여 겸업할 수 있으며(법 §11),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경우에도 이해상충·불공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직 및 업무체계를 구비하도록 규정함으로써</p> <p>- 신용평가업 영위 업체로 오인될 활동(기업 신용도 인증업무) 및 부수업무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p> |
| <p>24.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협회의 회원에 대한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재 연수 교육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보험대리점협회에서도 회원에 대한</p> |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재 보험대리점협회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업무를 할 수 있음</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연수 및 교육업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 추가적인 정부업무 위탁 등에 대해서는 보험대리점 협회의 조직과 인원 등을 감안하여 계속 검토해 나가겠음 |
| 25. 잦은 인사 관련 | |
| <input type="checkbox"/>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것 | <p><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일부 간부급 공무원들의 이직, 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신설 등으로 불가피한 보직 이동이 있었으나 <input type="checkbox"/> 향후 정기 인사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금융위 업무가 더욱 원활하게 추진될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 |

2. 2011년도 예산안 개요

I.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07억 10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4억 83백만원 감소(△12.2%)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안(B) | 증감액 (B-A) | 증감률 (%) |
|-------------|---------|----------|--------------|------------|
| 합 계 | 12,193 | 10,710 | △ 1,483 | △ 12.2 |
| 전대차관 원금회수 | 1,110 | 1,038 | △ 72 | △ 6.5 |
| 전대차관 이자수입 | 127 | 86 | △ 41 | △ 32.3 |
| 벌 금 및 몰 수 금 | 10,875 | 9,500 | △ 1,375 | △ 12.6 |
| 가 산 금 | 81 | 86 | 5 | 6.2 |

II.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 201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9,560억 67백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1조 1,903억 24백만원 감소(△37.8%)

(단위 : 백만원)

| 구 분 | 10예산(A) | 11예산안(B) | 증 감 액 (B-A) | 증 감 율 (%) |
|--|-----------|-----------|----------------|--------------|
| 합 계 | 3,146,391 | 1,956,067 | △ 1,190,324 | △ 37.8 |
|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 운영 | 143,103 | 103,532 | △ 39,571 | △ 27.7 |
| ○ 인 건 비 | 15,028 | 16,350 | 1,322 | 8.8 |
| ○ 기 본 경 비 | 7,141 | 7,462 | 321 | 4.5 |
| ○ 사 업 비 | 120,934 | 79,720 | △ 41,214 | △ 34.1 |
| <input type="checkbox"/> 내부 거래(회계기금간 거래) | 3,003,288 | 1,852,535 | △ 1,150,753 | △ 38.3 |
| ○ 공적자금상환기금전출 | 3,000,000 | 1,849,357 | △ 1,150,643 | △ 38.4 |
| ○ IBRD차관 원금 상환 | 2,948 | 2,754 | △ 194 | △ 6.6 |
| ○ IBRD차관 이자 상환 | 340 | 424 | 84 | 24.7 |

3. 주요 통계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 | | '06 | '07 | '08 | '09 | '10년 | | | | | | | |
|-------|-----------------------------------|----------------|----------------|-----------------|----------------|-------------------|----------------|-------------------|--------------|--------------|--------------|--------------|--------------|
| | | | |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 국내총생산 | GDP 성장률 ¹⁾ (금액, 조원) | 5.2 (910.0) | 5.1 (956.5) | 2.3 (978.5) | 0.2 (980.4) | 8.1 (전기비 +2.1) | | 7.2 (전기비 +1.4) | | | | - | |
| | GNI 증가율 (금액, 조원) | 3.9 (898.2) | 4.8 (941.3) | △0.6 (935.2) | 1.5 (948.9) | 8.9 (전기비 +0.9) | | - | | | | - | |
| 실물동향 | 생산 증가율 ²⁾ | 8.4 | 6.9 | 3.4 | △0.8 | 37.0 | 18.9 | 22.7 | 20.1 | 21.7 | 17.2 | 15.5 | 17.1 |
| | 재고 증가율 ²⁾ | 9.3 | 5.6 | 7.1 | △8.0 | △3.6 | 4.2 | 6.6 | 10.9 | 14.8 | 15.6 | 18.1 | 19.2 |
| | 평균가동률(기중) | 80.0 | 80.1 | 77.5 | 74.6 | 78.9 | 80.3 | 82.4 | 82.2 | 82.8 | 84.0 | 84.8 | 81.8 |
| | 설비투자 증가율 | 9.2 | 8.2 | 0.8 | △8.2 | 20.9 | 19.5 | 34.7 | 25.6 | 24.3 | 23.9 | 33.7 | 39.8 |
| | 경기선행지수 ³⁾ | 5.3 | 7.2 | △4.2 | 11.6 | 11.3 | 10.3 | 9.7 | 8.6 | 8.0 | 7.1 | 6.7 | 5.9 |
| 물가·고용 | 생산자물가 | 0.9 | 1.4 | 8.6 | △0.2 | 2.8 | 2.4 | 2.6 | 3.2 | 4.6 | 4.6 | 3.4 | 3.1 |
| | 소비자물가 | 2.2 | 2.5 | 4.7 | 2.8 | 3.1 | 2.7 | 2.3 | 2.6 | 2.7 | 2.6 | 2.6 | 2.6 |
| | 실업자수(천명) (실업률) | 827 (3.5) | 783 (3.2) | 769 (3.2) | 889 (3.6) | 1,216 (5.0) | 1,169 (4.9) | 1,005 (4.1) | 934 (3.9) | 793 (3.2) | 878 (3.5) | 931 (3.7) | 831 (3.3) |
| 대외거래 | 경상수지(억달러) | 53.9 | 58.8 | △57.8 | 426.7 | △6.3 | 1.7 | 18.0 | 14.2 | 38.2 | 51.0 | 58.2 | 20.7 |
| | (상품수지) | 279.1 | 281.7 | 56.7 | 561.3 | 13.8 | 15.6 | 45.0 | 51.2 | 41.7 | 64.2 | 71.6 | 37.0 |
| | (서비스수지) | △189.6 | △197.7 | △166.7 | △172.0 | △21.6 | △17.8 | △21.0 | △18.5 | △6.4 | △16.7 | △15.0 | △17.8 |
| | 자본수지 | 179.7 | 71.3 | △500.8 | 264.5 | 46.3 | △4.3 | 15.2 | 85.6 | △120.4 | △12.3 | 2.0 | △2.0 |
| | (직접투자) | △45.4 | △138.4 | △156.3 | △90.7 | △16.8 | △7.6 | △2.0 | △12.2 | △5.5 | △4.7 | △19.0 | △12.5 |
| | (증권투자) | △232.3 | △260.6 | △24.1 | 506.8 | 3.2 | 24.4 | 77.9 | 55.0 | △5.9 | 18.9 | 86.8 | 14.1 |
| | (파생상품) | 4.8 | 54.5 | △147.7 | △55.4 | 0.5 | 2.6 | 1.0 | △2.5 | △4.5 | △4.5 | △0.8 | 0.9 |
| | (기타투자) | 483.8 | 439.6 | △173.9 | △108.2 | 60.2 | △23.2 | △61.1 | 46.5 | △105.5 | △22.5 | △65.0 | △5.2 |

주: 1) 실질 GDP, 실질 GNI 2) 전년동월비 3) 전년동월비, 연중은 해당연도의 12월중 변동율

2. 주식시장

| | '05말 | '06말 | '07말 | '08말 | '09말 | '10년 | | |
|----------------------------|-------------------|------------------|-------------------|--------------------|-------------------|-------------------|-------------------|-------------------|
| | | | | | | 8말 | 9말 | 10.7 |
| KOSPI | 1,379.4 (54.0) | 1,434.5 (4.0) | 1,897.1 (32.2) | 1,124.5 (△40.7) | 1,682.8 (49.6) | 1,591.6 (△5.4) | 1,872.8 (11.3) | 1,900.9 (13.0) |
| KOSDAQ | 701.8 (84.5) | 606.1 (△13.6) | 704.2 (16.2) | 332.1 (△52.8) | 513.6 (54.7) | 514.7 (0.2) | 492.8 (△4.0) | 496.1 (△3.4) |
| 미 국 (DOW) | 10,718 (△0.6) | 12,463 (16.3) | 13,265 (6.4) | 8,776 (△33.8) | 10,428 (18.8) | 10,015 (△4.0) | 10,788 (3.5) | 10,949 (5.0) |
| 일 본 (NIKKEI) | 16,111 (40.2) | 17,226 (6.9) | 15,308 (△11.1) | 8,860 (△42.1) | 10,546 (19.0) | 8,824 (△16.3) | 9,369 (△11.2) | 9,685 (△9.7) |
| 중 국 (상해종합) ¹⁾ | 1,161 (△8.4) | 2,676 (130.5) | 5,262 (96.7) | 1,821 (△65.4) | 3,277 (80.0) | 2,639 (△19.5) | 2,656 (△19.0) | - - |
| 영 국 (FTSE) | 5,619 (16.7) | 6,221 (10.7) | 6,457 (3.8) | 4,434 (△31.3) | 5,413 (22.1) | 5,225 (△3.5) | 5,549 (2.5) | 5,662 (4.6) |
| 인 도 (SENSEX) | 9,398 (42.3) | 13,787 (46.7) | 20,302 (47.1) | 9,647 (△52.5) | 17,465 (81.0) | 17,971 (2.9) | 20,069 (14.9) | 20,297 (16.2) |
| 홍 콩 (HS) | 14,876 (4.5) | 19,965 (34.2) | 27,813 (39.3) | 14,387 (△48.3) | 21,873 (52.0) | 20,536 (△6.1) | 22,358 (2.2) | 22,884 (4.6) |
| 시가총액 (조원) | 726.0 (63.6) | 776.7 (7.0) | 1,051.8 (35.4) | 623.0 (△40.8) | 972.5 (56.1) | 1,047.0 (7.7) | 1,126.8 (15.9) | 1,143.2 (17.6) |
| 고객예탁금 ²⁾ (조원) | 11.9 (46.9) | 8.4 (△29.4) | 9.5 (13.1) | 9.2 (△3.2) | 12.1 (31.5) | 12.7 (5.0) | 13.8 (14.0) | 14.5 (19.8) |
| 주식형펀드 ²⁾ (조원) | 26.2 (204.7) | 46.5 (77.5) | 116.4 (150.3) | 140.2 (20.4) | 126.2 (△10.0) | 110.8 (△12.2) | 107.3 (△15.0) | 106.7 (△15.5) |
| (국내 펀드) | 25.0 (194.1) | 40.1 (60.4) | 66.5 (65.8) | 85.8 (29.0) | 75.4 (△12.1) | 66.6 (△11.7) | 64.3 (△14.7) | 63.9 (△15.3) |
| (해 외 펀드) | 1.2 (1,100.0) | 6.4 (433.3) | 49.9 (679.7) | 54.4 (9.0) | 50.8 (△6.6) | 44.1 (△13.2) | 42.9 (△15.6) | 42.8 (△15.7) |
| 외국인순매수 ³⁾ (십억원) | △2,380 | △11,207 | △24,623 | △35,919 | 32,269 | 8,265 | 12,798 | 15,174 |
| 기관순매수 ³⁾ (십억원) | 8,314 | 9,916 | 10,135 | 23,882 | △27,066 | △5,985 | △7,536 | △8,583 |
| 개인순매수 ³⁾ (십억원) | △8,277 | △999 | 7,261 | 4,153 | 299 | 451 | △2,093 | △3,383 |
| 신용거래잔액 ²⁾ (십억원) | 2,576 | 1,385 | 4,642 | 1,647 | 4,598 | 5,120 | 5,343 | 5,341 |
| (신용융자잔액) | 531 | 498 | 4,462 | 1,504 | 4,357 | 4,960 | 5,126 | 5,150 |
| (미수거래잔액) | 2,045 | 887 | 180 | 143 | 241 | 160 | 217 | 191 |

주: 1) 중국은 10.1~7까지 국경절 휴장
3) 연중 순매수액

2) 前 영업일 기준
4) ()내는 전년말대비 변동률(%)

3. 주요 금리

(단위 : %)

| | '06말 | '07말 | '08말 | '09말 | '10년 | | | '09말대비 |
|----------------|------|------|-------|-------|-------|-------|-------|----------|
| | | | | | 8말 | 9말 | 10.7 | |
| 미국 LIBOR(3Mo) | 5.36 | 4.70 | 1.43 | 0.25 | 0.30 | 0.29 | 0.29 | 4 bp |
| 미국 T/Bill(3Mo) | 5.01 | 3.24 | 0.10 | 0.06 | 0.13 | 0.16 | 0.12 | 6 bp |
| 미국 T/N(5년) | 4.69 | 3.44 | 1.56 | 2.68 | 1.37 | 1.26 | 1.13 | △ 155 bp |
| 미국 T/N(10년) | 4.70 | 4.02 | 2.23 | 3.83 | 2.50 | 2.49 | 2.38 | △ 145 bp |
| 국고채(10년) | 5.06 | 5.70 | 4.22 | 5.39 | 4.38 | 4.11 | 4.00 | △ 139 bp |
| 국고채(5년) | 5.00 | 5.78 | 3.77 | 4.92 | 4.00 | 3.71 | 3.62 | △ 130 bp |
| 국고채(3년) | 4.92 | 5.74 | 3.41 | 4.41 | 3.55 | 3.32 | 3.31 | △ 110 bp |
| 은행채(3년,AAA) | 5.15 | 6.75 | 5.67 | 5.18 | 4.07 | 3.77 | 3.74 | △ 144 bp |
| 회사채(3년,AA-) | 5.29 | 6.77 | 7.72 | 5.53 | 4.53 | 4.26 | 4.25 | △ 128 bp |
| 회사채(3년,BBB-) | 8.08 | 9.12 | 12.02 | 11.58 | 10.47 | 10.19 | 10.19 | △ 139 bp |
| 통안증권(2년) | 4.99 | 6.10 | 3.50 | 4.44 | 3.56 | 3.31 | 3.28 | △ 116 bp |
| 통안증권(1년) | 4.95 | 5.71 | 3.25 | 3.52 | 3.20 | 2.90 | 2.94 | △ 58 bp |
| KORIBOR(1년) | 5.01 | 6.26 | 5.31 | 4.10 | 3.44 | 3.17 | 3.16 | △ 94 bp |
| 통안증권(91일) | 4.70 | 5.20 | 2.73 | 2.43 | 2.61 | 2.42 | 2.50 | 7 bp |
| CD(91일) | 4.86 | 5.82 | 3.93 | 2.86 | 2.66 | 2.66 | 2.66 | △ 20 bp |
| CP(91일) | 4.97 | 6.42 | 6.39 | 3.07 | 2.82 | 2.79 | 2.79 | △ 28 bp |
| KORIBOR(3개월) | 4.84 | 5.80 | 3.95 | 2.86 | 2.66 | 2.67 | 2.67 | △ 19 bp |
| 콜금리(익일물) | 4.60 | 5.01 | 3.02 | 1.99 | 2.28 | 2.29 | 2.28 | 29 bp |

4. 주요국 환율 변동

(단위 : 원)

| | '05말 | '06말 | '07말 | '08말 | '09말 | '10년 | | |
|----------|------------------|-------------------|--------------------|--------------------|------------------|--------------------|---------------------|---------------------|
| | | | | | | 8말 | 9말 | 10.7 |
| ₩ / US\$ | 1011.6 (2.3) | 929.8 (8.8) | 936.1 (△ 0.7) | 1259.5 (△ 25.7) | 1164.5 (8.2) | 1198.1 (△ 2.8) | 1,140.20 (2.1) | 1,114.50 (4.5) |
| ₩ / EUR | 1198.7 (17.8) | 1220.4 (△ 1.8) | 1368.0 (△ 10.8) | 1775.0 (△ 22.9) | 1668.6 (6.4) | 1514.9 (10.1) | 1,547.48 (7.8) | 1,551.50 (7.5) |
| ₩ / 100¥ | 858.5 (17.6) | 783.4 (9.6) | 828.6 (△ 5.5) | 1396.8 (△ 40.7) | 1264.5 (10.5) | 1423.8 (△ 11.2) | 1,368.13 (△ 7.6) | 1,345.69 (△ 6.0) |

주: ()는 전년말대비 변동율(%)

4. 금융위원회 간부 현황

| 직 명 | 성 명 | 전화번호(사무실) |
|----------|-----|-----------|
| 위원장 | 진동수 | 2156-9500 |
| 부위원장 | 권혁세 | 2156-9501 |
| 금융위 상임위원 | 이종구 | 2156-9503 |
| 금융위 상임위원 | 최종구 | 2156-9504 |
| 증권위 상임위원 | 최규연 | 2156-9505 |
| 사무처장 | 김주현 | 2156-9502 |
| 금융정보분석원장 | 최수현 | 2156-9400 |
| 대변인 | 진웅섭 | 2156-9540 |
| 기획조정관 | 정지원 | 2156-9600 |
| 금융정책국장 | 정은보 | 2156-9700 |
| 금융서비스국장 | 고승범 | 2156-9800 |
| 자본시장국장 | 조인강 | 2156-9801 |
| 국제협력관 | 이헌석 | 2156-9701 |
| 공자위 사무국장 | 최상목 | 2156-9440 |

2010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금융위원회 소관)

2011. 4.

대한민국정부

목 차

1. 금융위원회

1. 햇살론 ·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지원대책 관련

- 1) 햇살론 ·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지원이 고신용, 고소득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2) 햇살론 · 미소금융이 재원유지 또는 운영적자 문제 등으로 인해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3) 햇살론의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15%에 대해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금융기관의 꺾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저축은행과 채권추심회사들이 채무자에게 친인척명의로 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
- 4) 햇살론 ·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지원이 고신용, 고소득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5) 미소금융의 지원실적을 제고하고, 전문성 보강 및 자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
- 6)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지원금의 2%를 사전 예납하고, 상환율 95%를 달성한 경우에만 돌려주는 사전예치제도가 일종의 꺾기에 해당되므로, 2% 예납을 폐지하고, 상환율 95%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 7)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미소금융지점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8) 햇살론 · 미소금융 · 새희망홀씨 대출간 지원 중복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민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재형저축을 부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9) 국내 P2P금융 관련 제도적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2. 신한지주사태 관련

- 1) 신한지주의 라웅찬, 이백순행장의 관련 의혹 및 관계법률(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할 것
- 2) 신한 라웅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신한은행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차명거래의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 신한지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신한금융지주의 후임 인선시 관치금융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 관련

- 1) 대부업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칙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
- 2)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는 시정 노력과 함께 사채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4.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회사 관련

- 1) 대출신청시 신용조회기록만으로 신용등급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신용평가지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2)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3) 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가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4)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이용동의서의 “영업목적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5. 신용카드사 관련

- 1)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인하범위를 확대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2) 카드회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제2의 카드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6.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관련

- 1) 보험회사 인수승인과정에서 최대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없는 것은 보험업법상의 미비사항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 2) 흥국생명의 골프장 매입 및 사옥 재매입 등의 내부거래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흥국생명의 흥국화재 인수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할 것
- 3) 보험업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7.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 1)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

8. 자본시장 관련

- 1) 네오세미테크 등 우회상장 후 조기폐지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 검증 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
- 2)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리보드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3) 자문형 랩(Wrap Account)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 하한액 설정과 위탁매매수수료 폐지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형 랩의 규제 강화문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발전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 4) ELW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5) IB 시장을 외국계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B를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6)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하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능의 제도 개선 및 시스템개혁을 추진할 것
9. 우리금융지주 매각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부실실사로 인한 매각 후 추가부담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
10. 외환 시장 및 국제신용평가사 관련
- 1)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내은행에 적용되는 외환 건전성규제를 외은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국 단기자본의 유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2) 한국 경제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중일 연합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11. 녹색금융, 벤처·중소기업 등 지원 관련
- 1)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인 신생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녹색금융의 정체성 및 지원구도를 명확히 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키는 한편, 지원실적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12.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부산을 해양 및 파생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
13.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일률적인 할증기준(200만원)의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4. 금융위 및 금융공공기관 운영관련

- 1) 금융공공기관의 직원채용시 학력 차별, 예산집행지침 위반, 연봉 및 성과급 과다 지급문제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2) 공무원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15.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관련 각종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16.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17. 저축은행 관련

- 1)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장한도(5,000만원)의 점진적 인하 등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
- 2) 저축은행 PF를 매입하면서 MOU상에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금리 8%이상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경영개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
- 3)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8.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보안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1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과정에서 워크아웃 진행과정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

- 2)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분쟁에 따른 법원 판결의 취지와 기업 자율성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 제도의 유지, 개선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

20.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관련

- 1)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대출상환능력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만큼,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보금자리론 비중을 높이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2) 대출실적이 부진한 주택보금자리론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 21. 최근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 지분인수과정에서의 대규모 손실(4,000억원)과 우리금융지주의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레이션(HAFC)의 지분인수에 따른 부실 우려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은행들의 건전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
- ## 22. 담보대출중심의 후진적 금융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금융감독원

1. 신한지주사태 관련

- 1) 신한금융지주 라웅찬 회장 및 이백순 행장의 비리 의혹 및 관련법률(금융실명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조세법 처벌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2) 신한 라웅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신한은행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차명계좌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2. KB 와인프린스 대출납품 비리 의혹 관련

- 1) KB의 와인프린스대출 및 와인구매와 관련 특혜 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

3. 은행 관련

- 1) 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중소기업대출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주택청약예금·부금의 미인출이자에 대해 국민홍보 등을 통해 이자 인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3)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신용대출금리보다 높고, 복리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안내 방안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4) KIKO 관련 정확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은행과 피해기업간 공정한 손실 분담을 위해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일 것
- 5)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 및 사정노력을 기울일 것
- 6)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면서 과거 파생상품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우리은행이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레이션(HAFC)을 인수함에 따른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회사편입의 승인심사를 철저히 할 것

4. 카드 관련

- 1) 카드사의 경품 제공 등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신전문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의 단속활동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
- 2) 해외 겸용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로열티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강화할 것
- 3)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4) 기프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잔액으로 카드사들이 낙전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환불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

5. 대부업 등 서민금융관련

- 1) 대기업 캐피탈사 고금리 문제의 해소와 자동차 할부금융의 취급수수료 폐지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2)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광역자치단체가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
- 3) 대부 중개업체에 의한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할 것
- 4) 서민금융지원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금감원은 금융위에 현장상황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인 서민금융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할 것

6. 보험 관련

- 1)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제기된 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할증기준 인상 문제 등에 대해 금감원이 점검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앞서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
- 2) 서울보증의 독점적 시장지배로 인해 보험료율이 과다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이 과중하므로,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증보험료 적정성을 검토할 것
- 3) 보험약관 대출 가산금리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가입 관련 리콜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리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
- 5) 홈쇼핑에서의 보험 허위,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할 것

7. 소비자보호 관련

- 1) 금감원의 소비자보호센터의 민원 및 분쟁조정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수용률이 50%에 미달하고, 금감원의 소송지원실적도 저조한 실정인 바,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직원의 73%를 파견직원이 차지하고 있는 바, 파견 직원의 기피제도 위배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3) 흥국화재 등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남발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한 회사에 대한 분쟁조정 전치주의 제도 도입 검토 등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8. 저축은행 관련

- 1) 저축은행 PF 부실 문제에 대한 대주주의 자구노력 이행실적 점검 및 PF대출 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 2)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

9. 예금보험공사와의 자료 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10.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신고 위반 문제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

11. 증권 관련

- 1)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일반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 2)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약관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

12.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

- 1)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 특히 무선중계기(AP)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
- 2)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3) 금융기관 등의 보안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노력을 기울일 것

13. 은행권 및 증권사 PF대출의 부실문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IFRS 도입에 따른 PF 부실채권 매각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4. 상당수 마일리지(금감원 검사 및 감독 대상)가 소멸 시효가 경과하여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5. 성진지오텍 거래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
16.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용회복기금 검사를 실시할 것

3. 예금보험공사

1. 저축은행 부실 방지 관련
 - 1) 저축은행 부실률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2) 금융감독원과의 자료 공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저축은행 부실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2.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부실화 관련
 - 1) 저축은행 추가 부실화에 대비하여 기금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
 - 2) 저축은행계정 적자 해소 및 저축은행 부실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차등화 등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3.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의 MOU 관리 관련
 - 1)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와 동일한 MOU 관리 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MOU 관리지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4. 공적자금 회수 관련

-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해 부실채권 회수율이 미흡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5. 조직 관리 및 인력 채용 관련

- 1) 공적자금 회수 관련 업무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고 임무가 완료된 임시조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6. 한국경제교육협회 관련 자료 제출

- 1) 한국경제교육협에 대한 지원경위, 지원절차, 예산편성 과정, 사후 관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4. 한국자산관리공사

1.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운용 관련

- 1)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미분양아파트 및 선박매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2) 선박펀드를 통해 주로 대형선사 선박을 매입하였는바, 중소선사 선박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2. 부실채권 인수·정리 관련

- 1) 저축은행 PF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2) 저축은행 PF채권은 브릿지론 비율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전에는 회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바,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3. 신용회복기금 사업 관련하여 채무재조정과 전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바,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4. 국유재산 관리 관련

- 1) 무단점유 비율 및 변상금 연체율 증가사유 및 개선대책
- 2) 대부율이 낮은 원인과 대부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개선대책
- 3)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에서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물납자가 저가로 매수하여 이를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 국유재산관리나 서민금융업무 등 자산관리공사 고유업무가 아닌 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

6. 기타 공사운영 관련

- 1) 장애인 및 여성인력에 대한 채용, 승진 등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2) 신입직원 채용시 대학등급화 등 학력 차별사항을 개선할 것
- 3) 명예퇴직금과 연차휴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5. 한국주택금융공사

1. 보금자리론 관련

- 1) 보금자리론의 혜택이 수도권, 중대형 주택,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2) 보금자리론의 대출실적이 미진한 원인은 위탁판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대출모집인제도 도입 등 보금자리론 대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3)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인하 추세에 맞추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2.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 1)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2)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P-CBO 보증을 활성화 할 것
- 3) 신용회복지원자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4)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를 감액(2억 → 1억 5,000만원)한 것은 최근 전세 수요의 증가로 인한 전세값 상승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

3.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관련

- 1)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의 주요변수인 주택가격상승률에 관하여 공사의 예측(3.5%)과 실제 상승률(7.3%)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재산정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
- 2) 주택연금의 가입 실적이 부진하므로, 대대적인 홍보 등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3) 주택연금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바, 2주택 이상자라도 9억원 이하라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주택연금 지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한국정책금융공사

1. 공사 설립 및 운영 관련

- 1) 산은 및 신·기보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체성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2) 공사의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공사 업무 관련

- 1) 온렌딩 방식으로 대출 하는 경우 공사의 신용위험분담을 확대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
- 2) 공사와 신·기보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
- 3)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 수출효과산업 등에 대한 업무영역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것
- 4) 중견기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책을 검토할 것

7. 신용보증기금

1.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프로그램의 실적 제고를 위해 신보는 대기업에 협력업체 추천을 독촉하는 등 협약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2.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보증규모 축소과정에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이 일시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
5.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약 협약을 개선할 것
6. 단기 보증부실 증가에 대해 보증심사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

7. 특수채권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8.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9. 정형화된 소송업무에 비해 과도한 소송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10. 경영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비해 신보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경영컨설팅 사업을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1. 보증연계투자사업은 누적 부실률이 높고 투자 중복문제가 있어 정책 자금지원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업지속 여부를 재검토 할 것

8. 기술신용보증기금

1.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지원 실적이 미진한 바, 2차 협력업체 등에게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확대 조치 과정에서 증가한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
4.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것
5. 구상채권 회수율 및 특수채권 회수율이 낮으므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외부 신용정보기관에 특수채권을 위탁함에 따른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

7. 초단기 보증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증심사 제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바, 보증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
8.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화 협약을 개선할 것
9. 신규 창업기업을 위한 R&D평가 특례보증의 연대보증책임 경감 및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지원 체계를 보완할 것
10.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11. 기술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보증을 지원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증되어 홍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바, 벤처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할 것
12.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등 경영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인력의 활용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13. 기보 임직원이 보증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

9. 한국산업은행

1. 대우조선해양 관련
 - 1)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계열사 헐값매각, 비자금 조성의혹 및 특정 협력사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2)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여 독립회사로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2. 네오세미테크 관련, KDB글로벌스타 선정이 개인 등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분식회계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토록 할 것
3.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신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4. 중소기업지원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공급은 줄어들고 대기업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으나, 워크아웃 업체의 하청업체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9월 30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

10. 중소기업은행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에 반하여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은 축소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2.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3.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의 비중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할 것
4. 민영화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전문이라는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5.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별도의 계정 관리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6. '잡월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7. 창업기업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8. PF대출 관련 심사시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능력을 강화하고, 대출 이후 사후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
9. 기업은행 해외지점의 연체율이 높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11. 한국거래소

1. 대리운전비, 사설학원비, 연수 중 연차보상비 지급 등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
2. 과다연봉 개선
3. 채용·승진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사차별 금지
4.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기부 활성화 필요
5.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및 선물연구소 등 부산설립
 - 1)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 2) 선물연구소 등 부산설립
6. 임직원 가족 및 서울 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 필요
7. 우회상장심사시 추정재무제표반영, 지정감사인제도 도입, 직원역량 강화 등 우회상장제도 정비방안 마련

8. MSCI지수편입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9. ELW시장에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10. 알고리즘거래에 따른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
11. IFRS도입과 관련하여 新회계기준 때문에 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12. 불법사설 거래소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코스콤/금감원과 협의 하여 개선방안 마련
13.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상장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4.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랩어카운트 관리자 등의 극초단타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마련
15. 충청지역 상장기업/투자자를 위한 대전사무소 설치 검토
16. (코스콤) 보드보안 제품의 구매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키보드 보안제품을 교체할 것

금융위원회

1. 금융위원회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햇살론·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대책 관련 | |
| 1-1)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의 서민금융지원이 고신용, 고소득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햇살론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에게 대출 지원 중</p> <p>* '11.2월말 기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74.5%, 연소득 2,000만원이하 73.5%</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만 대출 지원 중</p> <p>* '11.2월말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5.4%, 저소득자(차상위계층) 14.6%</p> <p><input type="checkbox"/> '11.2월말 기준 새희망홀씨의 총 대출 실적 중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또는 2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비중이 80% 이상</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햇살론의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새희망홀씨의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대출비중 등을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 지속 반영</p> |
| 1-2) 햇살론·미소금융이 재원유지 또는 운영적자 문제 등으로 인해 중장기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햇살론 출시 초기 과도한 대출증가세를 억제하고 대출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하는 등 대출심사 강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소득대비 채무상환액 기준 운영(근로자 50% 미만, 자영업자 60%미만), 현장실사 강화 등</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지점의 공공기관 사무실 무상 사용* 법적근거 마련 추진</p> <p>* 휴면예금관리재단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p> <p><input type="checkbox"/> 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점설치시 거점 점포를 활용한 1인출장소 확대 노력</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회수율 제고 등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경주</p> <p>* (예) 사후컨설팅 강화,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제공방안</p> |
| <p>1-3) 햇살론의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15%에 대해 예금가입을 강요하는 등의 금융기관의 꺾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저축은행과 채권추심회사들이 채무자에게 친인척 명의로 햇살론을 대출받아 상환하도록 유도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실태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햇살론 구속성예금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 업권 내규에 '햇살론 구속성예금 금지규정'을 반영하도록 함</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각 업권 중앙회와 금감원에서 단위조합을 검사할 때 구속성예금 행위 여부를 중점 점검</p> |
| <p>1-4) 햇살론의 정부 재원 부담 및 보증비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방에 대한 지원비중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11.3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햇살론 지원 비중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높음</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경제활동인구 비중- 수도권:지방=51:49 햇살론 지원액 비중- 수도권:지방=46:54</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정부와 지자체간 햇살론 출연금 부담 기준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p> |
| <p>1-5) 미소금융의 지원실적을 제고하고, 전문성 보강 및 자활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08년~'11년 2월말까지 총 61,422명에게 2,236억원 지원</p> <p>* 미소금융지점 1,055억원, 기존복지사업자 1,066억원, 소액보험 115억원</p> <p><input type="checkbox"/> 이동버스를 활용한 전통시장 순회상담 등 「찾아가는 미소금융」을 적극 전개</p> <p>* '10년 40개 전통시장</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찾아가는 미소금융', 지역·직능별 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p> <p><input type="checkbox"/> 지역단체와의 연계강화 등을 통한 컨설팅 강화</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 전문인력 프로그램인 '미소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p> |
| <p>1-6)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에게 지원금의 2%를 사전 예납하고, 상환율 95%를 달성한 경우에만 돌려주는 사전예치제도가 일종의 꺾기에 해당되므로, 2% 예납을</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2011년 복지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시 사전예납제도와 상환율 설정을 폐지기로 결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폐지하고, 상환율 95%를 인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시정노력을 기울일 것 | |
| 1-7) 미소금융의 민간복지사업자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미소금융지점과 같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복지사업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복지사업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11.1월) <input type="checkbox"/> 복지사업자에 대한 운영비 지급은 미소금융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가칭)「미소금융 협의회」구성 등 기존 복지사업자와의 상생적 파트너십 구축 추진 |
| 1-8)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 대출간 지원 중복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민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재형저축을 부활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 지원기관 간 온라인 정보공유시스템 구축('10.8월) <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 지원기관과 지역신용보증재단(햇살론)간 대출정보 공유 중('10.9월~) <input type="checkbox"/> 재형저축은 세제지원 등 재정의 상당한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 <p>* 동 제도는 저축장려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과다 등으로 '95년 폐지되었던 바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부 등 재정당국과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지원정보를 집중하는 서민금융 통합 DB 구축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재형저축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p> |
| 1-9) 국내 P2P금융 관련 제도적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P2P업체는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하여 운영중</p> |
| 2. 신한지주사태 관련 | |
| 2-1) 신한지주의 라웅찬, 이백순행장의 관련 의혹 및 관계법률(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특정경제가중 처벌법 등)의 위반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한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부분검사를 실시('10.8~'10.11)하고, 적발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완료(신한은행 기관 경고, 라웅찬회장 업무전부정지 3월상당)</p> <p>○ 또한 금감원은 신한지주·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10.11~'10.12)하여, 금융지주회사법 등의 위반여부를 검사</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행위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p> |
| 2-2) 신한 라웅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 <처리결과>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신한은행 전체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차명거래의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 <p>□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항에 대해 검사를 실시('10.8~'10.11)</p> <p>○ 범위반 사실에 따라 라전화장에 대해 업무전부정지 3월상당, 신한은행은 기관 경고 및 과태료부과,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재(정작1월~주의 등) 및 과태료부과 등 조치</p>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에도 금융기관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고객확인제도 강화(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10.12.24)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차명계좌 근절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p> |
| <p>2-3) 신한지주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신한금융지주의 후임 인선시 관치금융의 우려가 없도록 할 것</p> | <p><처리결과></p> <p>□ 금융회사의 경영지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가칭)금융회사 경영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p> <p><향후 추진계획></p> <p>□ 법률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추진</p> |
| <p>3.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 관련</p> | |
| <p>3-1) 대부업체의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준칙을 제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 대형대부업체의 관리감독방안 검토 중</p>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 대부업 감독시스템 개편시 임직원 등이 준수할 사항 마련 검토</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3-2) 저축은행, 캐피탈사, 카드사의 고금리 문제를 해소하는 시정 노력과 함께 사채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 인하 방안 검토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년 상반기내 5%p 추가인하 추진 (44%→39%)</p> |
| 4. 신용등급 및 신용정보회사 관련 | |
| 4-1) 대출신청시 신용조회기록만으로 신용등급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범위와 종류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의 신용평가 시스템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용조회기록 활용 개선방안 검토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예정</p> |
| 4-2)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평가의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 개인신용평가시스템 점검 중</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 마련 예정</p> |
| 4-3) 은행연합회내의 신용정보협의회의가 공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은행연합회 종합감사('10.11월)에서 신용정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의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은행연합회의</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4-4) 금융거래시 신용정보이용동의서의 “영업목적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금융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폐해가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 | <p>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예정</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단체에 지도공문 발송*('10.11월)</p> <p>* 고객이 개인신용정보를 제후회사에 제공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지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 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에 대한 감독강화 방안 강구 예정</p> |
| 5. 신용카드사 관련 | |
| 5-1)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인하범위를 확대하고,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체크카드 수수료를 인하계획 마련·발표('11.1.31)</p> <p><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 시행('11.3.31)</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확대된 중소가맹점 기준에 따라 더 많은 가맹점에게 우대 수수료를 적용('11.5)</p> |
| 5-2) 카드회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제2의 카드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 시장 건전경쟁 유도 및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발표('11.2.9, '11.3.30)</p> <p>○ 카드자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 및 복수카드 정보공유 확대, 회원모집실태 점검 및 제재 강화</p> <p><향후 추진계획></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input type="checkbox"/> 카드자산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조정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11.6) <input type="checkbox"/> 복수카드 정보공유 확대 시행('11.5) <input type="checkbox"/> 회원모집실태 점검 및 제재 강화(상시) |
| 6.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관련 | |
| 6-1) 보험회사 인수승인과정에서 최대주주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없는 것은 보험업법상의 미비 사항이므로 이를 시정할 것 |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 대주주 변경승인시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등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가칭)금융회사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시 반영 또는 동 법률제정안에 미반영시 보험업법 개정 추진 |
| 6-2) 흥국생명의 골프장 매입 및 사옥 재매입 등의 내부거래가 보험업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흥국생명의 흥국화재 인수과정에서 금융위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할 것 | <p><처리결과></p> <input type="checkbox"/> '10.12월 흥국생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립관광개발(이호진이 51%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의 골프회원권 분양과정에서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위반 등) 위반 소지가 의심되어 검사중에 있음 <input type="checkbox"/> 흥국생명이 흥국화재 주식 취득시 금융위가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하여 시정조치* <p>* 흥국생명이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인 태광산업 주식을 전량 매각('10.12.27)</p> <p><향후 추진계획></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6-3) 보험업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위반 등) 위반 여부를 조속히 판단하여 제재조치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현재 금융기관이 최근 3년 이내에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에 따라 제재를 가중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4조에 따라 3회 이상 기관경고를 받게 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중제재 조치 |
| 7. 금융회사 사외이사 결격요건 관련 | |
| 7-1)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을 하고 시정토록 할 것 |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조합형태의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등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관련 시행령 개정 * 금융지주회사법('10.12.2 시행), 은행법('10.11.18 시행), 보험업법('11.1.24 시행)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외이사 등 임원자격요건 준수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점검할 예정 |
| 8. 자본시장 관련 | |
| 8-1) 네오세미테크 등 우회상장 후 조기폐지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검증 강화 등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할 것 |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우회상장 후 조기폐지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10.12.1) 하여 우회상장 심사시 질적심사를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도입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장법인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변경('10.12.6)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회상장 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 (금년내 외감법 시행령 개정) |
| 8-2)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프리보드시장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보드 활성화 관련 공청회('10.8.29) 및 간담회('10.10.29, '11.3.18) 개최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자문사 제도 등 프리보드 활성화 방안을 마련('11년하반기)하여 시행할 예정 |
| 8-3) 자문형 랩(Wrap Account)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투자 하한액 설정과 위탁매매수수료 폐지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자문형 랩의 규제 강화 문제에 대해서도 자본시장의 자율적인 발전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가입금액은 법규 보다 업계자율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투자 하한액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위탁매매수수료 소급부과를 기존계약에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에 따른 문제 발생으로 인해 위탁매매수수료 제한 문제는 신규계약(계약 갱신시 갱신시점부터 적용)부터 적용함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적으로는 자문형 랩이 시장발전에 기여하고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8-4) ELW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ELW시장 건전화 방안* 마련 및 보도자료 배포('10.10.29)</p> <p>* 교육이수 의무화, 별도 거래신청서 작성, LP평가 강화,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p> <p><input type="checkbox"/> 관련 규정 개정 및 시행('10.11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시장상황 모니터링 및 문제점 지속 제기시 추가 방안 마련</p> |
| 8-5) IB 시장을 외국계가 독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IB를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를 자본시장법 개정의 중점과제에 반영</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 개정 추진</p> |
| 8-6)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하에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능의 제도 개선 및 시스템개혁을 추진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광고·약관심사 전담부서(자율규제심사부) 신설('10.11월)</p> <p>* 광고심사 인력 확충, 사전심사 단계 추가</p> <p><input type="checkbox"/> 약관심사기준 강화('11.1월)</p> <p>* 약관실무 해설서 발간 및 배포</p> <p><input type="checkbox"/> 약관광고심사 자문협의회 설치('11.3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광고·약관</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9. 우리금융지주 매각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그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부실실사로 인한 매각 후 추가부담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p> | <p>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할 예정</p> <p><처리결과></p> <p>□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학계·경제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적자금관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며</p> <p>○ '10.7월 민영화 계획 발표 이후 매각 절차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였음</p> <p><향후 추진계획></p> <p>□ '10.12월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유효경쟁 여건이 최종입찰시까지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매각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매각여건을 재점검 하고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검토가 진행중임</p> <p>○ 향후 매각절차가 재개될 경우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는 한편, 면밀한 실사 진행을 통해 매각 후 추가부담이 발생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0. 외환 시장 및 국제신용평가사 관련 | |
| 10-1)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국내 은행에 적용되는 외환 건전성 규제를 외은지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외국 단기자본의 유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 종전 국내은행에만 적용되었던 통화별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의무를 외은지점에도 적용('10.11월)</p> <p>□ 외국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한 외화건전성부담금 도입(국내 은행과 외은지점에 동일 적용) 추진중(기획재정부 주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11.4.5.)</p> <p><향후 추진계획></p> <p>□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국회통과 후 법률 시행을 위한 관련 시행령 등 개정(기획재정부 주관)</p> |
| 10-2) 한국 경제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에 의해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한중일 연합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 아시아 경제의 특성을 감안한 신용평가 논의를 위해 아시아 주요 평가사들이 자율적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p> <p>* 한중일 신용평가 포럼(중국 다공, 일본 R&I, 한국 한신정평가)</p>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 동 논의가 구체화되는 경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나갈 예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1. 녹색금융 벤처·중소기업 등 지원 관련 | |
| 11-1)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인 신생 기업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창업기업 자금 지원시 우대조치*</p> <p>* 기은 : 창업후 5년내 기업에 대한 금리감면 (0.5%p), 운전자금 사정 생략</p> <p>* 신·기보 : 창업후 5년내 기업에 대한 보증료 감면(0.1%p), 보증비율 우대 (85% →90%), 보증심사시 매출액 심사 생략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p> <p>* ‘11년 창업기업 지원 목표 기은 : 3.4조원 대출 신보 : 8.0조원 보증 기보 : 5.8조원 보증</p> |
| 11-2) 녹색금융의 정체성 및 지원구도를 명확히 하여 녹색금융을 활성화 시키는 한편, 지원실적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바, 중소기업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녹색금융 정체성 명확화 등을 위해 녹색인증제도 旣 시행(‘10.4월)</p> <p>○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인증범위 확대방안 등을 검토 중</p> <p><input type="checkbox"/> 정책금융기관은 녹색 기업에 대해 금융 지원 (‘10년중 9.0조원*)</p> <p>* ‘10년 지원실적</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정책금융공사 : 0.7조원 산은 : 0.6조원 기은 : 2.3조원 신보 : 3.6조원 기보 : 1.8조원</p> <p><input type="checkbox"/> 녹색 분야 자금지원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부여</p> <p>-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출금리 우대 조치 * (산은) 중소기업 0.5%p인하, 대기업 0.3%p인하</p> <p>- 녹색 중소기업에 대한 온렌딩 한도 확대(업체별 한도 : 100억원 → 300억원)</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인증범위 확대 등 녹색인증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p> <p><input type="checkbox"/> 녹색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여신제도 개선* 및 상품개발 등 추진</p> <p>* '11년 중 녹색기업 전용 온렌딩 한도 별도 배정 (2000억원 규모)</p> |
| <p>12. 정부의 금융중심지 육성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부산을 해양 및 파생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금융중심지 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제도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경영환경 개선 등 다각적으로 노력중</p> <p>* IMD 금융경쟁력 지수 상승(대한민국, '08년 40위 → '10년 30위), GFCI 국제금융센터 순위 상승(서울, '09.9월 35위 → '11.3월 16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input type="checkbox"/> 또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에 파생상품 라우터 설치 결정 ○ 탄소배출권 거래를 거래소가 관할 할 수 있도록 지원 ○ 파생상품 R&D센터 부산 설립 지원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금년 8월중 금융위가 수립하는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을 통해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p> <p><input type="checkbox"/> 선박금융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통해 부산의 선박금융중심지 조성을 지원할 예정</p> <p style="text-align: right;">* 세제지원방안이 포함된 조특법개정안 처리 지원(이진복 의원 발의) 등</p> |
| <p>13. 자동차보험료의 인상 요인(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다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 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일률적인 할증기준(200만원)의 문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운영하여 근본적인 자동차 보험 개선대책을 마련·발표('10.12.29)</p> <p style="text-align: right;">* 금융위, 복지부, 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개선대책은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대책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되도록 이행상황을 점검 |
| 14. 금융위 및 금융공공기관 운영관련 | |
| 14-1) 금융공공기관의 직원채용시 학력 차별, 예산집행지침 위반, 연봉 및 성과급 과다 지급문제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기보, 캠코 등 금융 공공기관의 학력차별(대학등급제) 폐지('10년 채용시부터)</p> <p><input type="checkbox"/> 산은의 경우 경조사비는 예산에 미편성('09년)</p> <p>○ 특별성과보상금제도는 폐지('10년)되고 '11년부터 예산편성항목에서 제외</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승인 심사를 강화하고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p> |
| 14-2) 공무원 및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퇴직후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이 제한되는 자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재산등록의무자(금융위 4급이상, 금감원 2급이상)임</p> <p><input type="checkbox"/> '08~'10년 기간중 금융회사 재취업 현황</p> <p>○ 금융위원회 총 4명('08년 1명, '09년 3명)</p> <p>○ 금융감독원 총 60명</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able> <tr> <th colspan="2">구 분</th> <th>'08년</th> <th>'09년</th> <th>'10년</th> <th>합계</th> </tr> <tr> <td rowspan="6">업 권 분 류</td> <td>은행</td> <td>4</td> <td>1</td> <td>1</td> <td>6</td> </tr> <tr> <td>저축은행</td> <td>1</td> <td>4</td> <td>7</td> <td>12</td> </tr> <tr> <td>증권</td> <td>3</td> <td>11</td> <td>4</td> <td>18</td> </tr> <tr> <td>보험</td> <td>4</td> <td>4</td> <td>5</td> <td>13</td> </tr> <tr> <td>카드</td> <td>-</td> <td>1</td> <td>1</td> <td>2</td> </tr> <tr> <td>기타</td> <td>2</td> <td>2</td> <td>5</td> <td>9</td> </tr> <tr> <td colspan="2">계</td> <td>14</td> <td>23</td> <td>23</td> <td>60</td> </tr> </table>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과도한 재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심사(금융위)</p> <p><input type="checkbox"/> 경력세탁의 오해 소지가 없도록 연령 기준 보임 해지를 지양하고 업무성과 중심의 인력관리(금감원)</p> <p>○ 또한, 유착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통제장치*」를 강화하겠음</p> <p>* 검사원 제척제도, 사적접촉금지제도, 중점 감찰제도 등</p> | 구 분 | | '08년 | '09년 | '10년 | 합계 | 업 권 분 류 | 은행 | 4 | 1 | 1 | 6 | 저축은행 | 1 | 4 | 7 | 12 | 증권 | 3 | 11 | 4 | 18 | 보험 | 4 | 4 | 5 | 13 | 카드 | - | 1 | 1 | 2 | 기타 | 2 | 2 | 5 | 9 | 계 | | 14 | 23 | 23 | 60 |
| 구 분 | | '08년 | '09년 | '10년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 권 분 류 | 은행 | 4 | 1 | 1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저축은행 | 1 | 4 | 7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권 | 3 | 11 | 4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험 | 4 | 4 | 5 | 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드 | - | 1 | 1 |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 | 2 | 2 | 5 | 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14 | 23 | 23 |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대우조선해양과 남상태 사장관련 각종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는 법상 민간 제조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불가능함</p> <p>○ 현재 산업은행은 대우조선과의 MOU 체결(10.4.13)을 통해 경영진에 대한 경영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관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MOU 사후관리를 수행 중</p>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향후 이사의 해임청구권 등 상법에서 허용된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우조선에 대한 산은의 경영관리 역할을 강화하도록 관리할 예정</p> <p>○ 특히 남상태 사장의 위법사실이 사법당국에서 확인되는 경우, 산은은 남상태 사장에 대해 경영관리 책임은 물론, 배임 등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것임</p> |
| <p>16.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 정보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문서에 주의 문구 삽입</p> <p>※혐의자 등 다른 사람에게 제공·누설 금지, 재판상 증거사용금지 (위반시 특정금융거래 보고법 제13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p> <p><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한 정보 검색이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안교육 실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을 통해 분석관 및 법집행기관 담당자의 보안의식 수준 제고</p> |
| <p>17. 저축은행 관련</p> | |
| <p>17-1) 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장한도(5,000</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한 단계적 구조조정 방안*을 지속 추진</p> <p>* 대주주 자구노력 등을 통한 자체 정상화 유도 →</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만원)의 점진적 인하 등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조속히 마련할 것</p> | <p>자체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신속·투명한 구조조정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경영부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국회(정무위) 협의 등을 통해 저축은행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既 발표('11.3.17)</p> <p>*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및 건전경영 유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부실 책임 규명 및 검사 역량 강화 등</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 감독강화 및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 법령 개정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예금보장한도 인하는 민감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p> |
| <p>17-2) 저축은행 PF를 매입하면서 MOU상에 구조조정 계획이 없고 금리 8%이상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을 경영 개선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은 대주주 책임원칙 등에 따라 저축은행과 MOU 체결시 대주주 증자,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한 자본확충, 경비 절감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등 자구 노력을 유도</p> <p>○ 아울러 원칙적으로 BIS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8%)이상인 경우에만 후순위채를 발행토록 지도</p> |
| <p>17-3)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조사에 예금보험공사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금감원과의 저축은행 공동검사 확대</p> <p>* '09년 12개 → '10년 20개 → '11년 24개(합의)</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마련할 것 | <input type="checkbox"/> 예보 업무에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명시하는 예보법 개정안 국회제출(‘10.11월) *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에 있어 예보의 역할 및 책임 강화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연중 공동검사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예보법 개정을 국회와 적극협의 |
| 18.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보안연구원을 공공기관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구축시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을 마련·시행(‘10.1월) * 안전대책은 전자금융거래 부문, 기술적 침해대응 부문, 취약점 모니터링 부문으로 구분하여 마련 <input type="checkbox"/> 금융보안연구원을 법상기관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보안관련 공공기관의 필요성, 금융보안연구원의 대상적합성, 보안관련 기존 기관(금융ISAC, KISA)과의 업무조정 등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 <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검사시 스마트폰 전자금융서비스 안전대책 이행 여부 점검 실시 <input type="checkbox"/>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후 금융보안관련 법정기구 별도 설립여부를 검토하겠음 |
| 19.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 |
| 19-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과정에서 | <처리결과>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워크아웃 진행과정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검토할 것</p> | <p><input type="checkbox"/>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측 의견 수렴을 위해 채권은행 자율협약 개정('10.12월)</p> <p>○ 신용위험평가지 기업측 의견 반영* 의무화</p> <p>* 기업의 소명, 자구계획 등을 제출받아 평가에 반영</p> <p>○ 워크아웃 과정에서 기업측 애로를 청취·해소하기 위한 기구* 설치</p> <p>* 구조조정기업 고충처리위원회(5인)를 '11.1월 설치</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재입법시, 기업측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할 예정</p> <p>○ 워크아웃 개시 단계에서 주채권은행이 기업측과 협의를 거쳐 워크아웃 착수</p> <p>○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기업측에 주채권은행을 통한 조정신청권 부여</p> |
| <p>19-2) 최근 외환은행을 비롯한 채권단과 현대그룹의 분쟁에 따른 법원 판결의 취지와 기업 자율성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여 동 제도의 유지, 개선 문제를 면밀 하게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법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채권은행 자율협약(재무구조평가준칙) 개정('11.3월)</p> <p>* 채권단의 공동조치는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위법</p> <p>○ 약정체결 거부계열에 대한 공동조치 규정 삭제</p> |
| <p>20.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관련</p> | |
| <p>20-1)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가계부채가 늘어나 대출상환</p> | <p><처리결과></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능력에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만큼, 상환방식을 바꾸거나 보증자리론 비중을 높이는 등의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p> | <p><input type="checkbox"/>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비중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분기별로 은행별 이행계획 징구 및 실적 점검</p> <p><input type="checkbox"/>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유도를 위해 비거치식 대출에 대해 DTI 가산비율(+5%p) 인정</p> <p><input type="checkbox"/> 서민층 지원 강화를 위해 금리우대 보증자리론의 소득기준 완화*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출한도** 확대('11.1월)</p> <p>* 연소득(상여금/수당 포함) 20백만원 이하→25백만원 이하</p> <p>* 대출한도 1억원→1.5억원</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확대 등 대출구조 개선 방안을 포함한 가계대출 종합대책 마련 중</p> |
| <p>20-2) 대출실적이 부진한 주택보증 자리론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금융공사의 직접 판매가 가능하도록 대출모집인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증자리론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해 대출신청·상담이 가능한 u-보증자리론 취급 금융회사 확대 추진 중('11.6월 예정, 2개→11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대출모집인제도 도입은 보험 설계사 수당 지급사례를 볼 때 모집인 수당 지출 등을 통한 비용상승 과다문제, 모집인을 통한 판매 확대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있어 중장기적</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으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 | | | | | | | | | | | | | | | | | | | | |
| 21. 최근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 크레디트은행 지분인수과정에서의 대규모 손실(4,000억원)과 우리 금융지주의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코퍼레이션(HAFC)의 지분인수에 따른 부실 우려 문제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은행들의 건전한 해외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 | <p><처리결과></p> <p>□ 은행 해외점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업 감독관련규정을 개정('10하반기) 하고, 금감원 차원에서는 은행내부통제 강화 유도 등을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해외점포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추진중</p>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에도 해외점포의 건전경영·리스크 관리 실태 등을 중점 감독함으로써 은행의 해외진출이 건전하고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유도할 계획</p> | | | | | | | | | | | | | | | | | | | | |
| 22. 담보대출중심의 후진적 금융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담보대출 중심의 대출행태를 개선하고, 담보가 부족한 창업기업 등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추진</p> <p>○ 창업기업을 위한 맞춤형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신보)</p> <table><tr><th>구 분</th><th>Start-up I 보증</th><th>Start-up II 보증</th><th>Start-up III 보증</th></tr><tr><td>지원대상</td><td>업력 6개월 이내</td><td>업력 1년 이내</td><td>업력 1년~3년</td></tr><tr><td>보증한도</td><td>3억원</td><td>3억원</td><td>5억원</td></tr><tr><td>보증료</td><td>12%최대 0.6%p 차감</td><td>12%최대 0.6%p 차감</td><td>12%최대 0.4%p 차감</td></tr><tr><td>보증비율</td><td>100%</td><td>90%</td><td>90%</td></tr></table> <p>○ 예비창업자 교육, 창업상담·컨설팅 등 멘토링 서비스 제공 중(신보)</p> <p><향후 추진계획></p> <p>□ 창업지원 종합지원 프로그램 등 창업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 지속</p> | 구 분 | Start-up I 보증 | Start-up II 보증 | Start-up III 보증 | 지원대상 | 업력 6개월 이내 | 업력 1년 이내 | 업력 1년~3년 | 보증한도 | 3억원 | 3억원 | 5억원 | 보증료 | 12%최대 0.6%p 차감 | 12%최대 0.6%p 차감 | 12%최대 0.4%p 차감 | 보증비율 | 100% | 90% | 90% |
| 구 분 | Start-up I 보증 | Start-up II 보증 | Start-up III 보증 | | | | | | | | | | | | | | | | | | |
| 지원대상 | 업력 6개월 이내 | 업력 1년 이내 | 업력 1년~3년 | | | | | | | | | | | | | | | | | | |
| 보증한도 | 3억원 | 3억원 | 5억원 | | | | | | | | | | | | | | | | | | |
| 보증료 | 12%최대 0.6%p 차감 | 12%최대 0.6%p 차감 | 12%최대 0.4%p 차감 | | | | | | | | | | | | | | | | | | |
| 보증비율 | 100% | 90% | 90% | | | | | | | | | | | | | | | | | | |

금융감독원

2. 금융감독원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신한지주사태 관련 | |
| 1-1)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및 이백순 행장의 비리 의혹 및 관련법률 (금융실명법,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할 것 | <p><처리결과></p> <p>□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 종합검사('10.11.22. ~ 12.22), 신한은행 종합검사('10.11.22 ~ 12.24) 및 신한은행 부문검사('11.1.12 ~ 1.21)를 실시하여 라응찬 前회장 및 이백순 前행장의 비리 의혹 및 관련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실시</p> <p>◦ 현재 동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결과를 내부 심의 중</p> |
| 1-2) 신한 라응찬 회장의 50억원 이외에 신한은행 전체 차명 계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금융기관 차명계좌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 | <p><처리결과></p> <p>□ 금감원의 신한은행 '10년 종합검사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법·위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실시</p> <p>◦ 다만, 라응찬 前회장이 박연차에 전달한 50억원과 관련된 차명계좌 운용 건* 이외에 별도로 다른 차명계좌를 신한은행에서 운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p> <p>* '10.11.25. 라응찬 前회장(직무정지 3개월 상당) 등 26명에 대해 제재</p> <p>-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명의인 또는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가</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음</p> <p>□ 한편 금감원은 신한은행의 금융실명법 위반과 관련하여 전 은행에 대해 비거주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음('10.12.16)</p>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감독원은 향후 은행에 대한 검사시 범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은행 임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등 금융실명법 위반에 대한 점검 및 제재를 강화하여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차명계좌의 발생을 근절해 나갈것임</p> <p>□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추진 계획중인 금융실명법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 대한 감독방안을 검토할 계획임</p> |
| <p>2. KB 와인프린스 대출납품 비리 의혹 관련</p> | |
| <p>2-1) KB의 와인프린스대출 및 와인구매와 관련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회에 보고할 것</p> | <p><처리결과></p> <p>□ '10.11.8 ~ 11.16 기간 중 국민은행에 대해 와인프린스 대출 및 와인구매 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11.3.18 검사서 발송)</p> <p>※ 조치내용</p> <p>◦ 재무구조 불량업체에 대한 부당 신용대출 취급과 관련, 前청운동지점장 ○○○ 등 총 14명에 대해 문책 조치(견책 5명, 주의 9명)</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와인구매시 계약규정 미준수와 관련, 前마케팅 그룹부행장 ○○○ 등 총 4명에 대해 문책 조치 (견책 1명, 주의 3명) |
| 3. 은행 관련 | |
| <p>3-1) 은행의 BIS 비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중소기업 대출 기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젤Ⅱ BIS비율 산출기준에는 중소기업 여신에 대한 각종 우대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S비율 산출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 여신은 개인여신과 동일한 소매익스포저로 분류 ◦ 이에 따라 표준방법의 경우 중소기업여신이 개인여신과 동일한 낮은 위험가중치(75%)를 적용받고 내부등급법의 경우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오히려 더 낮은 위험가중치 합수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은행이 BIS비율 하락을 우려해서 중소기업 대출을 일방적으로 기피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 □ 다만, 은행의 BIS비율이 크게 하락하여 여신을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은행이 양호한 자본적정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 특히, 금융위기시 은행이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함으로써 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일이 없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토록 하고 필요시 자본을 확충토록 지도하겠음*</p> <p>*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은행별로 필요자기 자본규모를 직접 제시하여 확충토록 지도한 사례가 있음('08.12월)</p> |
| <p>3-2) 주택청약예금·부금의 미인출이자에 대해 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이자 인출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예·부금 미인출이자에 관하여 기 발생이자에 대해 인출가능함을 은행들이 적극 안내하고, 고객요청시 연결계좌를 통해 인출할 수 있도록 지도('10.10.19)</p> <p><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예·부금 미인출이자를 고객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언론홍보*</p> <p>*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 안내” ('11.2.14 보도자료 배포)</p> |
| <p>3-3) 마이너스통장 금리가 신용대출금리보다 높고, 복리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에 대한 안내 방안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마이너스대출 취급시 금리·이자부담에 관하여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상세히 설명토록 은행앞 유의사항 통보('10.10.19)</p> <p>* 마이너스대출의 경우 추가 가산금리로 인해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고, 마이너스 대출이자도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익월부터 이자를 부과</p> <p><input type="checkbox"/> 마이너스대출 금리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언론홍보</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3-4) KIKO 관련 정확한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은행과 피해기업간 공정한 손실 분담을 위해 금감원이 적극적인 조정 노력을 기울일 것</p> | <p>* “은행거래시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 10가지 안내” (‘11.2.14 보도자료 배포)</p> <p><처리결과></p> <p>□ ‘10.6월말 현재 KIKO거래에서 발생한 기업의 손실금액은 32,247억 원* (실현손실 31,569억원, 평가손실 678억원)</p> <p>* KIKO 거래 관련 수출대금에서 발생하는 환차익을 감안하지 않고, 옵션의 평가금액(MTM) 기준으로 산출</p> <p>□ KIKO 손실 등으로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금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10월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0.12월말까지 총 631개사에 6.6조원 지원 ◦ FTP 도입 이후에도 일부 기업의 보증한도 소진, 부채비율 급등 등으로 금융애로가 지속됨에 따라 ‘10.10월 기술력·영업력 등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p>금감원 및 채권은행의 직접 전화상담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 총 12개사에 124억원 지원</p> |
| <p>3-5) 법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되고 소속 법인이 해당 금융회사들로부터 법률자문</p> | <p><처리결과></p> <p>□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 사외이사 결격요건에 해당된 일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임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금융회사 및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이나 회계감사를 맡는 불법사태가 없도록 철저한 점검 및 시장노력을 기울일 것 | <p>향후 검사를 통해 귀책사유 및 고의·중과 실 여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설명회(1.25일) 등을 통해 사외이사 등 임원자격요건 준수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외이사 등 임원의 자격요건 준수여부를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하여 종합검사시 중점 점검할 예정 |
| 3-6)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관이면서 과거 파생상품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경험이 있는 우리은행이 LA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 코퍼레이션(HAFC)을 인수함에 따른 부실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자회사 편입의 승인심사를 철저히 할 것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진행중임</p> |
| 4. 카드 관련 | |
| 4-1) 카드사의 경품 제공 등 불법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신전문협회의 합동기동 점검반의 단속활동에 | <p><input type="checkbox"/> 불법모집 행위 근절을 위하여 카드 모집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제재를 엄중히 할 예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대해 감독을 강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실태 현장점검 주기를 ‘매반기’에서 ‘매분기’로 단축 ○ 합동기동점검반 점검시 금감원 검사원을 투입*(월1회)하여 점검의 실효성 제고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금융협회의 합동기동점검반 인력을 확충(20 → 30명) |
| <p>4-2) 해외 겸용 신용카드 발급으로 인한 로열티의 과다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활동 등을 강화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해외겸용카드 발급으로 해외카드사에 불필요한 로열티가 지급되고 있어 ◦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 발급을 억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홍보하고 있음 - 카드상품 출시시 국내전용카드도 발급, 운영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 - 카드발급 신청서상 국내전용카드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발급신청란을 구분·표시 - 국내전용카드와 해외겸용카드의 차이점(연회비 차이 등)에 대한 소비자 고지 강화(국내전용 2천원, 해외겸용 5천원) - 국내전용카드의 장점*을 홍보(금감원 홈페이지)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p> <p>* 국내전용카드는 해외겸용카드 보다 연회비가 저렴하고 국내이용시 해외겸용카드와 차이가 없음</p> <p><향후 추진계획></p> <p>□ 앞으로도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를 무분별하게 발급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p> <p>◦ 금감원 주관 금융교육시 이러한 점을 적극 홍보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음</p> |
| <p>4-3)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 기존에는 카드사가 상품출시 초기에는 부가서비스를 확대하여 신규회원을 모집하고, 이후에는 축소*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p> <p>*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부가서비스 변경 3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면 변경 가능</p> <p>□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카드상품 출시후 1년간은 부가서비스 변경을 금지하고,</p> <p>◦ 부가서비스 변경시 회원에 대한 사전고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도록 여전법을 개정·적용('09.8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단, 제휴업체의 일방적인 제휴조건 변경·도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가능</p> <p><향후 추진계획></p> <p>□ 금감원은 현재 약관심사 및 카드사 검사시 부가서비스 변경 관련 법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p> <p>◦ 향후에도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서비스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p> |
| <p>4-4) 기프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잔액으로 카드사들이 낙전수입을 올리고 있으므로, 환불 등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다 쉽게 기프트카드 잔액을 확인하고 환불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p> <p>◦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미사용 잔액을 표기하도록 카드승인 프로그램 및 신용카드 단말기 개선</p> <p>◦ 서비스 신청고객을 대상으로 기프트카드 사용시 미사용잔액 휴대폰(SMS) 통보</p> <p>◦ 인터넷(홈페이지), 콜센터(상담원)을 통한 선불카드 잔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p> <p>* 현재 모든 카드사에서 영업점 외에 전화(ARS), 홈페이지 등에서 잔액확인이 가능하며, 9개 카드사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잔액환불이 가능</p> <p>□ 한편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기프트카드 낙전수익 및 포인트 소멸금액 등을 재원으로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할 예정 |
| 5. 대부업 등 서민금융관련 | |
| 5-1) 대기업 캐피탈사 고금리 문제의 해소와 자동차 할부금융의 취급수수료 폐지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캐피탈사 고금리 문제]</p> <p>□ '10.11월 가계신용대출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리인하를 유도한 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캐피탈사들이 최고금리를 30% 미만으로 인하 <p>[취급수수료 문제]</p> <p>□ 캐피탈사는 점포수 제약으로 자동차딜러를 통한 간접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별도의 모집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피탈사들은 동 모집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p>□ '10.7.5일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이 캐피탈사간 취급수수료 등 취급조건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중고차할부의 경우 고객이 취급수수료 납부를 통해 금리 할인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취급수수료를 수취 <p><향후 추진계획></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자동차할부 “맞춤형 비교공시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해 취급수수료 인하 및 폐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예정</p> <p>* '11.1.12일 중고차할부 비교공시시스템을 개선하여 회사별 평균금리 등을 추가 공시</p> |
| <p>5-2) 대부업체가 대형화되고 있으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한 광역자치단체가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대부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 방안을 마련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 대부업체 관리·감독체계 개편은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처인 금융위에서는 대형업체의 영업 행위 감독 강화와 함께 관리감독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 ◦ 금융감독원은 감독체계가 개편되면 대부업 이용자가 보다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 <p>5-3) 대부 중개업체에 의한 불법 중개수수료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할 것</p> | <p><처리결과></p> <p>□ 우리원은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와의 대출모집 계약 체결 및 중개수수료 편취행위자에 대한 계약 해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 운영을 통해 국정감사 이후 '10.11~'11.2월 기간중 1,752건(19억원)의 피해신고를 접수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하여 1,249건(12억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모든 피해신고 내용은 경찰에 통보하였음</p> <p>□ 또한 SMS 문자메시지를 통한 불법 대출모집행위의 근절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p> <p>* 불법 문자메시지 사전 차단 방안,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자 정보 교환 등</p> <p>◦ 불법 SMS 문자메시지 관련 유의사항을 여신전문 금융회사에 통보('10.10) 하였으며</p> <p>◦ 상호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근절을 위한 유의사항을 상호저축은행에 통보('11.3)하였음</p> <p><향후 추진계획></p> <p>□ 앞으로도 우리원은 대부중개업자의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행위 근절을 위해</p> <p>◦ 대부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련 대부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근거규정이 대부업법에</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5-4) 서민금융지원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금감원은 금융위에 현장상황에 대한 원활한 피드백을 통해 효과적인 서민금융 지원책이 나올 수 있도록 개선할 것</p> | <p>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 * '10.12.10. 정옥임 의원(한나라당) 대표발의</p> <p><처리결과> □ '10년중 금융위는 금감원 및 금융유관기관들로 구성된 서민금융지원점검단을 구성한 바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점검단에 참여하여 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에 건의 <p><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금감원은 현정점검 과정에서 발굴되는 개선사항이 서민지원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p> |
| <p>6. 보험 관련</p> | |
| <p>6-1)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으로 제기된 방만한 경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 지출, 고가의 외제차 수리비 문제, 과도한 수리비·진료비 청구 등 가입자·정비업체·병원 등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할증기준 인상 문제 등에 대해 금감원이 점검하고, 자동차보험료 인상에</p> | <p><처리결과> □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10.12.29)하여 추진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사업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판매비 지출 규모 축소 지도('11.1월) 등 업계의 경영효율화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 비례형 자기부담금제 도입, 무사고자 할인폭 확대 및 교통법규위반 할증제도 개편('11.1월) 등 요율체계 개편을 통한 사고 감소 유도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최소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앞서 업계의 자구노력이 선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p> | <p>되도록 조치</p> <p>□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의심병원·정비업체 등에 대한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 실시</p> <p>◦ 허위·과다 진료비·차량수리비 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 정비업체, 부품상,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조사 실시 중(10.5월~)</p> <p>◦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가 부실한 병·의원에 대해 민·관* 합동으로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실시(10.10월, 11.2~3월)</p> <p>*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금감원, 손보협회 등 ** 전국 1,072개 병·의원 점검</p> <p>◦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통환자 방치,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11.1.24)하고 공조조사 체계 구축(11년 상반기 중 공동조사 실시 예정)</p> <p><향후 추진계획></p> <p>□ 보험금 청구시 사전 견적서 제출, 렌트비용 정상화 등 수리비 및 대물비용 감소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p> |
| <p>6-2) 서울보증의 독점적 시장 지배로 인해 보험료율이 과다하여 중소기업의</p> | <p><처리결과></p> <p>□ 금감원의 지도로 서울보증은 '10.8월부터 3차례에 걸쳐 약 15%의 보험요율 인하를</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부담이 과중하므로, 금감원이 외부전문가를 통해 보증보험료 적정성을 검토할 것</p> | <p>실시하는 등 보험요율의 합리성을 제고</p> <p><향후 추진계획></p> <p>□ '11년도에는 보증요율산출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11. 4/4분기)를 통해 공정보험료 산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p> |
| <p>6-3) 보험약관 대출 가산금리의 합리적 책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각 보험회사의 보험약관대출 금리를 비교공시토록 하였으며('11.1)</p> <p>◦ 이를 통해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가능성 및 금리수준에 대한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을 제고</p>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대출의 금리수준에 대한 비교공시가 잘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 하는 한편,</p> <p>◦ 각 보험회사가 약관대출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는지 여부와 부가되는 가산금리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안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할 예정</p> |
| <p>6-4)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p> | <p><처리결과></p> <p>□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 판매 전에 피보험</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시스템을 구축하고, 중복가입 관련 리콜제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리콜제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개선</p> | <p>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09.7.7)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가입 확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보험협회의 계약정보관리체계*를 개선('09.9.1)·운영 <p>* 입·통원/상해·질병 등 담보별 구분 관리, 계약정보의 정확도 확인시스템 구축 및 계약정보 부실관리시 자체 제재강화 등</p> <p>□ 한편 보험사는 '09.12월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 대해 계약자 의사를 재확인하여 계약해지 또는 취소 등 자발적 리콜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은 '10.7월 보험사가 실시하고 있는 리콜현황에 대하여 실태 점검한 결과 확인된 일부 미흡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지도 <p>* 중복가입 유지의사 확인이 불분명한 사례에 대해 계약자 의사를 재확인토록 지도 등</p>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 금감원 검사 등에서 리콜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p> |
| <p>6-5) 홈쇼핑에서의 보험 허위,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의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 홈쇼핑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금지(제한)할 경우 소비자의 보험계약 체결 편의성 감소, 텔레마케터의 실업 우려, 중소 보험회사의 영업위축 가능성 및 정책의 일관성·신뢰도 저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예상</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홈쇼핑에서의 보험 과장광고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검사 등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p> <p>◦ 개정 보험업법('11.1.24 시행)에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 및 제재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p> |
| 7. 소비자보호 관련 | |
| <p>7-1)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센터의 민원 및 분쟁 조정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분쟁조정 수용률이 50%에 미달하고, 금감원의 소송지원실적도 저조한 실정인 바, 이를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 (피해구제율 관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09년부터 피해구제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주요 원인은 원금 보전을 요구하는 호소성 분쟁 증가,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거나 당사자 간 주장이 크게 상이하는 등 회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기 어려운 분쟁 등이 급증한 것에 기인</p> <p>* 피해구제율 추이 : '08(50.2%)→ '09(44.7%)→ '10(45.4%) (한국소비자원 7%, 법원 10%이내 수준)</p> <p>□ (소송지원 관련) 소송지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금융회사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소송지원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직접 판결확정시까지 지원을 하는 관계로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에 기인</p> <p>* 소제기 감축 추이(건): '08(1,174)→ '09(1,656)→ '10(1,167)</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수용률 제고 및 소제기감축을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수락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는 「수락의제 제도」 도입 추진 ◦ 현장조사, 소제기 실태점검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적극 구제할 예정 |
| <p>7-2) 금감원 소비자상담센터의 직원의 73%를 파견직원이 차지하고 있는 바, 파견직원의 기피제도 위배 실태에 대한 점검 및 개선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상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직원을 파견받아 상담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 파견직원을 전원복귀시키고 금감원소속 전문상담원으로 전원 교체 완료('11.2월) |
| <p>7-3) 흥국화재 등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채무부존재 소송 등을 남발하여 일반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채무부존재 소송 및 민원 소송 등을 제기한 회사에 대한 분쟁조정 전치주의</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흥국화재 소제기 관련) 그간 금감원에서는 법상 제약에도 불구하고 소제기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제기 공표 정례화, 민원발생평가 불이익 부과, 현장 실태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제도도입 검토등 일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p> | <p>소제기 남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왔음</p> <p>* 소제기 감축 추이(건): '08(1,174)→'09(1,656)→'10(1,167)</p> <p><향후 추진계획></p> <p>□ (조정전치주의 도입관련) 법원에 소제기 이전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에 공감</p> <p>◦ 동 사안 관련 조문환 의원의 입법발의('10.11.3),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동 사안이 반영되어 추진 중에 있음</p> |
| <p>8. 저축은행 관련</p> | |
| <p>8-1) 저축은행 PF 부실 문제에 대한 대주주의 자구노력 이행실적 점검 및 PF대출 사업장 등에 대한 사후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p> | <p><처리결과></p> <p>□ 부실 PF대출을 캠프에 매각한 저축은행(61개)과 대주주 증자를 포함한 자본확충, 경영합리화 등을 반영한 경영개선협약(MOU)을 체결('10.7월)하고 그 이행실태를 매분기별 점검하고 있음</p> <p>◦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부진하여 MOU 목표에 미달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행촉구 공문 발송('10.11월) 및 대주주·경영진 면담('11.3월) 등을 통한 추가 유상증자 요구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을 지도하고 있음</p> <p>□ 또한 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11.1월)을 통하여,</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축은행 PF대출 관련 사업장의 사업진척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성을 반영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 <p>8-2)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저축은행이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등을 통해 신용공여한도 등 각종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결과 한도에 근접하거나 위반혐의 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서면·현장검사 등을 통해 위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 및 고발조치할 예정임 |
| <p>9. 예금보험공사와의 자료 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예금보험공사와 체결한 ‘금융정보 공유에 관한 양해각서’ 및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양 기관간 자료공유* 및 공동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 기관 이견시 ‘금융업무협의회’, ‘실무협의회’를 통한 긴밀한 업무협의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음</p> <p>* ‘11.3월 현재 정기보고서의 경우 요청대비 100% 공유하고 있으며, 수시정보도 요청 27건 모두 공유 완료 및 예정</p> |
| <p>10. 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p> | <p>[금감원 퇴직자의 금융기관 재취업 관련]</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재취업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신고 위반 문제에 대한 시정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 (재취업 희망인력 발생 방지) 정년 전(만 54세) 부서장의 일괄보직해임제도*를 폐지하고 성과중심 인력관리를 바탕으로 정년까지 부서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 마련</p> <p>* 그동안 조직슬림화 및 이에 따른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부서장의 경우 정년(58세)보다 4년 일찍 보직을 일괄해임하여 교수요원, 자문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배치</p> <p>◦ 이로 인해 조기 일괄보직해임 부서장이 감소됨에 따라 재취업 희망인력이 대폭 축소되고 있음</p> <p>□ (재취업자와의 업무유착 차단)취업제한 보다는 사후적인 행위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내부통제장치의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p> <p>* 미국(FRB) : 취업 제한은 없으나, 퇴직후 2년 이내에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와 관련하여 접촉하는 행위 등 제한</p> <p>* 영국(FSA) : 취업제한은 없으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재직시 수행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제한</p>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회사 감사공모제 투명성 제고)감사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모제*를 지속적으로 권고하여 감사 공모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p> <p>* 재취업 관련 향후 운영 방안(보도자료, '09.11.17)</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저축은행 감사 취업 자율적 제한)금감원 퇴직후 2년간 저축은행 감사로의 취업을 자율적으로 제한*</p> <p>*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방안(보도자료, '11.03.17)</p> <p>□ (재취업자와의 업무유착 차단)퇴직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내부통제 장치를 엄격히 운영</p> <p>[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변동신고 위반 관련]</p> <p><처리결과></p> <p>□ 2010년 국정감사 직후 미신고 퇴직직원에 대해 조속한 신고를 촉구하여 21명의 신고를 모두 완료('10.11.16)하였음</p> <p>◦ 또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퇴직 임직원 재산신고 관리방안」을 마련('10.10.18)하여 퇴직 1개월이내 재산신고후 감사실로 “접수증” 송부를 의무화</p> <p><향후 추진계획></p> <p>□ 한편 감사실에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유선 또는 공문으로 신고를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p> |
| 11. 증권 관련 | |
| 11-1)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인한 | <처리결과>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일반 투자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p> | <p>□ 현행 불특정 다수인에게 동질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투자정보지 판매 등)가 아니면 투자자문업*으로 분류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에 송부('10.4월)</p> <p>* 유사투자자문업 중 일대일투자상담 개연성이 높은 분야를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시키고 투자자문업에서 제외되는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 규제에서 제외</p> <p>◦ 다만,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문업 등록에 필요한 유예기간(예 : 3년) 부여</p>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위는 동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금년 중 자본시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p> |
| <p>11-2)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적극 활용하여 약관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 금융투자상품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권은 금융위원회가 행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p> <p>◦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여부를 중심으로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p> <p>◦ 최근 3차례 표준약관 개정('10.10월, '11.1월, '11.3월) 심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시정 명령권 행사를 건의할 사항이 없었음</p> |
| <p>12. 전자금융거래 관련 보안</p>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12-1)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보안성, 특히 무선중계기(AP)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업자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 금융감독원은 KT, SKT, LGU+ 3개 통신사업자와 무선중계기 보안성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10.10월 ~ '11.1월)하였으며, 협의결과 이용자의 통신내용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무선중계기에 도청방지 기능을 탑재하기로 실무자간 협의완료('11.1월)</p> <p>◦ 각 통신사는 우선적으로 신규로 보급되는 무선중계기에 동 기능을 적용하고 있으며, 기 보급된 중계기에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동 보안기능을 적용할 예정임</p> <p><향후 추진계획></p> <p>□ 아울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의하여 무선랜 보안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함</p> |
| <p>12-2) 모바일 오피스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보 보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p> | <p><처리결과></p> <p>□ 금융권 모바일 오피스 도입현황을 분석하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검토하여 '금융권 스마트워크 안전대책'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금융회사 의견 수렴중임</p> <p><'금융권 스마트워크 안전대책'(안)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말기 보안) '악성코드 감염 대비', '단말기 정보 관리', '단말기 분실·도난·교체 대비' 등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 (네트워크 보안) '통신데이터 보호', '유선 네트워크 보호', '무선네트워크 보호' 등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 (서비스 보안) '사용자 및 기기인증', '소프트웨어 관리', '사용자행위 기록' 등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 등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12-3) 금융기관 등의 보안관련 인력 및 예산의 확충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IT보안 인력 및 예산 비중을 종전 3%에서 5% 이상으로 상향하여 확충하도록 금융회사에 권고하였음('09.9월)</p> <p><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동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 IT경영실태평가 내 IT경영 부문 평가항목에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충여부를 평가사항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관련 예산 및 인력확보 유도할 예정</p> <p><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관련 주요평가항목> - IT총예산 대비 정보보호예산 적정수준 이상 확보 여부 - IT전체인력 대비 정보보호인력 적정수준 이상 확보 여부 등</p> |
| <p>13. 은행권 및 증권사 PF대출의 부실문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IFRS도입에 따른 PF 부실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p> | <p>[은행권 부동산PF 부실 관련]</p> <p><처리결과> 금감원은 은행권의 부동산PF 대출 사업장을 <input type="checkbox"/> 수시 점검하였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성분류 기준을 강화하여 부동산 PF의 부실을 조기에 인식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 부동산PF 부실채권에 대하여는 단계별로 정리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는바, 향후 적극적으로 정리를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음 <p>* <은행권 부동산PF관련 주요 조치 내용></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은행권 부동산PF 대출 사업장 실태점검('08.11월, '09.3월, '09.12월, '10.6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사 보증에 의한 부동산PF 대출 건전성분류 상향조정 제한('10.6월), 부동산PF의 사업성평가 기준 강화 등 건전성분류 기준을 보수적으로 조정('10.9월) -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10.12월) 및 은행별 정리계획 수립('11.1월) - 부동산 PF대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은행연합회, '11.1월) <p>[증권사 부동산PF 부실 관련]</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증권사 PF대출 부실감축을 위한 PF사업장 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지도하고, 경영진 면담('11.2월, '11.3분기 예정) 등을 통해 부실 감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필요시, '11.3분기중 PF 대출채권 사업장에 대한 서면 또는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p> <p>[PF 부실채권 매각시 회계처리 관련]</p>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IFRS에서는 자산에 대한 통제권 뿐만 아니라 위험과 효익도 매수자에게 이전되어야만 매각 거래로 인정됨*</p> <p>* 부실채권 유동화시 유동화회사(SPC)의 후순위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인수, 신용공여 제공, 부실채권 매각시 사후정산 등을 통해 손실발생 위험을 부담할 경우 매각 부인 |
|------------------|--|
| | <div data-bbox="655 501 1444 719"> <input type="checkbox"/> 그러나 '10.12월 IASB는 K-IFRS 전환일* 이전에 K-GAAP에서 매각처리되었던 PF 대출채권 양도거래를 K-IFRS에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div> <div data-bbox="699 763 1457 898"> <p>* IFRS 전환일 : (은행 등 12월 결산법인) '10.1.1, (증권·보험 등 3월 결산법인) '10.4.1, (저축은행 등 6월 결산법인) '10.7.1</p> </div> <div data-bbox="675 943 1444 1048"> <p>◦ 이에 따라 환매가 되기 전까지는 매각처리된 부실채권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p> </div> <div data-bbox="655 1128 1444 1413"> <input type="checkbox"/> 한편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K-IFRS 전환일 이후에는 KAMCO 등 양수자가 상당부분의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업계 등은 既인식하고 </div> <div data-bbox="675 1451 1444 1556"> <p>◦ IFRS 도입준비 과정에서 부실채권 매각관련 회계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왔음</p> </div> <div data-bbox="655 1599 962 1641"> <p><향후 추진계획></p> </div> <div data-bbox="655 1641 1444 1805"> <div data-bbox="655 1675 1444 1805"> <input type="checkbox"/> 향후 은행 및 증권사 등이 부동산 PF 부실채권 정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IFRS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점검·지도할 계획임 </div> </div> |
| 14. 상당수 마일리지(금감원 | <처리결과>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검사 및 감독 대상)가 소멸 시효가 경과하여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회사로 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p> | <p>□ 최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마일리지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액이 증가 추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처 확대에 따른 카드 이용액 증가로 포인트 적립액 및 사용액 모두 증가 추세이나 ◦ 포인트의 효용성 증대 및 소비자의 인식 확대로 포인트 소멸금액은 감소 <p>□ 그동안 금감원은 발행금액이 가장 많은 신용카드사 포인트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도*하여 왔음</p> <p>* 참고 :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개선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인트 활용방법에 대한 고지 강화, 소멸예정 포인트와 소멸시기 등을 회원에게 사전 고지 하도록 표준약관에 반영 ▪ 포인트 기부방법 및 기부처 다양화, 기부금액 제한 폐지, 기부전용상품의 출시 등 포인트 기부제도 활성화 유도 <p><향후 추진계획></p> <p>□ 향후 금감원은 모든 금융기관이 마일리지(포인트) 사용과 관련하여 카드사에 준하는 소비자보호방안을 마련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포인트 소멸금액 등을 재원으로 매년 2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여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할 예정 |
| 15. 성진지오텍 거래 관련 산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조사가 필요 | <p><향후 추진계획></p> <p>□ '11년중 실시예정인 산업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서 법규위반 및 부당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p> |
| 16.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큼 대부업체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여 신용회복기금 검사를 실시할 것 | <p><처리결과></p> <p>□ 신용회복기금은 금융위원회 주도로 재원을 조성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운영하고 있어 통상의 대부업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p> <p>◦ 또한 2010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신용회복기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회복기금 개선방안"(10.11.16)을 마련·시행중에 있음</p> <p><향후 추진계획></p> <p>◦ 금감원은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이상 징후 발견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검사여부를 결정할 예정임</p> |

예금보험공사

3. 예금보험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저축은행 부실방지 관련 | |
| 1-1) 저축은행 부실률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PF대출 규제강화 등 제도개선 건의 및 공동검사 지속 확대 등 선제적 감시기능 수행 중</p> <p>○ 또한, 선제적 부실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보험사고 위험의 관리' 기능을 예보법에 추가하는 노력을 계속 중</p> |
| 1-2) 금감원과의 자료공유 및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권한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저축은행 부실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 | <p><처리결과></p> <p>□ 기재부, 금융위 등과 5자간 「금융업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요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공동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선제적 감시기능 수행 중</p> <p>○ 현재 미공유 중인 저축은행 수시정보는 금감원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개범위를 확대할 계획</p> |
| 2.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계정 부실화 관련 | |
| 2-1) 저축은행 추가 부실화에 대비하여 기금운영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p><처리결과></p> <p>□ 저축은행계정 적자 해소 및 추가 구조조정 소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p> <p>○ 타업권들을 설득하여 예보기금내 특별계정을 설치(예보법 개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2-2) 저축은행계정 적자 해소 및 저축은행 부실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감한 구조조정과 예금보호한도의 조정·차등화 등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할 것 | <p>- 향후 예금보호한도 조정 등 기금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p> <p><처리결과></p> <p>□ 회생가능성이 부족한 부실저축은행의 부실확대 방지를 위해 금융위, 금감원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삼화, 부산계열 등 8개사 구조조정 진행 중</p> <p>○ 또한, 예금보호한도 조정·차등화 등 기금 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당국과 협의할 예정</p> |
| 3. MOU 관리지표 적정성 검토 | |
| 3-1) 경영이 정상화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과거와 동일한 MOU 관리지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경영 환경을 고려하여 MOU 관리지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p><처리결과></p> <p>□ '07년부터 MOU 관리목표 상한제 도입, '11년부터 과거 실적치에 근거한 목표 부여 방식 도입 등 경영부담 완화 지속 추진</p> <p>○ MOU 관리지표의 목표수준 적정성 제고 및 MOU 관리제도의 효율화 등을 통해 MOU 관리방식 지속 개선</p> |
| 4. 공적자금 회수율 제고 방안 마련 | |
| 4-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비해 부실채권 회수율이 미흡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p><처리결과></p> <p>□ 공적자금회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p> <p>○ 파산재단 배당 극대화를 위해 보유자산의 Pooling, 합동공매, 재산조사 수단 다양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등의 조치를 지속 추진</p> <p>○ 또한, 출자지분 매각시 경쟁입찰 블록세일 등 최적의 매각방식으로 회수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예정</p> |
| 5. 조직 관리 및 인력 채용 관련 | |
| 5-1) 공적자금 회수 관련 업무 감소 등을 감안하여 인력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임무가 완료된 임시조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p><처리결과></p> <p>□ 공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정원을 조기 감축</p> <p>○ 조직·인력을 고유기능인 예금자보호기능 중심으로 재편</p> <p>- 회수관련 자산관리기능은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p> <p>□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팀 신설을 억제하고,</p> <p>○ 긴급한 현안과제 발생시 업무특성에 맞는 임시조직을 활용 중</p> <p>- 또한, 정기적으로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정비를 실시하는 등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p> |
| 6.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관련 자료 제출 | |
| 6-1) 한국경제교육협회에 대한 지원 경위, 지원절차, 예산편성 과정, 사후관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 <p><처리결과></p> <p>※ 관련 자료를 기제출하였음</p> <p>□ 지원경위 및 절차</p> <p>○ '07.6월부터 경제교육협의회 회원으로 참여하였으며, 동 협의회가 '08.12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경제교육협회로 확대·개편되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경제교육협회 이사(비등기)기관으로 참여 ○ 협회로부터 '09년도 협회비 5,000만원 납부 요청을 받아, 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 □ 예산편성 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비는 예산상 제세공과금으로 편성 □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회의 경제교육 업무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이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계획 |

한국자산관리공사

4. 한국자산관리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1.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운용 관련 | |
| 1-1)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미분양 아파트 및 선박매입의 타당성을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구조조정기금은 부실채권정리기금과 달리 부실 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 자산 뿐 아니라, 비업무용자산,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인수가 가능*</p> <p>* IMF 당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산 매수자가 없어 구조조정이 지연되었던 경험을 고려하여 기능 추가</p> <p>○ 다만, 구조개선기업 자산의 인수는 ‘금융회사 건전성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 가능하도록 제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미분양아파트 매각호조에 따라 건설회사의 유동성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구조조정기금이 미분양아파트 매입에 투자할 계획은 현재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선박매입시에는 해운 및 금융시장 동향 분석 및 관련 정책당국과 협의를 거쳐</p> <p>○ 사업 타당성 및 리스크 분석에 만전을 기할 계획</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2) 선박펀드를 통해 주로 대형선사 선박을 매입하였는바, 중소선사 선박을 포함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선박펀드 운영방안 개선*('09.11월)에 따라 중소선사(흥아해운) 선박 3척 매입완료('10.4월)</p> <p>* 구조조정기금 투입비율(40%→60%) 및 매입대상(운항 중→건조 중 포함) 확대</p> <p>○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하여, 11개 중소선사 선박 24척 신청 접수('10.10월~'11.1월)</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기 신청 접수된 선박(11개 중소선사 보유 24척) 이외에 추가로 수시 접수받아 매입을 추진할 계획</p> |
| <p>2. 부실채권 인수·정리 관련</p> <p>2-1) 저축은행 PF채권을 사후정산방식으로 매입할 경우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가 매입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K-IFRS 등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고 저축은행 니즈를 반영하는 한편,</p> <p>○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매입대금사후정산방식 이외에 확정가 또는 유동화방식 등으로 저축은행 PF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2) 저축은행 PF채권은 브릿지론 비율이 높아 부동산 경기회복전에는 회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이는 바, 회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홈페이지 및 공사 온비드를 통한 공매정보 제공, 매각설명회 및 DM발송 등을 통하여 원매자를 적극 발굴 노력하고, ○ 자율워크아웃약정 체결한 사업장은 대주단협의회를 통하여 자율구조조정 협약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단순 토지공매보다 사업정상화가 될 경우 사업이익으로 채권회수 극대화가 가능한 PF사업장에 대하여 대주단 설득을 통한 사업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2개 사업장 정상화 완료 ○ '11. 1월 'PF사업장 정상화추진단'을 설치하여 공사가 관리중인 PF사업장의 조기 정상화를 적극 추진중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사업장 정상화추진단' 운영을 통하여 정상화가능 사업장을 지속 발굴하고, 현장 홍보활동 강화 등 고가매각 전략을 계속 추진할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3. 신용회복기금 사업 관련하여 채무 재조정과 전환대출의 실적이 저조한 바,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채무재조정)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 실적제고를 위한 대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하여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를 파악, 채무감면 등을 안내하여 채무재조정 적극 유도 ○ 신용회복기금의 서민금융 지원사업 종합 홍보방안 시행을 통한 채무재조정 제도 적극 홍보 <input type="checkbox"/> (전환대출) 전환대출 활성화 방안 시행(11.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대출 접수창구를 6개 은행의 5,400개 창구로 확대하고 고객부담금리를 1% 인하(평균 12% → 11%) ○ 일평균 신청자 수가 66명에서 168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1년 상반기 중 신용회복기금 채무재조정 개선방안을 수립·시행 예정 <input type="checkbox"/> '11년 상반기 중 전환대출 신청은행을 현재 6개은행에서 제1금융권 전체 16개 은행으로 확대 예정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4. 국유재산 관리 관련 | | | | | | | | | | | | | | | | | | | | | |
| 4-1) 무단점유 비율 및 변상금 연체율을 증가사유 및 개선대책 | <p><처리결과></p> <p>□ 무단점유 비율 및 변상금 연체율 증가의 주원인은 '06년 이후 지자체 등으로 부터 대량 인수한 재산의 약 50%가 무단 점유 상태인 것에 기인</p> <p>○ 특히, 규모가 영세한 농경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많고, 대상자의 민원 제기 등으로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p> <p>□ 변상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변상금 집중회수기간 및 연체채권 관리직원 전담제를 운영하는 한편,</p> <p>○ 최초 변상금 부과시 분할납부제도 등을 안내하고 장가고액 연체자 등에 대하여는 재산조사(압류) 및 지급명령신청 등 집중 관리로 회수율을 제고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 > (단위 : 백만원)</p> <table><tr><th>구 분</th><th>부과액</th><th>수납액</th><th>회수율</th></tr><tr><td>2007</td><td>33,032</td><td>15,449</td><td>47%</td></tr><tr><td>2008</td><td>39,688</td><td>23,676</td><td>60%</td></tr><tr><td>2009</td><td>38,278</td><td>25,481</td><td>67%</td></tr><tr><td>2010</td><td>71,254</td><td>41,405</td><td>58%</td></tr></table> <p><향후 추진계획></p> <p>□ 연체자에 대하여 소송 등 법적조치를 강화하고,</p> <p>○ 조직재편을 통한 연체채권 상시관리 전담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p> | 구 분 | 부과액 | 수납액 | 회수율 | 2007 | 33,032 | 15,449 | 47% | 2008 | 39,688 | 23,676 | 60% | 2009 | 38,278 | 25,481 | 67% | 2010 | 71,254 | 41,405 | 58% |
| 구 분 | 부과액 | 수납액 | 회수율 | | | | | | | | | | | | | | | | | | |
| 2007 | 33,032 | 15,449 | 47% | | | | | | | | | | | | | | | | | | |
| 2008 | 39,688 | 23,676 | 60% | | | | | | | | | | | | | | | | | | |
| 2009 | 38,278 | 25,481 | 67% | | | | | | | | | | | | | | | | | | |
| 2010 | 71,254 | 41,405 | 58%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대부율이 낮은 원인과 대부계약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대한 개선대책 | <div> <div><처리결과></div> <div> <div> <div>□ '06년 이후 공사로 대량위탁된 지자체 재산의 82%가 읍·면 지역의 활용가치가 극히 낮은 재산으로,</div> <div>○ 전체 보유건수 대비 대부율은 낮은 편이나 관리의 효율화를 통한 대부건수 및 대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div> </div> <div> <div>< 연도별 대부율 현황 ></div> <table> <tr> <th>구분</th> <th>관리필지 (a)</th> <th>대부건수 (b)</th> <th>대부율 (b/a)</th> <th>비고</th> </tr> <tr> <td>2007</td> <td>95,163</td> <td>7,574</td> <td>8%</td> <td>산림청 12,253건인수</td> </tr> <tr> <td>2008</td> <td>162,665</td> <td>14,588</td> <td>9%</td> <td>지자체 64,482건인수</td> </tr> <tr> <td>2009</td> <td>223,992</td> <td>23,033</td> <td>10%</td> <td>토지공사 61,230건인수</td> </tr> <tr> <td>2010</td> <td>222,602</td> <td>31,152</td> <td>14%</td> <td></td> </tr> </table> </div> <div> <div>□ 한편, 국유일반재산의 대부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국유재산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div> <div> <div>* 2회이상 유찰, 주거용, 경작용, 공유지분권자, 기타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재산 등</div> <div>○ 대부재산의 다수가 주거용(26%)·경 작용(53%)으로 실수요자들에 의한 수의계약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구조</div> </div> </div> </div> <div>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 <div>□ 대부 가능재산 적극 발굴, 상시 정보공개 등을 통해</div> <div>○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외에도 경쟁 입찰에 의한 대부계약을 유도하여 수입증대에 기여할 계획</div> </div> </div> </div> | 구분 | 관리필지 (a) | 대부건수 (b) | 대부율 (b/a) | 비고 | 2007 | 95,163 | 7,574 | 8% | 산림청 12,253건인수 | 2008 | 162,665 | 14,588 | 9% | 지자체 64,482건인수 | 2009 | 223,992 | 23,033 | 10% | 토지공사 61,230건인수 | 2010 | 222,602 | 31,152 | 14% | |
| 구분 | 관리필지 (a) | 대부건수 (b) | 대부율 (b/a)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2007 | 95,163 | 7,574 | 8% | 산림청 12,253건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2008 | 162,665 | 14,588 | 9% | 지자체 64,482건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2009 | 223,992 | 23,033 | 10% | 토지공사 61,230건인수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 222,602 | 31,152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4-3)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에서 매각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물납자가 저가로 매수하여 이를 탈세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손실 방지 및 물납자 저가 매수 개선 방안 마련·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진행에 따른 감액률 한도 축소(50%→40%) 및 채평가조정률* 폐지('10.6월 이후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재평가시 기준가액의 90%, 2회 이상 재평가시 기준가액의 80%로 매각예정가격 조정 ○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납자에 대한 물납가 이하 매수 제한('11.4월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2조④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취득한 증권의 경우 국세물납한 본인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
| <p>5. 국유재산관리나 서민금융업무 등 자산관리공사 고유업무가 아닌 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을 검토할 것</p>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관리업무 및 서민금융업무는 공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공사의 고유업무임 □ 다만, 현행 공사법은 IMF금융위기 당시 제정되어 법체계상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기능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공사법 개정시 실제 수행업무를 충실히 반영토록 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 자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6. 기타 공사운영 관련 | | | | | | | | | | | |
| 6-1) 장애인 및 여성인력에 대한 채용, 승진 등의 비율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여성 채용비율*(채용인원의 40% 수준) 및 승진비율** 확대</p> <p>* 채용비율 : '06년(25%), '09년(31%), '10년(41%)</p> <p>** 여성 승진비율 : '09년(9%,4명) → '10년(17%,9명)</p> <p>□ 장애인은 신입직원 채용시 모든 전형 단계에 대한 가점부여(만점의 5~10%)</p> <p>○ 핵심/전문 보직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인사운용(사내변호사 3명 중 1명 중증 장애인)</p> <p>* 장애인 고용률 변동추이</p> <table><tr><td>'07년</td><td>'08년</td><td>'09년</td><td>'10년</td><td>비 고</td></tr><tr><td>1.1%</td><td>1.1%</td><td>1.4%</td><td>1.4%</td><td>부담금신고서 기준</td></tr></table> <p><향후 추진계획></p> <p>□ 여성인력 운영과 관련 신입직원 채용 확대노력을 지속하고 내부 승진시 여성 할당제 운영 등을 통해 점진적 개선 예정</p> <p>□ 신입직원 및 청년인턴 신규채용시 장애인 지원자에게 각 전형별 가점을 부여(10%)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같은 관련 기관으로부터 우수인력을 추천받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p>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비 고 | 1.1% | 1.1% | 1.4% | 1.4% | 부담금신고서 기준 |
| '07년 | '08년 | '09년 | '10년 | 비 고 | | | | | | | |
| 1.1% | 1.1% | 1.4% | 1.4% | 부담금신고서 기준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6-2) 신입직원 채용시 대학등급화 등 학력 차별사항을 개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학력차별(대학등급제)을 완전 철폐하여 '10년 신입직원 공채시 적용</p> |
| <p>6-3) 명예퇴직금과 연차휴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09년도 명예퇴직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일회성으로 시행한 사항으로, 향후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공사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할 계획</p> <p><input type="checkbox"/> 연차휴가보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를 정부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1/183→1/209)을 완료하고,</p> <p>○ '09년부터는 연차휴가 보상금 절감을 위해 전직원 평균 25% 이상의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촉진·시행중</p> <p><input type="checkbox"/>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근로자의 날 행사비 및 창립기념품비 지원제도는 폐지('10.12.20, 규정개정)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중단함</p> |

한국주택금융공사

5. 한국주택금융공사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1. 보금자리론 관련 | |
| 1-1) 보금자리론의 혜택이 수도권, 중대형 주택, 고소득자에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공사의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서민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민의 이자 부담을 대폭 경감한 u-보금자리론 출시('10.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보금자리론 대비 0.4%p 이자를 낮춘 신상품 출시로 서민금융지원 강화 ○ 소득 추정 시 세대주도 세대원 수에 포함하여 최저생계비를 적용('10.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세대주 추정소득 10백만원 인정 ○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소득조건 완화 및 대출한도 확대로 저소득층·서민층 지원 강화('1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득 20백만원→25백만원 이하 - 다자녀가구 대출한도 1억원→1.5억원 <p>□ 비수도권 및 서민 주택 보금자리론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권 서민의 공급확충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은행의 e-보금자리론 취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은행('10.8월), 경남은행('10.10월) - 경남, 광주, 대구, 부산은행을 u-보금자리론 취급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방권 공급 활성화 여건 조성('11.6월) ○ 수도권의 중대형 주택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개선제도 지속 추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기지역(강남·서초·송파구) 소재 주택의 가산금리 0.1% 부과('09.12월 부터 운영) - 담보가액 6억 초과 주택의 가산금리 0.1% 부과('09.12월부터 운영)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서민층 지원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u-보금자리론 취급기관 확대 예정('11.6월) - (현행) 2곳 → ('11.6월 이후) 11곳 <input type="checkbox"/> 지방권 영업점(10곳)을 활용하여 저소득층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급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 |
| <p>1-2) 보금자리론의 대출실적이 미진한 원인은 위탁판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바, 대출모집인 제도 도입 등 보금자리론 대출 확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대출모집인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판매의 열세를 극복하고 보금자리론 공급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u-보금자리론 취급 금융회사(기업은행, 삼성생명)의 대출모집인을 대출상당 및 신청업무에 적극 활용 중임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대출모집인 활용대상 금융회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보금자리론 취급 금융회사를 11개 (국민은행 등 9개 추가)로 확대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 모집인을 통한 공급을 확대할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1-3) 시중은행의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인하 추세에 맞추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 | <div><처리결과></div> <div><div><div><input type="checkbox"/> 금리변동 추세를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금리인하 조치('10.11.1)</div><div><div>○ 기본형(10년 기준) 금리를 5.5%에서 5.2%로 0.3%p 인하</div></div></div><div><div><input type="checkbox"/> 할인금리 적용 신상품 출시('11.2.16)</div><div><div>○ 3년 거치기간 동안 '기본형' 금리보다 0.4%p 낮은 '혼합형' 신상품 출시</div></div></div></div> <div><div><u-보금자리론 금리></div><div>(단위 : %)</div><table><tr><th>구분</th><th>기본형</th><th>혼합형</th></tr><tr><td>10년</td><td>5.20</td><td>4.80</td></tr><tr><td>15년</td><td>5.30</td><td>4.90</td></tr><tr><td>20년</td><td>5.40</td><td>5.00</td></tr><tr><td>30년</td><td>5.45</td><td>5.05</td></tr></table></div>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자금조달 다변화, 비용절감 등 자구 노력 강화를 통해 금리경쟁력 유지에 주력할 계획</div></div> | 구분 | 기본형 | 혼합형 | 10년 | 5.20 | 4.80 | 15년 | 5.30 | 4.90 | 20년 | 5.40 | 5.00 | 30년 | 5.45 | 5.05 |
| 구분 | 기본형 | 혼합형 | | | | | | | | | | | | | | |
| 10년 | 5.20 | 4.80 | | | | | | | | | | | | | | |
| 15년 | 5.30 | 4.90 | | | | | | | | | | | | | | |
| 20년 | 5.40 | 5.00 | | | | | | | | | | | | | | |
| 30년 | 5.45 | 5.05 | | | | | | | | | | | | | | |
| 2. 주택금융신용보증 관련 | | | | | | | | | | | | | | | | |
| 2-1) 구상채권 회수율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구상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div><처리결과></div> <div><div><input type="checkbox"/>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회수율 제고</div><div><div>○ '10.7월 회수가능성 기준으로 구상권을 전면 재분류하여 회수위탁규모를 확대하고, 회수가능성이 작은 사업자 보다 개인구상권에 회수역량 집중</div></div></div>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회수위탁확대 및 관리 효율성 증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권 회수위탁규모 추가확대 ○ 수도권 영업점의 회수위탁채권을 서울채권관리센터로 집중하여 관리하는 등 효율화 지속 추진 |
| <p>2-2) 지방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P-CBO 보증을 활성화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P-CBO 편입기업 수요부족으로 추가 공급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사단 교체 및 상품성 제고 (콜옵션 도입)를 통해 P-CBO보증 취급을 추진하였으나, 시장상황 호전으로 보증수요 별무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시장수요 발생 및 시장안정 기능이 재요구될 경우 재추진</p> |
| <p>2-3) 신용회복지원자 등 금융소외자에 대한 전세자금보증 지원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홍보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회복위원회 및 자산관리공사 등 지원기관과의 공조 홍보활동 전개 ('10.11월) <p>*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LH 및 지방공사가 전세계약 체결후 저리에 재임대하는 자원방식이 활성화되어 대출(보증)수요는 미진</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및 미디어(라디오) 광고를 실시하여 보증실적 제고</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4)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를 감액 (2억 → 1억 5,000만원)한 것은 최근 전세 수요의 증가로 인한 전세값 상승 추세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전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 확대에 대하여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실질적 한도 인상 조치 시행('10.9월) ○ 1억 → 1.5억원 - '09. 9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운영하였으나, 일몰기한 도래(1억원으로 회귀)에 따라 보증한도를 1.5억원으로 인상 * 건당 평균보증금액이 약 30백만원인 점을 감안시 보증한도 1.5억원으로 전세값 상승에 대한 보증한도로 충분</p> <p><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향후 전세시장의 추이를 보아가며 보증한도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본 시정·처리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예정</p> |
| <p>3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관련</p> | |
| <p>3-1)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의 주요 변수인 주택가격상승률에 관 하여 공사의 예측(3.5%)과 실제 상승률(7.3%)이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재산정 하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주요변수 재산정 ○ 월지급금을 결정하는 주요변수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고 있음</p> <p><향후 추진계획> <input type="checkbox"/> 2011년도에도 외부 전문가 집단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조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3-2) 주택연금의 가입 실적이 부진하므로, 대대적인 홍보 등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특성에 최적화된 홍보 마케팅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표적시장에 따른 포지셔닝 전략 실행 ○ 고령층에 가장 파급력 있고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 ○ 주택연금 가입이 용이하도록 가족공감대 형성 및 가족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령층 상시거점장소(실버박람회등 노인행사)에 대한 고객밀착형 현장마케팅 확대 ○ 노인 및 연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연계마케팅 등을 추진하여 고객접점확대 및 홍보 마케팅 채널을 다각화 |
| <p>3-3) 주택연금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는 바, 2주택 이상자라도 9억원 이하라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등 주택연금 지방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주택연금 지방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주택자 가입허용을 위한 공사법 개정안이 '10년 10월 1일자(의안번호 1809467)로 국회 정무위원회에 접수되어 법안 심의 중</p> |

한국정책금융공사

6. 한국정책금융공사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1. 공사 설립 및 운영 관련 1-1) 산은 및 신·기보 등 타 기관과의 업무 중복문제 등으로 인하여 정체성 논란이 있는바,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 | <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산은, 신·기보 등 타 기관과 공사는 각 기관별로 수행하는 역할과 업무 영역이 다름 <input type="radio"/> 공사가 산은의 정책금융기능을 승계하였으므로 산은이 완전 민영화 되기전까지는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공조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 - 산은의 민영화 진전에 따라 공사와 산은과의 업무 중복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임 <input type="radio"/> 신·기보는 신용보증 전문기관임에 반해, 공사는 대출·투자 등 자금공급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업무중복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일 뿐만 아니라 기업측면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향후 신·기보 등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업무공조로 정책금융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임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2) 공사의 취약한 수익구조로 인하여 당분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 공사는 설립 당시 공기업 주식(15.5조원)에 해당하는 산금채 이전에 따라, 동 자산의 보유기간 동안에 구조적인 영업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나,</p> <p>○ 공사는 영업자산 확충, 조달비용 절감, 시장상황을 감안한 적기 구조조정기업 주식 매각, 산은지주 및 공기업 지분의 배당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영업이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p> <p>- 이러한 결과 '10년 결산에는 4,0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668억원을 정부에 배당하였음</p> |
| <p>2. 공사 업무 관련</p> | |
| <p>2-1) 온렌딩 방식으로 대출 하는 경우 공사의 신용위험분담을 확대하여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영할것</p> | <p><처리결과></p> <p>□ 신용위험분담은 온렌딩 제도의 보조적인 기능으로서 적극적 운용에는 한계가 있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p> <p>○ 신용위험분담 대상기업 확대, 신용위험분담부 우선 지원, 신용위험분담 비중이 높은 중개금융기관 우대, 심사기간 예측성 보완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신용위험분담제도를 활성화 하겠음</p>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2) 공사와 신·기보의 중복지원 우려가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 기관간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있어서 공사는 신·기보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정책금융이 특정 기업에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 공사와 신·기보는 각각 업체별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 공사는 온렌딩 대출 지원시 신·기보의 보증서 담보 취득을 금지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 향후 정책금융이 특정기업에 집중되지 않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 신·기보와의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문제는 정책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3) 녹색성장, 신성장동력산업, 지속성장 가능한 사업, 수출효과산업 등에 대한 업무영역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신성장동력산업육성과 그밖에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사업 등을 공사 업무영역으로 명시하고 있음 □ 공사는 위의 사업에 대한 개별 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내규를 제정하여 운용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산업 (정부 고시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 신성장동력산업(산업발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 및 제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6T,첨단 부품소재산업 ○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사업(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효과산업은 지속가능한 성장촉진사업의 하나로서 수출효과가 크고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미래의 먹거리로 성장가능한 분야 (해외건설, 조선, 플랜트)</p> <p>□ 공사는 앞으로 법률·고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영역을 정의하되,</p> <p>○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p> |
| <p>2-4) 중견기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책을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p>□ 중견기업의 법적근거 확정 전까지 공사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해당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원 중이며, 개정된 산업발전법이 시행되는 '11.7.1부터는 산업발전법 시행령상의 기준을 준용할 계획임</p> <p>* 현행기준 : 대기업(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집단 소속기업 제외) 중 종업원수 1,000명 미만 또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 1조원 이하의 기업</p> <p>□ 공사는 정부의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전략”에 부응하고자 온렌딩/대출 /투자 등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 하여 업무계획에 반영, 적극 지원 중임</p>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div><중견기업 지원 현황> (단위:억원)</div> <table><tr><th>구 분</th><th>합 계</th><th>온렌딩</th><th>대출</th><th>투자</th></tr><tr><td>'10년 실적</td><td>3,367</td><td>2,095</td><td>1,272</td><td></td></tr><tr><td>'11년 목표</td><td>11,600</td><td>5,500</td><td>2,100</td><td>4,000</td></tr><tr><td>'11년분기 실적</td><td>3,587</td><td>2,958</td><td>7</td><td>622</td></tr></table> <div><div>○ 중견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은 시설자금 위주로 지원</div><div><div>- 민간금융회사가 지원에 소극적인 장기 설비투자, R&D 자금 및 해외투자자금 등을 지원</div><div>* 대외환경급변(고유가, 일본대지진 등)에 따른 피해기업들에 대한 특별자금공급 추진 중</div><div>- 경쟁력이 있는 중견기업을 지속 발굴하여 『KoFC Frontier Champ』 선정·지원</div></div><div>○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 등을 통한 간접지원</div><div><div>- 회사채투자, 지분투자 및 펀드를 이용한 간접투자</div></div></div> | 구 분 | 합 계 | 온렌딩 | 대출 | 투자 | '10년 실적 | 3,367 | 2,095 | 1,272 | | '11년 목표 | 11,600 | 5,500 | 2,100 | 4,000 | '11년분기 실적 | 3,587 | 2,958 | 7 | 622 |
| 구 분 | 합 계 | 온렌딩 | 대출 | 투자 | | | | | | | | | | | | | | | | | |
| '10년 실적 | 3,367 | 2,095 | 1,272 | | | | | | | | | | | | | | | | | | |
| '11년 목표 | 11,600 | 5,500 | 2,100 | 4,000 | | | | | | | | | | | | | | | | | |
| '11년분기 실적 | 3,587 | 2,958 | 7 | 622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 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 온렌딩(On-lending)대출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중견기업에 대한 온렌딩대출이 가능('10.10월 금융위 승인)함에 따라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 * 녹색·신성장산업 영위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특별온렌딩대출'을 통해 자금우선 배정 등 우대 |

신용보증기금

7. 신용보증기금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 대·중소기업 상생보증프로그램의 실적 제고를 위해 신보는 대기업에 협력업체 추천을 독촉하는 등 협약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기업에 협력업체 추천 활성화 요청 등을 통한 상생협약보증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 대기업에 협력업체 추천을 지속적으로 요청 <p>* 협약대기업의 추천업체수 ('10.7월 ~ '11.03월) : 497개 기업</p> <p>** '11.3월말 현재 협약보증 취급실적 : 출원누계 203억원, 보증공급 2,828억원 (지원율 84.9%)</p> <p><input type="checkbox"/> 대중소상생보증 활성화를 위해 영업점 경영 실적 평가에 우대사항으로 반영함으로써 활성화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보증공급실적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 ◦ 보증잔액관리 평가 제외대상으로 운용 ◦ 장가고액보증 감축대상에서 제외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상생협약보증 모델 발굴 지속 추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와 협의를 거쳐 23차 협력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협약서 개정 추진 ◦ 대기업의 1차 협력기업이 출연하여 23차 협력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추진 <p>□ 기추천업체중 보증미지원업체에 대하여 보증 가능여부 재검토</p> |
| <p>2. 출구전략 시행에 따른 보증규모 축소과정에서 경제회복의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p>□ '1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인 보증정상화를 추진하되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증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총량 축소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보증은 지속적으로 확대 ◦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를 통해 업무계획 변경 ('10. 10월) <p>* 업무계획 변경내용 : 최대 38.5조원 (37.0±1.5) → 최대 40.0조원 (38.5→1.5)</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건설사 유동화회사보증」 도입('10. 11월)</p> <p>* 4,020억원의 회사채 발행 지원('10년)</p> <p><향후 추진계획></p> <p>□ '11년에도 시장상황을 반영한 탄력적 보증운용*으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이 크지 않도록 운용할 계획</p> <p>* 일반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은 5%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운용가능</p> <p>▶ 일반보증 : 37.5조원±5%(최대 39.4조원)</p> <p>▶ 유동화보증 : 4.1조원±5%(최대 4.3조원)</p> |
| <p>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이 일시에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중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p> | <p><처리결과></p> <p>□ 부실예측 기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사후 관리 실시</p> <p>◦ 부실징후알람시스템을 구축('10.10월)하여 알람등급별*(관찰주의경보)로 선택적이고 차등화된 사후관리 실시</p> <p>* '주의'는 중점관리기업, '경보'는 특별관리 기업으로 관리하여 점검 의견 필수기재</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별 점검활동(시스템정기테마)으로 보증기업의 부실징후를 조기 판정하여 부실발생 사전 예방 ◦ 보증부실예측시스템을 구축('10.12월) 하여 거시환경 변화에 따른 부실률을 추정하고 경영정책에 반영 □ 리스크 관리목표 강화를 통한 보증의 건전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잔액에 대한 리스크인수율 (잠재부실률) 관리목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6.0%→('10년) 5.3%→('11년) 5.2% ○ 실적예상치와 관리목표를 비교·분석하여 위험수준별로 관리 □ 「신용보증 사후관리기준」을 개정, 부실가능성에 무게를 둔 실질적 사후관리 체계로 개편('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 이후 확대된 보증규모로 인해 사후관리 대상이 급증함에 따라 사후관리 방법의 절차적 개선을 통해 사후관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업무량 경감 및 실효성을 제고 ◦ 보증금액과 신용도를 고려,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점관리기업과 특별관리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사후관리 실시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중점특별관리기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영업 현장의 사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 □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을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리스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상 업종별 보증잔액, 부실률 추이 등을 상시모니터링하여 리스크 편중 방지 □ 부실정보관리시스템을 정교화하여 선제적 부실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종별, 기업규모별, 기간별, 지역별 부실 동향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통합 관리 |
| <p>4. 경제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p> | <p><시정 및 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1人10社 창업지원캠페인」 연중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중 창업기업 19,900개에 2조 1,070억원을 지원하여 67,000개의 일자리 창출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div>◦ 청년실업자 및 베이비붐 세대(4050세대)의 창업 촉진을 위해 연령별 투트랙 (Two-Track) 방식으로 지원하여 효과를 극대화</div> <div>(단위 : 개, 억원)</div> <table><tr><th>구 분</th><th>업 체 수</th><th>금 액</th><th>일 자리</th></tr><tr><td>창업기업</td><td>19,900</td><td>21,070</td><td>66,572</td></tr><tr><td>청년창업</td><td>10,005</td><td>3,507</td><td>21,132</td></tr><tr><td>4050창업</td><td>9,895</td><td>17,563</td><td>45,440</td></tr></table> <div>□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창업기업의 보증료율 감면폭 확대 ('11.1월)</div> <div>◦ (변경前) 보증료율 0.1%p차감 ⇨ (변경後) 보증료율 0.3%p차감 (0.2%p↓)</div>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 창업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전사적 창업지원캠페인 확대 추진</div> <div>◦ '11년 중 21,000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약 7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div> <div>□ 경제전반의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기업을 중점 지원</div> <div>◦ 신규보증 가운데 창업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영업점의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div> <div>* ('10) 47.7% → ('11) 48.5% → ('12^e) 50.0%</div> | 구 분 | 업 체 수 | 금 액 | 일 자리 | 창업기업 | 19,900 | 21,070 | 66,572 | 청년창업 | 10,005 | 3,507 | 21,132 | 4050창업 | 9,895 | 17,563 | 45,440 |
| 구 분 | 업 체 수 | 금 액 | 일 자리 | | | | | | | | | | | | | | |
| 창업기업 | 19,900 | 21,070 | 66,572 | | | | | | | | | | | | | | |
| 청년창업 | 10,005 | 3,507 | 21,132 | | | | | | | | | | | | | | |
| 4050창업 | 9,895 | 17,563 | 45,440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5.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약 협약을 개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업무특화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지도 실시 ('10.2월 외)</p> <p>◦ 중소기업이 업무특화로 인해 불합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보증 취급을 허용하여 고객 불편 최소화</p> <p>* 예외운용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중복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보증 ▪ 신보에서만 취급 가능한 제도 및 보증 ▪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보증 프로그램 ▪ 기타 합리적인 사유로 고객이 신보에 보증신청하는 경우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양기관 협의를 통한 업무협약 개선 추진</p> <p>◦ 중복보증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나갈 예정</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6. 단기 보증부실 증가에 대해 보증심사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단기부실 사전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지급능력 외에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평가를 심사에 반영 □ 미래가치를 반영한 기업가치평가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용도에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보증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함으로써 부실발생 억제 □ 심사체계의 차별성 확대를 통한 고액보증 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주의 심사에서 부문별 주요 심사지표를 동종산업의 평균, 산업내 위치 등과 연계하여 입체적으로 분석 □ 부실징후알람시스템을 구축(10.10월)하여 기업의 부실 예측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부실가능성을 조기 진단하여 위험단계별 사후관리 실시 □ 보증수행평가시스템을 구축(10.12월)하여 보증심사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보증건전성 및 신용판별능력을 합리적으로 측정하여 건전보증 유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div data-bbox="842 376 1481 600"> <input type="checkbox"/> 신규보증건전율 성과평가지표를 도입 (11년)하여 단기부실에 대한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 이내 단기부실 발생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상향 적용(2.0 ~ 1.5) </div> <div data-bbox="842 631 1145 676"><향후 추진계획></div> <div data-bbox="842 712 1481 1003"> <input type="checkbox"/> 기업가치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보증 심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신용도는 양호하나, 기업가치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 제한 및 기보증 회수 </div> <div data-bbox="842 1034 1481 1326"> <input type="checkbox"/> 신규보증건전율을 영업점의 핵심성 과지표(KPI)에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에 보증취급후 부실발생한 금액을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단기부실에 대한 책임 강화 도모 </div> <div data-bbox="842 1379 1481 1603"> <input type="checkbox"/> 기업신용평가시스템의 리모델링으로 신용평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환경 변화 등 신용리스크 변동요인을 반영하여 시스템의 정합성 제고 </div> <div data-bbox="842 1644 1481 1935"> <input type="checkbox"/> 정기적인 신용평가 감리로 기업신용평가 내용의 적정성 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의 신용평가능력을 제고하여 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사전 차단 </div>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7. 특수채권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div><div><div>□ 공공정보 확대제공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과학화된 회수활동 지원 시스템 강화</div><div><div>◦ 국토해양부 건축행정전산자료를 추가 제공('10.12월)하여 채무자에 대한 회수활동 강화</div><div>◦ 채무자에 대한 성향분석, 환경지표 등에 기초한 강화된 통계지표 제공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회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강화</div></div></div><div><div>□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수위임 관리 강화</div><div><div>◦ 신보의 특수채권 관리규모, 회수인력 등을 고려 직접 관리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 회수위임 확대</div><div>◦ 채권추심회사별 회수목표 달성율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폭 확대를 통한 경쟁유도를 통해 위임실적 제고</div></div></div><div>(단위 : 억원, %)</div><table><tr><th>구 분</th><th>위임채권</th><th>차등수수료율</th><th>회수금액*</th><th>회수율</th></tr><tr><td>'10년</td><td>34,865</td><td>±3</td><td>1,058</td><td>0.12</td></tr><tr><td>'11년</td><td>39,842</td><td>±5</td><td>1,496</td><td>0.15</td></tr><tr><td>증 감</td><td>4,977</td><td>±2</td><td>438</td><td>0.03</td></tr></table><div>* 회수금액은 '11년 3월말 기준</div></div> | 구 분 | 위임채권 | 차등수수료율 | 회수금액* | 회수율 | '10년 | 34,865 | ±3 | 1,058 | 0.12 | '11년 | 39,842 | ±5 | 1,496 | 0.15 | 증 감 | 4,977 | ±2 | 438 | 0.03 |
| 구 분 | 위임채권 | 차등수수료율 | 회수금액* | 회수율 | | | | | | | | | | | | | | | | | |
| '10년 | 34,865 | ±3 | 1,058 | 0.12 | | | | | | | | | | | | | | | | | |
| '11년 | 39,842 | ±5 | 1,496 | 0.15 | | | | | | | | | | | | | | | | | |
| 증 감 | 4,977 | ±2 | 438 | 0.03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채권 회수 전담인력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성과보상 체계를 확대하여 경쟁 강화를 통한 회수성과 최대화 유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회수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공공정보 수집 확대를 통한 정보 제공 ◦ 시효완성 활성화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특수채권 채무자의 관리기간 단축 □ 실무 중심의 직무연수를 강화하여 회수전담 인력의 정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상권 회수기법 발굴 및 공유를 통한 회수 전담 인력의 회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회수활동 지원 |
| <p>8.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영업점에 대한 신규보증목표 확대배정 및 보증잔액비중 상향조정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div>* 비수도권 지역 보증잔액비중 추이</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비수도권</th><th rowspan="2">증 감</th></tr><tr><th>‘09년말</th><th>‘10년말</th></tr><tr><td>보증잔액</td><td>44.0%</td><td>45.3%</td><td>1.3%p ↑</td></tr></table> <div>◦ 신규보증공급의 50%를 지방에 배정(‘11.1월)</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비수도권</th><th rowspan="2">증 감</th></tr><tr><th>‘10년</th><th>‘11년</th></tr><tr><td>신규보증목표</td><td>44.0%</td><td>50.0%</td><td>6.0%p ↑</td></tr></table>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보증규모 지속 확대</div> <div>◦ 비수도권 지역 보증잔액 비중을 ‘13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div> <div>* (‘11) 46.5% → (‘12) 48.0% → (‘13) 50.0%</div> <div>□ 지역특화산업을 영위중인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우대조치 지속추진</div> <div>◦ 비수도권지역에 총 244개 특화산업을 선정하여 보증한도 우대 및 보증료를 차감 적용</div> | 구 분 | 비수도권 | | 증 감 | ‘09년말 | ‘10년말 | 보증잔액 | 44.0% | 45.3% | 1.3%p ↑ | 구 분 | 비수도권 | | 증 감 | ‘10년 | ‘11년 | 신규보증목표 | 44.0% | 50.0% | 6.0%p ↑ |
| 구 분 | 비수도권 | |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09년말 | ‘10년말 | | | | | | | | | | | | | | | | | | | |
| 보증잔액 | 44.0% | 45.3% | 1.3%p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비수도권 | | 증 감 | | | | | | | | | | | | | | | | | | |
| | ‘10년 | ‘11년 | | | | | | | | | | | | | | | | | | | |
| 신규보증목표 | 44.0% | 50.0% | 6.0%p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9. 정형화된 소송업무에 비해 과도한 소송비용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소송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소송수행 실적을 기금 대외평가 항목으로 신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도 기금 경영실적평가에 직접소송수행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구상금청구소송 비용의 절감을 위한 전사적 노력을 경주 □ 지급명령 활성화를 위한 업무 지도 시행('10.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달이 가능하고, 이의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이 원칙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소송 수행 비중의 지속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내변호사(3명), 임금파크제 직원(28명)을 통한 직접소송 확대 및 영업점직원이 지급명령 사건의 일반소송 전환 건 소송수행 실시 □ 낮은 수준의 변호사 보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변호사 보수액은 대법원 규칙 대비 약 1/4 수준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소송 1건당 310만원을 보수지급액의 최고한도액으로 운용중</div> <div>※ 난이도가 높은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비정형 소송사건의 위임비중(약 30%)을 고려하면 현행 수준의 구상금청구소는 계속해서 위임할 필요</div> <div>《연도별 변호사 소송 위임 현황》 (단위 : 건, %)</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08년</th><th colspan="2">2009년</th><th colspan="2">2010년</th></tr><tr><th>건수</th><th>비중</th><th>건수</th><th>비중</th><th>건수</th><th>비중</th></tr><tr><td>구상금청구소 (定型 訴訟)</td><td>8,780</td><td>77.7</td><td>6,008</td><td>68.7</td><td>5,230</td><td>69.5</td></tr><tr><td>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非定型 訴訟)</td><td>2,520</td><td>22.3</td><td>2,733</td><td>31.3</td><td>2,296</td><td>30.5</td></tr><tr><td>계</td><td>11,300</td><td>100.0</td><td>8,741</td><td>100.0</td><td>7,526</td><td>100.0</td></tr></table> | 구 분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구상금청구소 (定型 訴訟) | 8,780 | 77.7 | 6,008 | 68.7 | 5,230 | 69.5 |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非定型 訴訟) | 2,520 | 22.3 | 2,733 | 31.3 | 2,296 | 30.5 | 계 | 11,300 | 100.0 | 8,741 | 100.0 | 7,526 | 100.0 |
| 구 분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상금청구소 (定型 訴訟) | 8,780 | 77.7 | 6,008 | 68.7 | 5,230 | 69.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해행위취소 소송 등 (非定型 訴訟) | 2,520 | 22.3 | 2,733 | 31.3 | 2,296 | 3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1,300 | 100.0 | 8,741 | 100.0 | 7,526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경영컨설팅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비해 신보의 지원이 부족하므로 경영컨설팅 사업을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div><처리결과></div> <div>□ '10년도 경영컨설팅 지원확대 및 창업 기업 중점지원</div> <div>◦ '09년대비 총지원기업 12.8% 증가, 창업기업 30.5% 증가</div> <div>《컨설팅지원 현황》</div> <table><tr><th>구분</th><th>'09년</th><th>'10년</th></tr><tr><td>창업기업</td><td>128건 (78.5%)</td><td>167건 (90.8%)</td></tr><tr><td>기타기업</td><td>35건 (21.5%)</td><td>17건 (9.2%)</td></tr><tr><td>계</td><td>163건 (100%)</td><td>184건 (100%)</td></tr></table> | 구분 | '09년 | '10년 | 창업기업 | 128건 (78.5%) | 167건 (90.8%) | 기타기업 | 35건 (21.5%) | 17건 (9.2%) | 계 | 163건 (100%) | 184건 (100%)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09년 | '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창업기업 | 128건 (78.5%) | 167건 (9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타기업 | 35건 (21.5%) | 17건 (9.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63건 (100%) | 184건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div>□ 경영컨설팅지원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div> <div>◦ PM (Project Manager, 컨설팅진행관리자) 및 직접컨설팅 수행인력 확충</div> <div>《인원 현황》</div> <table><tr><th>구분</th><th>‘10년</th><th>‘11년</th><th>비고</th></tr><tr><td>PM</td><td>6명</td><td>8명*</td><td>* 8명 중 4명은 하반기부터 직접컨설팅 수행</td></tr></table> <div><향후 추진계획></div> <div>□ 신보직원에 의한 직접컨설팅 실시로 지원규모 확대</div> <div>◦ ‘11년 상반기 멘토컨설팅* 실시 후 하반기에 직접컨설팅 시범실시</div> <div>◦ * 전문컨설턴트와의 공동컨설팅을 통해 멘토링학습</div> <div>◦ ‘12년부터 직접컨설팅 확대 실시</div> <div>□ 컨설팅 실시 후 피드백 강화로 컨설팅 품질 향상 도모</div> <div>◦ 설문조사를 통한 피드백과 사후관리 강화로 컨설팅 만족도 제고</div> | 구분 | ‘10년 | ‘11년 | 비고 | PM | 6명 | 8명* | * 8명 중 4명은 하반기부터 직접컨설팅 수행 |
| 구분 | ‘10년 | ‘11년 | 비고 | | | | | | |
| PM | 6명 | 8명* | * 8명 중 4명은 하반기부터 직접컨설팅 수행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1. 보증연계투자사업은 누적 부실률이 높고 투자 중복문제가 있어 정책자금지원 효과가 떨어지므로 사업지속 여부를 재검토 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투자업무처리기준” 개정을 통한 보증연계투자 대상기업 선정기준 강화 (‘10.11월)</p> <p>◦ 보증연계투자대상 및 인수금액 산정시 기업가치평가를 반영</p> <p>◦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인 혁신선도형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정책당국과 협의를 통해 사업지속 여부 재검토 예정</p> <p>◦ ‘11년에는 예산미반영에 따라 투자계획 없음</p> |

기술신용보증기금

8. 기술신용보증기금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1. 대·중소기업 상생보증 지원 실적이 미진한 바, 2차 협력업체 등에게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상생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지경부 등과 미납출연금에 대한 조기출연 유도, 협약 개정 등을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자금수요가 많은 2,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 협력업체를 보증지원대상에 포함하고, — 2,3차 협력업체 지원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 □ 대기업의 직접출연 부담이 없는 무이자 예치방식 상생보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그룹, 기업은행과 무이자예치방식 상생협약 추가체결('10.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G그룹 예치금액(1,000억원)의 2.5배인 2,500억원 규모 펀드 조성하여 협력업체 지원 — 지원실적('10.9 ~ '11.3월) 133억원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상생보증 협약 변경 추진 등 상생보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2.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보증확대 조치 과정에서 증가한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시행('10.7월) 하여 구조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고액보증으로 분류된 경우 보증지원 성과평가를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가 우수한 유망기업은 장기·고액보증이라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지 보증지원 - 성과가 낮은 기업은 분할해지 약정을 체결하여 3~5년 이내 분할 해지 * 해지 미이행시 가산보증료 0.3% 부과 ◦ 한계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부실위험 저축정도에 따라 보증전액 회수 또는 20% 이상 보증 감축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장기고액보증비중(%) : (09) 48.3 → (10) 45.6</p> </div> <p><input type="checkbox"/>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KPI) 반영 등을 통한 감축('11.1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년 상반기 영업점 성과평가기준 반영을 통해 장기·고액보증 감축 지속 추진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장기·고액보증에 대한 penalty 강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보증구조개선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산보증료 부과기준 강화 등을 통해 보증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3.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했던 보증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통한 상시 보증구조 개선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연장시 보증지원 이후의 경영성과와 기술수준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연장조건을 차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낮은 기업에 대하여는 보증해지를 유도하고 만기연장을 제한하여 보증기업의 자발적인 성과 향상을 유도 □ 보증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상시적인 사후관리시스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보증기업을 대상으로 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업안정성 취약기업에 대한 집중 사후관리 실시 ◦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지원기준을 완화한 보증은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현장 확인 위주의 선제적인 사후관리 실시 □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제적 리스크 목표관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보증규모 축소 및 경기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변동량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리스크 목표관리에 반영 ◦ 단위 영업점별 리스크 목표관리 차등화 및 신규보증리스크 허용한도 설정·관리 등 전사적인 리스크관리 실시 ◦ 리스크 변동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강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div data-bbox="777 412 1500 994"> <input type="checkbox"/> High-Risk 상채를 위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적자산배분에 의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한 보증자산의 질적구조 개선도모 ○ High-Risk 보증과 Low-Risk 보증의 적정 운용을 통한 리스크 분산효과 제고 ○ 기금 특화·전문화를 위한 중점지원부문 및 핵심분야별 세부 리스크관리를 통하여 종합적인 리스크 상쇄효과 도모 </div> <div data-bbox="777 1061 1500 1120"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2px;"> * 보증사고율(%) : (08)6.1 → (09)4.3 → (10)4.7 </div> <div data-bbox="777 1218 1500 1912"> <p><향후 추진계획></p> <input type="checkbox"/> 보증지원 성과에 따른 만기연장 차별화 조치 지속 추진 <input type="checkbox"/> 부실예방을 위한 시스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및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input type="checkbox"/> 보증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리스크 목표관리 지속 추진 <input type="checkbox"/> 전략적 포트폴리오와 연계한 영업점별 리스크 목표관리 강화 </div>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4. 창업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창출과 미래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기술창업기업에 집중 지원</p> <p>◦ '10년도 신규보증 지원금액의 44.1%(업체수 기준 56.8%)를 창업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에 지원하는 등 창업분야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p> <p>* 기술창업기업 신규보증 금액 비중(%) : (09) 40.3 → (10) 44.1</p> <p>* 기술창업기업 신규보증 업체수 비중(%) : (09) 54.1 → (10) 56.8</p> <p><input type="checkbox"/> 보증지원과 함께 다양한 기술창업기업 발굴 노력을 병행</p> <p>◦ 새싹기업 찾기 캠페인 전개로 매년 5천개 이상의 초기기업 발굴·지원</p> <p>◦ 맞춤형 창업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5대핵심 창업 육성분야* 선정 및 집중 지원함으로써 창업열기 확산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을 확대</p> <p>* 녹색성장, 지식문화, 이공계챌린저, 4050, 1인창조기업</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2년까지 신규보증의 50% 이상을 기술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보증을 확대해 나갈 계획</p> <p>* 기술창업기업 신규보증 비중(%) : (10)44.1 → (11 계획) 47.5 → (12 계획) 50.0</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5. 구상채권 회수율 및 특수채권 회수율이 낮으므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p>[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절차 표준화를 통해 구상권 회수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회수자원의 저변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수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 및 회수자원에 대한 우선적 회수활동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자등급분류 제도를 활용한 회수활동 수행 — 예상구상실익산정 시스템에 기초한 실익있는 부동산의 우선적 강제집행절차 진행 □ 은닉재산 발굴을 통한 회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정보를 활용한 채무자 은닉재산 파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도중 건축행정정보를 신규로 확보 — 수개의 공공정보를 복합적으로 활용한 재외국민 및 주민번호변경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굴 ◦ 은닉재산에 대한 회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도피 채무자 유형별 대처방안 마련 및 은닉재산 발굴을 통한 회수활동 강화 □ 채무자의 상환능력 등을 감안한 채무상환 지원제도의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감면/분할상환 제도 등 채무상환유인제도 개선 ◦ 채무상환 유인을 위한 상환조건 등 완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특수채권 회수율 제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반의 활동성과 경쟁력 강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회수활동 수행을 위해 부족인력 충원 ◦ 추심반의 활동성 제고를 위한 실적 관리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기본목표 부여, 실적부진자 퇴출제도 도입 및 채무자 배정기준 설정 □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회수활동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하는 특수채권 규모를 감안한 추심위탁 규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차)(09.7월) 3조5천억 → (4차)(11.1월) 4조 ◦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평가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6개중 실적부진 3개 추심회사와 계약 해지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도피 채무자에 대한 적극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재산조회 제도 등의 지속적인 활용 강화 ◦ 공공정보활용 강화로 은닉재산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동포 채무자 재산 추적 등 □ 채권관리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스템 개선, 외부추심위임 확대 등 ◦ 추심담당에 대한 실적중시 경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점, 추심반, 외부추심위탁사 등 □ 임의상환 지원을 위한 채무상환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원금감면 등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6. 외부 신용정보기관에 특수채권을 위탁함에 따른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위탁사 선정을 위한 입찰평가지 불법추심행위 여부를 평가에 반영('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평가 총점의 20%를 불법추심, 민원 항목으로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식자료 수령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 <input type="checkbox"/> 위탁사에 대한 정기적인 면담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1회 간담회 개최하여 실무책임자 대상 불법추심, 민원 관련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심업무가이드라인 등 불법추심관련 자료 안내 등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 실무자에 대한 면담 교육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추심으로 인한 감독기관 제재 내역 모니터링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무자에 대한 면담교육 병행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7. 초단기 보증사고가 다수 발생하여 보증심사 제도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바, 보증심사 제도를 개선할 것 | <p><처리결과></p> <div><div><input type="checkbox"/> 보증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술사업평가등급 산출 모형 개선</div><div><div>◦ 기술평가모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KTRS 평가지표의 계량화·객관화('11.1월)</div><div>—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관적 지표 등은 통합·제거</div></div></div> <table><tr><th>구 분</th><th>개선전</th><th>개선후</th></tr><tr><td>평가지표</td><td>45개 지표</td><td>34개 지표</td></tr><tr><td>객관화지표율</td><td>55.5%</td><td>61.8%</td></tr><tr><td>계량화지표율</td><td>31.1%</td><td>35.3%</td></tr></table> <div><div><input type="checkbox"/> 기업선별 기능 향상을 위해 보증취급시 사전 필터링 시스템 강화</div><div><div>◦ 평가자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지셔닝 시스템” 도입('10.12월)</div><div>— 평가결과의 그룹(평가기업이 속한 그룹)내 상대적 위치비교를 통해 평가자간 평가결과의 편차를 최소화하여 평가의 신뢰성 확보</div></div><div><div>◦ 보증취급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심사항목 사전체크 기능의 보증리스크 사전점검 강화('10.10월)</div><div>— 사전점검 대상에서 생략하였던 5천만원 이하 소액보증, 특례보증 적용 보증도 사전점검대상으로 운영</div><div>— 심층조사, 심사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점검 항목으로 운영</div></div></div> | 구 분 | 개선전 | 개선후 | 평가지표 | 45개 지표 | 34개 지표 | 객관화지표율 | 55.5% | 61.8% | 계량화지표율 | 31.1% | 35.3% |
| 구 분 | 개선전 | 개선후 | | | | | | | | | | | |
| 평가지표 | 45개 지표 | 34개 지표 | | | | | | | | | | | |
| 객관화지표율 | 55.5% | 61.8% | | | | | | | | | | | |
| 계량화지표율 | 31.1% | 35.3%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div data-bbox="794 421 1495 6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보증의 보조 심사지표인 ‘신용도 유의기업’ 검토 강화(‘10.7월) — 사고유의성이 높은 재무지표로 구성된 부실위험 검토 항목 확대 </div> <table border="1" data-bbox="778 672 1495 1299"> <thead> <tr> <th data-bbox="778 672 1114 728">기 존 (3개)</th><th data-bbox="1145 672 1495 728">확 대 (5개)</th></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78 728 1114 1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기업 - 최근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기업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p><신규 추가></p> <p><신규 추가></p> </td><td data-bbox="1145 728 1495 12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최근 2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40%이상 감소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 최근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의 순현금흐름이 (-) </td></tr> </tbody> </table> <div data-bbox="794 1400 1495 1982">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으로 기술평가 및 심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보증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 ◦ 기술평가모형의 주기적·체계적 검증을 통해 평가지표의 객관화 등 신뢰성 확보 노력 ◦ 보증심사의 보조지표에 대하여 주기적인 사고유의성 검증을 통해 기업 선별력 강화 </div> | 기 존 (3개) | 확 대 (5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기업 - 최근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기업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p><신규 추가></p> <p><신규 추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최근 2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40%이상 감소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 최근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의 순현금흐름이 (-) |
| 기 존 (3개) | 확 대 (5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적자 시현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잠식기업 - 최근 3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기업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50%이상 감소기업 <p><신규 추가></p> <p><신규 추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최근 2년 연속 당기 순손실 시현 - 전기대비 당기매출액 40%이상 감소기업 - 최근 2개년 연속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 - 최근3개년 연속 영업활동 후의 순현금흐름이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8. 신보와 기보의 업무영역 특화가 기업 성장을 제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기보 업무특화 협약을 개선할 것</p> | <p><처리결과></p> <p>□ 보증기관의 업무영역특화는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05년말부터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6월 「신용보증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양 기관이 보증업무특화 및 중복보증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복보증 제한을 추진 ◦ 중복보증 제한조치를 약 5년간 운영해온 결과, 보증기관별 업무영역 구분은 시장정착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보증 완화는 보증기관 특화·전문화 정책의 일관성 훼손과 시장혼란 초래가 우려됨에 따라 업무영역 구분은 지속 추진 필요 <p>* 중복보증잔액(%) : (05) 52.9 → (09) 10.5 → (10) 9.5 * 중복보증신규(%) : (05) 34.6 → (09) 1.9 → (10) 0.8</p> <p>□ 보증업무 특화에 따른 고객의 불편은 기보·신보간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9년 이후 기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전환 또는 한 개 보증기관만 취급 가능한 보증상품* 등에 대해서는 중복보증을 허용 <p>* (기보) 정책자금 One- Stop보증, R&D평가 특례보증, 특허기술가치평가연계보증</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 한정된 보증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복보증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p> <p>◦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기업불편 해소를 위해 양기관이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장치 마련 예정</p> |
| <p>9. 신규 창업기업을 위한 R&D평가 특례보증의 연대보증책임 경감 및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중 재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지원 체계를 보완할 것</p> | <p><처리결과></p> <p>□ R&D평가 특례보증 취급시 연대보증 책임경감 제도 시행('10.10월)</p> <p>◦ 벤처기업으로 요건 충족기업에 대해서는 입보대상자를 대표자 및 실제경영자에 한정하고 부분연대보증으로 운용</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단계 : 개발단계 ▶ R&D평가표에 의한 등급 : A등급 이상 ▶ 보증금액 :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5억원이하 <p>— 부분연대보증 책임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2분의 1을 한도로 연대보증 책임 부담 </div> <p>□ 제도전기업주에 대한 재기지원보증 도입('10.10월)</p> <p>◦ 기금에 채무변제 의무가 있는 실패한 기업주에 대해서 재기지원보증 지원</p> <p>— 구상채권 변제를 위한 구상채권회수보증과 사업재기 자금용도의 신규보증 지원</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에 대위변제 발생책임이 있는 기업주인 점을 감안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 — 회계, 법률, 기술 관련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재기심의위원회에서 도덕성, 재기 가능성 및 성장잠재력 등을 심의하여 지원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재기지원보증의 지원실적 확인 및 수시 점검하여 필요시 제도 개선</p> |
| <p>10. 수도권 지역의 보증지원이 편중되고 있으므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의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증지원의 수도권 편중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설정하고 우대지원 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년까지 지방소재 중소기업 신규보증 비중을 51% 이상으로 확대 <p>* 지방중소기업 신규보증 비중(%) :</p> <p>(09) 46 → (10) 47.8 → (11계획) 49 → (12계획) 51</p> <p><input type="checkbox"/>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지원 제도 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전략산업 지원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2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업종 추가 등 ◦ 지방기술유망기업 지원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대상 확대(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 → 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료감면 확대 (0.2% ~ 0.3% → 0.3% 감면) 등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전 중소기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우대보증 대상으로 지정하여 지원 ◦ 지방소재 영업점의 목표 상한선 상향 조정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도 개선에 Feed-back하는 등 지방소재 중소기업 보증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p> |
| <p>11. 기술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보의 보증을 지원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증되어 홍보 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는 바, 벤처기업 인증 제도를 개선할 것</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기술성 과락제”를 도입('10.4월)하여 벤처확인 평가시 기술성 심사요건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전)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일 경우 벤처확인 가능 <p>→ (변경후) 기술평가등급 요건을 충족 하더라도 기술성부문 배점의 60%이상 득점하지 못할 경우 벤처확인 배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중기청과 공동으로 벤처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단계별 벤처인증제도 정비 및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중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12.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등 경영 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 인력의 활용 등의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 |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창업멘토링 프로그램 제도 개선 및 전문 컨설팅 활성화 방안 마련중 ('11년 상반기 시행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멘토링 특례보증 지원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 지원 확대 ◦ 외부 전문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해 외부 컨설턴트 Pool 구성 예정 |
| 13. 기보 임직원이 보증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증기업 주식취득 금지 지침 제정('10.4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업 주식취득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업의 상장·비상장(코스닥시장 및 프리보드 포함) 여부에 불구하고 직원의 보증기업 주식취득 행위 금지 ◦ 보증기업 주식취득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 지원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등 불가피하게 보증기업 주식을 취득(보유)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신고 ◦ 위반직원에 대한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으로 엄중 문책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 data-bbox="794 369 1093 414"><향후 추진계획></p> <div data-bbox="782 454 1492 627"> <input data-bbox="782 454 813 492" type="checkbox"/> 지속적인 주식취득 실태 점검 <ul data-bbox="798 526 1492 627"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798 526 1492 627">◦ 감사실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직원의 주식취득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 실시 </div> |

한국 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대우조선해양 관련 | |
| 1-1)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로비 의혹, 계열사 헐값매각, 비자금 조성의혹 및 특정 협력사 특혜의혹 등에 대하여 대주주로서 산업은행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관리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대우조선해양은 상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등 관계법규상 당행의 자회사에 해당되지 않아 감사 및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움</p> <p>○ 당행은 대우조선해양과 매년 체결하는 MOU를 통해 동사 경영진에 대하여 간접적인 경영관리를 실시</p> <p><향후 추진계획></p> <p>□ 검찰의 수사결과 불법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영진 임면 등 상법상 허용된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p> |
| 1-2) 대우조선해양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여 독립회사로 성장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 | <p><처리결과></p> <p>□ 대우조선해양의 장기 발전기반 구축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한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도 책임있는 주체에게 산은 및 KAMCO 보유 주식 전량 매각코자 함</p> <p>○ 매각대금 극대화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매각방식을 강구할 계획</p> <p><향후 추진계획></p> <p>□ 매각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할 예정임</p> <p>○ 향후 국내 M&A시장 및 제반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공고 시기 결정</p> |
| <p>2. 네오세미테크 관련, KDB글로벌스타 선정이 개인 등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분식회계 등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토록 할 것</p> | <p><처리결과></p> <p>□ KDB Global Star 선정의 대외적 상징성과 본연의 운용목적 실현을 위하여 선정 심사요건 강화 및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업무프로세스 개선</p> <p>○ 「KDB Global Star 운용기준」 개정 ('10.1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력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산은 기술평가원 팀장을 선정위원으로 추가 - 해지사유에 우회상장, 인수합병(M&A) 진행 등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회계분식 등 회계투명도가 낮은 경우 추가 <p>○ 「종합재무분석시스템*」을 통한 기업의 회계투명성 및 이상징후에 대한 시스템</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적인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lobal Star 대상기업 선정 전·후 회계분식 및 부실화가능성에 대한 정기 점검 시행 <p>* 종합재무분석시스템 : 기업별 3개년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재무이상치 추출을 통해 분식 및 부실화가능성을 추정하는 시스템</p>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종합재무분석시스템」 Up-grade 및 현장 점검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대상 계정과목 확대(무형자산 및 파생상품 항목 신설 등), 산업별 평가기준수치 Update 등 시스템의 신뢰도 제고 ○ 필요시 선정 전·후 경영진 면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무제표 및 시스템 분석의 현실적 한계 보완 |
| 3.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하여, 수신 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점포 신설 등 수신영업채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수도권 등 8개 점포 신설 ○ 스마트폰뱅킹 서비스 개시 및 확대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div data-bbox="783 421 1252 470">□ 차별화된 금융상품 개발</div> <div data-bbox="802 544 1508 784"> <div data-bbox="802 544 1508 649">○ 컨설팅서비스 연계 CEO Accounts, 인터넷 전용예금 등 특화상품 개발</div> <div data-bbox="802 678 1508 784">○ 급여계좌 유치를 위한 KDB Dream 자산관리통장 출시</div> </div> <div data-bbox="783 857 1077 907"><향후 추진계획></div> <div data-bbox="783 981 1422 1030">□ 점포신설 등 영업망 확충 및 보완</div> <div data-bbox="802 1097 1508 1220"> <div data-bbox="802 1097 1160 1146">○ 단계적 점포 신설</div> <div data-bbox="802 1176 1508 1220">○ 다이렉트뱅킹 실시 및 타행 업무제휴 강화</div> </div> <div data-bbox="783 1294 1476 1344">□ 거액고객 중심 개인예수금 저변 확대</div> <div data-bbox="802 1411 1508 1668"> <div data-bbox="802 1411 1508 1516">○ 맞춤형 상품개발 및 자산관리서비스 차별화로 거액고객 확대</div> <div data-bbox="802 1545 1508 1668">○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광고 및 제휴 마케팅 강화</div> </div> <div data-bbox="783 1742 1492 1792">□ Relationship 강화로 법인예수금 확대</div> <div data-bbox="802 1859 1508 1977"> <div data-bbox="802 1859 1508 1908">○ 여신거래처에 대한 공동마케팅 실시</div> <div data-bbox="802 1937 1508 1977">○ 경제·금융세미나 개최 등 유대 강화</div> </div>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4. 중소기업지원 관련,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자금 공급은 줄어들고 대기업에 대한 비중은 늘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특별지원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특별시설자금 설정 및 금리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전략부문에 △0.5%P 금리우대 ○ 중소기업 지원 각종 우대제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5%P 까지 금리우대 - 후취담보 인정비율 우대(50%→70%) - 체질개선 등을 위한 무료 사전컨설팅 - KoFC 전대자금 취급 확대 □ 중소기업 Fast-Track 프로그램 연장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위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Fast-Track프로그램’ 적극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10월 이후 10.12말까지 123개 기업에 1조 7,812억원 지원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동반성장할 수 있는 핵심고객으로 설정하고, 고용창출 및 경제 성장의 주역인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 중소기업 자금공급 비중의 확대를 위해 노력 지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5.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건설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꺼리고 있으나, 워크아웃 업체의 하청업체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9월 30일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조속히 이행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업체(남광토건) 앞 채권금융기관 공동 신규자금 1,728억원(당행 291억원) 및 보증 702억원 지원 완료 ○ 본건은 채권금융기관들이 경영정상화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지원에는 공감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간 지원금액의 배분방법 및 지원참여기관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규 자금지원 이행이 늦어졌던 것으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바탕으로 '10.11.2일자로 신규자금 지원을 완료함 |

중 소 기 업 은 행

10. 중소기업은행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증가에 반하여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대출은 축소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음- 다만, 2008년 이후 지원 규모가 감소 → 금융위기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었던 것이 원인 <p>< 중소기업 설비투자자금 공급현황 ></p> <p>(단위 : 억원)</p> <table><tr><th rowspan="2">2006년</th><th rowspan="2">2007년</th><th rowspan="2">2008년</th><th rowspan="2">2009년</th><th colspan="2">2010년</th></tr><tr><th>계</th><th>획 실 적</th></tr><tr><td>72,069</td><td>85,268</td><td>90,647</td><td>87,370</td><td>80,000</td><td>84,420</td></tr></table>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설비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잠재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계 | 획 실 적 | 72,069 | 85,268 | 90,647 | 87,370 | 80,000 | 84,420 |
| 2006년 | 2007년 | | | |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 | | | |
| | | 계 | 획 실 적 | | | | | | | | | | | | |
| 72,069 | 85,268 | 90,647 | 87,370 | 80,000 | 84,420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2.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p> | <p><처리결과></p> <p>○ 당행은 지방(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꾸준히 자금을 공급, 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10년말 현재 33.5%로 '09년말 33.1% 대비 0.4%p 증가)</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원, %)</p> <table> <tr> <th rowspan="2">당 행</th> <th colspan="2">2008년말</th> <th colspan="2">2009년말</th> <th colspan="2">2010년말</th> </tr> <tr> <th></th> <th>구성비</th> <th></th> <th>구성비</th> <th></th> <th>구성비</th> </tr> <tr> <td>수도권</td> <td>528,142</td> <td>67.3</td> <td>589,091</td> <td>66.9</td> <td>619,105</td> <td>66.5</td> </tr> <tr> <td>비수도권</td> <td>256,864</td> <td>32.7</td> <td>291,001</td> <td>33.1</td> <td>311,892</td> <td>33.5</td> </tr> <tr> <td>합 계</td> <td>785,006</td> <td>100.0</td> <td>880,092</td> <td>100.0</td> <td>930,997</td> <td>100.0</td> </tr> </table> <p>○ 당행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꾸준히 늘여왔으나 다음의 이유로 인해 여전히 수도권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수요규모) 비교적 규모가 큰 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많아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큼 - (자금수급) 지방의 예금비중은 23.9%에 불과(수도권 76.1%), 지역별 자금 수급상의 어려움이 존재 <p>→ 수도권 조달자금을 지방에 공여하는 상황</p> <p><향후 추진계획></p> <p>○ 당행은 그간 지방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여신심사센터 설치·운영) 지방특성을 반영, 신속한 여신지원을 도모 <p>* 지방여신심사센터 : 충청, 부산, 대구, 호남</p> | 당 행 | 2008년말 | | 2009년말 | | 2010년말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수도권 | 528,142 | 67.3 | 589,091 | 66.9 | 619,105 | 66.5 | 비수도권 | 256,864 | 32.7 | 291,001 | 33.1 | 311,892 | 33.5 | 합 계 | 785,006 | 100.0 | 880,092 | 100.0 | 930,997 | 100.0 |
| 당 행 | 2008년말 | | 2009년말 | | 2010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도권 | 528,142 | 67.3 | 589,091 | 66.9 | 619,105 | 6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수도권 | 256,864 | 32.7 | 291,001 | 33.1 | 311,892 | 33.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785,006 | 100.0 | 880,092 | 100.0 | 930,997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지방중소기업전용상품개발) 지방중소기업 및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을 위한 「내고장기업대출Ⅱ」 개발·판매('10.2.1. 출시) * 지원실적('10년말) : 2,194건, 9,122억원</div> <div>- (지자체협약대출 확대) 지자체 추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 확대 (단위 : 억원, 개)</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3">2008년말</th><th colspan="3">2009년말</th><th colspan="3">2010년말</th></tr><tr><th>기관수</th><th>공 급</th><th>잔 액</th><th>기관수</th><th>공 급</th><th>잔 액</th><th>기관수</th><th>공 급</th><th>잔 액</th></tr><tr><td>수 도 권</td><td>19</td><td>6,930</td><td>11,416</td><td>22</td><td>7,794</td><td>15,131</td><td>24</td><td>7,792</td><td>16,345</td></tr><tr><td>비수도권</td><td>48</td><td>5,580</td><td>11,444</td><td>51</td><td>10,284</td><td>15,499</td><td>52</td><td>7,528</td><td>14,671</td></tr><tr><td>기 타</td><td>2</td><td>18</td><td>56</td><td>2</td><td></td><td>39</td><td>2</td><td>-</td><td>24</td></tr><tr><td>계</td><td>69</td><td>12,528</td><td>22,916</td><td>75</td><td>18,078</td><td>30,669</td><td>78</td><td>15,320</td><td>31,040</td></tr></table> <div>주) 기타는 자치단체 이외 기관 : 여성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div> <div>- (유망중소기업 선정우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평가시 10점 (100점 만점)을 가점 (단위 : 억원, 개)</div>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수도권</th><th colspan="2">비수도권</th><th colspan="2">계</th></tr><tr><th>업체수</th><th>금액</th><th>업체수</th><th>금 액</th><th>업체수</th><th>금액</th></tr><tr><td>누 계</td><td>87</td><td>2,622</td><td>101</td><td>2,199</td><td>188</td><td>4,821</td></tr><tr><td>'09년중</td><td>47</td><td>1,436</td><td>58</td><td>1,088</td><td>105</td><td>2,524</td></tr><tr><td>'10년중</td><td>40</td><td>1,186</td><td>43</td><td>1,111</td><td>83</td><td>2,297</td></tr></table> <div>○ 앞으로도 우대정책 개발, 지자체협약 대출의 지속 확대, 지방중소기업 전용상품 개발, 지방공업단지내 점포신설 등 지방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div> | 구 분 | 2008년말 | | | 2009년말 | | | 2010년말 | |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수 도 권 | 19 | 6,930 | 11,416 | 22 | 7,794 | 15,131 | 24 | 7,792 | 16,345 | 비수도권 | 48 | 5,580 | 11,444 | 51 | 10,284 | 15,499 | 52 | 7,528 | 14,671 | 기 타 | 2 | 18 | 56 | 2 | | 39 | 2 | - | 24 | 계 | 69 | 12,528 | 22,916 | 75 | 18,078 | 30,669 | 78 | 15,320 | 31,040 | 구 분 | 수도권 | | 비수도권 | | 계 |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 액 | 업체수 | 금액 | 누 계 | 87 | 2,622 | 101 | 2,199 | 188 | 4,821 | '09년중 | 47 | 1,436 | 58 | 1,088 | 105 | 2,524 | '10년중 | 40 | 1,186 | 43 | 1,111 | 83 | 2,297 |
| 구 분 | 2008년말 | | | 2009년말 | | | 2010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기관수 | 공 급 | 잔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 도 권 | 19 | 6,930 | 11,416 | 22 | 7,794 | 15,131 | 24 | 7,792 | 16,3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수도권 | 48 | 5,580 | 11,444 | 51 | 10,284 | 15,499 | 52 | 7,528 | 14,6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2 | 18 | 56 | 2 | | 39 | 2 | - | 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69 | 12,528 | 22,916 | 75 | 18,078 | 30,669 | 78 | 15,320 | 31,0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 분 | 수도권 | | 비수도권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업체수 | 금액 | 업체수 | 금 액 | 업체수 |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누 계 | 87 | 2,622 | 101 | 2,199 | 188 | 4,8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9년중 | 47 | 1,436 | 58 | 1,088 | 105 | 2,5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년중 | 40 | 1,186 | 43 | 1,111 | 83 | 2,29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중소기업에 대한 순수 신용대출과 보증대출의 비중 및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을 확대할 것 | <p><처리결과></p> <p>□ 신용대출 및 보증부대출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년말 현재 신용대출 비율은 39.9%로 전년말 대비 1.1%p 증가○ ‘10년말 현재 보증부대출 비율은 23.0%로 전년말 대비 0.5%p 감소- 보증부대출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보증잔액은 ‘10년말 현재 21조 3,842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6,602억원 증가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억원, %)</p>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07년말</th><th colspan="2">2008년말</th><th colspan="2">2009년말</th><th colspan="2">2010년말</th></tr><tr><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r><tr><td>담 보</td><td>300,869</td><td>43.9</td><td>331,964</td><td>42.3</td><td>331,729</td><td>37.7</td><td>345,231</td><td>37.1</td></tr><tr><td>신용보증</td><td>125,321</td><td>18.3</td><td>146,832</td><td>18.7</td><td>207,240</td><td>23.5</td><td>213,842</td><td>23.0</td></tr><tr><td>신 용</td><td>259,444</td><td>37.8</td><td>306,210</td><td>39.0</td><td>341,123</td><td>38.8</td><td>371,924</td><td>39.9</td></tr><tr><td>계</td><td>685,634</td><td>100.0</td><td>785,006</td><td>100.0</td><td>880,092</td><td>100.0</td><td>960,997</td><td>100.0</td></tr></table> <p>주) 중소기업대출 기준(투자, 대금금 제외)</p> <p>□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행은 신용도가 다소 취약한 기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왔음- B~BB등급 이하가 33.1%, CCC등급 이하 및 규모가 작은 소기업과 미평가 기업이 18.0%로 신용도 미흡 기업이 51.1%를 점유 | 구 분 | 2007년말 | | 2008년말 | | 2009년말 | | 2010년말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담 보 | 300,869 | 43.9 | 331,964 | 42.3 | 331,729 | 37.7 | 345,231 | 37.1 | 신용보증 | 125,321 | 18.3 | 146,832 | 18.7 | 207,240 | 23.5 | 213,842 | 23.0 | 신 용 | 259,444 | 37.8 | 306,210 | 39.0 | 341,123 | 38.8 | 371,924 | 39.9 | 계 | 685,634 | 100.0 | 785,006 | 100.0 | 880,092 | 100.0 | 960,997 | 100.0 |
| 구 분 | 2007년말 | | 2008년말 | | 2009년말 | | 2010년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담 보 | 300,869 | 43.9 | 331,964 | 42.3 | 331,729 | 37.7 | 345,231 | 3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보증 | 125,321 | 18.3 | 146,832 | 18.7 | 207,240 | 23.5 | 213,842 | 2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용 | 259,444 | 37.8 | 306,210 | 39.0 | 341,123 | 38.8 | 371,924 | 39.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685,634 | 100.0 | 785,006 | 100.0 | 880,092 | 100.0 | 960,997 | 1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신용등급별 대출잔액 현황> (단위 : 억원)</div>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colspan="2">2009년말</th><th colspan="2">2010년말</th><th colspan="2">전년대비</th></tr><tr><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h></th><th>구성비</th></tr><tr><td rowspan="2">기업 평가</td><td>BBB등급 이상</td><td>442,584</td><td>50.3</td><td>455,349</td><td>48.9</td><td>12,765</td><td>△1.4</td></tr><tr><td>B~BB</td><td>303,284</td><td>34.5</td><td>308,358</td><td>33.1</td><td>5,074</td><td>△1.4</td></tr><tr><td rowspan="2">모형</td><td>CCC등급 이하</td><td>27,298</td><td>3.1</td><td>45,741</td><td>4.9</td><td>18,443</td><td>1.8</td></tr><tr><td>소매평가모형</td><td>70,469</td><td>8.0</td><td>92,259</td><td>9.9</td><td>21,790</td><td>1.9</td></tr><tr><td></td><td>미등급</td><td>36,457</td><td>4.1</td><td>29,290</td><td>3.2</td><td>△7,167</td><td>△0.9</td></tr><tr><td colspan="2">합 계</td><td>880,092</td><td>100.0</td><td>930,997</td><td>100.0</td><td>50,905</td><td>-</td></tr></table> <div>주) 중소기업대출 기준(외화포함, 투자/대금금/신탁 제외)</div> <div>□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이유</div> <div><div>○ 당행은 시설자금대출 비중*이 높아 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div><div>* 당행의 ‘10.6월말 현재 장기 시설자금대출 비중은 29.6%(4대 시중은행 평균 : 25.1%)를 차지</div><div>○ 또한 시중은행이 지원에 소극적인 소기업·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에 따라 Risk 관리 차원에서 보증서담보를 취득, 신용을 보장하여 대출을 지원</div><div>* 종업원수 20인 이하 영세소기업에 지원 현황 - 대출비중 : ‘08년말 58.9% → ‘09년말 60.9% → ‘10년말 61.9% - 거래기업수 : ‘08년말 90.6% → ‘09년말 91.6% → ‘10년말 91.9%</div><div>○ 아울러 ‘10년중 중기대출 순증의 60.5%가 신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당행의 신용대출 취급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div></div> | 구 분 | | 2009년말 | | 2010년말 | | 전년대비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기업 평가 | BBB등급 이상 | 442,584 | 50.3 | 455,349 | 48.9 | 12,765 | △1.4 | B~BB | 303,284 | 34.5 | 308,358 | 33.1 | 5,074 | △1.4 | 모형 | CCC등급 이하 | 27,298 | 3.1 | 45,741 | 4.9 | 18,443 | 1.8 | 소매평가모형 | 70,469 | 8.0 | 92,259 | 9.9 | 21,790 | 1.9 | | 미등급 | 36,457 | 4.1 | 29,290 | 3.2 | △7,167 | △0.9 | 합 계 | | 880,092 | 100.0 | 930,997 | 100.0 | 50,905 | - |
| 구 분 | | | | 2009년말 | | 2010년말 | | 전년대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성비 | | 구성비 | | 구성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업 평가 | BBB등급 이상 | 442,584 | 50.3 | 455,349 | 48.9 | 12,765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BB | 303,284 | 34.5 | 308,358 | 33.1 | 5,074 | △1.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모형 | CCC등급 이하 | 27,298 | 3.1 | 45,741 | 4.9 | 18,443 | 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매평가모형 | 70,469 | 8.0 | 92,259 | 9.9 | 21,790 | 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미등급 | 36,457 | 4.1 | 29,290 | 3.2 | △7,167 | △0.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880,092 | 100.0 | 930,997 | 100.0 | 50,90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p><향후 추진계획></p> <p>□ 신용대출 확대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심사기법 제고 및 심사 전문인력 적극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신용상태, 기술력, 성장성 및 미래상환능력을 바탕으로 한 신용대출 지원 관행 정착유도 ○ 신용대출 확대를 위한 여신제도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차주에 대하여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신용대출 기반 확충 - Credit Line을 설정하여 동 한도 내에서는 언제든지 신용을 공여해주는 「기업여신한도제」 운용 ○ 「신용대출」 제도 개발 및 확대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어음* (중소Royal어음, 중소골드어음 포함)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할인(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지속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실적('10년말) : 1,287개 기업, 3조 2,457억원 - 「우선지원기업*」 및 「패밀리기업」 등 신용대출 우대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실적('10년말) : 1,111개 기업, 5조 8,132억원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div>□ 보증부대출 확대방안</div> <div><div>○ 보증기금 특별출연 : 1,500억원(신보 1,000억원 vs 기보 500억원)</div><div>- 보증기금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 및 보험한도 : 5.3조원(협약보증 1.2조, 협약보험 0.3조, 보증료지원 3.8조) 발생 → 7.3조원의 보증부대출 여력 확보</div><div>○ 「IBK 보증협약 기업대출」 개발 · 판매(2011.2.11. 시행)</div><div>- 특별출연 보증부대출 전용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 확대 추진</div></div> <div>□ 신용도 미흡기업 지원방안</div> <div><div>○ 신용도가 미흡한 창업기업,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이들 기업에 대한 경영안정화에 노력</div><div>< 신용도 미흡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현황 > (단위 : 억 원)</div><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2009년</th><th colspan="3">2010년</th></tr><tr><th>계 획</th><th>실 적</th><th>달성률</th></tr><tr><td>창업기업자금</td><td>51,370</td><td>28,000</td><td>68,981</td><td>246.4</td></tr><tr><td>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td><td>56,405</td><td>32,000</td><td>71,597</td><td>223.7</td></tr><tr><td>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td><td>62,735</td><td>45,000</td><td>90,483</td><td>201.1</td></tr></table></div> | 구 분 | 2009년 | 2010년 | | | 계 획 | 실 적 | 달성률 | 창업기업자금 | 51,370 | 28,000 | 68,981 | 246.4 |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 56,405 | 32,000 | 71,597 | 223.7 |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 62,735 | 45,000 | 90,483 | 201.1 |
| 구 분 | 2009년 | | | 2010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획 | 실 적 | 달성률 | | | | | | | | | | | | | | | | | | | | |
| 창업기업자금 | 51,370 | 28,000 | 68,981 | 246.4 | | | | | | | | | | | | | | | | | | | | |
| 영세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 | 56,405 | 32,000 | 71,597 | 223.7 | | | | | | | | | | | | | | | | | | | | |
| 중소·벤처기업 지원자금 | 62,735 | 45,000 | 90,483 | 201.1 | | | | | | | |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4. 민영화과정에서 중소기업금융전문이라는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정책금융 체계의 안정화”는 기은 민영화 추진의 핵심 전제조건으로서 기은은 중기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08.9월) 이후 '10년말 까지 은행권 중기대출 증가분인 19.3조원의 91%에 해당하는 17.6조원을 공급 ○ 중기 정책금융체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공사의 On-lending 확대에 적극 협조 ○ 금융권 최초의 대·중기 상생모델을 구현하여 동반성장의 가교 역할 수행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가 기은 선진화의 대전제라는 인식하에 중기 자금난 해소를 위한 역할을 지속 추진 □ 기은은 중소기업금융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 지속 성장·발전하는 형태의 민영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및 아시아 지역의 중소기업금융 선도은행(Asia Super Regional Bank)으로 성장·발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5.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별도의 계정 관리 등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기업구분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계정 분리 작업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분류코드 신설 등 7월까지 완료 예정 * 2011년 산업발전법안 개정과 관련한 대통령령 시행 시 관련내용 반영 예정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와 자금지원에 관한 MOU 체결 (목표 : 1조원) ○ 지식경제부의 “World-Class 300” 프로젝트에 지원기관으로 참여 ○ 중소기업 유예기간 3년 초과한 중견기업에는 여신전결권, 여신금리 등 우대기준 운용 ○ 정책금융공사의 “중견기업온렌딩” 대출상품 판매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중견기업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특화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하여 중견기업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6. '잡월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잡월드를 통한 범국민적 일자리창출 동참을 위해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업종, 지역 등 구인기업 · 구직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유관기관과 공동추진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특성화고등학교 등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의 인식개선을 위해 언론보도 와 채용인식 조사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와의 공동추진을 통해 잡월드 구인기업 특집기사 보도 ○ 특성화고교생에 대한 중소기업 채용인식 조사 실시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잡월드 채용박람회 추진시 지역별, 테마별 유관기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콘텐츠산업 잡월드 채용박람회 (11.3.31)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천시, 부천대학,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11년 총 8회 예정 <input type="checkbox"/> 특성화고교생의 중소기업 취업활성화 를 위한 업무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OU 체결, 기부금 지원 등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7. 창업기업에 대한 특성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 당행은 창업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p> <p><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 (단위 : 개, 억원)</p> <table><tr><td>구 분</td><td>2008년</td><td>2009년</td><td>2010년</td></tr><tr><td>업 체 수</td><td>20,751</td><td>31,639</td><td>42,627</td></tr><tr><td>공 급 액</td><td>28,750</td><td>51,370</td><td>68,981</td></tr></table> <p>주) 설립 3년 이내 중기대출</p> <p><향후 추진계획></p> <p>○ 창업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공급의 확대와 아울러 「창업IBK Challenge 1,000 프로젝트」, 보증기관과 연계 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창업기업 기반 확대 및 이들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음</p> <p>※ 창업기업 지원 세부내용</p> <p>○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지속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금융애로 해소에 노력</p> <p>○ (「창업IBK Challenge 1,000 프로젝트」 추진) 예비창업자를 위한 종합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IBK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영업점 창업서포터 운영(본점과 600여개 전국 영업점에 창업전용 상담창구를 설치)</p>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업 체 수 | 20,751 | 31,639 | 42,627 | 공 급 액 | 28,750 | 51,370 | 68,981 |
|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 | | | | | | |
| 업 체 수 | 20,751 | 31,639 | 42,627 | | | | | | | | | | |
| 공 급 액 | 28,750 | 51,370 | 68,981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기관과 연계 창업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IBK창업대출' 및 '4050세대 창업자금' 지원 * '10년말 현재 IBK창업대출은 2,236건, 1,347억원, 4050세대 창업은 232건, 165억원 지원 ○ (지역보증재단과의 특화지원 프로그램 운용) 「스마트론」, 「나들가게 육성자금」 등 지역보증 재단별 특화된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지원 * '10년말 현재 스마트론 447건, 78억원, 나들가게 육성자금 1,008건, 382억원 지원 ○ (창업기업 대상 별도의 평가기준 마련·운용) 소규모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기준을 세분화(「소기업 신청평점표」 및 「소기업 행동평점표」) 하여 신용대출 지원 활성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p>8. PF대출 관련 심사시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능력을 강화하고, 대출 이후 사후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B 본부 소속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연수 실시(53명, 금융연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입 인력의 조기 전력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7명): 3월 교육 완료(주간8일) ○ 기존 인력 정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46명): 4월부터 총 4회차에 걸쳐 교육 진행 할 예정(주간8일) (현재 1회차 교육 진행 중) <p><향후 추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핵심요원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계약직과 공동업무를 부여, 업무능력 흡수 및 향상 ○ 업무지식 위주의 세미나 적극 참여 ○ 규정, 과거 딜 우수/실패 사례 등의 실무교육으로 사후관리에 만전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 | | | | | | | | | | | |
|--|--|---------|----------|---------|---------|-----|---------|---------|---------|-----|-------|-------|-------|
| 9. 기업은행 해외지점의 연체율이 높은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연체감축을 위한 총력조치 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속한 법적절차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보물 조기매각과 부실여신 상각 조기집행 추진○ 잠재 부실기업 사전적 관리강화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별 영업현황, 건전성 사전진단을 통해 경영애로 예상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등 실시 <p>※ 국외점포 연체감축 현황</p> <table><tr><td>구 분</td><td>‘10. 10월</td><td>‘11. 2월</td><td>‘11. 3월</td></tr><tr><td>금 액</td><td>56.1백만불</td><td>47.9백만불</td><td>46.7백만불</td></tr><tr><td>연체율</td><td>3.81%</td><td>3.12%</td><td>3.09%</td></tr></table> <p><input type="checkbox"/> 국외점포 영업구조 리모델링을 추진을 통한 건전자산 구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제업무 강화 및 Treasury & Trading 등 신규업무 도입, Trade Finance(외국환) 확대 등을 통한 영업구조 리모델링 추진으로 업무 확대 및 건전자산 구축 유도 <p><향후 추진계획></p> <p><input type="checkbox"/> Clean 자산구조 구축을 위해 지속적 연체감축 활동 추진</p> <p><input type="checkbox"/> 영업구조 리모델링 추진을 통한 업무확대로 국외점포의 수익력 강화</p> | 구 분 | ‘10. 10월 | ‘11. 2월 | ‘11. 3월 | 금 액 | 56.1백만불 | 47.9백만불 | 46.7백만불 | 연체율 | 3.81% | 3.12% | 3.09% |
| 구 분 | ‘10. 10월 | ‘11. 2월 | ‘11. 3월 | | | | | | | | | | |
| 금 액 | 56.1백만불 | 47.9백만불 | 46.7백만불 | | | | | | | | | | |
| 연체율 | 3.81% | 3.12% | 3.09% | | | | | | | | | | |

한국거래소

11. 한국거래소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 대리운전비, 사설학원비, 연수 중 연차 보상비 지급 등 과도한 복지혜택 축소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대리운전비 지원대상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을 임원 및 업무상대방으로 한정 <p><input type="checkbox"/> 과도한 복지혜택 등 축소('10.12월 단협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생 사설학원비 지원 폐지 ○ 대학생학자금 무상지원 폐지 ○ 경조사비 지원 폐지 ○ 동반부임자 사택관리비 지원 폐지 ○ 기념품 지급 횟수 및 금액 축소 ○ 주택자금대여 이자율 상향 조정 ○ 요양비 지원 항목 통폐합 및 한도 축소 ○ 유급휴가제도 통폐합 및 축소 |
| 2. 과다연봉 개선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보수 삭감 등을 통한 연봉 축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도 전직원 임금총액 5%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8, '09년도 2년연속 임금 동결 ○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보상금 지급기준을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축소 ○ 연수자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폐지 ○ 장기연수자 경영평가성과급 지급 제외 |
| 3. 채용·승진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사차별 금지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사회형평적 인재 채용 및 모성보호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용할당제 도입 및 장애인 인턴 채용 등으로 장애인 고용률 초과 달성 ○ '10년 채용시 신규 입사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용 ○ 육아휴직 신청기간 확대 등 모성 보호 강화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4.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기부 활성화 필요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체계적·지속적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인프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기본계획 수립 후 세부사업 전개 ○ KRX행복나눔봉사단 창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여끝전 등 임직원 기부금으로 나눔펀드 조성 ○ KRX국민행복재단 출범 및 기금 출연(228억원)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책임 성실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RX행복나눔봉사단 활성화로 지역사회 기여 ○ KRX국민행복재단 중심 전국적 사업 전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출연을 통해 대표재단으로 적극 육성 |
| 5.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및 선물연구소 등 부산설립 | |
| 5-1) 파생상품 접속장비(라우터) 부산 설치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부산 접속장비설치 결정, 회원사와 협의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사 대표(22개사)로 구성된 CIO협의회 (3회)와 쉐회원사 전산부서장 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하여 거래소 방침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10.11~'11.4)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1년내 가동예정이며, 추진 과정에서 회원사 CIO·부서장·실무자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써 회원사간 형평성, 비용최소화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회원사들이 부산 IT설비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코스콤 등과 협의를 통해 공동서비스센터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입지선정 경쟁을 없애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추진 중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5-2) 선물연구소 등 부산설립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파생상품 R&D센터의 설립형태에 대해 부산시,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중</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KRX, 금융투자업계 및 부산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음</p> |
| 6. 임직원 가족 및 서울 기업들의 부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주도적 역할 필요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임직원 가족 부산 이전 관련 지원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가족 동반 부임자에 대한 사택 지원 o 부산 본사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o 동반 부임자 문화교통비 지원 확대 |
| 7. 우회상장심사시 추정재무제표반영, 지정감사인제도 도입, 직원역량강화 등 우회상장제도 정비방안 마련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우회상장 질적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신규상장수준의 질적심사 도입 및 심사 대상 확대 등으로 우회상장 관리 강화 <p>*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10.12.1)</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사항의 홍보 및 모니터링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우회상장제도 안내 및 M&A시장 변화 등 시장효과 분석으로 지속적인 Feed-Back 수행 |
| 8. MSCI지수편입 등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MSCI 선진국지수 편입요건 충족을 위한 제도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외국인 단기원화차입 허용('10.11), 수시공시 영문서비스 제공('10.9) 등 외국인투자자의 시장접근성 개선 노력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투자자에 대한 한국시장 홍보 강화</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o 해외 기관투자자대상 설명회 및 면담·홍보 * JP모건 등 4개기관 면담, 동경 IR실시('11.3)</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글로벌투자자, MSCI 대상 지속적 홍보 실시</p> <p><input type="checkbox"/> 외국인투자자 의견수렴·제도개선 지속 추진</p> <p>※ MSCI의 영리를 위한 시장정보 이용은 분리 대응</p> |
| <p>9. ELW시장에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p>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ELW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 업계 등과 공청회 등을 거쳐 'ELW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시행('10.11)</p> <p>o (투자자 진입절차 강화) 신규투자자시 별도의 청약서 작성 및 ELW 교육이수의무 부과 등</p> <p>o (ELW 기초자산 제한) 기초자산 거래규모 기준 도입(유동성 높은 기초자산대상 ELW 발행 유도)</p> <p>o (LP호가제출 의무 강화) LP호가제출 의무 기간을 최종거래일 5일전까지 확대</p> <p>o (LP평가기준 강화) 의무이행도 평가항목의 세분화, 내재변동성 일관성 기준 추가 등</p> <p>o (LP평가 조치 강화) LP평가 최하위등급의 제재 강화 및 평가결과의 공개범위 확대</p> <p>o (내재변동성 실시간 공개) LP 내재변동성 내역 공개</p> <p>※ ELW시장 건전화 방안 시행 효과</p> <p>- 투자 과열의 안정화* 및 가격급등락 완화**</p> <p>* 일평균거래대금 감소 : (시행전) 2.1조원 → (시행후) 1.4조원</p> <p>** 이상거래적출 감소 : (시행전) 0.84건 → (시행후) 0.13건</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ELW시장 건전화 방안 시행효과 및 보완사항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시장 건전화 노력 추진</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10. 알고리즘거래에 따른 투자자보호 대책 마련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알고리즘매매 효율적 수용 및 안정적 시장 관리를 위한 장·단기 대응방안 마련·시행*</p> <p>* 회원사의 거래소 시스템 접속기준, 알고리즘매매 관련 시장감시기준, 착오매매방지 모범규준 개선 (금투협 공동) 등 단기방안 기시행</p> <p>o 호가건수 증가에도 평균 주문처리 속도 유지 등 시스템 안정적 운영</p> <table><tr><td></td><td>10.12월</td><td>11.1월</td><td>11.2월</td></tr><tr><td>일평균호가건수<만건></td><td>875</td><td>1,047(19%↑)</td><td>1,176(12%↑)</td></tr><tr><td>평균처리속도<ms></td><td>32</td><td>33</td><td>35</td></tr></table>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안정적 시장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장기 제도·시스템적 대응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p> <p>o(제도 측면) 호가단위·매매수량단위 개선, DMA관리기준, 알고리즘호가 식별장치 도입 등</p> <p>o(시스템 측면) 고빈도호가 모니터링 체계 및 데이터센터 구축, 시스템 성능·용량 확충, FIX 도입 등</p> | | 10.12월 | 11.1월 | 11.2월 | 일평균호가건수<만건> | 875 | 1,047(19%↑) | 1,176(12%↑) | 평균처리속도<ms> | 32 | 33 | 35 |
| | 10.12월 | 11.1월 | 11.2월 | | | | | | | | | | |
| 일평균호가건수<만건> | 875 | 1,047(19%↑) | 1,176(12%↑) | | | | | | | | | | |
| 평균처리속도<ms> | 32 | 33 | 35 | | | | | | | | | | |
| 11. IFRS도입과 관련하여 新회계기준 때문에 기업이 퇴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할 것 | <p><처리결과></p> <p><input type="checkbox"/> 회계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충격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 도입</p> <p>o ‘11~12년에는 별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상장·공시규정을 적용, 기존 회계기준과의 차이를 최소화</p> <p><향후계획></p> <p><input type="checkbox"/> ‘13년부터 IFRS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상장·공시 관리시스템으로 전환</p> <p>o IFRS를 완전 수용하여 상장·공시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p> | | | | | | |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12. 불법사설 거래소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 코스콤/금감원과 협의 하여 개선방안 마련 | <p><처리결과(코스콤과 공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사설 선물거래행위가 적발된 인터넷업체(8개사)에 대해 정보제공중단 조치('10.10~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사설 선물거래 관련 정보이용계약 업체 전무 <input type="checkbox"/> 시세정보이용자(273사)에 대해 사설거래 관련 정보제공금지요청 공문 발송('10.11월) <input type="checkbox"/> 불법사설거래업체 적발 및 예방활동(~'11.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금감원에 관련 업체 명단 등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감원은 수사기관 이첩 o 사설 거래업체에 대해 불법행위 고지 및 무단정보이용금지 공문 발송 <p><향후계획(개선사항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정보이용관리 강화(코스콤 공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정보이용 이전 단계(정보이용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정보 이용목적 및 업체 신뢰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시 업체 현장실사 - 사설 선물거래 관련 사례 및 정보이용자 준수 의무 등 계도활동 - 불법이용시 조치강화(즉시 정보제공 중단 시행 등) o 정보이용 단계(정보이용계약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준수여부 등 정보이용 실태점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업체 계약 후 3월내 점검 실시 <input type="checkbox"/> 금감원과 협조체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불법 사설 선물거래 관련 수사 정보제공 등 업무협조 강화 |
| 13. 코스닥시장 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상장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 개선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기술평가를 통한 진입요건 완화 및 상장 폐지 특례적용, 소속부 관리 등 시장관리 개선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p>* 공청회 개최('10.12) 및 상장규정 개정('11.3.2) * 제도설명회('11.3월, 7회)</p> <p><향후계획> <input type="checkbox"/> 상장활성화 제도 홍보 및 교육 o 상장안내 책자 발간 및 우량기업 방문유치 o 지역거점별 상장제도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p> |
| 14. 증권회사, 투자상담사, 랩어카운트 관리자 등의 극초단타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마련 | <p><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극초단타 거래 포함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 구축 운영 중 o 허수성호가 및 분할호가, 선행매매 등에 대한 감시기준 운영 중</p> <p><향후계획> <input type="checkbox"/> 현행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의 대응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시 新 감시기준 등 마련 o 극초단타(알고리즘) 이용자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개편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거래 발생 시 감리 실시</p> |
| 15. 충청지역 상장기업/투자자를 위한 대전사무소 설치 검토 | <p><처리결과> <input type="checkbox"/> 충청지역 상장기업, 상장예비기업, 투자자를 포함한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있으며, o 사무소 설치를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검토 중</p> <p><향후계획> <input type="checkbox"/> 지역 상장기업에 대한 IR지원, 투자자 교육 등을 실시해나가면서,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사무소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p> |

| 시정·처리요구사항 |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16. (코스콤) 보드보안 제품의 구매과정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키보드 보안제품을 교체할 것</p>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구매과정에 대한 자체감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B시스템에 적용된 제품의 구매과정은 회사의 감사절차(일상감사)에 따라 통제되었으며, 본건과 관련하여 구매과정에서 비리 또는 법에 저촉된 사실이 없어 추가적으로 자체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정감사결과에서 시정.처리를 요구하였으므로 자체감사 추진 예정 <input type="checkbox"/> 해당 키보드보안제품의 교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국회에서 키보드보안제품의 해킹 가능성이 지적은 되었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해킹되는 사례는 없었고 - 지적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보완된 버전으로 교체하였음 ※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2개의 외부기관 (공공기관, 정보보호전문대학원)에 의뢰하여 점검하였으며, 해당 제품의 보안 안전성이 현재 출시된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동일수준 이상으로 확인됨 <p><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구매과정에 대한 자체감사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P.B 시스템에 적용된 제품의 구매과정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2/4분기)하고 결과를 보고 <input type="checkbox"/> 해당제품의 교체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o 향후에도, 계속되는 해킹 시도에 대비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 취약점 기술검토 주기를 강화하여 키보드보안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며 - 안전성 부족시 교체 또는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

박병석 의원(민주당)

2. 최근 3년간 감사원, 국무총리실,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 조치사항

□ 최근 3년간 금융위에 대한 국무총리실 감사는 실시된 바 없으며, 감사원 감사는 5회, 자체감사는 2회 실시 되었음

| 감사기관 | 감 사 명 | 감 사 기간 | 감사결과 | 조치결과 |
|-----------|------------------------------|---------------------|-------------|--------------|
| 국무 총리실 | 해당사항 없음 | | | |
| 감사원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 ‘09.6.15 ~7.17 | 별첨1 | 별첨5 |
| | 2009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0.3.15 ~3.19 | 별첨2 | 조치통보사항 없음 |
| |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 | ‘10.1.28 ~4.2 | 별첨3 | 〃 |
| | 2010 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11.3.17 ~3.25 | 별첨4 | 〃 |
| |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 | ‘11.4.4 ~5.27 | 처분요구 미통보 | - |
| 금융위 | ‘08년 자체감사 | ‘08.6.23 ~6.27 | 별첨6 | 조치통보사항 없음 |
| | ‘10년 자체감사 | ‘10.12.16 ~12.22 | 별첨7 |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금융감독기구 운영 및 감독실태 -

2009 . 11.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1.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통보)
2.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검사감독 부적정(주의·통보)
3.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주의2)
4.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주의2)
5.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주의2)
6.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주의)
7.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주의)
8.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이번 감사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시장 질서 유지, 금융산업 육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직 운영과 예산·인력 운용 실태를 점검하여 방만한 기관운영을 시정하도록 촉구하고 재발 방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범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본부 및 대전·대구·광주·부산지원을 대상으로 2006년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9. 25. ~ 11. 3.) 종료 후 2006년 2월부터 2009년 5월 말까지 집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감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은행·증권·보험·비은행 업무권역별 금융감독업무가 적정한지, 인건비·경비 등 예산집행이 적정한지, 조직 운영과 인력 운용이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는 데 감사중점을 두었다.

4. 감사기간·인원 등

2009. 5. 28.부터 같은 해 6. 10.까지 10일간 예비조사를 한 후, 같은 해 6. 15.부터 7. 17.까지 감사인원 25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09. 11. 12.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감 사 원

통 보

제 목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제공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하 “펀드”라 한다)을 운용하는 것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1.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등록 되지 않은 펀드에 대한 정보 제공 부적정

자본시장법 부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2009. 5. 4.부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9. 2. 4.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른 판매회사는 간투법에 따른 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계속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부칙 제2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¹⁾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별도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와 같이 전환등록이 되지 않은 펀드의 경우에는 추가 자금모집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으로 환매만 발생하는 등 펀드 수탁고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펀드 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전 간투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

1) 「자본시장법」 제43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7조 제3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위탁됨

의 전환등록 여부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 투자의사 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2009년 6월 말 현재 간투법상 펀드의 전환등록 현황²⁾을 보면 공모·추가형펀드 3,423개 중 2,216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 등록된 반면, [별표 1] “공모·추가형펀드의 미전환 현황”과 같이 증권펀드 등 1,207개(계좌 수: 605,944개) 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전환등록 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중 수탁고 100억 원 미만인 펀드가 1,136개(94%)로 대부분 소규모 펀드에 해당되어 나중엔 전환등록 되지 않는 한 신규자금 모집이 불가능한데도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들이 개별통보를 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법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간투법상 펀드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상 펀드로 전환등록되지 않은 사실을 개별통보하도록 하는 등 간투법상 펀드투자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소규모 펀드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 부적정

수탁고 규모가 적은 소규모 펀드는 분산투자의 어려움이 있는 등 펀드재산의 운용효율성이 떨어지고, 법정보고서 작성비용, 회계감사비 등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비용이 대형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 계상될 뿐 아니라 펀드매니저가 관리하는 펀드 수가 증가하여 소규모 펀드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투자수익률이 낮아지기 쉽다.

실제로 2009년 6월 말 현재 펀드의 수익률은 [별표 2]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

2) 간투법 시행으로 2004. 1. 5. 폐지된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도 포함

를 현황”과 같이 수탁고 100억 원 이상의 펀드의 수익률이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펀드의 수익률보다 1년 및 3년 펀드수익률이 최고 128.72%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규모 펀드의 수는 2006년 4,368개, 2007년 5,136개, 2008년 6,180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9. 6. 30. 현재 소규모 펀드의 수는 [표 1]과 같이 6,054개로 전체 펀드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수탁고별 펀드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 펀드 규모 | 10억 원 미만 | | 10~100억 원 | | 100억 원 이상 | | 합 계 | |
|----------|----------|-----|-----------|--------|-----------|---------|-------|---------|
| | 펀드 수 | 수탁고 | 펀드 수 | 수탁고 | 펀드 수 | 수탁고 | 펀드 수 | 수탁고 |
| 공모 | 1,479 | 603 | 1,679 | 8,231 | 1,400 | 248,364 | 4,558 | 257,198 |
| 사모 | 598 | 286 | 2,298 | 7,902 | 1,841 | 108,758 | 4,737 | 116,946 |
| 합계 | 2,077 | 889 | 3,977 | 16,133 | 3,241 | 357,122 | 9,295 | 374,144 |

자료: 금융투자협회

따라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제 2-11조에 따라 은행, 증권사 등 펀드의 판매회사가 투자자 개인의 펀드수익률 등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잔고통보제를 실시하고 있고,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에 펀드조회 등을 개설하고 있으므로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환매 등의 의사결정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에서는 잔고통보 및 펀드조회내용에 펀드 규모를 포함하여 통보하거나 공시하는 등 펀드 투자자가 자신이 설정한 펀드의 규모를 쉽게 알 수 있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펀드를 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 ② 펀드 판매회사에게 펀드조회 내용 등에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공모·추가형 펀드의 미전환 현황 (2009. 6. 30. 기준)

(단위: 개)

| 구 분 | | 펀드 수 | 계좌 수 |
|-------------|-------|-------|---------|
| 증권펀드 | 주식형 | 75 | 4,380 |
| | 채권형 | 479 | 389,387 |
| | 혼합주식형 | 161 | 34,915 |
| | 혼합채권형 | 370 | 24,589 |
| 파생상품펀드 | | 12 | 3,935 |
| 부동산펀드 | | - | - |
| 실물펀드 | | - | - |
| 단기금융펀드(MMF) | | 102 | 148,518 |
| 재간접펀드 | | 8 | 220 |
| 특별자산펀드 | | - | - |
| 합 계 | | 1,207 | 605,944 |

주: 1) 펀드구분기준 :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펀드 분류기준

2) 모펀드, 종류형 클래스펀드 및 기금 개별펀드 제외, 계좌 수는 '09. 5. 31. 기준

자료: 금융투자협회

[별표 2]

펀드규모에 따른 수익률 현황(2009. 6. 30. 기준)

(단위: 억 원, 개, %)

| 구 분 | 운용 사명 | 수탁고 합계 | 펀드 유형 | 펀드 수 | | 1년 수익률 | | | 3년 수익률 | | |
|--------|----------|-----------|----------|--------------|--------------|-----------------|-----------------|---------|------------------|-----------------|---------|
| | | | | 100억 원 미만 | 100억 원 이상 | 100억 원 미만(A) | 100억 원 이상(B) | (B)-(A) | 100억 원 미만 (C) | 100억 원 이상(D) | (D)-(C) |
| 1 | ○○○ | 566,482 | 채권형 | 44 | 48 | 6.89 | 8.59 | 1.7 | 15.45 | 17.05 | 1.6 |
| | | | 주식형 | 59 | 59 | -15.8 | -14.75 | 1.05 | 28.94 | 11.01 | -17.93 |
| | | | 단기금융 | 9 | 11 | 3.48 | 4.35 | 0.87 | 13.2 | 14.35 | 1.15 |
| 2 | ○○○ | 462,979 | 채권형 | 7 | 25 | 9.64 | 9.4 | -0.24 | 17.28 | 18.08 | 0.8 |
| | | | 주식형 | 45 | 88 | -21.68 | -14.95 | 6.73 | 18.78 | 21.67 | 2.89 |
| | | | 단기금융 | - | 8 | - | 4.08 | - | - | 13.33 | - |
| 3 | ○○○ | 255,206 | 채권형 | 74 | 33 | 0.04 | 7.36 | 7.32 | -0.39 | 15 | 15.39 |
| | | | 주식형 | 24 | 46 | -25.42 | -19.06 | 6.36 | 7.5 | 30.79 | 23.29 |
| | | | 단기금융 | 11 | 9 | -0.44 | 4.13 | 4.57 | 6.36 | 13.96 | 7.6 |
| 4 | ○○○ | 228,635 | 채권형 | 27 | 38 | 11.64 | 3.82 | -7.82 | 13.24 | 14.65 | 1.41 |
| | | | 주식형 | 13 | 23 | -22.49 | -17.8 | 4.69 | 7.26 | 20.11 | 12.85 |
| | | | 단기금융 | 14 | 6 | 2.69 | 4.44 | 1.75 | 11.05 | 14.79 | 3.74 |
| 5 | ○○○ | 202,539 | 채권형 | 94 | 35 | 5.98 | 8.77 | 2.79 | 14.16 | 17.42 | 3.26 |
| | | | 주식형 | 54 | 45 | -10.85 | -4.39 | 6.46 | 17.02 | 26.17 | 9.15 |
| | | | 단기금융 | 15 | 8 | 3.42 | 4.56 | 1.14 | 12.28 | 15.03 | 2.75 |
| 6 | ○○○ | 186,070 | 채권형 | 59 | 26 | 5.79 | 8.84 | 3.05 | 13.89 | 17.78 | 3.89 |
| | | | 주식형 | 37 | 31 | -16.73 | -14.12 | 2.61 | 3.72 | 14.69 | 10.97 |
| | | | 단기금융 | 6 | 7 | 4.17 | 4.25 | 0.08 | 13.33 | 13.95 | 0.62 |
| 7 | ○○○ | 135,423 | 채권형 | 142 | 25 | 7.76 | 4.27 | -3.49 | 35.19 | - | - |
| | | | 주식형 | 7 | 14 | -26.85 | -24.37 | 2.48 | -12.67 | 116.05 | 128.72 |
| | | | 단기금융 | 18 | 3 | - | 7.32 | - | - | 18.06 | - |

자료: 금융투자협회

감 사 원

주의요구·통보

제 목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 검사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자료 관리 및 보험금 지급방식을 검사·감독¹⁾하고 있다.

실손(實損)의료보험은 보험계약자²⁾가 질병·상해로 입원(또는 통원)치료 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³⁾으로 2003. 9. 30.까지는 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라 한다)에서만 판매하였고, 생명보험회사(이하 “생보사”라 한다)는 같은 해 10. 1.부터 단체, 2008. 5. 1.부터는 개인에게도 위 보험상품을 판매해 오고 있다.

2003년 9월 이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 등 의료비를 담보하는 보험계

1)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호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제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71조와 「보험업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 검사 그리고 「보험업법」 제19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일부 위탁받은 보험회사 감독업무를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음.

2)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로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보험수익자와 다를 수 있으나 이 처리안에는 모두 동일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서술하였음.

3) 주로 상해·질병·운전자 보험의 주계약이 아닌 특별약관(특약)으로 부가되어 판매되고, 1999년 이전부터 판매된 상해의료비 및 1999년부터 판매된 입·통원의료비(상해, 질병) 상품이 있음.

약을 다수 체결한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사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험회사 간 보험계약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산출한 보험금액을 중복하여 지급⁴⁾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에게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등 [표 1]과 같이 2003회계연도까지 손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표 1] 실손의료보험 현황

(단위: 천 건, 백만 원, %)

| 회계연도 | 경과계약 건수 ¹⁾ | 사고건수 | 납부보험료 (A) | 사고발생률 | 지급보험금 (B) | 건당 지급보험금 | 손해율 ²⁾ (B/A) |
|------|-----------------------|-------|--------------|-------|--------------|-------------|----------------------------|
| 2001 | 13,291 | 681 | 230,213 | 5.12 | 291,613 | 0.4282 | 126.7 |
| 2002 | 15,940 | 814 | 273,563 | 5.11 | 349,482 | 0.4291 | 127.8 |
| 2003 | 18,397 | 1,078 | 352,342 | 5.86 | 465,139 | 0.4316 | 132.0 |
| 2004 | 21,239 | 1,144 | 374,246 | 5.38 | 485,160 | 0.4242 | 129.6 |
| 2005 | 25,370 | 1,600 | 512,848 | 6.30 | 594,471 | 0.3717 | 115.9 |
| 2006 | 30,437 | 2,327 | 650,794 | 7.65 | 715,904 | 0.3076 | 110.0 |
| 2007 | 38,122 | 3,382 | 861,311 | 8.87 | 947,010 | 0.2799 | 109.9 |

주: 1) 회계연도 중 보험회사가 보유한 계약건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회계기간 동안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경우 1건으로 간주함. 만약 회계기간 중 6개월간 계약을 유지할 경우 0.5건으로 간주함.

2) 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율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됨.

자료 : 보험개발원

이에 따라 2003. 7. 10. 위 감독원에서는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보험회사의 보험금이 과다 지급되어 경영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

4) 「상법」 제672조에서 보험계약을 중복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비례보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보험회사가 자신의 책임금액 이상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자유이고, 고객신뢰보호 상 관례적으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었던 것임.

해 보험사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같은 해 10. 1. 이후에 체결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신계약”이라 한다)은 보험약관대로 비례분담⁵⁾하여 보상하도록 하였다.

한편, 손보사들은 같은 해 9. 30. 이전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계약(이하 “구계약”이라 한다)과 여러 개의 신계약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시 구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후 본인 부담금 의료비가 기존 계약에서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남은 보험금 잔액을 신계약에서 비례분담하도록 협의하여 보험금을 보상(이하 “잔액보상방식”이라 한다)하는 등 여러 개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상법」 제672조의 실손보상 원칙⁶⁾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고 발생한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 간 비례분담하여 보상하고 있다.

1.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계약자료 관리 부적정

위 감독원에서는 2009. 4. 14. 손보사⁷⁾들이 신계약의 중복가입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비례분담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여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고, 가입금액을 모두 보상받는 것으로 오해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아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보험모집 시 보험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비보험 계약정보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반드시

5) 2003. 10. 1.부터 각 손보사의 신계약 자료를 손해보험협회에 집적하여 각 손보사에서 공유하고 있으므로 보험사고 시 각각의 보험에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액의 비율로 보험금을 비례보상하고 있음.

6)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만을 보상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실제손해를 초과한 무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임.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손해보험과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과거부터 계약 간에 비례보상하도록 약정되어 있었고, 실손의료보험의 성격이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과 유사하므로 위 감독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에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7) 생보사는 2008년 5월부터 개인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으로 판매(단체보험은 이전부터 판매)하였으므로 중복가입 문제는 심각하지 않아 위 감독원에서 손보사만을 언급.

신계약의 중복가입⁸⁾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실손의료보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후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7. 1.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제4-31조의3을 개정하였고, 위 감독원에서는 같은 해 6. 30. 위 제도 개선방안의 내용과 같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34조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신계약의 중복가입 뿐만 아니라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을 가입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험금을 각각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별표 1]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와 같이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비례보상 받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감독원에서는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신계약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76조 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1월부터 집적·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를 정비하도록 하고, 보험모집자로 하여금 이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여야 했으며, 위 위원회는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개발원 전산자료에 구계약 자료입력을 누락하거나 실효·해지 또는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별표

8) 보험계약자가 보장내용(상해, 질병 등)이 같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다수 가입(보장금액 100만 원, 1,000만 원 등)하여 보험료를 각각 납부하더라도 사고발생 시 보장금액이 중복되는 부분(100만 원까지)은 각각의 보험상품에서 보험금을 비례분담 받으므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의 문제가 발생함.

2]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과 같이 2002년 8월까지의 집적률이 최대 30%에 불과하며, 같은 해 8월 이후 추가 계약 및 계약 변경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이 낮은데도 손보사로 하여금 유효한 계약자료를 모두 입력하도록 감독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감독원에서는 보험회사가 구계약 자료를 활용하여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위 시행세칙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위 위원회도 위 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2009. 5. 31. 현재 225만여 건의 유효한 구계약이 있는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 중복여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계약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낭비하게 될 우려가 있다.

[표 2] 손해보험회사의 구계약 보유 현황

(단위: 천 건)

| 보험사명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 등 6개 ^{주)} 손해보험사 | 합계 |
|------|-------|-----|-----|-----|-----|-----|-----------------------------|-------|
| 보유건수 | 1,288 | 273 | 238 | 187 | 84 | 58 | 125 | 2,253 |

주) ●●손해보험(43천 건), ■■손해보험(34천 건), ◆◆해상보험(21천 건), □□손해보험(15천 건), △△해상보험(9천 건), ○○손해보험(3천 건)

자료 : 금융감독원

2.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방식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는 2003년 7월 실손의료보험을 서로 다른 보험사에 중복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는 보험계약자가 최초로 청구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고 보험회사별 분담액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비 보험금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시달하였고, 2007. 11. 2. 보험금을 처음 청구받은 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의 지급액을 포함한 해당 보험금 전액을 지급 후 다른 회사와 각사의 보상책임액 비율에 따라 사후에 정산하도록 ‘다수보험 중 의료실손 보험계약의 보상체계 정비’ 공문을 각 보험회사에 시달하였다.

그런데도 위 감독원에서는 2차례에 걸쳐 막연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만 시달하였을 뿐 아니라 지침을 최초로 시달한 지 6년이 지난 2009. 7. 17. 현재까지 보험업계에서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각각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⁹⁾ 있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2009. 6. 16.부터 같은 해 7. 15.까지 10개 손보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검토한 결과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과 같이 총 537,189명이 총 550,124건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들 중 12,230명은 중복 가입으로 2개 이상 보험회사에 25,165건(1인당 평균 2.06건)을 각각 청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부담하지 않아도 될 진단서 발급비용¹⁰⁾을 최대 12백만여 원¹¹⁾만큼 부담¹²⁾하였고, 보험금

9) 금융감독원에서는 2007. 12. 28. 「보험금 지급업무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경우 발급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제출서류(진단서 등) 대신 간이서류(입·퇴원확인서 등)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안내하도록 통보한 바 있으나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서류의 중복제출 및 중복청구를 방지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지침 등을 통보한 바 없음.

10) 보험금 청구 시 필수서류인 진단서는 발급비용이 병원마다 다르므로 1부를 초과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1부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11) (25,165건 - 12,230건)×1,000원 = 12,935,000원

12)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등 증거서류의 요구기준을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청구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진단서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액의 기준이 보험사별로 다르고, 일부 보험사에서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진단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을 청구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최대 12,935회 중복 방문¹³⁾하는 등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치할 사항 [통보] 금융감독원장은

- ① 보험개발원이 수집하여 관리하고 있는 구계약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험회사가 신계약과 구계약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② 각 보험회사로 하여금 정산시스템을 마련하여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의 불편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보험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하여 보험료를 낭비하거나 보험금 수령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 시행세칙 개정 등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3) 10개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방법을 검토한 결과 직접 방문, 우편, FAX, 모집인 대행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월간 보험금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한 25,165건은 어떤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이 처리안에서는 모두 직접 방문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음.

[별표 1]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지급 비교 명세

| 보험회사 종류 | 보험회사명 | 보험금 지급방식 | | |
|--------------------|-------|--------------------------------|------------------------|---|
| | | 구계약 ¹⁾ +구계약 | 신계약 ²⁾ +신계약 | 구계약+신계약 |
| 손해보험 | ◇◇◇ | 사업방법서가 동일하면 비례 보상, 다르면 중복보상 | 비례보상 |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할 경우 구계약에서 선차감 후 잔액이 있을 경우 신계약 간 비례보상 |
| 생명보험 ³⁾ | ◇◇◇ | 해당사항 없음 | | 구계약의 존재여부를 인지하 지 못할 경우 신계약 간 비 례보상 |

주: 1) 2003. 9. 30.까지 체결한 보험계약

2) 2003. 10. 1. 이후 체결한 보험계약

3) 현재 11개 생보사에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5개 생보사에서는 구계약의 존재여부와 상관 없이 신계약 간에서만 비례분담하고 있음.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보험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실손의료보험 계약자료 현황

(단위: 건, %)

| 회사명 | 상해의료비 | 입원 80% | 입원 100% | 통원 100% | 계 |
|-----------------------|------------|-----------|---------|---------|------------|
| ○○ | 334,879 | 0 | 0 | 0 | 334,879 |
| ○○ | 224,096 | 2,164 | 0 | 0 | 226,260 |
| ○○ | 102,487 | 0 | 0 | 0 | 102,487 |
| ○○ | 94,655 | 1,423 | 1,036 | 0 | 97,114 |
| ○○ | 83,491 | 0 | 1,885 | 0 | 85,376 |
| ○○ | 159,699 | 0 | 3,349 | 3,349 | 166,397 |
| ○○ | 50,732 | 0 | 0 | 0 | 50,732 |
| ○○ | 1,400,212 | 109,680 | 0 | 0 | 1,509,892 |
| ○○ | 711,634 | 43,839 | 0 | 0 | 755,473 |
| ○○ | 545,782 | 5,089 | 426 | 9,096 | 560,393 |
| ○○ | 635,038 | 46 | 195,788 | 0 | 830,872 |
| 계 ¹⁾ | 4,342,705 | 162,241 | 202,484 | 12,445 | 4,719,875 |
| 경과계약 건수 ²⁾ | 12,715,429 | 1,418,907 | 788,362 | 582,761 | 15,505,459 |
| 집적률 | 34.2 | 11.4 | 25.7 | 2.1 | 30.4 |

주: 1) 손보사에서 자료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에 집적한 자료로 2002년 8월 기준 계약건수로 집계한 것임. 이에 따라 경과계약 건수로 환산할 경우 합계액보다 적어져 집적률이 더 낮아짐.

2) 2002회계연도(2002. 4. 1.~2003. 3. 31.)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경과계약 건수 자료는 보험개발원에서 보

현료율을 산출하기 위해 손보사로부터 받는 자료로 위 정보공유 데이터베이스와는 별개로 운용되며, 손보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모든 보험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자료: 보험개발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손해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비례분담 현황

(단위: 건, 명, %)

| 회사명 | 총보상 건수 | 1개 회사 청구건수 | 다수 보험회사 간 비례분담 건수 및 인원 ^{주)} | | | | | | | |
|-----|-----------|---------------|--------------------------------------|--------|-------|-----|--------|----|--------|--------|
| | | | 2개사 | | 3개사 | | 4개사 이상 | | 합계 | |
| | |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건수 | 인원 |
| ○○ | 70,469 | 67,873 | 2,596 | 1,298 | 0 | 0 | 0 | 0 | 2,596 | 1,298 |
| ○○ | 26,757 | 25,606 | 961 | 481 | 150 | 50 | 40 | 10 | 1,151 | 541 |
| ○○ | 12,199 | 11,243 | 856 | 428 | 80 | 27 | 20 | 5 | 956 | 460 |
| ○○ | 15,360 | 13,809 | 1,361 | 681 | 154 | 51 | 36 | 9 | 1,551 | 741 |
| ○○ | 27,044 | 26,192 | 752 | 376 | 78 | 26 | 22 | 6 | 852 | 408 |
| ○○ | 13,643 | 12,399 | 1,050 | 525 | 146 | 49 | 48 | 12 | 1,244 | 586 |
| ○○ | 130,787 | 128,708 | 1,922 | 961 | 149 | 50 | 8 | 2 | 2,079 | 1,013 |
| ○○ | 97,963 | 93,273 | 4,304 | 2,152 | 350 | 117 | 36 | 9 | 4,690 | 2,278 |
| ○○ | 58,371 | 52,711 | 5,038 | 2,519 | 482 | 161 | 140 | 35 | 5,660 | 2,715 |
| ○○ | 97,531 | 93,145 | 4,386 | 2,193 | 0 | 0 | 0 | 0 | 4,386 | 2,193 |
| 합계 | 550,124 | 524,959 | 23,226 | 11,613 | 1,589 | 530 | 350 | 88 | 25,165 | 12,230 |
| 비율 | 100 | 95.42 | 4.58 | | | | | | | |
| | - | - | 92.30 | | 6.31 | | 1.39 | | 100 | |

주) 보험계약자 1명이 3개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총 보상건수는 3건임.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의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예산과 결산을 승인하면서 위 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1. 인력감축계획의 형식적 추진

금융위원회에서 2008. 3. 31. 2008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부담경감을 위해 금융규제기관의 예산을 10% 이상 절감하기로 방침을 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 같은 해 5. 2. 금융감독원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매년 53명씩 총 159명을 감축하여 정원을 1,589명에서 1,430명으로 10% 축소하는 내용의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였다.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에는 형식적으로 정원 숫자만 축소할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제 운용하는 총 인원을 축소하여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는 1999년 설립 당시부터 1년 이상 국내·외 학술연수 및 외부파견 인력 등을 「정원의 인력」이라는 명칭으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하면서, 국내·외 학술연수 인력을 1999년 15명(당시 현원 1,266명의 1.2%)에서 2007년 61명(당시 현원 1,680명의 3.6%)으로, 국제기구 연수인력을 1999년 1명에서 2007년 8명으로 각각 증가시키는 등 [별표 1] “정원의 인력의 연도별 추이”와 같이 2007년 말 현재 총 137명의 「정원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정원 10%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원 감축에 따른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2008. 5. 29. 연령 기준에 따른 팀장 보임해지 직원 18명을 위 기관 소속 연수원에서 1년간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이들을 「정원의 인력」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하여 “교육훈련을 위한 6개월 이상 파견”의 경우를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항목에 신규로 추가하였다.

또한 같은 해 8. 29. 위 기관에서 종전에는 정원에 포함하여 관리하던 교육연수 휴직, 국외유학 휴직, 배우자 동반 휴직, 가족 간병휴직 등 청원휴직 인력을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 같은 해 9. 8. 「조직관리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2008년 말 현재 청원휴직자 18명이 「정원의 인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08. 6. 23. 및 같은 해 7. 1. 4개 광역자치단체와 6개 기초자치단체에 10명의 인력을 신규로 파견하는 등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증가시

킨 결과,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현원 연도별 추이”와 같이 정원 및 정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은 감소하였으나, 「정원의 인력」은 2007년 137명에서 2008년 175명으로 38명 증가하여 위 기관의 총 현원은 2007년 1,680명에서 2008년 1,684명으로 4명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금융회사의 부담이 가중되도록 인력감축계획을 추진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 「정원의 인력」의 한도를 엄격히 정하여 관리하지 않은 채, 위 기관에서 인력감축계획을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2. 상위직 인력 과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조직관리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장, 실장, 팀장 등 직위별 정원을 책정하여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원은 가급적 정원의 범위 안에서 운용하여야 하고 국장, 실장, 팀장 등 상위직 인력을 직위별 정원보다 많이 운용하는 것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2009. 4. 6. 정기인사를 하면서, 팀장 이상 정원은 총 265명(국장 25명, 실장 24명, 팀장S 118명, 팀장J 98명)에 불과한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국장급, 실장급, 팀장급 인사발령을 내고 이들에게 각각 국장, 실장, 팀장과 동일한 직무급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정원보다 78명을 초과하여 총 343명(국장 27명, 실장 73명, 팀장S 119명, 팀장J 124명)을 팀장 이상 상위직으로

1) 직무급(1년 기준): 부서장 27,863,000원, 실장 24,530,000원, 팀장S 19,719,000원, 팀장J 15,141,000원, 미보임직원 12,895,000원(또한, 직무급의 차이는 평가급, 특별상여급, 연차휴가보전수당, 퇴직금 등의 차이를 가져옴)

운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2007년 말 동 기관의 실장 정원은 26명인데도 실장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을 45명으로 하여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별표 3]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와 같이 매년 팀장 이상 상위 직에 대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3. 보임해지 인력 선정 및 운용 부적정

금융감독원에서 국·실장 및 팀장이 일정 연령이 되면 보임 해지한 후 이들을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일정기간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취업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로 되어 있고, 「팀장 보임해지 가이드라인」에서 팀장에 대한 보임해지는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하되 연령, 건강상태 등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임해지 기준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업무실적 등이 아닌 단순한 연령기준에 따라 정년이 4년 이상 남은 국·실장 및 팀장을 강제로 보임 해지하여서는 안 된다.²⁾

또한,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인력을 현업부서가 아닌 교수, 연구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것은 조직 운용상 비효율적이고,

2) 위 기관의 「인사관리규정」 제86조의 3의 규정 등에 따르면 정년이 1년 남은 1급에서 3급 직원은 총무국 소속 자문역으로 발령을 내어 정원 외 인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보임이 없는 무보임자에게 보임자와 같은 수준의 직위를 부여하거나 직무급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2004년 이후 금융감독원의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별표 4]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과 같이 국·실장의 경우 주로 고령자 위주로 보임 해지자가 선정되고 있고, 팀장의 경우에도 업무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보임 해지 사례는 감소하는 반면 주로 연령(만 54세 이상)을 기준으로 보임 해지가 결정되고 있었다.

또한 위 기관에서는 국·실장을 보임 해지한 후 인력개발실 교수, 원장 자문위원, 감독역량 강화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면서 2년간 실장급으로 발령하여 실장의 직무급을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팀장의 경우에도 2007년 이전에는 보임 해지 후 검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현업부서에 배치하였으나, 2008년부터 연령 기준에 따른 보임 해지자에 대해서는 1년간 교육훈련 파견(정원의 인력으로 관리) 후 현업부서에 배치하는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있었다.

4. 수견직원 과다 운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인력을 수견 받아 민원상담, 보험사기 조사 등의 업무에 운용하고 있다.

위 기관의 「수견업무 처리요령」에 따르면 외부기관과의 공동업무 수행 또는 특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외부

기관 인력을 수건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건인력의 수와 기간은 그 사유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하고 인력 운용의 편의 또는 단순 보조업무를 위해 인력을 수건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위 기관에서 2008년 현재 연수·파견·휴직 등 총 163명³⁾의 자체 잉여인력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감축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말 현재 총 86명(총원 대비 4.9%)의 인력을 민간 금융회사로부터 수건 받아 운용하고 있었다.

또한 위 86명 중 41명은 민원상담 업무를, 24명은 금융감독 업무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제공하는 지원업무를, 19명은 금융 인·허가 등 상담업무를, 나머지 2명은 금융감독원의 고유 업무인 보험대리점 등록을 대행하는 등 전문적인 업무보다는 단순 보조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실정이었다.

특히 민원상담 업무는 이해상충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07. 10. 18. 위 기관에서 전문상담원을 자체 채용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였으나 2009년 6월 말 현재까지 이를 추진하지 않은 채 수건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① 정원 뿐 아니라 정원외 인력에 대하여도 인력감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앞으로는 연수·파견 인력 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정원 외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며

3) 2008년 말 현재 금융감독원의 「정원의 인력」 175명 중 육아휴직 11명과 가족 간병휴직 1명을 제외한 인원

- ② 앞으로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상위직 인력을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③ 정년까지 4년 이상 남은 보임직원을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보임해지한 후 교수, 연구위원 등으로 운용하거나 연수·파견을 보내는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 ④ 수견직원 운용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등 필요 최소한도로 하고 민원상담업무를 수견직원이 주로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연수·파견 인력 등 정원외 인력은 그대로 유지 또는 확대하면서 정원만 형식적으로 감축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외 인력 관련 예산 심사 등을 철저히 하고
- ② 금융감독원에서 미보임직원 등을 정원에 근거가 없는 상위직위에 임용하여 사실상 상위직위 인력을 정원보다 과도하게 운용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감독원의 정원관리 및 인력운용을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1]

「정원외 인력」의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 분 | 1999년 ¹⁾ | 2000년 | 2002년 | 2004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국가기관 파견 | 미상 | 미상 | 36 | 49 | 51 | 49 | 32 |
| 지방자치단체 파견 | 미상 | 미상 | 0 | 0 | 1 | 1 | 14 |
| 공공단체 파견 | 미상 | 미상 | (2) | 3 (3) | 5 (5) | 5 (6) | 5 (9) |
| 민간단체 파견 | 0 | 0 | 0 | 0 | 0 | 0 | (2) |
| 국가기관 겸임 | 미상 | 미상 | 7 | 6 | 0 | 0 | 0 |
| 국내외 학술연수 | (15) | (32) | (38) | 54 | 72 | 61 | 65 |
| 국제기구 연수 | (1) | (1) | (2) | 3 | 6 | 8 | 9 |
| 교육연수 휴직 | 0 | 0 | 0 | (1) | (9) | (6) | 2 |
| 육아휴직 | 0 | (3) | (4) | 5 | 3 | 5 | 11 |
| 국외유학 휴직 | 0 | (4) | (10) | (4) | (13) | (10) | 10 |
| 자문역 ²⁾ | - | - | 0 | 6 | 4 | 8 | 3 |
| 배우자 동반휴직 ³⁾ | - | - | - | - | (1) | (6) | 5 |
| 가족 간병휴직 ⁴⁾ | - | - | - | - | (1) | (1) | 1 |
| 교육훈련 파견 ⁵⁾ | - | - | - | - | - | - | 18 |
| 합 계 | 미상 | 미상 | 43 | 126 | 142 | 137 | 175 |

주: 1) 해당연도 연도말 기준 인원임(괄호 안의 숫자는 정원내 인력으로 합계에서 제외됨)

2) 2002. 5. 11.부터 정년퇴직일까지 1년이 남은 1~3급 직원을 자문역으로 발령하여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3) 2005. 9. 20.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4) 2006. 2. 17.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5) 2008. 5. 29.부터 정원외 인력으로 관리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2]

금융감독원 직원 정원 및 총 현원 연도별 추이

(단위: 명)

| 구 분 | | 1999년 1월 | 2002년 말 | 2004년 말 | 2006년 말 | 2007년 말 | 2008년 말 |
|------|--------|----------|---------|---------|---------|---------|---------|
| 정 원 | | 1,342 | 1,529 | 1,545 | 1,585 | 1,589 | 1,536 |
| 총 현원 | 계 | 1,266 | 1,533 | 1,643 | 1,673 | 1,680 | 1,684 |
| | 정원내 인력 | 미상 | 1,490 | 1,517 | 1,531 | 1,543 | 1,509 |
| | 정원외 인력 | 미상 | 43 | 126 | 142 | 137 | 175 |

주) 매년 말 총 현원에는 12월 31일 퇴직자(12월 31일까지 근무자) 포함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별표 3]

금융감독원의 팀장 이상 정원 대비 예산상 직무급 지급대상 인원 비교

(단위: 명)

| 구 분 | | 국장 | 실장 | 팀장S | 팀장J |
|-------|-----------------------|----|----|-----|-----|
| 2005년 | 2004년 말 정원(A) | 30 | 24 | 129 | 114 |
| | 예산편성인원(B) | 30 | 32 | 126 | 116 |
| |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 0 | 8 | -3 | 2 |
| 2006년 | 2005년 말 정원(A) | 28 | 24 | 120 | 100 |
| | 예산편성인원(B) | 30 | 35 | 123 | 110 |
| |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 2 | 11 | 3 | 10 |
| 2007년 | 2006년 말 정원(A) | 28 | 26 | 124 | 101 |
| | 예산편성인원(B) | 29 | 40 | 133 | 110 |
| |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 1 | 14 | 9 | 9 |
| 2008년 | 2007년 말 정원(A) | 28 | 26 | 125 | 104 |
| | 예산편성인원(B) | 29 | 45 | 133 | 111 |
| | 정원과 예산편성인원 차이(B-A) | 1 | 19 | 8 | 7 |

주: 1) 팀장J로 승진한 자에게 승진한 해에는 팀장 직무급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팀장J 직무급을 실제 지급한 인원은 정원 및 예산편성인원보다 적음

2)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인건비 예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심사·승인은 개별적인 인건비 산출근거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자연증가율, 인력감축 및 임원보수체계 개편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의 2008년도 인건비 예산 총액을 조정하여 이루어짐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직위별 정원 현황 제출자료 분석

[별표 4]

심사대상 선정사유별 국·실장 및 팀장 보임해지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심사대상 선정사유 | 2006년 | | 2007년 | | 2008년 | | 2009년 | |
|------|--------------|-------|------|-------|------|-------|----|-------|------|
| | | 심사대상 | 보임해지 | 심사대상 | 보임해지 | 심사대상 | 해지 | 심사대상 | 보임해지 |
| 국·실장 | 연 령 | 6 | 6 | 11 | 11 | 14 | 13 | 18 | 17 |
| | 보임기간 | 5 | 2 | 4 | 3 | 3 | 1 | 2 | 0 |
| | 기 타 | | | 1 | 1 | | | | |
| 팀 장 | 연 령 | 2 | 2 | 18 | 18 | 9 | 8 | 13 | 13 |
| | 성과저조 | 14 | 5 | 21 | 4 | 19 | 2 | 5 | 4 |
| | 기 타 | 3 | 3 | 1 | 0 | 1 | 1 | | |

자료: 금융감독원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인건비 과다편성·집행 및 특별상여금 제도 운영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금융감독원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1. 인건비 과다 편성 및 집행

금융감독원의 예산은 민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감독분담금(2009년도 수입 예산의 73.5%)이 주된 재원이므로, 민간 금융회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특히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현원¹⁾ 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인원과 단가를 산정함으로써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보수를

1) ① 국책금융기관의 경우 전년 말 현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전년 말 정원을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되 정원과 현원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계상하여 채용에 따른 실소요액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인건비 인상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③ 정부의 경우 정원에 (1-결원율)을 곱해 인건비 예산을 산정하여 정원과 현원의 차이인 결원율을 인건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음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별표 1] “연도별 예산 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와 같이 매년 예산편성인원을 전년도 현원보다 최소 26명에서 최대 68명까지 더 많이 산정하고, 인건비 지급단가도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와 같이 실제보다 부풀려 산정함으로써, 2002년 이후 매년 기본급(연공제 직원의 경우 기준봉급)을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과 같이 최소 1,753백만 원에서 최대 4,751백만 원까지 과다하게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기본급(기준봉급)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평가급, 수당, 상여금 등 다른 보수지급항목도 함께 과다 편성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매년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자, 위 기관에서 2002년에 전년도 특별상여금 지급분(기본급의 150%) 중 일부(기본급의 100%)를 기본급에 통합하여 기본급화²⁾하고서도 다시 인건비 집행잔액 3,869백만 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등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과 같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총 14,224백만 원을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위와 같이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편성인원과 단가를 과다 산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는데도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고, 금융감독원에서 그 집행잔액으로 예산에서 정한 이상으로

2) 기본급에 통합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기본급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수당 및 상여금 등도 함께 증가

직원 보수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2. 특별상여금 정액 지급

금융감독원에서 「급여규정」 제32조 제4항 및 제42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인센티브 상여금 성격의 특별상여금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임직원의 경영 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비록 공공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다른 공공기관³⁾의 경우에 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그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기관 전체의 특별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특별상여금 제도가 업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명세”와 같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특별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2005년부터 지급시기를 3차례로 나누어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기준봉급(1개월)의 50%씩 기준봉급의 100%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기준봉급의 50%를 차등 지급하고 있었다⁴⁾.

이에 대해, 2007년 감사원에서 특별상여금을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직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이 결정되며, 각 기관에서는 이와 같이 결정된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액을 다시 임직원의 업무실적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

4) 집행간부, 사무서무직원, 해외근무직원에 대해서는 연말에도 정액으로 지급하였고, 연봉제 직원에 대해서는 위 연공제 직원의 경우와 유사하게 근로자의 날과 추석에 연봉의 1/36씩 총 2/36를 정액 지급하고 연말에만 연봉의 1/36을 차등지급

업무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위 기관에서는 2007년 이후에도 연말에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차등 지급 폭만을 일부 확대⁵⁾한 채 근로자의 날 및 추석에는 특별상여금을 여전히 정액 지급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성과 향상의 동기부여 목적으로 도입한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 지급률 결정 등의 성과평가 요소 없이 정기상여금처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데도 이를 시정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 ① 앞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인원 및 지급단가 등을 실제보다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인건비를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인건비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를 부당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② 특별상여금을 임직원의 경영실적 및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5) 연공제 직원의 경우 2006년 기준봉급의 50%±6% → 2007년 100%±6% → 2008년 150%±6%로 확대

[별표 1]

연도별 예산편성인원 과다산정 명세

(단위: 명)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전년 말 총현원주)(A) | 1,476 | 1,544 | 1,613 | 1,654 | 1,653 | 1,686 | 1,693 |
| 예산편성 인원(B) | 1,523 | 1,612 | 1,675 | 1,680 | 1,690 | 1,738 | 1,740 |
| 실제 보수지급 인원(C) | 1,524 | 1,598 | 1,660 | 1,661 | 1,667 | 1,684 | 1,692 |
| 총현원대비 차이(B-A) | 47 | 68 | 62 | 26 | 37 | 52 | 47 |
| 실제인원대비 차이(B-C) | -1 | 14 | 15 | 19 | 23 | 54 | 48 |

주) 총 현원은 연수·파견 인력 등 정원 외 인력을 포함한 숫자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2]

연도별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의 차이 명세

가. 연봉제 직원의 기본급 지급단가(1년 기준)

(금액단위: 천 원)

| 구 분 |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
| '02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44,016 | 40,025 | 30,515 | 24,851 | 18,202 |
| | 실제 지급단가(B) | 43,751.40 | 39,241.44 | 28,863.12 | 25,548.72 | 17,566.20 |
| | 차이(A-B) | 264.60 | 783.56 | 1,651.88 | -697.72 | 635.80 |
| '03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45,391 | 41,108 | 29,914 | 27,339 | 19,436 |
| | 실제 지급단가(B) | 44,994.84 | 40,556.64 | 28,639.92 | 28,483.92 | 19,414.44 |
| | 차이(A-B) | 396.16 | 551.36 | 1,274.08 | -1,144.92 | 21.56 |
| '04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48,638 | 43,825 | 38,022 | 30,489 | 0 |
| | 실제 지급단가(B) | 47,590.92 | 43,325.76 | 37,367.64 | 29,675.64 | 0.00 |
| | 차이(A-B) | 1,047.08 | 499.24 | 654.36 | 813.36 | 0.00 |
| '05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49,136.40 | 44,711.30 | 38,584.20 | 31,274.80 | 0.00 |
| | 실제 지급단가(B) | 48,664.44 | 44,457.36 | 38,505.24 | 30,907.08 | 0.00 |
| | 차이(A-B) | 471.96 | 253.94 | 78.96 | 367.72 | 0.00 |
| '06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0,072 | 45,899 | 39,818 | 32,119 | 0 |
| | 실제 지급단가(B) | 49,484.04 | 45,575.04 | 39,652.08 | 31,972.92 | 0.00 |
| | 차이(A-B) | 587.96 | 323.96 | 165.92 | 146.08 | 0.00 |
| '07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1,555 | 47,539 | 41,411 | 33,428 | 0 |
| | 실제 지급단가(B) | 50,838.84 | 47,219.16 | 41,039.04 | 33,045.00 | 0.00 |
| | 차이(A-B) | 716.16 | 319.84 | 371.96 | 383.00 | 0.00 |
| '08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1,603 | 47,826 | 41,683 | 31,947 | 0 |
| | 실제 지급단가(B) | 52,075.92 | 48,326.52 | 41,893.56 | 33,359.40 | 0.00 |
| | 차이(A-B) | -472.92 | -500.52 | -210.56 | -1,412.40 | 0.00 |

주: 1) 실제 지급단가는 각 직급 월 평균 지급단가에 12를 곱해 1년 기준으로 작성(이하 같음)

2) 실제 지급단가는 별도로 편성된 당해 연도 임금인상분, 예산에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이하 같음)

3) 2008년에 예산상 지급단가보다 실제 지급단가가 높은 것은 2007년에 예산상 인건비 동결방침과 달리 인건비를 2% 인상한 부분이 2008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반영되지 않아 예산상 지급단가는 2% 인상이 되지 않은 단가로 편성이 되고, 2008년에 실제로는 지급은 2% 인상된 단가로 지급되었기 때문임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이하 같음)

나. 연공제 국내직원의 기준봉급 지급단가(1개월 기준)

(금액단위: 천 원)

| 구 분 | | 2급 | 3급 | 4급 | 5급 | 사무직원 | 서무직원 |
|------|-------------|-----------|----------|----------|----------|----------|----------|
| '02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3,090 | 2,845 | 2,247 | 1,661 | 1,255 | 1,553 |
| | 실제 지급단가(B) | 3,013.19 | 2,761.07 | 2,108.71 | 1,538.79 | 1,216.06 | 1,541.55 |
| | 차이(A-B) | 76.81 | 83.93 | 138.29 | 122.21 | 38.94 | 11.45 |
| '03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3,293.3 | 3,136.6 | 2,393.7 | 1,754.4 | 1,378.9 | 1,683.4 |
| | 실제 지급단가(B) | 3,268.12 | 2,965.82 | 2,288.32 | 1,629.60 | 1,340.46 | 1,669.99 |
| | 차이(A-B) | 25.18 | 170.78 | 105.38 | 124.80 | 38.44 | 13.41 |
| '04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0 | 4,315 | 3,351 | 2,432 | 1,914 | 2,372 |
| | 실제 지급단가(B) | 4,574.58 | 4,122.57 | 3,182.88 | 2,248.63 | 1,730.11 | 2,285.61 |
| | 차이(A-B) | -4,574.58 | 192.43 | 168.12 | 183.37 | 183.89 | 86.39 |
| '05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203 | 4,618 | 3,586 | 2,655 | 2,182 | 2,596 |
| | 실제 지급단가(B) | 4,888.87 | 4,441.63 | 3,403.66 | 2,448.41 | 1,931.18 | 2,476.60 |
| | 차이(A-B) | 314.13 | 176.37 | 182.34 | 206.59 | 250.82 | 119.40 |
| '06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236 | 4,711 | 3,658 | 2,749 | 2,160 | 2,684 |
| | 실제 지급단가(B) | 5,054.25 | 4,498.97 | 3,458.56 | 2,529.27 | 2,036.72 | 2,561.40 |
| | 차이(A-B) | 181.75 | 212.03 | 199.44 | 219.73 | 123.28 | 122.60 |
| '07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468 | 4,710 | 3,699 | 2,771 | 2,284 | 2,800 |
| | 실제 지급단가(B) | 5,194.79 | 4,641.32 | 3,543.32 | 2,624.07 | 2,166.63 | 2,681.09 |
| | 차이(A-B) | 273.21 | 68.68 | 155.68 | 146.93 | 117.37 | 118.91 |
| '08년 | 예산상 지급단가(A) | 5,394 | 4,853 | 3,699 | 2,826 | 2,226 | 2,844 |
| | 실제 지급단가(B) | 5,085.93 | 4,793.48 | 3,627.51 | 2,665.59 | 2,228.47 | 2,761.31 |
| | 차이(A-B) | 308.07 | 59.52 | 71.49 | 160.41 | -2.47 | 82.69 |

주) 임원의 기본급과 해외직원의 기준봉급은 그 지급단가가 「급여규정」에 정해져 있어 예산상 지급단가와 실제 지급단가 간 차이 분석대상에서 제외

[별표 3]

연봉제 및 연공제 직원의 기본급(기준봉급) 과다편성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
| 기본급(연봉제) | 602 | 715 | 882 | 1,286 | 641 | 1,006 | 380 |
| 기준봉급(연공제) | 1,151 | 2,236 | 2,743 | 2,462 | 3,879 | 3,745 | 3,183 |
| 합계 | 1,753 | 2,951 | 3,625 | 3,748 | 4,520 | 4,751 | 3,563 |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4]

인건비 집행잔액 사용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 구 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합계 |
|----------|-------|-------|-------|-------|-------|-------|-------|--------|
| 추가 보수인상 | - | - | - | 2,325 | - | 2,741 | - | 5,066 |
| 특별상여금 지급 | 3,869 | 4,572 | - | - | - | - | 717 | 9,158 |
| 합 계 | 3,869 | 4,572 | - | 2,325 | - | 2,741 | 717 | 14,224 |

주)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거나, 예산보다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한 경우만을 집계한 것으로 보수 및 특별상여금 예산 자체를 전년보다 과도하게 인상하여 편성한 부분은 제외

자료: 금융감독원 예산 산출근거 및 인건비 지급 전산자료 분석결과

[별표 5]

연도별 특별상여금 지급 명세

(금액단위: 천 원)

| 지급일자 | 차등 여부 | 집행간부 | 연봉제 직원 | 연공제 직원 | 해외근무직원 | 계 |
|---------------|--------------|-----------|------------|------------|---------|------------|
| 1999. 12. 29. | 정액 지급 | 19,901 | 231,314 | 2,509,225 | 0 | 2,760,440 |
| 2001. 9. 28. | 정액 지급 | 0 | 297,836 | 1,079,545 | 0 | 1,377,381 |
| 2001. 12. 28. | 정액 지급 | 0 | 0 | 2,351,162 | 0 | 2,351,162 |
| 2002. 9. 16. | 정액 지급 | 0 | 385,387 | 1,472,376 | 0 | 1,857,763 |
| 2002. 12. 27. | 정액 지급 | 29,998 | 403,596 | 1,577,395 | 0 | 2,010,989 |
| 2003. 12. 31. | 정액 지급 | 63,894 | 913,702 | 3,537,104 | 57,373 | 4,572,073 |
| 2004. 9. 23. | 정액 지급 | 44,999 | 805,296 | 1,982,392 | 29,165 | 2,861,852 |
| 2004. 12. 31. | 정액 지급 | 46,111 | 838,913 | 2,100,475 | 33,247 | 3,018,746 |
| 2005. 4. 29. | 정액 지급 | 52,717 | 900,970 | 2,123,563 | 30,454 | 3,107,704 |
| 2005. 9. 15. | 정액 지급 | 52,717 | 871,302 | 2,145,314 | 34,120 | 3,103,453 |
| 2005. 12. 30. | 차등 지급 | 52,717 | 870,906 | 2,206,461 | 30,726 | 3,160,810 |
| 2006. 4. 28. | 정액 지급 | 72,826 | 939,273 | 2,189,135 | 28,758 | 3,229,992 |
| 2006. 10. 2. | 정액 지급 | 79,076 | 904,020 | 2,247,892 | 31,814 | 3,262,802 |
| 2006. 12. 29. | 차등 지급 | 84,057 | 914,972 | 2,334,207 | 32,770 | 3,366,006 |
| 2007. 4. 30. | 정액 지급 | 86,666 | 1,024,624 | 2,282,670 | 31,946 | 3,425,906 |
| 2007. 9. 20. | 정액 지급 | 86,666 | 973,933 | 2,301,517 | 31,946 | 3,394,062 |
| 2007. 12. 31. | 차등 지급 | 94,999 | 959,600 | 2,331,720 | 33,500 | 3,419,819 |
| 2008. 4. 30. | 정액 지급 | 88,958 | 1,080,305 | 2,314,518 | 29,168 | 3,512,949 |
| 2008. 9. 11. | 정액 지급 | 95,624 | 1,031,957 | 2,323,530 | 32,405 | 3,483,516 |
| 2008. 12. 31. | 차등 지급 | 95,624 | 1,025,788 | 2,364,728 | 30,571 | 3,516,711 |
| 2008. 12. 31. | 3급이하 정액지급 | 0 | 80,087 | 631,026 | 5,562 | 716,675 |
| 2009. 4. 30. | 정액 지급 | 0 | 1,088,678 | 2,285,798 | 36,340 | 3,410,816 |
| 합 계 | | 1,147,550 | 16,542,459 | 46,691,753 | 539,865 | 64,921,627 |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 주식회사의 금융투자업 인가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금융감독원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 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이라 한다)가 2008. 10. 2. 금융투자업(증권중개업)의 인가를 신청하자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위탁한 후, 심사안을 검토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12조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2008-25호)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의 인가 심사를 할 때에는 신청인이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하여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와 그 임원이 경영의 건전성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이 이번 금융투자업 인가 신청 전인 2008. 2. 29.에 증권 위탁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가칭)□□□□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설립하고자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 등 9개 대부업자의

311개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수탁한 행위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사전심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5. 7. “◆◆◆◆이 대부업체의 선물·옵션 계좌 대여행위임을 알고도 불건전 매매주문을 수탁한 것은 증권업의 건전영위를 곤란하게 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¹⁾

따라서 ◆◆◆◆에서 불과 5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 2. 『자본시장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미 인가받은 ◆◆◆◆에 증권중개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가 신청하였으므로 위 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 부의안건을 작성할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었음을 명시하여야 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부의안건을 검토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감독원에서는 ◆◆◆◆이 대부업체의 대여계좌를 이용하여 매매주문을 수탁한 데 대하여 같은 해 7. 24. 위 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으나 ‘기관주의’는 금융감독원의 내부기준상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누락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2009. 1. 20. 부의안건을 작성하였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를 그대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부의하였다.

그 결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1. 21.과 같은 해 1.

1) ◆◆◆◆에서 금융위원회 최종의결 하루 전인 2008. 5. 8.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함

28. ◆◆◆◆에 대하여 위 심사안건대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증권중개업을 인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심사안건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를 소홀히 하여 증권업을 건전하게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 업체에 증권중개업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투자업 인가 관련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지도·감독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1997. 7. 3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를 수집·보관하여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용정보업자 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하도록 하는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전국은행연합회¹⁾를 등록 조치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과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위 연합회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위 위원회는 위 연합회에 집중되는 정보는 각 금융기관 및 감독기관과 회계법인 등에서 여신심사, 여신 건전성 감독, 회계감사 등에 폭넓게 이용되므로 신용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적시에 반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특히, 위 연합회가 2008. 10. 20.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실시한 일제 정비 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 1]과 같이 위 연합회에 등록된 연체 정보 1,000만

1)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및 지방은행을 정사원으로 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준사원으로 하여 구성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위 법에 따라 7천여 개의 금융기관, 공공기관, 각종 신용정보회사 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여 정책당국의 정책 수립 및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활용토록 하고 있음.

여 건의 1.88%에 해당하는 188,903건이 오류가 있거나 누락되어 일제정비를 통하여 수정되는 등 오류 및 누락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 금융기관이 신용정보를 바로 등록 또는 해지하도록 더욱 철저히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전국은행연합회 일제정비 결과

| 구 분 | 연체 정보 | 개인대출 정보 | 개인채무보증 정보 |
|----------|-----------|-----------|-----------|
| 전체 등록 건수 | 1,000만여 건 | 3,200만여 명 | 410만여 명 |
| 정비 대상 건수 | 188,903건 | 776,834명 | 22,522명 |
| 비 율(%) | 1.88 | 2.42 | 0.54 |

자료: 전국은행연합회 자료 재구성

그러나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신용정보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협의회 안전을 보고받거나 2007. 7. 12.부터 같은 해 7. 16.까지 4일간 금융감독원을 통해 위탁검사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지도·감독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특히 위 위원회에서는 위 연합회로부터 위와 같이 일제정비²⁾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결과의 적정 여부를 파악하거나 정비상태를 표본 점검하는 등 적절하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2009. 7. 2.부터 같은 해 7. 8.까지 감사원 감사 시 위 일제 정비 후 6개월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변동 사항을 통보한 실적을 조사³⁾한 결과, [표 2]와 같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위 연합회에 연체 정보가 있는 자로 등록된 100명이 분할 상환 등으로

2)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2003. 2. 24.부터 같은 해 3. 14.까지 일제 정비 작업을 한 지 5년이 지난 2008년 에 다시 실시.

3)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7,000여 개의 기관 중 특정 기관에 대하여 조사.

「신용정보 관리규약」(2009. 6. 12.)에 따른 신용정보 등록해제 대상자인데도 위 연합회에 신용정보 해제를 요청하지 않아 해제 사유 발생일로부터 2009. 6. 30. 현재까지 짧게는 62일 길게는 1,586일간 연체 등록되어 있는 등 두 기관에서 443명이 짧게는 11일에서 길게는 1,586일간 신용정보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연체 등록 또는 해제되지 않고 있다.

[표 2] 신용정보 변동 미반영 현황

(단위: 명)

| 구 분 | 연체 정보 등록 | | 연체 정보 해제 | |
|----------|-------------------|-------|----------|-------|
| | 대상자 ⁴⁾ | 미 등록자 | 대상자 | 미 해제자 |
| 한국주택금융공사 | 107,502 | - | 33,783 | 100 |
| 한국자산관리공사 | 4,654 | 238 | 25,969 | 96 |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료 재구성

그 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처 신용정보 등록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연체등록자 100명 중 카드 발급을 신청한 5명 모두 위 연합회의 연체등록자라는 사유로 신용카드 발급이 거절되었고 2명은 카드 사용이 중지된 후 해제되지 않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되지 않아 신용정보 제공자의 경제 활동이 제약받고 있다.

그 외에도 연체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대상자는 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및 보증을 취급하면서 잘못된 신용정보를 기초로 이들에게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채권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전국은행연합회와 각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정보 변동사항 관리를 게을리하여 신용양호자가 피해를 입거나 신용불량자에게 신용이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신용정보 관리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4) 대상자는 2006년부터 연체 등록이나 해제 사실을 위 연합회에 통보해 준 건수를 집계한 것임.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금융법규 관련 유권해석사례 공개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2007. 6. 4. 감독행정을 체계적·단계적으로 규범화하고자 관계 부처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 회의를 거쳐 확정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2007. 6. 8. 언론 보도)에 따라 금융법규와 관련된 유권해석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 중 “금융감독 법규의 적법성·투명성 확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관련 법규의 유권해석 및 실무해석사례가 공유 또는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관련 기관의 법규 해석사례를 공유하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2008. 3. 3. 출범 이후, 같은 해 7월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개통하면서 그간 민원에 회신하는 형태로 질의 당사자에게만 통보하여 오던 유권해석사례를 같은 해 7. 1.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 홈페이지인 “e-금융민원센터”에 공개하기 시작하였다.

금융위원회에서 유권해석사례를 공개할 때에는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 방안”의 취지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비밀 보호 등 공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급적 신속하게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그 전신인 구 금융감독위원회와 구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과 관련된 유권해석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당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러나 같은 해 3. 3. 금융위원회 출범 당시부터 2009. 6. 30.까지의 유권해석사례의 공개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공개가 가능한 유권해석사례 총 326건 중에서 82건만 공개하고 나머지 244건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¹⁾

[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공개 현황(2009. 6. 30. 현재)

(단위: 건, %)

| | 접수건수 | 완료건수 (A) | 비공개사유 ²⁾ 해당건수 (B) | 공개건수 (C) | 미공개 건수 (A-B-C) | 공개 비율 [C/(A-B)] |
|-----------|------|-------------|---------------------------------|-------------|-------------------|--------------------|
| 2008년 | 259 | 257 | 74 | 80 | 103 | 25.2% |
| 2009년 상반기 | 298 | 226 | 83 | 2 | 141 | 1.4% |
| 합 계 | 557 | 483 | 157 | 82 | 244 | 25.2% |

자료: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위 홈페이지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 시절의 유권해석사례 총 134건(2006년도 회신 60건, 2007년도 회신 74건)만 등록하였을 뿐 현재까지도 전체 유권해석사례 현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위원회 출범 이전에 구 재정경제부와 구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회신한 유권해석사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그 결과 위 유권해석사례 공개제도가 금융정책의 일관성·투명성 확보라는

1) 따라서 유권해석사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위 홈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없어 시중에서 책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2) 동일·유사 내용, 신청인 철회, 유선 답변, 회신 후 법령 개정, 단순 법령안내 등

애초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금융감독규범 제도화 추진방안”에 따라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유권해석사례를 가능한 한 빨리 공개하는 등 유권해석사례 공개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파견 인력 운용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 외 기관 또는 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한다)로부터 인력을 파견받거나 소속 공무원을 국가기관으로 파견하고 있다.

위 위원회에서는 2008. 2. 29.부터 2009. 6. 30. 현재까지 민간기관으로부터 총 73명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게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제1항에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 임용령」 제41조, 제41조의2 및 「공무원 임용규칙」(2008.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196호) 제42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는 때에는 미리 파

견 받을 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민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고자 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민간전문가가 소속된 민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 발령하고 파견목적 및 심의결과 등을 첨부하여 민간전문가의 파견사실을 파견 후 1주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 소속 공무원을 다른 국가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고 파견 전에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면밀하게 심의·검토함으로써 제도에 맞지 않거나 절차를 위반하여 제도가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 민간전문가로 파견 받은 직원을 비서로 활용

그러나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17. 민간전문가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08. 3. 21.부터 위 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고 있는 ●●●●공사 산하 ○○○○공사 계약직 ○○○은 위 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구조개선과에서 ●●●●공사에 위 사람을 공적자금 업무 관련 민간전문가로 파견 요청을 하여 같은 해 4. 21.부터 2010년 3월¹⁾까지 같은 과에 인사 발령을 내고도 실제로는 2008. 3. 21.부터 2009. 5. 31.까지 위 위원회 △△△△에 비서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사람과 금융불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로 파견받은 ○○○○공사 ◎◎◎◎²⁾을 파견 사유와 다르게 비서로 근무하게 하고 있었다.³⁾

1) 위 두 사람을 대상으로 2008. 4. 21.부터 2009. 4. 20.까지 파견 요청을 하여 파견 근무토록 하고 이후 2009. 3. 20. ●●●●공사에 파견기간 연장 협조요청을 하여 1년간 파견 기간을 연장.

2) ◎◎◎◎은 2008. 3. 21.부터 2009. 6. 3.까지 △△△△△△, 같은 위원회 □□□□□□, 증권선물위원회 □□□□□□ 비서로 근무하였고 ◎◎◎◎과 ○○○은 감사원 예비조사(2009. 5. 28.) 이후에 각각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3) ◎◎◎◎은 은행과에서 은행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업무 지원에 위 사람이 필요하고 부보금융기관의 경영분석 및 금융권별 리스크 관리 등 관련 업무에 대한 경험이 많아 지원업무에 적임자로 선정하였다고 사실과 다른 문서를

또한, 위 위원회 혁신행정과(현 행정인사과)에서는 행정안전부에 민간전문가 파견사실을 통보하면서 ○○○은 공적자금과 관련된 업무 등에서 민간전문가의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파견받은 것이며 ●●●●공사에서 부보금융권별 보험료 납부를 통한 목표기금규모 설정 등 예금보험제도 연구, 정리금융공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는 등 해당 분야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는 위 두 사람⁴⁾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 것처럼 파견목적과 원 소속기관 담당업무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2.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민간전문가 파견

한편 감사원 감사 기간 중인 2009. 7. 6. 위 위원회에서 제출한 민간전문가 파견 현황과 실제 근무 인력을 비교해 본 결과,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견 명세”와 같이 위 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의 사유로 직무파견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도 파견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 직원 ◆◆◆ 등 2명을 2009. 2. 17. 및 같은 해 3. 23.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각각 근무하도록 하는 등 위 위원회 3개 과에서 민간전문가 4명⁵⁾을 위와 같이 심의절차나 통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같은 해 2. 17.부터 같은 해 7. 2. 현재까지 짧게는 54일에서 길게는 136일 동안 파견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기안 작성하여 2008. 4. 11. 혁신행정과에 관련 문서 송부.

4) ○○○은 금융 불공정거래 감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파견받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업무와 금융기관 상시 감시 업무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였으나 위 두 사람은 ●●●●공사에서 비서나 서무 업무 등의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외부 용역회사와 계약하여 근무토록 하다가 금융위원회에 파견하기 위하여 정리금융공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한 인력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해당 분야에 전혀 경험 및 전문지식이 없음.

5) 이 중 자본시장과에 근무한 ◆◆◆ 등 3명은 감사원 예비조사 실시(2009. 5. 28.) 이후인 2009. 7. 2.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

[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수건 명세

| 구 분 | 생 략 | 생 략 | 생 략 | 생 략 |
|-----------|--------------|--------------|--------------|--------------|
| 소속 및 직위 | ◇◇◇◇ 대리 | ◇◇◇◇ 대리 | ■■■■ 과장 | ◇◇◇◇ 대리 |
| 실제파견 근무일 | 2009. 2. 17. | 2009. 2. 17. | 2009. 3. 22. | 2009. 5. 10. |
| 근무 부서명 | 자본시장과 | 자본시장과 | 자산운용과 | 공정시장과 |
| 파견종료일(실제) | 2009. 7. 2. | 2009. 7. 2. | 2009. 5. 22. | 2009. 7. 2.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3. 전문성 없는 업무에 민간전문가 파견 운용

한편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는 국회 대응 등의 목적으로 업무가 과중하다는 사유를 들어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사 소속 ◆◆◆ 등 2명을 파견 받아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국회대응자료 작성 및 지원에 활용하는 등 민간전문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1항”과 “3항”의 내용과 같이 민간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부서에서도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아 위 위원회 직원처럼 운용하는 등 위 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등 일부 부서에서는 관행적으로 금융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민간전문가라는 명목으로 파견받아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외에도 위 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2008. 9. 23. 부터 2009. 6. 10.까지 약 9개월간 소속 공무원 1명을 업무상 필요하다는 사유로 국회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민간전문가 파견 목적에 맞지 않는 업무에 민간전문가를 근무시키거나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0.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 1·2.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주의·시정)
3.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주의)
4.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주의)
5.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 관점에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고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였는지 여

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및 출처 등에 의하여 검증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0. 3. 15.부터 같은 해 3. 19.까지(5일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0. 4. 2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2009. 12. 31. 현재)

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금융감독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그림 1]과 같이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 당연직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

* 당연직 :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소속하에 설치되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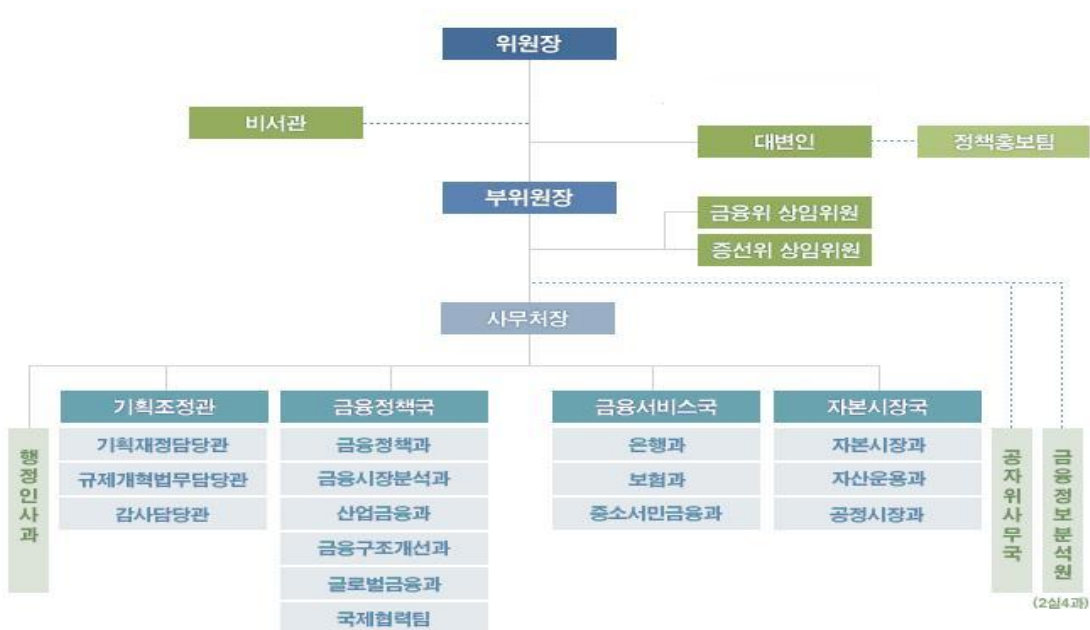
조사, 기업회계기준·감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

다. (사무처) 본부에 1관 3국 1대변인 15과 2팀, 소속기관으로 금융정보분석원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설치

[그림 1] 조직 현황



자료: 금융위원회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 계 | | 정무직 | | 별정직 | | 일반직 | | 연구직 | | 계약직 | | 기능직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계 | 230 | 220 | 2 | 2 | 4 | 4 | 200 | 190 | 1 | 1 | 11 | 11 | 12 | 12 |
| 본 부 | 164 | 161 | 2 | 2 | 4 | 4 | 137 | 134 | 1 | 1 | 9 | 9 | 11 | 11 |
| 소속기관 | 66 | 59 | 0 | 0 | 0 | 0 | 63 | 56 | 0 | 0 | 2 | 2 | 1 | 1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함.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6,811억 원(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기금 55조 8,766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0.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소기업·서민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2조 7,000억 원(한국산업은행 9,000억 원, 중소기업은행 8,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 6,0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4,000억 원)을 출자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 회 계 구 분 | | '09세출예산 | '08세출예산 | 증감률 |
|---------|-----------------------|---------|---------|-------|
| 총 계 | | 586,811 | 424,263 | 38.3 |
| 일 반 회 계 | | 28,868 | 3,037 | 850.5 |
| 기금 | 소 계 (관리주체) | 558,766 | 421,457 | 32.5 |
| |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 | 110,362 | 89,972 | 22.6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 | 1,560 | 1,721 | △9.3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57,909 | 30,743 | 88.3 |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24,595 | 16,030 | 53.4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 20,912 | 13,250 | 57.8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11,168 | 9,757 | 14.4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 117,819 | 170,412 | △30.8 |
| |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 12,085 | 89,567 | △86.5 |
| |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 202,352 | - | -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2조 8,868억 원 중 [표 3]과 같이 위 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2조 7,719억 원, 회계기금 간 거래 822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집행금액은 327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5억 원으로 전체의 68.8%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는 102억 원)한다.

[표 3]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부 집행 현황

(금액단위: 억 원)

| 일반회계 | 28,868 |
|--|-----------------------------|
| 인건비 | 139 |
| 기본경비* | 86 |
|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출자 27,0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0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39 - 역모기지론 출연 30 | 27,820 (좌측 금액 합은 27,719) |
|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786 - IBRD차관 원금상환 31 - IBRD차관 이자상환 5 | 822 |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만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09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가. 임무(Mission) 및 비전(Vision)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Mission)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을 비전(Vision)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12개의 성과목표, 45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3개와 64개, 계 77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의·시정요구

제 목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 관리·감독 및 시행 부적정

소 관 청 ① 금융위원회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관 계 기 관 ① 금융위원회 본부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2005. 8. 31.)과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방안」(2007. 1. 31.)에 근거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11월 저소득·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리우대 모기지론으로 10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상품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개발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위탁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년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내용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부부합산 연소득 20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300백만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85m²)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실제 대출은 개별 은행에서 취급)해 주면서 소득구간별로 금리를 차별인하(0.5~1.0%p)⁶⁾하여 2005년 11월부터 2009년 12월 말 현재까지 6,871명에게 4,766백만 원을 이차보전 하였다.

6) 16백만 원 이하: 1.0%p 인하, 18백만 원 이하: 0.75%p 인하, 20백만 원 이하: 0.5%p 인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한국주택금융공사 지침)에 따르면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주택전산망 전산자료를 조회⁷⁾하여 대출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대출실행 전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적으로 다주택 소유 여부를 재확인하며 대출실행 시 1주택 초과 보유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출실행 후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출자와 약정한 「추가약정서」에도 “대출 실행일 이후에도 본인 또는 세대원의 전부 내지 일부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1주택 이하인 상태로 유지할 것을 약속하며,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곧 변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자와 세대원의 다주택 소유 여부를 2005년 11월 상품 출시 이후 사후적으로 한번도 검증하지 않았으며, 금융위원회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게다가 위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및 「추가약정서」에는 사후적으로 다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대출금을 회수한다고 되어 있을 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2010년 3월 감사원에서 대출자와 그 배우자의 다주택 소유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취급 금융기관의 부주의로 주택 소유자에게 대출한 ‘취급기준 위반’ 사례가 3건(대출잔액 200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3백만 원), 대출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4조에 따르면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의 공공단체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

취급 시에는 무주택이었으나 대출 후 주택 추가구입 등으로 사후적으로 다주택이 된 ‘사후적 자격 상실’ 사례가 31건(대출잔액 1,552백만 원, 부당 이차보전금 26백만 원)으로 다주택 소유자 총 34명에게 대출잔액 1,752,151,844원, 부당 이차보전금 29,131,935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⁸⁾

[표] 대출 부적격자 다주택 소유 현황

(단위: 명, 건, 원)

| 구 분 | 부적격 대출자 수 | 발견 주택수 | 부적격 대출잔액 | 부당 이차보전금 |
|-----------------------------------|-----------|-----------|---------------|--------------------------|
| 취급기준 위반 ¹⁾ | 3 | 6 | 200,072,054 | 2,939,440 |
| 사후적 자격 상실 ²⁾ (3주택자) | 31 (3) | 65 (9) | 1,552,079,790 | 26,192,495 ³⁾ |
| 계 | 34 | 71 | 1,752,151,844 | 29,131,935 |

주: 1. 주택소유자에게 대출실행

2. 세대별 1주택 사후유지 요건 위반(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 주택 추가 구입 21명)

3. 결혼으로 인한 주택취득 10명은 결혼일자를 알 수 없어 부당 이차보전금이 정확히 계산되지 않음

자료: 한국주택금융공사

특히 34명 중 3명은 금리우대 모기지론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후 추가로 2채 더 취득하는 등 주택 총 3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산광역시 *** ** OO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던 OOO의 경우 2008. 5. 7. 위 주택을 지인에게 증여하여 2008. 5. 8.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은 후 2008. 6. 20. 증여를 해제⁹⁾하는 등 사기성 대출 사례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8) 한편 대출자의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57건, 대출잔액 3,638백만 원으로 나타나 위 직계 존비속이 대출자의 동일 세대원인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따라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주의] 앞으로 다주택 소유자에게 금리우대 모기지론 이차보전 예산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시정] ①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의 '취급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3건의 대출금 200,072,050원을 회수하고 이차보전금 2,939,440원을 환수하여 국고에 반납하는 한편, '사후적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31건의 대출금 1,552,079,790원을 회수하고

② 앞으로 '사후적 자격 상실' 건에 부당 지원된 이차보전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저소득·무주택자 금리우대 모기지론 업무처리기준」, 대출자와의 「추가약정서」 작성 업무를 철저히 하고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09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12개)-관리과제(4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위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7개의 성과지표(성과목표 성과지표 13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64개)를 설정하고 각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13개 성과목표의 성과지표 중 10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 55개의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표 1]과 같이 4개 전략목표의 달성률은 전체적으로 84% 수준이다.

[표 1] 전략목표 달성현황

| 전 략 목 표 | 사업규모(억 원) | 성과지표 실적 (달성지표/전체지표, 달성률) |
|---|-----------|-----------------------------|
| I.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 33,667 | 17/17 (100%) |
|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 23.1 | 15/19 (79%) |
|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 52.8 | 13/16 (81%) |
|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 4,709.5 | 20/25 (80%) |
| 총 계 | 38,452.4 | 65/77 (84%)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0. 3. 15.~3. 19.) 중 위 13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64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77개 성과지표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법 개정 여부”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위 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관리과제에 대한 성과지표 및 목표치 64개 중 14%인 9개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이들 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가 국회 심의·통과 등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등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표 2] 외부요인에 많이 의존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현황

| 관리과제 | 성과지표 | 목표치 |
|-----------------------------------|-------------------------|------------|
|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능력 강화 (Ⅰ-3-정책②) | RBC제도 시행 | 관련 법규 개정 |
| 권역별 법령 정비작업 추진 (Ⅱ-1-정책①) | 은행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금융상품 판매체계 개편 (Ⅱ-1-정책②) | (가칭)금융상품판매법 제정 | 법 제정 |
| 보험회사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Ⅱ-1-정책③)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회계·공시제도 개선 (Ⅲ-1-정책①) | 국제회계기준 관련 시행령 및 규정개정 | 시행령 및 규정개정 |
| 불완전판매 재발방지 추진 (Ⅳ-2-정책①) |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시행령 개정 |
| 파생금융상품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 (Ⅳ-2-정책②) | 관련 법령 개정 | 법령 개정 |
| 금융회사 내부통제 및 KPI 제도개선 (Ⅳ-2-정책③) | 내부통제개선 | 법 |
| 헤지펀드 도입 (Ⅳ-3-정책②) | 헤지펀드제도 도입 여부 | 시행령 개정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② 예산액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Ⅳ-2-재정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
 (성과지표) 기금출연실적(측정방법: 기금출연액, 목표치: 650억 원)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및 저축장려금 지급”의 성과지표를 ‘기금출연실적’, 목표치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금 예산액 ‘650억 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기금은 한국은행이 위탁관리하고 있고, 위 관서에서는 매년 전년도에 기확정된 예산액 전액을 한국은행으로 전출하고 있어, 목표치인 기금출연액이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달성되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③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재정② 저축의 날 행사 개최
 (성과지표) 저축의 날 행사 개최(측정방법: 개최 여부, 목표치: 저축의 날 행사 개최)

관리과제 “저축의 날 행사”의 경우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저축의 날 행사 개최’로 하고 있으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2074호)에 따르면 매년 10월 마지막 화요일에 저축의 날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도 1973년 법령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법 규정에 따라 당연히 달성되는 등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정하다.

④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혁파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3.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3-재정③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우리 금융회사의 상대국 진출 지원 실적(측정방법: FTA 금융협상 및 MOU체결실적, 목표치: 개선)

위 관서에서는 “금융관련 국제협력”을 위해 성과지표를 ‘우리 금융회사의 상

대국 진출지원 실적'으로 설정하여 측정방법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 목표치를 '개선'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는 2008년 대비 FTA 금융협상 및 MOU 체결 실적이 증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목표치를 100% 달성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목표치 '개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선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불명확하여 달성률이 위 관서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리과제의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V.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성과목표) IV-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관리과제) IV-2-정책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측정방법: 펀드규모, 목표치: 300억 원)

위 관서에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특별펀드 '300억 원'을 조성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국무총리실에서 시달한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20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 추진계획」(2009. 9. 28.)에 따르면 성과지표 또는 목표치의 수정은 환경변화로 정책추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환경변화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방법에 따르되, 각 부처가 참여하는 수정검토 TF를 반드시 거친 후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 '특별펀드 조성'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국무총리실 규정과 달리 목표치를 '100억 원(3년간 300억 원)'으로 임의

로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상의 목표치를 근거로 100% 달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다.

그 결과 실제 달성률은 33.3%에 불과하나, 목표치를 임의로 수정함으로써 목표치를 100% 달성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② 당해 연도의 실적치가 아닌데도 실적치로 제시

(전략목표) Ⅰ.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성과목표) Ⅰ-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관리과제) Ⅰ-1-정책②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
(성과지표) ①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측정방법: 구성 여부, 목표치: 구성 여부)
②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측정방법 및 목표치: 위원 신규 선임 및 인원 보강 여부)

위 관서에서는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구성 여부’와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위원 신규선임 및 사무국 인원 보강 여부’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은 2008년 11월 이미 설치되었고, 위원의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등 관련 기관장이 선정하는 1~2명으로 되어 있으며, 2008년 12월 말 이미 각 기관에서 선정하는 등 위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되었거나, 과거 업무추진의 결과로 목표치가 자동적으로 달성되어 당해 연도 업무추진 성과와 무관한데도 당해 연도의 실적인 것처럼 표시하고는 목표달성으로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는 당해 연도의 업무추진과 관련되어 있고,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계획서의 목표치를 임의로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과거연도의 실적을 당해 연도 사업의 성과로 측정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

| | |
|----------------------------|--|
| 임무 |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장 육성, 금융이용자 보호 |
| 비전 | 국가경쟁력 부문 세계 10대 금융강국 건설 |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목표 Ⅰ. 선제적 금융정책 추진으로 금융위기 조기 극복 및 금융시장 안정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Ⅰ-1. 기업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 - 성과목표 Ⅰ-2.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안정 달성 - 성과목표 Ⅰ-3.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 리스크 방지 ▪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효과와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Ⅱ-1. 규제효과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 및 금융혁신 유도 - 성과목표 Ⅱ-2.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자율성 제고 - 성과목표 Ⅱ-3. 금융 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전략목표 Ⅲ.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지향적 금융발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Ⅲ-1. 핵심 금융인프라의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 성과목표 Ⅲ-2.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선진화 - 성과목표 Ⅲ-3. 녹색성장 지원 ▪ 전략목표 Ⅳ.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목표 Ⅳ-1.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성과목표 Ⅳ-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정책 추진 - 성과목표 Ⅳ-3. 금융서비스의 다양화고도화 추진으로 변화된 금융수요 충족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는 2009. 3. 16. ○○○○연구원과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상호평가 후속조치 이행방안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3. 16. ~ 9. 16. 계약금액: 45,000,000원)을, 같은 해 8. 28.에는 ○○○○○ 산학협력단과 ‘테러자금조달 방지체제의 선진화에 관한 사항’ 연구 용역계약(계약기간: 2009. 8. 28. ~ 11. 9. 계약금액: 35,000,000원)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및 「연구용역 계약서」상 최종보고서는 각각 2009. 9. 16. 및 같은 해 11. 9.까지 50부씩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자 위 관서에서는 각각 같은 해 12. 15. 및 12. 28.까지로 작성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연구용역 계약서」 제6조와 제7조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아 검사완료한 후 용역수행기관에 지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받지 못하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등 이외에는 지체상금을 부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도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관서는 이들 최종보고서 초안¹⁰⁾을 2009년 12월 말경 컴퓨터 파일로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최종보고서 50부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같은 해 12. 23.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12. 28. 두 과제의 용역비 전액 총 80,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최종보고서 50부는 2010년 3월 말 현재 까지도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용역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구용역 마무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 저하로 연구용역의 질적 수준, 완성도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지 않은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0) 최종보고서 초안과 최종보고서의 내용차이: 최종보고서는 2010년 2월 FATF 총회에서 FATF 측과 협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향후 이행계획(「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개정사항 포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하게 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불납결손처분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법」 등 금융관련법 위반자에게 개별 법령에 의거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체납 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며, 미수납액 중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과징금 등을 불납결손처분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표 1]과 같이 2008년에 과징금 및 과태료 26,194백만 원을 부과하여 이 중 7,825백만 원을 수납받고 2,017백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9년에는 2008년 미수납된 16,352백만 원 및 신규 13,921백만 원 등 총 30,273백만 원을 부과하여 7,251백만 원을 수납받고 834백만 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다.

1) 2005. 6. 29. 금융위원회 수입징수관(행정인사과장)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과징금 등 징수업무 및 결손처분관련 중요사항은 위원장 포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함.

[표 1]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금액단위: 백만 원)

| 해당연도 | 징수결정액 ²⁾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D=A-B-C) | | | |
|-------|----------------------------|------------|--------------|----------------|--------|---------------|-------|
| | | | | 소계 | 납기 미도래 | 거소불명· 재력부족 | 징수유예 |
| 2008년 | 26,194 | 7,825 | 2,017 | 16,352 | 2,062 | 13,810 | 480 |
| 2009년 | 30,273 | 7,251 | 834 | 22,188 | 4,210 | 15,394 | 2,584 |

주: 전년도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 징수결정액에 포함됨.

자료: 금융위원회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면제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²⁾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된 때 불납결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채납자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징수결정 금액을 수납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 결정통지 등의 사유가 있어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을 때에만 불납결손 결정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0년 3월 감사원 감사기간 중 위 관서의 결손처분 내역 중 결손액이 큰 대상을 표본조사한 결과 결손액이 690백만여 원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2004. 7. 15. 폐업)의 경우 투자유가증권으로 ○○○○공제조합 출자금 43백만여 원³⁾과 차량 △△△△△(자동차 등록번호 #####, 2001년 8월 14일 제작)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

3) 2002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는 장부가액 12백만여 원, 시가 20백만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그런데도 위 관서는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2007. 4. 27. 재산조사 결과 재산이 없었으며 2008. 11. 28. 현장조사 결과 최후 주소지에 법인이 존재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는 사유로 [표 2]와 같이 위 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의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이 2010. 11. 23.⁴⁾인데도 과징금 51백만여 원은 2008. 10. 29.에, 639백만 원은 2009. 5. 2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불납결손하였다.

[표 2] (주)○○○○○의 불납결손 내역

(금액단위: 원)

| 부과일 | 과징금 체납액 | 위원회 판단 소멸시효 완성일 | 불납결손 결정일 |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 |
|--------------|-------------|-----------------|---------------|---------------|
| 2003. 7. 23. | 51,400,000 | 2008. 10. 29. | 2008. 12. 11. | 2010. 11. 23. |
| 2002. 6. 14. | 639,000,000 | 2009. 5. 22. | 2009. 12. 29. | 2010. 11. 23. |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관서에서 위 업체의 재산 소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하였으면 회수할 수 있었던 과징금(○○○○공제조합 출자금만도 2002년 기준 20백만여 원, 2010년 기준 43백만여 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⁵⁾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국가채권 권리보전조치 및 결손 처분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2004. 5. 31. 위 관서는 (주)○○○○○에 부과한 과징금 51백만여 원과 639백만 원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및 소멸시효 중단 목적으로 (주)○○○○○ 소유 아파트(울산광역시 남구 *** ***** *****)를 압류하였고, 위 부동산이 2005. 11. 24. 법원 강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위 채권의 소멸시효는 2005. 11. 24.부터 다시 시작되므로 실제 소멸시효 완성일은 2010. 11. 23.임.

5) (주)○○○○○의 ○○○○공제조합 출자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이 없다가, 2007. 11. 27. 북부산세무서에서 889백만여 원을, 2008. 1. 17. 서대구세무서에서 51백만여 원을 압류함. 따라서 위 관서는 2007년 11월 이전에 채권압류한 후 법원에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신청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었음.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검사 등 결산감사 －
(금융위원회)

2011. 4.

감 사 원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II. 감사대상기관 일반 현황

1.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주의)
3.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주의)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목적

금융위원회 본부 및 소속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태를 점검·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질서 확립에 기여하며, 국회 예산·결산 심의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출한 금융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유도하는 데 이번 감사의 목적을 두었다.

2.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 범위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처리한 회계업무 전반과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0회계연도 성과보고서” 등을 검사하였다.

3. 감사 중점

이번 감사는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을 확인하기 위해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한편 성과보고서 검사에서는 성과를 쉽게 달성하기 위하여 목표수준을 소극적으로 설정하였는지 등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과 함께 성과지표를 통한 실

적치가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하여 검증 가능하고, 측정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성과지표 실적치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4. 감사기간 및 인원

2011. 3. 17.부터 같은 해 3. 25.까지(7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원의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2011. 4 . 28.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라. 인원

[표 1] 인원 현황(2010. 12. 31. 현재)

(단위: 명)

| 구 분 | 계 | | 정무직 | | 별정직 | | 일반직 | | 특정직(경찰) | | 연구직 | | 계약직 | | 기능직 | |
|---------|-----|-----|-----|----|-----|----|-----|-----|---------|----|-----|----|-----|----|-----|----|
|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 계 | 231 | 230 | 2 | 2 | 5 | 5 | 193 | 190 | 7 | 7 | 1 | 1 | 11 | 11 | 12 | 14 |
| 본 부 | 167 | 167 | 2 | 2 | 5 | 5 | 140 | 139 | - | - | 1 | 1 | 8 | 8 | 11 | 12 |
| 공자위 사무국 | 12 | 11 | - | - | - | - | 12 | 11 | - | - | - | - | - | - | - | - |
| 소속기관 | 52 | 52 | - | - | - | - | 41 | 40 | 7 | 7 | - | - | 3 | 3 | 1 | 2 |

주: 별도 정원(파견, 휴직 등) 제외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금융위원회의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표 2]와 같이 58조 9,104억 원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기금 55조 7,640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0%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전출된 금액이 3조원 으로 전년도에 위 기금으로 전출된 금액 787억 원 보다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2]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

(단위: 억 원, %)

| 회 계 구 분 | | '10세출예산 | '09세출예산 | 증감률 |
|---------|-----------------------|---------|---------|-------|
| 총 계 | | 589,104 | 586,811 | 0.4 |
| 일반회계 | | 31,464 | 28,868 | 9.0 |
| 기금 | 소 계 (관리주체) | 557,640 | 558,766 | △0.2 |
| | 공적자금상환기금 (금융위원회) | 201,758 | 110,362 | 82.8 |
|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 1,559 | 1,560 | △0.1 |
| |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 42,206 | 57,909 | △27.1 |
|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 20,821 | 24,595 | △15.3 |
|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 15,736 | 20,913 | △24.8 |
|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 14,577 | 11,168 | 30.5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 132,668 | 117,820 | 12.6 |
| |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관리공사) | 21,899 | 12,086 | 81.2 |
| | 구조조정기금 (자산관리공사) | 106,416 | 202,353 | △47.4 |

자료: 금융위원회

결국 일반회계 3조 1,464억 원 중 [표 3]과 같이 회계기금 간 거래 3조 33억 원,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출자금 등 1,097억 원을 제외하면, 직접적인 사업금액은 334억 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222억 원으로 전체의 66.5%에 해당(금융위원회가 직접 집행한 주요사업비 예산액은 112억 원)한다.

[표 3]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세부 현황

(단위: 억 원)

| | |
|--|------------------------------|
| 일반회계 | 31,464 |
| 인건비 | 150 |
| 기본경비 ¹⁾ | 72 |
| 주요사업비 - 산업은행, 기업은행 출자 400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652 - 모기지론 이차보전 민간이전 45 | 1,209 (좌측 금액 합은 1,097) |
| 회계기금 간 거래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30,000 - IBRD차관 원금상환 30 - IBRD차관 이자상환 3 | 30,033 |

주: 기본경비는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월정직책금, 업무추진비 등이 포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그 외 9개 기금이 있고,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등 2개 기금을 관리(한국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금은 개별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등 해당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다.

3. 2010회계연도 성과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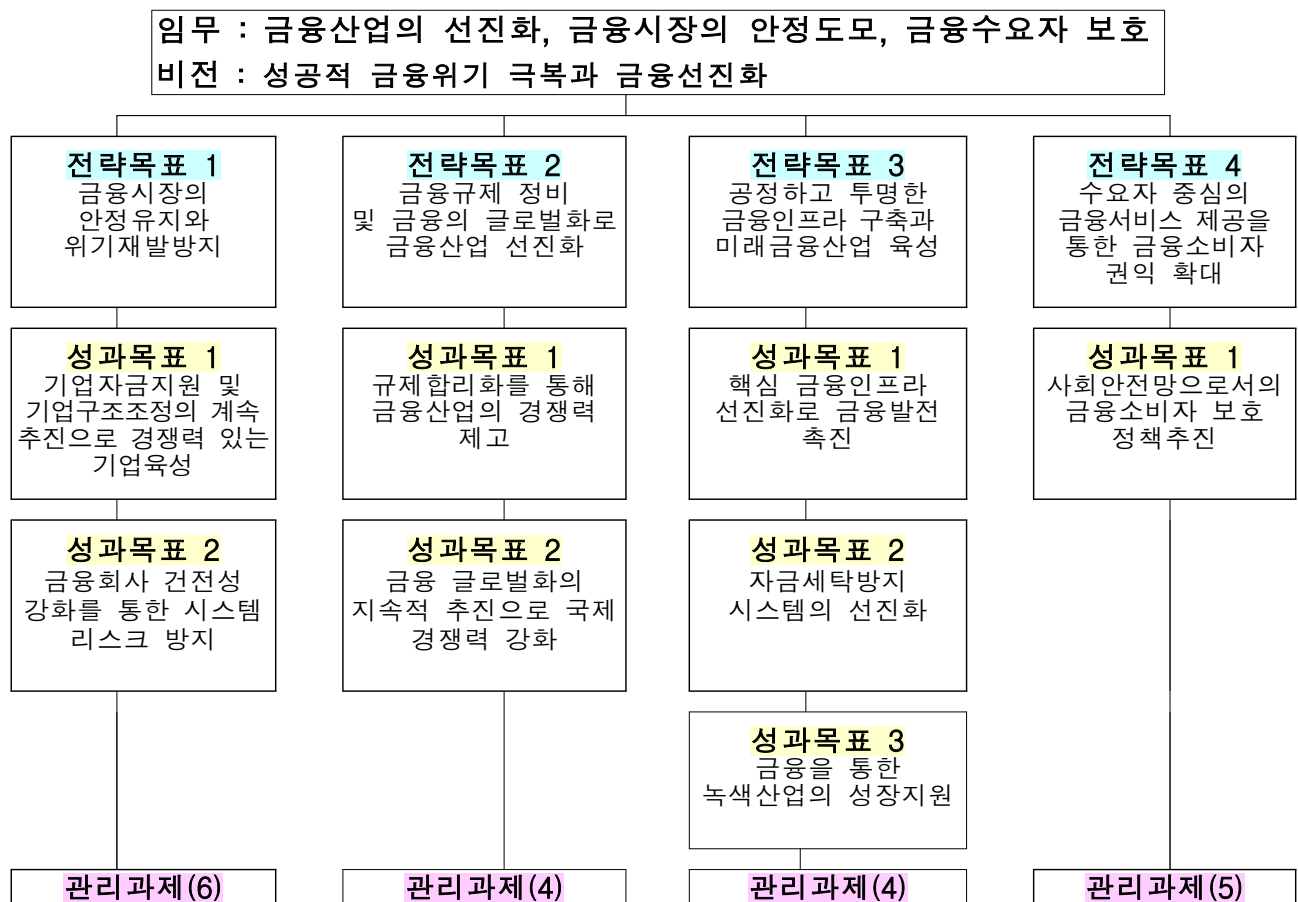
가. 임무 및 비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나. 성과관리체계

위 비전 달성을 위해 [그림 2]와 같이 4개의 전략목표, 8개의 성과목표, 19개의 관리과제를 설정하는 한편,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다.

[그림 2] 금융위원회의 성과관리체계도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녹색금융특화 MBA 예산 집행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2010. 1. 15. “2010년 녹색금융 특화 MBA 선정·지원 기본계획(안)” 및 같은 해 2. 2. “녹색금융 특화 MBA 심사·선정 계획(안)”에 따라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과 고려대학교를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각 5억 원, 4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당초 2010년 녹색금융특화 MBA 정부 예산안으로 국회에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과 교수채용비 6억 원 총 15억 원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정무위원회(2009. 12. 3.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녹색금융 MBA 과정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교수채용비 6억 원을 삭감하여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¹⁾만이 예산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국회 예산심의·확정 취지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은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했다.

1) 국내학생장학보조비 5억 원,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

또한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4억 원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내 녹색금융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데, 국내 전문인력 양성에 앞서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4억 원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라는 지적²⁾이 있었으므로 위 관서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도국 학생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9. 12. 18. “녹색금융 특화MBA 지원관련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회에서 교수채용 예산을 삭감한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 9억 원을 교수채용비, R&D투자비용³⁾ 등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녹색금융특화 MBA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고려대학교와 KAIST에서 2010. 7월 [표]와 같이 학생장학보조비 545백만여 원, 연구개발비 160백만여 원, 교육인력 지원비 84백만여 원, 기타 사업경비(사업 운영경비 + 간접경비) 109백만여 원의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같은 해 8. 17. 이를 승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표] 국회 예산 및 보조금 예산 신청 집행 내역

(단위 : 천 원)

| 구 분 | 국회 심의·확정 예산(A) | KAIST | | 고려대 | | 합계(B) | |
|-------------|-------------------|---------|---------|---------|---------|---------|---------|
| |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예산 | 집행 |
| 국내 학생장학보조비 | 500,000 | 151,600 | 151,600 | 270,000 | 270,000 | 421,600 | 421,600 |
|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 | 400,000 | 124,000 | 119,300 | - | - | 124,000 | 119,300 |
| 연구개발비 | - | 90,640 | 88,450 | 70,000 | 70,000 | 160,640 | 158,450 |
| 교육인력지원 | - | 44,040 | 29,704 | 40,000 | 40,000 | 84,040 | 69,704 |
| 사업 운영경비 | - | 64,720 | 62,714 | 20,000 | 14,897 | 84,720 | 77,611 |
| 간접경비 | - | 25,000 | 25,000 | - | - | 25,000 | 25,000 |
| 미집행잔액 | - | - | 23,232 | - | 5,101 | - | 28,335 |
| 총 계 | 900,000 | 500,000 | 500,000 | 400,000 | 400,000 | 900,000 | 900,000 |

자료: 금융위원회

2) 2009. 11. 12. 국회 정무위원회 예비심사검토보고서상 지적함

3) 사실상 교수채용비 성격이며 교과목개발비는 수당, 영어강의 개발수당, 책임교수 직책관공비 등으로 지급함

그 결과 위 대학교들에서 2010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여 확정된 내용과 다르게 학생장학보조비가 아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359백만여 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위 관서에서는 개도국 학생장학보조비를 지원한다고 하면서 개도국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원기관도 개도국 학생 유치계획 마련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하여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고려대학교는 2010년 개도국 학생을 1명도 유치하지 못하였고 KAIST는 개도국학생보조비 예산 400백만 원 중 281백만 원⁴⁾을 개도국 학생보조비와는 다르게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으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기존에 자체 학교운영비로 개도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을 녹색금융 MBA예산으로 대체하여 120백만여 원을 사용함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과다 출연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¹⁾을 지급하기 위해 설치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각 89,206백만 원, 65,000백만 원, 65,200백만 원을 출연(법정장려금 재원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국은행이 부담)하였다.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할 때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 관서에서 위 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추가 출연에 필요한 금액만큼만 출연하고 나머지는 불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2010년 11월²⁾, 추가 출연 필요금액³⁾

1) 농어민인 저축가입자에게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리(일반 1.5 ~ 2.5%, 저소득 6.0 ~ 9.6%) 추가 제공

2) 금융위원회는 2, 5, 8, 11월, 한국은행은 3, 6, 9, 12월에 출연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임. 참고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저축기간이 3년, 5년으로 기준일로부터 3년 이내의 법정장려금 지급금액이 거의 확정되어 있음

10,363백만 원보다 5,937백만 원 많은 16,300백만 원을 위 기금에 출연하는 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였다.

[표] 정부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 10월 말 기금 잔액(A) |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 ¹⁾ 까지 지급 예상액(B) | 추가 출연 필요금액 [C=(B-A)/2] | 11월 실제 출연금액(D) | 과다 출연금액 (D-C) |
|------|-------------------|--|------------------------------|-------------------|------------------|
| 2008 | 39,748 | 48,037 | 8,289 ²⁾ | 22,301 | 14,012 |
| 2009 | 12,290 | 28,976 | 8,343 | 16,250 | 7,907 |
| 2010 | 14,286 | 35,013 | 10,363 | 16,300 | 5,937 |

- 주: 1. 차년도 1월에는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출연계획이 없어 차년도 1월분만큼 해당연도에 추가 출연하여 여유 자금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은 한국은행이 3월에 연간 출연금 전액을 출연하였으므로 추가 출연 필요금액이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지급예상액'에서 '10월 말 기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임
3. '해당연도 11월부터 차년도 1월까지 실제 지급액'은 2008~2010년 각각 46,464백만 원, 28,660백만 원, 33,307백만 원임

자료: 금융위원회

그 결과, 위 기금에서는 연도 말에 법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금액⁴⁾ 중 위 과다 출연금액만큼 불필요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등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필요금액보다 과다하게 출연하여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 출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위 기금의 2008 ~ 2010년 말 잔액은 각각 36,579백만 원, 27,040백만 원, 27,697백만 원임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2010회계연도 성과계획 수립 및 성과실적 보고 부적정

소 관 청 금융위원회

관 계 기 관 금융위원회 본부

내 용

금융위원회에서 「국가재정법」 제58조 및 「국가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금융위원회 성과관리체계”와 같이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안정 도모, 금융수요자 보호”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 금융위기 극복과 금융선진화”를 비전으로 설정하여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임무-비전-전략목표(4개)-성과목표(8개)-관리과제(19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11개와 29개,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한편, 위 관서에서 작성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총 40개의 성과지표 중 목표치를 달성한 지표가 22개(55%), 초과 달성한 지표가 13개(32.5%), 목표치에 미달한 지표가 5개(12.5%)로 [표]와 같이 목표치 이상을 달성한 성과지표가 35개로 전체적으로 87.5% 수준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표] 전략목표 달성현황

(단위 : 억 원, %, 개)

| 전략목표 | 사업규모 | | | 성과지표 실적 | |
|--|---------|--------|-------|---------|------|
| | 예산 | 결산 | 집행률 | 달성/전체 | 달성률 |
| 전략목표Ⅰ :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재발 방지 | 147,944 | 66,928 | 45.2 | 7/10 | 70 |
| 전략목표Ⅱ :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 34.2 | 31.6 | 92.1 | 9/9 | 100 |
| 전략목표Ⅲ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 76.8 | 76.3 | 99.3 | 11/11 | 100 |
| 전략목표Ⅳ : 수요자 중심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확대 | 3,932 | 4,271 | 108.6 | 8/10 | 80 |
| 총계 | 151,987 | 71,307 | 46.9 | 35/40 | 87.5 |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감사원 감사기간(2011. 3. 17. ~ 3. 25.) 중 11개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29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등 계 40개의 성과지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성과계획 수립 부적정

① 당연히 달성되는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달성

(전략목표) Ⅱ.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Ⅱ-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Ⅱ-2-재정①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
 (성과지표) ②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중심지 조성 추진”의 성과지표를 ‘외국금융회사 애로사항 해소’로 설정하고 측정방법을 ‘(조치 및 답변제공건수/접수된 애로 및 건의사항)*100’으로 하여 목표치를 70%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측정방법은 외국금융회사의 애로 해소와는 무관하게 답변만 있으면

100% 달성되는 것이고, 위 관서에서 설정한 목표치도 2008년 및 2009년 모두 100% 답변이 완료되었는데도 2010년에 70%로 낮게 설정하는 등으로 위 측정방법과 목표치는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는 부적절하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을 성과지표 및 목표치로 설정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3.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
(성과지표) 녹색금융계획 수립(건)

성과목표 “금융을 통한 녹색산업의 성장지원”의 경우 성과지표를 ‘녹색금융 계획 수립(건)’ 및 측정방법을 ‘분기별 보고횟수’로 하여 목표치를 ‘4건’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에 따라 녹색금융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보고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므로 ‘분기별 보고횟수’를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 및 목표치로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③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불가능한 목표치 설정

(전략목표) I. 금융시장의 안정유지와 위기 재발 방지
(성과목표) I-2.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통한 시스템리스크 방지
(관리과제) I-2-재정.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
(성과지표) 은행권 부실채권비율(%)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기업 구조조정 지원”의 성과지표를 ‘은행권 부실채권비율(%)’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은행권 부실채권 비율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은행뿐만 아니라 시중 은

행의 부실채권 비율을 포함하는 시장상황 및 금융회사 여건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재정 사업을 반영하지 못하여 위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로서는 부적절하다.

2. 성과실적의 신뢰성 미흡

① 제시한 측정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실적치를 산정하여 목표치 초과 달성

(전략목표) II. 금융규제 정비 및 금융의 글로벌화로 금융산업 선진화 촉진
(성과목표) II-2. 금융글로벌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관리과제) II-2-재정② 금융관련 국제협력
(성과지표)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관련 국제협력’의 성과지표를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우리 금융 산업의 선진화’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위 성과지표의 측정방법으로 ‘면담, 협상, 정보교류, 회의 참석 및 MOU 체결횟수’로 하고서는 목표치는 ‘협상’으로만 측정하기로 하여 5회로 설정하였으나 막상 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면담, 협상, 정보교류 등을 모두 포함하여 19회로 제출하여 당초 제시한 목표치를 쉽게 달성하였다.

② 설문조사를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여 실적 보고

(전략목표) III.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인프라 구축과 미래금융산업 육성
(성과목표) III-1. 핵심 금융인프라 선진화로 금융발전 촉진
(관리과제) III-1-재정② 금융행정지원 효율화
(성과지표)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

위 관서에서는 관리과제 ‘금융행정지원 효율화’의 성과지표를 ‘금융정책 인지도 향상’으로 설정하고 위 성과지표 측정을 위해 위 관서에서는 ‘주요 금융정책별 평

균 인지도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면서 목표치를 10%로 제시하였고 실적은 56.7%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햇살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위 관서에서는 '쌀과 관련된 정책' 또는 '대북정책' 등으로 잘못 알고 있는 응답자까지 위 항목에 대한 응답으로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햇살론을 서민 대출로 알고 올바로 응답한 비율은 43.4%에 불과한데 실제 설문조사 결과는 56.7%로 나타나 실적이 다소 과장되었다.

조치할 사항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 ① 앞으로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목표치를 설정할 때 당연히 달성되거나 객관적인 실적측정이 어려운 지표를 설정하지 않도록 하고
- ②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성과를 당초 설정한 측정방법과 다르게 측정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임의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성과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성장 금융산업, 도와주는 금융행정

금 융 위 원 회

수신자 감사원장(금융기금감사국 제1과장)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

1.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1807(2009.11.13) 관련입니다.

2. 처분요구 통지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조치요구사항】

- ① 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펀드로 전환되지 않은 펀드를 펀드 투자자들에게 통보하도록 조치
- ② 펀드판매회사에게 펀드조회 내용 등에 펀드 규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

【조치결과】

- ①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는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분기별로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자산운용보고서”에 해당펀드가 동법률에 따라 전환된 펀드인지 여부를 기재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제공 요령」을 개정 조치('09.7.17)
- ② 판매회사가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보유내역 및 평가금액 등 집합투자증권의 잔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당 펀드의 순자산총액, 설정원본 및 전환여부를 통보내용에 포함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09.12.14, 단, 판매회사 전산개발 및 서식변경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2010.4.1시행). 끝.

금융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이준규

감사담당관

정경 01/08

이보현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8 (2010. 01. 11.) 접수

우 150-74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실 / <http://www.fsc.go.kr>

전화 02-2156-9553 전송 02-2156-9549 / lee011@fsc.go.kr / 부분공개(5)

'08년 자체감사 실시결과

1. 감사개요

- 기간 및 대상부서: '08.6.23(월)~6.27(금), 혁신행정과 등 3개부서
- 대상 업무 : 조직개편, 외부감사 결과처리 등 외부기관 관심분야 업무
 - 청사이전 관련 등 예산집행, 물품관리, 비정규직 운용실태
 -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실태
 - 신·기보의 중소기업 보증제도

2. 감사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① 차량운영 및 예산집행 등의 부적정

- 업무용 차량을 중형 위주로 운영
 - ⇒ 에너지 절감 및 차량운영 효율성 방안 강구 (시정)
 - * 공용차량 관리·운영개선방안을 마련('08.7.10)하여 시행 중
- 국외출장중 항공기 숙박시 숙박료 지급, 비대상자에게 대우수당 지급,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 미서명 등
 - ⇒ 숙박료 및 대우수당은 환수하여 국고반납(7.21)하고, 정부구매 카드 사용시 실명 서명토록 공지 (현지조치)

② 재물조사 부실 실시로 물품관리대장과 실제 보유물품과 불일치

⇒ 재물조사 재실시 (시정)

③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 체계 및 수준이 상이

⇒ 급여체계 및 수준의 차이 해소방안 강구 (권고)

④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 정책연구과제 관리 및 정책연구용역종합관리시스템(PRISM)등록
철저 (현지조치)

<참 고>

지적사항별 조치내역

| 일련 번호 | 지 적 내 용 | 조치구분 | 담당 부서 |
|----------|---|------|-------|
| 1 | 업무용 차량 운영의 불합리 | 시정 | 혁신행정과 |
| 2 | 국외출장시 숙박비 초과 지급 | 현지조치 | “ |
| 3 | 정부구매카드 사용자 실명서명 미이행 | 현지조치 | “ |
| 4 | 업무추진비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시 상대방 인적사항 기재 불철저 | 현지조치 | “ |
| 5 | 직원교육 전·후 식비 지출과목의 부적정 | 현지조치 | “ |
| 6 | 대우수당 지급의 부적정 | 현지조치 | “ |
| 7 | 재물조사 실시 불철저 | 시정 | “ |
| 8 | 본부와 FIU의 비정규직 급여체계 상이 | 권고 | “ |
| 9 |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 미흡 | 현지조치 | 은행과 등 |

2010년 금융위원회 자체감사 실시결과 보고

1. 감사 실시개요

- ☐ 감사기간 : '10.12.16(목) ~ 12.22(수), 5일간
- ☐ 감사대상 : '08.7 ~ '10.11 기간중 예산집행실태 등

2. 감사중점 및 주요 지적사항

☐ 감사중점

- 예산편성·집행 및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 국정과제등 주요사업 추진·관리의 적정성
- 법령 제·개정절차(부패영향평가 의뢰 등) 이행수준 등
- 외부감사(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수준

☐ 주요 지적사항

- 예산(관서운영경비) 집행 관련 서류의 편철·관리 부실
* 계산증명규칙(감사원)에 부합토록 편철·관리하지 아니함
- 공공요금 등 집행시 사전품의 누락(또는 부서장 도장 날인)
- 정부구매카드 사용시 부서명(○○팀 등) 서명
- 예산과목별 교부받은 자금을 초과하여 집행(업무추진비)
- 법령 개정시 부패영향평가 의뢰 미흡(미의뢰 및 기한초과)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및 교육 필요 등

3. 향후 처리계획

- ☐ 각 부서 및 감사원 통보
-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교육(1월중)

참 고 :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지 적 사 항 | 조치구분 |
|--|------|
| ■ 출납서류 편철·관리 부실 및 지출증빙 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에 부합토록 집행 관련 서류 편철 → 1개월 이내 감사담당관실로 그 결과 회보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 관서운영경비는 지급건별로 결재권자의 직접 서명에 의한 품의 (또는 전자결재)를 통하여 집행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시에는 카드 영수증에 반드시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할 것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기획조정관실, 행정인사과, FIU, 공자위사무국) ·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대변인실) | 주 의 |
| ■ 관서운영경비 집행방법 부적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서운영경비 집행시 원천징수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 (대변인실) · 법령과 다르게 지난 연도 채무확정액을 현 연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FIU) · 교부받은 과목별 자금한도를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 (기획조정관실) | 주 의 |
| ■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보조인력 지정 등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무관 또는 사무원을 출납업무 보조자로 지정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지원하여 출납업무가 안정적·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개선 (금정국, 서비스국, 자본국, 대변인실) | 권 고 |
| ■ 민간전문가 파견·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전문가를 파견 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무원 임용령(제41조의2) 및 공무원임용규칙(제42조)의 절차를 준수토록 할 것 (전부서) · 민간전문가 파견·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행정인사과) | 현지조치 |

※ 위 지적사항과는 별도로 모든 부서는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시 반드시 부패 영향평가 의뢰(국민권익위원회)를 부처협의를 병행하여 실시하시기 바람

박병석 의원(민주당)

3.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 최근 5년간 광고홍보비 집행 내역

| 일자 | 홍보수단 | 홍보내용 | 홍보비용 | 홍보효과 |
|------------------------------------|---|--|-------------|--|
| 2008.11.19 광고기간 (11.1~11.30) | 지하철 영상광고 <생생정보 플러스편> | 글로벌 금융위기 | 3,300,000원 |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 정부정책을 소개하여 비교적 낮은 홍보비용으로 높은 인지도 제고 |
| 2009.7.27 광고기간 (7.3~7.6) | 종합지, 경제지, 무가지 등 26개 매체 광고 |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 21,395,000원 | 하반기 달라지는 서민정책에 대한 정부메세지 합동광고 실시 * 9개 부처 합동홍보비 192,555,000원 (균등 분담) |
| 2009.9.30 광고기간 (4.25, 5.9) | KBS 1TV <5천만의 아이디어 프로그램 제작비 협찬> | ①드라이브인 현금 인출기(4.25) ②범죄알림비밀번호 (5.9) | 11,000,000원 | 정책프로슈머로서 대국민 정책 제안을 유도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 |
| 2011.4.18 | 신문광고 동아일보 | 서민금융 기반강화 종합대책 | 9,900,000원 | 서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전망을 보강하는 서민금융 대책 인지도 제고 |
| 2010.10.19 | 신문광고 (경제지9, 영자지3) | FSB 서울총회 개최 광고 | 92,278,500원 | 성공적인 FSB 서울총회 개최를 위한 메시지 전달과 국민적 관심 유도 |
| 2011.11.15 | 신문광고 (종합지11, 경제지7) | G20정상회의 성공 적인 개최 | 30,525,000원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및 성과를 알리고 준비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 * 9개부처 공동부담으로 금융위 분담 광고비임 |

□ 홍보 관련 규정

○ 없음

박병석 의원(민주당)

4. 설립이후 현재까지 소송건별 진행 현황 및 결과 세부내역

□ 소송 진행 현황('11. 8. 11. 기준)

| 연번 | 사건명 | 사건 세부 내용 | 진행내역 |
|----|------------------------|---|------------------------------------|
| 1 | 인가취소 및 해산통보처분 취소 | 자본잠식 등을 이유로 인가 취소된 ○○○ 저축은행이 자본잠식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취소요구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패 3심: 진행 중 |
| 2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연대 외 1명이 ○○의 ○○은행 주식 취득 승인관련 금융비주력자 판단자료 제공 거부의 취소를 요구 | 1심: 일부 패 2심: 금융위 패 3심: 진행 중 |
| 3 | 대주주 변경승인 조치통보 취소 |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자산운용(주) 주식을 추가 취득한 데 대해 금융위가 의결권을 제한하자 소 제기 *효력정지신청 - 각하 | 1심: 금융위 승 2심: 진행 중 |
| 4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주식 공개매수 허위공고 및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5 | 제재처분 취소 | ○○○가 파생상품 리스크관리 소홀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소 제기 *효력정지신청 - 진행 중 | 1심: 금융위 패 2심: 진행 중 |
| 6 |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조치 처분 취소 | (주)○○의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금융위 위원장을 상대로 소 제기 | 1심: 증선위 승 2심: 진행 중 |
| 7 | 감리결과조치통보 처분 취소 | ○○회계법인 외 3명이 (주)○○의 재무제표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자 증선위를 상대로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8 | 손해배상 | ○○ 외 150명이 (주)○○의 상장폐지 과정 등에서 국가의 감독소홀이 있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 1심: 진행 중 |

| 단원 | 사건명 | 사건 세부 내용 | 진행내역 |
|----|------------------------|--|------------------------------------|
| 9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주)가 선금금 허위계상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증선위를 상대로 소 제기 |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패 3심: 진행 중 |
| 10 | 과징금부과처분 등취소 | (주)○○이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으로 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자 증선위를 상대로 소제기 | 1심: 증선위 패 2심: 진행 중 |
| 11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주식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12 | 손해배상(기) | 금융위원회가 원고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채권은행도 지정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원고들이 경영정상화할 기회를 잃게 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13 | 손해배상(기) | 금융위원회에서 민원사항을 지연시키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 ○○○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의 고용자인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14 |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 취소 | ○○저축은행 등 77명은 ○○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제기 *효력정지신청 - 각하 | 1심: 진행 중 |
| 15 | 손해배상(기) | ○○○ 외 23명은 파산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16 |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취소 | ○○○는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보험설계사등록이 취소되자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17 | 손해배상(기) | ○○○ 외 123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등의 후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18 | 손해배상(기) | ○○○ 외 80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등의 후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단위 | 사건명 | 사건 세부 내용 | 진행내역 |
|----|---------|---|----------|
| 19 | 손해배상(기) | ○○○ 외 18명은 파산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20 | 손해배상(기) | ○○○ 외 9명은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은 ○○저축은행 등의 후순위 채권 매입자로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 제기 | 1심: 진행 중 |

□ 소송 종결 현황('11. 8. 11. 기준)

| 단위 | 사건명 | 사건 세부 내용 | 진행내역 (종결일) |
|----|-----------------|--|---------------------------------------|
| 1 | 손해배상 | ○○ 발행주식에 투자한 ○○○ 외 169명이 유가증권 심사과실 등 주장 |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08.9.12) |
| 2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이 자신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결정 취소 요구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08.11.11) |
| 3 | 불공정거래조치 처분취소 | 주식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면직요구처분을 받은 ○○○이 불공정거래행위가 없었음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 |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08.11.25) |
| 4 | 해임요구처분 취소 | 금감원 퇴직자인 ○○○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 | 1심: 금융위 패 (‘08.11.25) |
| 5 | 주식에 대한 처분 명령 취소 | ○○○은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대량보유 보고 미 이행으로 증선위로부터 주식처분 명령을 받자 소 제기 | 1심: 소 취하 (‘08.5.19) |
| 6 | 해임요구처분 취소 | 금감원 퇴직자인 ○○○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 | 1심: 금융위 패 (‘08.11.21) |
| 7 | 주식처분 명령 취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 외 1명이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 |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08.12.24) |

| 단원 | 사건명 | 사건 세부 내용 | 진행내역 (종결일) |
|----|--------------------|--|---|
| 8 | 보험설계사등록 취소처분 취소 | 보험료 유용 등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 가 제재처분 유효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취소 요구 | 1심: 금융위 승 (‘08.10.16) |
| 9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 ○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 | 1심: 소 취하 (‘08.11.14) |
| 10 | 부당이득금반환 등 | ○○(주) 당시 대표이사 ○○○이 회사정리절 차 개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회사의 모든 부실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 리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 |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3심: 국가 승 (‘09.4.23) |
| 11 | 감리결과조치처 분취소 | 감리조서제출 거부로 벌점 등의 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이 처분 과중을 이유로 취소 요구 | 1심: 종선위 승 2심: 종선위 승 3심: 종선위 승 (‘09.4.7) |
| 12 | 손실보전금 등 |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금고를 인수하 였으나 충분한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보전 요구 |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3심: 국가 승 (‘09.5.14) |
| 13 | 손해배상 |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로 동 금융기관 예금자인 ○○이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요구 |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09.2.12) |
| 14 | 불합격처분 취소 | ○○○ 외 41명이 공인회계사 2차시험 불합격 처분이 자의적임을 이유로 취소 요구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금융위 승 (‘09.1.30) |
| 15 |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 ○○○가 신용정보업자에 대한 국가(금융위)의 감독부실 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 1심: 소 취하 (‘09.3.11) |
| 16 | 정직조치요구처 분 취소 | ○○○는 불공정거래 주문수탁금지 및 일임매 매거래 제한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정직 3개 월의 조치를 받자 소 제기 | 1심: 금융위 승 (‘09.9.11) |
| 17 | 손해배상 | ○○(주) 당시 대표이사 ○○○이 산업은행 등 에 대한 국가의 감독부실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3심: 국가 승 (‘09.10.15) |
| 18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제재를 받은 (주) ○○가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 요구 | 1심: 종선위 승 2심: 종선위 승 (‘09.11.20) |

| 연도 | 사건명 | 사건 세부 내용 | 진행내역 (종결일) |
|----|--------------------|--|---|
| 19 | 해임요구처분 취소 | 금감원 퇴직자인 ○○○ 외 1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조치 처분(해임요구)의 취소요구 | 1심: 금융위 패 2심: 금융위 패 (‘09.12.9) |
| 20 | 감리결과 조치 취소 | ○○○이 회계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증선위가 제제처분을 하자 부실감사가 제3자의 범죄적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소 제기 |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10.2.18) |
| 21 | 감리결과 조치 등 취소 청구의 소 | ○○회계법인외 3인이 ○○(주)에 대한 부실감리로 증선위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자 소 제기 | 1심: 소 취하 (‘10.3.17) |
| 22 | 시정 조치 처분 취소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주)○○가 제재 과중을 주장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금융위 승 (‘10.4.15) |
| 23 | 계약이전결정 제외 취소 | ○○○는 ○○저축은행 예금자로 5천만원이상 예금자에 대해 계약이전을 제외하는 결정은 불법이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소 제기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금융위 승 (‘10.4.15) |
| 24 |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금융위 제재를 받은 (주)○○가 적법요건 결여를 이유로 과징금부과 취소 요구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3심: 금융위 승 (‘10.4.15) |
| 25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 ○○○이 금융위(증선위)를 상대로 (주)○○에 대한 과징금부과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의 소 제기 | 1심: 소취하 (‘10.6.17) |
| 26 | 구상금 | ○○○이 보험모집인 ○○○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의 보험업무 감독 소홀이 있었다며 국가 외 2명을 상대로 지급 명령 신청 | 1심: 소취하 (‘10.7.16) |
| 27 |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 ○○○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자 본인이 투자자 모집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 제기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10.7.1.) |
| 28 | 금융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 ○○○는 소외 ○○○에 대한 신용정보의 공개를 금융위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소 제기 | 1심: 금융위 승 (‘10.4.27) |

| 연도 | 사건명 | 사건 세부 내용 | 진행내역 (종결일) |
|----|--------------------------|---|---------------------------------------|
| 29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주)○○은 최대주주 변동 허위공시 등으로 증 선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1심: 금융위 승 (‘10.8.13) |
| 30 | 감사보고서감리 결과 조치처분 취소 | ○○○이 부실감사로 증선위로부터 제재를 받 자 증선위를 상대로 소 제기 | 1심: 증선위 승 (‘10.9.2) |
| 31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주)○○ 외 1명이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금융위를 상 대로 소 제기 | 1심: 증선위 승 (‘10.11.29) |
| 32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주)는 최대주주 변동 허위 공시 등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10.12.15) |
| 33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주)○○은 최대주주 변동과 관련된 신고·공 시 의무위반으로 금융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자 소 제기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11.2.01) |
| 34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은 ○○(주) 전 대표이사로 상장법인의 신고·공시의무 등으로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을 부과받자 소 제기 | 1심: 증선위 승 2심: 증선위 승 (‘11.2.04) |
| 35 | 조치처분취소 | ○○○이 (주)○○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제재를 받자 금융위 위원장을 상대로 소제기 | 1심: 소취하 (‘11.3.19) |
| 36 | 손해배상(기) | ○○○이 국가의 ‘희망모아 유동화전문회사’에 부실감독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요구 | 1심: 금융위 승 2심: 금융위 승 (‘11.1.11) |
| 37 | 손해배상(기) | ○○○ 외 2명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저축 은행의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원 고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 제기 | 1심: 소취하 (‘11.6.24) |
| 38 | 부실금융기관결 정취소 | ○○저축은행 외 2명이 유동성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임시 휴업 등을 하여 금융위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자 소제기 *효력정지신청 - 인용 | 1심: 금융위 승 (‘11.6.8) |

| 판례 | 사건명 | 사건 세부 내용 | 진행내역 (종결일) |
|----|--|---|---|
| 39 |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 (주)○○가 자산양수도 신고 불이행 등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자 매각 계약이 양해각서에 불과하므로 과징금부과 취소 요구 | 1심: 증선위 패 2심: 증선위 패 3심: 증선위 승 환송삼: 증선위 승 (‘11.6.23) |
| 40 | 의결권 확인 |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주) 주식을 추가 취득한 데 대해 금융위가 의결권을 제한하자 국가를 상대로 소 제기 | 1심: 국가 승 2심: 국가 승 3심: 국가 승 (‘11.7.28) |
| 41 | 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보유지 분 처분명령 거 부처분 취소 | ○○노동조합은 ○○펀드가 소유한 ○○은행 지분에 대하여 초과소유지분에 대한 처분을 명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를 거부하자 소 제기 | 1심: 소 취하 (‘11.7.28) |

박병석 의원(민주당)

5. 설립이후 현재까지 경찰 및 검찰에 의한 임직원의 사법처리 현황 및 자체징계현황

□ 2008년 금융위원회 설립이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포함)
받은 직원 및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연번 | 접수(통보) | 직위 | 혐의내용 | 검찰 처분내용 |
|----|---------|-------|----------------|----------|
| 1 | 08.4.18 | 서기관 | 음주운전 | 벌금 150만원 |
| 2 | 08.7.28 | 사무관 | 음주운전 | 벌금 110만원 |
| 3 | 09.1.23 | 주무관 | 공연음란 | 기소유예 |
| 4 | 10.10.4 | 사무관 | 가정폭력(상해, 재물손괴) | 기소유예 |
| 5 | 11.6.22 | 고위공무원 | 뇌물수수 | 구속(소송중) |

박병석 의원(민주당)

5-1. 임직원 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

□ 임직원 에 대한 자체 징계 현황

| 징계 현황 | 처분사유 | 처분일시 |
|---------|--------|------------------|
| 견책 2명 | 음주운전 | 09.2.27, 09.3.23 |
| 감봉2월 2명 | 청렴의무위반 | 09.3.19, 09.3.23 |

박병석 의원(민주당)

6. 최근 5년간 자금세탁의심거래보고 접수현황

☐ 의심거래보고 월별 보고건수현황

(단위 : 건)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1월 | 1,945 | 3,009 | 6,745 | 11,164 | 15,872 | 22,725 |
| 2월 | 2,014 | 3,245 | 6,780 | 7,655 | 12,768 | 28,532 |
| 3월 | 1,513 | 4,378 | 8,179 | 8,136 | 16,228 | 39,226 |
| 4월 | 1,553 | 4,215 | 7,867 | 11,221 | 21,021 | 30,897 |
| 5월 | 1,610 | 4,566 | 7,020 | 10,040 | 17,998 | 27,618 |
| 6월 | 1,751 | 4,033 | 7,421 | 12,087 | 20,346 | 26,950 |
| 7월 | 1,813 | 3,956 | 8,187 | 14,297 | 26,405 | 26,582 |
| 8월 | 2,094 | 4,776 | 7,553 | 11,024 | 21,265 | |
| 9월 | 2,114 | 3,945 | 7,360 | 12,153 | 18,535 | |
| 10월 | 2,180 | 4,347 | 8,668 | 11,962 | 22,649 | |
| 11월 | 2,667 | 6,769 | 9,352 | 11,556 | 20,637 | |
| 12월 | 2,895 | 5,235 | 6,961 | 14,987 | 22,344 | |
| 합계 | 24,149 | 52,474 | 92,093 | 136,282 | 236,068 | 202,530 |

☐ 금융기관별 보고현황

(단위 : 건)

| | 은 행 | 증 권 | 보 험 | 기 타* | 계 |
|---------|---------|-------|-----|--------|---------|
| 2006 | 23,522 | 199 | 58 | 370 | 24,149 |
| 2007 | 51,330 | 218 | 56 | 870 | 52,474 |
| 2008 | 89,542 | 710 | 90 | 1,751 | 92,093 |
| 2009 | 128,564 | 3,049 | 121 | 4,548 | 136,282 |
| 2010 | 217,048 | 9,137 | 569 | 9,314 | 236,068 |
| 2011.07 | 177,891 | 7,252 | 722 | 16,665 | 202,530 |

* 기타 :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우체국, 카지노

박병석 의원(민주당)

7. 최근 5년간 법집행기관으로부터의 정보제공 요구현황 및 요청내용

☐ 정보요구서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 분 | 검찰청 | 경찰청 | 국세청 | 관세청 | 선관위 | 합 계 |
|---------|-------|-----|-----|-----|-----|-------|
| 2006 | 58 | 9 | 3 | 0 | 7 | 77 |
| 2007 | 30 | 24 | 29 | 2 | 1 | 86 |
| 2008 | 144 | 31 | 25 | 3 | 12 | 215 |
| 2009 | 244 | 73 | 17 | 5 | 1 | 340 |
| 2010 | 388 | 164 | 37 | 12 | 12 | 613 |
| 2011.07 | 260 | 207 | 16 | 10 | 0 | 493 |
| 합계 | 1,124 | 508 | 127 | 32 | 33 | 1,824 |

☐ 정보제공 요청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9조 제1항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규정하면서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위반시 동법 제13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규정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9조제1항, 제13조 제2호(별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와 관련된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중계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박병석 의원(민주당)

8.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

□ 한국 금융연수원 주관

| No | 구 분 | 신설연도 | 응시인원* | 합격인원* | 비고 |
|----|------------------|------|--------|--------|-----------------|
| 1 | 신용분석사 | 2002 | 5,656 | 1,481 | 국가공인 민간자격 |
| 2 | 여신심사역 | 2002 | 444 | 206 | |
| 3 | 국제금융역 | 2002 | 739 | 260 | |
| 4 | 자산관리사(FP) | 2002 | 61,251 | 15,999 | |
| 5 | 신용위험분석사(CRA) | 2002 | 1,153 | 150 | |
| 6 | 외환전문역(Ⅰ종) | 2006 | 9,004 | 2,982 | |
| 7 | 외환전문역(Ⅱ종) | 2006 | 6,774 | 2,468 | |
| 8 | 은행텔러 | 2004 | 23,302 | 9,655 | 한국금융연수원 인증자격 |
| 9 | 판매인능력평가 | 2006 | 74,258 | 40,389 | |
| 10 | 영업점컴플라이언스 오피서 | 2009 | 8,461 | 6,183 | |
| 11 | KBI 금융지식 Test | 2011 | 126 | 31 | |
| 12 | NH보험모집 | 2004 | 44,027 | 34,571 | 위탁자격시험 |
| 13 | NH외환전문역 | 2005 | 4,064 | - | |

*2005~2011.8 까지의 인원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 관련 자료

◇ 제출 요구자료

1. 자격제도 운영현황

| | |
|-------|-------------------|
| 작 성 자 |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관리부 |
| | 부장 안치영 |
| 작성일자 | 2011년 8월 9일 |

1. 금융투자전문인력 현황 (‘11. 8. 5 현재)

- (금융투자전문인력 제도) 자본시장법 제286조 및 협회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인 주요직무종사자에 대해 등록·관리
 -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상담사) :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 또는 투자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①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펀드투자상담사)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펀드)에 대하여 투자권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② **투자권유자문인력 2종(증권투자상담사)** : 증권(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제외), MMF에 대하여 투자권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③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파생상품투자상담사)**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에 대하여 투자권유·자문 업무를 수행하는 자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투자상담관리인력)** : 금융투자회사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서 소속 투자상담사 및 투자권유대행인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자
-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 : 집합투자재산, 신탁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
- **조사분석인력(금융투자분석사)** :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조사분석자료)를 작성심사·승인하는 자
- **위험관리전문인력** : 위험관리 조직에서 재무위험 등을 측정, 평가 및 통제하여 해당 회사의 재무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
- **(투자권유대행인 제도)** 자본시장법 제51조 및 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투자권유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등록·관리

- ①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등 제외)의 매매,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 ②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파생상품등 제외) 및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투자자문계약, 투자일임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자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 현황 ('11. 8. 5.)】

| 전문인력 종류 | | 등록인원(명) |
|------------|-----------|---------|
| 투자권유자문인력 | 펀드투자상담사 | 132,548 |
| | 증권투자상담사 | 93,958 |
|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82,910 |
| 투자권유자문관리인력 | - | 13,502 |
| 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 11,750 |
| 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 1,490 |
| 위험관리전문인력 | | 229 |
| 투자권유대행인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34,286 |
|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3,622 |

2. 자격시험 운영 현황

- ☐ 금융투자전문인력(투자권유대행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자격시험 및 자율자격시험을 운영
- **필수자격시험** : 금융투자회사의 해당 분야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합격을 요구
- 펀드투자상담사시험, 증권투자상담사시험, 파생상품투자상담사시험, 투자자산운용사시험, 금융투자분석사시험 (5종류)

○ **자율자격시험** : 금융투자업 종사자의 전문성 검증을 위해 협회가 자율적으로 운영

－ 재무위험관리사시험, 증권분석사시험 (2종류)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시험 종류】

| 전문인력 종류 | | | 자격시험 명칭 |
|---------|----------|-------------|-----------|
| 필수 |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권유자문인력 1종 | 펀드투자상담사 |
| | | 투자권유자문인력 2종 | 증권투자상담사 |
| | |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 | 파생상품투자상담사 |
| | 투자운용인력 | 투자자산운용사 | 투자자산운용사 |
| | 조사분석인력 | 금융투자분석사 | 금융투자분석사 |
| 자율 | 위험관리전문인력 | － | 재무위험관리사 |
| | － | － | 증권분석사 |

박병석 의원(민주당)

8-1. 국내 금융 자격증 제도 현황

☐ 보험업권 자격증 제도

(단위:명)

| 구분 | 법적 근거 | 실시기관 | 등록기관 | 응시자수* | 합격자수* |
|-------|--|-------|-------|----------|--------|
| 보험계리사 | 보험업법 제182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01조제2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조제1항 | 보험개발원 | 금융감독원 | 1차:1,636 | 1차:603 |
| | | | | 2차:902 | 2차:120 |
| 손해사정사 | 보험업법 제186조 보험업법시행령 제101조제2항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조제1항 | 보험개발원 | 금융감독원 | 1차:5,246 | 1차:709 |
| | | | | 2차:2,040 | 2차:424 |
| 보험중개사 | 보험업법 제89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1조제2항 | 보험개발원 | 금융감독원 | 1,066 | 283 |

※응시자수 및 합격자수는 2010년 기준

박병석 의원 (민주당)

9. 최근 3년간 금융기관별 휴면예금 발생 및 출연 현황

□ 은행권 휴면예금 출연 현황

(단위 : 억원)

| 순번 | 은행명 | 출연금액 | | | 누계 |
|----|--------|-------|-------|-------|---------|
| |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1 | 한국산업은행 | 2.2 | 1.9 | 2.6 | 6.7 |
| 2 | 기업은행 | 47.8 | 56.3 | 60.5 | 164.6 |
| 3 | 국민은행 | 263.7 | 157.6 | 88.5 | 509.8 |
| 4 | 한국외환은행 | 53.1 | 53.6 | 109.2 | 215.9 |
| 5 | 수협중앙회 | 4.1 | 5.2 | 4.9 | 14.2 |
| 6 | 농협중앙회 | 201.2 | 121.2 | 100 | 422.4 |
| 7 | 우리은행 | 64.6 | 60.5 | 59.7 | 184.8 |
| 8 | SC제일은행 | 74.3 | 36.9 | 36.9 | 148.1 |
| 9 | 한국씨티은행 | 23.3 | 38.5 | 30.7 | 92.5 |
| 10 | 대구은행 | 10.5 | 16.1 | 45.4 | 72 |
| 11 | 부산은행 | 20.1 | 22.4 | 21.2 | 63.7 |
| 12 | 광주은행 | 5.2 | 8.3 | 19.7 | 33.2 |
| 13 | 제주은행 | 0.3 | 0.2 | 0.3 | 0.8 |
| 14 | 전북은행 | 4.8 | 4.2 | 3.7 | 12.7 |
| 15 | 경남은행 | 5.6 | 3.4 | 3.1 | 12.1 |
| 16 | HSBC | 0.8 | 0.7 | 0.6 | 2.1 |
| 17 | 하나은행 | 38.9 | 28.5 | 19.2 | 86.6 |
| 18 | 신한은행 | 73.5 | 41.9 | 34.9 | 150.3 |
| 계 | | 894 | 657.4 | 641.1 | 2,192.5 |

□ 은행권 휴면예금 발생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은행명 | 2008년 | | 2009년 | | 2010년 | | 계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산업은행 | 8 | 3 | 9 | 2 | 5 | 3 | 22 | 8 |
| 농협중앙회 | 1,254 | 268 | 950 | 166 | 870 | 168 | 3,074 | 602 |
| 신한은행 | 691 | 109 | 309 | 58 | 221 | 49 | 1,221 | 216 |
| 우리은행 | 1,124 | 87 | 803 | 97 | 728 | 81 | 2,655 | 265 |
| SC제일은행 | 557 | 76 | 218 | 40 | 200 | 41 | 975 | 157 |
| 하나은행 | 682 | 95 | 392 | 53 | 407 | 76 | 1,481 | 224 |
| 기업은행 | 706 | 71 | 628 | 77 | 611 | 85 | 1,945 | 233 |
| 국민은행 | 1,772 | 65 | 2,003 | 672 | 879 | 204 | 4,654 | 941 |
| 외환은행 | 528 | 72 | 1,258 | 59 | 702 | 152 | 2,488 | 283 |
| 한국씨티은행 | 283 | 24 | 260 | 44 | 216 | 38 | 759 | 106 |
| 수협중앙회 | 39 | 6 | 26 | 6 | 26 | 6 | 91 | 18 |
| 대구은행 | 96 | 12 | 145 | 33 | 622 | 58 | 863 | 103 |
| 부산은행 | 325 | 37 | 406 | 43 | 481 | 41 | 1,212 | 121 |
| 광주은행 | 114 | 5 | 183 | 12 | 529 | 22 | 826 | 39 |
| 제주은행 | 3 | 0 | 3 | 0 | 3 | 0 | 9 | 0 |
| 전북은행 | 73 | 11 | 67 | 9 | 64 | 7 | 204 | 27 |
| 경남은행 | 145 | 10 | 94 | 7 | 85 | 6 | 324 | 23 |
| HSBC | 2 | 5 | 3 | 4 | 5 | 2 | 10 | 11 |
| 총 계 | 8,402 | 956 | 7,757 | 1,382 | 6,454 | 998 | 22,813 | 3,377 |

박병석 의원(민주당)

10. 하반기 부실 PF 처리 계획

- 상반기 중 PF 정상화 Bank를 활용하여 은행권 PF 부실채권 약 1.2조원을 인수(6.29일)
 - 또한,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 PF 부실채권 약 1.9조원을 매입(6.24일)
- 하반기 중에도 PF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의 사업성 판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
 - 사업성이 있는 경우 PF 사업장 정상화를 지원하고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상각 등 자체 처리
 - * 부실채권 전문처리기관(UAMCO)등 제3자에 매각, 담보처분 후 상각 등
 - PF 정상화 Bank를 활용한 PF 부실채권 정리 및 PF 사업장 정상화도 병행
 - 既인수한 PF 부실채권 중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무재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으로 정상화 추진
 - 필요한 경우 PF 정상화 Bank를 활용하여 PF 부실채권 추가 매입도 추진